

# 남북관계연표

1948년~2013년

# 남북관계연표

1948년~2013년

# 남북관계연표

## 1948년~2013년

인 쇄	2013년 12월
발 행	2013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자료수집·정리	통일학술정보센터 송은주 연구원
편 집 인	통일학술정보센터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직통) 901-4300 (직통) 901-2529 (팩시밀리) 901-2545
홈페이지	<a href="http://www.kinu.or.kr">http://www.kinu.or.kr</a>
기획·디자인	(주)현대아트컴 (02-2278-4482)

###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13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734-6818 · 사무실: 394-0337

# C O N T E N T S

## 1940년대

- 1948년 / 2
- 1949년 / 3

## 1950년대

- 1950년 / 6
- 1951년 / 8
- 1952년 / 10
- 1953년 / 11
- 1954년 / 13
- 1955년 / 15
- 1956년 / 16
- 1957년 / 17
- 1958년 / 19
- 1959년 / 21

## 1960년대

- 1960년 / 24
- 1961년 / 27
- 1962년 / 29
- 1963년 / 30
- 1964년 / 32
- 1965년 / 33
- 1966년 / 34
- 1967년 / 35
- 1968년 / 36
- 1969년 / 37

## 1970년대

- 1970년 / 40
- 1971년 / 42
- 1972년 / 46
- 1973년 / 57
- 1974년 / 62
- 1975년 / 67
- 1976년 / 72
- 1977년 / 75
- 1978년 / 77
- 1979년 / 79

## 1980년대

- 1980년 / 86
- 1981년 / 91
- 1982년 / 92
- 1983년 / 95
- 1984년 / 97
- 1985년 / 102
- 1986년 / 108
- 1987년 / 113
- 1988년 / 118
- 1989년 / 126

## 1990년대

- 1990년 / 136
- 1991년 / 149
- 1992년 / 162
- 1993년 / 187
- 1994년 / 199
- 1995년 / 216
- 1996년 / 231
- 1997년 / 247
- 1998년 / 259
- 1999년 / 276

## 2010년대

- 2010년 / 488
- 2011년 / 507
- 2012년 / 522
- 2013년 / 540

## 2000년대

- 2000년 / 292
- 2001년 / 312
- 2002년 / 323
- 2003년 / 340
- 2004년 / 365
- 2005년 / 383
- 2006년 / 409
- 2007년 / 428
- 2008년 / 452
- 2009년 / 468

**1940년대**

# 1948년

- 8월 15일 | 대한민국 수립 선포
- 9월 9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선포
- 9월 10일 | 북한 김일성 수상,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강' 발표
- 9월 10일 | 북한, 소련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에 보내는 조선 최고인민회의 요청서에서 미·소 양군 철수 요청
- 12월 26일 | 북한 주둔 소련군, '12월 25일' 철수 완료 발표

1월 1일 | 미국, 백악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승인 발표

1월 19일 | 남한, 유엔가입 신청

2월 9일 | 북한, 유엔가입 신청

3월 31일 | 남한, 대북교역 금지 발표

6월 8일 | 미국 국무성, 남한으로부터의 미군철수 발표

-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으로부터 점령군을 철수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1948년 12월 12일자 유엔총회 결의에 포함된 권고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한국으로부터 곧 점령군의 철수를 완료할 것임.

6월 28일 |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하 조국전선), 결성대회 선언문에서 '평화통일방안' 제의

- ① 조국의 평화적 통일사업을 조선인민이 자기의 수중에 들어쥐고 우리 인민 자체로 반드시 실천
- ②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방해를 주는 미군이 우리 조선에서 즉시 철폐할 것을 요구
- ③ 우리는 비법적 기관인 소위 유엔조선위원단이 우리 강토로부터 즉시 물러날 것을 요구
- ④ 우리는 남북조선을 통하여 통일적 입법기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의
- 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원하는 민주주의 제정당·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지도 하에서 선거를 실시
- ⑥ 조국의 평화적 통일계획을 토의하기 위하여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들의 협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에서 선거지도위원회를 구성
- ⑦ 입법기관 선거는 1949년 9월에 실시하며 선거는 일반적·평등적 비밀투표의 원칙에서 실시. 일본 통치시대에 일제와 열성적으로 협력한 자들은 선거권을 박탈
- ⑧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반드시 실시
  - ㄱ. 민주주의 제정당·사회단체들과 그의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금지할 것
  - ㄴ. 전체 민주주의 제정당·사회단체들을 합법화하며 그들에게 자유적 활동권을 보장할 것
  - ㄷ. 민주주의 제정당·사회단체·출판기관들의 폐간에 대한 지령을 취소하고 민주주의 제정당·사회단체들에게 자기의 출판기관을 가질 권리를 보장할 것
  - ㄹ. 언론·출판·집회·군중대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
  - ㅁ. 전체 정치범들을 즉시 석방할 것
- ⑨ 선거지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짐.
  - ㄱ. 남북조선에 현존하고 있는 정부와 그의 기관들에 선거준비와 실시에 관계되는 필요한 지시들을 줄 것
  - ㄴ. 자기의 결정과 지시 실행을 검열할 것
  - ㄷ. 선거지도위원회가 구성하는 위원회를 통하여 조선에서 외국군대의 철거를 감시할 것



- ⑩ 총선거지도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남북조선에 현존하여 있는 경찰·보안기관들은 선거지도위원회의 직접 관할하에로 넘어옴. 선거지도위원회는 경찰대로부터 친일과 일본경찰과 헌병대에 복무하던 자들을 제대시키며 제주도 인민항쟁과 남조선 유격운동 탄압에 참가한 경찰대를 해산
- ⑪ 총선거의 결과에 수립된 최고입법기관은 조선공화국의 헌법을 채택하며 그 헌법에 기초하여 정부를 구성하며 정부는 남북조선에 지금 현존하여 있는 정부들로부터 정권을 접수하며 그 정부들은 해산됨.
- ⑫ 남북조선에 현존하여 있는 군대들은 민주주의 기초 위에서 조선공화국 정부가 연합시킴. 제주도와 기타 지대들에서 인민항쟁과 빨찌산운동 탄압에 참가하였던 남조선 국방군 부대들을 해산

6월 29일 | 미군, 남한으로부터의 완전 철수 발표

7월 5일 | 북한 조국전선, 남한의 제정당 및 사회단체에 대해 남북의 제정당 및 사회단체의 대표위원 주관 아래 1949년 9월 15일 남북총선거 실시 제안

7월 9일 | 이승만 대통령, 북한의 9월 총선 제안 거부

10월 1일 | 유엔총회, 남한대표 초청안 채택한 반면 북한대표 초청안은 부결

**1950년대**

# 1950년

## 6월 7일 | 북한 조국전선, 평화통일 호소문에서 남북한 총선거 제안

- ① 8월 5~8일에 우리 조국 남·북반부의 전지역을 통하여 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적 최고입법기관을 창설할 것
- ② 8월 15일 일제통치로부터 해방된 5주년 기념일에 이 총선거에 의하여 선거된 최고입법기관 회의를 서울에서 소집할 것
- ③ 8월 15~17일에 궁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원하는 남·북반부의 전체 민주주의 정당·사회단체 대표자협의회를 38도 연선 해주시 혹은 개성시 어느 한 도시에서 소집할 것. 이 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토의하고 결정들을 채택할 것
  - ㄱ.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제조건
  - ㄴ. 조선 최고입법기관 총선거 실시의 절차
  - ㄷ. 총선거를 지도할 중앙지도위원회의 창설
- ④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북반부의 민주주의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협의회 참가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제의
  - ㄱ.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파탄시킨 범죄자들인 리승만·리범석·김성수·신성모·조병옥·채병덕·백성옥·윤치영·신홍우 등 민족반역자들을 남북대표자협의회에 참석시키지 말 것
  - ㄴ. 조국통일사업에 '유엔조선위원단'의 간섭을 허용하지 말 것. 조선인민은 외국의 간섭이 없이 반드시 자력으로 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것
- ⑤ 남북대표자협의회 사업기간과 총선거 실시기간에 우리 조국 남·북반부의 양정권 당국은 사회질서 보장에 대한 책임을 질 것

## 6월 19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서에서 '전조선 입법 기관' 구성 제의

## 6월 25일 | 한국전쟁 발발

## 6월 25일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6·25에 관한 결의

-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공격을 중대 관심으로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 이 행위는 평화의 파괴를 구성하는 것으로
- ① 분쟁의 즉시 정지를 요구하며 북한당국에 대하여 그 군대를 38도선까지 철퇴할 것을 요구
  - ② '유엔한국위원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요청
    - ㄱ. 해당 사태에 관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충분히 고려한 건의를 전달할 것
    - ㄴ. 북한군의 38도선에서의 철퇴를 감시할 것
    - ㄷ. 이 결의의 실시에 관하여 안보리에 상시 보고할 것
  - ③ 전 회원국은 이 결의의 실시에 있어서 유엔에 모든 원조를 부여하며 북한당국에 대하여는 원조를 행하지 말 것을 요청

## 6월 27일 | 북한, "6월 25일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소련 및 중공의 참가 없이 토의되었으므로 인

정할 수 없다”고 성명 발표

- 7월 1일 | 유엔군 지상부대 부산 상륙
- 7월 4일 | 소련 그로미코 외무차관, “조선의 통일문제는 미국의 남북전쟁과 같이 국내문제이며 유엔헌장은 국내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성명 발표
- 7월 8일 | 한·미 대전협정(한국군 작전지휘권의 미군 이양에 관한 협정) 체결
- 7월 19일 | 이승만 대통령, 미 트루먼 대통령에게 유엔의 작전목표가 38선의 원상회복이 아니라 북진통일임을 강조
- 9월 30일 | 워커 유엔군 사령관, 38도선 돌파 명령
- 10월 3일 | 국군, 38도선 돌파
- 10월 7일 | 제5차 유엔총회,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설치에 관한 결의
- 10월 19일 | 유엔군, 평양 점령
- 10월 25일 | 중공군, 한국전쟁 참가
- 12월 1일 | 유엔총회, 유엔한국재건위원단(UNKRA) 설치 결의
- 12월 7일 | 미국, 미국 내의 북한 재산 동결 조치
- 12월 26일 | 중공군, 38도선 넘어 남하

# 1951년

- 1월 4일 | 공산군, 서울 다시 점령(1·4후퇴)
- 3월 25일 | 유엔군, 38도선 다시 돌파
- 6월 24일 | 말리크 소련 유엔대표, 한국전쟁의 휴전 제의
- 6월 26일 | 남한, 6월 24일의 소련 제안 수락 불가 성명 발표
- 6월 27일 | 북한, 6월 24일의 소련 제안 지지 성명 발표
- 6월 27일 | 남한 정부, 휴전교섭에 응하려는 유엔군 태도에 강력 반대입장 표명
- 6월 29일 | 미국 트루먼 대통령, 유엔군 사령관에게 한국정전 교섭 명령
- 6월 30일 | 남한 정부, 정전 5개 조건 제시
  - ① 중공군은 한국으로부터 국경을 넘어 만주로 완전히 철수하되 북한 비전투원의 생명과 재산에 손상을 가해서는 안됨.
  - ② 북한 괴뢰군은 무장을 해제
  - ③ 국제연합은 제3국이 북한 공산당에게 군사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기타의 형식으로 원조치 못하도록 방지함에 동의
  - ④ 대한민국의 정식대표가 한국문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토의하거나 고려하는 어떠한 국제적 회의 혹은 회합에도 참가
  - ⑤ 한국의 주권이나 영토를 침범하는 어떠한 안이나 행동은 적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치 않을 것
- 7월 1일 | 김일성·팽덕회(중공), 유엔군측의 휴전 제의 동의
- 7월 8일 | 양측 연락장교, 휴전회담 개최 합의(개성)
- 7월 10일 | 휴전회담 본회의 개최
- 9월 20일 | 이승만 대통령, 휴전수락 4대 원칙 발표
  - ① 중공군 철퇴
  - ② 북한군 무장해제
  - ③ 유엔감시하 총선
  - ④ 휴전조건 동의기간 및 회담 종결기한 설정
- 10월 25일 | 휴전회담 재개(판문점)
- 11월 2일 | 휴전회담, 휴전실시를 위한 구체적 결정 토의
- 11월 19일 | 북한 외무상, 유엔 총회 및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
  - ① 조선문제의 평화적 조정방법의 제1단계로서 조선에 있어서 군사행동을 즉각 중지시킬 것

- ② 전투지역으로부터 군대를 후퇴시키고 각각 2km 폭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할 것
- ③ 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 것
- ④ 조선전쟁을 일으킨 범죄자, 평화적인 조선인민에 대한 만행의 장본인과 실행자를 엄벌에 처할 것

**11월 27일 | 휴전회담, 군사경계선 문제 타결(모든 전선에 30일간 공격중지령)**

- ① 군사경계선은 양군의 실제 접촉선으로 함.
- ② 적대행위는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계속 함.
- ③ 군사경계선에 관한 협정이 정식으로 채택된 후 30일 이내에 정식 휴전이 성립되면 이미 쌍방이 동의한 선을 변경하지 않고 이것을 최종선으로 함.

**12월 28일 | 유엔군측은 공산군 포로 13만2천4백74명, 공산군측은 유엔군 포로 1만1천5백59명이라고 각각 발표**

# 1952년

## 1월 2일 | 유엔군측, 포로교환에 관한 원칙적인 문제 제안

- ① 귀환을 택한 포로는 어느 한편이 이들 포로를 전부 석방할 때까지 1대1의 비율로 교환
- ② 한쪽 편에 포로가 남았을 때 이들 포로의 전부는 휴전조인 때 상대방의 점령지역에 있으며 또한 귀환을 택하는 일반인 및 외국 민간인 기타와 1대1로 교환
- ③ 귀환을 원치 않는 포로는 그 지위로부터 해방되지만 해방된 포로는 다시 무기를 가지고 전란에 참가하여서는 안됨.
- ④ 휴전조인 때까지 남은 일반인은 개인의사에 따라 귀국
- ⑤ 강요에 의하지 않고 귀국을 택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적십자사의 대표는 교환지점에서 전 포로와의 회견을 할 수 있음.
- ⑥ 제2, 제3, 제5항의 목적을 위해 쌍방의 일반 억류자는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과 남한의 어느 쪽 주민이었던가가 판정

## 1월 4일 | 공산군측, 유엔군측의 6개항 제안을 거부하고 모든 포로는 무조건 석방할 것이며 원소속에 귀환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 10월 17일 | 유엔 폴란드 대표, 한국에서의 즉시 휴전안 제안

- 한국휴전은 전포로를 송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즉시 실시하며 중공의용군을 포함하는 모든 외국군대는 2개월 이내에 철수함. 그런 연후에 한국문제는 한국인 자신에게 일임하기 위해 쌍방의 교전국과 중립국으로 감시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감시위원회의 감시하에 통일을 달성함.

## 12월 2일 |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승만이 휴전협정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5개항 약속

- ① 한미방위협정의 체결
- ② 2억 달러의 차관
- ③ 만일 아무런 건설적인 성과가 없다면 90일 후에 미국이 정치회의에서 철수한다는 합의
- ④ 한국군 증강의 원조
- ⑤ 한반도 통일을 위한 회담이 열리기 전에 그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한·미간의 고위층 회담 개최에 대한 합의

# 1953년

1953

3월 22일 | 유엔군측, 상이병 포로교환 제안

3월 28일 | 공산군측, 상이병 포로교환 제의 수락 및 판문점 휴전회담 재개 요청

3월 30일 | 주은래 중공 외상, 휴전회담 개최 제안

4월 7일 | 양측 연락장교 회의, 상이병 포로교환 합의

4월 9일 | 이승만 대통령, 휴전반대 단독복진 성명 발표

4월 11일 | 유엔군·공산군측, 상이포로 교환협정 체결(4월 20일~26일 교환 완료)

4월 21일 | 국회, 통일 없는 휴전 반대 결의

5월 25일 | 이승만 대통령, 한국대표의 휴전회담 출석 거부

5월 25일 | 미국 정부, 한국 정부에 4개항 보장 제시

- ① 만일 공산군측이 정전협정을 파괴하면 한국참전 16개국이 단결하여 적에 대해 대처하고 그때 16개국이 취하는 보복은 한국 국토에 국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성명을 발표
- ② 한국 군대를 20개 사단으로 증강하고 그에 상응하는 해군과 공군을 건설하는데 원조
- ③ 미국 정부는 최소 10억 달러의 경제원조 제공을 보장
- ④ 한국에서 진정한 평화가 실현될 때까지 한국과 연안에서 전쟁준비 태세를 유지

5월 26일 | 한국 정부, 휴전조건 성명 발표

- ① 중공군의 즉시 철수
- ② 유엔이 한국정부의 대표를 전한국 문제를 토의하는 국제회의의 유일한 정식 대표임을 인정할 것
- ③ 또한 그 정부가 전한반도에 주권을 행사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을 보장할 것

6월 5일 | 한국 정부, 미국 정부에 독자적인 휴전안 제의

- ① 중공군과 유엔군이 동시에 한국에서 철수
- ② 미국은 한국의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경우 즉시 그리고 자동적으로 모든 원조를 제공하는 방위조약을 체결
- ③ 미국은 한국군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해·공군을 보유하기 위해 군사원조를 제공

6월 6일 |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3개항목 보장 서한

- ① 미국은 모든 평화적 방식을 사용하여 한국통일을 실현하도록 노력
- ② 접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정전협정을 체결하였을 때 나는 즉시 과거에 미국과 필리핀공화국간, 그리고 미국과 호주·뉴질랜드 양개방 성원국간에 체결한 바와 같은 원칙에 따라 공동방위조약을 체결할 준비를 함.
- ③ 미국 정부가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서 얻는 조건하에 대한민국에 계속 경제원조를 제공하



여 극심한 파괴를 입은 국토를 재건하는 데 사용하도록 함.

6월 8일 | 휴전회담, 포로교환에 관한 조항 완전 합의(8월 6일~9월 6일 교환 완료)

7월 12일 | 미국 정부, 이승만 대통령의 5개항 요구조건 수락

- ① 한미안보조약 체결
- ② 제1차로 2억 달러 경제원조 제공
- ③ 정치회담이 90일내에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 통일계획을 토의할 것
- ④ 한국군대를 20개 사단으로 증강할 것
- ⑤ 정치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한·미 고위급회담을 할 것

7월 19일 | 공산군측, 휴전협정 조인 동의

7월 27일 | 휴전협정 조인

8월 5일 | 북한 김일성 수상,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평화적 통일 강조

- 정전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우리 앞에 제기된 과업은 앞으로 열릴 정치회의에서 우리나라 문제의 완전한 평화적 해결이 달성되도록 꾸준히 투쟁하는 데 있음. 정치회의의 기본목적은 미군과 그의 추종국가 군대들을 남조선에서 완전히 철거시키고 조선문제를 조선사람 자체의 손으로 해결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내정을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음.

10월 1일 |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미국 워싱턴)

11월 23일 | 이승만 대통령, 통일문제 관련 성명(공보처 발표)

- 북한만의 단독선거로 국회의 잔여 의석을 채우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북한주민이 희망한다면 전국 총선거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

12월 12일 |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의 정치회의 준비회담 무기휴회

12월 16일 | 이승만 대통령, 전쟁불사 성명 발표

- 1954년 1월 22일까지의 기간에 정치교섭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는 군사적으로 한국을 원조한 제국은 전쟁을 재개함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이에 참가해야 할 것임. 이러한 전쟁이 자기들의 자유와 안전의 방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국가나 장병이 한 국땅에 머물러 있다면 그러한 국가나 장병은 자기들의 본국으로 철수해도 좋음.

# 1954년

2월 18일 | 베를린 4상회의(미·소·영·프), 제네바 회의 개최 발표

4월 26일 | 제네바 회담(4월 26일~6월 15일) 개최

- 남한과 6.25 참전 15개국(남아프리카연방공화국 불참), 북한과 중공·소련 등 19개국 참가

4월 27일 | 북한 남일 제네바회담 대표, 조선문제의 평화적 방안 제안

① 조선의 민족적 통일을 신속히 회복하고 민주주의적 독립통일국가를 창건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

ㄱ. 전조선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기초 위에서 조선의 통일정부를 형성할 국회 총선거를 실시할 것

ㄴ. 조선 국회의 자유총선거를 준비 실시하며 남북조선간의 경제 및 문화적 접근에 대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대한민국 국회에 의하여 각각 선출된 남북조선 대표들로서 전조선위원회를 조직할 것

ㄷ. 전조선위원회의 당면과업 중 하나는 외국간섭과 지방정권 당국 및 테러그룹들의 선거자들에 대한 압력을 제외하는 자유분위기에서 실시할 수 있는 선거의 진실한 민주주의적 성격을 보장하는 총선거법 초안을 준비하는 것임을 예견할 것. 위원회는 또한 조선 주민에게 집회 및 출판의 자유, 국내 일체 국민에게 그들의 정치적 견해, 성별·종교별 및 민족별을 불문하고 입법기관에 입후보자를 추천할 자유를 보장할 필요한 대책들을 취하여야 함.

ㄹ. 조선의 민족적 통일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지어줌에 중요한 일보로 되는 조선의 경제복구에 도움을 주며 조선인민의 물질적 복리를 향상시키며 그의 민족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킬 목적으로 전조선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간의 경제 및 문화교류 즉 통상, 재정회계, 운수, 경계선 관계, 주민의 통행 및 서신의 자유, 문화 및 과학교류 및 기타를 설정·발전시킬 대책들을 즉시 취할 것

② 6개월 기한내에 조선지역으로부터 일체 외국무력이 철거하여야 할 것을 필요로 인정할 것

③ 극동에서의 평화유지에 가장 관심을 가진 해당 국가들측으로부터 조선의 평화적 발전을 보장하며 또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을 단일독립민주국가로 평화적으로 통일시킬 과업의 급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조건들을 지어줄 필요성을 인정할 것

6월 15일 | 한국문제에 관한 한국전쟁 참전 16개국 공동선언

① 유엔은 그 헌장에 따라 침략을 격퇴하고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취하며 한국에 있어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도록 주선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정당한 권한이 부여돼 있음.

② 통일독립된 민주한국을 수립하기 위해 유엔감시하에 토착인구의 비례에 따라 대표자가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진정한 자유선거가 한국에서 실시되어야 함.

이상 두 원칙을 공산측이 거부하는 한 이 회의에서 이 이상의 논의는 무익하다고 결론지을 수 밖에 없으며 한국에 있어서의 유엔의 목적을 위해 계속 지지할 것을 재확인

**10월 2일 | 제3대 국회, 통일안에 대한 결의**

- 유엔감시하에 북한 전지역에서 전공산군이 철퇴한 후 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 주권을 확충하는 것이 국시

**10월 30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8차 회의 개최, 남북대표자 연석회의 소집 제의**

- ① 조국의 평화적 통일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남북조선의 각 정당·사회단체 및 각계각층 대표자 연석회의 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대한민국 국회의 합동회의를 평양 혹은 서울에서 1955년내로 소집할 것
- ② 상기 회의의 소집에 관한 문제와 남북간의 경제 및 문화교류, 통상, 통행, 서신거래의 개시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남북조선 대표들의 회의를 1955년 2월에 판문점 혹은 개성에서 소집할 것
- ③ 남북조선 각 정당·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애국적 인사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호상 연락하며 호상 내왕하며 호상 접촉하여야 할 것이며 남북조선의 주권당국은 전조선 지역에서 이들의 활동자유를 보장할 것

**11월 3일 | 북한 김일성 수상,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연설에서 통일을 위한 북반부 기지론 강조**  
- 조국통일을 위하여 우리는 두 가지 방면에서 일을 잘해야 함. 한 방면으로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꾸준히 우리 당의 영향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미제와 리승만 역도를 반대하여 쫓겨하도록 해야 하며 다른 방면으로는 북반부 민주기지를 더욱 철옹성같이 강화해야 함.

**11월 4일 | 국회, 한국 중립화 및 남북총선거안 발대 결의**

**11월 11일 | 국회, 북한만의 선거를 통일방안으로 하는 안을 결의**

**11월 19일 | 북한 조국전선, 남북지역 방문자의 상호 신변안전 보장 제의**

- 대한민국 정권당국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무성과 같이 남반부로 왕래하는 인사들의 신변보호와 남조선 전지역에서 그들의 활동자유를 보장할 것을 담보하여야 할 것임. 우리는 조국통일과 기타에 관한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 협상하기 위하여 대표들을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음. 우리는 당신들이 대한민국 정권당국이 이와 같은 조치를 조속히 취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희망하며 또 이와 같은 조치가 반드시 취하여지리라는 것을 기대함.

**12월 1일 | 북한 체신상, 남북체신대표 회담 제의**

- ① 남북조선간에 정상적인 체신우편 연락을 시급히 개시하며 또한 이와 관련된 제반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하여 남북조선 체신대표들의 회담을 1955년 2월에 판문점 혹은 개성에서 소집할 것
- ② 제1항의 대책을 원만히 준비할 목적으로 양측은 각각 2명의 자기 대표를 선발하여 1954년 12월 17일 상오 10시 판문점에서 예비적 회담을 가질 것

# 1955년

1955

- 3월 7일 | 북한 조국전선, 18차 중앙위에서 남북협상회의가 성립되지 못하고 통일이 지연된 모든 책임은 미국과 한국이 져야하며 한국 당국이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남북 협상의 길이 영원히 닫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
- 3월 11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9차 회의 선언문에서 남북한 군대 각각 10만 명 감축 주장  
- 최고인민회의는 미국과 남조선간에 체결된 각종 군사조약들을 견결히 배격하며 조선내정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제거하고 조선에서의 평화적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선 조속한 기한내에 일체 외국군대를 조선지역으로부터 철거하며 남북조선의 군대 수효를 10만 명까지로 각각 축소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
- 5월 26일 | 북한 수산상, 남북한 수산당국자 회담 제의  
- 공화국 수산성은 남조선 어민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북반부 영해에서 어로할 것을 희망하는 남조선의 어민대표 또는 어민단체 대표들과도 회담할 용의가 있음. 이 같은 문제 및 남북조선 어장들의 상호이용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시급한 시일내에 남북조선 수산당국자들 또는 일반 어민대표들의 예비회담을 남북조선의 임의의 지역에서 소집할 것을 제의함.
- 8월 11일 | 북한 외무성,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 요망  
- 조선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되며 이를 위해서는 아시아제국이 광범하게 참가하는 극동회의를 소집하여 조선으로부터 외국군대의 철퇴와 조선의 평화적 통일 방법을 강구할 것을 관계 각국 정부에 요망
- 8월 13일 | 이승만 대통령, 휴전협정 즉시 폐기와 북진통일 주장
- 8월 15일 | 북한 김일성 수상, 8·15해방 10주년 경축대회 연설에서 남북당국의 대표자회의 개최 제의  
- 남북조선의 호상 접근과 협상을 요구하는 전체 조선인민의 염원을 고려하여 조국통일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남북조선 당국의 대표자회의를 될수록 빠른 기일 안에 소집할 것을 요구함. 우리는 정치적 견해와 신앙의 여하, 재산의 유무를 불문하고 민족의 단결과 조국의 통일을 진정으로 염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쁘게 포용할 것이며 그들과 협상할 것임.
- 11월 8일 | 북한 전기상, 남한에의 송전문제와 관련한 회담 제의  
- 전기성은 남조선의 모든 평화적인 생산기업체들과 인민대중의 일상생활용으로 전력을 즉시 송전할 용의가 있음. 이를 시급히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의 해당한 정무기관 혹은 전기회사 및 기타 실업단체 또는 민간대표들과 1955년 11월 25일에 개성시에서 회담할 것을 제의함.

# 1956년

- 4월 28일 | 북한 노동당, 제3차 전당대회 선언문에서 남북조선 정권당국 간 무력불행사 선포 제의
- ① 조선문제의 중국적인 해결은 조선인민 자체의 민주주의적 의사에 기초하여 실현되어야 하며 조선의 통일정부는 전체 조선인민의 총선거에 의하여 수립되어야 함.
  - ②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조선에서 달성된 정전의 성과를 공고한 평화에로 전화시켜야 함.
  - ③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 광범한 인민대중이 참가하며 그들의 애국적 열성과 적극성이 유감없이 발휘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의 전반적 사회·정치 생활에서 민주주의 제원칙이 실현되어야하며 인민대중의 생활이 안정 개선되어야 함.
  - ④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현존하는 남북조선간의 부자연한 장벽이 제거되어야 하며 남북조선 인민간의 호상 접촉과 협상이 이루어져야 함.
  - ⑤ 조국통일독립의 위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면적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남북조선의 전체 애국적 역량을 단합하여 평화적 통일의 적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강화하여야 함.
  - ⑥ 조선에서의 평화유지와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정이 달성되어야 함.
- 7월 12일 | 북한 적십자사(이하 북적), 남한 적십자사에 남한 수재민 원조 제의
- 7월 20일 | 북한 전국청년학생회의, 남북조선 청년학생 대표회의 제의
- 8월 24일 | 북한 보건상, 남북의 보건 당국자 간 방역정보 교환 제의
- 10월 1일 | 북한, 군사정전위원회 제78차 회담에서 남북교역 제안
- 10월 13일 | 북한 민청, 남북조선 청년학생간의 접촉·교류 제의
- 10월 16일 | 북한 제2차 조선작가대회, 작가·언론인·문예학자의 남북교류 제의
- 10월 28일 | 북적, 이산가족 상봉 주선 요청
- 11월 7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남북당국간 군비축소회담 개최 용의 표명
- 남북조선의 군비 축소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남조선당국과 언제든지 회담할 용의가 있음. 대한민국 민의원과 남조선의 전체 사회계는 조선에서의 전쟁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력기해야 하며 남북 군비축소회담의 소집을 지지하여 나서야 함. 전체 남조선인민들은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전을 더욱 공고히 하며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며 미제와 이승만에 의한 정전협정의 폐기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함.

# 1957년

1957

1월 11일 | 제11차 유엔총회, 유엔감시 하에 남북총선거 실시 결의

1월 12일 | 북한 외무상, 유엔총회의 한국문제 결의와 관련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 발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의 참가 없이 일방적으로 토의되었으며 또 조선인민의 의사에 배치되며 부당하게 채택된 조선문제에 관한 유엔총회의 결정을 단연코 인정하지 않음. 조선문제는 조선인민 자체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함. 미제의 침략적 도구로서 조선내정에 간섭할 사명을 띤 소위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의 활동을 건결히 반대함. 조선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남북조선간의 정치·경제 및 문화적 연계를 설정하여 남북조선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인사들간의 협상의 방법으로써 평화적 통일방도들을 계속 탐구하기에 노력할 것이며 조선문제의 해결을 위한 유관국가들의 회의가 시급히 소집되어야 할 것을 거듭 강조함.

1월 31일 | 북적, 남북적십자단체 대표들간의 정기적인 문안편지 교환 제의

5월 7일 | 북한, 남조선 절량 농민들에게 구호미 10만 석 무상제공 결정

5월 30일 | 북한 외무성, 남한의 미국 신형무기 반입 반대성명 발표

- 정전협정을 파괴하고 남조선에 신형무기를 반입함으로써 남조선을 원자전쟁 기지로 전변시키려는 미제 지배층의 책동을 건결히 반대함.

6월 10일 | 북한 올림픽위원회, 국제체육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출전 제의

8월 9일 | 북적, 남한 수재민을 위한 2천만 원(북한 화폐) 상당의 구호 물자 제공 제의

8월 25일 | 북한 김일성 수상, 송도정치경제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남북연석회의 소집 주장

- 우리는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먼저 남북의 접촉과 여러 정당·사회단체 인사들의 호상 왕래와 연석회의 소집을 주장. 우리는 서슴지 않고 남조선당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함. '당신들은 북반부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자기의 당을 조직하라. 사회단체도 조직하라. 얼마든지 자유로 활동하라. 우리도 남반부에 나가서 당과 사회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하게 하라. 당신들은 북반부에 들어와서 우리의 노동자·농민들 앞에서 연설하게 하라.'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이것을 겁나 함. 심지어는 편지거래를 하는 것조차 겁나서 반대하고 있음. 그들은 남북의 접촉을 위한 우리의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문을 꼭 닫고 들은 척만 척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음.

9월 9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련의 거부권으로 한국의 유엔가입안 부결

9월 10일 | 국회, 통일방안 채택

- ① 중공군의 북한지역에서의 철수
- ② 유엔 감시 하에 북한지역만의 자유선거
- ③ 한국의 유엔 가입

**9월 20일 | 북한 김일성 수상,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평화적 통일 실현을 위한 선차적 과제 역설**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우리나라에서 공고한 평화가 유지되어야 할 것임. 정전협정의 모든 조항들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며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켜야 함.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퇴시켜야 하며 남조선이 미국의 원자기지로 전변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함. 남북간에 군비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병력을 축소하여야 함. 우리는 남북조선의 병력을 각각 10만명으로 혹은 그 이하로 축소하자는 것을 남조선 당국에 재차 제의함. 또한 남북조선간의 통상과 인민들의 자유로운 내왕과 통신 및 문화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지체없이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제의함. 우선 남북에 각각 일정한 지점을 선정하여 거기에서 서로 물자를 교역하는 방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함. 우리는 조선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하여 남북조선의 대표를 참가시키는 유관국가들의 국제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함. 이리하여 조국은 평화적으로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 자신의 민주주의적 의사에 의하여 통일되어야 할 것임. 남북조선에서 모든 정당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조건하에서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과 구속도 없이 일반적·평화적·직접적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전국적인 선거를 실시해야 할 것임.

**10월 7일 | 북한 상업상, 남북 간 통상과 물자교역 제의**

- ① 남북조선과의 통상과 물자교역을 위하여 각각 일정한 지점을 설정하고 거기에서 호상 수요되는 물자를 교역할 데 대하여 제의하면서 우리 측은 그와 같은 지점으로 개성시를 지정함.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당국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 지점을 지정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의견으로는 철원읍이 적당하다고 인정함.
- ② 남북간의 통상을 위하여 요구되는 공동시장의 설치와 그 관리, 남북상품전람회 조직 및 통상과 관련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상설위원회 조직 등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조선 당국 또는 민간상공업자 대표들의 예비회담을 1957년 내에 소집할 것을 제의하면서 그의 구체적 시일과 장소에 대하여서는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함.

**11월 30일 | 북한 외무성, 북한대표 참석 없는 유엔 결의안 통과 무효 주장**

- 미국의 압력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의 참가 없이 유엔총회에서 일방적으로 조선문제를 토의 결정한 것은 유엔현장의 난폭한 위반. 조선인민의 전민족적 이익에 관계되는 문제 토의에 진정한 조선인민의 대표를 참가시키지 않고 조선인민의 광범한 의사를 듣지 않는 것은 극히 부당한 일.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문제에 관한 유엔총회의 종전의 결정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제12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조선문제에 관한 결정도 완전히 비법적인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임.

**12월 18일 | 북한 올림픽위원회, 남북올림픽 위원회 및 체육인 대표 접촉 제의**

## 2월 5일 | 북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제안 발표

- ① 조선에서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미군과 또한 중국 인민지원군을 포함한 기타 일체 외국군대가 남북조선으로부터 동시에 철거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조선에 자기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국가들은 조선으로부터 자기의 군대를 즉시 철거시키기 위한 해당 조치를 조속히 취하여야 할 것임. 미군의 남조선 강점은 어떠한 구실로써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또한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남아 있을 하등의 근거도 없음.
- ② 남북조선으로부터 일체 외국군대가 완전히 철거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전조선 자유선거가 실시되어야 함. 이 선거는 중립국 기구의 감시 하에 실시될 수 있음. 선거에서는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보장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남북조선의 모든 정당·사회단체들과 정치·사회계의 인사들의 활동의 자유와 언론·출판·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남북조선의 어디서든지 법적으로 허여되어야 함. 현재 남조선에서 감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정당들의 활동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엄금되어야 함.
- ③ 남북간의 경제 및 문화교류와 전조선 선거에 관한 문제 등을 토의하기 위하여 동등한 기초 위에서 남북간의 협상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함. 남북간에는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평화적 주민들의 자유내왕이 허여되어야 함. 남북간의 경제교류는 우선 남북이 서로 일정한 지점을 선정하고 그를 통하여 실시할 수도 있을 것임. 또한 국어를 비롯한 민족문화의 통일적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남북조선의 학자·문화예술인 및 체육인들의 접촉과 그들의 공동적인 활동이 전개되어야 함.
- ④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미 8만명의 무력을 축소한 바 있거니와 금후 조속한 기간내에 남북조선의 군대도 각각 최소한도로 축소되어야 함. 남조선 당국은 남북 군비 축소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 정당한 제의에 지체 없이 호응함으로써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확장된 '국군'의 유지를 위하여 남조선 인민들이 지拂하는 과중한 군사비 부담을 반드시 경감시켜야 함.

## 2월 8일 | 북한 김일성 수상, 인민군 부대 시찰 연설에서 남북 상호 정당활동 보장 제기

- 우리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조선문제를 조선사람 자신의 손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즉 중국인민지원군도 나가고 미군도 나가게 하고 남북조선이 서로 협상하여 문제를 해결하지는 것임. 미군이 나가면 남조선 당국은 인민들의 압력에 의하여 우리와 협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우리는 남북조선에서 정당·사회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선거를 하자고 함. 이승만의 자유당도 북조선에 와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그 대신 남조선에서 노동당이 활동하는 것도 방해하지 말라는 것임.

## 2월 19일 | 북한과 중공, 북한의 중공군 1958년 내 철수 발표



- 2월 19일 | 미국 국무성, 주한미군 불철수 성명
- 8월 21일 | 북한, 남한의 실업자 및 고아들의 구호품(백미 15만 석, 직물 5백만 미터, 수산물 1만 톤 및 신발 4백만 켤레) 무상제공 결정
- 10월 13일 | 북한 민청 중앙위원회, 제7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남한의 청년학생 대표 초청
- 10월 28일 | 북한, 중공군 철수 완료 발표
- 11월 6일 | 북한 외무성,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북한대표의 참가를 거부한 유엔정치위원회 결의 무효 주장
- 12월 29일 | 북한, 수산상·내무상 공동성명에서 남북 수산기관 및 어민단체 대표 협상 제의
- ① 북반부 동해에서의 남반부 어민들의 어로작업은 목선과 범선 혹은 30마력 이하의 발동기를 설치한 기관선으로 함.
  - ② 어로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선박은 길이 1미터,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를 가진 흰 깃발을 게양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푸른 등을 켜야 함.
  - ③ 북반부 해역에 들어온 어선들은 강원도 고성군 내무기관에 와서 선박의 종류와 선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④ 상기 어선들은 무장할 수 없으며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 목적에 이용될 수 없음.
- 공화국 수산성과 내무성은 상기 규정절차를 준수하면서 어로작업을 하는 남반부 어민들과 어선들에게 제반 편리를 도모하여 주며 그들의 신변안전을 도모할 것임. 남반부 어민들이 앞으로도 북반부 영해에서 정상적인 어로작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남북 수산기관 혹은 어민단체 대표들이 협상하여야 함. 우리측은 언제나 이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다시 천명함.

# 1959년

6월 6일 | 북한 조국전선, 평화적 통일과 미군철수를 위한 전민족적 투쟁 호소

6월 24일 | 이승만 대통령, UPI 기자회견에서 무력복진통일 재강조

- 이날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복진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성명 발표

9월 23일 | 북한, 남한의 풍수해 이재민에게 구호물품 제공 결정

9월 24일 | 한국 정부, 북한측의 풍수해 구호물자 제공 제의 거부

10월 27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평화적 협상 방법에 의한 통일 강조

10월 27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세계 각국 국회에 미군철수 협조 호소

- 우리는 세계 각국 국회들이 자기 나라 인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여 응당히 우리의 평화통일 방안을 지지하며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거를 요구하여 나설 것을 기대함. 남조선에 자기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국회들에서는 자기 나라 군대를 소환할 데 대하여 심의 하며 정부들에 요구하여 자국 군대를 남조선으로부터 즉시 철수하도록 할 것을 우리는 기대함.



**1960년대**

# 1960년

2월 2일 | 북한 전국청년학생대회, 남북청년학생 접촉 교류 제의

2월 5일 | 북한 직업동맹열성자대회, 남북노동자 접촉 교류 제의

4월 19일 | 4·19 학생의거

4월 21일 | 북한 노동당, 남북조선의 정당·사회단체 대표연합회의 구성 제의

- 우리는 과국에 처한 남조선의 현 사태를 수습할 대책을 토의하기 위하여 남북조선의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연합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것을 제의함. 미국 침략군대는 즉시 물러갈 준비를 하고 우리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말며 조선사람끼리 서로 만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함. 남북 조선의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은 한자리에 모여 긴박한 사태의 수습책을 강구하며 모든 문제를 조선사람끼리 해결하여야 함.

4월 27일 | 북한 22개 제정당·사회단체 지도자 연석회의,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개최 제의

7월 19일 | 군사정전위원회 회담, 공산측은 비무장지대를 개방하고 남북인사의 자유왕래 제의

8월 13일 | 윤보선 대통령 취임, 취임사에서 “남북통일은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야 하며 이보다 선행되어야 할 근본문제는 남한이 혼란에서 벗어나 국력을 부강 시키는 것이다”라고 언급

8월 14일 | 북한 김일성 수상, 8·15해방 경축대회 연설에서 과도적 조치로서의 남북연방제 제안

- 남조선당국이 남조선이 다 공산주의화될까 두려워서 아직은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먼저 민족적으로 긴급하게 나서는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하여 과도적인 대책이라도 세워야 할 것임. 우리는 이러한 대책으로써 남북조선의 연방제를 실시할 것을 제의함. 우리가 말하는 연방제는 당분간 남북조선의 현재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조선의 경제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지는 것임. 만일 남조선당국이 우리가 내놓은 연방제까지도 아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남북조선의 실업계 대표들로 구성되는 순전한 경제위원회라도 조직하여 남북 사이의 물자를 교역하며 경제건설에서 서로 협조하고 원조하도록 할 것을 우리는 다시 제의함. 남북 사이의 문화사절들이 오고 가게 하며 과학·문화·예술·체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호상 교류를 실시할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제의함.

10월 25일 | 군사정전위원회 제129차 본회의, 공산군측은 외국군 철수와 평화통일 주장

- 공산군측: ① 한국에서의 전쟁방지를 위해 신형무기를 포함한 모든 외국군대가 즉시 철수되어야 함. ② 한국 국민에 의한 총선거를 해야만 함. ③ 유엔은 미국 침략주의 돕는 비법적 단체라고 비난

- 유엔군측: 유엔의 결의에 따라 유엔경찰대으로써 공산침략을 막기 위해 남한에 유엔군이 주

둔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산측 주장은 비난에 불과하다고 일축

**11월 2일 | 제5대 국회, 통일방안에 관한 결의**

- 통일·독립·민주한국을 수립한다는 유엔의 기본원칙에 따라 한국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안전이 항구히 또 확고히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하여 유엔 감시하에 인구비례에 따라 자유선거를 실시함.

**11월 10일 | 북한, '조선의 평화적 통일에 대하여' 발표**

- 조선문제의 해결,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이 철거하여야 함. 유엔이 만약 그의 현장에 명백히 규정된 원칙과 제규범에 근거하여 행동하려거든 유엔의 간관을 도용하며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응당한 조치를 시급히 강구하여야 함. 유엔은 미국의 침략정책 수행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유엔한국통일부흥 위원단'을 해체하여야 함.

**11월 19일 | 북한 최용건 최고인민회의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2기 8차 회의에서 남북연방제 구체안 제시**

- 연방제의 실시는 그것이 통일적인 연합정부가 아니므로 비록 완전한 국가적 통일을 이루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민족에 유리한 경제문제들을 협의하고 해결함으로써 양단된 우리 인민의 민족적 유대와 연계를 회복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연방제의 실시는 또한 남북 조선의 경제문화교류와 호상 협조를 보장함으로써 남조선의 경제적 파국을 수습하고 도탄에 빠진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게 할 것임. 남북간의 상품교역을 실현하기 위하여 쌍방이 실업계 대표들로 연합상업회의소를 조직하여 긴밀한 상업적 연계를 맺도록 하여야 하겠음. 평양시와 서울시에 각각 상품전본시장을 설치하며 중요 도시들과 남북조선 각도 소재지들에 공동시장을 설치할 것임. 또한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는 출판기관을 설치하여 각종 과학연구 성과들을 발표하며 우리 민족의 귀중한 고전문헌들을 번역 출판하며 남북간의 경제문화교류와 관련된 문제들을 광범히 보도하는 것이 필요함. 이와 함께 기자들을 서로 교환하며 자유로운 취재생활을 전개함으로써 전체 인민들이 남북의 실정을 더 잘 알도록 하여야 할 것임. 남북관계 영화필름을 교환하고 남북 영화예술인들이 공동으로 영화를 제작하며 예술단과 체육단을 호상 교류하며 국제적인 체육축전과 예술축전에 공동으로 진출하여야 하겠음. 운수·체신 분야에서 남북간의 장벽을 깨뜨리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화물 직통수송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서울-원산간, 신의주-부산간 직통 여객열차를 운행하며 남포·청진·홍남·인천·목포·부산항들을 서로 개방하고 남북간의 해상수송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겠음. 남북간의 자유로운 내왕과 서신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전신전화통신을 보장하여 평양-서울간 직통회선을 구성하며 각종 우편물을 교환하기 위한 대책도 시급히 강구하여 15년간 멎었던 조국의 동맥선과 신경계통이 다시 활동을 개시하게 하며 남북에 갈라져 사는 혈육의 정도 더욱 힘차게 맥박치게 하여야 하겠음.

**11월 21일 | 북한 김두삼 중공업위원회 부위원장, 남한에 송전 용의 표명**

**11월 22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남북경제·문화교류 및 남북협상회의 개최 제의**

**11월 23일 | 주요한 상공부 장관, 북한의 송전 제의에 대해 수용 불가 표명**

- ① 숫자상 신빙성이 없는 발표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잉여전력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 문제이고
- ② 전기를 보낸다 해도 계속 송전을 기대할 수 없고
- ③ 비록 휴전이 성립되었다고는 하지만 전시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남북한의 실정에서 볼 때 괴뢰측 송전 제안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임. 그리고 반공운동과 교역은 별개의 것이 아님. 남북한이 전쟁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마당에서 일체의 교역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음.

**11월 25일 | 북한, 유엔총회에 평화통일에 관한 각서 발송**

- ① 유엔은 유엔의 이름 아래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가급적 조속히 철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② UNKRA가 최근 총회에 제출한 보고는 평화적 한국통일을 방해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여 엄연한 한국의 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기만하여 한국에 대한 미국의 침략정책을 위장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
- ③ 한국이 아직도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 미국 군대가 잔류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침략정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 유엔총회의 연례결의가 미국에 의해 사전에 작성되었으며 조선민민의 이익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임.
- ④ 장면 내각은 이승만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침략정책에 굴종하여 국민의 민주적 요구를 거부하는데 힘을 다하고 있음.
- ⑤ 유엔 감시하의 자유선거는 미국의 식민체제를 유지케 하는 수단 이외의 아무것도 아님.
- ⑥ 남북연방하에서는 남북한이 각각 현상을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양정부를 대표하는 최고민족위원회가 남북한의 경제적·문화적 발전을 관리
- ⑦ 남한의 농·공업 건설은 북한과의 경제적인 교류와 협조 없이 달성될 수 없음.
- ⑧ 한국의 평화통일을 원하는 모든 정당·사회단체 및 개인과 더불어 협상할 용의가 있으며 그들의 정치적·종교적 견해 및 과거의 행적을 문제시하지 않겠음.

**12월 20일 | 정부, 유엔 감시 하 남북통일이 공식적인 통일방안임을 천명**

- ① 국토통일에 대한 우리의 기본방침은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을 통한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성취하는 것임. 유엔 감시는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보장하여 국민의 진정한 의사의 표현을 확보하는 것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훨씬 우수한 제도인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선거가 남북한에 실시되는 경우 자유민주진영이 절대적인 승리를 거둘 것을 의심치 않음. 만약 공산측이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를 수락한다면 선거법 제정 등 제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정부로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부단히 연구 검토중임. 그리고 이러한 절차는 대한민국 헌법이 존중·준수될 것은 물론임.
- ② 현재 외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외교자문위원회내에 통일분과위원회를 두어 통일문제를 초당파적으로 연구 심의하도록 이미 결정했으며 그 외에 통일문제연구소 설립도 성안중에 있음.

# 1961년

## 1월 7일 | 북한 조국전선, 남북협상 용의 표명

- 오늘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정계 인사들이 남북의 협상과 교류를 주장해 나서는 것은 응당한 일임. 더는 지체하지 말고 남북대표는 우선 한자리에 모여 하루속히 협상하여야 함. 우리는 서신·인물 교류와 교역을 포함한 남북조선의 직접협상의 제의도 대학교수·학생·정당인·언론인·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남북조선 시찰단을 교환하지는 주장도 지지. 우리들은 언제나 남조선 각계 대표들과 개별적인 인사들은 맞아들이며 우리의 대표들을 남조선에 파견할 용의가 있음.

## 1월 13일 | 북한 과학원, 남북과학자교류 제의

## 1월 29일 | 북한 교통상, 남북 철도연락 제의

## 3월 3일 | 북한 조선문학예술총동맹 결성대회, 남북 작가·예술인 교류 접촉 제의

- 문학·예술을 지망하는 남반부 청년학생들을 우리의 문학·예술기관에 받아 국가보조로 공부시킬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음. 아무런 제한도 없이 남북간에 문학·예술단체 혹은 개별적 작가·예술인들이 호상 내왕하며 자유롭게 창작하고 공연할 수 있게 되어야 함. 남북 작가·예술인들은 우선 문학예술작품을 호상 교류하며 창작사업에서의 경험들을 교환하며 각종의 접촉을 가져야 함.

## 3월 6일 | 북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이하 UNCURK) 해체 주장

- 유엔이 할 일은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여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즉시 철거시키기 위한 응당한 조치를 시급히 취하는 것이며 미국의 침략정책 수해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즉시 해체하는 것임. 이렇게 함으로써만 유엔은 추락된 그의 위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임.

## 3월 20일 | 정부, '통한각서' 발표

- 본 각서는 한국분단의 연혁과 한국분단이 통일된 민주독립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한국민의 갈망과 국가연합의 간단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있는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 각서는 ① 한국분단에 대한 책임은 공산주의 자들에 있다는 것 ② 대한민국만이 한국에서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는 이유 ③ 전쟁으로 황폐되었던 대한민국 경제의 재건 기록 ④ 한국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및 인권옹호사업의 발전 ⑤ 대한민국이 수락한 한국통일을 위한 국제연합의 제원칙 등을 그 주내용으로 함.

## 4월 12일 | 제15차 유엔총회 정치위원회, 유엔의 자격과 권위를 인정할 것을 조건부로 남북한 대표 동시 초청안 채택

## 4월 17일 | 북한, 유엔의 조건부 남북한 동시초청 결의안과 관련한 성명 발표

- 유엔에서의 문제 토의에 당사자를 참가시킴에 있어서 그 어떤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유엔



의 역사에 전례없는 수치스러운 일이며 유엔의 원칙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부당한 처사. 유엔에서 조선문제가 토의되는 이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자기 대표를 파견할 것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자기 대표의 참가와 동의 없이 유엔에서 채택되는 그 어떤 부당한 결의도 인정하지 않을 것임.

- 5월 13일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 결성대회, 남북간 다각적 접촉과 협상 실현 주장**  
- 남북간의 접촉과 협상은 남북조선의 정권 당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대한민국 국회간에도 필요하며 정당·사회단체간, 실업계, 교육, 문화예술, 체육계와 혹은 개별적 인사들간에도 절실히 필요함. 우리는 호상 실정을 요해하고 이해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자들을 교환하며 각 계층의 광범한 시찰과 견학을 조직할 것을 주장함.
- 5월 16일 | **5·16 군사쿠데타 발생**
- 6월 10일 | 「중앙정보부 설치에 관한 법률」 공포
- 7월 4일 | 「반공법」 공포(1980년 12월 31일 폐지)
- 9월 11일 | **북한 김일성 수상,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 사업보고에서 남의 민주주의 역량과 북의 사회주의 역량 단합 실현 주장**  
- 남북조선 전지역에서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 남북조선의 모든 정당·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은 어떠한 구속도 없이 그들의 정강과 정치적 견해를 인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나라의 어느 지역에서나 자유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함. 오직 이러한 조건들이 보장되었을 때에만 조선인민은 진정한 자유선거에 의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음.
- 9월 17일 | **북한, 조선 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선언**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의 일체 애국역량과 미제와 그 주구를 반대하는 반제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조직적으로 투쟁하여야 하며 남북조선의 전체인민이 더욱 굳게 단결하여야 함. 남조선 노동계급은 자기 대열의 통일을 강화하고 반제투쟁에서 선봉적 역할을 높이며 노농동맹을 강화하고 반제투쟁에서 선봉적 집결하여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동원하여야 함.
- 11월 20일 | **최덕신 외무부 장관, 유엔 감시하에 인구비례에 의한 자유비밀선거로 통일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유엔에 제출**
- 12월 13일 | **유엔 정치위원회, 조건부 북한 초청안(한국대표는 무조건 참석) 승인**
- 12월 19일 | **북한 외무상, 유엔의 조건부 초청안에 대한 성명 발표**  
- 유엔에서 조선문제가 토의되는 이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는 응당 이에 참가하여야 함. 유엔총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의 참가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선문제에 관한 토의를 진행하고 그 어떤 결의안을 채택하여도 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무효로 할 것임.

# 1962년

- 6월 19일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대한올림픽위원회에 도쿄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구성 요청
- 6월 20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2기 11차 회의 개최, 민족장래문제에 대한 이해를 접근시키기 위해 남북협상회의 개최 제의
-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정치·사회 활동가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에게 미군을 남조선으로부터 철거시키고 민족을 구현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 대책에 대하여 우리와 함께 협의할 것을 제의함. 판문점이나 또는 평양이나 서울에서라도 남북조선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미군을 철거시키고 남북간에 서로 무력을 행사하지 않을 데 대한 문제, 남북조선의 무력을 각각 축소할 데 대한 문제, 도탄에 빠진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 향상시킬 데 대한 문제들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민족의 장래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하여야 할 것임.
- 6월 21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남북한 정권 당국간 무력불행사협정 체결 제의
- 최고인민회의는 남북조선 정권 당국이 호상 상대방을 무력으로 공격하지 않을 데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남조선에서 미국군대가 완전히 철거한 조건하에서 남북조선 군대를 각각 10만명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할 것을 남조선 당국에 제의
- 7월 28일 | 북한 올림픽위원회, 도쿄올림픽대회에 남북한 단일팀 구성 문제 토의 제의
- 1964년 도쿄올림픽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남북 유일팀 구성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남북조선 올림픽위원회 대표들이 오는 8월 20일에 판문점에서 회담할 것을 제의
- 8월 14일 | 대한체육회장, IOC 위원장에게 남북 단일팀 구성 요청에 동의 답신
- 9월 26일 | 북한 올림픽위원회, 남북유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 개최(10월 5일, 판문점) 제의
- 10월 19일 | 북한 올림픽위원회, 남북조선 올림픽위원회 대표회담 촉구
- 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유일팀 구성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조선 올림픽위원회 대표들이 11월 말 이전으로 이미 제의한 바 있는 판문점이나 평양 또는 서울에서 회담할 것을 귀 위원회에 거듭 제의
- 11월 28일 | 북한 올림픽위원회, 남북조선 올림픽위원회 대표실무회담 개최(12월 15일, 스위스 로잔) 제의
- 12월 8일 | 북한, UNCURK 해체 주장

# 1963년

**1월 24일 |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로잔 남북체육회담 개최**

〈합의사항〉

- ① 1964년 도쿄올림픽대회에 남북 단일팀 구성
- ② 국기 선택은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에 일임
- ③ 국가는 '아리랑'
- ④ 동·서독 사례 준용에 의한 선수 선발

**3월 29일 | 북한 올림픽위원회, 남북 올림픽위원회 대표회담 개최(4월 25일) 제의**

**5월 17일 |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1차 남북체육회담 개최(홍콩)**

〈합의사항〉

- ① 심판문제는 국제경기연맹에 국제심판을 배정토록 요청
- ② 예선경기의 사용기구는 국제연맹이 공인한 것 또는 도쿄올림픽대회의 사용기구
- ③ 예선경기는 쌍방의 각종 경기단체별 합의에 의거, 실시
- ④ 재정문제는 각기 부담
- ⑤ 차기 회담의 장소 및 시일은 IOC를 통해 추후 결정

**6월 28일 | 북한, 남한의 절량민들과 풍수해 이재민 구제를 위한 백미 10만 석 무상제공 제의**

**7월 20일 |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2차 남북체육회담이 개최되었으나 결렬**

- 남측: 실무접촉에서 필요한 문제를 다룬 뒤 즉시 본회담 개최
- 북측: 본회담에서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권 수임  
(\*주장의 차이 뿐만 아니라 남측은 1차회담 뒤 북측이 남측을 비방한데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했음. 이에 대해 북측이 거부함으로써 회담 결렬)

**9월 8일 | 북한 최용건 최고인민회의 의장, 공화국 창건 15주년 기념보고에서 남북협상과 남북합작을 추진할 것을 주장**

- 남조선으로부터 미국군대를 철거시키는 조건하에서 남북이 호상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을 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 남북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할 것을 다시 한번 제의함. 군비를 축소함으로써 남북조선이 다같이 민족경제의 건설과 인민생활의 향상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임. 남북합작과 남북간의 평화협정의 체결은 남북간의 불신과 긴장상태를 제거하고 민족적 단결과 화목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유리한 새 국면을 열어놓을 것임. 우리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그리고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통하여 실현되어야 함.

**11월 22일 | 북한, '조선통일문제 해결의 길' 발표**

- 공화국 정부는 나라의 초보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조치로서 남북연방제를 제기하고 있음. 공화국 정부는 남북조선간에 현존하는 정치적 견해와 사회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족

의 사활적 문제인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조선간에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자산계급의 대표자들 간에 합작하지 못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인정하고 있음. 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중간걸음들을 거쳐 남북간의 접촉과 호상 이해를 촉진시키고 민족적 화목의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전조선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남북조선의 각계각층을 망라한 통일적인 중앙정부를 수립하고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달성할 것을 제의하고 있음.

**12월 3일 | 정부, 제18차 유엔총회에 한국문제에 관한 각서 제출**

- ① 평화적 방법을 통하여
- ② 민족자결원칙에 따라 토착인구수에 비례하여 대표가 선출되어야 하고
- ③ 이러한 전국적인 선거는 유엔 감시 하에 행함.

**12월 10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조평통 연석회의, 남조선 인민들과 정계 인사들 및 사회 활동가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남북협상 제의**

**12월 17일 | 박정희 대통령 취임, 제6대 국회 개원**

# 1964년

## 3월 27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남북합작교류 실현 호소

- 우리는 전민족적 반미·반일구국통일전선을 결성하며 구국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시급한 시 일내에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소집하거나 또는 남북조선 각계 대표들간의 호상 접촉과 의견교환을 통하여 민족적 단결을 도모할 것을 제의함. 우리는 북반부에 축성된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여 지금 형편에서 우선 매년 2백만 석(30만 톤)의 쌀, 10만 톤의 강재, 10억 킬로와트의 전기, 1만 톤의 화학섬유를 비롯하여 시멘트·목재·기계류 등을 남조선에 제공하려고 함. 우리는 또한 남조선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실업자들을 공화국 북반부에 받아들여 그들에게 기능에 맞는 직업과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줄 수 있음.

## 4월 14일 | 북한 민청, 제5차 대회(5월 12일)에 남한의 청년학생단체 대표 초청

## 5월 15일 | 북한 민청, 남북학생 교류 접촉 제의

## 6월 3일 | 비상계엄 선포(6·3사태)

## 11월 3일 | 박정희 대통령, 학생의 날 훈사에서 “유엔 감시하의 남북자유선거 이외의 어떠한 통일방안도 있을 수 없다. 감상적인 공론만으로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통일이 급하다고 하지만 방법론까지 바꿀 수는 없다”고 언급

## 12월 4일 | 북한 조평통, 통일문제의 유엔 상정을 배격하고 자주적 해결 강조

- 조선의 통일문제를 ‘유엔’에 맡기자는 것은 말로는 통일을 운운하면서도 사실은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임. 왜냐하면 ‘유엔의 감시’란 미제의 침략과 예속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임.

# 1965년

2월 26일 | 북한, 유엔이 진정으로 현장에 부합되게 행동하려면 ① 비합법적 결정을 취소하고 ② 유엔군을 철수시키며 ③ UNCURK의 해체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4월 15일 | 북한 김일성 수상, 인도네시아 사회과학원 연설에서 3대 혁명역량 강화 강조

- ①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잘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더욱더 강화되는 것
- ② 남조선 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세움으로써 남조선의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
- ③ 조선인민과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

11월 23일 | 북한, UNCURK의 연례보고와 관련한 미군철수 주장

- 만약 유엔이 진실로 그의 현장에 규정된 본래의 사명에 충실하려거든 미국의 강요에 의하여 조작된 조선문제에 관한 종전의 모든 결정들을 취소하고 유엔군의 간관 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 침략군을 즉시 철거시킬 데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하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여야 함.

12월 23일 | 정부, 유엔회원국 앞으로 보낸 통한각서 발표

- ① 북괴는 외군철수와 외세를 배제하자고 주장하며 남침의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음.
- ② 유엔은 민족자결을 실현케 하는 기구이며 자유선거를 통한 방안이 가장 적절하고 전한국민의 의사에 합치되는 방법

## 1966년

6월 7일 | 법무부, 반공법과 관련하여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법적 한계를 '1954년 5월 제네바회담에서 제안한 우리의 남북한 통일방안만이 적법한 것'이라고 유권해석

7월 21일 | 북한, 통일문제의 탈유엔 자주적 해결 강조

10월 5일 | 북한 김일성 수상,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 연설에서 통일 후의 사회제도 선택은 남북인민의 총의에 따라 결정 주장

- 조국통일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 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또 결코 달리는 될 수 없는 것임. 조선의 통일은 조선민족의 내정문제이며 유엔이나 그 어떠한 외부세력도 여기에 간섭할 권리가 없음. 조선인민은 자신의 힘에 의해서만 조국통일을 성취할 수 있으며 유엔이나 그 어떠한 외부세력이 우리에게 통일된 조국을 가져다 줄 수 없음. 외세에 의거하여 통일을 달성하려는 것은 망상이며 그것은 나라의 분열을 영구화하며 예측을 가져올 뿐임. 조국이 통일 된 후 우리나라에 어떠한 사회제도를 수립하는가 하는 것은 응당히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결정될 문제임.

10월 8일 | 제21차 유엔총회에 제출된 정부의 통한각서 내용

- ① 한국은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를 지지
- ② 통일문제를 유엔에서 분리시키지는 북괴의 주장은 기만이며 불법
- ③ UNCURK와 주한 유엔군은 임무를 계속함.

11월 10일 | 박정희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남북교류론 반대

# 1967년

## 1월 4일 | 북한 김일성 수상, 조건부 남조선 당국자와 통일문제 협상 용의 표명

- ① 미국 침략군대의 철거를 요구할 것 ② 범죄적인 월남파병을 중지하고 이미 파견된 국군을 완전히 철수할 것 ③ 매국적 한일협정을 취소할 것 ④ 조국통일위업을 위하여 투쟁하였다는 이유로 체포구금 된 일체 정치범들과 애국자들을 석방할 것 ⑤ 파쇼적 탄압을 중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의 자유 등 사회·정치 생활에서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장하며 조국통일에 대하여 마음대로 논의할 수 있게 할 것

남조선당국자들이 이러한 조항들을 실현할 것을 맹세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비록 조국과 인민 앞에 큰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조국통일위업을 달성하기 위한 길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1월 17일 | 박정희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통일의 길은 경제건설과 민주역량의 배양으로 우리의 경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북한으로 넘쳐흐를 때 그것은 곧 통일이라고 주장

## 8월 21일 | 북한, 제22차 유엔총회의 한국문제 상정과 관련한 성명 발표

- 조선문제는 결코 유엔에서 토의할 문제가 아님. 그것은 일시적으로 분열된 나라의 통일을 회복하는 문제로서 조선인민 자신이 해결할 민족내부의 문제임.



# 1968년

1월 21일 | 1·21 사태(김신조 사건)

-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의 무장계렬라들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서울 세검정 고개까지 침투 불심검문에서 정체가 발각되어 실패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부상·사망

1월 23일 | 북한 원산항 앞 공해상에서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가 북한 해군 초계정에 의해 납치

9월 8일 | 북한 김일성 수상, 9·9절 20주년 기념보고에서 평화적 통일은 남한의 정권교체 이후 가능하다고 언급

-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오직 남조선에서 현 괴뢰정권을 뒤집어 엮고 진보적 세력들이 정권을 쥔 다음에야 실현될 수 있음.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관한 우리의 주장은 결코 미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을 배제하지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민족의 원수들과의 그 어떤 '타협'이나 사회제도의 이른바 '평화적 이행'에 관한 '이론'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음.

10월 18일 | 정부, 대유엔 통한각서 발표

- 유엔 감시하의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자유선거 실시 및 유엔군의 계속 주둔 주장

12월 17일 | 유엔 제23차 총회, '재량 상정방식에 의한 통한 결의안' 채택

12월 23일 | 북한, 판문점을 통해 푸에블로호 승무원 82명과 유해 1구 송환

# 1969년

3월 1일 | 국토통일원 발족

7월 1일 | 북한 김일성 수상, 이라크 통신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3대 혁명역량의 성장과 옳은 배합에 의한 통일 실현 강조

- 우리가 조국통일을 빨리 성취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의 해결에 귀착된다고 말할 수 있음. 그것은 ①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잘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경제·군사의 모든 방면에서 더욱 강화하는 것, ② 남조선 인민들이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이며 자체의 혁명역량을 빨리 키우는 것이며, ③ 세계인민들 특히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역량이 굳게 뭉쳐 미제국주의자들을 국제적으로 최대한 고립 약화시키는 것과 함께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 주는 것. 우리는 이 세 가지 혁명역량이 충분히 마련되고 옳게 배합될 때 조선에서의 통일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함.

9월 2일 | 북한 김일성 수상, 필란드 민주청년동맹 대표단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통일의 장애물은 미제국주의와 파쇼정권이라고 주장

- 조선의 평화적 통일은 오직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낸 다음 남조선인민들이 현 괴뢰정권을 뒤집어엎고 남조선의 진보적 세력들이 정권을 쥔 다음에야 실현될 수 있음.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이 쫓겨가고 남조선의 현 통치배들이 물러났을 다음 다른 어떤 진보적 민주인사들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는 그들과 언제나 조국의 통일문제를 가지고 평화적으로 협상할 수 있을 것임.

10월 8일 | 북한, UNCURK 해체 주장

- 유엔이 참으로 그의 헌장의 원칙과 목적에 충실하게 행동하려면 이번 제24차 총회에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보고'에 대한 이른바 '조선문제'의 토의는 그만두고 사회주의나라 대표들과 일련의 아시아·아프리카 나라들이 제기한 그대로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함. 이와 함께 유엔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를 토의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를 그 토의에 참가시키도록 하여야 함.



**1970년대**

# 1970년

## 7월 16일 | 국회, 미군감축 반대 대미 메시지 채택

- ① 긴장상태에 있는 한반도에 있어서 무력침공에 대한 억제력과 방위력을 약화시키고 북괴의 남침야욕을 유발하게 될 여하한 명분의 주한미군의 감축도 이를 반대
- ② 미국은 감군계획을 거론하기에 앞서 강화된 북괴의 군사력을 압도할 수 있도록 1966년 국군 전투병력 월남증파를 계기로 공약을 거듭해온 국군장비의 쇄신강화 작업과 군수산업 육성의 지원을 선행 구체화해야 함.
- ③ 미국은 또한 감군 추진에 선행하여 한국의 자주국방 태세가 확립되고 극동지구의 긴장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의 안전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한·미 공동방위의 공약을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조치를 강구 구현시켜야 함.

## 8월 15일 | 박정희 대통령, 광복절 축사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한 접근방법 구상 발표

- 북괴는 무장공비 남파 등의 모든 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소위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나 폭력혁명에 의한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해 온 종전의 태도를 완전히 포기하겠다' 하는 점을 명백하게 내외에 선언하고 또한 이를 행동으로 실증해야 함.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북괴가 수락,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유엔에 의해서도 명백하게 확인될 경우에는 나는 인도적 견지와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남북간에 가로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임. 또한 북괴가 한국의 민주·통일·독립과 평화를 위한 유엔의 노력을 인정하고 유엔의 권위와 기능을 수락한다면,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북괴가 참석하는 것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임.

## 8월 29일 | 북한, 유엔에서 한국문제 토의 때 북한 참가 주장

- 유엔은 마땅히 이른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보고'에 근거한 조선문제에 관한 모든 비법적 결의들을 폐기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비롯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또한 유엔에서 이러한 문제가 토의될 때에야 응당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공화국 대표가 참가하여야 함.

## 10월 1일 | 박정희 대통령, 국군의 날 치사에서 평화를 위한 힘의 배양 강조

- 우리는 국토의 통일을 위해서 끝까지 평화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끝내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을 무시하고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들의 무모한 야욕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힘의 배양'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며 폭력에는 폭력으로, 무력에는 무력으로 대응할 만반의 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함.

## 10월 24일 | 박정희 대통령, 유엔의 날 치사에서 유엔의 평화적 여건 조성 촉구

- '유엔'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국에 대한 그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며, 주한유엔기관인 '유엔군'은 북괴로부터의 재침략 저지력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UNCURK'는 유엔총회의 위임에 따라서 한국의 통일을 위한 평화적 조건의 조성에 계속 노력하여야 할 것임.

**10월 25일 | 북한, 북한의 참가 없는 유엔의 토의 결정 무효 주장**

**11월 2일 | 북한 김일성 수상,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 보고에서 통일방법 제시**

- 남조선에 미제침략군대와 현 괴뢰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평화통일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음.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그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현 군사파쇼독재를 뒤집어엎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여야 함. 그리하여 남조선에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 들어서면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역량과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역량의 단결된 힘의 역량에 의하여 우리 조국의 통일은 순조롭게 실현될 것임.

# 1971년

- 1월 11일 |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통일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방법은 우리의 국력을 배양하고 우리의 국력이 빨리 성장해서 모든 면에서 북한 괴뢰를 압도하는 그러한 시기가 결국은 평화통일에 대한 길이 트이는 시기다”라고 강조
- 2월 8일 | 박정희 대통령, 휴전선 방위 국군 전담 발표  
- 닉슨독트린에 따른 국군 현대화 및 국군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1백 55마일 일선 휴전선은 국군이 전담키로 하고 미군은 관문점 주변만 담당
- 4월 12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4기 5차 회의 개최, 군축·북남교류 등 8개항의 통일방안 제시
- 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는 것
  - ② 미제침략군이 물러간 다음 남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는 것
  - ③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조약’을 비롯하여 남조선 괴뢰정권이 민족의 이익에 배치되게 외국과 체결한 모든 매국적이며 예속적인 조약들과 협정들을 폐기하며 무효로 선포하는 것
  - ④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적인 중앙정부를 세우는 것
  - ⑤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위하여 남조선 전지역에서 각 정당·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이 정치활동을 벌일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며 조국통일위업을 위하여 투쟁하였다는 이유로 남조선에서 체포·투옥된 모든 정치범들과 애국자들을 무조건 석방하는 것
  - ⑥ 완전한 통일에 앞서 필요하다면 현재와 같은 남북의 각이한 사회제도를 그냥 두고서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조선연방제를 실시하는 것
  - ⑦ 남북간의 통상과 경제적 협조, 과학·문화·예술·체육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호상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남북간의 편지거래와 인사내왕을 실현하는 것
  - ⑧ 이상의 문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 정당·사회단체들과 전체 인민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써 남북조선 정치협상회의를 진행하는 것
- 4월 14일 | 최규하 외무부 장관, 북한의 8개항 제의 거부
- 6월 12일 | 유엔군축, 공산측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제안
- 8월 6일 | 북한 김일성 수상, 시아누크 환영연설에서 남한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과 아무 때나 접촉할 용의 표명
- 8월 12일 | 최두선 한적 총재, 남북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제안
- ① 남북간의 가족찾기운동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적십사 대표가 한자리에 마주앉아 회담할 것을 제의
  - ② 본회담의 절차상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늦어도 오는 10월 안으로 ‘제네바’에서 예비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

**8월 14일 | 손성필 북적 위원장, 남북적십자회담 수락**

- ①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친우들의 자유로운 내왕과 호상 방문을 실현하는 문제
- ②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친우들간의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실시하는 문제
- ③ 귀하가 제의한 가족들을 찾아주고 상봉을 마련해 주는 문제 등의 회담을 위해 9월중으로 판문점에서 쌍방 대표들의 예비회담을 갖자면서 9월 20일 12시 파견원 2명을 판문점에 보낸다고 남측에 통보

**8월 15일 | 박정희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적인 국토통일 강조**

- 나는 오늘 다시 이 자리를 빌어 북괴에 대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의 평화통일 제의를 하루속히 수락하고, 무력과 폭력을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평화통일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길임을 다시 한 번 중외에 천명하는 바임. 나는 그들이 진정으로 무력과 폭력을 포기하고 진지한 새 자세로 나온다면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의 광장은 언제든 지 마련될 수 있을 것임을 확인해 둬.

**8월 20일 | 남북적십자 파견원 제1차 접촉**

- 남북 쌍방 적십자간의 첫 파견원 접촉

**8월 26일 | 남북적십자 파견원 제2차 접촉**

- 한적은 예비회담 절차에 관한 제의 내용을 담은 최두선 총재의 서한을 북측에 전달

**8월 30일 | 남북적십자 파견원 제3차 접촉**

- 북측은 예비회담 첫회의 날짜를 9월 20일로 제의

**8월 31일 | 김용식 외무부 장관, 남북문제의 3단계 접근방식 제시**

- ① 인도적 문제
- ② 비정치적문제
- ③ 정치적 문제

**9월 3일 | 남북적십자 파견원 제4차 접촉, 9월 20일 판문점에서 예비회담 갖기로 합의**

**9월 12일 | 북한, 유엔의 한국 통일문제 불간섭 주장**

**9월 15일 | 북한 김일성 수상, 아사히신문과의 기자회견에서 평화적·자주적 통일의 장애는 미국 강조**

**9월 16일 | 남북적십자 파견원 제5차 접촉**

- 쌍방은 예비회담 대표 명단을 상호 교환

**9월 20일 | 남북적십자 제1차 예비회담**

- 판문점 지역에 쌍방의 상설연락사무소 설치, 연락관의 상주, 쌍방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의 가설·운영 합의

**9월 22일 | 남북적십자회담의 합의에 따라 남북 직통전화 개통**

- 자유의 집과 판문각을 잇는 왕복 2회선

**9월 29일 | 남북적십자 제2차 예비회담**



〈남북적십자회담 제2차 예비회담 합의사항〉

① 예비회담 장소

- ㄱ. 예비회담장소는 관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
- ㄴ. 회의장내 시설은 쌍방 대표단의 실무자간에 협의 해결

② 상설 '회담연락사무소'

- ㄱ. 대한적십자사는 상설 '회담연락사무소'를 '자유집'에, 그리고 북한적십자회는 '관문각'에 각각 설치
- ㄴ. 쌍방은 상설 '회담연락사무소'를 연결하는 직통 왕복전화를 가설
- ㄷ. 남북적십자간 문서전달을 필요로 할때는 상설 '회담연락사무소' 간의 직통전화로 연락을 취한 후, 쌍방 근무자가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만나 전달
- ㄹ. 상설 '회담연락사무소'에는 쌍방이 각기 2명의 근무원을 배치하되, 평일은 09:00부터 16:00, 토요일은 09:00부터 12:00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

③ 수행원과 배치문제

예비회담의 수행원 수는 장소관계로 10명 이내로 한정하고 배치는 대표단 좌석뒤에 임의로 함.

④ 회의 기록과 확인방법

예비회담의 회의기록은 각기 하되, 쌍방 공히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 확인

⑤ 발언 방식

예비회담에서의 발언방식은 원칙적으로 수석대표가 발언하되, 필요할 시에는 수석대표가 지명하는 여타대표도 발언할 수 있음.

⑥ 회담의 공개여부

- ㄱ. 예비회담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쌍방이 합의를 볼때는 비공개로 할수 있음.
- ㄴ. 기자들의 취재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의 개시전까지 회의장내 취재를 허용하며, 쌍방 기자실에는 확성기를 설치

⑦ 차기 예비회담 일시

차기 예비회담 일시는 당 회담종료시 또는 상설 '회담연락사무소'를 통해서 합의 결정

⑧ 합의내용의 공표문제

매차의 예비회담에서 합의에 도달된 사항에 관한 공표는 '합의된 사항'만을 각각 문서로 작성 교환하여 서로 확인한 후, 합의내용이 일치되면 각기 공표

⑨ 본 회담 의제 및 의순

- ㄱ. 본 회담의 장소
- ㄴ. 본 회담의 일시
- ㄷ. 본 회담의 의제
- ㄹ. 본 회담의 대표단 구성
- ㅁ. 기타 본 회담의 진행절차

10월 6일 | 남북적십자 제3차 예비회담

- 본회담 장소 문제에서 북적은 한적의 서울·평양 운번 개최제의 수락

10월 13일 | 남북적십자 제4차 예비회담

10월 20일 | 남북적십자 제5차 예비회담

10월 27일 | 남북적십자 제6차 예비회담

11월 1일 | 김영선 통일원 장관, 통일문제에 관한 국회 답변

- ① 한국의 평화통일 기본방침은 유엔감시하의 국회 답변
- ② 독일방식의 통일도 연구중(민간교류, 경제교류, 수상 및 각료급 회담)
- ③ 통일논의를 점진적으로 확대, 학계·언론계·사회단체에 통일문제연구소 설치
- ④ 북한을 개방시켜 자유화 촉진, 변질을 유도

11월 3일 | 남북적십자 제7차 예비회담

11월 11일 | 남북적십자 제8차 예비회담

11월 19일 | 남북적십자 제9차 예비회담

11월 24일 | 남북적십자 제10차 예비회담

12월 3일 | 남북적십자 제11차 예비회담

12월 10일 | 남북적십자 제12차 예비회담

12월 17일 | 남북적십자 제13차 예비회담

# 1972년

- 1월 8일 | 김종필 국무총리, AP기자와의 회견에서 남북대화 계속과 대공산권 접촉가능성 검토용의 피력
- 1월 10일 | 남북적십자 제14차 예비회담
- 1월 10일 | 북한 김일성 수상, 요미우리신문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남북한 제정당간의 쌍무적·다무적 협상 제의
  - 우리는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신민당·국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들과 아무 때나 합의되는 임의의 장소에서 회담할 용의를 가지고 있음.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자면 남북조선의 여러 정당들 사이에 조국통일에 관한 정견들을 교환하고 평화통일의 합리적인 방도들을 모색하기 위한 쌍무적인 또는 다무적인 협상들을 활발히 진행하여야 할 것임.
- 1월 11일 |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평화통일 대화조건 제시
  - 평화통일의 첫길은 북한 공산집단이 전세계를 향해 '무력적화통일은 포기하겠다'하는 확실한 약속을 하는 것이 앞서야 하겠다는 것임. 그리고 북한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전쟁을 포기케 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국력을 집결해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있음. 한때 우리 정계 일각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는 소위 '4대국 보장론' 같은 것은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나는 보고 있는 것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한마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성급한 생각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이야기임. 하루바삐 남북이 통일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염원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처지, 여러 가지 국제정세, 이런 것을 보아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통일문제를 서둘러서는 안되겠음.
- 1월 19일 | 남북적십자 제15차 예비회담
- 1월 27일 | 사포로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북한을 DPRK로 표기하기로 결정
- 1월 28일 | 남북적십자 제16차 예비회담
- 2월 3일 | 남북적십자 제17차 예비회담
- 2월 10일 | 남북적십자 제18차 예비회담
- 2월 12일 | 김용식 외무부 장관, 북한에 대해 긴장완화 4개 선행조건 제시
  - 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 ② 간첩 남파 중지
  - ③ 남북간의 교류확대
  - ④ 무력적화 통일야욕 포기
- 2월 17일 | 남북적십자 제19차 예비회담, 본회담 의제 문안 정리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 합의

- 2월 21일 | 남북적십자 의제문안 제1차 실무회의
- 2월 24일 | 남북적십자 의제문안 제2차 실무회의
- 2월 28일 | 남북적십자 의제문안 제3차 실무회의
- 2월 28일 | 닉슨·주은래 공동성명 발표(중국 상하이)  
-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를 추구하고 교류증진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지지함.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평화통일 8개항 방안(1971년 4월 12일)과 UNCURK 해체를 요구하는 입장을 확고히 지지함.
- 3월 6일 | 남북적십자 의제문안 제4차 실무회의
- 3월 8일 | UNCURK 제1차 전체회의 개최
- 3월 10일 | 남북적십자 의제문안 제5차 실무회의
- 3월 15일 | 김용식 외무부 장관, 북한의 휴전협정 위반 비난 및 비무장지대의 진지와 병력 철수를 요구
- 3월 17일 | 남북적십자 의제문안 제6차 실무회의
- 3월 24일 | 남북적십자 의제문안 제7차 실무회의
- 3월 27일 | 국제적십자사 운영위원장, 한적 김용우 부총재에게 남북한 적십자회담에 최대의 협조를 약속
- 3월 30일 | 박정희 대통령,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북한에 4대 군사노선 포기 등 5개항 요구  
① 북괴는 전국토의 요새화, 전인민의 무장화 등 4대 군사노선의 강행으로 표시되고 있는 무력적화통일 야욕을 즉각 포기  
② 비무장지대내에 구축해 놓은 모든 군사진지의 즉각 철거와 8천백명의 무장군인 및 무기를 즉시 철수시킬 것  
③ 북괴는 무장간첩의 남파를 즉각 중지하고 이들 무장간첩을 훈련해 온 모든 비정규 특수부대를 완전 해체할 것  
④ 불법남치한 KAL기와 그 승무원, 그리고 승객들과 무고히 납북된 어부와 어선들을 즉각 송환할 것  
⑤ 지금 진행중인 남북적십자회담에 대해서도 성의를 보여 하루속히 우리 대한적십자사의 제의를 수락할 것
- 4월 17일 | 남북적십자 의제문안 제8차 실무회의
- 4월 28일 | 북한 김일성 수상, 일본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조건 없이 초청된다면 유엔총회의 한국문제 토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언급
- 5월 2~5일 | 이후락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평양 비밀방문
- 5월 9일 | 남북적십자 의제문안 제9차 실무회의
- 5월 12일 | 남북적십자 의제문안 제10차 실무회의
- 5월 16일 | 박정희 대통령, 5.16기념사에서 통일문제의 단계적 접근 주장

- 조국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여기에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지만 성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하나하나 단계적인 접근을 모색해 나가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진행중인 남북적십자회담은 가장 현실적이며 착실한 접근방법의 하나라고 믿고 있음.

5월 19일 | 남북적십자 의제문안 제11차 실무회의

5월 22일 | 남북적십자 의제문안 제12차 실무회의

5월 26일 | 북한 김일성 수상, 뉴욕타임스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남북 국회의원 자유왕래 주장

- 우리는 남북 사이에 서신거래와 인사내왕을 실현하며 무역과 경제협조도 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인사교류에서 남조선의 '국회의원'들이 공화국 북반부에 오고 우리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남조선에 가며 이렇게 서로 오고 가면서 한자리에 모여 앉아 흥금을 털어놓고 의견을 교환한다면 그것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닐 것임. 우리는 남조선의 '국회의원'들뿐 아니라 남조선의 광범한 정계와 사회계 인사들과도 접촉할 것을 요구함.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남북조선의 모든 정당·사회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치협상회의를 열고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의견들을 광범히 교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5월 29일~ | 북한 박성철 제2부수상, 비밀리 서울방문

6월 1일

6월 5일 | 남북적십자 의제문안 제13차 실무회의

6월 14일 | 박정희 대통령, 아스팍 이사회 치사에서 통일문제의 단계적 해결 강조

- 우리 정부는 남북간에 대화의 길을 트게 한 이 남북적십자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 대화를 계속 추진함으로써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남북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길임을 이 기회에 천명하는 바임.

6월 16일 | 남북적십자 제20차 예비회담

〈남북적십자 본회담 의제 5개항 합의〉

- ①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 ②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 ③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문제
- ④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6월 21일 | 북한 김일성 수상, 워싱턴 포스트지 도쿄지국장과의 대담에서 남북군대 15~20만 삭감 및 박정희 대통령과의 회견 용의 표명

- 우리는 먼저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쌍방의 합의 밑에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쌍방의 군사인원들과 군사시설들을 철수할 수 있다고 생각함. 지금 비무장지대 안에 많은 군사인원들과 군사시설들을 철수한다면 정세는 완화될 것임. 우리는 또한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남북의 군대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함. 지금 우리나라는 쌍방이 방아쇠만 당기면 싸움이 터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전쟁분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쌍방의 합의 밑에 남북의 군대를 각각 15만 명씩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함. 20만 명씩 줄어도

좋은 것임.

## 7월 4일 | 남북한, 남북공동성명 발표

〈7·4 남북공동성명〉

- ①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음.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함.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함.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함.
- ②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음.
- ③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음.
- ④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음.
- ⑤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건을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음.
- ⑥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음.
- ⑦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함.

## 7월 4일 | 남북직통전화 가설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발효)

- ① 직통전화의 설치목적  
조국의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과업과 기타 남북간에 제기되는 문제 및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는 문제를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평양 간 직통전화(이하 직통전화라고 함)를 설치 운용
- ② 직통전화 설치장소  
직통전화는 서울에서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사무실 그리고 평양에는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의 사무실에 각각 설치
- ③ 운용시간  
직통전화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9시부터 12시까지, 16시부터 20시까지의 사이에 운용하며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상의 지정된 시간과 날짜에 구애 없이 사전에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여 운용
- ④ 통화자

직통전화의 통화지는 다음과 같은 사람

: 서울에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그가 지명한 3명으로 하며 평양에서는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그가 지명한 3명

⑤ 시험통화

직통전화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항에 지정된 날의 10시에 시험통화를 함.

⑥ 고장수리

직통전화에 이상이 있을 때는 관문점 상설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이를 통보하고 쌍방은 각기 자기 관할지역을 책임지고 보수하며 관문점 공동경비구역내의 고장은 양측이 공동으로 수리

⑦ 비밀보장

쌍방은 통화내용의 비밀을 엄격히 보장

⑧ 수정 또는 보충

본 합의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음.

⑨ 유효기간

본 합의서는 서로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발효하여 쌍방의 합의에 따라 폐기하기 전에는 계속 유효

7월 5일 | UNCURK, 남북공동성명을 환영한다는 성명 발표

7월 5일 | 문공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보관회의에서 ① 종래 북괴로 부르던 것을 북한으로 호칭할 것 ② 김일성과 그 자체에 대한 중상·비방을 삼갈 것을 지시

7월 7일 | 박정희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7·4공동성명에 지나친 낙관은 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반공교육의 계속 강화 시달

7월 10일 | 남북적십자 제21차 예비회담  
- 남북적 쌍방은 본회담 대표단 구성 문제 토의하기 시작

7월 10일 | 북한 체육지도위원회·민족올림픽위원회, 남북체육교류 주장

7월 14일 | 남북적십자 제22차 예비회담

7월 17일 | 윤석헌 외무차관, 소련과 중공 등 모든 국가와 관계를 맺을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

7월 17일 | 유엔 사무총장, 소련공식 방문 기자회견에서 한국 등 분단국의 유엔가입을 협의하겠다고 언급

7월 18일 | 유엔 한국문제와 관련해 공산 측, 알제리아 안건을 유엔 사무총장에 제출

7월 19일 | 남북적십자 제23차 예비회담

7월 26일 | 남북적십자 제24차 예비회담

7월 27일 | 남북적십자 진행절차 제1차 실무회의

8월 3일 | 남북적십자 진행절차 제2차 실무회의

8월 9일 | 남북적십자 진행절차 제3차 실무회의

8월 11일 | 남북적십자 제25차 예비회담

- 〈본회담 기타 진행절차와 일시에 관한 합의문〉 채택
- 제1차 본회담은 1972년 8월 30일 오전 10시 개최(평양), 제2차 본회담은 1972년 9월 13일 오전 10시 개최(서울)

8월 16일 | 남북 통신실무자회의,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위한 통신기술 실무자회의 합의문〉 합의

8월 18일 | 남북적십자 본회담용 직통전화 가설

- 서울-평양 간 20회선

8월 19일 | 북한 당·사회단체들, 남북한의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개최 제의

8월 20일 |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 김종필 총리가 남북적십자 본회담 취재에 중공을 비롯한 소련 및 동구 제국 특파원들의 입국을 허가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 보도

8월 22일 | 남북한, 남북을 왕래하는 남북적십자회담 관계인원의 신변 안전보장 성명 발표

8월 25일 | 남북 적십자사 연락관 회의

〈남북적십자사 중앙기관 사이의 직통전화 운용절차 합의서〉 채택

- ① 설치목적  
역사적인 남북 적십자 회담과 이에 따르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 적십자사 중앙기관 사이의 직통전화 2회선을 설치 운용
- ② 설치장소 및 통화자  
본 전화는 쌍방 적십자사 중앙기관사무실에 각각 설치하며, 통화자는 쌍방 적십자사 책임자 및 회담대표와 적십자사 책임자가 임명한 3명
- ③ 운용시간  
본 전화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0시부터 12시까지, 16시부터 18시까지 사이에 운용하며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상에 지정된 시간과 날짜에 구애됨이 없이 사전에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여 운용. 서울 또는 평양에서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매일 24시간 운용
- ④ 첫 통화  
본 전화의 첫 통화는 1972년 8월 26일 10시
- ⑤ 기술적 보장 및 고장수리  
본 전화선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한 기술적보장 및 고장수리는 1972년 8월 16일의 남북 적십자 본회담을 위한 통신기술실무자회의 합의에 따름.
- ⑥ 유효  
본 합의서는 서로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발효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폐기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음.

8월 29일~ |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

9월 2일 |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 합의서〉 채택



- ① 남북적십자회담 쌍방 대표단은 1972년 6월 16일 관문점에서 열린 제20차 남북적십자예비 회담에서 채택한 다음과 같은 남북적십자회담 의제를 1972년 8월 30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확인하고 이를 남북적십자회담 의제로 함.
  - ㄱ.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 ㄴ.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 ㄷ.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실시하는 문제
  - ㄹ.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문제
  - ㅁ.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 ②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3대원칙이 천명된 남북공동성명과 그리고 적십자 인도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남북적십자회담 의제로 설정된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토의 해결함으로써 남북으로 흩어진 거래들의 고통을 하루속히 풀어주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의 디딤돌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함.

9월 6일 | 북한 박성철 제2부수상, 평양에서 일본기자들과 한 회견에서 일본이 남북한과 동시에 외교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한국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

9월 7일 | 유엔 한국문제관련 우방 16개국 전략회의

9월 8일 | 남북 올림픽위원장, 공동성명(뮌헨) 발표

- ① 앞으로 남북체육교류회담을 위하여 남북대표는 서로 서울과 평양을 방문하도록 상호 초청
- ② 이를 위한 연락방법은 이미 설치된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하기로 함.

9월 11일 | 일본 오히라 외상, 외국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박성철 북한 부수상이 제의한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일본정부로서는 생각지 않고 있으며, 일본정부는 한국과의 우호관계 지속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언급

9월 11일 |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 연례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유엔 가입문제는 남북한 접촉이 앞으로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달려있다고 언급

9월 12~16일 |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 합의서〉 채택

- ① 온 거래의 의사와 염원을 반영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의 의제로 설정된 모든 문제들의 해결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원칙과 자유로운 원칙, 남북공동성명의 정신과 동포애 그리고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철저히 구현
- ② 제1차 및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하여 더욱 다져진 쌍방간의 이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하여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부터는 의제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며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은 1972년 10월 24일 진행(평양),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은 1972년 11월 22일 진행(서울)

9월 15일 | 한국문제에 관한 알제리아 결의안 유엔총회에 제출

9월 17일 | 북한 김일성 수상, 마이니치신문 기자의 질문에 답하며 남북연방제 및 광범한 남북 교류 주장

-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데는 남북적십자회담이나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음. 나라의 통일을 위한 근본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더욱 폭넓고 다방면적인 접촉과 협상을 실현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인 남북간의 불신임과 오해를 풀고 이해를 증진시키며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구체적 방책들을 토의하여야 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들의 연석회의나 남북당국자들의 회의 또는 우리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 남조선 ‘국회의원’들과 연합회의 같은 정치협상을 시급히 진행할 것을 주장함. 우리는 평화적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당면하게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함.

9월 21일 | 제27차 유엔총회 운영위원회, 한국문제 토의 연기안 가결(찬성 16, 반대 7, 기권 1)

9월 23일 | 제27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불상정 권고 결의안 토의에 돌입

9월 23일 | 유엔총회 전체회의, 한국문제를 1973년 총회 의제에 포함하는 내용의 운영위원회 권고 가결(찬성 70, 반대 35, 기권 21, 결석 6)

9월 27일 | 북한 외무성, 한국문제의 유엔 결정 취소 요구

- 유엔이 무엇보다도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며 유엔의 간판을 가지고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침략군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를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며 조선에 관한 부당한 ‘결정’들을 취소할 것을 요구함.

9월 28일 | 이후락 남북조절위 공동위원장, 남북관계의 대국적인 취재보도를 요망하는 공한을 5개 국내 언론단체에 발송

10월 12일 | 남북조절위 제1차 공동위원장회의 (자유의 집)

- 남측: ① 남북 쌍방은 우선적으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발족시키고 ② 사회적 이질화의 극복과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갈 것 ③ 남북 쌍방이 각기 자기의 체제를 보호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체제내적 질서에 대해서는 간섭함이 없이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것  
 - 북측: 대한민국이 ① 대내적으로 반공정책을 포기, 공산주의를 용납해야 하고 ② 통일과 관련하여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지 말아야 하며 ③ 유엔도 외세이기 때문에 유엔은 어떠한 형태로도 한반도 통일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고 ④ 주한미군은 즉시 철수해야 하며 ⑤ 한국군의 전력증강은 물론 군사훈련도 중지되어야 함.

10월 14일 | 북한 전국체신일꾼대회, 남북 체신관계 대표회담 제의

10월 17일 | 박정희 대통령,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 및 대통령 특별선언 발표

- 나는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진영의 대동단결을 촉구하면서 오늘의 이 역사적 과업을 강력히 뒷받침해 주는 일대 민족주체세력의 형성을 성하는 대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약 2개월간의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비상조치를 국민 앞에 선포하는 바임.  
 ①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킴.

- ②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 의하여 수행되며 비상국무회의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를 수행
- ③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며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
- ④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말 이전에 헌정질서를 정상화

10월 23~26일 |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

10월 24일 | 남북적십자 제3차 회담

10월 26~27일 | UNCURK 제4차 회의

11월 2~4일 | 남북조절위 제2차 공동위원장회의

〈남북조절위 제2차 회의 공동발표문〉 발표

- ①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문제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에 따라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를 서명 교환
  - ② 서로 비방·중상을 하지 않기로 한 남북공동성명의 조항에 따라 1972년 11월 11일 0시를 기하여 대남·대북방송, 상대방 지역에 대한 전단 살포 중지
-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
- ① 남북조절위원회는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추진하고 남북사이의 관계를 개선 발전시키며 각 분야에서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하는 등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②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
    - ㄱ.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
    - ㄴ.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 사이의 광범한 정치적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
    - ㄷ. 남북 사이의 경제, 문화적 및 사회적 교류와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하는 등의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
    - ㄹ.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대치 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
    - ㅁ. 대외활동에서 남북이 공동보조를 취하며 단일민족으로서 민족적 긍지를 선양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
  - ③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 ㄱ. 남북조절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 간사위원 1명, 위원 2명으로 구성. 위원수는 필요에 따라 증가시킬 수 있음.  
공동위원장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조직지도부장  
부위원장과 간사위원 및 위원은 장관(상) 또는 차관(부상)급으로 하되 사전협의를 거쳐 각각 쌍방 공동위원장이 임명
    - ㄴ. 남북조절위원회 안에 간사회의를 둠.

간사회의는 쌍방 공동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남북조절위원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제반문제 등을 협의, 결정하고 그의 실행을 보장. 간사회의는 쌍방 간사위원과 각각 간사 2명으로 구성

- ㄷ. 남북조절위원회 안에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분과위원회를 둠.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조절위원회 사업이 진척되는데 따라 설치하며, 그 기능과 구성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규정
- ㄹ.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사무국을 관문점에 둠.  
공동사무국장은 쌍방이 각각 1명씩 임명하며, 그 밑에 필요한 수의 인원을 둠.

④ 남북조절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

- ㄱ. 남북조절위원회는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관문점에서도 할 수 있음.
  - ㄴ.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는 2~3개월에 1차, 간사회의는 1개월에 1차 진행하며, 이밖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ㄷ. 남북조절위원회는 공개회의 또는 비공개회의로 함.
  - ㄹ.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와 간사회의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수의 전문인원들과 공동사무국 요원들을 참가시킬 수 있음.
  - ㅁ. 남북조절위원회의 최종합의는 쌍방 공동위원장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합의사항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동사무국을 통하여 동시에 발표
  - ㅂ. 남북조절위원회 운영세칙은 따로 규정
- ⑤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음.  
⑥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효력을 가짐.

11월 22~24일 |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 합의서〉 채택

- ①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되는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와 남북적십자 관문점 공동사업소를 설치
- ②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와 남북적십자 관문점 공동사업소의 기능과 운영절차 및 구성은 따로 토의·결정
- ③ 남북적십자회담의 합의사항 실행을 위하여 그밖의 기구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앞으로 토의·결정

11월 30일 | 남북조절위 제3차 공동위원장 회의

- 쌍방 각 5명으로 남북조절위원회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위원장 회의 종결

11월 30일~ | 남북조절위 제1차 회의

12월 2일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발표문〉

- ① 금번 회의에서는 쌍방간에는 각 분야에서 교류를 실시하고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하는데 대한 의견교환
- ② 남북조절위원회 실무 기능을 조속히 완비하기 위해 단시일내 ‘간사회의’를 구성하고 공동

사무국을 설치하며 필요한 운영 세칙을 마련하기로 합의

12월 4일 | UNCURK 제5차 전체회의

12월 13일 | 비상계엄령 해제

12월 16일 | 북한 조국통일민주전선, 새 헌법안을 승인

12월 23일 | 통일주체국민회의 개최, 박정희 대통령 제8대 대통령에 당선

12월 27일 | 김종필 국무총리, 유신헌법 공포

12월 28일 | 북한 김일성 수상, 남북간에 공평한 정책 촉구하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과 수교용의 표명

# 1973년

## 1월 12일 |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남북대화의 기본입장 천명

- 앞으로 쉬운 문제부터, 즉 남북이 서로 합의하기 쉬운 문제부터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것이 비록 보기에는 상당히 속도가 느린 것 같지만 점차 불신과 오해를 해소해 나가면서 상호 신뢰와 이해를 촉진해나가는 것이 긴 안목으로 보아서는 더 빠른 길임. 이렇게 해서 점차 우리가 평화통일문제까지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하는 것임.

## 3월 4일 | 제주도 우도에 무장간첩 3명이 출현, 해초건설장 경비병 1명 살해 후 도주

## 3월 6일 | 북한 유기봉 축구협회 부회장, 남북한 축구시합 및 운동경기의 상호 교류와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해 출전하자고 제의

## 3월 7일 | 북한군, 중부전선 비무장 지대에서 군사분계선 풋말 보수중인 한국군 장병에 총격을 가하여 장교 1명, 사병 1명 살해

## 3월 10일 | 남북조절위 제1차 간사회의

## 3월 14~16일 | 남북조절위 제2차 본회담

- 남측: ① 남북조절위원회 운영세칙, 간사회의 운영세칙, 공동사무국 운영세칙을 채택하는 문제 ② 경제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를 간사회의에 위임하는 문제 ③ 사회·문화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를 간사회의에 위임하는 문제 ④ 남북조절위원회 회의 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사무국 건물을 공동으로 건축하는 문제
- 북측: 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둘 것 ② 북과 남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며 군비를 대폭 축소할 것 ③ 외국으로부터의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 및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할 것 ④ 우리나라에서 미군을 포함한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킬 것 ⑤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북과 남 사이에 서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 데 대하여 담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 이상의 문제들에 대한 집행대책을 협의할 것  
(\*공동성명이나 합의사항 없이 폐막)

## 3월 20-23일 |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

- 제6차 본회담 일자(1973년 5월 9~10일, 서울)만 합의

## 4월 5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5기 2차 회의 개최, 긴장상태 완화·군사적 대치 해소를 위한 군축을 제의

- 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 중지
- ② 미군을 포함한 일체 외국군대 철거
- ③ 북과 남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고 군비를 대폭 축소
- ④ 외국으로부터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 및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
- ⑤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북과 남 사이에 서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 데 대하여 담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기한 우리의 5개 항목 제안에 합의하고 하루빨리 해당한 조

치 강구

- 4월 16일 | 북한 김일성 주석, 시아누크 환영대회 연설에서 남북조절위의 남북한 정당, 사회단체 대표와 각계각층 인사들을 참가시키거나, 조절위와 별도로 남북한 정당, 사회단체 대표 및 각계각층 인사가 참가하는 정치협상 개최 제의
- 4월 17일 |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남방 비무장 지대(연천 서북방)에 무장공비 3명 군사분계선 월경침투를 기도하다가 2명 사살, 1명 도주
- 4월 24일 | 남북조절위 제2차 간사회의
- 4월 28일 | 북한, 국제의원연맹(IPU) 가입
- 5월 5일 | 전남 금당도에 북한 무장간첩 2명 침투(1명 사살, 1명 도주)
- 5월 8~11일 |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
  - 한적: 의제 제1항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반박. 한국 정부가 인도적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 지원, 적십자회담에서 상대방의 법률적, 사회적 장애제거 주장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공박
  - 북적: 남한의 법률적, 사회적 조건과 환경의 개선, 적십자 요해 해설인원의 파견, 가족 및 친척 범위에 재일교포를 포함시킬 것, 자문위원의 회의 발언권 인정 등 주장
- 5월 18일 | 북한, 세계보건기구(WHO)가입
- 5월 23일 | 남북조절위 제3차 간사회의
- 6월 10일 | 북한, 남북조절위 공동위원장 제2차 회의 합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휴전선상의 4개 지역에서 확성기에 의한 대남 방송 일시 재개
- 6월 11일 | 북한, 직통전화를 통해 상호 중상·비방 중지를 제제의, 우리측 이를 접수
- 6월 12~14일 | 남북조절위 제3차 본회담
  - 남측: 남북조절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 중 경제분과위원회와 사회분과위원회를 우선 설치하여 쌍방 사회간의 사회적 개방 추진
  - 북측: ① 군사 5개 항목 제안의 우선 토의 ② 남북조절위원회와 별도로 '남북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개최 ③ 남북조절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의 동시 일괄 설치 (\*아무 합의 없이 폐막)
- 6월 23일 | 박정희 대통령,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6·23 선언) 발표
  - ① 조국의 평화적통일은 우리민족의 지상과업임.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함.
  - ②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아야 함.
  - ③ 우리는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써 계속 노력함.
  - ④ 우리는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음.

- ⑤ 국제연합의 다수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음.

우리는 국제연합 가입 전이라도 대한민국대표가 참석하는 국력총회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북측이 같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음.

- ⑥ 대한민국은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진함.
- ⑦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은 평화 선린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임을 재천명함.

**6월 23일 | 북한 김일성 주석, 체코 후사크 환영연설에서 '조국통일5대 방침' 발표**

- ①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 ② 북과 남 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 ③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 ④ 고려연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의 실시
- ⑤ 단일한 고려연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

**6월 27일 | 북한, 유엔 본부에 상주 옵서버 사무소 설치 신청**

**7월 4일 | 유엔 발트하임 사무총장, 허담에게 유엔 본부 상주 옵서버 사무실 설치 허용 통보**

**7월 10~13일 |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

- 제8차 본회담 일지는 쌍방 적십자간의 직통전화나 관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협의키로만 결정

**7월 24일 | 북한 조국전선 제29차 확대회의, 남한의 인민과 정당·사회단체들에 통일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민족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8월 1일 | 이낙선 배구협회장, 남북조절위를 통해 8월 10일 서울서 열리는 제2회 아시아 배구 코치 강습회에 북한을 초청**

**8월 2일 | 북한, 8월 1일의 초청 거부**

**8월 15일 | 박정희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유엔 동시 가입안 수락 촉구**

- 남북이 다같이 세계평화기구에 가입하게 되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민족적 신뢰의 회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북이 다같이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통일의 길을 더욱 넓혀 나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는 것임. 또한 국제연합에 가입한 것은 우리 민족이 국제사회에서 응당 행사해야 할 발언권과 당연한 권익을 확보하여 민족의 긍지를 드높일 수 있는 다시없는 계기가 된다고 확신함.

**8월 28일 | 북한 김영주 남북조절위 공동위원장, 남북대화 일방적 중단 선언 발표**

- 우리는 남북조절위원회에서 이후락과 같은 자들을 제거하고 민족적 양심이 있고 쌍방 사이



의 신의를 지킬 줄 알며 민족분열의 고정화를 반대하고 진정으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로 교체할 것을 제기함. 남조선 당국자들이 만일 진실로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응당 쌍방 사이에 합의된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을 존중하고 ‘두 개 조선’ 노선을 취소하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그만두고 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 등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정당·사회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김대중을 비롯하여 체포·투옥한 애국자들을 석방하여야 함. 남북조절위원회는 응당 전민족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당국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남북조선의 각 정당·사회단체,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표들이 참가하여야 함.

8월 29일 | 이후락 남북조절위 공동위원장, 8월 28일 김영주 성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동 성명의 철회와 대화 재개를 촉구

9월 10일 | 남북한, 유엔 사무국에 각각 한국문제 결의안 제출

9월 26일 | 북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안 반대 입장 천명

10월 1일 | 유엔 총회 제1위원회(정치·안보), 남북한을 옵서버로 동시 초청할 것을 표결 없이 정식 결정

10월 28일 | 북한 김일성 주석, 불가리아 정부대표단 환영연설에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반대 주장  
- 올해 유엔총회는 마땅히 조선인민과 세계인민의 한결같은 염원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두 개 조선의 유엔 동시가입안을 배격하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며 남조선에 와 있는 미군에 가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철거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11월 13일 | 북한 이종목 유엔대표 단장, 제28차 유엔총회 정치위원회에서 유엔의 조선 문제 토의와 관련한 원칙적 입장 천명

- ① 조선은 하나
- ② 외세는 물러가야함.
- ③ 두 개 조선 조작을 절대 반대
- ④ 조선은 통일되어야 함.

11월 15일 | 김용식 외무부 장관, 제28차 유엔총회 정치위원회에서 유엔군사령부 해체 강력반대 주장

- ① 유엔군의 철수는 평화보장을 위한 대안 조치가 없는 한 불가하고
- ② 통일은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하며
- ③ 남북대화의 성공을 위해 인내로 노력하겠음.

11월 16일 | 북한 유장식 남북조절위 부위원장, 대한민국이 ① 6.23선언을 취소하고 ②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 대한 단속을 중지하며 ③ 남북조절위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하는데 동의할 경우 대화 재개를 협의 하겠다고 주장

11월 21일 | 제28차 유엔총회 정치위원회, 한국문제에 관해 합의 성명 채택

- ① 7.4공동성명의 3개 조국통일원칙에 대한 만족 표명
- ② 남북 간의 대화 계속과 다방면적인 교류 및 협력의 실시를 촉구

③ UNCURK의 즉각 해체 승인

11월 23일 | **북한 외무성, 유엔군 철수문제 제기 권리 보유 주장**

- 이번 유엔총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미제의 내정간섭의 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해체되고 민족의 영구분열을 위한 남북조선의 유엔 동시가입 책동이 분쇄되었으며 역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광범한 지지를 받게 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통일위업에는 보다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었음.

11월 28일 | **남북적십자 제1차 실무대표 접촉**

- 한적: ① 본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재개할 것 ② 모든 문제는 회담석상에서 토의 해결되어야 함. ③ 제8차 본회담을 1973년 12월 19일 서울에서 개최
- 북적: ① 한적대표단의 개편 ② 남한에서의 애국적 인민과 청년학생에 대한 탄압 중지 ③ 서울은 회담 개체에 적합한 분위기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제8차 본회담은 평양에서 개최할 것 ④ 제8차 회담이 열릴 때까지 쌍방의 교체 수석대표를 책임자로 하는 본회담 예비회의를 관문점에서 개최할 것

11월 28일 | **유엔총회, 한국문제에 관한 합의 성명 만장일치로 채택**

12월 1일 | **북한, 군사정전위서 백령도 등 서해안 5개 도서 인접해역을 북한 영해라고 주장하고 5개 도서에 향해하는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선언**

12월 1일 | **국방부, 11월 19일~12월 1일까지 6회에 걸쳐 북한 해군함정이 서해안 백령도 연평도 등 5개 도서지역의 우리측 영해를 침범한 사실을 발표하고 북한의 도발행위를 경고**

12월 3일 | **이후락 남북조절위 공동위원장, 건강상 이유로 사임, 장기영 부위원장 위원장 직무대리 결정**

12월 5일 | **남북조절위 제1차 부위원장회의, 우리측 제2차 부위원장회의 개최(12월 12일) 제의**

12월 11일 | **북한, 제2차 부위원장회의 12월 19일로 수정 제의**

12월 11일 | **남한, 북한 수정 제의를 수락**

12월 13일 | **이범석 한적 수석대표, 제8차 본회담 개최문제에 관해 북측의 성의를 촉구**

12월 19일 | **남북조절위 제2차 부위원장회의**

- 남측은 북측의 위원회 개편 주장을 고려하여 남북 쌍방의 위원 수를 5명에서 10명 내외로 늘리고 여기에 정당 및 사회단체 인사를 참여시키는 데 동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이를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시키자고 북한측에 촉구.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북한측은 한국의 반공정책과 「6·23 선언」을 비난하면서 남북조절위원회 재개 방안에 관한 토의를 기피

# 1974년

- 1월 8일 | 대통령 긴급조치 제1, 2호 선포
- 1월 14일 |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 선포
- 1월 18일 |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남북 상호 불가침협정' 체결제의
  - ① 상호간의 무력 침략 배제
  - ② 상호간의 내정 불간섭
  - ③ 현행 휴전 협정 준수
- 1월 24일 | 박동진 주 유엔대사, 박정희 대통령의 '남북 상호 불가침협정' 제의와 관련해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 방문
- 1월 26일 | 북한 노동신문, 박정희 대통령의 '남북 상호 불가침협정' 체결 제의 거부
- 1월 30일 | 남북조절위 제3차 부위원장회의, 남북조절위 확대개편문제 토의
- 2월 15일 | 서해 백령도서방 30마일 공해상에서 북측 포함이 어로 중이던 한국 측 어선 수원32호를 격침, 수원33호를 납치
- 2월 16일 | 경남 통영해안에 무장공비 상륙침투
- 2월 25일 | 남북적십자 제2차 실무대표 접촉
- 2월 27일 | 남북조절위 제4차 부위원장회의
  - 북한측은 조절위원회 개편안을 자진 철회. 대신 남북의 정당·사회단체 및 각계 각층의 대표들로 「남북정치협상회의」를 구성, 통일과 관련된 일체의 문제는 여기서 논의하자고 제안. 이와 함께 북한측은 ① 「6·23 선언」의 철회 ② 반공정책 포기, 반공법·국가보안법 폐지, 공산주의 활동 합법화 ③ 주한미군 철수 등을 선행조건으로 주장함. 부위원장회의는 더 이상 진전 없었음.
- 3월 4일 | 북한 김일성 주석, 부메디엔 환영연설에서 남북조절위와는 별개로 대민족회의 또는 남북정치협상회의 개최 제안
  -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분열책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이 진실로 통일을 위하여 대화의 길에 나섰다고 믿을 수 없음.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문제를 남북 당국자들 사이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전민족적인 토의에 부쳐야 한다고 인정함.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현존하는 남북조절위원회와는 별개로 남북의 각 정당·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대민족회의나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열 것을 다시 한 번 제의함.
- 3월 11일 | 남북적십자 제3차 실무대표 접촉
- 3월 17일 | 남북조절위 제5차 부위원장회의, 서해 어선사건문제와 조절위 확대개편문제 논의 반복

3월 24일 | 경북 영덕해안에 무장공비 상륙침투

3월 25일 | 북한 허담 외교부장, 최고인민회의 보고에서 자주적 통일의 전제 제시

-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제를 마련하자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키고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시켜야 하며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셔야 하며 불안정한 조선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켜야 함.

3월 25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미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조미평화협정' 체결 제의

3월 27일 | 남북조절위 제5차 부위원장회의

4월 3일 | 남북적십자 제4차 실무대표 접촉

4월 24일 | 남북조절위 제6차 부위원장회의, 남북조절위 정상화문제와 어선사건문제 논의를 지속

4월 25일 | 북한 김일성 주석, 수단의 정부기관지 기자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두 개 조선 반대 주장

- 미제국주의자들은 공화국 북반부를 침략하여 전조선을 먹어 보려던 야망을 실현할 수 없게 되자 우리나라를 영원히 둘로 갈라놓고 남조선만이라도 계속 침략적 군사기지로, 상품판매 시장으로 그리려고 있으려는 목적에서 '두 개 조선' 정책을 들고 나왔음. 남조선당국자들은 밀뿌리째 뒤흔들리고 있는 군사파쇼 '정권'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기 위하여 미제의 '두 개 조선' 정책에 적극 추종하고 있음. 우리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 개 조선' 유엔 동시가 입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 만일 나라가 분열된 상태에서 북과 남이 따로 따로 유엔에 들어간다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둘로 갈라지게 될 것임.

4월 29일 | 남북적십자 제5차 실무대표 접촉

5월 20일 | 제주도 북서방 30마일 추자도에 무장공비 3명 출현(1명 사살, 2명 도주)

5월 22일 | 남북적십자 제6차 실무대표 접촉

〈남북적십자회담 대표들 사이의 합의서〉

- ① 쌍방 적십자대표들의 접촉을 끝내고 빠른 시일 안에 판문점에서 쌍방 대표단 교체수석대표(부단장)를 책임자로 하는 실무회의를 가짐.
- ② 실무회의에서는 본회담 의제에 대한 예비적 토의를 진행하며 동시에 본회담 재개문제를 토의·해결
- ③ 실무회의는 본회담이 다시 열릴 때까지 진행
- ④ 실무회의 날짜, 구성, 운영절차 문제는 따로 토의

5월 29일 | 남북적십자 제7차 실무대표 접촉

- 제6차 실무대표 접촉 시 합의한 실무회의에 관한 구체적 사항 합의

6월 23일 | 박정희 대통령, 6·23선언 1주년 담화에서 북한에 4개항 촉구

- ① 나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하루속히 무력과 폭력에 의한 적화통일노선을 버리고 7·4공동성명 정신으로 돌아와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를 정상화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

을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즉각 응해 올 것을 강력히 촉구

- ② 나는 북한 측이 군사적 도발을 비롯한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내정간섭과 적대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지체 없이 남북간의 불가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응해 올 것을 촉구
- ③ 나는 3,300만의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이 마땅히 유엔에 가입하여 국제평화의 유지 강화와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임. 그와 동시에 1,400만 인구의 북한도 우리와 같이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이에 반대하지 않을 것임.
- ④ 우리는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과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문호개방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모든 평화애호국가들이 이에 적극 호응함으로써 우리와 더불어 이 지역의 안전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음.

6월 28일 | 동해 군사분계선 연장선 부근 공해상에서 어로경비 중이던 경찰경비정 863호, 북한 포함 3척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침몰

6월 28일 | 남북조절위 제7차 부위원장회의  
- 남한이 동해 공해상의 경비정 격침 사건에 대해 경고하자 북한은 이를 자위권 발동이라고 주장

6월 29일 | 부산 앞바다에 출현한 북한 간첩선을 해군이 격침

7월 10일 | 남북적십자 제1차 실무회의  
- 제8차 본 회담을 1974년 8월 30일 서울에서 개최할 것과 노부모의 생사 확인 사업을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적이 제의를 거부

7월 24일 | 남북적십자 제2차 실무회의  
- 한적은 제8차 본회담을 8월 30일 서울에서 개최할 것과 노부모 생사 확인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북적은 제의를 거부하고 「반공법」·「국가보안법」 등을 철폐하는 등의 반공정책 중지의 공동성명채택을 주장

8월 15일 | 8·15 저격사건 발생

8월 15일 | 박정희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제시

- ① 남북 상호 불가침조약 체결
- ② 남북대화 성실 진행
- ③ 토착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 총선거 실시

8월 28일 | 남북적십자 제3차 실무회의  
- 한적은 8·15 저격사건 관련책임자 처단, 폭력혁명 정책포기,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수락 등을 요구했으나, 북적은 8·15사건이 인도주의 회담과 무관하다고 주장

9월 19일 | 북한 김일성 주석, 다메오정부 기관지 기자와의 회견에서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는 ① 온갖 외세의 간섭 종식 ② 남한사회의 민주화 실현 강조

9월 21일 | 남북조절위 제8차 부위원장회의

- 남한은 8·15 저격사건 및 남북조절위 재개문제에 관해 논의할 것을 요구, 북한은 8·15 저격사건 관련을 부인하고 조건부로 남북조절위를 재개할 것을 언급

**9월 25일 | 남북적십자 제4차 실무회의**

- 한적은 노부모의 소재 및 생사확인과 상봉, 방문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북적이 제의를 거부

**10월 1일 | 북한 김일성 주석, 수리아 아사드 대통령 환영대회 연설에서 대민족회의 소집에 의한 통일문제 토의 주장**

- 북과 남에 있는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광범히 참가하는 대민족회의를 열고 사상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민족적 대단결의 정신에서 협상을 실현하여 조선에서 분열과 대결을 해소하며 단결과 합작의 원칙에서 통일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하여야 함.

**10월 7일 | 북한, 남북공동성명의 원칙 실현을 위한 입장 천명**

-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을 관철하며 북과 남 사이의 대화를 통하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유엔군'의 간관 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국군대를 남조선에서 지체 없이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예속화정책에 끝장을 내야 함.

**11월 5일 | 남북적십자 제5차 실무회의**

- 제8차 본회담 서울 개최문제와 노부모 문제 우선 해결을 재촉하였으나 북한 거부

**11월 8일 | 북한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확대회의 성명에서 남북정치협상회의의 의제 제시**

- 대내문제로서는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없애고 단결을 도모하며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이룩하고 북과 남의 연방제를 실시할 데 대한 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음. 또한 대외문제로서는 국제무대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전민족의 이익을 옹호하고 단일국호로 유엔에 가입하며 외래침략에 공동으로 대처할 데 대한 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을 것임. 이와 함께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거한 다음 우리나라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어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북과 남의 군사당국자들의 쌍무적 군사회담을 열고 현존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할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조직할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해당한 실천적 대책들을 협의 강구할 수 있다고 인정함.

**11월 15일 | 비무장지대 남방지역 지하에서 북한이 구축한 땅굴발견**

**11월 25일 | 북한 리종목 외교부 부장, 유엔총회 제1위원회 연설에서 '남조선에서의 외국군대 철수를 위한 유엔 결의 채택' 강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올해 유엔총회가 조선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의 공통된 염원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유엔군'의 간관 밑에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기 위한 공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 데 실제적으로 이바지할 역사적인 회의로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음. 유엔의 깃발 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 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게 되면 그것은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게 될 뿐 아니라 유엔의 역사에도 새로운 장을 기록하게 될 것이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임.

- 11월 29일 | **김동조 외무부 장관, 유엔총회 제1위원회 연설에서 ‘불가침협정 체결’ 및 ‘유엔 동시가입’ 강조**  
- 우리는 유엔가입이 분단을 영구화하거나 평화통일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음. 북한은 이미 세계보건기구, 만국우편연합, 국제연합통상개발회의, 국제원자력기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등 대한민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정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국제연합기구 및 기타 국제기구에 가입한 바 있음. 북한은 이러한 기구에 남북한이 동시가입 함으로써 국토분단이 영구화된다고 보지 않았다는 것임. 북한이 2차에 걸쳐 대한민국과 함께 국제연합에의 가입을 신청한 바 있음을 상기하여야 할 것임. 본 대표단은 여러분에게 다음 몇 가지 중요사항을 강조하고자 함. 첫째로, 작년 북한에 의하여 중단된 남북대화의 재개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남북한은 이 대화를 통하여 비로소 상호 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이 대화를 통하여 민족적 화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본 대표단은 대화가 아무 선행조건 없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는 바임. 또한 본인은 이것이 바로 작년에 본위원회가 채택한 합의성명에 명백히 나타난 바 본 위원회의 의사라고 믿음. 둘째로, 본 대표단은 유엔군사령부의 장래문제에 관하여 동 문제가 당사자들과의 협의하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임. 더욱이 유엔군사령부는 1953년 휴전협정의 일방 서명당사자로서 동 협정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다해 왔음. 유엔군사령부가 효과적인 선후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그 막중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여 할 것임.
- 11월 29일 | **남북적십자 제6차 실무회의**  
- 한적, 노부모의 생사확인 및 상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북적이 제의 거부
- 11월 30일 | **북한의 요청에 의해 남북조절위 쌍방 대변인 접촉, 부위원장 회의 무기연기 제의**
- 12월 2일 | **남한, 예정대로 남북조절위 부위원장회의를 개최할 것을 촉구**
- 12월 3일 | **북한, 제9차 부위원장회의 연기(1975년 1월 8일) 및 쌍방 대변인 접촉(1974년 12월 4일) 제의**
- 12월 3일 | **남한, 제9차 부위원장회의 1975년 1월 8일 연기를 수락하고, 1974년 12월 18일 간사회의 개최를 제의**
- 12월 14일 | **남북조절위 쌍방대변인 접촉**  
- 정부는 남북조절위 간사회의를 12월 18일에 개최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북한은 간사회의개편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거부

# 1975년

- 1월 6일 | 남북조절위 북측, 류장식을 조명일로 교체했음을 통고
- 1월 8일 | 남북조절위 제9차 부위원장회의
- 1월 14일 |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4개항 수락 촉구  
① 남북 상호불가침 협정 체결  
② 휴전협정 효력 존속 전제하의 유엔 군사해체  
③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또는 대한민국의 단독 유엔 가입 불반대  
④ 남북대화의 즉각 정상화
- 1월 24일 | 남북적십자 제7차 실무회의  
- 한적: ① 제8차 본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할 것 ② 노부모 사업 수락 촉구 ③ 남북간 전면적 문호개방을 통해 이산가족의 고통을 풀어줄 것  
- 북적: ① 「서울분위기」와 「조건과 환경 개선」 등의 주장을 되풀이 ② 노부모 사업 실현 거부 ③ 「6·23 선언」은 분열주의 정책,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한 인도주의 사업의 실현은 물론 본회담도 재개될 수 없다고 주장
- 1월 24일 | 남북조절위 우리측, 북한의 휴전선 확성기방송 재개 항의
- 1월 25일 | 남북조절위 북측, 휴전선 확성기 방송재개는 남한의 방송 재개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강변
- 1월 25일 | 남북조절위 우리측, 휴전선 확성기방송 재개에 재차 항의
- 1월 28일 | 남북조절위 우리측, 북한이 휴전선 확성기방송을 다시 중지했다고 발표
- 2월 5일 | 남북조절위 우리측, 한국의 정규 라디오·TV 방송에 대한 북한의 전파방해 항의
- 2월 7일 | 남북조절위 북측, 한국의 라디오·TV 방송에 대한 전파방해 사실 부인
- 2월 17일 | 남북조절위 북측, 동해 거진 앞바다에서 한국경비정에 격침된 북한 선박이 표류중인 순찰선이었다고 항의
- 2월 18일 | 남북조절위 우리측, 북한 선박이 동해 거진 앞바다에서 검색에 불응해 기관포사격을 가하면서 북상 도주하다가 격침되었음을 통고
- 2월 27일 | 남북조절위 북측,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어선 침몰사건 항의
- 2월 27일 | 남북조절위 우리측, 문제의 어선은 한국해군 작전수역에서 검색에 불응, 도주를 피하다가 한국해군함정에 충돌해 침몰했다고 통고
- 2월 28일 | 남북적십자 제8차 실무회의
- 3월 14일 | 남북조절위 제10차 부위원장회의
- 3월 24일 | 철원동북방 1.3km 휴전선 비무장지대 내 50m 지하에서 제2의 지하터널 발견



- 3월 26일 | 남북적십자 제9차 실무회의
- 5월 8일 | 남북적십자 제10차 실무회의
- 5월 29일 | 남북조절위 북측, 제11차 부위원장회의(제10차 부위원장회의에서 5월 30일 기합의) 무기연기 통고
- 5월 29일 | 남북조절위 우리측, 제11차 부위원장회의 기합의대로 개최요구
- 5월 30일 | 남북조절위 우리측, 제11차 부위원장회의가 북측의 불참으로 무산되었음을 비난하는 성명 발표
- 6월 2일 | 남북조절위 북측, 대화의 성과가 없으므로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제11차 부위원장회의를 연기 한다는 성명 발표
- 6월 9일 | 북적, 6월 12일로 개최 합의되었던 제11차 실무회의를 7월 하순으로 연기할 것을 제의
- 6월 10일 | 한적, 새로운 제11차 실무회의 일자 제시를 요구
- 6월 11일 | 북적, 제11차 실무회의 일자 제시에 대해 다음 회의일자는 형편에 따라 정하자고 막연한 회답
- 6월 29일 | 박정희 대통령, 일본 저팬타임스 회견에서 유엔군사령부 해체 대안 강조
  - 휴전협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면 우리는 주한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임. 이 기회에 명백히 해둘 것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여부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미군의 한국주둔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이 두 개의 문제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임.
- 7월 3일 | 남북조절위 북측 공동위원장 성명
  - ① 6·23선언은 민족 분열 선언이고 대화 파기 선언
  - ② 대한민국이 반공정책 견지하는 한 남북대화는 불필요
  - ③ 현 한국 정부는 교체 되어야 함.
  - ④ 대민족회의를 개최할 것
- 7월 3일 | 박정희 대통령,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3주년에 즈음한 특별 담화 발표
  - ① 북한은 침략 전쟁 준비를 중지할 것
  - ② 북한은 일체의 대남간첩침략 행위 중지하고 국제사회에서 동족을 혈뜯는 민족자해행위를 중지할 것
  - ③ 남북조절위와 남북적십자회담의 운영을 정상화할 것
- 7월 3일 | 북한, 조국전선의 7·4성명 3주년에 즈음한 성명, 남북정치협상회의 소집 주장
- 7월 5일 | 남북조절위 우리측, 제11차 부위원장회의 7월 15일 개최 제의
- 7월 9일 | 남북조절위 우리측, 공동위원장 대리성명
  - ① 남북조절위 제4차 평양회의 8월 15일 이전 무조건 개최 촉구
  - ② 남북조절위 확대·개편을 포함하여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재개되는 남북조절위 회의에서 토의할 것을 제의

- 7월 10일 | **한적, 제11차 실무회의 개최(7월 25일) 제의**
- 7월 14일 | **북적, 제11차 실무회의 일자 수정(7월 21일) 제의**
- 7월 16일 | **한적, 북적의 제11차 실무회의 일자 수정 제의에 동의**
- 7월 21일 | **남북적십자 제11차 실무회의**
- 8월 8일 | **남북조절위 우리측, 제11차 부위원장회의 개최(8월 25일) 제의**
- 8월 15일 | **박정희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사회의 개방 촉구**  
 - 나는 북한측에 대해 완전히 폐쇄된 북한의 암흑사회를 하루속히 개방하고 북한동포들을 전 체주의 독재체제와 개인 우상숭배의 노예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최소한의 자유와 기본권만이라도 부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그들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남북대화를 무조건 재개하라는 우리의 촉구에 응해야 하고, 특히 이산 가족들의 상호 방문과 재결합문제와 같은 긴급한 인도적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바임. 남북이 평화통일을 달성할 때까지 과도적 잠정조치로서 유엔에 가입하는 것은 결코 분단의 영속화가 아니라, 남북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보다 굳건히 함으로써 오히려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강조해 두는 바임.
- 8월 22일 | **남북적십자 제12차 실무회의**
- 8월 25일 | **남북조절위 우리측, 북한이 남북조절위 제11차 부위원장회의 8월 25일 개최제의를 회답 없이 묵살했다고 발표**
- 9월 22일 | **미국 키신저 국무장관, 미·중·남·북의 4자회담 제안(북한과 중국이 거부)**
- 9월 24일 | **박정희 대통령, 서독 신문기자와의 회견에서 '남북한 평화공존' 강조**  
 - 우리가 유엔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평화통일이 이룩될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로서 우선 평화공존체제를 굳히려는 데 있는 것임. 평화공존 없이 어떻게 평화적 방법으로 분단국가가 통일될 수 있겠습니까.
- 9월 28일 | **북한 김일성 주석, 요미우리신문 편집장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미군철수 강조**
- 10월 9일 | **박정희 대통령, 벨기에 신문기자와의 회견에서 남북대화 노력 강조**  
 - 우리가 남북대화에서 기대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남북통일을 이룩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님. 남북대화를 통해 평화통일의 대전제와 기본이 되는 평화공존체제를 한반도에 정착시키자는 것임. 다시 말하면 북한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바라는 그리고 전세계가 바라는 평화공존을 수락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남북대화에서 기대하고 있는 점임.
- 10월 9일 | **북한 김일성 주석, 당 창건기념대회 보고에서 민족통일전선 형성 주장**  
 -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함.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온 민족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고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야만 실현할 수 있는 거족적인 사업임. 민족대단결의 원

칙에 따라 전국적 범위에서 광범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임. 남조선 당국자들도 진심으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바란다면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반공' 소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남조선에서 '반공법'을 없애고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 인민들을 탄압하지 말아야 함. 남조선 당국자들은 '반공'정책을 연공정책으로 바꾸어야 함.

10월 11일 | 북적, 제13차 실무회의 10월 23일 개최 제의

10월 13일 | 한적, 북적 제의에 동의

10월 13일 | 남북조절위 우리측, 위원회 운영 정상화 방안 제의

10월 17일 | 남북조절위 북측, 우리측 제의 거부

10월 23일 | 남북적십자 제13차 실무회의

- 한적은 ① 신정과 추석을 이용한 이산가족 성묘 방문단의 상호교환 ② 노부모와 이산자녀들간의 판문점 면회소 및 우편물교환소 운영을 제의

11월 13일 | 박정희 대통령, 마이니치신문 기자와의 회견에서 휴전당사국 회담 개최문제 협의 요망

- 우리는 긴장완화를 한낱 환상으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우월한 국력배양이 있어야 하고, 그 위에서 진지하게 남북 간의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도록 북한측을 계속 설득해야 한다고 봄.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 ① 대내적으로 우리는 국력을 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알차게 배양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함.
- ② 대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가 제의한 남북한 불가침협정을 수락케 하여 이것을 체결하도록 촉구할 것이고, 또한 남북대화를 조속히 재개하도록 그들에게 계속 촉구해 나갈 것임.
- ③ 대외적으로 우리는 계속 평화추구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임. 다시 말해서 미국·일본 등 우리의 우방들과는 기존의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지만 이에 덧붙여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나라일지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과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의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상호 관계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임.

나는 이 기회에 북한이 휴전당사국 회의를 지금 원하지 않는다면 휴전당사국 회의는 일단 뒤로 미루고 우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남북한이 서로 무릎을 맞대고 진지하게 이 휴전당사국 회의 개최문제를 협의 할 것을 제의하는 바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기본적으로는 남북한임.

11월 18일 | 제30차 유엔총회 본회의, 한국문제 표결

- 남한지지(찬성 59, 반대 51, 기권 29), 북한지지(찬성 54, 반대 43, 기권 42)

11월 28일 | 남북적십자 제14차 실무회의

12월 26일 | 북한 김일성 주석, 마이니치신문 편집국장과의 대담에서 합작과 단결 강조

- 지금 남조선 당국자들은 공산주의들과 단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와의 단결을 반대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는 북과 남이 대결할 것이 아니라 통일하여야 하며 경쟁할 것이 아니라 합작하여야 하며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 서로 이해를 두터이 하여 단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는 각 정당·사회단체, 개별적 인사들이 민족을 위하여 자기 사상과 이념·신앙과 제도를 초월하는 것임. 모든 사람들이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데 모든 것을 복종시킨다면 전민족적인 통일전선 결성은 얼마든지 가능함.

# 1976년

- 1월 15일 |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평화정착과 남북대화 재개 강조
  - 이 시기에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통일이 아니라 평화인 것임. 평화정착임. 그래야만 통일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어 나가고 실마리가 풀려 나갈 것임.
  
- 1월 26일 | 박정희 대통령, 요미우리신문 기자와의 회견에서 남북한 교차승인의 비현실성 지적
  - 유엔은 남북한을 다함께 유엔에 가입시키든지, 아니면 한민족의 3분의 2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민족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엔가입을 실현시킬 것을 바랍. 이른바 '교차승인안' 그 자체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며, 오히려 그것은 북한측의 부정적 태도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 다만 '교차승인안'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주변제국이 국제적으로 보상하는 구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과잉기대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1월 26일 | 남북조절위 우리측, 남북조절위의 조속한 운영 정상화 촉구
  
- 2월 10일 | 남북조절위 우리측, 북한에 최규하 위원을 이용희 위원으로 교체 통고
  
- 2월 12일 | 남북적십자 제15차 실무회의
  
- 3월 9일 | 한적, 북한에 이범석 수석대표가 지연태로 교체되었음을 통고
  
- 3월 28일 | 북한 김일성 주석, 세카이 편집국장과의 대담에서 불가침조약 체결과 유엔 동시가입에 의한 남북한 교차 승인론에 대해 반대의사 표명
  - 우리가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을 데 대한 제안을 내놓자 남조선 당국자들은 이른바 '불가침조약'이란 것을 들고 나왔음. 남조선 당국자들이 들고 나온 '불가침조약'은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님. '불가침조약'이란 조선의 북과 남이 두 개 나라로 갈라져 있으면서 서로 침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지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분열을 합법화하는 것임. 우리나라가 일시적으로 분열되어 있으면 있었지 무엇 때문에 아무런 의의도 없는 '불가침조약'을 맺어서 분열을 합법화하겠습니까. 우리가 내놓은 평화협정과 남조선 당국자들이 들고 나온 '불가침조약'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임. 남조선의 현 '정권'이란 독립국가들이 대상하여야 할 자주적인 정권이 못됨. 그러므로 남조선의 현 '정권'이 그대로 있는 조건에서 우리나라의 북과 남에 대한 '교차승인'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임. 우리는 조선의 북과 남에 대한 '교차승인'문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분열을 전제로 하는 그 어떤 형태의 움직임도 절대로 허용할 수 없음. 물론 우리나라의 통일을 전제로 하는 움직임인 경우에는 문제가 다름.
  
- 3월 31일 | 한적, 판문점·서울·평양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쌍방 수석대표 면담 제의
  
- 4월 7일 | 북적, 한적의 수석대표 면담 제의 거부
  
- 4월 10일 | 남북적십자 제16차 실무회의

- 4월 12일 | 남북조절위 우리측, 남북 고미술품·고고학자료 교환·공동전시 제의
- 4월 18일 | 남북조절위 북측, 평양방송을 통해 우리측 제의 거부
- 5월 13일 | 박동진 외무부 장관 성명발표  
 ① 한반도 문제에 관한 당사자 간 대화 촉구  
 ② 당사자 합의 없는 해결방법(미·북 평화협정 주장 등)은 민족자결원칙에 위배됨을 지적  
 ③ 북한의 휴전협정 체제 와해기도 경고
- 5월 27일 | 남북조절위 우리측, 북측의 휴전선 확성기방송 부분재개(5월 25일) 항의
- 5월 29일 | 북한 김일성 주석, 유고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며 ‘블록불가담 운동과 조선의 통일문제’ 언급  
 -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영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 범위에서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로서 반제자주를 위한 블록불가담 나라들의 공동위업의 한 고리임. 그러므로 조선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나라에 주체적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을 강화하여야 함.
- 6월 9일 | 남북적십자 제17차 실무회의
- 7월 3일 | 남북조절위 우리측 공동위원장 대리, 7·4남북공동성명 4주년에 즈음한 성명발표  
 ① 남북조절위 운영 무조건 정상화 촉구  
 ② 당사자 해결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개선 해결 촉구
- 7월 3일 | 남북조절위 북측,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대화를 마련하기 위해 ‘대민족회의’를 소집할 것을 촉구
- 8월 15일 | 박정희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대화의 무조건적 재개와 남북조절위 기능정상화 촉구  
 -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한반도의 어떠한 문제도 직접 당사자 간의 합의나 양해 없이는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닫고 남북대화를 무조건 재개하고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시켜라.
- 8월 16일 | 북한, 한국문제에 관한 공산측 결의안 유엔총회에 제출
- 8월 17일 | 북한 박성철 총리, 비동맹국 수뇌회의 연설에서 당사자들의 회담 반대  
 -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감행하고 있는 전쟁도발 책동이 당장 중지되고 남조선에 반입된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전쟁수단들이 제거되어야 하며 남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하고 외국 군사기지들이 철폐되어야 하며 조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져야 함. 지금 어떤 나라는 그 무슨 당사자들의 회담을 운운하고 있는데 조선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회담의 당사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으로 밖에 될 수 없음. 그들은 이 당사자들의 회담에 남조선 당국이 참가해야 한다고 하지만 남조선 당국으로 말하면 본래 정전협정 조인 일방도 아니고 조선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데 대한 문제를 해결할 그 어떤 실권도 가지고 있지 못함.
- 8월 18일 | 북한, 판문점 도끼살인 만행 자행(미군 장교 2명 사망, 한국군 5명과 미군 4명 중경상)

- 8월 20일 | 남북적십자 제18차 실무회의
- 8월 20일 | 남한을 지지하는 서방 19개국, 제31차 유엔총회의 보충의제로 한국문제에 관한 서방측 결의안 유엔사무국에 정식제출
- 8월 22일 | 북한 김일성 주석, 북한 인민군 총사령관 명의로 8·18사건에 대한 유감표명 메시지 유엔군사령관에 전달
- 8월 30일 | 동해에서 군사분계선 북방으로 표류한 어선 신진호, 북한경비정들이 포격 끝에 나포
- 8월 30일 | 남북조절위와 남북적십자간의 남·북 직통전화 불응답으로 동 직통전화의 운용을 중단
- 9월 22일 | 북한, 돌연 공산측 유엔 결의안 철회
- 9월 22일 | 한국의 우방들도 유엔 결의안 철회
- 10월 19일 | 남북적십자 제19차 실무회의
- 12월 10일 | 남북적십자 제20차 실무회의

# 1977년

## 1월 12일 |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선평화 후통일' 정책 강조

- ① 통일정책은 선평화 후통일을 기본원칙으로 삼고있음.
- ② <남북 상호 불가침 협정 체결안> 체결 후에는 주한 미군 철수를 반대하지 않겠음.
- ③ 순수한 인도적 입장에서 북한동포들을 위한 식량원조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

## 1월 25일 | 북한 18개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남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및 각계각층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4개항의 자주적 평화통일안 제의

- 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북의 사회주의 역량의 대연합을 실현하여야 함. 조국통일의 승고한 위업은 진정으로 통일을 염원하는 북의 사회주의 역량과 남의 애국적 민주주의 역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서만 이룩될 수 있음.
- ②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여야 함. 우리나라와 같이 크지 않은 땅 위에 지금처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밀도를 가진 방대한 무력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되어 있는 것은 그 자체가 긴장을 조성하고 불안을 가져오는 근원으로 되고 있음.
- ③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민족내부의 불화의 근원을 없애고 민족적 대단결의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함. 인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억제되며 민족의 반목과 대결이 고취되는 조건에서는 북과 남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제거할 수 없고 민족적 단결을 도모할 수 없으며 나라의 평화통일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없음.
- ④ 이상의 모든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각 정당·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여야 함.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온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우리 조선사람 자신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방도임.

## 2월 11일 | 남북적십자 제21차 실무회의

## 4월 23일 | 북한 김일성 주석, 요미우리신문 편집국장과의 대담에서 남북대화의 요건은 남한사회의 민주화라고 강조

- 북과 남 사이의 대화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지금과 같이 파쇼적 탄압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함. 그러나 만약 남조선 당국자들이 '반공' 구호를 버리고 남조선 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정책을 취소하며 '두 개 조선' 조작음모를 그만두고 통일을 진심으로 염원하며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고 외국군대를 남조선에서 불들어 두는 정책을 포기하며 남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놀음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민주공화당과도 대화를 할 수 있음.

## 4월 28일 | 남북적십자 제22차 실무회의

## 6월 20일 | 북한 김일성 주석, 프랑스 르 몽드지 주필과의 대담에서 미군철수 및 남한의 민주화 주장



**7월 3일 | 북한 김일성 주석, 일본 방송협회 취재단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카터정권의 미군철수 실천을 강조**

- 요즘 미국 당국자들은 선거 때 한 공약과는 달리 남조선에 공군은 그냥 남겨두고 지상군만 철거하겠다고 말하고 있음. 공군도 군사력의 하나인 것만큼 그들이 남조선에서 군대를 철거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공군도 지상군과 함께 철거하여야 할 것임. 만일 미국군대가 남조선에서 철거한다면 조선의 통일문제 해결에서 가장 큰 장애의 하나가 제거되는 것으로 될 것임. 미국 당국자들의 행동에서 특히 선거 때의 공약과 모순되는 것은 파쇼독재를 강화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자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임.

**7월 15일 | 남북적십자 제23차 실무회의**

**8월 17일 | 미국, 「대외관계법령」 의회통과**

- 한반도 정책에 관한 의회선언: 하원 의장 및 의회관련 위원회들에 대한 보고에서 주한미군 감축문제 일본과 협의 명시

**10월 14일 | 남북적십자 제24차 실무회의**

**12월 9일 | 남북적십자 제25차 실무회의**

- 1978년 3월 20일로 예정된 실무회의를 앞두고 북측이 '탐스피리트 78'을 이유로 실무회의의 무기연기를 남측에 통고함에 따라 1974년 7월 10일 제1차 실무회의가 시작되어 25차에 이르렀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결렬됨.

**12월 10일 | 북한 김일성 주석, 동독 호네커 환영 연설에서 남북한과 동서독의 차이점 강조**

- 조선문제는 역사적 견지로 보나 현정세로 보나 독일의 경우와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임. 지난날 독일은 종주국이었으나 조선은 식민지 나라였음. 독일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였다가 패전한 결과 분열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제국주의자들이 나라의 절반 땅을 강점한 결과 분열되었음. 본래 우리나라는 둘로 분열되어야 할 그 어떤 이유와 조건도 없음. 우리는 남북조선의 '유엔 동시가입론'이나 '교차승인론'이나 할 것 없이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고 분열을 영구화하려는 온갖 시도를 단호히 배격함.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외래 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영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해방을 이룩하는 문제임. 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영토와 인민을 도로 찾는 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우리 인민의 신성한 민족적 권리임.

# 1978년

- 1월 18일 |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선평화 후통일' 정책 강조  
- 선평화 후통일, 즉 먼저 평화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전쟁을 통해 무력으로 결판을 낸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을 바에는 먼저 평화정착을 해야함. 먼저 남북대화를 해야하고 그를 위해 남북교류를 확대하고 문호를 개방하여 어느 시기에 가서 완전히 개방
- 2월 1일 | 북한, 남북교차승인과 유엔 동시 가입론 비판
- 2월 24일 | 법무부, 비적성공산국가 및 좌경비동맹국가 등 미수교 국민들의 입국 허용 결정
- 3월 3일 | 민관식 남북조절위 우리측 위원장 대리, 남북조절위의 무조건 조속 재개, 조절위 재개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직통전화의 즉각 개통, 부위원장회의 소집을 제의하고 성명 발표
- 4월 24일 | 북한 조국전선, 남조선 제정당·사회단체들과 해외교포단체들에 보내는 호소문에서 전 민족적 단합과 정치협상회의 소집 주장
- 6월 23일 | 박정희 대통령, 특별담화에서 남북경제협력기구 구성 제의  
- 우선 남북간의 교역, 기술협력, 자본협력의 길을 트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쌍방의 민간경제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남북간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기구'의 구성을 제의하는 바이며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관계 각료회의를 가질 용의가 있음.
- 6월 25일 | 북한 '6·25 미제 반대 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 남조선 인민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미국의 한국문제 간섭 규탄  
- 미국은 남조선으로부터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침략무기를 하루빨리 완전히 철수하여야 하며 괴뢰들을 무력으로 뒷받침해 주는 놀음을 견어치워야 하며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에 간섭하지 말아야 함. 미국이 참말로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비현실적인 여러 조건을 들고 나올 것이 아니라 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접촉하여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야 함.
- 6월 30일 | 북한 노동신문, 박정희 대통령의 남북경제협력기구 구성 제의 거부  
- 6·23선언을 취소하고 미국군대를 내보내며 반공파쇼정책을 그만두고 애국자들과 민주인사들을 석방하며 우리를 공격하는 북침소동을 중지하여야 함.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실질행동으로 보여줄 때 우리는 그들과 경제협력 문제를 포함하여 북과 남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토의할 용의가 있음.
- 7월 4일 | 민관식 남북조절위 우리측 위원장대리, 북한에 3개항 수락 촉구 성명발표  
① 남북대화를 무조건 조속히 정상화할 것  
② 남북 간에 상호 불가침 협정을 체결할 것  
③ 남북 간 경제협력촉진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제의를 수락할 것
- 8월 12일 | 이호 한적 총재, 남북적십자사 총재회담 제의

9월 9일 | 북한 김일성 주석, 정권수립 경축대회 연설에서 민족이념에 입각한 통일 주장

10월 21일 | 북한 김일성 주석, 일본 세카이 기자와의 회견에서 전 민족적 단결 원칙에서의 대화 강조

- 문제는 대화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데 있음. 통일을 바라는 기초 위에서 통일을 하기 위하여 대화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현 상태를 고착시키고 분열을 영구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화를 하는가 하는 데 문제가 있음. 나라가 이미 분열되어 있는 조건에서 구태여 분열을 위한 대화를 할 필요는 없음. 대화를 하려면 통일을 전제로 하고 대화를 하여야 함. 통일을 실현하려는 전제 밑에서 북과 남이 서로 문을 열어놓고 내왕도 하고 경제문화교류도 하여야 함. 이렇게 하여 남북조선 인민들이 서로 충분한 이해를 가지도록 하여야하며 그렇게 하면 민족적 대단결을 이룩할 수 있음.

# 1979년

1월 19일 |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남북한이 제시해온 모든 분야의 문제들을 직접 논의하기 위해 조건 없는 남북한 당국자회담 제의

- 나는 어떠한 시기나, 어떠한 장소에서나, 또는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한 당국이 서로 만나서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이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동족상잔을 막고 5천만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가 하는 제반문제, 다시 말해서 그동안 남북한이 제시해 온 모든 분야의 문제들을 직접 논의하기 위해서 대화를 가질 것을 촉구하는 바임.

1월 23일 | 북한 조국전선 중앙위, 대민족회의 개최 등 통일촉진을 위한 4개항을 제안

- ① 우리는 북과 남이 다 같이 7·4공동성명의 이념과 원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오는 2월 1일 오전 10시를 기하여 쌍방 당국이 각각 7·4공동성명의 이념과 원칙을 재확인하며 그를 엄숙히 준수할 데 대한 태도를 공식표명할 것을 제의
- ② 쌍방은 민족적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는 데로 나가야 하며 서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는 일부터 중지
- ③ 북과 남 사이에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쌍방이 최소한 상대방을 위협하는 군사행동을 그만두며 외부로부터 무기반입을 중지하고 군사적 충돌의 모든 가능성을 제거. 우리는 이를 위하여 우선 쌍방 군사당국이 3월 1일 0시를 기하여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전선 일대에서 무력증강, 군사작전, 군사시설물의 구축과 같은 모든 적대적 군사행동을 정지하며 어떠한 군사연습도 무조건 중지할 것을 주장
- ④ 북과 남의 각 정당·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전민족대회를 소집할 것을 제의. 우리는 이 대회를 올해 9월 초에 평양이나 서울에서 열며 대회의 성과적인 준비를 위하여 6월 초에 평양에서 국내와 해외에 있는 각 정당·단체들의 실무급 대표들이 쌍무적 또는 다무적 예비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

1월 26일 | 정부대변인(문공부 장관), 남북한 당국간의 예비회담 개최 제의

- 이번 북한측의 의사표시는 남북한 당국이 이미 7·4남북공동성명으로 합의한 사항들에 대하여 북한측이 이를 준수하겠다는 것으로 평가하고자 함. 현재까지 남북한이 제시한 모든 문제들을 조속히 협의하기 위하여 구태여 1979년 6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전이라도 서울이나 평양에서 남북한 당국간의 예비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면서 이에 대한 직접 책임있는 북한 당국의 회답을 촉구

1월 27일 | 북한 조국전선 중앙위 서기국, 4월초 전 민족대회 실무급 예비회담' 개최 제의

1월 29일 | 문공부 대변인, 당국간 예비회담 촉구 성명 발표

1월 31일 | 남북조절위 우리측 공동위원장, 남북조절위 회의의 조속 재개, 서울-평양 간 직통전화 즉각 개통 촉구

**1월 31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대남 비방·중상 방송 중지 선언**

- ① 상대방의 이념과 제도에 대한 비난과 특정인에 대한 지명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는 선전을 중지
- 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북반부의 각 정당·단체 및 기관들이 운영하는 방송·텔레비전과 신문을 비롯한 출판물들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선전을 중지
- ③ 군중집회와 구두 및 직관선전 등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든지 북과 남의 대결과 반목을 조장할 수 있는 선전과 행사를 중지
- ④ 이상의 조치들을 1979년 2월 1일 오전 10시를 기하여 북반부 전지역에서 실시

**2월 5일 | 북한 조국전선 중앙위 서기국, 민족통일 준비위원회 발족 제의**

- 우리는 조절위원회 대신 전민족적인 대화와 협상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적 협의기구로서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킬 것을 제의함. 민족통일준비위원회는 북과 남의 당국자들을 포함하여 민족적 화해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국내외의 정당·단체 대표들이 참가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적은 인원들로 구성할 수 있는 것임. 민족통일준비위원회에서는 전민족대회 소집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의 궁극적 통일을 준비하는 데서 나서는 일련의 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을 것임. 민족통일준비위원회가 구성, 운영되면 조절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제한성을 극복하고 민족 공동의 지향을 반영한 7·4공동성명의 이념과 원칙에 부합되게 온 민족의 의사와 이익을 훌륭히 반영하여 통일문제를 가장 민주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될 것임. 우리는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오는 2월 20일 낮 12시 판문점에서 북측 연락대표와 남측 연락대표가 만날 것을 제의함.

**2월 8일 | 남북조절위 우리측, 김동조 위원을 함병춘 위원으로 교체 발표**

**2월 12일 | 북한 조국전선 중앙위 서기국, 민족통일준비위 결성을 위한 북측 연락대표 임명, 동 대표를 2월 20일 12:00에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에 파견할 것이라고 통보**

**2월 12일 | 정부 대변인, 북한의 조국전선을 책임 있는 당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당국 간 대화를 요구하는 입장은 변함없음을 강조**

**2월 12일 | 남북조절위 우리측 대변인, 지연 되어온 남북조절위 제4차 본회의의 개최 협의를 위해 2월 17일 10:00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쌍방 부위원장 접촉을 제의**

**2월 13일 | 북한 조국전선 중앙위 서기국 대변인, 민족통일준비위 협의를 위해 2월 17일 10:00 판문점에 조국전선 대표 파견, 남한에서 ‘어떤 명의’의 대표가 나오던 ‘민족통일 준비위’의 연락대표로 간주한다고 발표**

**2월 15일 | 남북조절위 우리측 대변인, 2월 17일 판문점에 대표파견 발표**

**2월 17일 | 남북 간 변칙대화 제1차**

**2월 20일 | 북한 김유순 체육지도위 위원장, 김득준 탁구협회회장 앞으로 보낸 서신에서 남북한 탁구 단일팀 구성문제 제의**

**2월 24일 | 대한체육회와 대한탁구협회, 대북방송 회담문을 통해 남북탁구협회 대표회담 제의 수락**

### 2월 27일 | 남북탁구협회 제1차 회의

-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한 남북한 단일선수단 구성 문제 논의
- 남측: 남북한 탁구단일선수단 구성에 관한 합의가 3월 12일 이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탁구협회측이 한국선수단의 대회 참가를 보장하고, 한국선수단이 판문점을 통과하여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
- 북측: 단일팀 구성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를 요구. 절차 문제에 관한 제안 (\*쌍방의 기본입장과 제안만을 밝힌 후 구체적인 문제는 앞으로 계속 토의기로 하고, 회의를 끝마침.)

2월 28일 | 북한 인민무력부 대변인, 1월 23일 조국전선 성명 중 3월 1일 0시를 기한 적대 행위 중지 항목을 3월 1일 시작되는 한·미 군사훈련을 이유로 보류할 것임을 언급

### 3월 5일 | 남북탁구협회 제2차 회의

- 남측: 북한측의 단일팀 구성 제의가 한국선수단의 대회참가 기득권을 저지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지적. 한국선수단의 개별 출전 기득권을 우선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
- 북측: 답변 회피. 단일팀을 구성하는 원칙에 먼저 합의할 것을 고집

### 3월 7일 | 남북간 변칙대좌 제2차

### 3월 9일 | 남북탁구협회 제3차 회의

### 3월 12일 | 남북탁구협회 제4차 회의

-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함. 단일팀 구성은 물론 평양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한국선수단의 개별 참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

### 3월 14일 | 남북간 변칙대좌 제3차

3월 24일 | 북한 탁구협회, 성명을 통해 3월 27일 제5차 남북한 탁구협회 회의 개최 제의

3월 26일 | 북한 탁구협회, 성명을 통해 예정대로 3월 27일 10:00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로 대표를 파견할 것임을 통보

3월 26일 | 정부대변인 김성진 문공부 장관, 3월 28일 동훈 통일원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실무대표를 판문점에 파견하고, 필요하다면 남북한 실무대표 접촉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

3월 27일 | 북한, 정당·사회단체 및 당국 연락 대표단 성명을 통해 제4차 연락대표 접촉을 4월 2일 10:00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에서 가질 것을 제의

3월 27일 | 북한 김득준 탁구협회회장, 한국 탁구협회의 한국 팀 평양대회 참가 기득권 보장 요구에 대해 '분열팀'으로 비방, 4월 3일 판문점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팀'을 협의하기 위해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

3월 28일 | 대한민국 당국 실무대표단, 북한이 당국 간 대화의 자리로 나오기를 촉구하고 남북조절위 운영정상화에 의한 남북 대화재개의 문호 역시 항상 열려 있음을 강조

- 3월 30일 | 국회, '남북대화 촉진에 관한 결의안' 통과
- ① 민족적 염원인 평화통일에는 길은 남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자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음을 확신
  - ② 북한 당국은 7.4공동성명에서 서로 확인한 원칙 및 제반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1월 19일 박정희 대통령 제의를 성실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
  - ③ 남북대화의 성공적 촉진을 위해 정부는 국민의 중지를 집결시키는데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
- 4월 1일 | 북한, 정당·사회단체 및 당국 연락 대표단 성명을 통해 남측은 회담 참가 여부를 방송으로 통지하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발표
- 4월 2일 | 대한민국 당국 실무 대표단 수석대표, 기자회견을 통해 평양당국이 임명하는 정당·사회단체 대표와 만날 용의 표명
- 4월 2일 | 북한, 정당·사회단체 및 당국 연락 대표단 성명을 통해 쌍방대표 명칭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쌍방연락 대표 접촉(4월 10일 10:00) 제의
- 4월 3일 | 대한탁구협회 회장, 기자회견을 통해 단일팀 문제와 한국선수단의 세계대회 참가문제는 별개의 것으로서, 북측은 한국선수단의 대회참가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4월 3일 | 북한 탁구협회 대변인, '통일팀' 구성을 위한 시간이 남아 있는 한 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
- 4월 7일 | 대한민국 당국 실무 대표단 대변인, 북한 당국이 임명하는 대표들과 실질적인 협의를 하고자 하고 남북 당국 간 대화와 남북조절위 재개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주장
- 4월 10일 | 북한 정당·사회단체 및 당국 연락대표단, 연락대표 접촉의 진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고 대화가 계속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는 남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주장
- 5월 1일 | 한적, 지연태 수석대표가 소상영으로 교체되었음을 발표
- 5월 2~8일 |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 평양(5월 2일~3일)·서울(5월 5일~8일) 방문
- 7월 1일 | 카터·박정희 대통령의 공동성명, 미·남·북의 3자회담 제안
- ① 남북 당국간 회담 실현 희망
  - ② 남북한 및 미국의 고위당국 대표 회의 개최
  - ③ 남북한의 책임있는 당국간의 대화에 의한 한반도 평화통일 조치
  - ④ 북한의 동맹국들이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전제로 미국은 북한에 상응조치 용의
  - ⑤ 남북한의 유엔가입
- 7월 10일 | 북한 외교부, 한미공동성명의 3자회담 제의 거부
-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이 들고 나온 3당국 회의라는 것이 극히 비현실적이고 사리에 맞지 않으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혼탕 된 제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임. 조선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와 남조선 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가 따로 있고 우리와 미국 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가 따로 있음.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북과 남의 정치·경제·문화의 전반적인 문제는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사람 자신이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민족내부 문제임. 한편 문제는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들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 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임.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은 3당국 회의에서 이 2개의 서로 다른 문제를 섞어 놓고 토의하지는 것임.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북과 남의 당국자들과 각 정당·사회단체 및 해외동포조직 대표들 사이에 아무 때나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진행할 용의를 가지고 있음. 우리는 또한 이와는 별도로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과 회담할 것을 주장함. 우리는 미국 측이 정 요청한다면 우리와 미국 사이에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거 문제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회의에 남조선 당국자들을 엄저버로 참가시키는 것을 허용할 것임. 이렇게 하자고 하여도 먼저 우리와 미국 사이에 회담이 이루어져야 함.

- 10월 26일 |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으로 박정희 대통령 사망(10.26 사건)
- 12월 20일 | 북한, 대한체육회장에게 제22차 모스크바 올림픽대회 단일팀 구성 출전을 위한 체육인대표회의를 평양·서울 또는 판문점 개최(1980년 1월 17일) 제의
- 12월 20일 | 박종규 대한체육회장, 12월 20일 북한 제의에 대해 동 제의를 공식 접수한 바 없다고 논평
- 12월 21일 | 최규하, 제10대 대통령에 취임
- 12월 24일 | 북한 올림픽위원회, 대한체육회장에게 모스크바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해 회담 개최(1980년 1월 18일) 제의
- 12월 26일 | 북한 올림픽위원회, 남북한 유일팀 구성제의에 관한 서한전달을 위해 12월 27일 12:00 판문점에 2명의 연락관을 파견한다고 통고
- 12월 27일 | 남북조절위 우리측,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에서 북한의 서한접수





**1980년대**

# 1980년

- 1월 11일 | 남북조절위 우리측, 북한에 서한 전달
- ① 북한의 제의는 성과 기대가 어려우며 남북 친선교환경기를 제의
  - ② 금년 서울 개최 국제경기에 북한의 참가를 환영
  - ③ 모스크바 올림픽 후 전반적 체육교류문제를 위한 회담을 제의
- 1월 11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1월 11일 18:00를 기해 직통전화 재개통 제의
- 1월 11일 | 북한 김일 부주석, 육군참모총장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남북 접촉 제의
- 1월 11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1월 11일 18:00부터 직통 전화 재개를 위해 신호를 보냈으나 남한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발표
- 1월 12일 | 남북조절위 우리측, 1월 11일 20:07에 직통전화신호가 와서 지정 통화자가 나올 것을 북한에 요구하자 일방적으로 중단했으며, 북한의 모종의 편지전달 통고가 있었던 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지를 명백히 하기를 요구
- 1월 12일 | 북한, 서신명의 통해 이종욱 및 김일 명의의 서신은 남조선 당국자,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에게 보내는 것임을 보도
- 1월 12일 | 북한 이종욱 총리, 남북총리회담 제의
- 대화가 다시 열린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폭넓은 정치협상회의와 함께 북과 남의 당국자 회담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고위당국자 회담도 성숙시켜 나갈 용의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입장에서부터 우리는 귀하와 직접 만나 격의 없는 의견을 나누지는 것을 제의함. 우리의 접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며 장소는 판문점이나 평양 또는 서울도 좋으며 제3국도 무방할 것임.
- 1월 15일 | 북한 김일 부주석, 해외인사 10명에게 통일촉진회담 제안
- 1월 18일 | 최규하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남북총리회담 적극 추진 의사 표명
- 1월 19일 | 북한 체육회, 남북체육인회담 개최(2월 1일) 제의
- 1월 22일 | 북한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윤보선, 함석헌 등 국내인사의 재판을 거론하며 남북대화의 방해책동이라고 비난
- 1월 22일 | 북한, 반한 해외교포 인사들에게 김일 명의로 통일을 위한 모임을 제의하는 편지 발송
- 1월 24일 | 신현확 총리,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제의
- 본인은 남북의 총리가 조속히 직접 만나게 되기를 바램. 본인은 남북의 총리가 서로 만나는 데 필요한 제반 절차를 준비하기 위하여 실무급 대표 접촉을 다음과 같이 가질 것을 제의  
실무대표단의 구성: 각각 차관급 수석대표를 포함, 3명의 실무대표와 수행원 약간명  
접촉장소: 판문점내의 '자유의 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

첫 접촉 일시: 1980년 2월 6일(수) 10시

- 1월 28일 | 북한 노동신문, 논평에서 민주인사 탄압은 대화독점을 위한 탄압이라고 비난
- 1월 30일 | 북한, 신현확 총리의 남북총리회담 제의 및 그 절차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수락
- 2월 4일 | 남북조절위 우리측, 대한민국 실무대표의 판문점 파견 발표
- 2월 5일 | 남북조절위 우리측, 대한민국 실무대표 명단 발표(수석대표 김영주 외 2인)
- 2월 5일 | 남북조절위 북한측, 실무 대표단 명단 발표(수석대표 현준극 외 2인)
- 2월 6일 |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제1차 실무대표 접촉  
<합의사항>
  - ① 1980년 2월 7일 10시를 기해 남북 직통전화 재개
  - ② 차후 실무대표자 접촉장소는 자유의 집과 판문각 교대 개최
- 2월 7일 | 남북 직통전화 재개통
- 2월 19일 |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제2차 실무대표 접촉  
<합의사항>
  - ① 회의는 매 대화시 협의를 통해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 결정
  - ② 합의사항은 각기 2통 작성 서명 후 1통씩 교환
  - ③ 기록·보도는 편리한 대로 각기 보도(합의시 공동보도)
  - ④ 일시는 실무대표 접촉 경과에 따라 협의 결정
  - ⑤ 시설·표식은 탁자 위에 쌍방 총리 명패만 비치
- 2월 20일 | 북한, '80 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 비난
- 3월 3일 | 한적 총재, 북적 손성필 위원장에게 지난 1월 22일 이후 실종된 제6, 7 해왕호 선원들의 조속한 귀환을 위해 협조 발송통지문 발표
- 3월 4일 |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제3차 실무대표 접촉
- 3월 18일 |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제4차 실무대표 접촉  
<합의사항>
  - ① 장소문제: 총리간 대화장소는 판문점으로 하고 '자유의 집'과 '판문각'에서 교대로 진행, 판문점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할 때는 쌍방 총리가 협의 결정
  - ② 절차문제: 배석 보좌인원은 각기 장·차관급 보좌관 2명, 차관보, 국장급 2명과 4명 내외의 실무요원으로 하고 쌍방의 지원 인원과 취재기자는 제한하지 않고 상호 편의에 따르며, 회담 참가 및 지원을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상대측에 들어가는 인원의 신변안전 문제는 주최측이 이를 보장한다는 각서를 쌍방 총리 이름으로 작성, 서명 후 교환하며,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는 인원에게 대하여 주최측이 모든 안내와 편의를 제공
- 3월 23일 | 북한 무장간첩 3명 한강입구 침투 중 사살
- 3월 25일 | 북한 무장선박 1척 포항 앞 바다 침투 중 격침

- 3월 27일 | 북한 무장공비 3명 강원도 금화지역 군사분계선 남방 600미터 침투
- 4월 1일 |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제 5차 실무대표 접촉
- 4월 17일 | 이호 한적 총재, 북한에 억류된 제 6, 7 해왕호 선원의 조속한 송환 요구
- 4월 18일 |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제 6차 실무대표 접촉
- 4월 22일 | 북적, 남북어부 송환요청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
- 5월 6일 |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제 7차 실무대표 접촉
- 5월 6일 | 북적, 한적에 어부 송환에 필요한 자료제시 요구
- 5월 9일 | 한적, 북적에 서한 전달 예고
- 5월 10일 | 한적, 남북어부명단 북적에 전달
- 5월 18~27일 | 광주민주화운동
- 5월 22일 |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제 8차 실무대표 접촉
- 6월 24일 |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제 9차 실무대표 접촉, 북한은 남한정세의 정상화 요구
- 8월 16일 | 최규하 대통령 하야
- 8월 20일 |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제 10차 실무대표 접촉
- 9월 1일 | 전두환 대통령 취임
- 9월 24일 |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북한 실무대표단, 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회담 중단 표명  
- 우리측은 남조선에서 통일에 역행하고 대화의 근본목적에 배치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지속되는 지금과 같은 형편에서는 북과 남의 총리 접촉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계속하는 것이 의의가 없다고 인정하면서 남조선에서 모든 것이 정상화될 때까지 당분간 접촉마당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
- 9월 26일 |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남한 실무대표단, 실무회담 재개 촉구 성명 발표
  - ① 총리회담 의제는 총리회담 후 쌍방 총리들이 직접 협의 결정
  - ② 첫 총리회담은 11월 둘째주 중 관문점 자유의 집·관문각 또는 서울·평양으로 하되, 북한 측이 희망하는 장소로 하고 첫 회담 개최 1개월 이내에 상대방측 지역에서 2차회담을 개최. 그리고 그 이후의 회담은 순서에 따라 윤번제
  - ③ 이상 새 제안의 토의를 위해 10월 7일 자유의 집에서 제11차 실무대표 회의를 개최
  - ④ 남북 직통전화 2회선의 중단없는 운용을 촉구
- 9월 28일 | 북한 김일성 주석, 아사히신문 대표단과의 대담에서 전두환 정권과의 대화거부  
- 남한에서 민주화된 정권이 등장하면 3자회담을 할 수도 있으나 “실무접촉을 하면 전두환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고, 전두환체제하고는 회담할 용의가 없다”고 단언
- 9월 30일 | 김일 북한 부주석·북한 최흥희 국제태권도연맹 총재, 통일관련 5개항 견해 발표

- ① 민족의 영구분열을 막고 하루빨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가장 절박한 민족 지상의 과업
- ② 나라의 통일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자주·평화통일·민족적 대단결의 3대 원칙에 따라 실현
- ③ 북과 남의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은 조국통일 3대 원칙에 완전히 부합되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구국 통일방안
- ④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거하여야 하며 조선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이 중지
- ⑤ 남조선 사회를 민주화하는 것은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

**10월 10일 | 북한 김일성 주석,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 보고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 제안**

-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함. 연방 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 동포 대표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는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전민족의 단결·합작·통일의 염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 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 이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하여야 할 것임.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사회제도와 행정조직들·각당·각과·각계각층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은 연방정부의 지도 밑에 전민족의 근본이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임. 연방국가의 국호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 통일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의 공통한 정치이념을 반영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블록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어야 함.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북과 남의 두 지역을 하나의 연방국가로 통일하는 조건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중립국가로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우리나라의 전영토와 전민족을 포괄하는 통일국가로서 전체 조선인민의 근본이익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우리 당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다음과 같이 시정 방침을 내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함.

- 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
- ②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나라의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

- ③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
- ④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과학·문화·교육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
- 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통신을 연결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
- ⑥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
- ⑦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연합군을 조직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
- ⑧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
- ⑨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 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며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
- ⑩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전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

11월 11일 | **북한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 창립 실현을 위한 예비회담 소집 제의**  
- 북과 남·해외의 각당·각과·각계각층을 망라하는 적당한 수의대표들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준비위원회와 같은 민족공동의 협의기구를 시급히 내올 것을 제의

12월 27일 | 「반공법」 폐지, 반공법의 핵심조항은 「국가보안법」이 흡수

# 1981년

1월 12일 | 전두환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남북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 제의 및 김일성 주석 서울초청 발표

- 본인은 오늘 지난날의 일들을 굳이 시비함이 없이 남북한 간의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고 동족간의 정쟁재발을 막는 데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며 또한 중단된 남북대화를 무조건 재개하여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데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번갈아 상호 방문할 것을 엄숙히 제의하는 바임. 본인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아무런 부담과 조건 없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초청하는 바임. 본인은 그가 서울에 체재하는 동안 일체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것이며, 서울과 다른 도시 및 농촌의 실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가 원하는 그 어느 장소라도 방문하는데 모든 협조를 제공할 것임. 본인은 또한 같은 조건으로 본인이 북한을 방문하도록 그가 초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두는 바임.

1월 12일 | 북한 조국전선 중앙위 제 67차 회의, 북조선 23개 정당·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민족통일 촉진대회 소집 제창

1월 14일 | 국토통일원 장관,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실현절차 협의를 위한 접촉 제의

1월 19일 | 북한, 김일 명의 성명에서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제의 거부

3월 14일 | 북한 김일성 주석, 일본사회당 대표와의 대담을 통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제의 거부

6월 5일 | 전두환 대통령, 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에서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 제의

- 만약 북한측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본인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본인을 북한으로 초청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 대신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다른 어떤 장소에서든지 직접 만나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하자는 것임. 판문점이나 제3국을 포함하여 만나는 장소의 선택은 북한 당국에 일임

6월 19일 | 조상호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장,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경기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할 것과 남북한 체육인회담 제의

- 1984년 제23회 올림픽대회에서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할 것과 가능하다면 1982년 제9회 아시아 경기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경기대회에도 단일팀으로 출전할 것을 북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정중히 제의

7월 4일 | 남북조절위 우리측, 북한에 남북공동성명 합의사항 이행 촉구

8월 6일 | 북한 정당·사회단체연합, 민족통일촉진대회 소집 제의

8월 12일 | 한적 총재, '8월 12일 제의' 10주년 성명을 통해 남북적십자회담 재개촉구

11월 16일 | 이광표 문공부 장관, 북한에 고고학 자료 및 유물교류 연구 제의



# 1982년

## 1월 22일 | 전두환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발표

-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은 남북한간에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여 민족 전체의 통일지지를 한데 모아 통일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따라 통일국가를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임. 통일헌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쌍방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 대표로 가칭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고 그 기구에서 민족·민주·자유·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헌법을 기초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임. 통일헌법 초안이 마련되면 쌍방은 남북한 전역에 걸쳐 민주방식에 의한 자유로운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통일헌법을 확정·공포하고 그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대망의 통일국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임. 통일조국의 정치이념과 국호, 대내외정책의 기본방향, 정부형태와 국회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과 시기 및 절차 등은 민족통일협의회의가 구성되어 쌍방이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토의, 합의할 문제들임. 우리가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은 민족통일협의회의에서 제시될 것임.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의 실천조치로서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함.

- ① 쌍방은 장차 통일국가가 수립될 때까지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관계를 유지
- ② 쌍방은 쌍방 간 분쟁문제 해결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무력 및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을 완전히 지양하고 모든 문제를 상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
- ③ 쌍방은 상호관계에 있어서 현존하는 상이한 정치질서와 사회제도를 상호 인정하며 서로 상대방의 내부분제에 일체 간섭하지 아니함.
- ④ 쌍방은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며 민족적 신뢰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사회적 개방을 추진해 나가기로 함. 쌍방은 이산가족의 인도적 재회문제를 포함해서 남북간의 자유로운 인적 왕래와 다각적인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교역·교통·우편·통신·체육·학술·교육·문화·보도·보건·기술·환경보존 등 제분야에서 협력하며 이를 통하여 민족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
- ⑤ 쌍방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상·이념·제도의 차이에 구애됨이 없이 전세계 모든 나라들과 각기 체결한 모든 쌍무적 및 다자간 국제조약과 협정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
- ⑥ 쌍방은 각료급 전권대표를 임명하여 각기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를 설치. 쌍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연락대표부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자기 측 관할영역에 주재하는 상대편 연락대표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편의와 협조를 제공

## 1월 26일 | 북한 김일 조평통 위원장,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거부

- 이번엔 남조선의 집권자가 내놓았다고 하는 이른바 '통일방안'에 대하여서도 그것이 진실로

통일을 바라는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에 대하여서도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옹당한 의의를 부여할 수도 있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방안'은 어떤 긍정적인 의의를  
 부여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남북의 기본관계에 관한 협정'은 남북의 장벽을 더 높이  
 쌓고 남북 분열의 현실을 법적으로 고정화하여 영원히 '두 개 국가', '두 개 민족'으로 갈라  
 져 살지는 것임. 이러한 방식은 물론 그들의 창안품이 아니라 두 개 국가로의 존재를 합법  
 화한 독일 방식을 그대로 따온 것임. 진정으로 통일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려고 한다면 정치  
 학의 초보적인 도식을 옮겨놓거나 남의 본을 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로부터, 즉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통일의 기본장애를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함. 그러자면 우  
 선 통일의 첫 단계 조치로써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켜야 하고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며 반공대결정책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임.

**2월 1일 |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 20개 시범실천사업 제의**

- ① 서울-평양간 도로연결·개통 ② 이산가족간 우편교류·상봉 실현 ③ 설악산·금강산 자유관  
 광공동지역 설정 ④ 교포의 조국방문 공동주관, 판문점 통과 자유방문 ⑤ 인천·진남포항 상  
 호 시범 개방 ⑥ 모락방송 중지 및 상대방 정규방송 자유청취 허용 ⑦ 86아시아게임·88올림  
 픽 북한선수단 판문점 통과 참가 ⑧ 외국인 판문점 통과 자유왕래 보장 ⑨ 공동어로구역 설  
 정 ⑩ 각계 인사간의 상호 친선방문 실시 ⑪ 쌍방 기자 자유취재활동 보장 ⑫ 민족사의 공동  
 연구 추진 ⑬ 체육친선교환경기 개최,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 참가 ⑭ 일용 생산품 교역 실시  
 ⑮ 자연자원 공동개발·공동 이용 ⑯ 기술자 교류, 상품전시회 교환 개최 ⑰ 비무장지대 공  
 동경기장 시설 마련·이용 ⑱ 비무장지대 자연생태계 공동학술조사 ⑲ 비무장지대 군사시설  
 완전철거 ⑳ 남북간 군사통제 조치 협의, 군사책임자간의 직통전화 설치 운용

**2월 10일 | 북한 조평통, 남북한·해외 100인 정치인 연합회의 소집 제의**

- 남조선의 현 정치정세하에서 우리가 최소한 택할 수 있는 진정한 통일협상의 길은 민족적  
 양심을 지닌 북과 남·해외의 이름 있는 정치인들을 망라하는 연합회의를 마련하는 데 있  
 음. 연합회의에는 과거 여하에 관계없이 통일구국의 뜻을 둔 개별적 정치인들이 참가하되  
 그 규모는 해외인사들을 포함하여 북과 남에서 각각 50명, 도합 100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임. 이 100인 연합회의는 북과 남 사이에 쌍무회담이 아니라 모든 인사들이 거주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남북을 초월하여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다목적 원탁회담으로 될 것임. 이  
 연합회의에서는 이미 세상에 잘 알려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포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모든 통일방안들이 기탄없이 다 토의되어야 할 것임. 연합회의에서는 또한 통일방  
 안과 결부하여 북과 남의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들도 협의되어야 할 것임. 우  
 리는 연합회의의 성격과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북과 남·해외의 이름 있는 정치인들로서  
 본 성명 부록에 밝힌 인사들에게 100인 연합회의에 참가할 것을 정중히 제의함.

**2월 25일 |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 남북한고위대표회담 제의**

- ① 남북한은 3월중에 서울이나 평양 또는 판문점에서 '남북한고위대표회담'을 개최
- ② 남북한고위대표회담에서는 통일헌법을 마련할 민족통일협의회 구성과 남북한 관계의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개최하는 문제, 북한측이 1982년

2월 10일 제의한 회의에 관한 문제, 남북한의 교류·협력, 사회개방과 긴장완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등을 협의

- ③ 남북한 고위대표회담에 참석한 쌍방 대표단은 각기 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 9명으로 구성

3월 26일 |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 남북한고위대표회담 수락 촉구

4월 14일 | 북한 김일성 주석, 시정연설을 통해 자주노선의 정당성 강조

-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근본원칙은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 자신이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임. 조국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조선민족의 내부문제이며 우리 민족의 자결권에 속하는 문제임. 조선인민은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민족의 내부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 외부세력은 조선의 통일문제에 간섭할 아무런 이유와 구실도 없음. 우리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강점과 간섭책동을 반대하고 자주적 입장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마주 앉아 조국통일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협상할 것임.

7월 4일 | 남북조절위 우리측 공동위원장 대리, 공동성명발표 10주년 성명 발표

8월 6일 | 한적 총재, 남북 마산호 선박 및 선원의 송환 촉구

8월 12일 | 한적 총재, 8월 12일 제의 11주년 성명발표

8월 15일 | 전두환 대통령, 8.15경축사를 통해 북한을 포함한 공산권 거주동포의 자유롭고 안전한 조국 방문 보장 천명

# 1983년

## 1월 18일 | 전두환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의 당면 해결과제 제시

- 우리는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이 실현되면 거기에서 남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며,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과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함으로써 통일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제무대에서 남북한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민족역량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강구하고, 나아가서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여건을 조성하는데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음.

## 1월 18일 | 북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제의

- 남조선의 정당·사회단체들에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남조선에서 미국을 철거시키기 위한 거족적 애국운동을 힘있게 호소하면서 이 절박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의함. 이 연석회의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적절한 수와 비율로 북과 남에 있는 정당·사회단체 대표들과 해외교포단체 대표를 그리고 해내외의 개별적 인사들을 참가시킬 수 있을 것임. 북과 남의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의 성과적 소집을 위하여 우선 북과 남의 정당 대표들로 구성되는 예비회담을 가지되 여기에는 북에서 조선노동당·조선사회민주당·천도교청우당, 남에서 민주정의당·민주한국당·한국국민당의 실무급 대표들이 각각 1명씩 참가하는 것이 좋을 것임.

## 2월 1일 |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 개최 제의

- ① 구성: 쌍방 당국 대표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
- ② 합의내용: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 실현 문제,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남북한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
- ③ 예비회담: 각국 당국 대표 2명, 정당 대표 3명으로 구성하여 1983년 3월 중 판문점 또는 서울·평양

## 3월 2일 |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의장,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 제의 수락 촉구

## 4월 1일 |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 제의 수락 촉구

## 6월 1일 | 전두환 대통령, 서울 IPU총회 북한대표 참석 제의

## 6월 30일 | KBS 방송국, 이산가족찾기 생방송

## 7월 4일 | 남북조절위 우리측 공동위원장 대리, 7·4 공동성명 발표 11주년 성명 발표

## 7월 6일 | 한적 총재,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촉구

## 7월 24일 | 북적 중앙위,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제의 거부

## 8월 12일 | 한적 총재, 남북적십자회담 호응 촉구

9월 9일 | 북한 김일성 주석, 9·9절 경축연설에서 최고민족연방회의 의장·위원장의 남북 윤번제 운영 제의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그 상설기관인 연방상설위원회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할 것을 예견하고 있음. 연방국가의 통일 정부인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는 북과 남의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을 각각 선출하여 그들이 윤번제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10월 7일 | 미국 정부, 미국 외교관이 제3국에서 외교활동 시 북한 관리들과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관해 비공식 대화 및 제한 접촉 허용

10월 9일 | 미얀마 양곤 아웅산 묘소 폭파암살사건

- 전두환 대통령의 아웅산 묘소 참배행사를 위해 미리 대기중이던 서석준 부총리와 정부요인들, 기자 등 17명이 북한의 폭발물 테러로 사망, 13명 중경상

## 1월 10일 | 북한, 서울 당국에 보내는 연합회의 편지를 통해 남북한 및 미국 3자회담 제의

- 우리와 미국 사이의 이 회담에 우리나라에 조성된 긴장상태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다른 일방인 서울 당국도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함. 우리는 3자회담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문제가 모든 측면에서 충분히 담보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 3자회담에서는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조선 정전협정의 제약 쌍방인 우리와 미국 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를 토의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북과 남 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문제를 토의할 수 있을 것임. 우리와 미국 사이의 평화협정에는 주로 미군과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장비들을 철수시키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조건에 관한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북과 남 사이의 불가침선언에는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행사를 하지 말며 군비를 축소할 데 대한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 3자회담에서는 그밖에 미국과 서울 당국이 제기하는 문제들도 토의 될 수 있을 것임. 3자회담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 긴장완화의 담보가 주어지고 조국통일의 전제가 마련된 다음 북과 남 사이에 대화를 열고 통일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함.

## 1월 10일 | 북한, 미국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남북한 및 미국 3자회담 제의

- 조선에서의 긴장상태 격화에 책임이 있는 다른 일방인 남조선 당국자들과 함께 우리와 접촉하여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우리는 이러한 견지에서 1984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와 미국 사이의 회담에 남조선 당국자들을 참가시키는 3자회담을 진행할 것을 정식으로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음. 3자회담을 진행할 장소로서는 판문점도 좋고 또 호상 편리하다고 인정하는 임의의 다른 곳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임.

## 1월 10일 | 국토통일원 장관, 남북한 직접 대화 촉구

## 1월 25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허담 보고를 통해 3자회담 촉구

## 2월 10일 | 진의종 국무총리, 북한 강성산 총리의 3자회담 제의 거부

- 나는 귀측이 지난 1월 11에 발송한 편지를 받았음.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측은 이른바 3자회담과 관련한 귀측의 조치에 대해서 같은 날 우리 측의 명백한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우리 측이 주장해 온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과 '각료급회담' 등 일련의 제의들은 우리 민족이 당면한 현실문제와 장래문제를 상호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치들임. 우리는 남북한 당사자 간의 대화를 순조롭게 진행시켜 가면서 한반도 분단과 한국동란에 직접·간접으로 책임이 있는 관계국들이 함께 참가하는 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우리는 이상의 모든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귀측이 올바른 자세로 남북한 간의 직접 대화에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함.

3월 7일 | 북한 강성산 총리, 진의중 총리 서신을 통해 3자회담의 합리성 강조

3월 10일 | 국무총리, 남북한 직접 대화 호응 거듭 촉구

3월 30일 | 북한 김유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남북체육 회담 제의

- 이번 제23차 세계올림픽대회와 그 후 계속 있게 될 아시아 및 세계선수권대회들에 북과 남이 유일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출전하지는 것을 귀측에 제의하는 바임. 우리는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올림픽위원회의 부책임자급을 단장으로 하는 쌍방 체육대표단이 판문점에서 회담을 가질 것을 희망

4월 2일 | 정주영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1984년 로스엔젤레스올림픽 등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 및 남북체육교류 실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 수락

4월 6일 | 북한, 남북체육회담 대표단 구성 및 개최일자 제의에 동의

4월 7일 | 대한올림픽위원회, 남북체육회담 대표명단 발표(수석대표 김종규 외 4인)

4월 9일 | LA올림픽 단일팀 구성 관련 제1차 남북체육회담

- 남측: 북한 당국이 자행한 버마 아웅산테러 사건과 최은희·신상옥 납치사건은 남북한간의 긴장과 대결을 격화시키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지적.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의 체육인들이 마음놓고 접촉하고 협력할 수 없음을 지적. 회담 의제로 첫째, 1984년 제23회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를 비롯 앞으로 있을 국제체육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는 문제 둘째, 남북체육교류를 실시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국제체육경기대회에 참가할 단일팀 구성과 관련하여 ① 선수선발 ② 선수 및 임원단 구성 ③ 선수 훈련 ④ 선수단 경비 ⑤ 단가 ⑥ 단가 ⑦ 선수단 호칭 문제 등 7개항을 제안
- 북측: 유일팀 구성을 논하는 이 마당에서 논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버마사건과 같은 정치 문제를 개입시키는 것은 체육 문제와 맞지 않다고 주장. 회의 의제로 ① 제23회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와 그 이후에 진행되는 국제체육경기대회들에 북과 남이 유일팀으로 출전하는 문제 ② 남과 북이 체육분야에서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는 문제 등 2개항을 제안

4월 30일 | LA올림픽 단일팀 구성 관련 제2차 남북체육회담

- 남측: 제1차 회담에서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퇴장한데 유감 표시, 한국측안을 의제로 채택하는데 동의할 것 요구
- 북측: 제1차 회담이 무산된 책임을 한국측에 전가하고, 버마 아웅산테러사건에 대해서도 자기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함.

5월 25일 | LA올림픽 단일팀 구성 관련 제3차 남북체육회담

- 북측은 체육회담에서 남측이 정치적 발언으로 난관을 조성해 제23회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 유일팀 출전을 방해한 데 대해 인정하고 사죄할 것, 앞으로 회담에 정치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고 또한 정치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보장요구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의제 토의 거부. 제4차 회담일자를 결정하지는 남측의 제의에 대해 전화통지문을 통해 연락하자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회담 중단

**8월 20일 | 전두환 대통령, 하계 기자회견에서 남북한 교역·경제협력 실시 제의**

- 남북한은 같은 민족으로서 화합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 남북간의 교역과 경제협력을 실시 할 용의가 있음. 북한 측이 동의한다면 북한 동포들의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술과 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음.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에 단일팀이 출전할 수 있도록 남북체육회담이 개최되길 바람.

**9월 8일 | 북적, 대남수재 물자 제공 제의**

- ①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의 수해지역 이재민들에게 쌀 5만 석, 천 50만 미터, 시멘트 10만 톤, 기타 의약품을 구호물자로 보내기로 함.
- ② 구호물자를 남조선 이재민들에게 시급히 전달하기 위하여 남조선 적십자사가 우리의 인도주의적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
- ③ 남조선 적십자측이 우리의 동포애적 결정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해당한 구호물자를 우리의 자동차와 배로 직접 실어갈 것

**9월 14일 | 한적 총재, 수재물자 제공 제의 수락 및 실무접촉 제의**

**9월 14일 | 북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제의 수락, 5명의 대표를 9월 18일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에 파견 하겠다고 발표**

**9월 15일 | 한적 총재,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대표명단 발표(수석대표 이영덕 외 4인)**

**9월 17일 | 북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대표명단 발표(대표단장 한응식 외 4인)**

**9월 18일 | 수해물자 인도·인수관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 북한측이 수재물자를 수재민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고집하다가 일방적으로 퇴장함으로써 유산

**9월 18일 | 한적 총재, 9월중 수재물자 완전인도 촉구**

**9월 18일 | 한적 실무접촉 수석대표, 9월 중 수재물자 제공의사가 있다면 72시간 전에 물자운반계획을 연락할 것을 촉구**

**9월 19일 | 북한, 수재물자를 판문점, 인천항, 북평항을 통해 수송할 것임을 통보**

**9월 29일 | 한적, 북적 수재물자 전달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각서 전달**

**9월 29일~10월 4일 | 판문점, 인천항, 북평항에서 북적 수재물자 인도·인수(쌀 5만석, 천 50만m, 시멘트 10만톤, 의약품 14종 등)**

**10월 4일 | 한적 총재,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10월 4일 |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 위원장, 제4차 남북체육회담 개최 촉구**

**10월 6일 | 한적 총재, 남북 이산가족찾기 문제 협의를 위한 예비 접촉 제의**



**10월 12일 | 신병현 부총리, 남북경제회담 개최 제의**

- 필요하다면 남북한간의 교역과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상설기구로서 쌍방 당국과 정계 대표들로 구성되는 남북한 경제협력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임. 우리는 이상과 같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정부의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남북한 경제당국 및 민간경제 대표들이 함께 참가하는 남북경제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바임. 우리는 남북한간의 이러한 회담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그 개최 일시와 장소의 결정을 귀측에 일임하는 바임.

**10월 13일 | 경제 4단체장, 남북경제회담 수락 촉구**

**10월 16일 | 북한 김환 부총리, 남북경제회담 개최(11월 15일) 제의 수락**

- 우리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북과 남의 합작과 단결로 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이며 여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면 적십자회담이나 체육회담도 하자는 것이며 경제회담도 하자는 것임. 우리 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입장에서 출발하여 귀측과 경제회담을 가지기로 결정하였음. 나는 이 결정을 귀하에게 알리면서 첫 경제회담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의함.

- ① 회담 대표단은 정무원 부부장급을 단장으로 하고 모두 5명으로 구성
- ② 회담 의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
- ③ 회담 장소는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 ④ 회담은 1984년 11월 15일 오전 10시
- ⑤ 회담 준비와 관련된 기타 사항들은 현재 열려 있는 북남 직통전화를 이용하여 처리

**10월 29일 | 북한, 남북적십자 본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 접촉 수락(11월 20일 10:00, 판문점)**

**11월 2일 | 신병현 부총리, 경제회담 대표를 7명으로 구성하자고 제의**

**11월 10일 | 북한 정무원 부총리, 경제회담 대표를 7명으로 하는데 동의**

**11월 12일 | 신병현 부총리, 경제회담 대표 명단발표(수석대표 김기환 외 6인)**

**11월 13일 | 북한, 경제회담 대표단 명단발표(단장 리성록 외 7인)**

**11월 14일 | 한적 총재, 남북적십자 본회담 예비 접촉 대표명단 발표(수석대표 조철화 외 2인)**

**11월 15일 | 제1차 남북경제회담**

- 남측: 남북간에 물자교역을 활발히 진전시키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본 및 기술의 합작투자 등 경제협력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회담의제로 남북간의 교역을 실시하는 문제,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실시하는 문제 제시. 남북간의 물자교역 실시와 관련하여 교역 품목, 교역량, 거래방식, 결제통화 등 10개항을 제안, 이를 토대로 남북 관계당국간에 교역 협정과 세부 약정을 체결할 것, 남북간의 교역 및 경제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쌍방의 관계당국 및 경제단체 인사들로 구성되는 가칭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설치 제의
- 북측: 회담의제로 북과 남사이의 경제분야에서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데 대하여로 할 것을 주장. 교역품목, 거래방식, 운송 문제 등 물자교류와 경제협력 실시방안을 제시. 의제 문제 토의에 있어 북과 남사이의 경제분야에서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 데 대하여로 할 것을 고집

- 남이 절충안으로 남북간에 물자교역과 경제협력을 실시하는 문제 제시, 북측도 합작을 협력으로 수정하는 등 남측의 제의에 접근. 그러나 북측의 유보로 의제에 대한 합의 못함.

- 11월 16일 | 북한, 남북적십자 본회담 예비 접촉 대표명단 발표(대표단장 서성철 외 2인)
- 11월 16일 | 이진희 문공부 장관, 남북한 문화교류 추진 제의
- 11월 19일 | 대한올림픽위원장, 제4차 남북체육회담(12월 중)재개 촉구
- 11월 20일 | 남북적십자 본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 접촉
- 11월 22일 | 한적, 제8차 본회담일정(1985년 1월 22~25일) 제의
- 11월 23일 | 소련인 망명관련 관문점 총격사건 발생
- 11월 27일 | 북한, 제2차 남북경제회담 연기
- 11월 28일 | 남북경제회담 수석대표, 제2차 남북경제회담 일자 수정(1985년 1월 17일) 제의
- 12월 11일 | 북한 외교부장, 서한을 통해 미국 국무장관에게 북경에서 3자회담 개최 제의
- 12월 14일 | 북한, 제2차 남북경제회담 일자 수정 제의에 동의
- 12월 14일 | 북한,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일정 제의에 동의
- 12월 21일 | 남북경제회담 대표용 직통전화 시험 통화 실시

# 1985년

- 1월 1일 | 북한 김일성 주석, 신년사에서 북남대화의 진전에 따라서 고위급정치회담 실현할 수 있다고 발표
- 우리는 우리 공화국과 미국, 남조선 사이의 3자회담을 실현하여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꿈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새 전쟁의 위험을 없애야 하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여야 함. 우리는 또한 3자회담을 실현하여 북과 남 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북과 남 사이의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치상태를 끝장내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여야 함. 북과 남 사이의 대화가 인민들의 기대와 조국통일의 이념에 맞게 잘 진행된다면 그것은 점차 보다 높은 급의 회담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북과 남의 고위급 정치회담도 실현될 수 있을 것임.
- 1월 7일 | 한적,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체류 일정 관련 연락관 접촉(1월 10일 10:00, 판문점) 제의
- 1월 9일 | 전두환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남북한 당국최고책임자 회담, 남북한 상주연락대표부 설치 제의
- 1월 9일 | 북적 중앙위원장, '85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연기
- 1월 9일 | 북한 부총리, '85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제2차 남북경제회담의 연기를 통보하고 남북 부총리 접촉 제의
- 1월 10일 | 신병현 부총리, 합의된 날짜(1월 17일)에 제2차 남북경제회담 개최할 것을 촉구하고 부총리 접촉 제의 거부
- 1월 10일 | 한적 총재, 합의된 날짜(1월 23일)에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개최할 것을 촉구
- 1월 10일 | 남북경제회담 수석대표, 제2차 남북경제회담 유산관련 논평
- 1월 23일 | 한적 총재, 북한에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호응 촉구
- 2월 1일 | 사마란치 IOC 위원장, IOC주재 하 남북 올림픽위원회 회담개최(9월 11~12일, 로잔느) 제의
- 3월 13일 | 대한올림픽위원회, IOC위원장의 로잔느 체육회담 제의에 동의
- 3월 25일 | 남북경제회담 수석대표, 제2차 남북경제회담(4월 18일) 제의
- 3월 25일 | 한적 총재,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5월 14~17일)개최 제의
- 4월 4일 | 북한, 제2차 남북경제회담일자를 수정(5월 17일) 제의
- 남북경제회담 수석대표, 북한의 제2차 남북경제회담 수정 제의에 동의
- 4월 4일 | 북적,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일자 수정(5월 28일) 제의
- 한적 총재, 북적의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일자 수정 제의에 동의
- 4월 19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4차 회의 개최, 상호불가침 공동선언 등을 의제로 하는 남북국회회담의

개최와 5월초 예비회담을 제안

- 4월 30일 | 북한 김봉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사무장,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제외에 대한 긍정적인 회담을 촉구
- 5월 8일 | 이진우 국회사무총장, 북한의 국회회담 제의관련, 국회가 개원되면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보내겠다고 통보
- 5월 10일 | 남북경제회담 차상필 대표를 임인택 상공부 제2차관보로 교체
- 5월 13일 | 한적 총재,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관련하여 연락관접촉(5월 15일 14:00, 판문점 중감위원회실) 제의
- 5월 14일 | 북적, 연락관접촉을 5월 20일경 가질 것과 구체적인 접촉시일 추후연락 통보
- 5월 16일 | 북한, 남북경제회담 백준혁 대표를 한영읍(국제무역촉진위원회 상무위원)으로 교체
- 5월 17일 | 제2차 남북경제회담
  - 남측: ① 남북간 교역과 경제협력을 실시하는 문제를 남북경제회담의 의제로 할 것 ② 철광석·무연탄·명태 등 쌍방간에 의견이 합치된 품목에 대한 교역 우선 실시 ③ 북측의 무연탄 30만 톤 즉각 구입 ④ 경의선 철도의 연내 연결을 위한 철도 실무자간 접촉 등 제안
  - 북측: 부총리급의 위원장 및 장관급의 부위원장 각 1명, 장관 또는 차관급 위원 7명으로 구성하는 남북경제협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제안
- 5월 18일 | 내무부 장관,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참가 북한대표단의 신변안전 보장성명 발표
- 5월 18일 | 한적 총재,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관련, 쌍방연락관 접촉(5월 20일) 제의
- 5월 18일 | 한적,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대표명단 발표(수석대표 이영덕 외 6인)
- 5월 20일 | 북적,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관련 실무대표 접촉(5월 20일) 제의에 동의
- 5월 20일 |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관련 연락관 접촉
- 5월 22일 | 북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남북국회회담 제의에 대한 조속한 회담 촉구
- 5월 24일 | 북적,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북한대표단 명단 발표(단장 이종률, 부단장 서성철 외 5인)
- 5월 27일 | 북적 대표단, 판문점 경유해 서울 방문
- 5월 27~30일 |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
  - 차기 회담 8월 26일~29일 평양 개최 합의, 이산가족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실시
- 6월 1일 | 국회의장, 남북국회회담 예비 접촉 제의(7월 중), 쌍방 국회의원 각5명으로 대표단 구성
- 6월 5일 | 전두환 대통령,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에 북한측의 참가를 희망
- 6월 9일 | 북한 김일성 주석, 일본 세카이지 편집국장과의 회견에서 남북한과 미국의 3자회담 개최 촉구
- 6월 14일 | 북한, 남북국회회담 예비 접촉 일자(7월 9일) 제의
- 6월 20일 | 제3차 남북경제회담

- 남북간에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추진과 부총리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협조)기구설치에 관한 합의서> 채택, 제4차 회담을 9월 18일로 합의
- 6월 28일 | 국회의장, 제1차 남북국회회담 예비 접촉 일자(7월 23일) 수정 제의
- 7월 5일 | 북한, 남북국회회담 예비 접촉 일자 수정 제의(7월 23일)에 동의
- 7월 6일 | 북한, IOC주재하 로잔느 남북체육회담 수락
- 7월 15일 | 제1차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관련 제1차 실무대표 접촉
  -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9월중 실시 원칙적 합의
- 7월 18일 | 국회의장, 남북국회회담 예비 접촉 대표단 명단 발표(수석대표 권정달 외 4인)
- 7월 19일 | 제1차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관련 제2차 실무대표 접촉
  - 남측: 고향방문단의 자기 고향 직접 방문, 예술단의 공연실황 중계 및 옥외선전문 부착은 불필요하며 동시 교환방문할 것 등 제안
  - 북측: 고향방문단의 방문지를 서울과 평양에 국한, 예술단의 공연실황 중계 및 옥외선전문을 부착하고 교환방문할 것 등 제안
- 7월 19일 | 북한, 남북국회회담 예비 접촉 관련 북한 대표단 명단 발표(단장 전금철, 부단장 주창준 외 3인)
- 7월 23일 | 남북국회회담 제1차 예비 접촉
  - <합의사항>
  - ① 회담 형식은 쌍방 국회의 대표회담, 대표단 규모는 각각 11명으로 구성
  - ② 본회담 장소는 서울·평양 교대로 개최
  - ③ 제1차 본회담 개최일자는 예비접촉이 끝나는 때로부터 1개월 이내
- 7월 24일 | IOC, 로잔느에서 남북체육회담 연내 개최 발표
- 7월 25일 | 대한올림픽위원장, 남북간의 직접적인 체육회담에 북한의 호응 재촉구
- 7월 29일 | 제429차 군사정전위원회, 북측은 ① 군사정전위 본부구역내의 군사시설물 및 초소 파괴, 중무기·자동무기 제거 ② 군사정전위 본부구역내의 경비인원을 각각 30명으로 축소, 공동경비구역도 쌍방 10명 이내로 제한 ③ 군사정전위 본부구역내 경비인원의 휴대무기는 권총으로 제한, 공동경비구역내에서 무기휴대 금지 등 군축 제안
- 7월 30일 | 북한 정준기 부총리, 88서울올림픽 서울·평양공동주최 및 남북한 유일팀 출전 주장
  - 우리는 제24회 올림픽대회를 ‘조선올림픽대회’ 또는 ‘조선 서울·평양올림픽대회’라는 명칭으로 경기의 절반을 평양에서, 나머지 절반을 서울에서 치르고 남북 유일팀을 결성하여 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7월 31일 | IOC, 남북쌍방에 로잔느 체육회담 일자(1985년 10월 8~9일)를 통보
- 8월 2일 | 체육부 장관, 북한의 88올림픽 남북한 공동주최 제의에 대한 반박성명 발표
- 8월 2일 | 유엔 제40차 총회에 남북한 대표 동시초청 발표

- 8월 8일 | 이원경 외무부 장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한반도 문제해결의 요체이며, 한국의 단독가입이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 8월 9일 | 유엔주재 미국대사, 남한의 유엔 가입 지지 발언  
- 소련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의 유엔가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비건설적인 행위가 될 것임. 미국은 소련에 대해 계속해서 한국의 유엔가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음.
- 8월 15일 | 박동진 통일원 장관, 통일을 향한 중간과정으로 남북이 각각 상호 내정을 간섭하지 않고 당분간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제도를 보장하는 조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
- 8월 15일 | 전두환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실천적 조치 촉구  
-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한 관계의 확고한 기초는 하루라도 빨리 마련돼야 하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약속하고 그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교류와 협력의 원칙을 합의함으로써 튼튼하게 마련될 수 있을 것임.
- 8월 22일 | 제1차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관련 제3차 실무대표 접촉  
-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에 관한 합의서〉 채택
- 8월 26-29일 |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  
- 남북 양측은 본회담 의제 5개항의 사업추진에 관한 기본방안(합의서안)을 각각 제시  
- 남측: ① 주소 및 생사 확인은 이산가족찾기 의뢰서와 회보의 교환방법, 자유왕래 과정에서 알아내는 방법으로 하고 ② 방문과 상봉은 관문점이나 기타의 면회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면회소 설치 운영은 남북적십자 관문점 공동사업소가 관할 ③ 서신거래 업무도 관문점 공동사업소가 담당할 것.  
- 북측: ① 이산가족과 친척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에 가서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② 이산가족과 친척들이 상대측 집을 직접 방문하거나 임의 지역에서 자유롭게 상봉하도록 하며 ③ 이산가족들이 함께 살다가 헤어졌거나 함께 살지 않았더라도 현재 모여살기를 원할 경우 재결합시키는 것과 ④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상대측에 가서 성묘, 유품처리, 유골을 이전하는 문제 등의 사항들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문제를 1986년 9월까지 매듭지을 것  
- 그러나 8월 27일 평양 모란봉경기장 집단체조 관람 중 한적 대표팀이 이를 정치전선이라는 이유로 퇴장한 데 대해 북적측이 명백한 사과를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되어 평양 본회담도 중도 폐막
- 9월 6일 | 내무부 장관, 북한 예술공연단 사전답사인원(5명)에 대해 신변안전보장
- 9월 10-12일 | 남북공연장 사전답사반(적십자인원2, 공연기술원3), 상대측의 공연장을 사전 답사
- 9월 12일 | 내무부 장관, 북한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 공연단(151명)에 대해 신변안전 보장
- 9월 18일 | 제4차 남북경제회담  
- 남측은 '경제교류·협력 실시에 관한 합의서(안)' 제시, 북측은 '경제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

(초안) 제시. 합의서의 명칭 문제, 교류대상 품목 등 쌍방이 합의서 초안 중 의견조정이 필요한 9개항에 대한 대체 토의 뒤 합의서의 문안 조정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합의

9월 20~23일 |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서울·평양 동시상호방문 실시(65가족 92명)**

- 고향방문단 50명, 예술공연단 50명, 취재기자 30명, 취재기자 30명, 지원인원 20명 등 151명이 3박4일간 서울과 평양을 동시방문하여 친척들을 만나고, 두차례에 걸쳐 북측의 평양 예술단은 서울의 국립중앙극장에서, 남측의 서울예술단은 평양의 평양대극장에서 각각 공연

9월 25일 | **남북국회회담 제2차 예비 접촉**

- 남측: 통일헌법 기초를 위한 민족통일협의회 기구 구성을 의제로 할 것  
- 북측: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에 대하여와 통일헌법 제정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에 대하여  
- 본회담 수석대표의 격, 제1차 본회담 개최 장소 등을 중점 논의

10월 2일 | **대한올림픽위원회, 로잔느 남북체육회담 대표단 발표(수석대표 김종하, 차석대표 장충식 외 4인)**

10월 3일 | **북한 외교부, UN 남북 동시가입과 남한 단독가입 반대성명 발표**

10월 6일 | **국제육상연맹, 1987년 서울에서 열릴 월드컵 마라톤대회 기간 중 남북한을 관통하는 역전경주대회 개최 제의**

10월 9일 | **북한 남북국회회담 예비 접촉 단장, 제3차 예비 접촉(10월 16일, 통일각) 제의**

10월 9~10일 | **서울올림픽관련 IOC 중재 제1차 남북체육회담(스위스), 제2차 회담 1986년 1월 8~9일 개최 합의**

10월 12일 | **권정달 남북국회회담 예비 접촉 수석대표, 제3차 예비 접촉 일자는 차후적절한 시기에 연락 하겠다고 통보**

10월 18일 | **북한 박성철 부주석,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한 UN 동시가입 반대**

- 조선이 유엔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최소한 북남연방제라도 실현하고 단일국호 밑에 들어가야 함.

10월 22일 | **노신영 국무총리, 유엔총회 연설에서 평화정책 6개항 제안**

- ①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 무력 불사용
- ② 남북한 직접 대화 및 최고당국자 회담
- ③ 문호개방 및 88올림픽 참가자 안전보장
- ④ 남북한 유엔가입
- ⑤ 미·소·중·일 등 4강과 남북한간의 상호 관계정상화
- ⑥ 개도국과의 남남협력 강화 등

10월 24일 | **이원경 외무부 장관, 유엔 창설 40주년 기념만찬 연설에서 유엔 단독가입 주장**

- 한국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반대하지 않고 있으나 북한은 유엔가입이 남북한 분단을 영구화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으므로 한국 단독으로라도 유엔에 가입,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협력을 제공하기를 희망함.

- 10월 25일 | 북한 남북국회회담 예비 접촉 단장, 제3차 예비 접촉 일자(11월 1일) 제의
- 10월 30일 | 권정달 남북국회회담 예비 접촉 수석대표, 제3차 예비 접촉 일자는 정기국회(9월 20일~12월 18일) 후에 연락하겠다고 통보
- 11월 5일 | 북적 위원장, 제10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대표단 일행의 교통수단으로 항공기 이용 제의
- 11월 7일 | 한적 총재, 북한의 회담대표단 항공기 이용제의에 대해 관례대로 하자는 입장 전달
- 11월 15일 | 북적 위원장, 제10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일자 수정(12월 3일) 통보
- 11월 16일 | 한적 총재, 북적의 제10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일자 수정 제의(12월 3일)에 동의
- 11월 18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남북국회회담 제3차 예비 접촉의 조속개최 촉구
- 11월 20일 | 제5차 남북경제회담  
- 합의서의 명칭문제, 사업추진 원칙의 표기문제, 교류대상 품목 등 3개 항에 대한 대체 토의
- 11월 25일 | 제10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관련 제1차 연락관 접촉
- 11월 28일 | 제10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관련 제2차 연락관 접촉  
- 남측: '의제 5개항 관련 토의안건 제시 및 구정 고향방문단 교환'을 제의  
- 북측: '자유왕래에 관한 합의서안을 우선 채택하자'고 주장
- 11월 28일 | 이재형 국회의장, 북한의 제3차 국회회담 예비 접촉 개최 측구에 회신
- 12월 2~5일 | 제10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 12월 20일 | 권정달 남북국회회담 예비 접촉 수석대표, 제3차 국회회담 예비 접촉 일자(1986년 2월 18일) 통보
- 12월 24일 | 북한, 제3차 국회회담 예비 접촉 일자에 동의
- 12월 27일 | 북한 김일성 주석, 1988년 제24회 올림픽대회 남북한 공동 개최안 언급  
- 공동개최안은 올림픽운동을 분열의 위기로부터 구하자는 진지한 염원에서 나온 것이며 조선의 자주적 통일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친선·협력·평화라는 올림픽운동의 이념에 전면적으로 합치하는 방안임.



# 1986년

- 1월 1일 | 북한 김일성 주석, 신년사에서 군사연습 중지 및 3자회담 수락 촉구
- 1월 8~9일 | 서울올림픽 관련 IOC중재 제2차 남북체육회담(로잔느)
  - 남측: 북측이 올림픽현장과 IOC 결정사항에 승복할 경우 개최식, 남북한 선수단 공동입장 문제, 일부 종목 예선경기 북한지역 배정 용의, 남북한 지역 연결 경기실시 문제, 대회 기간중 북한측이 문화행사에 참가하는 문제 등의 토의를 주장
  - 북측: 88올림픽의 남북공동주최 문제와 남북유일팀 구성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
  - 제3차 회담 6월 10~11일 로잔 개최 합의
- 1월 11일 | 북한 외교부, 남북한 상호 군사연습 중지 제의
  -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과 남 사이의 대화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1986년 2월 1일부터 공화국 북반부의 전 영역에서 큰 규모의 군사연습을 하지 않으며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기간 모든 군사 연습을 중지하도록 결정하였음. 우리는 이 결정을 내외에 엄숙히 알리면서 미국 정부와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발기에 호응하여 1986년 2월 1일부터 남조선의 전 영역에서 군사연습을 하지 않을 데 대하여 선포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것을 제의함. 군사연습은 그것이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조선반도에서 하든, 그 주변에서 하든, 다 대화 상대방의 위협으로 됨. 우리는 군사연습을 그만둘 데 대한 우리의 제안과 관련하여 미국과 남조선 측이 그 어떤 협상을 필요로 한다면 언제나 그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천명함.
- 1월 18일 | 한미연합사, 팀스피리트 훈련 계획(1986년 2월 10일~4월 중순) 발표
- 1월 20일 | 남북회담 북한대표단(경제·적십자·국회), 공동성명을 통해 팀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모든 남북회담을 연기한다고 발표
  -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강행하려는 현 실정에서 진행하여 오던 남북회담들을 팀스피리트 1986년 군사훈련이 끝난 후 회담 분위기가 좋게 마련되는 때에 가서 계속할 것임.
- 1월 20일 | 남북회담 대표단(국회·경제·적십자) 수석대표 합동성명에서 예정된 남북회담 개최를 촉구
- 1월 21일 | 남북경제회담 북한대표 단장, 제6차 남북경제회담 연기 통보
- 1월 21일 | 남북경제회담 수석대표, 제6차 남북경제회담 개최 촉구
- 1월 22일 | 남북경제회담 수석대표, 제6차 남북경제회담 유산과 관련 논평, 북한의 성실한 대화자세 촉구
- 1월 22일 | 남북적십자회담 북측 단장, 제11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연기 통보
- 1월 22일 | 북한 남북국회회담 예비 접촉 단장, 제3차 예비 접촉 연기 통보
- 1월 23일 | 권정달 남북국회회담 예비 접촉 수석대표, 제3차 예비 접촉 개최 촉구
- 1월 23일 | 이영덕 남북적십자회담 수석대표, 제11차 남북적십자본회담 개최 촉구

- 3월 2일** | **북한 황장엽 당중앙위 서기, 아사히신문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한과 미국의 3자회담 및 88올림픽의 남북한 공동개최 촉구**  
 - 88올림픽 공동주최는 ① 남북의 민족적 화해를 도모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의가 있고 ② 국제올림픽운동을 분열과 혼란의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
- 3월 26일** | **남북경제회담, 남북국회회담 예비 접촉, 남북적십자회담, 북한 각 대표에 회담 재개 제의**
- 3월 31일** | **북한, 남한의 3월 26일 제의에 대해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부**
- 4월 3일** | **제1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방위능력 향상을 위해 팀스피리트 훈련 계속 실시 주장**
- 4월 6일** | **북한 외교부,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계속 실시 발표에 대해 비난**  
 - 제1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성명에서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계속할 것이라고 한 것은 사실상 남북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
- 4월 22일** | **정준기 부총리, 남북공동올림픽 주최 제안**
- 6월 9일** | **북한 인민무력부장, 대한민국 국방장관 앞 편지에서 남북한과 미국의 3자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제의**  
 - 군사당국자회담에서는 무엇보다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전쟁위험을 막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데서 당면하게 나서는 가장 긴박하고도 절실한 문제를 협의 해결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문제들로서는 긴장격화와 전쟁위험의 직접적 요인으로 되고 있는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을 중지하는 문제, 병력과 군비를 축소하는 문제, 조선정전협정을 원안의 요구대로 준수하는 문제 등이 될 수 있을 것임. 회담에서는 이밖에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귀하가 제기하는 문제들도 함께 토의할 수 있을 것임. 회담 장소는 판문점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며 그 밖의 호상 편리하다고 보는 다른 곳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임. 회담 개최 날짜는 7월 중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봄. 나는 군사당국자들의 회담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비접촉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각기 임명하는 3명 정도의 실무대표와 적당한 수의 수행원들로 오는 6월 27일 판문점에서 예비접촉을 가질 것을 아울러 제의함.
- 6월 10~11일** | **서울올림픽 관련 IOC중재, 제3차 남북체육회담**  
 - IOC 사마란치 위원장은 제24회 올림픽 때 양궁과 탁구 2개 종목과 축구 예선 4개조 중의 1개조 경기를 북한지역에서 하고 단체사이클 도로경기를 남북한지역을 연결하여 실시하며 관련 문화행사를 북한지역에서도 할 수 있게 한다는 중재안을 남북한 측에 각각 제안하고 원칙적인 수락 여부를 6월 말까지 IOC 본부에 통고하여 줄 것을 남북한 측에 요구
- 6월 21일** | **유엔군사령관, 대북 서한에서 북한의 군사당국자회담 제의 거부**  
 - 남북대화문제는 남북 당사자간에 토의할 문제이고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토의할 문제

**6월 23일 | 북한, 한반도의 비핵·평화지대 창설을 위한 협상 제의**

-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 데 대한 자기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내외에 천명
-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저장과 반입을 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군사기지를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무기들이 자기의 영토·영공·영해를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
- ② 미국 정부는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 데 대한 조선 인민과 세계 평화애호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남조선에 대한 새로운 핵무기 반입을 중지하여 이미 반입한 모든 무기들을 단계별로 축감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완전히 철수하며 조선반도에서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모든 작전계획들을 취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③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남조선 당국이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 데 대한 우리의 제의와 관련하여 그 어떤 협상이 필요하다면 그 협상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 어느 때나 응할 것

**6월 24일 | 이기백 국방부장관, 북한 인민무력부장의 3군사당국자회담 제의 거부**

- 진행 중인 남북대화를 중단한 채 군사당국자회담을 거론하는 것은 부당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한·미측이 제의한 긴장완화방안 토의에 호응할 것을 기대하며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의 실현은 긴장완화의 첩경임.

**7월 5일 | 북한 인민무력부장, 남한 국방부장관 및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3군사당국자회담 개최 촉구**

**7월 11일 | 남북대화 남한 각급 수석대표, 북한에 남북대화 재개 제의**

**7월 13일 | 북한, 남한의 각급 남북대화 재개 제의 거부**

- 현재와 같이 정세가 침체화되고 있는 조건에서는 대화를 다시 열고자 해도 열 수 없으며 대화를 해도 성과를 거둘 수 없음.

**7월 19일 | 북한 올림픽위원회, IOC측의 중재안과 관련하여 IOC측에 편지**

- ① 양궁·탁구·문화 행사의 평양 조직 동의
- ② 2개 종목의 평양 개최는 우리 제안과는 배치됨.
- ③ 경기종목 추가배정 문제, 축구·사이클 종목은 앞으로 협의 해결되어야 함.

**7월 28일 | 사마란치 IOC 위원장, 북한 올림픽위원회에 편지**

- ① 북한측의 2차 회신은 IOC 요구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함.
- ② 명확한 답변 없이는 제4차 로잔 체육회담을 개최할 필요성이 없음.
- ③ 회담 진전을 위해서는 IOC 중재안에 대한 조건 없는 수락이 전제되어야 함.

**8월 1일 | 북한 올림픽위원회, IOC측에 편지**

- ① IOC측의 입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함.
- ② 2차 답신에서 탁구·양궁 조직에 동의했고 축구예선경기·사이클 경기도 협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으므로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되풀이할 필요 없음.

- 8월 10일 | 북한 남북대화 대표단 대변인, 공동성명에서 대화 재개 분위기 마련 촉구**  
 - 중단된 남북대화의 재개 및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는 ① 북측이 발기한 군사당국자회담을 남측이 지체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적십자·경제·국회(예비접촉) 회담의 재개 분위기를 마련 ② 대화와 양립될 수 없는 전쟁도발소동·반공대결정책 중지 ③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 운동 탄압 중지 및 체포·투옥 인사 즉시 석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 9월 5일 | 북한 군최고사령부, 15만 명 군부대를 평화건설에 투입한다고 발표, 한·미 측에게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호소**
- 9월 8일 | 북한 <조선반도의 비핵·평화를 위한 평양 국제회의>, '평화선언' 7개항 발표**  
 ① 조선반도에서 핵무기의 개발과 시험, 생산과 저장, 보유와 전개, 전파와 사용을 일체 금지  
 ② 조선반도에서 외국 군사기지의 설치와 외국군대의 주둔을 허용하지 말아야 함.  
 ③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침략을 목적으로 맺어진 군사조약들을 폐기하며 새로운 군사블록들을 형성하려는 온갖 시도들을 저지  
 ④ 조선반도의 긴장격화·전쟁위험의 요인으로 되고 있는 전쟁연습과 무력증강이 중지되고 병력·군비가 축소  
 ⑤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 완화 및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전제를 조성하기 위한 대화가 진행  
 ⑥ 조선에서 긴장상태 완화와 조선 인민의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기 위해서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조선의 북과 남이 공동으로 주최  
 ⑦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의 화근을 없애고 공고하고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근본적 방도는 조선 인민의 민족적 통일을 실현하는 것
- 10월 7일 | 전두환 대통령, 198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에서 적십자 회담, 경제회담, 국회 회담 예비 접촉 등의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
- 10월 14일 | 북한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IOC 총회에서 올림픽경기 8개 종목 배정 요구**
- 10월 14일 | IOC, 북한에 최후통첩 결정**  
 - IOC 정기총회는 서울올림픽 경기종목 중 양궁과 탁구 전종목, 축구예선 1개조, 사이클 도로단체 등 4개 종목의 경기를 북한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는 IOC 제안의 수락 여부를 내년 9.17까지 서면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북한에 발송기로 결정
- 10월 16일 | 허문도 국토통일원 장관, 반공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시라고 강조**
- 10월 24일 | 남북회담 북측 대표단(적십자·경제·국회), 연합성명 발표**  
 - 반공 국시를 떠들며 남북대결을 고취하고 있는 행위는 남북 대화에 대한 전면 거부 선언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전면 반대 선언으로 인정하며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의 진실한 대화 상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공대결책동과 반공파쇼화정책을 지체없이 포기할 것을 촉구
- 11월 28일 | 이규효 건설부 장관, 남북수자원 당국회담 제의**
- 12월 30일 | 북한 김일성 주석, 최고인민회의 8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개**

### 최의 필요성 강조

-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에서는 상호 비방 중상을 중지하며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협작과 교류를 실현하여 민족적 유대를 도모하는 문제와 같은 당면한 정치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이 취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무력을 축소하고 군비경쟁을 중지하며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큰 규모의 군사연습을 그만두는 문제와 같은 당면한 긴장완화 조치가 조속히 협의되어야 할 것임.

# 1987년

- 1월 10일 | 북한 정무원 총리·인민무력부장, 국무총리·국방장관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북남 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제의
- 1월 14일 | 정부 남북대화 대표단(적십자·경제·국회 예비 접촉), 합동성명 발표  
- 중단 된 대화를 다시 잇는 데 아무런 조건 없이 하루속히 응해 나오기를 거듭 촉구
- 1월 16일 | 이규효 건설부 장관,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과 관련 대북성명 발표
- ① 북한측은 댐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유 하천의 수자원 공동이용에 관한 우리측 협상 제의에 응하라
  - ② 금강산댐 건설 지역의 입지조건·규모 등 안정성, 기술상의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한 남북한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
  - ③ 국제적 공신력 보장을 위해 국제전문기구의 공동조사 참여는 환영
  - ④ 북한측이 수자원의 공동이용과 공동조사를 위한 대화에 성의를 보이고 댐 건설계획을 포기한다면 우리측의 발전시설 용량이 1천6백만kw로 사용량 1천만kw를 크게 웃돌고 있으므로 댐 건설 중단에 따른 북한측의 전력 손실을 보상해 줄 용의가 있음.
  - ⑤ 북한측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진지하게 응해 온다면 남북 모두가 댐 건설에 따른 막대한 소모전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이것이야말로 남북간의 화해와 신의를 회복하는 가장 현실적인 본보기가 될 것
  - ⑥ 북한측이 우리측의 대화를 통한 협상 제의를 끝까지 외면한 채 금강산댐 건설을 강행한다면 이는 민족통일을 거부하는 민족사적 죄악을 범하는 것
- 1월 19일 | 북한 전력공업위원회,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에서 금강산발전소 건설문제 협의할 것을 요구
- 2월 12일 | 북한·IOC간 공식회담 후 각각 기자회견
- IOC(사마란치): 북한측은 지난해 6월 IOC가 보낸 분산개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락했음. 이 같은 수락의 틀 안에서 다음 4차 남북체육회담이 진행될 것
  - 북한(진중국): IOC 제안 중 탁구·양궁의 본선을 포함한 2개 종목은 수락하지만 IOC에 내놓은 우리의 제안은 5~6개 종목 추가안임. 또 조직위원회는 평양조직위원회와 서울조직위원회로 구성해야 하며 대회 명칭도 올림픽평양·올림픽서울로 별도 호칭해야 함.
- 2월 14일 | 국무총리·국방장관,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 수자원 공동이용·조사 및 정치·군사문제까지 함께 토의할 수 있는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 개최 호응 촉구
- 2월 28일 | 북한 정무원 총리·인민무력부장, 정치·군사회담 개최와 병행한 기존 대화 재개 제의
- 우리는 북남 사이에 조성된 현재세의 절박성으로 보나 북남대화의 성과적 추진을 위한 원칙적 요구로 보나 먼저 북남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가지고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중단 된 여러 갈래의 대화들을 다시 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지만 귀측이 굳이 기존 대화의 재개를 고집한다면 우리가 제기한 북남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개최하면서 동시

에 북남 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과 북남 경제회담, 그리고 북남 적십자회담도 다시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북남 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제1차 회의를 오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판문점 우리측 지역의 통일각에서 가질 것을 정중히 제의함.

2월 28일 | 평화의 댐 기공식

3월 3일 | 북한 올림픽위원회, 88올림픽 경기종목 남북한 인구비례 배정 주장

- 북과 남의 인구비례로 보아서 우리 측 지역에서 올림픽 종목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8개 종목은 개최되어야 마땅하고 제4차 로잔 3자회담에서 종목문제와 올림픽 공동주최에 나서는 조직문제를 토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

3월 9일 | 미국 국무성, 미국 외교관과 북한 외교관의 초보적 접촉 허용 발표

3월 17일 | 국무총리·국방장관, 남북총리회담 제안

- 상호 신뢰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 조성된 바탕 위에서 남북총리회담을 개최, 쌍방이 제기하고 있는 남북 간 관계개선과 긴장완화에 필요한 제반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해야 하고 이에 따라 남북수자원회담을 3월중 판문점에서, 남북적십자·경제회담을 4월중 평양·판문점에서 각각 열 것

3월 19일 | 북한 외교부, 미국과의 공식 접촉 및 대화 준비 완료 발표

3월 30일 | 북한, 남한의 제안에 동의하고 예비회담 개최제안

- 남북한 간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총리회담을 열어 군사적 문제를 다루어야지 인도적 문제나 경제문제를 다루는 회담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귀측이 총리회담을 제기한 것도 바로 고위급 정치회담을 열어야 긴장완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간주하여 쌍방 총리가 임명하는 부장(장관)급 예비회담 대표가 1987년 4월 23일 판문점에서 만나자.

4월 10일 | 노신영 국무총리, 남북수자원회담, 남북경제회담, 남북적십자회담 개최일자 제의

5월 7일 | 제19차 한미안보연례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팀스피리트 훈련을 연례적으로 계속 실시할 것을 언급

5월 15일 | 국토통일원 장관, 통일에 관한 정부의 견해 발표

- ①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민족·민주·자유·복지의 이상을 실현하는 통일민주공화국 건설, 북의 연방제통일방안은 공산주의로 가는 중간단계에 불과
- ② 7·4공동성명은 사상·이념의 차이를 그대로 두고 민족의 유대를 회복,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대화와 공존의 논리
- ③ 정부의 1월 22일 제의는 대적 상황하에서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유도하려는 대화 논리로서 통치권행위,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성역 불일탈

5월 20일 | 북한 조평통 비상확대회의, 통일원 장관의 정부의 견해 발표 비난

7월 13일 | 북한 외교부, 비핵·평화지대 창설과 관련한 입장 천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는 조선반도에 비핵지대·평화지대를 창설하고 그 지위를

확고히 담보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과 관련한 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

- ① 미국 정부는 남조선에 새로운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 반입을 중지하며, 이미 반입된 핵무기들을 완전 철수하며 핵무기 사용 관련 모든 작전계획들을 취소할 것을 공약하는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여야 함. 조선반도에서의 비핵지대 창설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검증하는 척도로 될 것
- ② 일본 정부는 일본 영토가 조선반도를 반대하는 다른 나라의 핵출격기지·중계기지·보급기지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③ 모든 핵무기 소유국들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전쟁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일체 군사행동 및 핵위협을 하지 말아야 함.
- ④ 남조선 당국은 자기 지역내 다른 나라의 일체 핵무기·군사기지 철수 및 향후 핵무기의 반입·저장·개발·소유·자기 지역 통과를 일체 허용하지 말아야 함.

**7월 14-15일 | 서울올림픽 관련 IOC중재 제4차 남북체육회담(스위스)**

- 남측: IOC 중재안을 토대로 실무·기술적 문제 조속 협의를 촉구
- 북측: 88올림픽 공동주최, 8개 종목 북한 배정, 별도의 남북간 직접 회담 개최를 공식 주장

**7월 23일 | 북한, 한반도에서의 단계별 군축 실현을 위한 남북한과 미국 간의 다국적 군축협상 제의**

- ① 조선에서 북과 남의 무력균형을 증강하는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서로 무력을 감축하는 방법으로 유지되어야 함. 이 원칙에 따라 북과 남은 1988년부터 1991년까지 3단계에 걸쳐 무력을 축소하며 1992년부터 각각 10만 이하의 병력을 유지
  - ② 북과 남의 병력이 먼저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데 따라 남조선 주둔 미군도 단계적으로 철수하며 북과 남의 무력이 10만으로 축소되면 미국은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력을 철수하고 군사기지를 철폐
  - ③ 조선의 북과 남은 자기 측의 무력축소 정형을 상대측에 통지하고 세계에 공포하여야 하며 미국은 자기 군대의 철수 정형을 우리 측에 통지하고 세계에 공포하여야 함. 현재 관문점에 있는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조선의 북과 남에서의 무력축소 정형과 미군철수 정형을 인정하기 위한 검증사업은 단계별로 진행
  - ④ 북과 남의 병력이 축소되는 기간과 그 이후에도 있을 수 있는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계속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여기에 중립국 감시군을 주둔
  - ⑤ 조선반도에서의 무력축소와 철수 및 그에 대한 검증문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로의 전환,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권능 확대와 중립국 감시군 조직 및 그 배치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조선의 북과 남, 미국 사이의 회담에 중립국 감독위원회 성원국들인 폴란드·체코·스위스·스웨덴 대표들이 방청으로 참가하는 다국적인 군축협상을 1988년 3월 제네바에서 진행
- 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에서 실제적인 무력축소의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1987년 말까지 조선인민군 10만 명을 일방적으로 줄일 것임. 조선반도에서 북과 남의 무력이 대폭 축소되고 외국 군사기지가 철폐되며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가 평화복도로 전환되면 조선은 그 누구



에게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 비핵·평화지대 완충지대로 될 수 있을 것임.

7월 30일 | 북한, 군병력을 87년 12월말 까지 10만명 감축한다고 발표

8월 3일 | 외무부, 남북한 외무장관회담 개최 제의

- 남북한 불가침협정 체결, 유엔가입 및 교차승인 문제, 기존 대화의 재개·발전과 수자원문제 협의·해결, 군축을 포함한 긴장완화·평화정착 문제, 남북총리회담 성사 및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 실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외무장관회담'을 유엔총회 직후 뉴욕에서 갖자.

8월 4일 | 북한, 다국적 군축협상 제의와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안보리)에 공식 문건(S-1917호)으로 배포

8월 6일 | 북한 외교부, 남북한과 미국의 3자 외교부장 회담 제의

8월 11일 | 북한 올림픽위원회, IOC측에 3개항 제안

- ① 5개의 완전경기종목과 1개의 불완전경기 북한 개최
- ② 차기 공동회의는 종목문제뿐만 아니라 경기대회 명칭문제, 조직위원회 구성문제, 개·폐회식 문제, 방영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토론할 것
- ③ 올림픽 참가 초청장이 발송되는 9월 17일 이전으로 가능하면 8월중 제5차 공동회의를 소집할 것

8월 13일 | 외무부, 유엔 동시가입 교차승인 문제를 위한 남북외무장관회담 개최 제의

8월 24일 | IOC 대변인, 북한의 3개항 제안 거부

9월 15일 | 북한 올림픽위원회, 제5차 남북체육회담에 앞서 남북한 쌍무회담 개최 제의

9월 24일 | 대한올림픽위원회, 북한의 체육회담 제의(9월 15일) 거부 및 IOC·남북한 3자 협의 주장

10월 1일 | 허담 북한 노동당 정치국원, "우리들은 어떤 레벨, 어떤 의제, 어떤 장소에서도 미국과의 직접 대화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회견

11월 11일 | 북한 조국전선·조평통 연합회의, 대남 편지에서 민족단합방안 5개항 천명

- ① 북과 남 사이의 민족적 단합을 위하여서는 우선 남조선에서 진정한 민주정권이 출현하여야 함. 민주정권을 세우는 것은 남조선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튼튼한 담보이며 북과 남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민족적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첫 출발점임. 온 겨레가 그처럼 열망하여 마지않는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데서 오늘 남조선 인민들에게는 이보다 더 간절한 민족적 과제가 없음.
- ② 북과 남 사이의 민족적 단합을 위해서는 대결을 반대하고 서로 단결을 도모해 나가야 함.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유일한 길은 북의 사회주의 역량과 남의 민주주의 역량이 단결하는 데 있음. 우리들 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서로 단결하고 통일하는 데 장애로 되어서는 안됨.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자면 동족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켜야 하며 사상과 제도의 차이에 집착하여 대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함.

- ③ 북과 남 사이의 민족적 단합을 위하여서는 남조선에 민주정권을 세우는 기초 위에서 서로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함. 대화가 없이는 북과 남이 서로 접근할 수 없으며 북남관계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음. 지난날 북과 남의 대화는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음. 남조선 인민들의 배격을 받는 군사파쇼세력은 항상 대화를 분열의 고정화와 집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왔으며 통일논의를 자기들의 독점물로 간주하여 왔음.
- ④ 북과 남 사이의 민족적 단합을 위하여서는 다가오는 제24차 국제올림픽경기대회 문제를 민족 공동의 이익에 맞게 해결하여야 함.
- ⑤ 북과 남 사이의 민족적 단합을 위하여서는 무력충돌과 전쟁의 위험을 막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긴급조치가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함. 오늘의 조선반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며 그것은 남조선 내부가 복잡할수록 더욱 첨예화되고 있음. 과연 이와 같은 사태가 북과 남의 어느 편에 필요하며 유익한 것이겠는가. 전쟁으로 녹아날 것은 조선인민뿐이며 덕을 볼 것은 외세뿐임. 미군이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핵무기들이 사용되면 우리 조선 민족은 다 멸망할 것임. 우리는 핵전쟁에 절대로 말려들지 말아야 함.

12월 14일 | 북한, 인민군 병력 10만 명 축소 단행 발표

# 1988년

1월 1일 | 북한 김일성 주석, 신년사에서 남북연석회의 소집 제안

1월 12일 | 북한 올림픽위원회, 88서울올림픽 불참 공식 선언

1월 13일 | 북한, 남북연석회의 소집 제의

- ① 쌍방 당국자를 포함하여 제정당·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남북연석회의를 소집할 것
- ② 남북연석회의에서는 올해 안으로 팀스피리트 군사훈련 중지문제, 다국적 군축회담 마련문제, 제24차 올림픽 공동주최 문제, 상호 화해·단합 및 긴장완화 관련 문제들이 협의되어야 할 것
- ③ 남북연석회의는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가며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동 회의 소집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예비회의를 2월 19일 판문점에서 가질 것
- ④ 예비회의의 대표단은 쌍방 당국과 제정당·사회단체의 위임을 받은 5~7명의 대표로 구성하되 쌍방 당국 대표는 부장급(장관급)으로 하고 정당·사회단체 대표는 부책임자급으로 하는 것이 좋음.

2월 12일 | 문공부 대변인, 테러사건 등 남북연석회의를 사실상 거부한다고 성명

2월 25일 | 노태우 대통령 취임

3월 14일 | 이흥구 통일원 장관, 업무보고에서 통일정책 실천방안 제시

- ① 북한관계 자료 개방 확대
- ② 야당과 언론에 남북관계 현황을 정례적으로 브리핑하고 의견 청취
- ③ 통일논의의 확대 및 광범한 여론수렴을 통해 통일정책의 공감대 확산
- ④ 중간계층 주도의 통일주체세력의 확보로 통일정책의 공감대 확산
- ⑤ 긍정적 통일관과 동포애적 북한관 정립
- ⑥ 남북대화를 서울올림픽 이후 새로운 차원에서 추진

4월 21일 | 노태우 대통령, 취임 뒤 첫 기자회견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협력시대 개막 선언

- 여러 경로를 통해 북쪽과의 대화는 계속하고 있으며 남북통일을 위한 대화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남북한 책임자간의 정상회담임. 북한이 무력적화통일노선을 변화시킨다면 과감하게 대결을 청산하고 생산적인 신뢰관계를 맺어야 하며 본인은 앞으로의 임기를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을 열어 나가는 시대로 선언하고자 함.

5월 27일 | 북한 김일성 주석, 남북공동주최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올림픽에 불참한다고 표명

6월 2일 | 정한모 문공부 장관, 통일논의에 관한 정부의 공식입장 발표

- ① 통일문제에 관한 논의를 적극 개방하고 북한 및 공산권 관계 자료의 점진적 개방·확대
- ② 대북 제의나 접촉 창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로 일원화
- ③ 민족통일로 향한 전진을 위해 남북간에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문화·예술인, 학자 및 학생 등 각계 인사들의 인적 교류와 함께 물적 교류의 실현

- 6월 3일 | 이헌재 국무총리,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의
- 6월 3일 | 북한, 남한 총리의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의 대북 서한 접수 거부  
- 귀족이 우리측에 보내주어야 할 회답 편지를 보내오고 전달해야 할 편지를 전달하는 의무를 이행한다면 호상 성의 원칙에서 귀하의 편지를 받을 것임.
- 6월 9일 | 북한 박길연 유엔대표부 대사, 유엔 특별총회 기조연설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주장
- 6월 9일 | 이흥구 통일원 장관,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열고 남북학생 교류의 내용과 방법, 남북왕래 절차, 신변안전 보장문제, 각종 편의제공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협의하자고 북한에 제안
- 6월 10일 | 남북학생회담, 경찰 저지로 무산
- 6월 10일 | 최광수 외무부 장관, 유엔특별총회연설에서 한반도 군축 3단계 접근방안제시  
① 남북한이 우선 대화의 조기재개와 교류 및 협력의 확대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  
② 전쟁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로서 불가침 조약 체결에 합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  
③ 한반도의 군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에 대한 협상 돌입
- 6월 23일 | 북한 김일성 주석, “미국이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면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
- 7월 7일 | 노태우 대통령,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특별선언) 발표  
①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 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 동포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 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  
② 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 간에 생사, 주소확인, 서신왕래, 상호 방문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추진, 지원  
③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교역을 민족 내부 교역으로 간주  
④ 남북 모든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 우리 우방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는데 반대하지 않음.  
⑤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 대결 외교를 종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남북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희망  
⑥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 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
- 7월 9일 | 제142회 임시국회 제20차 본회의, ‘서울올림픽대회에의 북한 참가 촉구 결의문’ 채택  
- 대한민국 국회는 1988년 9월 17일 개최되는 역사적 서울올림픽대회에 북한 선수들이 대거 참가할 것을 희망하면서, 북한 당국은 숭고한 올림픽 정신과 취지에 입각하여 또 나아가

민족적 대화해의 기폭제가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 자세로 협력해 줄 것을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한이 서울올림픽 대회를 시발로 계속하여 각계각층, 그리고 각 분야에 걸친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거래의 궁극적 소원인 통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간 긍정적이고 전향적 자세로 최대한 노력할 것을 진지하게 제의함.

**7월 11일 | 북한 조평통, 노태우 대통령의 7·7 특별선언에 대해 거부 표명**

- ① 특별선언은 이미 미국의 시나리오에 따라 전임자가 제출한 남북의 영구분단안인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제안 및 교차승인과 다를 바 없음.
- ② 특별선언은 조국통일의 3대 원칙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음.
- ③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긴장상태 해소,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함.
- ④ 특별선언에서 제기한 제문제는 남북연석회담이 실현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모두 해결될 것
- ⑤ 진실로 남북간 협력을 바란다면 8·15 학생회담을 저지하지 않고 협력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7월 13일 | 김상협 대한적십자 총재, 제2차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교환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개최 제의**

- ① 이산가족 당사자가 고향으로 인하여 생전에 자기 혈육의 소식을 알고자 할 때 그 소망을 이루어 주기 위해 이들이 귀족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친척의 생사 여부와 거주지 확인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우리측은 이를 귀족에 전달할 것이며 귀족은 이를 접수해서 이에 대한 회신을 우리측에 보내주고, 귀족이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우리측에 보내올 경우 우리측도 이를 접수해서 우리측 지역내의 가족·친척을 찾아 그 소식을 귀족에 회신해 줌.
- ② 지난 1985년 9월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시 혈육을 상봉한 이산가족들 사이의 서신을 교환해 주도록 함. 아울러 쌍방 적십자간의 신청서와 회신 교환을 통해 생존과 거주지가 확인된 이산가족들 사이의 서신도 교환해 주도록 함.
- ③ 해외에 거주하는 남북 이산가족들에게 생사·주소 확인, 서신왕래, 그리고 가족상봉의 기회를 알선해 주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제적십자기구의 협조를 받아 이를 추진
- ④ 올해 안에 제2차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을 교환할 것을 희망. 남북적십자 실무회담을 7월 30일 이내에 귀족이 희망하는 날짜에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7월 15일 | 김영식 문교부 장관, 남북학생교류 추진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교육당국자회담 제의**

**7월 16일 | 북적, 적십자 실무회의 개최 제의 거부**

- 그 누구도 현재 날카로운 대립상태에 있는 남북한 관계에 대해 온당히 유의하지 않은 채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이 없는 문제를 제기하는 한적의 그 같은 제의를 진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

**7월 16일 | 최광수 외무부 장관, 7·7선언 실천 외교시책 발표**

- 미국·일본 등 우방국가와 북한 사이의 교류 및 관계개선에 있어 민간경제교류와 문화 등 비정치적 교류에 반대하지 않으나 수교 등 정부차원의 정치교류는 바라지 않는다는 기본입장

**7월 17일 | 북한 정무원 대변인, 남한의 남북교육당국자회담 수락 거부**

- ① 학생교류는 당사자들인 그들이 협의·해결할 문제이지 당국이 맡아야 할 성격의 문제가 아님.
- ② 당국은 오직 학생들이 자기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도록 필요한 조건이나 보장해 주면 되는 것임.
- ③ 학생교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각종 편의 제공과 신변안전 보장문제와 관련한 해결을 위해 구태여 따로 회담할 필요가 없음.

**7월 20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변인, 불가침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국회연석회의 개최 제의**

**7월 20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미 편지로 북·미 국회대표회담 개최 제의**

**7월 26일 | 북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의장, 남북국회연석회의에서 올림픽 공동주최안 토의 제의**

- 북남 국회연석회의를 올림픽경기대회가 시작되기 전인 8월 안으로 소집하고 여기에서 귀족이 우리를 초청한 문제와 우리의 올림픽 공동주최안을 동시에 긴급의제로 토의할 것

**8월 9일 | 북한, 남북 국회연석회의 개최 제의**

- 북한측은 남북 국회연석회의 제1차 회의를 서울 또는 평양에서 8월 26일부터 4박 5일간 개최하자면 이를 위해 8월 17일 오전 관문점에서 각각 3~5명의 국회의원으로 예비회담 갖자고 제안

**8월 12일 | 국회, 8월 19일 오전 관문점 통일각에서 양측 대표 5명씩 참석 개최 제의**

**8월 15일 | 노태우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정상회담 다시 제안**

**8월 15일 | 8·15 남북학생회담,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

**8월 16일 | 북한, 올림픽 참가를 권유한 IOC 제안 거부, 올림픽 참가문제는 남북국회회담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8월 19일 | 남북국회회담 제1차 준비 접촉**

- 남북직접대화는 85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적십자본회담 이후 최초
- 남측: 회담 형식을 국회대표회담으로 하며 쌍방 국회의원 대표 20명, 지원요원 40명, 취재기자 50명, 수석대표는 의장이 지명하는 중진으로 할 것
- 북측: 국회연석회의 형식으로 쌍방 국회의원 전원(남 299, 북 655)과 정당·사회단체·각계 대표 50명, 수행원 20명, 의장은 주최측 국회의장으로 할 것

**8월 20일 | 남북국회회담 제2차 준비 접촉**

- 남측: 올림픽경기대회 문제,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 문제, 불가침문제,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축구 문제
- 북측: 불가침협정 체결 문제와 선언 문제, 올림픽 북한 초청 및 공동개최 문제, 다방면적 협력과 교류 문제

8월 22일 | 남북국회회담 제3차 준비 접촉

- 남측: 올림픽 문제를 단일의제로 해서 국회 대표와 29일 평양에서 개최할 것
- 북측: 연석회의와 불가침공동선언을 의제로 할 것

8월 24일 | 남북국회회담 준비 접촉 수석대표 단독 접촉

- 남측: 북한의 올림픽참가 문제에 대한 진의 탐색
- 북측: 「연석회의」 준비사업을 하는 것이 자기들의 기본입장이라는 점을 들어 한국측에 조정 의견 제시할 것을 요구

8월 25일 | 정부, 「남북교류특별법안」 확정

8월 26일 | 남북국회회담 제4차 준비 접촉

- 남측: 올림픽 문제가 초미의 과제. 올림픽 문제를 긴급의제로 한 남북국회회담을 8월 29일 평양에서 개최할 것
- 북측: 회담형식과 관련, 연석회의를 합동회의로 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단체·개별인사의 참가 문제는 본회담에서 협의

9월 3일 | 북한 올림픽위원회, 서울올림픽 불참을 공식표명

- 우리에게 올림픽은 중요함.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온 민족의 미래 운명임. 이 때문에 우리는 단독주최를 강요받고 있는 올림픽경기에 참가할 수 없음. 미국과 일본·남조선이 한반도 분단의 지속을 위해 올림픽의 서울 개최를 유도했음.

9월 8일 | 북한 김일성 주석, 공화국 창건 40주년 경축대회 연설에서 평화통일위원회 창설 제기

- 고위급회담에서는 무엇보다도 북과 남이 그 누구의 구속이나 보증도 받지 않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북과 남의 두 제도를 그대로 두는 조건에서 통일국가의 연방정부를 세우거나 그 실현을 위한 평화통일위원회 같은 것을 창설하는 문제가 협의되고 해결되어야 할 것임.

9월 10일 | 문공부, 북한과 공산권 국가에 대한 보도요강 발표 시행

9월 10일 | 이흥구 통일원 장관, 북한의 남북최고위회담 언급 관련 논평 발표

-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시사하겠다는 측면에 유의하면서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실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임.

9월 19일 | 노태우 대통령, 미국 NBC TV와의 회견에서 “북한이 그들의 평화통일 노력에 진지하고 접근 방법이 군사적 위협을 배제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의 주한미군 감축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10월 4일 | 노태우 대통령, 국회 국정연설에서 북한 방문 용의 표명

-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측이 응한다면 평양을 방문, 김일성 주석과 만나겠음. 또 북한측이 제시한 통일방안 중에서도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

10월 7일 | 나웅배 부총리, 대북교역 관련 조치 발표

- ① 국내 민간상사의 남북한 물자교역

- ② 제3국을 통한 중계무역 허용
- ③ 남북 경제인의 상호 방문 및 접촉 허용
- ④ 해외여행자의 북한 상품 반입 허용
- ⑤ 교역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북한 물자의 원산지 표시 및 북한 상표 부착과 북한 선박의 입항 허용
- ⑥ 안전출항 보장
- ⑦ 직·간접 교역을 민족 내부교역으로 간주하여 관세 등 수입물자에 부과되는 제세의 면제

10월 12일 | 이홍구 통일원 장관, 「남북교류 및 접촉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결정 발표

10월 13일 | 남북국회회담 제5차 준비 접촉

- 남측: 회담의 형식은 개회모임과 의제 토의를 위한 대표회담, 폐회모임은 남북 양측 국회의 원 전원이 참석하는 합동회의의 형식으로 하고 의제 토의를 위한 대표회담은 쌍방이 합의하는 적정수의 대표가 참석토록 할 것이며 의제는 ① 적십자회담·경제회담 재개 등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문제 ②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 등 제의
- 북측: 국회회담을 양측 합동회의로 하되 참가 인원수를 대폭 축소해 북측은 최고인민회의의 전체 대의원의 3분의 1로, 남측은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으로 하고 의제는 ①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문제 ② 남북간에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실시하는 문제 등 제의

10월 15일 | 북한 조평통, 노태우 대통령의 평양방문 용의 발언 환영

- 노 대통령의 제의를 환영한다면서 ①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양쪽 정치·군사 지도자들 사이의 회담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 ② 한국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 ③ 남북국회회담의 조기 개최가 성사되어야만 남북정상회담의 실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

10월 18일 | 북한 김일성 주석, 차우세스쿠 루마니아 대통령 환영 연설에서 두 개의 조선이 한반도 평화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

10월 18일 | 노태우 대통령, 제43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 방안 제시

- ① 남북한과 미·소·중·일로 구성되는 동북아평화협의회의의 개최
- ②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불가침 또는 무력 불사용에 합의, 이를 공동으로 선언할 것
- ③ 휴전선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시의 건설 제안

10월 19일 | 북한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한의 최고위 당국자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환영, 그러나 정상회담에 앞서 예비회담 성격의 고위정치군사회담을 먼저 열자고 주장

10월 31일 | 미국 정부, 대북한 외교조치 발표

- ① 비자발급 완화
- ② 미국 국민의 북한방문 허용
- ③ 인도적 교역 허용
- ④ 미국 외교관의 북한외교관 접촉 완화

11월 7일 | 북한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정무원연합회의에서 평화보장 4원칙과 포괄적인 평화방안 발표



〈평화보장 4원칙〉

- ① 한반도의 평화는 통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② 조선반도의 평화는 외국 무력의 철수에 의해 담보되어야 함.
- ③ 남북한의 군비축소를 통해 평화가 보장되어야 함.
- ④ 긴장을 심화시키는 책임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평화가 실현되어야 함.

〈포괄적인 평화방안〉

- 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인 미군 무력의 철수와 북남 사이의 군축 방안
  - ㄱ. 미군 무력의 단계적인 철수
  - ㄴ. 북남 무력의 단계적 감축
  - ㄷ. 미군 무력의 철수와 북남 무력의 축감에 대한 통보와 검증
  - ㄹ. 북과 미국·남조선 사이의 3자회담
- ② 북과 남 사이에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 ㄱ. 정치적 대결상태의 완화
  - ㄴ. 군사적 대결상태의 완화
  - ㄷ. 북남 사이의 고위급 정치군사회담

11월 16일 | **북한 이근모 정무원 총리,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개최 제의**

-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연합회의 결정에 따라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할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열 것을 귀 당국에 정중히 제의하는 바임.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위한 대표단은 각각 부총리급을 단장으로 하고 군 총참모장급을 부단장으로 하여 7~9명 정도의 실권 있는 고위급 정치군사 대표들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임. 문제의 절박성에 비추어 우리는 첫 회담을 오는 12월 중순경에 판문점 우리측 지역의 '통일각'에서 가질 것을 희망함. 회담에서는 우리가 포괄적인 평화방안에서 내놓은 북남 사이의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의 완화방안이 토의되어야 할 것이며 이 밖에도 정세완화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문제들도 폭넓게 협의될 수 있을 것임. 우리가 이번에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기하고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다시금 제의하는 것은 오늘의 변천된 정세를 고려하고 그 실현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데 기초한 것임. 따라서 우리는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가지는 데 대한 우리의 제의가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믿고 있음.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국회회담을 진척시키고 여러 갈래의 대화들을 계속하는 데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그것은 특히 북남 최고위급회담을 마련하는 데 훌륭한 교량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임.

11월 17일 | **남북국회회담 제6차 준비 접촉**

- 남북한 양측은 각각 50명씩 총 100명이 참석하는 본회담(남측 명칭: 대표회담, 북측 명칭: 대표회의)에서 의제 토의를 하고 본회담 전후에 양쪽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개·폐회식 모임을 갖기로 회담 형식 합의

- 그러나 본회담을 쌍무적인 완전합의제로 할 것인지 회의제로 할 것인지의 여부와 일부 의 제에 대해서는 의견대립

**12월 7일 | 문교부, 전국 시·도 교육감회의에서 교과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통해 북한을 '함께 살아가야 할 민족공동체'의 일부로 포용하라는 지침 시달**

**12월 9일 | 조국평화통일위, 남한 민주단체들의 '범민족대회' 개최 제안을 환영**

- 시기: 될수록 빠른 시일 안에 화합을 가졌으면 하지만 귀측에서 예견한 대로 1989년 1월도 무방
- 장소: 판문점 또는 제3국
- 참석대상: 북과 남의 사회단체·해외교포단체 대표 및 개별인사
- 토의 의제: 귀 본부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

**12월 20일 | 북한 연행목 정부원 총리, 남북한과 미국간의 3자회담을 위한 외교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3자 실무대표 접촉 제의**

- 북남 사이에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과는 별도로 북과 남·미국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시급히 가질 것을 귀 당국에 정중히 제의함. 3자회담에서는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인 미군 무력의 철수와 북남 사이의 군축방안이 토의되어야 할 것임. 나는 평화를 위하여 질실한 3자회담을 될수록 빨리 마련하기 위하여 각기 외교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3자 실무대표 접촉을 12월중에 스위스 제네바, 그 밖의 제3국에서 가질 것을 희망함.

**12월 21일 | 북한 올림픽위원회, 90년 제11회 베이징 아시아경기대회에 남북단일팀 구성 출전 제의**

**12월 28일 | 장영훈 국무총리, 남북고위당국자간 회담 제의**

-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은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각기 7명의 대표로 구성하며 상호 비방·중상 중지문제, 상호 존중 및 불간섭문제,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문제,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 등을 의제로 하여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면서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임. 나는 남북고위당국자회담 개최와 관련한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쌍방 각기 5명의 대표로 구성되는 예비회담을 내년 2월 초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아울러 제의하는 바임. 예비회담의 수석대표는 차관급(부부장급)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임.

**12월 29일 | 남북국회회담 제7차 준비 접촉**

- 북측은 남측의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중지문제를 첫 번째 의제로 할 것을 주장했으나 남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진전없이 끝남.

**12월 31일 | 대한올림픽위원회, 90년 아시아경기대회에 단일팀 파견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1989년 3월 9일 열자고한 북한의 12월 21일 제의에 대해 수정 제의**

# 1989년

- 1월 1일 | 노태우 대통령, 새해에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남북한 간에 화해의 돌파구가 마련되어 왕래와 교역이 시작되면 통일은 이 세기가 가기 전에 우리의 눈앞에 다가설 것이며 이제는 6천만 동포 모두가 서로를 가르는 다짐을 그치고 이 벽찬 민족적 과업을 예비할 때”라고 강조
- 1월 1일 | 북한 김일성 주석, 신년사를 통해 ‘고려민주연방국’의 창립에 대해 협의하자며 남한의 4당 총재와 재야인사들을 초청하는 형식의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제의
- 1월 12일 | 정원식 문교부 장관, 남북 학생교류추진을 위한 민간협의기구 발족 담화발표
- 1월 16일 | 북한 연형묵 정무원 총리, 남북고위급회담 제의를 수락하고 예비회담 개최(2월 8일)를 제의
- 1월 19일 | 상공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등 4명이 1월 23일부터 2월 7일까지 16일간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공식 허용 발표
- 1월 20일 | 북한 평양방송, “강원도 통천이 고향인 남조선 동포 기업가 정주영이 1월 23일경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서 공화국 북반부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가족 친지들이 그와 만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
- 1월 23일 | 북한 김용순 올림픽위원장, 남한의 남북체육회담 제의 수락
- 1월 24일 | 김상협 한적 총재,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촉구(4,346명의 이산가족찾기 의뢰인 명부 동봉)
- 1월 26일 | 북한 외교부, 한반도지역에서의 핵 및 화학무기 철폐를 위해 한·미 양국과 형식·급수에 관계 없는 협상 의사 표명
- 1월 30일 | 북한 허담 남북정치협상회의 준비위원장, 4당 총재 및 김수환 추기경·문익환 목사·백기완씨에게 남북정치협상회의 호응 촉구 편지
- 2월 2일 |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북한 방문(1월 23일~2월 2일)마치고 돌아와 북한과의 합의사항 발표
  - ① 금강산공동개발
  - ② 시베리아개발의 공동참가
  - ③ 합작투자회사 설립 추진
- 2월 8일 | 남북고위급회담 제1차 예비회담
  - 남측: 명칭-남북고위당국자회담. 의제-6개항 제시(① 상호 비방·중상 중지문제 ② 상호 존중 및 불간섭문제 ③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 실시문제 ④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⑤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 ⑥ 기타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
  - 북측: 명칭-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의제-단일의제 제시, ‘남북간의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문제’
- 2월 8일 | 남북국회회담 준비 접촉 북한 대표단 대변인, 남북국회회담 제8차 준비 접촉 연기 통보

- 2월 9일 | 남북국회회담 준비 접촉 채문식 수석대표, 회담재개 촉구
- 2월 11일 | 임시국무회의,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특별법안」 의결
- 2월 15일 | 손성필 북적 위원장,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거부
- 2월 17일 | 북한 작가동맹위원회, 남한의 민족문학작가회의에 작가회담 개최 제의
- 3월 2일 | 남북고위급회담 제2차 예비회담
  - 북측: 팀스피리트훈련과 관련한 3개항의 긴급조치, 즉 ① 팀스피리트 89 합동 군사연습의 즉각적인 중지 및 이에 대한 공식 발표 ② 훈련에 동원된 모든 전투병력 및 무장장비들의 원대복귀와 해외에서 기동중에 있는 병력 및 장비들의 기동 정지 ③ 군사훈련을 할 경우 외국군의 참가 없이 한국군만으로 하며 규모 축소와 군사연습 명칭의 변경 등을 의제 토의의 전제조건으로 요구
- 3월 9일 | '90 북경 아시아 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관련 제1차 남북체육회담 본회담
  - 단일팀 구성·참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단일팀의 호칭, 단기, 단가, 선수선발 문제에 대해 토의
  - 단기는 1920년대의 '아리랑'으로 하고, 선수선발은 가장 우수한 선수를 뽑는다는 것 합의. 선수단 호칭에 있어서 한국측은 우리말로 객관적 용어인 '남북단일팀'으로 할 것과 영문자 'KOREA'로 표기할 것을 제의한 데 반해, 북한측은 우리말로 '고려', 영문자로 'KORYO'로 할 것을 주장
- 3월 13일 | 정용석 남북대학생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 남북대학생교류회담 제의
- 3월 24일 | 문공부, 민족문학작가회의가 3월 27일 갖기로 한 남북작가회의 예비회담을 대표성 결여라는 이유로 불허
- 3월 25일 | 문익환 목사, 평양 방문
- 3월 28일 | '90 북경 아시아 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관련 제2차 남북체육회담 본회담 <합의사항>
  - ① 단기에 명칭을 표기하지 않고
  - ② 합동훈련을 통해 선수를 선발하며
  - ③ 합동훈련에 참가할 선수는 남북 각기 제11회 베이징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정하게 될 경기참가 정원수 정도로 하되, 종목별 특성에 따라 협의 조정하고
  - ④ 1차 회담에서 북측이 제기한 선수 선발원칙은 구두로 합의하는 조건에서 삭제기로 함.
- 3월 29일 | 이흥구 통일원 장관, 문익환 목사 방북 관련 대북 성명 발표
  - 북한이 우리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과 성의를 오히려 대남 정치공작적 차원에서 계속 대응해 온다면 이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
- 3월 31일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설치
- 3월 31일 | 북한 직업총동맹, 공개서한을 통해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에 남북한 노동자간 공동행사 제의

- 3월 31일 | 문교부, 통일안보교육 지도자료 발간 배포
- 4월 1일 | 북한 조평통, 문 목사 방북과 관련한 성명 발표  
- 만일 남조선 당국자들이 문익환 목사를 탄압하게 된다면 그들 스스로 우리와 대화도 하지 않고 통일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 4월 4일 | 허형구 법무부 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승인 없는 대북 접촉 처벌 강조
- 4월 17일 | 백남준 남북고위당국자 예비회담 단장, 제3차 예비회담 재연기 통보
- 4월 17일 | 북한 김형진 남북체육회담 단장, 제3차 남북체육회담을 7월 18일 연기 통보
- 4월 21일 |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남북교류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전까지 적용될 남북교류협력 기본지침과 운영세칙 의결
- 4월 22일 | 손성필 북적 위원장, 한적 총재에게 평양축전 초청인사 편지 접수 요구
- 4월 24일 | 김상협 한적 총재, 남북직통전화의 정치적 이용 불용 통보
- 4월 24일 | 미국 상무부, '88년 10월 발표한 미국의 대북한 제재 완화조치에 따라 인도적 상품의 대북한 수출 허용
- 4월 24일 | 북한 김일성 주석, “노태우 대통령과 한국의 민주인사들이 우리의 방북초청을 받아들여 조속히 우리측과 만나주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4월 29일 | 통일원, 북한측이 공개형식에 의한 각계 인사 55명 초청에 대해 “남북 국회회담을 비롯하여 남북간의 정상적인 대화통로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북한이 이번에 각 정당 대표 및 정계·사회계 인사와 함께 다수의 재야인사들을 선별적으로 초청한 것은 우리 사회의 국론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책략”이라고 비난
- 4월 29일 | 정부,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발표  
- 중국·소련·동유럽권 등 북방 사회주의 국가를 여행할 경우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외여행중일 때는 재외공관을 통해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 5월 9일 | 제448차 군사정전위원회, 공산군측 제의로 개최  
- 공산군측: 충남 서산에 세계 최대의 핵공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핵전쟁 위험 제거를 회담의 의제로 협의 주장  
- 유엔측: 핵문제는 정전위 소관사항이 아니다며 양쪽의 신뢰구축을 위해 비무장지대 공동감시조 부활, 심리전 중지, 주요 군사훈련 참관 등을 우선 토의하자고 대립
- 5월 19일 | 북한 조평통, 남한의 대북정책이 문 목사 사건을 계기로 유화정책에서 반공 대결정책으로 바뀌었다고 비난하면서 남한과 대화 불필요 주장
- 5월 24일 | 북한 전영을 조선역사학회 회장, 국사편찬위원회에 역사학자회담 제의
- 5월 26일 | 채문식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수석대표, 북한 대표단장에게 6월 중순 판문점에서 제8차 준비 접촉을 갖자고 제의

- 5월 29일 | 국회 본회의, 「사회안전법」 폐지하고 「보안관찰법안」 가결
- 5월 31일 | 손성필 복직 위원장, 한적 총재에게 제2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을 8월 15일경 교환하자고 제의
- 6월 2일 | 북한 종교인협의회, 남북한 종교인회담 개최 제의
- 6월 10일 | 북한의 역사학자회담 제의에 대해 남한 당사자 환영 답신
- 6월 12일 | 김상협 한적총재,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의
- 6월 12일 | 정부, 남북교류협력 기본지침 발표
- 6월 20일 | 북한 전금철 남북국회회담 준비 접촉 대표단장, 제8차 준비 접촉 6월 28일 재개 제의
- 6월 21일 | 문공부, 남북문화교류협의회 구성 발표
- 6월 22일 | 손성필 복직 위원장,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7월 14일 재개 제의
- 6월 23일 | 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신현확), 통일행정체계 재조정안 확정
  - 이 조정은 국토통일위의 명칭을 통일원으로 하고 장관의 지위를 부총리로 격상하며 그 역할은 ①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전략과 대응방침 결정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각종허가·승인 등 중요사항 처리 ③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등으로 하였음. 또 통일원 장관을 위원장으로 외무·국방·문교·문공장관 및 안기부장 등 관련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상설화해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에 관해 심의·조정하도록 결정
- 6월 26일 | 채문식 남북국회회담 수석대표,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제8차 준비 접촉(7월 11일) 수정 제의
- 6월 30일 | 임수경 전대협 평양축전 참가 대표, 평양 도착
- 7월 6일 | 북한 전금철 조국통일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문익환 목사 석방과 임수경 양 체포 반대 입장 표명
- 7월 6일 | 채문식 남북국회회담 준비 접촉 수석대표, 제8차 준비 접촉 연기통보
- 7월 7일 | 최병렬 문화공보부 장관, 7.7선언 1주년 맞아 남북관계 개선 노력 지속적 추진 성명
- 7월 10일 | 송한호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 수석대표, 북한의 대화자세 시정 촉구 통보
- 7월 12일 | 김상협 한적 총재,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제의
- 7월 15일 | 장충식 남북체육회담 수석 대표, 북한의 대화 자세 시정 촉구 통보
- 7월 18일 | 북한 남북국회회담 준비 접촉 대표단, 제8차 준비 접촉 8월 중순 재개 제의
- 7월 20일 | 북한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 대표단, 제3차 예비회담 8월 말 재개 제의
- 7월 20일 | 북한 허담 조평통 위원장, 이흥구 통일원 장관에게 임수경 양의 관문점을 통한 무사귀환 보장과 일체의 탄압 금지 촉구
- 7월 23일 | 북한 남북체육회담 대표단, 제3차 회담 8월 10일 재개 제의

- 7월 24일 | 손성필 북적 위원장, 한적 총재에게 제3차 체육회담 재개 요구
- 7월 25일 | 유엔군 사령부, 임수경 양의 군사분계선 통과 불허 답신
- 7월 26일 | 북한, 남북한 단일국가 유엔가입 주장  
- 한국의 유엔 단독가입은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하고 두 개의 한국을 국제적으로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 7월 31일 | 미국 상원, 행정부에 1990년 4월 1일 이전까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5개년 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주한미군 감축 보고안 제출 요구
- 8월 1일 | 북적, 남북적십자회담 실무접촉 개최(8월 12일, 판문점) 제의
- 8월 9일 | 장충식 남북체육회담 수석대표, 남북단일팀 문제 협의를 위한 분위기 조성 촉구 성명
- 8월 11일 | 김상협 한적 총재, 북적 위원장에게 남북적십자회담 재개와 이산가족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9월 중 접촉 제의
- 8월 15일 | 노태우 대통령, 제4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 통일방안의 기본구상 제시  
-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남과 북이 깊은 불신과 오랜 대결, 적대의 장벽을 그대로 두고는 통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 현실임. 남과 북은 통일을 이루는 중간 단계로 우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공존공영하면서 개방과 교류·협력을 통하여 민족공동체를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야함.
- 8월 15일 | 임수경 양·문규현 신부, 판문점 통과 귀환
- 8월 25일 | 북한 전금출 남북국회회담 준비 접촉 단장, 제8차 준비 접촉 9월 중순 재개 제의
- 8월 26일 | 손성필 북적 위원장,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개최(9월 9일) 제의
- 9월 1일 | 북한, 남북체육회담(9월 13일)·남북총리회담(9월 18일) 개최 제의
- 9월 5일 | 김상협 한적 총재,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대표단 파견통보(9월 27일 10:00, 판문점 중감 위 회의실, 대표 3명)
- 9월 11일 | 노태우 대통령, 제147회 정기국회 연설에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① 민족공동체헌장을 마련해 통일헌법에 의해 민주공화국을 건설할 때까지 남북관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규칙을 마련  
② 민족공동체헌장에 기초한 남북정상회의와 실행기구인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등의 과도기구를 설치  
③ 남북평의회에서 마련한 통일헌법을 바탕으로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일에 이른다는 구상
- 9월 12일 | 장충식 남북체육회담 수석대표, 제3차 회담 재개(10월 20일) 제의
- 9월 16일 | 송한호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 수석대표, 제3차 예비회담 개최(10월 12일) 제의
- 9월 18일 | 채문식 남북국회회담 준비 접촉 수석대표, 제8차 준비 접촉 개최(10월 25일) 제의

- 9월 20일 | 북적, 남북적십자회담 실무접촉을 갖자는 한적 제의(9월 27일)에 동의
- 9월 27일 | 제2차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관련 제1차 실무대표 접촉, 제11차 남북적십자 본회담과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문제 토의
- 9월 28일 | 북한, 당국·정당·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당국·정당·단체간 민족통일협상회의 소집 제의
- 10월 6일 | 북한, 남북총리회담 제3차 예비 접촉 제의(10월 12일)에 동의
- 10월 6일 | 제2차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관련 제2차 실무대표 접촉  
- 적십자 본회담 개최 및 고향방문단·예술단의 교환시기와 구성문제 등을 비공개로 논의
- 10월 8일 | 노태우 대통령, 미의회 양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촉구
- 10월 12일 | 남북고위급회담 제3차 예비회담  
- 남측은 '남북 통행·통신에 관한 일반합의서' 마련을 제의했고 북측은 '민족통일협상회의' 제안 수락을 요구
- 10월 12일 | 남북교수·학술교류추진위원회 발족
- 10월 16일 | 북한, 제3차 남북체육회담을 열자는 남한 제의(10월 20일)에 동의
- 10월 16일 | 제2차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관련 제3차 실무대표 접촉  
- 예술공연단과 고향방문단은 12월 8일, 적십자 본회담은 12월 15일 평양에서 개최기로 합의했으나 규모, 방문지, 예술공연 내용, 공연방법, 텔레비전 실황중계 문제는 4차 접촉에서 논의기로 합의
- 10월 20일 | '90 북경 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관련 제3차 남북체육회담 본회담  
- 흰마당에 하늘빛 한반도 지도로 된 남북단일팀 단기 합의
- 10월 21일 | 북한,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제8차 준비 접촉을 갖자는 남한 제의(10월 25일)에 동의
- 10월 25일 | 남북국회회담 제8차 준비 접촉  
- 남측은 대표회담, 북측은 연석회의 주장
- 11월 2일 | 미국 상하양원 합동위원회, '년-위너수정안' 통과  
- 이 수정안은 부시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감축에 관해 한국 정부와 협의, 그 결과를 내년 4월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 11월 8일 | 제2차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관련 제4차 실무대표 접촉  
-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 규모, 방문지, 예술단공연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양측 주장 대립
- 11월 9일 | 북한 외교부, 한반도 비핵지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3자회담 개최 제의  
- 이 회담에서는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핵무기 철수문제를 토의해야하며 이 문제가 합의되면 남북한이 회담을 열어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한편 핵보유국들이 이를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문제를 토의·해결해야 할 것임. 남북한 공동선언에서는 조선반도와 12마일 영해 및 영공을 비핵지대로 선포하고 북과 남이 핵무기 시험·생산·저장과



반입을 하지 않으며 외국 핵무기의 배치 및 핵무기를 적재한 외국 함선·비행기의 출입과 통과를 금지하는 문제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공동선언과 담보문건 초안 작성을 위한 전문가급 회담과 그의 정식 채택을 위한 당국 대표들의 회담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을 것임.

- 11월 13일 | 정부, 유엔 회원국들에 한국의 유엔가입 당위성을 알리는 공문 배포
- 11월 15일 | 남북고위급회담 제4차 예비회담
- 11월 16일 | '90 북경 아시아 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관련 제4차 남북체육회담 본회담  
- 합의사항: 단가(아리랑), 단기(흰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지도), 단일팀 이름(코리아)
- 11월 21일 | 제2차 고향방문 및 예술 공연단 교환 관련 제6차 실무대표 접촉  
- 예술단 규모문제는 합의하였으나 예술공연 내용·횟수·대상자 선정 등의 문제는 여전히 이견
- 11월 24일 | '90 북경 아시아 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관련 제5차 남북체육회담 본회담  
- 선수 선발전의 공개(남측)·비공개(북측) 문제로 논란
- 11월 27일 | 제2차 고향방문 및 예술 공연단 교환 관련 제7차 실무대표 접촉  
- 북측의 '꽃피는 처녀', '피바다' 공연 주장을 남측이 수용하지 않는 문제로 논란
- 11월 29일 | 남북국회회담 제9차 준비 접촉
- 12월 1일 | '90 북경 아시아 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관련 제1차 실무대표 접촉  
<합의사항>  
① 최종 선발전은 남북을 번갈아 오가며 1회 이상 실시  
② 기록종목 중 단체경기는 팀워크를 고려, 이긴 팀을 선발  
③ 배구·농구 등 구기종목은 2승을 먼저 거둔 팀을 위주로 선발하되 진 팀의 우수선수도 일부 포함  
④ 선수단 경비는 양쪽이 공동부담  
- 의견대립: ① 선수 선발전 공개 여부 문제 ② 단장제 문제 ③ 공동사무국 설치장소 문제 등
- 12월 4일 | 제2차 고향방문 및 예술 공연단 교환 관련 실무대표 접촉(수석대표 단독 접촉)  
- 12월 8일 예정됐던 제2차 고향방문단과 예술단 교환이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일치
- 12월 6일 | '90 북경 아시아 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관련 제2차 실무대표 접촉  
- 합동훈련과 강화훈련으로 구분해 실시한다는 원칙 합의, 공동사무국 설치문제와 선수 선발 문제 등에는 이견
- 12월 7일 | 송영대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수석대표, 예술공연 내용 변경 및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촉구
- 12월 7일 | 김상업 한적 총재, 방문단 교환 및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촉구
- 12월 11일 | 북한 박영수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대표단장, 예술공연 내용변경 거부
- 12월 14일 | 북한 정준기 민족통일협상회의 준비위원장, '민족통일협상회의' 예비회담 개최 제의

- 12월 15일 | '90 북경 아시아 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관련 제3차 실무대표 접촉
- 12월 15일 | 송영대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수석대표, 예술공연 내용변경 재촉구
- 12월 20일 | 남북고위급회담 제5차 예비회담
- 12월 21일 | 북한 박영수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대표단장, 예술공연 내용변경 거부
- 12월 22일 | '90 북경 아시아 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관련 제6차 남북체육회담 본회담
- 12월 26일 | 통일원, 민간부문의 북한 주민 접촉 및 초청 승인현황 발표
- 12월 27일 | 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 발표
- 12월 29일 | 송영대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수석대표, 예술공연 내용 변경시 실무대표 접촉 재개 표명



**1990년대**

# 1990년

- 1월 1일 | 북한 김일성 주석, 신년사를 통해 남북 최고위 당국·정당 수뇌협상회의를 제의
  -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북과 남 사이에 자유내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북과 남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우리는 이러한 협상을 위하여 북과 남의 최고 위급이 참여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의함. 우리는 또는 광범한 협의를 거쳐 민족 공동의 통일방도를 확정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당국과 정당·단체 대표들이 참가하는 민족통일협상회의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계속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
- 1월 8일 | 북한, 남북 자유왕래 위한 장벽 제거에 미국 협조 요청
- 1월 9일 | 북한 연형묵 정무원 총리, 대남서한 직접전달 위한 연락관 서울과전 협의 실무접촉 제의
- 1월 10일 | 노태우 대통령, 남북왕래 3통(통행·통신·통상) 협정을 위한 정상회담 촉구
- 1월 10일 | '90 북경 아시아 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관련 제4차 실무대표 접촉
- 1월 10일 | 한·미 양국 정부, '90팀스피리트훈련 규모 10% 축소 실시 발표
- 1월 13일 | 북한, 남북한 당국 및 정당 수뇌협상회의 제의
- 1월 15일 | '90 북경 아시아 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관련 제5차 실무대표 접촉
- 1월 17일 | 북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의장, 제84차 IPU총회에서 단일대표팀 구성 및 참가 제의
- 1월 18일 | '90 북경 아시아 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관련 제7차 남북체육회담 본회담
  - 남측: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와 3개의 <부속합의서> 제시
  - 북측: 합의서 이행보장방안에 대해서는 토의를 거부
- 1월 19일 | 김재순 국회의장, IPU총회 단일대표단 구성 불필요 및 남북국회회담 성사노력 촉구 성명
- 1월 22일 | '90 북경 아시아 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관련 제6차 실무대표 접촉
  - 북측은 회담결렬 책임을 남측에 전가함으로써 이렇다할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끝마침.
- 1월 23일 | 남북회담 북한대표단, 당국·정당 수뇌협상회의 호응촉구 및 콘크리트 장벽 철거 주장 연합 성명
- 1월 24일 | 남북국회회담 제10차 준비 접촉
- 1월 29일 | '90 북경 아시아 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관련 제8차 남북체육회담 본회담
  - 남측: 합의사항 이행보장방안의 내용과 취지가 명문화된다면 형식면에서 구애받지 않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북한측의 성의있는 대화자세 촉구
  - 북측: 한국측이 제시한 합의사항 이행보장장치가 단일팀을 구성하지 못하도록 난관을 조성

하기 위한 제동장치라고 주장하는 등 남북체육회담을 사실상 결렬상황으로 몰아가려고 함.

- 1월 29일 | 한·미 양국, 주한 미공군 기능 통합 및 기지 재조정 기획 발표
- 1월 31일 | 남북고위급회담 제6차 예비회담  
- 북측이 제6차 예비회담에서 긴급제안으로 콘크리트장벽 제거, 남북당국·정당수뇌급 협상회의 개최,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문제 등을 들고 나와 실질적인 토의를 거부
- 2월 1일 | 장영훈 국무총리, 북한의 당국 및 정당수뇌협상회의 제의와 관련해 거부 의사 표명
- 2월 2일 | 제454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콘크리트 장벽 제거문제로 논란
- 2월 2일 | 남·북·미 3자 군축 학술회의,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개최
- 2월 7일 | '90 북경 아시아 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관련 제9차 남북체육회담 본회담  
- 남북단일팀 협상 결렬
- 2월 8일 | 북한, 팀스피리트훈련 기간 중 대화중단 선언
- 2월 8일 | 정부, '안보정책실무대책단' 구성(단장:임동원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장), 남북군축 검토 착수  
- 평화협정체결, 비무장지대의 재비무장화 방안, 평화시 건설, 비무장지대 후방일정지역의 완충지대화, 군사훈련 상호 사전통보 및 참관 등을 실현시킬 구체적인 전략 마련 목표
- 2월 9일 | 국토통일원 대변인, 북한의 성실한 대화자세 촉구 성명
- 2월 11일 | 문화부·통일원 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남북문화교류 5개 원칙 발표(임진각)  
① 분단 이전의 전통문화 우선 교류  
② 남북간 경쟁심과 승부를 유발하는 문화교류 배제  
③ 전통문화의 원형을 변형·훼손하는 표현양식의 지양  
④ 쉽고 작은 일부터 단순명료한 접근 시도  
⑤ 공동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2월 12일 | 북한 김형진 남북체육회담 대표단장, 3개 전제조건 수락 촉구  
① 반드시 유일팀으로 참가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선포할 것  
② 남한쪽이 합의사항 이행보장 장치로 제시한 부칙안을 전면 철회할 것  
③ 별개팀으로 참가하겠다는 남한쪽 체육관계자의 발언 취소할 것
- 2월 14일 | 장충식 남북체육회담 수석대표, 3개조건 철회 및 이행보장 방안에 동의 촉구
- 2월 15일 | 북한 정부·정당대표 제2차 연합회의, 남북 당국·정당수뇌급 협상회의 개최 촉구
- 2월 19일 | 북한 안병수 조평통 서기국장, 휴전선 콘크리트장벽 관련 자료전달 및 참관단 교환을 제의  
- 오는 22일 오후 3시 관문점에서 영화필름, 녹화테이프, 사진자료등을 한국측에 넘겨주며 남북한의 노동자·농민·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콘크리트장벽의 유무를 확인하는 참관단을 조직하자고 제의
- 2월 21일 | 국토통일원 대변인, 콘크리트 장벽 참관단 구성제의 거부 성명 발표

- 2월 21일 | 남북체육회담 북한대표단, 회담결렬에 대한 책임전가 성명
- 2월 22일 | 국무회의, 「남북협력기금법안」 의결
- 3월 1일 | 노태우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김일성 주석에게 남북정상회담 촉구
  - 정치군사문제를 포함한 남북간의 모든 현안을 제한없이 논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남북한 정상회담을 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함.
- 3월 3일 | 강명훈 국무총리, 위장선전 책략 중지 및 기존대화 재개 촉구
- 3월 3일 | 이상훈 국방장관, 제4땅굴 발견 발표
- 3월 5일 | 북한 외교부, 남·북·미의 3자회담 촉구
  - 미국이 실제로 주한미군 완전철수의 시작을 의미하는 부분철수를 위한 그 어떤 실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이를 환영할 것이며 우리는 이와 관련한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축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
- 3월 5일 | 국토통일원 대변인, 땅굴관련 성명 발표
  - 남침용 땅굴과 남북대화를 양립시키려는 북한의 태도는 결코 용인될 수 없음. 남북이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땅굴을 파는 등 대화의 상대방을 교란, 전복해 보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망상부터 버려야 할 것
- 3월 6일 | 송한호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수석대표, 북한의 제4남침용 땅굴에 대한 유감표시 및 남북고위급회담 제7차 예비회담 개최 촉구
- 3월 8일 | '90 팀스피리트 한미연합군사훈련 시작
- 3월 9일 | 북한 백남준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대표단장, 제4남침용 땅굴 책임회피
- 3월 12일 | 북한산 수입화물 중국 통해 인천항에 입항
  - 1989년 6월 한국과 중국간 해운정기항로가 개설된 뒤 북한 화물이 이 항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것은 처음
- 3월 20일 | 제12차 서울 세계시인대회에 북한문인 6명 초청
- 3월 22일 | 이상훈 국방장관, '90년 지휘서신 제1호(국방 당면과제의 추진방향) 발표
  -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간 군비통제정책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통일정책을 위해 매우 중요한 대북협상의 일환이며 군사적 신뢰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군비제한 또는 군비축소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 3월 23일 | 북한 연형묵 총리,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3월 30일 콘크리트장벽의 존재 유무를 공동조사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3월 28일 판문점에서 갖자고 제의
- 3월 23일 | 통일원 대변인, 콘크리트 장벽 공동조사제 의와 관련 남침용 제4땅굴 발견에 기인한 국제적 비난을 희석시키고 남북정상회담의 회피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논평
- 3월 28일 | 김상업 한적 총재, 한필성씨 노모 상봉 협조 요청(한필성씨 편지동봉)

- 3월 30일 | 북한 영화 '참된 심정' 등 4편, 통일원 공산권자료센터 시청각실에서 상영  
- 정부 부처가 북한 영화를 공개 상영하기는 처음
- 4월 2일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행위를 처벌토록 한 국가보안법 7조 1항, 5항은 위헌법률은 아니지만 위헌적 요소가 많으므로 국가의 안전·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한하여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
- 4월 7일 | 장영훈 국무총리, 북한이 제의한 남북한 당국 및 정당수뇌 협상회의와 콘크리트장벽 공동조사에 관한 제의 거부
- 4월 20일 | 정부, 부처별 남북교류협력 증진방안 종합대책 확정 발표  
 ① 문교부: 조국순례대행진, 고적답사, 유학생과 체육대학 교류, 한의학 학술교류 등  
 ② 문화부: 통일민속잔치·세시풍속놀이에 북한 참여 유도, 문화재 공동보존과 조사연구 등  
 ③ 체육부: 쌍방에서 여는 체육행사에 상호 초청방문 추진, 축구·아이스하키 경평(서울·평양)전 부활 및 상호 전지훈련  
 ④ 상공부: 북한 1차상품 반입 확대, 연계무역 활성화, 중장기 연불 반출제도 개선 등을 통한 남북한 직교역 확대 전환  
 ⑤ 동자부: 북한의 전력난 및 계절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력계통 연결, 대륙붕 유전 등 부존자원 공동개발  
 ⑥ 교통부: 남북간 교통망 연결을 위한 남한쪽 지역의 경의선·경원선 철길 복원, 금강산 공동개발을 위한 동해안 도로·철도 건설 추진  
 ⑦ 과기처: 민간차원의 남북과학기술교류 추진협의회 구성, 국내 개최 국제학술행사에 북한 과학기술자 초청 등  
 ⑧ 환경처: 환경보전문제에 관한 학술교류와 비무장지대 등의 생태계 공동조사
- 4월 25일 | 남북고위급 예비회담 대표, 제7차 예비회담 개최(5월 22일) 제의
- 5월 7일 | 김상협 한적 총재,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 6월 중순 평양개최 제의
- 5월 12일 | 현대, 대북한 무상공여 위해 중장비, 승용차 일본 반출
- 5월 16일 | 북한 조평통, 금강산 공동개발 무효선언 및 현대와의 경제협력 취소, 건설장비 등의 인수 거부
- 5월 17일 | 북적, 한적의 6월 중 제11차 적십자 본회담 재개 제의 거부
- 5월 24일 | 북한 김일성 주석,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조국통일 5대 방침 제시  
- 온 민족의 절박한 요구에 맞게 하루빨리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옹계 해결해야 할 것임.  
 ①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해야 함.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②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북과 남 사이에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을 실현하여야 함. 국토와



- 민족을 갈라놓고 있는 장벽을 제거하고 북과 남 사이에 자유로운 내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는 것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
- ③ 북과 남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는 원칙적 대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함. 조선문제는 역사적으로 국제관계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음. 조선이 분열된 것도 국제관계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며 조선의 통일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
  - ④ 조국통일을 위한 대화를 발전시켜야 함. 온 민족이 의사를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유일한 길은 대화를 발전시키는 것임.
  - 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함. 조국통일 위업은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 위업이며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임. 조선 민족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관계없이, 그리고 노동자·농민·청년학생·정치인·경제인·문화인·종교인 할 것 없이 모두 다 조국통일의 주인으로서의 자기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조국통일 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할 숭고한 민족적 의무를 지니고 있음.

**5월 28일 | 북한, 미군유해 5구와 유품 인도**

**5월 31일 | 북한 남북회담 대표단, 합동성명을 통해 남북대화 즉각 재개 촉구**

**5월 31일 | 북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안 발표**

1. 북남 신뢰조성

- ① 북과 남은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제한
  - ㄱ. 외국군대와외의 모든 합동군사연습과 군사훈련을 중지
  - ㄴ. 사단급 이상 규모의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금지
  - ㄷ.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일체의 군사연습을 중지
  - ㄹ. 자기 영내에서 외국군대의 군사연습을 허용하지 않음
- ②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
  - ㄱ. 비무장지대 안에 배치한 모든 군사인원들과 군사장비들을 철수
  - ㄴ. 비무장지대 안에 설치한 모든 군사시설물들을 해체
  - ㄷ. 비무장지대를 민간인들에게 개방하며 평화적 목적에 이용
- ③ 북과 남은 우발적 충돌과 그 확대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함.
  - ㄱ. 쌍방 고위군사당국자 사이의 직통전화를 설치·운영
  - 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군사적 도발행위를 금지

2. 북남 무력축감

- ④ 북과 남은 무력을 단계적 축감
  - ㄱ. 병력축감은 쌍방 사이의 군축안이 합의된 때로부터 3~4년 동안에 3단계로 나누어 실시. 첫단계에서는 쌍방이 각각 30만 명 선으로, 둘째 단계에서는 다시 각 20만 명 선으로 축소, 세번째 단계가 끝날 때에는 쌍방이 각각 10만 명 아래 수준에서 병력을 유지
  - ㄴ. 단계별 병력감축에 상응하게 군사장비들도 축소·폐기

- ㄷ. 정규 무력축감의 첫 단계에서 모든 민간군사조직과 민간무력을 해체
- ⑤ 북과 남은 군사장비의 질적 갱신을 중지
  - ㄱ. 새로운 군사기술 장비의 도입과 무장장비를 반입하지 않음.
  - ㄴ.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군사기술과 무장장비를 반입하지 않음.
- ⑥ 북과 남은 군축정형을 호상 통보하며 검증을 실시
  - ㄱ. 무력축감 정형을 호상 상대측에 통지
  - ㄴ. 상대측 지역에 대한 호상 현지시찰을 통하여 군축합의 이행정형을 검증
- 3. 외국무력의 철수
  - ⑦ 북과 남은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
    - ㄱ. 남조선에 배치된 모든 핵무기들을 즉시 철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
    - ㄴ. 핵무기를 생산·구입하지 않음.
    - ㄷ. 핵무기를 적재한 외국비행기, 함선의 조선경내로의 출입과 통관을 금지
  - ⑧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서 일체의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
    - ㄱ. 남조선 주둔 미군과 그 장비들이 북남 무력축감에 상응하게 단계적으로 완전 철수 되도록 함.
    - ㄴ. 미군철수에 상응하게 남조선에 설치된 미 군사기지들도 단계적으로 철폐
- 4.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 ⑨ 북과 남은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함.
    - ㄱ.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안에 중립국 감시군을 배치할 수 있음.
    - ㄴ. 군비통제와 북남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군사상의 분쟁문제들을 합의·해결하기 위하여 쌍방 군 총참모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북남 군사위원회를 구성·운영
  - ⑩ 북과 남은 협상을 통하여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대폭적인 군축에 합의하여야 함.

6월 4일 | 북한 정당·사회단체 연합회, 민족통일준비위원회 구성 제의

6월 7일 | 국무총리실 산하 안보정책실무대책단, 북한이 5월 31일 제시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안'의 일부 수용문제 검토

- 북한 제의 중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쌍방 고위당국자간의 직통전화 운영, 군축이행여부를 확인키 위한 현장 검증 등은 우리측의 군사적 신뢰구축방안과 유사한 것으로서 북한의 신축적인 태도 변화로 볼 수 있다는 데 합의

6월 20일 | 북한 전금철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단장·백남준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단장, 공동명의로 고위급회담 예비회담(6월 28일), 국회회담 준비 접촉(7월 12일) 각각 판문점에서 개최 제의

7월 3일 | 남북고위급회담 제7차 예비회담

- 7월 6일 쌍방 실무대표 2명씩 참가하여 합의문 작성을 위한 실무접촉을 갖고 7월 26일 제8차 예비회담을 열어 서명한 뒤 합의서 교환기로 합의

7월 4일 | 북한 정부·정당·사회단체 대표, 민족통일협상회의 소집 제의

7월 5일 | 채문식 남북국회회담 준비 접촉 대표, 제11차 준비 접촉(7월 19일) 개최 제의

- 7월 5일 | **북한 조평통, 8월 15일부터 관문점 공동경비구역내 북측지역의 일방적 개방 선언**  
 ① 북남 사이의 접촉과 내왕은 통일문제와 밀접히 결부돼 진행돼야 함.  
 ② 사상과 이념·정견에 관계없이 정당·단체·각계각층 인민들이 차별없이 참가해야 함.  
 ③ 법률적·사회적 제한의 철폐와 상대방을 비방하는 일체의 사회정치적 행사 중지
- 7월 6일 |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제1차 실무대표 접촉**  
 -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합의
- 7월 12일 |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제2차 실무대표 접촉**  
 - 합의서 문안 상호교환
- 7월 16일 | **외무부 1차관보·국방부 군비통제실장·통일원 정책실장·안기부 대표, 4개 부처 요원으로 군비 통제기획단 구성**
- 7월 17일 | **북한, 한국 국회사태를 이유로 남북국회회담 제11차 준비 접촉 연기 통보**
- 7월 20일 | **노태우 대통령, 남북 간의 민족대교류를 위한 특별선언 발표**  
 - 나는 해방 45주년을 맞는 올해 8월 15일을 전후한 5일간을 '민족대교류의 기간'으로 선포 함. 우리는 8월 13일부터 닷새 동안 관문점을 열어놓고 북한 동포들을 제한 없이 받아들일 것임. 우리는 이들이 원하는 남쪽의 어느 지역도 자유로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원하는 사람 누구라도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임. 우리는 남쪽을 방문하는 모든 동포들에게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숙식도 지원할 것임. 우리는 또한 이 기간 중 우리 국민 누구라도 제한 없이 관문점을 통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 우리는 남쪽을 찾아오는 모든 북한동포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할 것이며 이에 상응한 북한 측의 조치를 기대함. 나는 북한이 관문점 북측 지역뿐 아니라 북한의 어느 곳이라도 자유로이 가볼 수 있도록 전 지역을 개방하고 북한 방문을 원하는 남쪽 동포들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한 없이 받아들이기를 바랍.
- 7월 20일 | **강영훈 국무총리, 8.15 민족대교류 실현을 위한 실무접촉 제의**
- 7월 20일 | **북한 조평통, 민족대교류 특별발표 관련 콘크리트 장벽 철거, 국가보안법 철폐 및 구속자 석방, 범민족대회 보장 등 전제조건 제시**
- 7월 21일 | **북한 조평통, 분단장벽 해체 남북공동추진위원회 구성 제의**
- 7월 21일 | **노태우 대통령, 교류협력법 시행령 조속 마련 지시**  
 ① 총리실: 민족대교류 실천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② 기획원: 필요예산의 확보와 배정으로 교류사업에 차질없는 지원  
 ③ 재무부: 북한 화폐의 환전문제, 관세상 편의 제공, 여행중 손해·사고에 대한 보상  
 ④ 보사부: 전국 의료기관의 진료 및 응급치료 준비  
 ⑤ 건설교통부: 서울-관문점간의 통일로뿐 아니라 사용 가능한 도로·철도망의 건설 관리, 서울 이북지역의 필요도로 확보

- ⑥ 체신부: 우편·전화 편의시설 제공, 필요시 이동우체국 설치
- ⑦ 통일원: 각종 남북대화 뒷받침, 남한 주민의 북한 방문 절차 마련

- 7월 23일 | **법무·국방·통일원 3부장관, 7월 20일 민족대교류 제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3개항 제의**
  - ① 북한과 전민련 등이 8월 15일 판문점에서 개최할 예정인 범민족대회에 북한이 우리측 단체나 인사를 선별 초청하지 않고 각계각층을 망라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 ② 남북 안보관계 법률 및 정치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법무당국자(장관) 회담을 열며
  - ③ 콘크리트장벽과 땅굴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 조사할 남북공동조사단을 구성할 것
- 7월 23일 | **북한 연형묵 정무원 총리, 당국 및 정당 수뇌협상회의 소집을 위한 접촉 제의**
- 7월 23일 | **제456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담에서 북한에 3개항 요구**
- 7월 24일 | **강영훈 국무총리, 민족대교류 제의(7월 20일)에 대한 후속조치로 3개항 제의 관련 남북군사 및 법무당국자 실무접촉과 민족대교류 실현을 위한 실무접촉에 동의 요구**
- 7월 24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법무당국자 실무접촉 및 군사당국자 실무접촉 거부**
- 7월 24일 | **강영훈 국무총리, 북한이 제의한 당국 및 정당 수뇌협상회의 접촉 제의 거부**
- 7월 26일 | **남북고위급회담 제8차 예비회담**
  -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 서명·교환
  - ① 회담 명칭: 남북(북남)고위급회담
  - ② 회담 의제: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 문제
  - ③ 회담 일자: 제1차 회담은 9월 4~6일 서울, 제2차 회담은 10월 16~19일 평양 개최
  - ④ 회담 대표단: 총리를 수석대표로 7명 등
- 7월 26일 | **강영훈 국무총리, 남북군사 및 법무당국자 실무접촉과 민족대교류 실현을 위한 실무접촉에 동의 요구**
- 7월 30일 | **강영훈 국무총리, 민족대교류 실현 위한 절차협의를 호응촉구(8월 7일까지 회담요구)**
- 7월 30일 | **정부, 을지훈련 취소 발표**
- 8월 1일 | **정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공포(전 30조, 부칙으로 구성)**
- 8월 2일 | **홍성철 국토통일원 장관, '7.20 대통령 특별발표' 관련 민족대교류기간 중의 방북희망자 신청 접수 발표(8월 4~8일)**
- 8월 4일 | **북한 연형묵 정무원 총리, 당국·정당 수뇌 협상회의 실무접촉 호응 촉구**
- 8월 6일 | **국토통일원, 북한의 위문단 파견제의 관련 위문단 방문은 허용 하지만 재소자 직접면회는 불허**
- 8월 7일 | **강영훈 국무총리, 남북고위급회담 위한 통신·항공 실무자 접촉 제의**
- 8월 7일 | **북한 연형묵 정무원 총리, 위문단 방문 관련 신변안전 보장조치 요청**
- 8월 7일 | **북한 연형묵 정무원 총리, 제1차 고위급회담 위한 실무접촉 관련 쌍방 책임연락관 명단 교환 후 다른 날짜를 정하여 접촉 희망**

- 북한 책임연락관 최봉춘 임명
- 8월 8일 | **강영훈 국무총리, 접수된 민족대교류 기간 중 방북신청자 명단 전달**  
- 8월 9일, 15:00와 8월 10일, 15:00 두 차례 중감위 회의실에 연락관 파견, 「위문단」 방문을 환영, 방문기간은 8월 14~17일로 조정 요구
- 8월 8일 | **강영훈 국무총리,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통보 및 통신·항공관계자 실무접촉(8월 10일) 제의**  
- 김용환 책임연락관 임명 통보
- 8월 9일 | **북한 연형묵 정무원 총리, 민족대교류 기간 중 방북신청희망자 명단접수 거부**
- 8월 9일 | **강영훈 국무총리, 민족대교류 기간 중 방문자 명단교환 재촉구**  
- 8월 10일, 15:00 중감위 회의실에서 연락관 파견
- 8월 9일 | **북한, 위문단 구성 발표**  
- 단장 여연구 등 30명과 취재기자 20명
- 8월 9일 | **북한 최봉춘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 책임연락관, 항공·통신 실무자 접촉 연기 통보**  
- 8월 15일 이후 적합한 날짜 통지 예정
- 8월 9일 | **서기원 KBS 사장, KBS와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 공동으로 남북이산가족찾기 방송 및 한반도 생태계 탐사 실시하자고 제의**
- 8월 10일 | **북한 안병수 조평통 서기국장, 민족대교류 기간 중 방문자 명단교환 관련 국토통일원 장관에게 재소자 면회허용, 「국가보안법」 철폐, 전민련의 범민족대회 참가 공식 허락 등 주장**
- 8월 10일 | **국토통일원 대변인, 북한이 선별적으로 수락하는 방북 신청자의 명단과 신변안전보장 각서 교환을 위해 당국 간 연락관 접촉(8월 11일, 판문점) 제의**
- 8월 11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국토통일원 대변인의 쌍방 당국간 연락관 접촉 제의 거부**
- 8월 12일 | **홍성철 통일원 장관, 민족대교류 기간 중 특정단체 소속인원들의 방북 허용 요구**  
- 이들의 명단전달과 신변안전보장각서 접수를 위해 쌍방 당국 간 연락관 접촉(8월 13일, 판문점)할 것을 제의
- 8월 13일 | **강영훈 국무총리, 국토통일원 장관의 민족대교류 기간 중 특정단체 인원 방북허용 요구**
- 8월 13일 | **북한 최의웅 군정위 수석위원, 판문점 북한지역 개방선언을 사실상 철회**
- 8월 13일 | **북한 안병수 조평통 서기국장, 남한 당국은 민간단체들의 접촉과 왕래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 8월 14일 | **국토통일원 대변인, 북한의 방북자 명단 접수거부 사실에 대해 규탄**
- 8월 14일 | **북한 위문단 일행, 우리측 지역 방문거부**  
- 판문점에서 정치선전 행사 진행
- 8월 14일 | **북한 4개 단체 실무접촉 대표, 남한 4개 단체 실무대표와의 접촉무산 관련 연합성명**

① 당국의 간섭 배제 ② 방북 인사들의 석방 ③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8월 15일 | 노태우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치·군사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제한 없이 북한과 협의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언급

- 남북간의 무력포기 선언과 불가침협정의 체결, 현재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와 서울과 평양에 상호 상주대표부를 설치하는 문제 등 모든 문제에 관해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논의할 때가 왔다고 확신함.

8월 19일 | 북한 범민족대회 공동운영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발표

8월 23일 | 남북고위급회담 제1차 책임연락관 접촉

- 남북왕래는 관례에 따라 육로를 이용하며 직통전화는 이미 적십자회담용으로 설치한 전화 회선을 이용하기로 합의

8월 28일 | 남북고위급회담 제2차 책임연락관 접촉

- 비공개 형식으로 개최

8월 30일 | 남북고위급회담 제3차 책임연락관 접촉

- 회담일자(9월 4~7일)와 장소(서울)를 합의하고 ① 숙소와 이동방법 ② 회담 횟수 ③ 회담 운영방법 ④ 오찬·만찬 등을 포함한 체류일정 등을 확정하고 남북 대표단의 명단과 신변안전 각서 교환

9월 4~7일 |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

-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 문제 협의. 남북한의 유엔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단일의석으로 유엔에 가입하는 문제를 연구 검토하기 위한 별도의 대표단을 구성, 실무협의키로 합의

9월 6일 | 북한 연형묵 총리, 노태우 대통령 예방

-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조속 개최 강조, 연총리는 ① 유엔 단일 의석 가입 ② 문익환 목사 등 방북인사들의 석방 ③ 팀스피리트 군사 훈련 중지 등 3개항에 대한 정치적 결단 요구

9월 13일 | 북한 이성호 북적 위원장 대리, 수해관련 위문

9월 13일 | 한적 총재, 제2차 고향방문단 교환문제 등 협의를 위한 제8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제의

9월 17일 | 이성호 북적 위원장 대리,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촉구에 대해 적당한 시기에 회담하겠다고 답변

9월 18일 | 남북고위급회담 유엔가입 관련 제1차 실무대표 접촉

- 북한, 단일의석 유엔가입안의 남북 공동신청 제의

① 단일의석 가입 명칭: 코리아(Korea)

② 깃발: 흰색 바탕에 하늘색 지도가 그려진 것 사용

③ 유엔에서의 의무이행 문제: 남북이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상대방 이익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각각 이행

④ 국제기구 분담금 문제: 남북이 절반씩 분담하거나 현행대로 함.

- ⑤ 유엔대표권: 1개월씩 엇바꾸어 행사
- ⑥ 결의권 행사: 남북 사이에 합의된 문제는 공동으로 찬반을 표시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기권하는 방법으로 처리
- ⑦ 발언권: 합의에 따라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발언하고 대표로 선출

9월 18일 | 북한 올림픽위원장, 남북단일팀 구성 재의

9월 18일 | 한적 총재, 제8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재 재의

9월 21일 | 북한 대표단 대변인, 한국의 유엔 단독가입 노력에 유감표명

9월 22일 | 남북한 올림픽위원회, 북경에서 북경아시안 게임 공동응원단 구성 합의

9월 28일 | 대한소프트볼협회와 북한 야구소프트볼협회, 앞으로 벌어질 국제대회에서 소프트볼 남북단일팀 구성 합의

9월 29일 | 남북통일축구대회 개최 발표

- 10월 11일, 평양(능라도 경기장)과 10월 23일, 서울(잠실올림픽 경기장)에서 각각 개최

10월 5일 | 남북고위급회담 유엔가입 관련 제2차 실무대표 접촉

10월 8일 | 노태우 대통령, 북한과 일본의 관계개선 문제와 관련, 가네마루 일본 전 부수상의 예방을 받고 5개항을 제시

- ① 한국 정부에 미리 충분한 설명을 해줄 것
- ② 남북대화의 의미있는 진전과 연계해 이뤄질 것
- ③ 북한의 핵안전협정 가입을 위해 일본이 설득할 것
- ④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
- ⑤ 북한에 대한 일본의 배상과 경제협력은 수교 이전에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수교 이후라도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10월 9일 |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일정협의를 위한 쌍방 책임연락관 접촉

10월 10~14일 | 제1회 남북영화제 개최(뉴욕)

10월 11일 | 제1차 남북통일축구대회 개최

10월 12일 |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일정협의를 위한 쌍방 책임연락관 접촉

10월 14일 | 범민족통일음악회 참가자(17명), 판문점 통과 방북(체류기간: 10월 14~24일)

10월 16~19일 |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

- 남측: 남북간의 통행·통신·통상 등 3통에 관한 구체안을 제시하고 3개 부문별 공동위원회 설치 재의
- 북측: 상호제도 존중, 내정불간섭 원칙을 담은 남북불가침선언 채택을 제의하고 정치·군사 문제와 교류·협력 문제 병행 토의 시사

10월 18~23일 | 범민족통일음악회 개최

- 10월 23일 | 제2차 남북통일축구대회
- 10월 25일 | 남북체육장관회담 개최
- 11월 5일 | 한적 총재, 제8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일자 수정 제의
- 11월 7일 | 제2차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관련 실무대표 접촉(수석대표 단독접촉)
- 11월 8일 | 제2차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관련 제8차 실무대표 접촉
  - 남측: 적십자 본회담 개최 문제, 혁명가극 공연철회 문제, 60세이상 이산가족 재회 문제 등에 대해 북적측의 태도변화 촉구
  - 북측: 혁명가극 공연에 대한 한적측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 종래의 입장을 고수
  - 8차례의 접촉은 아무런 성과없이 중단
- 11월 8일 | 제8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 교환문제 협의에서 북측이 '꽃피는 처녀' 서울공연을 주장했으나, 남측이 이를 수용치 않아 진전 없이 끝남.
- 11월 9일 | 남북고위급회담 유엔가입 관련 제3차 실무대표 접촉
- 11월 12일 | 북한 연형묵 정무원 총리,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개최(11월 16일) 제의
- 11월 13일 |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 북한의견 청취
- 11월 14일 | 제12차 한미군사위원회(MCM), 팀스피리트훈련은 계속하되 규모는 축소한다고 합의
- 11월 16일 | 제2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대폭적인 방위분담금 증액과 연합지휘체제 내에서의 한국군 역할과 권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 발표
- 11월 16일 | 북한,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전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북한과 미국의 협상에 의해 미군의 핵이 북한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
- 11월 17일 |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 책임연락관 접촉, 실무대표 접촉 개최 합의
- 11월 21일 | 북한 조선음악가동맹, 서울전통음악연수단 대표에 '90년 송년 통일전통음악회 참가와 관련한 예비 접촉 제의
- 11월 21일 |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제1차 실무대표 접촉
- 11월 23일 | 국무회의, 통일원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 11월 27일 |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제2차 실무대표 접촉
- 11월 29일 |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참가위한 제1차 남북체육회담
  - 남측: 회담 의제를 ① 남북통일축구대회 정례회를 비롯한 남북체육교류 실현 문제 ② 국제경기대회의 남북단일팀 구성·참가 문제로 제시
  - 북측: <유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으로 참가하기 위한 합의서>, <제25회 올림픽경기대회 아시아지역 축구예선경기에 남북단일팀으로 참가하기 위한 합의서>,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으로 참가하



기 위한 합의서〉 초안 제시, 이와 관련하여 IOC, 국제축구연맹 및 아시아축구연맹, 국제탁구연맹에 남북 공동 명의로 편지를 보낼 것을 주장. 남북통일축구경기 정례화를 비롯한 남북체육교류 문제에 대해서는 단일팀 구성 문제를 타결한 후 협의하자는 유보적 입장

**12월 1일 |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제3차 실무대표 접촉**

- 남측: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뒤 교류·협력과 정치군사분과위원회를 1개월 안에 구성, 여기서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불가침선언 채택문제를 협의하자고 주장
- 북측: 관계개선 기본합의서를 철회하고 불가침선언과 교류협력합의서를 동시에 채택하자고 주장

**12월 3일 | 통일전통음악회와 관련한 관문점 연락관 접촉에서 방문일정, 공연일정, 공연내용 등 최종합의**

**12월 7일 |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관련 쌍방 책임연락관 접촉, 서울 체류일정 합의**

**12월 8~13일 | '90년 송년통일전통음악회 개최**

**12월 10일 | 북한, 제2차 남북체육회담 개최(12월 20일) 제의**

**12월 11~14일 |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

**12월 18일 | 장충식 남북체육회담 대표단 수석대표, 제2차 남북체육회담 개최일자 수정 제의**

# 1991년

- 1월 1일 | 북한 김일성 주석, 신년사 통해 남북한 정부와 각계 정당·사회 단체들이 참여하는 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 개최 제의**
- 우리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연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음. 우리는 조국통일 방도에 대한 전민족적 합의를 이룩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으로 확정하는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의함. 우리는 쌍무적이건 다무적이건 대화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남조선의 여당인사들과도 만나고 야당과 재야인사들과도 만날 것이며 그 누구에게나 통일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을 것임.
- 1월 1일 | 노태우 대통령, 신년사에서 올해는 주변정세의 급속한 변화속에 남북한 관계가 큰 전기를 맞는 해가 될 것이라고 언급**
- 모스크바와 북경으로 가는 큰 길이 열린 이제 평양으로 가는 길만이 닫혀 있을 수는 없음. 우리는 이 큰 변화를 슬기롭게 이끌어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날을 앞당길 것임.
- 1월 8일 | 노태우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유엔 단독가입 추진 가능성 언급**
- 금년에는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추진하겠지만 북한이 끝내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라도 먼저 가입하고 북한의 가입을 지원할 것임.
- 1월 8일 | 북한 정부·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남북한 당국과 정당·사회 단체들이 참여하는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개최 제의**
- 8·15 46돌을 계기로 남북의 당국자와 민간인, 여당과 야당, 재야의 차별 없이 남북 동수의 대표들과 해외동포 대표들이 참가하여 평양이나 서울에서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자.
- 1월 9일 | 노재봉 국무총리, 북한 정부·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편지 접수 거부**
- 통일방안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책임과 권능을 가진 쌍방 당국간에 민족전체의 의사를 토대로 협의·해결되어야 하며 그렇게 될 때만이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임.
- 1월 12일 | 북한 정무원 대변인, 민족통일정치협상 회의 거부 비난**
- 남조선 당국자들이 대화를 통하여 통일방도를 확정하자고 하는 우리의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소집제안을 결코 혁명책략 발상이니 뭐니 하고 걸고드는 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 아닐 수 없음.
- 1월 15일 |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참가위한 제2차 남북체육회담**
-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1991년 4월, 일본)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1991년 6월, 포르투갈)에 남북단일팀 구성 참가키로 원칙적 합의

- 1월 25일 | 제16차 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 시작
- 1월 30일 |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참가위한 제3차 남북체육회담
  - 남측: 선수선발에서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출전선수는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하여 선발하고,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출전선수는 서울·평양에서의 공개평가전을 기초로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선발 제안. 선수단장은 남북이 각기 단장을 나누어 맡자고 제안
  - 북측: 남북왕래훈련 반대, 공동단장제를 고수
- 1월 30일 | 주 북경 한국무역대표부 설치
- 2월 8일 | 박준규 국회의장,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에게 IPU 평양총회에 우리측 대표단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
- 2월 11일 |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한 책임연락관 접촉(2월 18일) 제의
- 2월 11일 | 한미관계위원회(공동의장 김경원·스칼라피노) 보고서, “한국에 배치된 미군의 핵무기 철수해도 한국안보에 아무 지장 없다”고 주장
- 2월 12일 | 워싱턴 타임스, 북한의 대이라크 스킵드미사일 부품 비밀리 공급 추측 보도
- 2월 12일 |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참가위한 제4차 남북체육회담
  -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6회 세계청소년 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탁구연맹, 국제 및 아시아 축구연맹에 보낼 편지에 관한 합의서〉 채택
- 2월 14일 | 북한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책임연락관 접촉 무기연기 통보
- 2월 18일 | 남북고위급회담 북한대표단,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무기연기 통보
- 2월 18일 | 통일원 대변인,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촉구
- 2월 21일 | 정부, 일본 정부에 북·일 교류 합의 관련 공식항의
  - 북한 노동당과 일본 자민당간의 문화·예술·체육교류 합의와 관련 이것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북·일 관계개선 5원칙에 위배된다고 해명 요구
- 2월 21일 |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참가위한 제1차 탁구단일팀 실무위원회
  - 쌍방은 선수단 결단식 및 해단식 시기·장소, 선수단 출발·귀환 관련 수송 및 경로 등에 관해 각기 의견제시
- 2월 22일 |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참가위한 제1차 축구단일팀 실무위원회
  - 평가전 일시·장소, 평가전 취재기자단 규모 등에 관해 각기 의견제시
- 2월 26일 |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참가위한 제2차 축구단일팀 실무위원회
  -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실무위원회 합의서〉 채택

- 2월 27일 |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참가위한 제2차 탁구단일팀 실무위원회  
-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실무위원회 합의서〉 채택
- 3월 6일 | 미국 리처드 솔로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한반도 비핵지대화 공식 거부  
- 충분한 반대급부 없이 현존하는 안보체제와 핵억지력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비핵지대화를 반대함.
- 3월 25일 |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
- 4월 2일 | 김상협 한적 총재, 제11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평양 개최 제의
- 4월 5일 | 노창희 주유엔대사, 유엔가입문제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면서 유엔단독가입 공표
- 4월 8일 | 노재봉 국무총리,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촉구
- 4월 9일 | 그레그 주한 미국 대사, 한반도비핵지대화 반대표명
- 4월 10일 | 미국 국방부, 120일 전쟁 시나리오 발표
- 4월 10일 | 북한 안병수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 대변인,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재개 전제조건 제시  
① 불가침선언 채택문제와 유엔가입문제 등의 계속 협의  
② 구속인사 석방  
③ 국가보안법 철폐  
④ 범민련 남측본부결성 허용
- 4월 11일 | 통일원 대변인, 안병수 기자회견 관련 논평을 통해 북한은 회담 재개에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즉시 나서라고 촉구
- 4월 12일 | 이종구 국방장관, 한국편집인협회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북한의 핵시설 선제공격 발언  
- 한국은 유사시 선제공격을 당해야 하는 입장인데다 북한은 모든 공격시설이 지하요새화 되고 지형적으로 산악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력을 초기에 무력화시키는데는 어려운 점이 많으며, 북한은 오는 95~96년께부터 조잡하나마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북한이 국제핵감시기구등에 가입하거나 감시를 받을 것을 촉구하고 무모한 핵무기를 갖지 않도록 설득하고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대응책을 강구하게 될 것
- 4월 27일 | IPU총회 참석차 의원 등 25명 판문점 거쳐 평양방문
- 5월 4일 | 강석주 외교부 부장, 단일의식의 공동가입 외에 타협안이 있다고 언급
- 5월 6일 |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구성·참가
- 5월 11일 | 미국 폴 월포이츠 국방차관, 한반도의 유사시에 미 증원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명목의 전시접수국지원협정(WHNS) 체결 준비 촉구
- 5월 12일 |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2차 평가전(평양 능라도 경기장)
- 5월 12일 |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실무위원회, 선수·임원 등 코리아선수단 62명 확정

**5월 27일 | 북한 외교부, 유엔가입 신청 의사 표명**

- 남조선 당국자들이 기어이 유엔에 단독으로 가입하겠다고 하는 조건에서 이것을 그대로 방임해 둔다면 유엔무대에서 전조선 민족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들이 편견적으로 논의될 수 있고 그로부터 엄청난 후과가 초래될 수 있음. 우리는 이것을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남조선 당국자들에 의하여 조성된 이러한 일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써 현 단계에서 유엔에 가입하는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유엔현장을 시종일관 지지하여 온 입장에서부터 출발하여 해당한 절차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정식으로 유엔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것임. 우리가 유엔에 가입하기로 한 것은 남조선 당국자들의 분열주의적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불가피하게 취하게 되는 조치임.

**5월 29일 | 북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안정협정 체결을 교섭할 것임을 표명**

**6월 10일 | 북한 정당·단체연합, IAEA 이사회의 북한만의 핵사찰은 부당하며 주한미군의 핵무기 동시사찰 주장**

- 원래 우리 공화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한 목적은 그 자체가 조선반도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을 제거하며 나아가서 조선반도를 핵무기 없는 비핵지대로 만들자는 데 있었음.

**6월 13일 | 이상옥 외무부 장관, 남북한의 유엔가입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포함, 현재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 본격 검토 언급**

**6월 14일 | 노태우 대통령, 뉴욕타임즈 회견에서 한국의 핵무기 철수에 반대한다고 언급**

**6월 19일 | 미국 국무부, 북한이 4개조건 수락시 대북 관계개선 시사**

- ① 북한 핵사찰 수락
- ② 남북대화 촉진에 의한 한반도 긴장 완화
- ③ 미군유해 송환
- ④ 테러포기

**6월 27일 | 통일원 대변인,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 재개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한 논평을 발표하고 조속한 회담 재개를 촉구**

**7월 6일 | 노태우 대통령, 획기적 남북민간교류 검토지시(벤쿠버선언)**

- 북한이 제의한 남북국토 중단 순례행사, 통일문제 학술토론회, 대학생들의 방북허용, 재야인사 남북공동행사 참여 허용, 북한 인사·대학생에 전면 문호개방 등

**7월 8일 | 북한, 유엔가입 신청서 제출**

**7월 11일 | 북한 연형묵 정무원 총리,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8월 27~30일) 제의**

**7월 12일 | 노태우 대통령, 평통자문회의 개회사에서 광복절 경축행사 공동개최 및 방송교류 제의**

① 올 8·15를 기하여 남북의 동포와 젊은이들이 광복절 경축행사 공동개최(판문점에서 공동 경축행사 및 통일문화축전 개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통일대행진 실시, 남북의 각계

대표들이 서울과 평양에서 통일대토론회 개최)

- ② 민족문화공동위원회 구성(남북의 학자·전문가가 민족문화 유산을 공동으로 조사·연구하고 언어의 이질화 현상을 해소)
- ③ 나이든 이산가족부터 고향방문 및 혈육상봉 주선
- ④ 텔레비전·라디오 방송의 우선 상호 교류 및 개방(송출방식 문제는 남북한이 비무장지대에 공동전환시설 설치 운영)

7월 13일 | 정원식 국무총리,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북한제의 수락 및 쌍방 책임연락관 접촉 제의

7월 14일 | 북한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준비위원장, 담화를 통해 8.15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소집 및 실무준비회담 조속 개최 제의

7월 15일 | 최호중 통일원 장관, 통일대행진 개최 제의

- ① 기간: 8월 15~31일(16박17일)
- ② 참가인원: 남북의 각계각층과 해외동포들을 망라한 남북 각 1천명 씩 2천명 정도
- ③ 추진방식: 민간행사로 추진하되 쌍방 당국의 주선과 지원·보장하에 실시
- ④ 행사내용: 광복절 경축기념행사(관문점), 국토종단대행진, 통일문제대토론회(평양·서울), 통일기원제(백두산·한라산), 통일문화축전(관문점)

7월 15일 | 북한, IAEA 핵안전협정문안 합의(빈)

7월 16일 | 정부,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 명단 발표(수석대표 정원식 국무총리 외 6인)

7월 16일 | 북한 윤기복 조평통 부위원장, 남측의 통일대행진 제의 거부

- 범민련이 추진중인 범민족대회 범위내에서 수용할 입장임을 밝히고, ① 이 행사에 남한의 범민련 관계 단체들 이외에도 통일을 지향하는 단체들과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참가시킬 것
- ② 8·15를 계기로 한 공동축제의 개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해외측 준비회의를 7월 25일 서울에서 각각 5~7명으로 진행할 것
- ③ 남측의 범민련과 전대협 관계자들을 준비회의 전까지 모두 석방하고 서울 범민족대회와 청년학생들의 통일대축전 개최를 어김없이 보장할 것 등 3개항 요구

7월 17일 | 통일원 대변인, 북한의 7월 16일 담화 관련 8.15 공동축제 개최 및 실무회의 제의 검토 표명

7월 19일 | 남북고위급회담 쌍방 책임연락관 접촉

7월 23일 | 장충식 남북체육회담 수석대표, 남북체육회담 재개(8월 6일) 제의

7월 29일 | 남북고위급회담 쌍방 책임연락관 접촉

7월 30일 | 북한 외교부, 한반도 비핵지대화 공동선언 채택 제의

- ① 남북한이 한반도비핵지대 창설문제에 관해 법률적 실천문제를 협의, 92년 말까지 법적효력을 지닌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
- ② 미·소·중 등 주변 핵 보유국들이 남북공동선언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
- ③ 남북공동선언 후 1년 내에 핵 보유국은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저촉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특히 미국은 한반도 핵무기 철수조치를 강구할 것

④ 아시아·비핵국가들은 한반도가 비핵지대로 되는 것을 지지·존중할 것

- 7월 31일 | 북한 김형진 남북체육회담 단장, 제5차 남북체육회담을 범민족대회 이후인 8월 17일 관문점 통일각에서 갖자고 수정 제의
- 8월 1일 | **외무부 대변인, 남북 간 핵·군사문제 논의할 용의 표명**  
- 북한이 IAEA의 완벽한 핵사찰에 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와 신뢰조성을 위해 핵확산방지 문제를 포함한 군사 및 제반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8월 1일 | 북한 김일성 주석, 조평통·범민련 북한 간부들과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제하 담화 발표
- 8월 1일 | **남북고위급회담 실무대표, 접촉에 참가할 2명의 대표명단을 북한에 통보**  
- 송한호 통일원 차관, 임동원 외교안보연구원장
- 8월 2일 | **북한, 실무대표 접촉에 참가할 2명의 대표 명단을 통보**  
- 백남준 조평통 서기국장, 최우진 외교부 순회대사
- 8월 5일 |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제1차 실무대표 접촉**  
- 남측: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와 함께 <불가침합의서>·<3통합의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  
- 북측: <북남불가침에 관한 선언>과 <북남 화해와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함께 채택되어야 하며,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문제도 협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8월 5일 | **정부, 유엔가입 신청서 제출**
- 8월 7일 | **장충식 남북체육회담 수석대표, 남북체육회담 일자를 북한이 8월 17일로 수정 제의한데 대해 동의**
- 8월 8일 | **유엔안보리 전체회의, 남북한 유엔가입 결의안 만장일치로 통과**
- 8월 10일 |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제2차 실무대표 접촉**  
- 남측: <기본합의서>·<불가침 합의서>·<3통 합의서>를 제시하고 쌍방 합의서 내용을 중심으로 토의 진행 제의  
- 북측: 쌍방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불가침 문제’를 먼저 토의할 것 주장
- 8월 12일 | **강영훈 한적 총재,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20주년에 즈음한 성명을 통해 1985년 12월 제10차 본회담을 끝으로 6년째 중단되고 있는 남북적십자본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제의하고, 제11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예정대로 평양에서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
- 8월 12일 | **북한, 유도선수 이창수 귀순을 문제 삼아 남북체육회담을 무기 연기한다고 통보**
- 8월 13일 | **대한올림픽위원장, 제5차 남북체육회담 개최 촉구**
- 8월 15일 | **노태우 대통령, 제46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특정한 지역에 합작공장을 건설하거나 관광, 지하자원을 공동개발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남북이 제3국에 공동진출할 수 있는 구**

체적인 계획도 갖고 있다고 언급

- 8월 16일 |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제3차 실무대표 접촉
- 8월 17일 | 남북고위급회담의 대표단(정원식 국무총리 외 6인) 명단을 북한에 통보
- 8월 19일 | 소련 쿠데타 발생, 고르바초프 대통령 실각
- 8월 20일 |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문제 협의를 위한 쌍방책임연락관 1차 접촉  
- 북한, 콜레라를 이유로 회담 장소를 평양에서 관문점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
- 8월 21일 |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문제 협의를 위한 쌍방책임연락관 2차 접촉
- 8월 22일 |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문제 협의를 위한 쌍방책임연락관 3차 접촉
- 8월 23일 |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문제 협의를 위한 쌍방책임연락관 4차 접촉  
- 10월 22일부터 평양에서 제4차고위급회담 열기로 합의
- 9월 11일 | 최호중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흡수통일 배제입장 천명  
- 통일은 어느 일방의 우월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통일은 민족자존의 정신에 입각해 남북한이 주체가 돼야함. 따라서 평화체제구축 문제도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 당연함.
- 9월 12일 | IAEA이사회 참가 북한 대표단장, 기자회견에서 남한 내 미국 핵무기와 미국의 핵위협을 구실로 핵안전협정문안 서명 및 비준거부의사 표명
- 9월 14일 | 남북한 유엔 가입안 총회 제출
- 9월 15일 | 북한 외교부 대변인, IAEA의 대북 핵안전협정 조기사명 및 핵사찰 이행촉구 결의 반박
- 9월 16일 | 통일원, 국회 제출 자료에서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3단계 방안 발표  
1단계: 남북교류협력단계  
① 간접교역을 확대해 직교역으로 유도 ② 지하자원·관광자원 공동개발 ③ 합작공장 건설 ④ 제3국 공동진출 등을 추진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본토대 마련  
2단계: 남북연합단계  
① 남북 공동시장 구축 ②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③ 사회간접시설의 공동투자 ④ 상호 실익이 있는 분야의 부분통합을 통해 남북경제구조의 동질화 실현  
3단계: 통일국가 수립단계  
① 생산요소의 완전한 이동 보장 ② 단일통화 창출 ③ 단일경제계획 수립 ④ 사회보장제도 통합 등을 통한 완전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 9월 17일 | 제46차 유엔총회,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승인
- 9월 18일 | 북한 외교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관련 성명  
- 하나의 조선불변과 연방제 방식의 통일 주장
- 9월 19일 | 한미연합사, 관문점지역 유엔군 공동경비 구역의 휴전선 1마일 경비를 미군에서 한국군에게 전환 결정



- 9월 20일 | 강영훈 한적 총재, 적십자회담 재개를 촉구
- 9월 24일 | 노태우 대통령, 4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평화통일 3개 실천방안 제시
  - ① 남북한은 불안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함.
  - ②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남북한은 군사적 신뢰의 구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군비감축을 추진해 나가야 함.
  - ③ 핵에너지는 파괴를 위한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는 평화적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
- 9월 27일 | 미국 부시 대통령, 지상 및 해상 발사 단거리 핵무기 해체·폐기 선언, 소련측에 대해 다탄두 핵미사일을 전면 폐기하자고 제의
- 9월 28일 | 노태우 대통령, 부시 대통령의 핵 폐기 선언 환영표명 및 모든 한반도주변 핵 제거 강조
- 9월 28일 | 북한 외교부, 미국의 핵폐기 선언 환영성명에서 남한 내 미국 핵무기 철수 및 한반도 비핵지대화 되풀이 주장
- 10월 2일 | 북한 연형묵 정무원 총리, 제46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면 최고위급회담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
- 10월 4~13일 | 북한 김일성 주석, 중국방문
- 10월 12일 | 정부, 두만강유역 경제특구 개발에 관한 남·북·중국·소련·몽고 등 관련당사국간 국제협약 추진방침 언급
- 10월 14일 |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제5차 남북체육회담 개최 재촉구
- 10월 14일 |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 체류일정 협의
- 10월 15~21일 | 유엔개발기구(UNDP) 주최 두만강지역개발회의
  - 남한, 북한, 중국, 몽골 등이 참가. 참가국들은 두만강개발사업의 전반적인 타당성 조사 및 연구기반 마련을 위해, 앞으로 18개월 동안을 1단계 작업기구로 정하고 추진기구로 '두만강 개발계획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
- 10월 17일 |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
- 10월 22~25일 |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
  -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발표문〉
  - ①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교류협력 실현을 위해 단일문건으로 된 합의를 채택
  - ② 합의서의 명칭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 ③ 합의서 내용구성을 서문, 남북화해, 남북 불가침, 남북 교류협력, 수정 및 발효조항 순으로 중간 제목을 설정하여 해당 내용을 정리 구성
  - ④ 합의서의 내용 조정과 문안 정리를 위한 대표접촉을 빠른 시일안에 관문점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 번갈아 개최

⑤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오는 12월 10~13일 개최 (서울)

10월 28일 | 북한 여연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서울개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심포지엄 예비접촉 제의

10월 30일 | 북한, 서울여성세미나 개최시기 연기요청

10월 30일 | 북한 김유순 올림픽위원장, 제5차 남북체육회담 개최 거부

11월 8일 |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발표

① 우리는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않음.

② 우리는 '핵무기의 확산방지에 관한 조약'과 이에 따라 IAEA와 체결한 '핵안전조치협정'을 준수하여 한국내의 핵시설과 핵물질은 철저한 국제사찰을 받도록 하며, 핵연료 재처리 및 핵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음.

③ 우리는 핵무기와 무차별 살상무기가 없는 평화적인 세계를 지향하며, 화학생물무기의 전면적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함. 우리는 핵과 화학생물무기를 갖지 않는 이와 같은 정책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임.

11월 9일 |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 개최 관련 남북실무접촉 (판문점 중감회의실)

11월 11일 | 남북고위급회담 단일합의서 문안정리를 위한 제1차 대표 접촉

11월 12일 | 북한 외교부 대변인, 노태우 대통령 비핵화선언에 대해 비난

- 남한의 비핵화 선언은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핵심인 미국 핵무기 철수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기본문제를 제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말하는 것은 빈말일 뿐임.

11월 15일 | 남북고위급회담 단일합의서 문안정리를 위한 제2차 대표 접촉

11월 20일 | 남북고위급회담 단일합의서 문안정리를 위한 제3차 대표 접촉

11월 21일 | 한·미 제23차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전시지원협정 서명, 주한미군 2단계 감축 연기 합의

11월 21일 | 북한 외교부, 미국 주도의 핵사찰 압력 즉각 중단 요구

11월 24일 | 북한 조평통 서기국, 남한측의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관련 5개항 질문장 발표

①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하려면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 담아야 하지 않겠는가

② 한반도의 비핵화에서 관건적 문제가 있지도 않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사찰 문제인가, 남한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 철수인가

③ 남한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할 수 없는 가련한 처지와 비핵지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남한 당국의 제한성을 인정하는가

④ 비핵화를 운운하며 남한에 핵우산 보호를 구걸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⑤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재처리 및 핵농축을 위한 현존 설비를 공개하고 그 폐기문제를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11월 25일 | 북한 외교부, 핵안전협정 체결문제와 관련한 4개항 천명

- ① 미국이 남한으로부터 핵무기 철수를 시작하면 북한은 핵안전협정에 서명
- ② 남한에서의 미국 핵무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과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동시에 진행
- ③ 동시 핵사찰 문제와 북한에 대한 핵위협 제거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북한과 미국간의 협상을 진행
- ④ 북과 남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며 한반도 비핵화지대화 실현을 위한 남북협상을 진행

11월 26일 | 남북고위급회담 단일합의서 문안정리를 위한 제4차 대표 접촉

11월 26-29일 | 남북의 여성대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 토론회 개최

12월 2일 | 통일원, 럭키·삼성물산 등 3개 업체 남북 민간교역 승인  
- 남북 기업간 물자 직교역 첫 승인

12월 5일 |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  
- 5차 회담일정 및 북한대표단 서울체류일정 확정

12월 6일 | 북한 노동신문, 논평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핵무기 철수시작 확인시 핵안전협정 서명 용의 주장

12월 10~13일 |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발표문>

- ① 1991년 12월 13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빠른 시일안에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기로 함.
- ②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12월 안에 판문점에 대표접촉을 갖기로 함.
- ③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을 1992년 2월 18일 개최(평양) 합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 1. 남북화해

- ①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함.
- ②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함.
- ③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함.
- ④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함.
- ⑤ 남과 북은 현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함.
- ⑥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
- ⑦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함.
- ⑧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함.

## 2. 남북불가침

- ⑨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함.
- ⑩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함.
- ⑪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함.
- ⑫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함.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함.
- ⑬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 전화를 설치·운영함.
- ⑭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함.

## 3. 남북교류·협력

- ⑮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함.
- ⑯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함.
- 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함.
- ⑱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
- ⑲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함.
- ⑳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함.
- ㉑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함.
- ㉒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함.
- ㉓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함.

## 4. 수정 및 발효

- ②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음.
- ⑤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함.

- 12월 15일 | 북한 노동신문, 논평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지지
- 12월 17일 | 정원식 국무총리, 판문점 통일각에서 핵문제 협의 대표 접촉(12월 23일) 제의
- 12월 18일 | 노태우 대통령, 남한 내 핵부재 선언
  - 이 시각 우리나라 어디에도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음. 이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협정을 조속히 체결·비준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국제사찰을 수락하고 재처리 및 농축시설을 포기해야 함.
- 12월 18일 | 북한 노동신문, 논평에서 핵부재 선언 관련 미국 당국의 남한 내 미군핵무기 철수시작 공식 확인 요구
- 12월 22일 | 북한 외교부, 핵부재 선언 관련 핵안전 협정서명 의사표명 및 동시사찰과 대미협상 주장
  - 남조선에 핵무기가 없다는 것이 일단 발표된 이상 우리는 미국이 앞으로 자기의 명백한 입장을 밝히리라는 것을 전제로 핵무기 전과방지조약에 따르는 담보협정에 서명할 것이며, 해당한 절차를 통해 사찰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천명함.
- 12월 24일 |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19차 전체회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지지 및 김정일을 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
- 12월 26일 | 남북고위급회담 핵문제협의를 위한 제1차 대표 접촉
  - 남측: 북한측은 늦어도 1992년 1월 5일까지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고 비준·발효 시켜야 할 것임. 우리 측의 비핵화 공동선언안을 수락하여 핵재처리 시설과 우리측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말아야 함. 1992년 1월 31일까지 시범사찰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촉구함.
  - 북측: 핵안전협정 체결과 핵사찰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며 그 해결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임. 핵재처리 시설과 우리측 농축시설 불보유 등 남측안을 적극 수용한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초안)을 새로이 제시
- 12월 26일 | 북한 중앙인민위·최고인민회의 연합회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정식 승인
- 12월 28일 | 남북고위급회담 핵문제협의를 위한 제2차 대표 접촉
  - 쌍방은 각기 비핵화 공동선언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서문,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핵재처리 시설과 우리측 농축시설 불보유,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의견일치
- 12월 28일 | 북한,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 공식발표
- 12월 31일 | 남북고위급회담 핵문제협의를 위한 제3차 대표 접촉
  - <남북고위급회담 핵문제협의를 위한 제3차 대표 접촉 공동발표문>
  - 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발효되도록 함.

- ② 이를 위한 사전조치로서 1992년 1월 14일과 1월 21일 두차례에 걸쳐 쌍방 총리가 서명한 공동선언문을 관문점에서 교환
- ③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는데 합의

# 1992년

- 1월 1일 | 노태우 대통령, 신년사에서 〈남북합의서〉의 내용을 실천에 옮겨 7천만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화해와 협력의 시대 천명
- 우리의 한반도 비핵화 제안과 그 선도적 실천에 북한이 호응하여 나온 것은 핵의 공포가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큰 진전임. 이제 남과 북은 남북합의서 내용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실천에 옮겨야 하며 끊어진 길을 다시 잇고 멈춰선 열차는 다시 달리도록 해야 함.
- 1월 1일 | 북한 김일성 주석, 신년사에서 남과 북은 조국통일 3대 원칙에 기초해 〈남북합의서〉의 이행으로 평화통일을 전제로 한 조국통일 강조
- 우리는 현정세의 변화과정을 낙관적으로 보고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굳게 갖고 지주의 길을 따라 나가야 하며,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를 폐기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
- 1월 7일 | 국방부, '92 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발표
- 1월 7일 | 북한 외교부, 가까운 시일 안에 핵담보 협정에 서명하고 IAEA와 합의하는 시기에 사찰을 받기로 하였다고 발표
- 1월 8일 | 북한 조평통, 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환영 성명
- 1월 9일 |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북한 김용순 노동당 국제부장에게 핵협의를 위한 접촉 제의
- 1월 10일 | 노태우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을 실천에 옮겨 본격적인 남북공존 공영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언급
- 1월 14일 | 남북고위급회담 비핵화공동선언 문본교환을 위한 제1차 대표 접촉
- 1월 15일 | 정원식 국무총리, 3개분과위(정치·군사·교류협력) 구성, 운영방안과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운영방안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 제의
- 1월 16~25일 | 김우중 대우그룹회장 평양방문, 남북협력사업 3개 분야에 원칙적 합의
- ① 경공업 합작공장 건설
  - ② 석탄 등 자원의 공동개발
  - ③ 해외건설 및 제3국 공장건설에의 공동참여
- 1월 21일 | 남북고위급회담 비핵화공동선언 문본교환을 위한 제2차 대표 접촉
- 1월 22일 | 북·미, 첫 고위급 회담 개최 (뉴욕 주 유엔 미 대표부)
- 1월 23일 |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제1차 대표 접촉
- 남측: 남북정치분과위원회,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3개의 합의서(안) 제시
  - 북측: 단일 합의서로 된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안) 제시

- 1월 23일 | 국무회의,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승인
- 1월 29일 |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제2차 대표 접촉
- 1월 30일 | 북한, IAEA의 핵안전협정에 조인
- 2월 1~18일 | 유엔공업개발기구 사무국 대표단, 대북경협 타당성 조사차 북한방문
- 2월 5일 | 북한 중앙인민위·최고인민회의, 비핵화공동선언 승인
- 2월 7일 |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제3차 대표 접촉
  - 합의서 작성에 합의하고,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시 쌍방총리가 문건을 서명. 교환한 날부터 유효
- 2월 11일 | 제6차 고위급회담 실무 문제 협의를 위한 책임연락관 1차 접촉
  - 남북 쌍방은 회담운영, 체류일정, 왕래절차, 합의서 발효절차완료 통지문제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2월 13일 차기접촉에서 계속 협의기로 함.
- 2월 13일 | 제6차 고위급회담 실무 문제 협의를 위한 책임연락관 2차 접촉
  - 남측 대표단 명단과 북측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교환하고 회담운영, 체류일정 및 합의서 발효문본 형식문제 등은 2월 14일 차기접촉에서 계속 협의기로 함.
- 2월 13일 | 이상욱 외무장관, 제6차 고위급회담이전 핵협정 비준 대북촉구
  - 북한은 대미 관계개선과 대일수교 등을 서둘러야 하는 만큼 핵문제처리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입장일 것임. 북한은 6차 고위급회담이 열리기 전에 IAEA의 핵안전협정을 비준·발효 시킬 것을 촉구함.
- 2월 14일 | 제6차 고위급회담 실무 문제 협의를 위한 책임연락관 3차 접촉
 

〈합의사항〉

  - ① 제 1일 회의(2월 19일)는 공개로 진행하며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의 발효 문본 교환 및 〈분과위구성·운영합의서〉를 서명·교환(제1일회의 종료 후 「핵통제공동위」 구성·운영문제 등 관련 대표 접촉)
  - ② 제2일 회의(2월 20일)에서는 쌍방 기초연설을 공개로 하며 토의는 비공개로 진행
- 2월 17일 | 노태우 대통령,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문건에 서명
- 2월 18-21일 |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발효문본 교환
  - 〈3개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서명·발효

〈공동발표문〉

  - ① 남북정치분과위원회,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의 명단을 1992년 3월 6일 서로 상대측에 통보



- ②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992년 3월 9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
- ③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992년 3월 13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
- ④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992년 3월 18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
- ⑤ 1992년 2월 19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1차 대표접촉을 가진데 이어 제2차 대표접촉을 1992년 2월 27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가지기로 함.
- ⑥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을 1992년 5월 5~8일 개최(서울)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 ①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함.
  - ②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함.
  - ③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함.
  - ④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함.
  - ⑤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⑥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함.

2월 19일 | 남북고위급회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제1차 대표 접촉

-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

2월 22일 | 노태우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한 비핵공동선언과 IAEA의 핵안전협정은 이행되고 해결되어야 한다고 언급

2월 27일 | 남북고위급회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제2차 대표 접촉

2월 27~28일 | 두만강개발계획 관리위원회(PMC) 1차회의

3월 1일 | 노태우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합의서와 비핵화선언을 성실히 준수하고 실천해 나갈 것임을 재천명하며 북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를 실천하는데 함께 나설 것을 촉구

3월 3일 | 남북고위급회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제3차 대표 접촉

- 남북 양측은 합의서 작성을 위한 문안 정리에서 주요쟁점인 핵통제공동위 구성·기능, 사찰 규정마련 시한명시 및 시범사찰문제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차기접촉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함.

3월 4일 | 남북고위급회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제4차 대표 접촉

- 제3차 대표접촉에 이어 합의서 문안에 대한 토의를 계속 하였으나, 시범사찰 실시 및 사찰 규정 마련시한 명시 등에서 전혀 진전이 없었으며 차기접촉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함.

3월 4일 | 통일관계장관회의, <남북합의서> 및 <비핵화공동선언>의 3단계 실천계획 마련

- ① 1단계: ~ 5월 5일까지
  - ㄱ. 3개분과위 및 핵통제공동위를 구성·운영(핵사찰 이행 연계)
  - ㄴ. 남북연락사무소 및 군사 교류협력공동위 구성·운영을 위한 합의서 채택
  - ㄷ. 이산가족 상봉, 지명공격 및 비방중지, 군직통전화 설치, 직교역 추진
- ② 2단계: ~ 8차 고위급회담
  - ㄱ. 3개분과위, 공동위, 남북연락사무소 운영
  - ㄴ. 3통 및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 ㄷ. 제반 남북교류 세부규정 마련
- ③ 3단계: 8월 이후
  - ㄱ. 휴전선 비방방송·전단살포 중지
  - ㄴ. 대규모 군사훈련 상호통보, 통제제도 마련
  - ㄷ. 교역상담소 설치, 청산계좌개설 등 24개 역점사업 추진

**3월 6일 | 남북고위급회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제5차 대표 접촉**

- 제4차 대표접촉에서 이어 합의서 문안에 대한 토의를 계속하여 핵통제공동위 구성·기능분야에서의 부분적 합의를 보았으나 북측의 사찰규정 마련시한 명시 거부로 더 이상의 진전이 없어 차기접촉에서 협의기로 함.

**3월 9일 | 남북고위급회담 정치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 남측: ① 서로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를 존중하는 원칙 ② 남북당사자 해결원칙 ③ 남북 호혜원칙을 제시.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시한이 명시된 시급히 협의·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고,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안)〉 제시
- 북측: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북남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초안)〉, 〈북남정치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초안)〉, 〈판문점 북남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초안)〉을 제시

**3월 10일 | 남북고위급회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제6차 대표 접촉**

- 제5차 대표접촉에 이어 합의서 문안에 대한 토의를 계속하였으나 북측이 사찰규정 마련시한 명시에 대해 계속 강력히 거부함으로써 전혀 진전이 없었음.

**3월 10일 | 미국 국방부, 스커드 미사일 적재 북한선박 추적**

- 스커드 미사일을 적재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선박이 이라크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검색을 하지 않았으며 제2의 선박을 추적중임.

**3월 11일 | 미국 호어 중앙군 사령관,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스커드 미사일 적재 북한선박 추적 실패 시인**

**3월 13일 | 남북고위급회담 군사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 남측: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

- 북측: <북남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안)>, <북남군사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

**3월 14일 | 남북고위급회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제7차 대표 접촉**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대표접촉에 관한 공동발표문>
- ① 1992년 3월 17일과 3월 19일 두차례에 걸쳐 쌍방 총리가 서명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판문점에서 교환
  - ②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1992년 3월 18일에 상호 통보
  - ③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992년 3월 19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
  - ④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이후 2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문건을 채택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문건이 채택된 이후 20일 안으로 사찰을 시작하기로 양해

**3월 17일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차 교환**

**3월 17일 | 북한 연형묵 정무원 총리, 핵문제를 이유로 합의서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회의 교착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

**3월 18일 | 남북고위급회담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 남측: 이산가족, 통행·통신, 경제, 사회문화의 4개 분야별 <부속합의서(안)>과 <부문별 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안)> 제시. 공동위원회는 인도, 통신,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 교류·협력 등 4개분야로 나누어 설치·운영 제의. 남북 고령이산가족 고향방문단 상호 교환 제안
- 북측: <포괄적인 단일 부속합의서>로 <북남 협력, 교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초안)> 제시. 이산가족 문제 논의자체 회피

**3월 18일 | 핵통제공동위원회 위원 명단 교환**

**3월 19일 | 남북고위급회담 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 <남북고위급회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교환·발효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①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 ㄱ. 핵통제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그중 1~2명은 현역군인으로 함. 위원장은 차관(부부장)급
  - ㄴ. 쌍방은 핵통제공동위원회의 구성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
  - ㄷ. 핵통제공동위원회 수행원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②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추진
  - ㄱ.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문제를 토의한데 따라 부속문건들을 채택·처리하는 문제와 기타 관련 사항
  - ㄴ.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와 핵기지 포함) 교환에 관한 사항

- ㄷ.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ㄹ.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대상(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혐의가 있다고 주장 하는 핵무기와 핵기지 포함)의 선정, 사찰절차·방법에 관한 사항
- ㅁ. 핵사찰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에 관한 사항
- ㅂ. 핵사찰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 ㅅ.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과 사찰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③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

- ㄱ.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2개월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음.
- ㄴ.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관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음.
- ㄷ.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
- ㄹ.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함.
- ㅁ. 핵통제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쌍방이 협의

- ④ 핵통제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은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
- ⑤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음.
- ⑥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

**3월 20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일본군의 정신대 징집과 관련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일본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남한과 공동위원회 구성 제의**

**3월 25일 | 남북고위급회담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위원 접촉**  
 - 남측 양측은 남북교류·협력분과위 제1차 회의 합의에 따라 쌍방이 제시한 부속합의서에 대한 내용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진전이 없었음.

**3월 27일 | 남북고위급회담 정치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 남측: 남북기본합의서 화해분야의 주요 협의과제를 구체화한 19개 과제 제시.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위원접촉 촉구  
 - 북측: 부속합의서 채택, 공동위원회 구성, 연락사무소 설치 순 토의 진행 주장, 공동위원회는 정치공동위원회 하나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

**3월 30일 | 남북한, <남북간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을 유엔군축회의 사무국에 공동 제출**

**3월 31일 | 남북고위급회담 군사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 남측 양측은 1차 회의에 이어 남북불가침 부문의 이해방안에 대한 절충을 벌였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음.

- 4월 1일 | **남북고위급회담 핵통제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 남측: 기초발언을 통해 사찰규정 마련 후 20일내 상호사찰을 실시할 것을 촉구
  - 북측: 별도의 부속합의서와 부록(사찰규정)을 채택하지는 주장을 계속 고집
- 4월 2일 | **남북고위급회담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위원 접촉**
  - 남북 쌍방은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우리측 수정안을 중심으로 조항별 토의를 진행하여 많은 부분에서 의견접근을 보았으며 차기접촉에서 계속 협의기로 함.
- 4월 6일 | **북한 여연구 여맹 상무위원,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평양토론회 개최 제의**
- 4월 9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 개최, 핵안전조치협정 심의·비준**
- 4월 10일 | **북한과 IAEA의 핵안전협정 정식 발효**
- 4월 10일 | **남북고위급회담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3차 위원 접촉**
  - 남북양측은 부속합의서 채택관련 쌍방 수정안을 놓고 공통점, 유사부분, 합의점 등으로 분류하여 토의한 결과 상당부분에서 의견접근을 보았으며 제2차 분과위에서 절충을 계속기로 함.
- 4월 18일 | **남북고위급회담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 4월 21일 | **남북고위급회담 핵통제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
  - 남측: 북측의 사찰규정을 반영하여 새로 작성한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상호사찰 규정> 제시, 절충 시도
  - 북측: 이행합의서가 먼저 이뤄져야 사찰규정협의를 이뤄진다고 주장
- 4월 23일 | **남북고위급회담 정치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
- 4월 27일 | **남북고위급회담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  
(합의사항)
  - ① 각 공동위원회는 연 4회씩 열고 ② 위원수는 위원장(장·차관급)을 포함해 9명으로 하고 ③ 부속합의서에 따른 세부합의서 작성을 기능으로 하며 ④ 필요에 따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둬(\*3월 8일 1차, 4월 18일 2차 회의 진행됨).
- 4월 28일 | **남북고위급회담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4차 위원 접촉**
  - 남북 쌍방은 「남북교류·협력공동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 관련 토의를 벌인 결과 「공동위 합의서 명칭」 「공동위 기능·운영」 「공동위 구성」 등 대부분 항목에서 합의를 보고 문안정리를 마쳤음.
- 4월 28일 |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책임연락관 제1차 접촉**
  - 남측은 제7차 고위급회담 참가 북측대표단의 서을 체류 일정을 전달하였으며 회담운영·참관문제 등은 차기접촉에서 협의기로 함.
- 4월 29일 | **남북고위급회담 정치분과위원회 제1차 위원 접촉**
  - 남북 양측은 「남북연락사무소」 「부속합의서」 「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순서로 토의를 진행하였으나 쌍방 합의서의 공통점과 차이점만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전통문을 통해 차기

접촉 일자를 통보기로 하였음.

**4월 30일 | 남북고위급회담 군사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

- 남북 양측은 「군사공동위」 「부속합의서」 순서로 토의를 진행하였으나 쌍방 기본입장만을 확인하고 차기 회의 일지는 추후 연락하여 정하기로 했음.

**5월 1일 |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책임연락관 제2차 접촉**

- 쌍방 책임연락관은 회담일정 등을 합의하고 북측대표단 명단과 우리측 신변안전보장각서를 교환하였음.

**5월 5~8일 |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

- 남북연락사무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경제 교류·협력 공동위원회,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공동위원회 구성합의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문〉

- ①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장 남북화해분야의 이행기 구에 관하여 다음사항에 합의
  - ㄱ. 남북화해분야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
  - ㄴ.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둠.
  - ㄷ.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이전에 남북화해분야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킴.
- ② 남북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1992년 5월 18일자로 구성함과 동시에 각기 자기측 구성원 명단을 상대측에 통보
- ③ 남북 쌍방은 1992년 5월 18일자로 판문점 자기측 지역에 설치할 남북연락사무소 자기측 소장과 부소장 및 연락관들의 명단을 상대측에 통보함과 동시에 사무소 운영을 개시
- ④ 불가침 분야의 부속합의서를 1992년 9월 1일까지 작성하고, 교류·협력분야의 부속합의서는 1992년 9월 5일까지 작성
- ⑤ 남북합의서 이행에 대한 첫 선물을 민족 앞에 내놓으려는 염원에서 올해 8·15해방 47돌을 계기로 각기 노부모 100명과 예술인 70명, 그리고 70명의 기자·지원인원들로 구성되는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교환하도록 쌍방 적십자단체들에 위임
- ⑥ 각 분과위원회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다음번 회의날짜와 장소는 다음과 같이 함.
  - ㄱ. 제4차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는 1992년 5월 12일(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
  - ㄴ. 제4차 남북정치분과위원회는 1992년 5월 19일(화)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
  - ㄷ. 제4차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1992년 5월 25일(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
  - ㄹ. 제4차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는 1992년 5월 30일(토)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

⑦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2년 9월 15~18일까지 개최(평양)

- 5월 7일 | 미국 국무부, 북한의 IAEA 최초보고서 관련 입장표명**  
- 북한의 최초보고서에 포함된 방사화학 실험실은 핵재처리 과정이 분명하며, IAEA 사찰에서는 플루토늄 생산량·추출능력 등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함.
- 5월 9일 | 북한 외교부, 남북 핵사찰 관련 “우리가 핵사찰을 받게 되는 지금에 와서 주한미군의 핵기지를 사찰하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급선무이며 조선반도 비핵화실현에 기본으로 된다”고 언급**
- 5월 11일 | 북한 이철 제네바주재 대사, 남북 동시 핵사찰의 전면적인 합의 강조**  
- 우리가 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팀에 현재 어떤 제한도 부과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한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을 것이며 남한 역시 우리가 보내는 핵사찰팀에 어떠한 제한도 가해서는 안될 것임.
- 5월 11~16일 | IAEA 사무총장 일행 북한 방문**
- 5월 12일 | 남북고위급회담 핵통제공동위원회 제4차 회의**
- 5월 13일 | 북한 이삼로 외교부 부부장, 제7차 북·일 수교회담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관할권-휴전선 이북 첫시인**  
- 조선이 하나이고 평화적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북한의 주권이 유감스럽게도 북반부에만 미치고 군사분계선 이남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언급
- 5월 15일 | 남북고위급회담 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위원 접촉**
- 5월 15일 | 통일원, ‘화해협력시대의 통일교육 기본방향’ 제시 공개**
- 5월 18일 | 군사,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 교류·협력 공동위원회 구성 및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 개시**
- 5월 19일 | 남북고위급회담 정치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  
- 남측은 새로 작성한 단일 부속합의서와 <남북 화해 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를, 북측은 부속합의서만을 각각 제시하여 대체토론을 진행하였으며 협의, 절충은 차기회의에서 계속기로 함.
- 5월 20일 | 남북고위급회담 핵통제공동위원회 제2차 위원 접촉**  
- 남북상호 핵사찰을 위한 사찰규정 토의 관련 북측은 제4차 핵통제공동위 합의사항을 뒤엎고 또다시 이행합의서와 일괄토의 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실질토의에 들어가지 못했음.
- 5월 21일 |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북한 핵무기 개발 임박 경고**  
- 현시기 국제안보에 심각한 위협은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며 특히 북한이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되고 있음. 북한은 최근 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하고 사찰을 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핵폭탄 생산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됨.
- 5월 22일 | 비무장지대 무장병력 침투 사건**  
- 오전 11시30분께 강원도 철원북방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남쪽 1km지점에서 육군수색대

와 북한 무장침투조 사이에 교전발생(북한군 3명, 아군1명 사망)

**5월 23일 | 남북고위급회담 핵통제공동위원회 제3차 위원 접촉**

- 남북 양측은 사찰규정 채택 관련 대체토론을 벌였으나 핵무기·핵기지, 특별사찰, 대칭적 상호주의, 동시의심해소원칙 등에서 현격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음.

**5월 25일 | 남북고위급회담 군사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

- 합의서의 명칭, 구성체계, 내용 등에 대한 대체토론을 진행하여 쌍방 입장만을 확인

**5월 25일~ | IAEA, 북한 핵에 대한 제1차 임시사찰 실시**

**6월 5일**

**5월 27일 | 남북고위급회담 핵통제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

**5월 30일 | 남북고위급회담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

**6월 1일 | 정원식 국무총리, 남북 상호 핵사찰 수용 촉구**

**6월 1일 | 한적,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추가신청 접수**

**6월 2일 | 이동복 남북고위급회담 대변인, 상호 핵사찰 수용 촉구**

- 북한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하루속히 사찰규정 마련에 호응하고 핵무기 개발의혹을 해소해야 함.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없이는 실질적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없으며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 문제해결도 쉽지 않을 것임. 북한은 DMZ침투 관련 군정위원회의에 응할 것과 쌍방 당국간 협의없는 범청학련, 범민족대회 추진의 즉각 취소를 촉구함.

**6월 5일 |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 관련 제1차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 합의서 내용토의 결과 방문단의 명칭, 구성방법, 방문지 등에서는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방문시기·기간, 규모, 예술단 공연문제 등은 상호 입장만을 확인하고 차후회의에서 협의 절충기로 함.

**6월 9일 | 남북고위급회담 정치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

- 남측: ① 상대방 체제 및 법질서 존중 ② 남북문제 당사자 해결 원칙 ③ 화해공동위 안에 법률실무협의회 및 비방·중상 금지 실무협의회 설치 ④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내 상대방 비방·중상 금지 ⑤ 남북간 특수관계 인정(국제기구내 두 개 의석 가입 가능) ⑥ 상대방 외교행위 불간섭(제3국과 맺은 외교관계 존중)

- 북측: ① 법적·제도적 장애 제거(국가보안법 철폐) ② 남북문제해결에서 '남북간'용어 삭제 ③ 실무협의회 설치는 화해공동위 구성후 논의를 거쳐 설치 ④ 관·민영 포함 모든 언론기관 상대방 비방·중상 금지 ⑤ 국제기구 및 회의 단일의석 가입 ⑥ 다른 나라와 맺은 군사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6월 12일 |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 관련 제2차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 8월 25~28일까지 3박4일간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과 예술단 교환 합의 <합의사항>

① 인솔책임자는 남측은 적십자 부총재, 북측은 적십자회 부위원장 ② 교환지역은 서울과 평

1992



양 ③ 예술단의 공연을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실황중계하며 ④ 공연시간은 1백20분 정도 하기로 합의

- 6월 16일 | IAEA 사무총장, 남북상호사찰 실현 대북 촉구
  - 북한의 최초보고서 외에 미신고 시설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에 대해서도 수용의사를 밝혔으며 수주내 2차 사찰이 실시될 것임. 북한의 핵문제관련 신뢰도 증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IAEA사찰 이외에 남북상호 핵사찰이 실현되어야 함.
- 6월 17~18일 |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남북회의(파리)
  - 남북 양측은 1987년 5월부터 5차례의 회의를 거쳐 자음은 북측안을, 모음은 남측안을 절충한 '한글 로마자 표기안'에 합의, 유엔 산하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정식 제출
- 6월 18일 | 북한 오창림 외교부 본부대사, 영변재처리시설 계속 건설 표명
  - 영변소재 방사화학실험실은 핵연료 적기연구를 위한 실험실로써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배치되지 않으므로 연구프로그램은 중단될 수 없음.
- 6월 18일 | 북한 노동신문,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 송환문제 해결 촉구
- 6월 19일 | 남북고위급회담 군사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
- 6월 19일 | 이상옥 외무장관, 남북대화-북한핵연결 방침 언명
  -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따른 핵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함. 북한은 IAEA 사찰 결과 명백해진 영변핵재처리시설의 건설을 즉각 중지하고 사고방지에 관한 지원협정에 조속가입을 촉구함.
- 6월 22일 |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 관련 제3차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 6월 25일 | 북한 노동신문, 6.25 42주년 맞아 대미 관계개선 강조
  - 이전과 달리 반한, 반미 모임 및 기자회견을 갖지 않음.
- 6월 26일 | 남북고위급회담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
- 6월 28일 | 북한 민주조선, 논평에서 북한 핵사찰에 대해 비난
- 6월 30일 | 남북고위급회담 핵통제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
  - 남측: 북쪽의 방사화학실험실이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위반임을 지적하고 이의 즉각적인 건설 중단과 폐기를 촉구하며 이산가족 교환방문 사업은 핵문제와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
  - 북측: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임시사찰로 핵무기 개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고 이제 남은 것은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사찰뿐이라며 남북관계 진전을 핵문제와 연계시키고 있는 남쪽의 정책에 대해 해명 요구
- 7월 2일 | 남북고위급회담 정치분과위원회 제6차 회의
  - 화해분야 부속합의서를 조속 채택기로 합의
- 7월 7일 | 정원식 국무총리, 이산가족 귀환, 정착사업을 위한 전담창구 설치 논의 제의

7월 7~21일 | IAEA, 북한 핵에 대한 제2차 임시 사찰

7월 8일 |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 관련 제4차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 남측: 남북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은 결코 다른 문제와 연계될 수 없으며 합의된 날짜에 무조건 실시
- 북측: 남측 당국이 핵문제와 관련한 반공화국적 태도를 바꾸고 이인모노인을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이전에 송환하지 않는 한 노부모 방문단 교환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합의서가 채택되더라도 교환사업이 유산될 수 있음.

7월 10일 | 남북고위급회담 정치분과위원회 제1차 위원장 접촉

- 남북 쌍방은 부속합의서 조항별 토의를 통해 명칭, 전문, 장별 제목, 10조(특정인 지명공격 중지)등에 합의하고 대부분의 세부조항에서 상호유사점과 차이점 확인

7월 10일 | IAEA·북한, 핵사찰 보조 약정서 체결

- 북한이 사찰을 받을 주요 대상은 ① 영변 핵물리학연구소의 5메가와트급 핵발전 실험원자로 ② 영변 방사화학연구소에 건설중인 방사화학 실험실 ③ 영변 핵연료봉 제조 및 저장 시설 ④ 물리학연구소의 임계시설 등 4개 시설

7월 12일 | 북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 대변인, 고령 이산가족 교환·정착 사업 거부

- 남측은 이인모 송환문제를 신중 검토하고 긍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을 순조롭게 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의 돌파구를 열기를 기대함.

7월 13일 | 남북고위급회담 대변인, 북한 대변인 담화(7월 12일)관련 7.7 대북서신에는 이인모 문제 해결 방안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총리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을 기대한다고 논평

7월 14일 |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 관련 제5차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 남측: 지난 7일자 국무총리 서신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실무대표 접촉에선 이산가족 교환사업 외에 다른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
- 북측: 북한 핵문제에 대해 더 이상 간섭하지 말 것과 이인모씨를 이산가족 교환사업 이전에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면서 이 두 문제가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으면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사업이 날짜가 미뤄지거나 유산될 수 있다고 주장

7월 16일 | 남북고위급회담 군사분과위원회 제6차 회의

7월 16일 | IAEA, 북한에 대해 7월 6~16일까지의 제2차 특별사찰을 완료했다고 발표

7월 18일 | 남북고위급회담 정치분과위원회 제2차 위원 접촉

7월 19일 | 북한 김달현 부총리, 경제부총리 초청으로 서울 방문(7월 19~25일)

- 대우자동차, 포항제철 등 산업시찰 및 대통령 면담(7월 24일)

7월 20일 |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 관련 제6차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 남측: ① 방문단 규모 241명(단장 포함) ② 공연 횟수 2회 ③ 행낭 수송 하루 두 차례
- 북측: ① 방문단에 6·25 이전 거주지에서 강·절도 등 범죄자 배제 ② 기자취재 원칙에 중상

·비방 금지조항을 넣고 ③ 공연포스터를 시내에 부착할 일 ④ 포커스렌즈훈련 중지

**7월 21일 | 남북고위급회담 핵통제공동위원회 제7차 회의**

- 남측: 비핵화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특별사찰이 필수적이며 민간·군사 시설을 막론하고 어떠한 사각지대도 없는 사찰이 이루어져야 함. 사찰규정을 먼저 논의해 가서명한 뒤 이행합의서를 토의할 수 있다면서 이행합의서 초안 제시
- 북측: 국제원자력기구의 두 차례에 걸친 임시사찰로 북한에 대한 핵무기 개발 의혹은 해소됐으며 이제 남은 것은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사찰뿐이라고 주장

**7월 21일 | 이동북 남북고위급회담 대변인, 핵문제 해결 없이 남북교류 불가 확인**

**7월 23일 | 남북고위급회담 위원장 접촉**

**7월 24일 | 노태우 대통령, 북한 김달현 부총리 접견(7월 19일 관문점 통해 서울 방문)**

**7월 25일 | 북한 김달현 부총리, ① 남한과 남포경공업단지 건설 시범사업에 합의 ② 남한 정부와의 협의 중에 핵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한 정부가 핵문제 타결을 경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적 없다고 언급**

**7월 25일 |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 관련 제7차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 남측: 노부모 방문단 구성을 위한 사전 명단 교환일자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범법자' 배제 문제 등 쟁점사항을 타결 짓자고 촉구
- 북측: ① 핵문제 ② 이인모씨 송환문제 ③ 포커스렌즈 한미합동군사훈련 문제 등 3가지 전제조건이 선결되지 않는 한 이산가족 방문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

**7월 28일 | 남북고위급회담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6차 회의**

- 남북 육상교통로 개설 합의

**7월 30일 | 남북고위급회담 정치분과위원회 제3차 위원 접촉**

**8월 3일 | 남북고위급회담 군사분과위원회 제1차 위원 접촉**

**8월 4일 |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3차 평양 토론회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

**8월 5일 | 남북고위급회담 정치분과위원회 제4차 위원 접촉**

- 남북은 쌍방 부속합의서에 대한 내용절충을 계속하여 제4장~제8장까지 각 조항에 대해 축조토의를 마치고, 쌍방이 본질적으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조항과 의견타협이 가능한 유사조항을 상호 확인

**8월 7일 |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 관련 제8차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 남북양측은 8차례의 접촉에서 ① 방문시기 ② 방문단 규모 ③ 명단 교환 후보자수 등에 합의했으나 ① 방문단에서 범죄자의 제외 ② 기자의 취재활동 때 상대방 비방 금지 ③ 공연 선전물의 시내부착 문제 등의 실무문제를 타결하지 못한 채 북측은 ① 핵문제 ② 이인모씨 송환 ③ 포커스렌즈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고 남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음.

- 8월 7일 | 임동원 통일원 차관, 논평에서 노부모 방문단 교환사업 무산에 대한 유감 표명과 북한에 대해 남북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교환사업 실현 촉구
- 8월 8일 | 장영훈 한적 총재, 노부모 방문단 교환사업 무산에 대해 북한의 태도는 적십자 인도주의정신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며 고위급회담의 합의사항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고 언급
- 8월 10일 | 남북고위급회담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5차 위원 접촉  
- ① 자원의 공동개발 ② 교류물자에 관한 비관세 ③ 쌍방의 특허권·상표권 보호 등 교류협력분야의 부속합의서 16개 조항의 문안 완전 합의
- 8월 12일 | 남북고위급회담 군사분과위원회 제2차 위원 접촉  
- 남북은 새로 조정된 우리측 부속합의서를 중심으로 제1장~제6장까지 조항별 토의를 통해 상호입장을 확인하였으며 차기접촉에서 내용절충 및 문안정리를 하기로 하였음.
- 8월 15일 | 노태우 대통령, 제47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핵개발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발전·기대 불가 입장표명과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교환사업 불이행에 대한 유감표명 및 고향방문사업 정례화 촉구
- 8월 19일 | 남북고위급회담 정치분과위원회 제5차 위원 접촉  
- 남북은 쌍방 부속합의서안에 대한 조항별 내용절충을 계속한 결과 제25조 「재외공관에서 남북상호 협조」 등 4개조에 대한 문안정리를 마치고 합의하였음.
- 8월 20일 | 남북고위급회담 군사분과위원회 제3차 위원 접촉  
- ① 불가침경계선과 관할구역 ② 군사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③ 합의서 발효 뒤 이른 시일 안에 각각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실무자 접촉 ④ 합의서 발효 뒤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 개통 등 4개 조항 합의
- 8월 21일 | 남북고위급회담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6차 위원 접촉  
- ① 교육·문학·예술보건·체육과 신문·텔레비전 및 출판·문화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② 상대측의 제작물에 대한 권리보호 ③ 민족구성원의 자유왕래·접촉 실현 ④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 실시 등 합의
- 8월 26일 | 남북고위급회담 군사분과위원회 제7차 회의  
- 남북 쌍방은 제1장과 제2장의 제목을 각각 무력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방지로 한다는 데 합의
- 8월 28일 | 남북고위급회담 정치분과위원회 제7차 회의
- 8월 31일 | 남북고위급회담 핵통제공동위원회 제8차 회의
- 8월 31일~9월 12일 | IAEA, 북한 핵에 대한 제3차 임시사찰 실시
- 9월 1~6일 |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3차 토론회
- 9월 2일 | 남포 조사단 및 경제 부총리 방북을 위한 제1차 연락관 접촉

- 9월 3일 | **남북고위급회담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7차 회의**  
- 북한의 원산·남포·청진항을 남북교류협력항으로 추가 규정 합의, 이산가족 재결합 원칙 등 62개항 타결
- 9월 4일 | **남북고위급회담 정치분과위원회 제2차 위원장 접촉**
- 9월 4일 | **남포 조사단 및 경제부총리 방북을 위한 제2차 연락관 접촉**
- 9월 5일 | **남북고위급회담 군사분과위원회 제8차 회의**  
- 제5장의 제목을 협의·이행기구로 합의하고, 긴급분쟁발생시 적대행위 중지 및 통보, 추가적인 불가침의 이행·준수, 공동위원회의 기능 등 일부조항에 대해서도 합의
- 9월 7일 | **남북고위급회담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위원장 접촉**  
- 남북은 우리측이 제시한 수정안을 집중토의하여 2개 조항을 제외한 총 20개조, 50개항의 문안정리를 마침으로써 부속합의서가 사실상 타결되었음.
- 9월 7일 |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책임연락관 제1차 접촉**  
- 제8차 고위급회담 일정 및 통신문제 등을 협의
- 9월 7일 | **남포 조사단 및 경제 부총리 방북을 위한 제3차 연락관 접촉**
- 9월 8일 | **남북고위급회담 정치분과위원회 제3차 위원장 접촉**  
- 남북은 각기 부속합의서 절충안을 제시하고 조항별 토의를 진행하여 제10조 등 3개조 합의
- 9월 10일 |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책임연락관 제2차 접촉**  
- 우리측 대표단 명단과 북측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교환하고 평양체류기간 세부일정 협의
- 9월 15~18일 |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  
- 〈교류협력, 화해, 불가침의 3개 부속 합의서〉 채택·발표 및 화해공동위원회 구성 합의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문〉  
회담에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표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1992년 10월 15일(목)에 구성함과 동시에 각기 자기측 구성원 명단을 상대측에 통보  
② 각 공동위원회는 제1차 회의 개최일자와 장소를 다음과 같이 함.  
ㄱ.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1992년 11월 5일(목),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  
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1992년 11월 12일(목),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  
ㄷ.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1992년 11월 19일(목),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  
ㄹ.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1992년 11월 26(목),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

에서 개최

③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2년 12월 21~24일 개최(서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 체제(제도)인정·존중

- ①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제도)를 인정하고 존중
- ②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제도)를 소개하는 자유를 보장
- ③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을 인정·존중
- ④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해결

2. 내부분쟁 불간섭

- ⑤ 남과 북은 상대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함.
- ⑥ 남과 북은 상대방의 대외관계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함.
- ⑦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상대방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3. 비방·중상 중지

- ⑧ 남과 북은 언론·삐라 및 그 밖의 다른 수단·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함.
- ⑨ 남과 북은 상대방의 특정인에 대한 지명 공격을 하지 아니함.
- ⑩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함.
- ⑪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지 아니함.
- ⑫ 남과 북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비방·중상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함.
- ⑬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시각매개물(게시물)을 비롯한 그 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함.
- ⑭ 남과 북은 군중집회와 군중행사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함.

4. 파괴·전복 행위금지

- ⑮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테러, 포섭, 납치, 살상을 비롯한 직접 또는 간접, 폭력 또는 비폭력 수단에 의한 모든 형태의 파괴·전복 행위를 하지 아니함.
- ⑯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 행위를 하지 아니함.
- ⑰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과 상대측 지역 및 해외에서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 단체나 조직을 결성 또는 지원·보호하지 아니함.

5.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 ⑱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
- ⑲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

⑳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

6.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 ㉑ 남과 북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의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않으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
- ㉒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협조조치를 강구
- ㉓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공관(대표부)이 함께 있는 지역에서 쌍방 공관(대표부) 사이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
- ㉔ 남과 북은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 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이룩되도록 노력

7. 이행기구

- ㉕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따로 작성
- ㉖ '남북화해공동위원회'안에 '법률실무협의회'와 '비방·중상중지실무협의회'를 두며 그 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별도로 작성

8. 수정 및 발효

- ㉗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음.
- ㉘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 무력불사용

- ①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일대를 포함하여 자기 측 관할 구역 밖에 있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대하여 총격, 포격, 폭격, 습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 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일체 무력도발 행위를 하지 않음.
- ②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음.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 구역에 정규무력이나 비정규무력을 침입시키지 않음.
- ③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남북 사이에 오가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수송 수단들을 공격, 모의공격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는 일체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음. 이 밖에 남과 북은 북측이 제기한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서울지역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

2.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 ④ 남과 북은 상대방의 계획적이라고 인정되는 무력침공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상대방측에 경고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무력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 대책을 세움. 남과 북은 쌍방의 오해나 오인,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우발적 무력충돌이나 우발적 침범 가능성을 발견하였을 경우 쌍방이 합의한 신호규정에 따라 상대방측에 즉시 통보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책을 세움.
- ⑤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무력집단이나 개별적인 인원과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이 자연재해나 항로미실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방측 관할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 침범측은 상대방측에 그 사유와 적대의사가 없음을 즉시 알리고 상대방측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상대방측은 그를 긴급 확인한 후 그의 대피를 보장하고 빠른 시일 안에 돌려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함. 돌려보내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음.
- ⑥ 남과 북 사이에 우발적인 침범이나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같은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의 군사당국자는 즉각 자기측 무장집단의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고 군사직통전화뿐만 아니라 빠른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방측 군사당국자에게 즉시 통보
- ⑦ 남과 북은 군사분야의 모든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쌍방 군사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하여 협의 해결
- ⑧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 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
3.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 ⑨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함.
- ⑩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함.
- ⑪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함.
4.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 ⑫ 남과 북은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운영
- ⑬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쌍방이 합의하는 통신수단으로 문서통신을 하는 방법 또는 전화문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직접 통화할 수 있음.
- ⑭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술실무적 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빠른 시일 안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실무자접촉에서 협의 해결
- ⑮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
5. 협의·이행기구
- ⑯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합의서 제12조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에 따르는 임무와 기능을 수행
- ⑰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움.



6. 수정 및 발효

⑱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음.

⑲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 경제교류·협력

①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함.

ㄱ.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

ㄴ.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함.

ㄷ.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교류·협력 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함.

ㄹ.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 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음.

ㅁ. 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 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함.

ㅂ.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함.

ㅅ.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

ㅇ.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음.

ㅈ.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함.

ㅊ.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 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 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

ㅋ.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

ㅌ.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협의하여 정함.

ㅍ.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

②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

ㄱ.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

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 대책을 공동으로 세움.

ㄴ.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③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

ㄱ. 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

ㄴ.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

ㄷ. 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

ㄹ. 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 협력을 실시

ㅁ. 남북 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

ㅂ.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 구제조치를 취함.

ㅅ. 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 협약들을 존중

ㅇ. 남과 북은 남북 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방법과 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함.

④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

ㄱ.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 협력을 실시

ㄴ.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

ㄷ.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음.

ㄹ. 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 협약들을 존중

ㅁ. 남과 북 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함.

⑤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

ㄱ.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 기구들에서 서로 협력

ㄴ.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

⑥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

⑦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함.

- ⑧ 이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함.

2. 사회문화교류·협력

- ⑨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

- ㄱ.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
- ㄴ.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
- ㄷ.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종단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
- ㄹ.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전시회를 진행
- ㅁ.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 ⑩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

- ㄱ. 남과 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함.
- ㄴ.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 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 대로 이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음.
- ㄷ.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
- ㄹ.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 ㅁ. 남과 북을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음.
- ㅂ.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왕래와 방문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ㅅ.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 조치를 취함.
- ㅇ.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함.

- ⑪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

- ㄱ.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
- ㄴ.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

- ⑫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
- ⑬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 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함.
- ⑭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함.

### 3. 인도적 문제의 해결

- ⑮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
  - ㄱ.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 단체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함.
  - ㄴ.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절차에 따라 실현함.
  - ㄷ.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면회소 설치문제를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협의·해결하도록 함.
  - ㄹ.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
  - ㅁ.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
- ⑯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
- 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
- ⑱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함.

### 4. 수정·발효

- ⑲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음.
- ⑳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

9월 18일 | 북한 전금철 조평통 부위원장, 한중 수교에 대해 “남조선이 우리를 포위·고립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고 통일을 방해하는 외적 요인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면 찬성한다”고 언급

9월 19일 | 남북고위급회담 핵통제공동위원회 제4차 위원 접촉

9월 22일 | 노태우 대통령, 제47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동북아 평화회의’ 제의

- 북한의 핵개발 움직임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되며 북한은 조속히 핵의혹을 씻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올 것을 촉구함. 동북아에 새로운 평화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이지역 국가들간의 동북아평화협의회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함.

- 9월 24일 | **북한 노동신문, 노태우 대통령의 9월 22일 유엔총회연설 비난 논평**  
- 북한의 핵정책은 철두철미 평화적 목적에 복종하고 있으며 이는 3차례의 IAEA 비정기사찰을 통해서 명백히 확증되었음. 남북이 상호핵사찰을 하되 주한미핵무기와 핵기지를 전면 사찰하여 그의 존재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 9월 25일 | **남포조사단 및 경제 부총리 방북을 위한 제4차 연락관 접촉**  
- 쌍방 최각급 부총위원 겸 경제기획원 장관의 방북을 10월 중순으로 한다는데 잠정합의하고 방문기간 및 방문단규모에 대하여 협의
- 9월 28일 | **남포조사단 및 경제 부총리 방북을 위한 제5차 연락관 접촉**  
- 남포조사단의 방북기간(10월 3~8일), 규모(14명), 명칭 등에 합의하고 단장은 대우 측에서 선임기로 함.
- 9월 30일 | **남포조사단 및 경제 부총리 방북을 위한 제6차 연락관 접촉**  
- 남포조사단 방북기간은 10월 6~9일로 재조정 합의, 방북자 명단과 신변안전보장각서 등 상호 교환
- 9월 30일 | **남북고위급회담 핵통제공동위원회 제5차 위원 접촉**
- 9월 30일 | **북한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 뉴욕 주재 한국특파원들과 기자회견에서 남북한 상호 핵사찰, 주한미군 철수 주장**  
① 남-북한, 미-북한간 관계개선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호 핵사찰 문제에 대해 남한의 미군 핵에 대한 사찰이 상호사찰에 포함되어야 함.  
② 남북한 정상회담은 민족통일을 이루기 위한 역사적인 것인 만큼 만반의 사전준비가 필요함.  
③ 남북한 교류는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가 합의된 만큼 확대되어 연방제통일 전망을 밝게 해주었음.  
④ 주한미군 문제는 남북대화와 합의서 이행엔 관계가 없으나 통일에는 장애가 되는 만큼 철수되어야 함.
- 10월 1일 | **남북고위급회담 이인모문제와 이산가족면회소설치문제 협의 제1차 대표 접촉**
- 10월 5일 | **남북고위급회담 이인모문제와 이산가족면회소설치문제 협의 제2차 대표 접촉**  
-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사업의 정례화, 관문점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남북 동진호 선원 및 이인모 송환문제 등을 협의했으나 타협 결렬
- 10월 5일 | **남북고위급회담 쌍방대표 접촉**
- 10월 5일 | **안기부, '조선노동당 사건' 관련 간첩단 62명 구속 발표**
- 10월 5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전문 22조로 된 「조선 외국인투자법」 채택 결정**
- 10월 6~9일 | **'남포조사단' 관문점 경유 방북**
- 10월 7일 | **최영철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간첩단 사건 관련 대북 사과 촉구 성명**  
-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개선을 논하면서 체제전복 목적의 간첩납과 및 포섭 등 공

작활동을 계속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근본적으로 유린한 것임.

**10월 7일 | 제14차 한미군사위원회(MCM) 본회의 개최(미국 워싱턴)**

- ① 한미합동 팀스피리트군사훈련 재개
- ② 주한미군 2단계 감축계획의 유보
- ③ 한반도 위기 때 미군의 신속전개 역지전력 즉시 투입
- ④ 미측이 한국군의 정보능력 향상 노력을 적극지원 등 합의

**10월 8일 | 제2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개최**

〈공동성명〉

- ① 미국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계속 제공할 것을 재확약
- ② 주한미군의 계속 유지 및 주한미군의 추가감축 유보
- ③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국군에 돌려줄 것
- ④ '93년 팀스피리트 군사훈련 실시 준비
- ⑤ 한국정부가 '93년도에 2억2천만 달러 상당을 주한미군에 지원할 것
- ⑥ 한미방산기술협력소위원회 등 기존 협력체제의 발전 등 다짐

**10월 8일 | 북한 조평통, 안기부의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조사결과 비난**

- 남조선 안기부가 발표한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이란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으며 그들 자신이 연출한 자작극임.

**10월 9일 | 이동복 정치분과위원장, 정치분과위원회 긴급 소집 제의**

- 남북기본합의서 등의 채택 발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간첩남파 및 공작활동을 계속해 왔음. 북측은 이에 대한 시인,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정치분과위를 긴급 소집할 것을 제의함.

**10월 12일 | 북한, 정치분과위원회 소집 거부**

**10월 13일 | 북한 조평통,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요구**

- 만일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이 또다시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벌이면서 긴장격화의 길로 나간다면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모든 대화들이 파탄되고 북남합의서의 이행이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

**10월 13일 | 정부, 최각규 경제부총리 방북 연기 통보**

**10월 14일 | 남북고위급회담 핵통제공동위원회 제6차 위원 접촉**

**10월 21일 | 현승종 국무총리, 간첩단 및 핵개발 의혹 관련 간첩단사건이 〈남북기본합의서〉 제14조, 〈화해분야 부속합의서〉 제15조, 제17조 위반임을 엄중 경고**

**10월 22일 | 남북고위급회담 핵통제공동위원회 제9차 회의**

**10월 26일 |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명단 상호 통보**

**10월 27일 | 북한, 팀스피리트 훈련재개 공동대처를 위한 당·정·사회단체 연합회의에서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시 고위급 회담 등 모든 남북대화 접촉 중단 결의

- 10월 28일 | 남북고위급회담 남북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을 위한 통신실무자 접촉
- 10월 29일 | 남북고위급회담 핵통제공동위원회 제7차 위원 접촉
- 10월 31일 | 북한 연형묵 정무원 총리, 화랑·독수리 등의 군사훈련과 '93 팀스피리트 군사훈련 재개 결정 취소 요구
- 11월 2일 | 현승종 국무총리, 공동위원회 회의 개최 촉구
- 11월 3일 | 북한, 적십자 본회담 개최 거부
- 11월 3일 | 북한 화해·군사·경제·사회문화 공동위원장, 11월 중 개최될 예정인 분야별 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거부
- 11월 3일 | 북한 최봉춘 남북연락사무소 소장, 남북군사 직통전화 설치를 위한 남북접촉과 관련 현 실정에서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과 관련된 실무접촉을 가질 수 없다고 거부
- 11월 3~14일 | IAEA, 북한에 대한 제4차 임시 핵사찰
- 11월 4일 | 최영철 부총리, 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촉구
- 11월 18일 | 남북고위급회담 핵통제공동위원회 제10차 회의
- 11월 27일 | 남북고위급회담 핵통제공동위원회 제11차 회의
- 12월 4일 | 북한 안병수 남북고위급회담 대변인, 팀스피리트훈련 재개결정 철회 시 남북대화 재개 시사
- 12월 10일 | 남북고위급회담 핵통제공동위원회 제12차 회의
- 12월 10일 | 공로명 남북고위급회담 대변인, 북한 핵문제 진전이 없을 경우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불가피하다고 언급
- 12월 10일 | 김용환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 책임연락관,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의 일정 및 실무절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책임연락관 접촉(12월 14일) 제의
- 12월 11일 | 북한 안병수 남북고위급회담 대변인, 책임연락관 접촉 앞서 팀스피리트 훈련 철회 요구
- 12월 11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 4차 회의 개최  
- 연형묵 총리 경질, 후임에 강성산 임명
- 12월 11일 | 북한 최봉춘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 책임연락관, 실무절차 협의를 위한 남북 접촉 거부
- 12월 12일 | 북한 4개 공동위원장,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거부
- 12월 14일 | 남북고위급회담 핵통제공동위원회 제8차 위원 접촉
- 12월 14~20일 | IAEA, 북한 핵에 대한 제5차 임시사찰
- 12월 17일 | 남북고위급회담 핵통제공동위원회 제13차 회의

# 1993년

- 1월 1일 | 노태우 대통령, 신년사에서 “남북한은 지난달 〈남북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대결과 분단의 어두운 시대를 마무리 짓고 화해와 협력의 밝은 시대를 열었다”고 언급
- 1월 1일 | 북한 김일성 주석, 신년사에서 “민족자존주의 원칙은 양보할 수 없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 이 원칙을 부정하면서 대화요 통일이요 하는 것은 민족에 대한 우롱이며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언급
- 1월 1일 | 김영삼 차기 대통령, 서울신문 특별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용의 표명  
- 김일성 주석이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개방화 흐름에 동참한다면 언제라도 만날 용의가 있음.
- 1월 8일 | 김영삼 차기 대통령, 이북5도민 중앙연합회 간부들과의 면담에서 북한인권문제 제기 의사 표명  
- 이제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강력히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북한의 부모형제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음.
- 1월 25일 | 남북고위급회담 핵통제공동위원회 위원장 접촉
- 1월 26일 | 손인교 남북연락사무소 소장, '93 팀스피리트 야외 기동훈련 실시 통보 및 북한참관 초청
- 1월 26일 | 국방부, '93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발표  
- 북한이 남북상호핵사찰에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 관계로 '93 팀스피리트 훈련을 3월 중순부터 10일간 실시키로 결정
- 1월 26일~ | 북한 핵에 대한 제6차 임시사찰
- 2월 6일
- 1월 29일 | 북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결정 관련 동결상태에 빠진 남북당국사이 대화재개 의사 없음을 언급
- 1월 29일 | 북한 손성필 주 러시아 대사, 팀스피리트 훈련이 3월부터 예정대로 실시된다면 자국내 IAEA 사찰대상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
- 1월 29~30일 | 두만강지역 개발 통신전문가회의
- 2월 2일 | 공로명 고위급회담 대변인, 북한의 대화거부 관련 동결상태에 빠진 남북 당국간 대화 즉각 정상화 촉구
- 2월 4일 | 김영삼 차기 대통령,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강조  
-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위해 IAEA 및 각 지역협력체를 통한 국제적 압력과 설득이 중요함. 개방·개혁의 조류가 북한에 영향을 주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
- 2월 7일 | 북한 외교부 대변인, 핵사찰 문제와 관련 북한과 IAEA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군사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북한에 부당한 조치가 강요된다면,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고 언급

- 2월 9일 | IAEA, 북한의 2개 미신고시설 특별핵사찰 수용촉구 서한 발송
- 2월 11일 | IAEA 대변인, 북한에 특별핵사찰 수용 요청서한 발송
  - 북한이 IAEA특별사찰 수용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특별이사회결의로 사찰수용을 촉구하고 이에 불응시 UN안보리에 이 문제를 회부할 것임.
- 2월 15일 | 북한 손성필 주 러시아 대사, IAEA 특별사찰 거부 의사 표명
- 2월 15일 | 노태우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관련 언급
  -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측에서도 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 왔었음. 남북 두 정상 만났으면 남북관계는 엄청나게 진전될 수 있었을 것이나, 북한의 핵문제로 성사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 차기정부에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은 경제재건과 함께 북한 핵문제 해소를 통한 남북관계의 진전임.
- 2월 16일 | IAEA, 북한 핵시설 특별사찰 관련 북한이 제출한 핵시설 및 핵물질제고에 관한 신고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발표
- 2월 19일 | 북한 최우진 핵통제공동위원회 위원장, IAEA의 대북한 특별사찰 시도 규탄
  - IAEA가 우리에게 대한 특별사찰문제를 제기한 것은 핵활동과 무관한 군사기지에까지 사찰을 확대, 우리를 무장해제시켜보려는 미국의 거짓 정보제공과 압력에 따른 것임.
- 2월 19일 | 이철 주제네바 북한대표, IAEA 특별사찰 강행 시 핵안전협정 파기 경고
- 2월 25일 |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에서 통일문제에서의 민족 우선 강조
  - 세계는 대결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음. 다른 민족과 국가 사이에도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올 수는 없음.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함. 김 주석이 참으로 민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남북한 동포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원한다면 이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음.
- 2월 25일 | IAEA 이사회, 앞으로 1개월 안에 IAEA의 특별사찰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대북결의안 채택
- 2월 28일 | 북한, 팀스피리트 훈련 및 IAEA 특별사찰 계획에 대해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 라고 비난,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
- 3월 5일 | 김영삼 대통령, 육사 졸업식에서 새정부의 안보 목표는 북한을 적대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동족으로서 포용하고 온 겨레가 함께 하는 시대를 여는데 있다고 하면서 남과 북은 평화통일과 공동번영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
- 3월 8일 | 북한, 준전시상태 선포
  - 김정일은 오후5시 '중대방송'으로 발표된 북한군최고사령관 명령 제0034호
  - 전국·전민·전군이 1993년 3월 9일부터 준전시 상태로 넘어갈 것. 조선인민군 육해공군부

대들과 조선인민정비대, 노농적위대, 붉은 청년근위대 전체 대원들은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적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원수들이 언제 어느때 덤벼들어도 일격에 소멸할 수 있게 만단의 전투동원 태세를 갖추는 것

3월 9일 | 한미합동 '93 팀스피리트 훈련 돌입

3월 10일 | 통일관계장관회의 제9차 회의, 통일원장관·외무부장관·안기부장·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된 통일관계장관 전략회의 구성기로 결의

3월 11일 | 정부, 통일관계장관 전략회의에서 이인모 방북허용 관련 공식입장 발표

- 이인모 노인의 방북허용 조치가 앞으로 남북간 신뢰회복은 물론 이산가족 문제해결과 핵문제 해결 등을 통한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함.

3월 12일 | 북한, 중앙인민위원회 9기 7차회의에서 핵확산금지조약기구 탈퇴 성명

- 만일 우리가 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사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교전일방인 미국의 정담행위를 합법화해 주는 것으로 되며 우리의 모든 군사대상에 대한 전면적 개방의 시초로 될 것임.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들은 공정성과 엄정 중립에 기초하여 핵확산금지조약의 이행을 감시해야 할 본연의 자세에서 이탈함으로써 미국의 반공화국 책동에 가담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음. 조선정부는 나라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득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선포함. 우리의 이러한 원칙적 입장은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을 중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이 독자성과 공정성의 원칙으로 돌아설 때까지 달라지지 않을 것임.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우리 공화국 정부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

3월 12일 | 정부, 북한의 NPT 탈퇴선언 관련 성명 발표

- 북한이 핵무기 비확산 조약을 탈퇴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혹을 더욱 짙게 하는 것임. 북한의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 포기예 따른 남북간의 긴장고조와 국제적 제재에 대하여는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임.

3월 15일 | 북한 이철 주체네바 대사, NPT 복귀 조건 교섭 용의 표명

- ① 팀스피리트 훈련 영구중지할 것
- ②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위협을 제거할 것
- ③ IAEA가 유일한 초강대국(미국)에 복종하는 것을 중지할 것
- ④ IAEA 사무국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할 것

3월 16일 | 이인모 방북문제관련 연락관 접촉

3월 19일 | 이인모 관문점 통해 송환

3월 19일 | 한·미 군당국, '93 팀스피리트 기동훈련 종료 공식발표

3월 20일 | IAEA 특별이사회, 결의안을 통해 북한이 특별사찰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

3월 24일 |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준전시상태 해제명령 하달

- 3월 27일 | 북한 전금철 조평통 부위원장, 이인모 송환 감사 성명 발표
- 3월 29일 | 북한 외교부,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핵사찰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상정하는 등 계속 압력을 가할 경우 강력한 자위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표
- 3월 30일 | 한승주 외무부 장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기구 탈퇴 반복할 경우 대북한 반대급부 내용 제시
  - ① 남북한 군사시설에 대한 핵사찰의 확대
  - ② 팀스피리트훈련 규모 축소
  - ③ 북한에 대한 비핵공격 보장
  - ④ 교역 확대
  - ⑤ 한·미·일의 대북한 관계개선
- 4월 1일 | IAEA 이사회, 북한을 핵안전협정 불이행 국가로 규정하는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하는 결의안 채택
  - 이사회 참석 34개국 중 찬성 28, 반대 2(중국, 리비아), 기권 4개국
- 4월 1일 | 김영삼 대통령, 동남일보 창간 73주년 특별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NPT탈퇴 철회 및 IAEA 사찰수용 촉구
- 4월 2일 | 한승주 외무부 장관, 북한이 IAEA의 사찰을 받을 경우 남한내에 있는 군사기지 및 미군기지의 IAEA 사찰 수용을 한·미 양국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
- 4월 2일 | 한완상 통일원 장관, UN의 대북한 제재결의시 남북경협 중단의사 표명
  - UN이 대북 경제 제재조치를 결의할 경우 현재 간접교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물자교역도 전면 금지될 것임.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이라도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는 북한과 대화를 가질 수 있을 것임.
- 4월 4일 | 북한 외교부, IAEA 특별이사회의 북한 핵문제 유엔안보리 회부에 대해 양면적 이중기준 정책이라고 비난
  - 미국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무기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원자력기구도 이 나라에 대한 115차례의 핵사찰을 실시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묵인해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했으면서도 우리에게 대해서는 단지 6차례의 사찰로 특별사찰을 강요하고 ‘조약 불이행국’으로 규정하여 유엔에 넘기는 것은 부당함.
- 4월 7일 | 북한 김일성 주석,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 연설에서 ‘조국의 통일을 위한 전 민족대 단결 10대 강령 및 4대 요구조건’ 제시
  -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 ①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함.
  - ②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함.
  - ③ 공존·공영·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함.
  - ④ 동족사이에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의 정치적 논쟁을 중지하고 단결해야 함.
  - ⑤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에 대한 우려를 다같이 없애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해야 함.

- ⑥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함.
- ⑦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정신적 재산을 보호해야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데 이롭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해야 함.
- ⑧ 접촉·왕래·대화를 통해 전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여 단합해야 함.
- ⑨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연대성을 강화해야 함.
- ⑩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해야 함.

〈대남 4대 요구조건〉

- ① 외세의존 정책 포기
- ② 미군철수의지 표명
- ③ 외국군대와 합동군사연습 중지
- ④ 미국의 핵우산으로부터 탈피

**4월 8일 | 유엔안보리(15개 회원국), 북한 핵문제에 대한 첫번째 성명 채택**

- ① 핵확산금지조약기구의 중요성과 이 조약 준수의 중요성 재확인
- ②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 지지
- ③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IAEA의 지속적인 노력 등 촉구

**4월 20일 | 통일관계장관회의 제10차 회의, 통일문제 3개 기본입장 확정**

- 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지돼야 하며
- ② 북한의 핵무기 의혹 저지를 위해서는 북한의 NPT 복귀, IAEA 특별사찰과 함께 남북상호 사찰이 실현돼야 하고
- ③ 북한의 핵문제를 무력이 아닌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함.

**4월 28일 | 김영삼 대통령, 리 네자비시마야 가제타지 회견에서 점진적 통일 추진 입장 표명**

-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 협의에 의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남북연합 등 중간단계를 거쳐 단일국가로 통일되는게 바람직함.

**4월 30일 | 미국 국무부, 북한 등 6개국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

- 북한, 이란, 이라크, 쿠바, 리비아, 시리아

**5월 1일 | 북한 핵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

- 북한 NPT복귀와 IAEA안전조치협정 이행 요구

**5월 9~10일 | 두만강지역 개발 계획관리위원회 제3차 회의**

- 회의의 주제의제: 정부간 조정위원회 및 국제사회의 직무 및 구성, 두만강개발사업 국제협약 및 초안검토, TREZ내 자원 및 산업개발과 개발사업의 환경분야 기본원칙, 통신, 운송 Infra 각부문 기본 개발 계획

**5월 10일 | 통일원 대변인, 북한의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호응촉구 호소문' 발송 관련 지정수신자에게 직접 전달치 않기로 했음을 밝히고, 대신 편지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남북교류협력상담실에 비치해 열람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

1993

- 5월 11일 | 유엔안보리, 북한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를 재고하고 조약의무 재확인 촉구 결의안 채택(찬성13, 기권2(중국, 파키스탄))
- 5월 12일 | 북한 외교부, 핵확산금지조약기구 탈퇴의 정당성 강조
  -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기구 탈퇴는 국가이익이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사태하에서 취해진 자위적 조치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유엔안보리에서 논의될 성격의 것이 아니며 더욱이 유엔이 대북결의를 채택할 아무런 법률적 명분도 타당성도 없음.
- 5월 14일 | 한완상 부총리겸 통일원 장관, 북한핵문제 관련 남북대화 용의 표명
- 5월 19일 | 황인성 국무총리, 남북연락사무소 소장 교체(손인교 이준구)통보
- 5월 20일 | 황인성 국무총리, 핵문제해결을 위한 고위급 회담 대표 접촉 제의
- 5월 20일 | 황인성 국무총리,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명단 통보(수석대표 황인성 외 6명)
- 5월 24일 | 김영삼 대통령, 태평양경제협력회(PBEC) 서울총회에서 '남북연합' 단계 통한 점진적·평화적 통일 추진의사 표명
- 5월 25일 | 북한 강성산 총리, 남북특사교환 대남서한
  - 나는 민족 앞에 누적되어 있는 중대사들을 포괄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제안으로서 쌍방 최고당국자들이 임명하는 특사들을 교환할 것을 정중히 제안하는 바임. 특사들은 나라의 통일문제 해결을 위하여 쌍방 정상들이 만나는 문제와 북남 사이의 현안문제들을 타결하기 위한 최고위급의 중대한 뜻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아 할 수 있을 것임. 특사들은 부여된 임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각기 통일사업을 전담하여 보는 부총리급으로 하며 그들의 교환시기는 빠를수록 좋을 것임. 특사들의 교환을 위해서는 쌍방 실무자들의 접촉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실무자 접촉은 부부장(차관)급을 책임자로 하여 2명으로 하되 5월 31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 통일각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임.
- 5월 29일 | 황인성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 핵문제 해결 및 남북한 현안문제와 북한이 새롭게 제기한 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 접촉(6월 5일) 제의
- 5월 31일 | 강성산 북한 정무원 총리, 특사 교환방문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자 접촉(6월 4일) 제의
- 5월 31일 | 한승주 외무부 장관, 외교협회 초청연설에서 통일외교는 ① 분단상황 관리외교 ② 통일 가져오기 외교 ③ 통일 이후 준비외교 등 3가지 요소 고려 강조
- 6월 3일 | 김영삼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투명성이 보장될 때,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을 적극 도울 것이며, 공존공영은 구체화될 것이라고 언급
- 6월 4일 | 북한 강성산 정무원 총리, 특사교환 관련 실무절차협의를 위한 실무자 접촉(6월 7일) 제의
- 6월 7일 | 황인성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문제와 특사교환 문제를 함께 협의하기 위한 실무대표 접촉(6월 8일) 제의
- 6월 8일 | 북한 강성산 정무원 총리, 특사교환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최우선 협의용의 표명,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자 접촉(6월 10일) 제의

- 6월 9일 | 황인성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 핵문제와 특사 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6월 10일) 제의
- 6월 10일 | 북한 김광섭 오스트레일리아주재 대사, 한국기자 회견에서 핵투명성 보장 주장  
-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더라도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결백성과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될 것이며 그 형식은 핵확산금지조약 미가입국이면서 핵의 투명성을 인정받고 있는 아르헨티나·브라질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임. 유엔안보리의 북한 제재 조치는 파멸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부당한 제재에는 대항조치를 취할 것임.
- 6월 11일 | 북·미 제4차 고위급회담, 북한이 NPT 탈퇴를 유보하고 후속회담을 계속기로 했다는 공동성명 발표
- 6월 11일 | 북한 강성산 정무원 총리, 특사교환 실무자 접촉(6월 15일) 제의
- 6월 12일 | 외무부, 북한의 NPT 탈퇴 유보 조치관련 성명 발표  
- 북한이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 응해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6월 12일 | 김영삼 대통령, 남북정상회담전 북한핵문제 선결 입장 표명  
- 북한이 정상회담을 제의했지만 핵문제 선결원칙에 따라 대응하겠음. 남북간에 진실한 대화 가 오가려면 핵의혹 해소를 통한 신뢰회복이 우선되어야 함.
- 6월 14일 | 황인성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 일단 만나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쌍방의 이견을 해소해 가자는 입장표명
- 6월 15일 | 북한 강성산 정무원 총리,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자 접촉(6월 24일) 제의
- 6월 17일 | 김영삼 대통령, 영국 BBC-TV 회견에서 북한핵문제 관련 미국에 추가양보 불허용 촉구  
- 미국이 앞으로 어떠한 추가적인 양보를 해서는 안됨. 북한이 NPT 탈퇴를 유보했지만 한반도 긴장해소에는 미미한 역할을 했을 뿐임. 우리는 한국전쟁에 관한 생생한 기억과 북한정권의 정책을 볼 때, 군사적 갈등가능성에 대해 완벽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함.
- 6월 22일 | 황인성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적 협의와 특사교환 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6월 24일) 제의
- 6월 23일 | 통일관계장관회의 제11차 회의, 정부는 북한이 NPT에 완전 복귀하고 영변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에 동의할 경우, 기업인의 방북을 전면 허용하고 또 남북 상호사찰 규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경협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결정
- 6월 26일 | 북한 강성산 정무원 총리, 특사교환 제의 무산관련 담화 발표  
- 남측은 지난 6월 22일 전화통지문에서 실무급이 마주앉아 핵문제에 관한 기초적 협의를 할 것을 다시 고집함으로써 사실상 우리의 특사교환제의를 전면 거부하는 입장을 명백히 하였음. 앞으로 조선반도에서 우리민족의 이익에 배치되는 일이 발생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이 지게 될 것임.
- 6월 26일 | 오인환 정부대변인, 북한 강성산 정무원총리 담화 관련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이 이룩될 수 없다고 언급

- 6월 27일 | 미·북, 제2단계 고위급회담 관련 예비회담 개최  
- 제2단계 미·북 고위급회담 일정 합의
- 7월 6일 | 김영삼 대통령, 제6기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3단계 통일방안과 통일정책 3대 기조 천명  
- 통일은 먼저 화해와 협력의 단계를 거쳐 ‘남북연합’ 단계로 발전되어야 할 것임. ‘남북연합’ 단계에서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더욱 활발해지고 제도화될 것임. 이 과정에서 남북간의 냉전구조와 대결의식은 서서히 사라질 것임. 이를 통해 남과 북은 점차 1민족 1국가의 통일조국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 이것이 바로 우리의 3단계 통일방안임. 저는 남과 북이 ‘남북연합’ 단계에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위한 통일정책의 세가지 기조를 밝히고자 함. ① 민주적 절차의 존중, ② 공존공영의 정신, ③ 민족복리의 정신
- 7월 12일 | 한완상 통일원 장관, 북한 핵개발의 투명성 보장 3개 조건 언급  
①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완전복귀  
② IAEA 사찰수용  
③ 남북한 상호사찰
- 7월 14일 | 미·북 제2단계 제1차 고위급회담(주제네바 미 대표부)
- 7월 16일 | 미·북 제2단계 제2차 고위급회담(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 7월 19일 | 미·북 제2단계 제3차 고위급회담(주제네바 미 대표부), IAEA·북한 간 협상의 조기재개 의사 확인 및 북한의 남북대화 조속 재개용의 표명 등 양측 합의문 발표
- 7월 20일 | 미국 클린턴 대통령, 인터뷰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까지 아시아 주둔 미군 유지 의사 표명
- 7월 24일 | 정부, 남북한 3단계 문화교류방안 제시  
① 1단계: 문헌자료 및 작품 교류  
② 2단계: 문화예술 및 문화 예술인 교류  
③ 3단계: 남북공동문화예술 사업운영
- 7월 27일 | 한완상 통일원 장관, 북한 IAEA 핵사찰 수용 시 기업인 방북 허용 발표
- 8월 3~10일 | IAEA 북한 핵 사찰단, 방북
- 8월 4일 | 황인성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 사찰규정 마련과 상호 핵사찰 실시를 위한 핵통제공동위원회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8월 10일) 제의  
- 핵통제 공동위원회 교체위원 통보, 위원장 이승곤 외 5인
- 8월 9일 | 북한 남북고위급회담 대변인, 핵통제 공동위 개최제의 거부
- 8월 13일 | 한완상 통일원 장관, 남북인간띠잇기대회 및 제4차 범민족대회 관련 담화
- 8월 14일 | 송영대 통일원 차관, 제14차 핵통제 공동위 재개 촉구
- 8월 15일 | 김영삼 대통령, 제4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 의혹 해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대남비방과 흑색선전, 우리의 근로자와 학생선동, 이 모든 것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에 아무런 변화도 없음을 뜻하는 것임. 나는 북한당국이 핵무기 개발 의혹을 해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8월 15일 | 남북인간띠잇기대회 개최

8월 16일 | 미국 국무부, 제3단계 미·북한회담 관련 입장 표명

- 남북대화 재개 및 IAEA-북한간 본격적 대화가 선행된 후 제3단계 미·북한 회담을 갖기로 함.

8월 18일 | 제12차 통일관계장관회의,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도움이 된다면 회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핵문제와 함께 남북한 현안을 북한측과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 정리

8월 19일 | 미국 국무부 대변인, 북한내 식량난 및 민간소요 사태 확인

8월 24일 | 북·유엔사, 미군유해 송환관련 합의서 채택

- ① 쌍방간 연합군 유해의 수색·발굴·송환·확인을 위해 협조
- ② 연합군 유해의 수색·발굴후 송환
- ③ 연합국군은 수색·발굴·송환 작업 지원
- ④ 수색·발굴·송환작업시 모든 자료 적극활용
- ⑤ 유해의 회수·송환·확인작업을 위한 실무단 구성
- ⑥ 목적달성에 진전이 없을 경우, 추가적 대책 고려
- ⑦ 합의서는 서명과 동시에 효력발생, 실무단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 개시

8월 26일 | IAEA, 북한과의 핵사찰 협상재개 공식발표(8월 31일~9월 4일, 평양)

8월 31일~ | IAEA·북한, 핵사찰 협상 개최

9월 4일 - 북한이 IAEA의 공정성 문제를 시비삼아 안전조치 관련 합의도출 실패

9월 1일 | 북한 남북고위급회담 대변인, 쌍방 최고위급이 임명하는 '임의의 급' 특사교환으로 수정 제의

9월 2일 | 황인성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 회담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핵문제를 비롯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사교환 실무대표 접촉 제의

9월 6일 | 북한 강성산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 9월 8일까지 핵전쟁 연습중지, 국제공조체제 포기에 대한 태도 표명 촉구하고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9월 10일) 제의

9월 8일 | 황인성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 남북대화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되며 아무런 조건 없이 실무대표 접촉(9월 10일)에 나갈 것임을 통보

9월 9일 | 북한 안병수 남북고위급회담 대변인, 핵전쟁 연습 중지와 국제공조체제 포기 강조, 9월 20일까지 입장표명을 전제로 특사교환 실무대표 접촉(9월 23일) 주장

9월 11일 | 김영삼 대통령, 미 CNN-TV회견에서 북한 흡수통일 반대입장 재천명

- 한반도 통일에는 과정이 중요하며, 북한을 흡수통일 할 생각은 결코 갖고 있지 않음. 남북간에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

9월 13일 | 김영삼 대통령, 민주평화통일 해외자문위원 초청 다과행사에서 선 핵문제 해결 후 남북정상



회담개최 표명

- 9월 16일 | 북·미고위급회담 북한 대표 강석주 외교부부장, 미국 국무차관보 앞 편지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고위급회담이 중단되고 IAEA가 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다시 회부하는 사태가 생길 경우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보류의 철회도 불사 할 것이라고 주장
- 9월 17일 | 송영대 우리측 고위급회담 대변인, 부속합의서 발효 1주년 관련 성명에서 북한은 무조건 특사교환 실무대표 접촉 호응과 2개 요구조건을 철회하고, 조건 없이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에 응할 것을 촉구
- 9월 18일 | 북한 남북고위급 회담 대표단, 남조선 당국이 지난 9월 16일 간첩선을 침입시켜 우리측 해안선 지역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는 성명 발표
- 9월 21일 | 북한 남북고위급회담 대변인, 핵전쟁 연습중지와 국제공조체제 포기 등 2가지 문제에 대해 9월 30일까지 명백한 태도 표명에 따라 실무대표 접촉에 나갈 것이라고 언급
- 9월 22일 | 한완상 통일원 장관, 남북이산가족 제3국 상봉추진 제의
  - 남북은 하루빨리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을 실천해야 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판문점에서, 그것도 안된다면 제3국에서라도 이산가족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9월 22일 | 북한 외교부 대변인, NPT 탈퇴경고 담화 발표
  - 미국이 계속 IAEA와의 협상과 북남대화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회담에 인위적 장애를 조성하려 한다면, 미국과의 협상을 전제로 취해온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를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
- 9월 23일 | 김영삼 대통령, 일 마이니찌신문 회견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시 대북 식량지원 용의 표명
  - 북한은 식량부족이 심각하므로 핵문제가 해결되면 대북 식량지원을 실시할 방침임.
- 9월 27일~10월 1일 | 제37차 IAEA총회, 핵사찰 수용 촉구 대북결의안 채택
- 10월 2일 | 북한 강성산 총리,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 개최 제의
- 10월 4일 | 황인성 총리, 실무접촉 제의 수락
- 10월 5일 |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제1차 실무대표 접촉
  - 남측: 핵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특사의 조속한 교환을 제의
  - 북측: 남측에 핵전쟁연습중지, 국제공조체제포기에 대한 명백한 태도표명 촉구 및 서해간 첩선 침입(9월 16일)에 대한 사죄를 촉구
- 10월 5일 | 북한 송원호 외교부 부부장, 유엔총회 연설에서 조선반도의 핵문제관련 미·북 해결주장
- 10월 14일 | 북한 남북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미전향출소 장기수 김인서, 함세환 송환 요구
- 10월 15일 |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제2차 실무대표 접촉
  - 한국측은 토의에 들어갈 것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핵전쟁연습 중지와 국제공조체제 포기를 계속 제기하면서 한국측의 이에 대한 입장표명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주장

- 10월 24일 | **김영삼 대통령, 미 WP지 회견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 비진전시 대북한 제재 강구 시사**  
- 북한 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북한이 태도를 변화하지 않을 경우 제재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음.
- 10월 25일 |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제3차 실무대표 접촉**
- 10월 25일 | **국회, 북한의 IAEA핵사찰 수락 촉구 결의문 채택**
- 11월 1일 | **제48차 유엔총회, 핵사찰 수용촉구 대북결의안 채택**  
- 찬성 140국, 반대 1국(북한), 기권 9국(중국, 쿠바 등)
- 11월 2일 | **외무부 대변인, 유엔총회의 대북결의안 채택관련 논평**  
- 북한은 유엔결의를 존중하여 핵개발의혹을 조속히 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함.
- 11월 3일 | **북한 박영수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 대표단장, 제4차 실무대표 접촉 무기연기 통보**
- 11월 4일 | **북한 외교부, 유엔총회의 대북결의안 거부**  
- 이번 결의는 국제공조체제라는 의의를 씌워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꾸며낸 권모술수임. 우리는 이를 추호도 인정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
- 11월 4일 | **송영대 수석대표, 북한의 대화거부 부당성 지적 및 4차 접촉 개최촉구**
- 11월 4일 | **한·미연례안보협의회, '94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문제 유보 결정**
- 11월 9일 | **북한 박영수 대표단장, 국제공조체제 유지 및 제25차 SCM에서 '94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지하지 않기로 한 사실 비난**
- 11월 11일 | **북한 강석주 핵협상 대표단장, 핵문제의 일괄타결 방식 제의**  
- 양쪽이 최소한 한쪽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냐를 규정하는 일괄 타결 방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임.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 및 적대전략을 포기하는 실질적 행동을 취할 경우 우리는 핵안전협정을 준수할 것이며 핵문제는 대화와 협상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
- 11월 14일 | **김영삼 대통령, SBS 방송 회견에서 북한 핵개발 저지 입장 천명**  
- 북한은 지금 북한정권이 생긴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어 생사를 걸고 핵을 가지려 함. 어떤 경우이든지 북한의 핵개발은 막아야 함.
- 11월 24일~ | **북·미, 뉴욕 실무접촉(7회)**  
1994년 1월 4일
- 11월 25일 | **김영삼 대통령, 방미 귀국기자회견에서 북한핵문제 한국주도 결정 입장 확인**  
- 북한핵문제의 최종적 결정은 우리 손을 거쳐야 한다는 한·미 두 나라간의 합의는 큰 의미가 있음.
- 11월 29일 | **북한 외교부, NPT탈퇴 재선언 위협**  
- 미국이 끝내 조·미 공동성명의 원칙을 백지화하고 회담을 그만두겠다고 한다면 우리도 조약탈퇴

효력발생을 더 이상 정지시킬 필요가 없게 될 것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성공여부는 미국이 대조선 압살정책을 포기할 주견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음.

**12월 2일 | 북한, 최근 미·북 접촉에서 핵문제 일괄타결안(6개항) 제시**

- ① 미국의 핵무기 선제불사용(NSA) 문서보장
- ② 남한내 핵무기 불배치선언
- ③ 팀스피리트훈련 영구중단
- ④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 ⑤ 미국의 대북한 테러국가지정 철회
- ⑥ 고려연방제 지지

**12월 7일 | 북한, UN사측에 UN군 유해 31구 인도**

**12월 30일 | 북한 외교부, 미·북접촉 관련 기자회견**

- 이번 접촉에서 미국측은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제거 조치의 일환으로 T/S훈련 중지의사를 공식 표명하였음. 우리는 이미 신고한 핵시설들을 법적요구에 의한 정기 및 비정기 사찰이 아니라 담보의 연속성 보장에 필요한 사찰을 허용키로 하였음. 이런 진전에 토대하여 제3 단계 회담을 열고 미국의 핵위협과 적대시 정책 종식, 조·미 관계 개선, 우리의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정기 및 비정기 사찰의 재개 등을 일괄타결키로 하였음.

# 1994년

- 1월 1일 | 김영삼 대통령, 신년사에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어,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는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기원한다고 언급
- 1월 1일 | 북한 김일성 주석, 신년사에서 북·미 회담에 의한 핵문제 해결 강조  
- 있지도 않은 북의 핵개발 의혹을 들고 나온 것도 미국이며 조선반도에 실지로 핵무기를 끌어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도 미국임. 그러므로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는 어디까지나 조·미 회담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함. 압력이나 위협은 우리에게 통할 수 없으며 그런 방법에 매달려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뿐 아니라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음. 미국은 모든 사실을 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함. 조·미 사이의 공동성명도 채택된 조건에서 쌍방이 이미 합의한 원칙을 지키고 이행한다면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는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임.
- 1월 6일 | 김영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선 핵문제해결 후 남북정상회담 개최 표명  
- 북한측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밖에서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남북대화를 통해 민족내부에서 지원받는 것이 정도라는 것을 깨닫기 바람.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남북간의 실질적인 관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임.
- 1월 7~15일 | IAEA·북한, 실무접촉 개최
- 1월 21일 | 북한 외교부, IAEA·북한 핵사찰 협상관련 기자회견  
- 우리가 허용하기로 한 사찰은 조약상 의무에 따르는 정기 및 비정기사찰이 아니라 우리가 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맞는 순수 담보의 연속성 보장에 필요한 사찰임. IAEA는 조·미 사이에 합의된대로 이번 협상에서 담보의 연속성보장에 상응하게 사찰범위를 확정하는데 긍정적으로 호응해야 할 것임.
- 1월 26~27일 | 미·북, 미군유해 송환관련 실무회의 개최
- 1월 31일 | 북한 외교부 대변인, 조·미 합의사항 이행촉구 성명  
① 미국이 우리와 한 약속을 끝내 뒤집어 었다면 우리도 더 이상 미국과 한 약속에 구속되지 않을 것임.  
② 미국이 조·미 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도 구태여 회담을 할 생각이 없음.  
③ 미국이 그 어떤 다른 방도를 선택하더라도 우리도 그에 상응한 대응방도를 선택할 것임.
- 2월 11일 | 한승주 외무부 장관, 페리 미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94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합의
- 2월 15일 | IAEA, 북한 핵사찰 수락 발표  
- 북한·IAEA 실무접촉에서 평양당국은 신고된 7개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 요구를 수용할 것임을 통보해 왔음.

- 2월 17일 | 한승주 외무부 장관, 기자회견에서 IAEA 사찰대상에 영변 원자로 핵연료봉 비포함 확인
- 2월 21일 | 북한 외교부, 북한·IAEA간 사찰합의(2월 15일) 관련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에서 ‘특별사찰’을 계속 강요할 경우 NPT를 탈퇴할 것이라고 언급
- 2월 22~25일 | 미·북 뉴욕 실무접촉 개최, 4개항 합의문 발표
  - ① 안전조치의 계속성 유지를 위한 IAEA 사찰 개시
  - ②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실무대표 접촉 재개
  - ③ 1994년 T/S 훈련 조건부 중단 발표 동의
  - ④ 미·북 제3단계회담 1994년 3월 21일 제네바 개최
- 2월 25일 | 김영삼 대통령, 취임1주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김일성 주석과 회담 용의 표명
  - 남북간에 논의되고 있는 남북한 특사교환은 북한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정상회담 개최를 전제로 하고 있음.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리면 핵문제는 물론 남북한의 공존공영을 위한 경제협력문제, 통일문제 등도 깊이 있게 논의될 수 있을 것임.
- 2월 28일 | 송영대 특사교환 접촉 수석대표, 제4차 실무대표 접촉 개최 제의
- 3월 1일 | 김영삼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통일은 세계사적 조류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
  - 북한은 개혁과 개방만이 민족을 하나되게 하며, 민족의 복리를 보장하는 첩경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임.
- 3월 1일 | 북한 박영수 특사교환 접촉 수석대표, 제4차 실무대표 접촉 3일 재개 수정 제의
- 3월 2일 | 송영대 수석대표, 북한 수정 제의 수락
- 3월 3일 | 국방부, IAEA사찰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남북특사 교환을 통해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협의가 이루어진다는 전제 아래 '94 팀스피리트 훈련 조건부 중단 발표
- 3월 3일 |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제4차 실무대표 접촉
  - 북측: 핵전쟁연습 중지와 국제공조체제 포기 등 2개 요구조건을 또다시 거론. 패트리엇 미사일 등 신형무기 반입중지 및 김영삼 대통령이 핵무기를 가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고 한 발언 취소 등 새로운 2개 요구조건을 추가 제기
- 3월 3~14일 | IAEA 사찰단, 북한의 영변 7개 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 종료
- 3월 4일 | 북한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 미·북 뉴욕 실무접촉 합의(2월 25일)관련 '94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이행과 미·북 3단계회담을 지연시킬 경우, IAEA 사찰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언급
- 3월 9일 |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제5차 실무대표 접촉
- 3월 12일 |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제6차 실무대표 접촉
  - 회담 종료 후 ‘쌍방수석대표 단독접촉’ 개최
- 3월 16일 |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제7차 실무대표 접촉

- 3월 16일 | IAEA, 북핵 사찰 결과 발표**  
- 영변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해서는 합의됐던 중요한 조치들이 거부되었음. 이같은 거부의 결과, IAEA로서는 그 핵시설에서 핵물질의 전용이 없었다고 검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음.
- 3월 17일 | 외무부 대변인, IAEA 완전사찰 수용 대북촉구**
- 3월 18일 | 북한 원자력총국 대변인, IAEA 북한 핵사찰결과 발표 관련 담보의 연속성 보장에 필요한 범위의 사찰활동을 전부 허용해주고 사찰단의 사업을 적극 협조해 주었다고 강조**  
- IAEA가 우리를 걸고들면서 또 다시 우리에게 부당한 압력소동을 벌이려 시도한다면 우리는 단호한 조치로 그에 대응할 것임.
- 3월 19일 |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제8차 실무대표 접촉 결렬**  
- 남한: ① 최고당국자에 대한 비방 중지 ② 국민들에 대한 반정부투쟁 선동 중지 ③ 핵문제 우선 해결의 기초 위에서 특사교환을 실현하겠다는 명백한 입장 표명(3개항 요구)  
- 북한: ① 핵전쟁연습 금지 ② 국제공조체제의 포기 ③ 패트리엇 미사일의 한국내 반입 중지 ④ 김영삼 대통령의 대북핵 강경발언 취소(4개항 요구)  
\* 우리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은 대화포기선언·전면대결선언·전쟁선언이라고 주장하면서 “여기서 서울이 멀지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만다”고 위협
- 3월 19일 | 이영덕 부총리, 특사교환 실무대표 접촉 결렬 관련 성명 발표**  
- 북한이 상황을 똑바로 인식하고 하루빨리 올바른 자세로 돌아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함.
- 3월 21일 | 북한 특사교환 실무대표 접촉 대표단, 남한이 미·북 3단계 회담을 방해하기 위해 특사교환을 이용했다고 주장**
- 3월 21일 | 송영대 수석대표, 실무대표 접촉 결렬 관련 성명**
- 3월 21일 | 북한 외교부, 미·북 제3단계회담 무산관련 IAEA 안전조치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는 것을 더 이상 북한의 의무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고 언급**
- 3월 21일 | IAEA 특별이사회, 북한 핵문제의 유엔안보리 회부 관련 대북결의안 채택**  
- 찬성 25, 반대 1(리비아), 기권 5(중국 등)
- 3월 22일 | 한·미 고위 안보회의, 패트리엇 4월 한국배치 결정**
- 3월 23일 | 국회 외무부 통일위, 북한 핵 전면사찰 수용촉구 결의문 채택**
- 3월 24일 | 카라신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8자회담’ 제의 성명**
- 3월 25일 | 한국정부, 러시아 ‘8자회담’ 제의 거부**
- 3월 25일 | 첸지엔 주 유엔 중국 차석대사, 유엔안보리의 대북결의안 반대 입장 공식 표명**
- 3월 28일 | 북한 외교부 대변인, 패트리엇 배치 중지 촉구 성명을 통해 이는 정전협정의 위반이며, 미국이 끝내 이 조치를 단행한다면 엄중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

- 3월 29일 | 김영삼 대통령, 북경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문제의 대화 통한 해결방침 재확인
- 3월 31일 | 북한 외교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해소하고 미·북 회담의 기초를 재수립하는 자세로 나온다면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명
- 3월 31일 | 유엔안보리, 북한 핵문제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 IAEA 사찰 결과 핵물질의 전용, 재처리 또는 다른 작업이 있었는지 결론을 내릴 수 없었음에 우려를 표명함. 북한에 대해 IAEA 사찰단이 1994년 2월 25일 IAEA·북한간 합의한 사찰활동을 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청함. 안전조치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후속사찰 활동에 관하여 IAEA 사무총장이 보고할 때 1994년 2월 25일 IAEA·북한 간 합의한 사찰활동 완료문제를 추가로 안보리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함. 북한과 남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 토의를 재개할 것을 요청함. 안보리는 본건을 계속 계류하고, IAEA·북한간 안전조치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시 추가 토의할 것을 결정함.
- 4월 1일 | 외무부 대변인,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관련 북한이 즉각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 4월 1일 | 주 유엔 박길연 북한대사, IAEA 추가사찰 거부 표명
- 4월 2일 | 북한 외교부 대변인, 러시아의 8자회담 제외관련 러시아의 다무적 협상제안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는 먼저 북한과 미국간에 해결해야 할 정치·군사적 문제라고 주장
- 4월 4일 | 북한 외교부 대변인,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거부
- 4월 7일 | 김영삼 대통령,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구성 지시
  - 북한 핵문제 대책 및 안보정책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총리' 중심의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구성
- 4월 7일 | 미국 클린턴 대통령, 북한 핵문제 관련 '고위 정책 조정팀' 구성 지시
  - 갈루치 차관보를 의장 겸 북한 핵문제 전담대사로 임명
- 4월 11일 | 북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관철을 위한 정부·정당·사회단체 연합회의 개최 및 '8.15 민족대회' 개최 제의 대남 편지 채택
- 4월 12일 | 통일원 대변인, '8.15 민족대회' 대남제의 관련 이미 실패로 끝난 '범민족대회'의 재관인 또 다른 형태의 통일전선전술 기도에 대해 유감 표명
- 4월 15일 | 이영덕 부총리겸 통일원 장관, 북·미 3단계회담에서 앞서 남북특사교환이 실현돼야 한다는 조건을 철회하고 시베리아 별목장 탈출 북한노동자들에 대한 망명허용 방침을 발표
- 4월 16일 | 김일성, 미 CNN방송 회견에서 북한 핵개발의혹 부인
  - 우리는 강대국이 되려고도 하지 않으며 가까운 장래에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않을 것임. 서울불바다 발언은 적절치 못한 것이었음. 사냥과 낚시 그리고 친구를 사귀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싶음.

- 4월 18일 | 김일성, 일 NHK방송 회견에서 미·북협상 무조건 재개 촉구
- 4월 19일 | 이성호 북적 위원장 대리, 비전향 출소자 김인서·함세환 송환요구
- 4월 19일 | 김일성, 워싱턴 타임스지 회견에서 경수로 지원 조건 핵재처리시설 포기 용의 시사
  - 미국이 경수로 원자로를 제공할 경우 미국이 걱정하고 있는 원자로나 방사화학실험설비 등 재처리시설은 아마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임.
- 4월 20일 | 북한 백인준 범민련 의장, 문익환 목사 백일추모제에 북한 대표단 파견할 것이라고 언급
- 4월 20일 | 빈 주재 북한대표부 윤호진 참사관, IAEA 사무국을 방문해 IAEA에 연료봉 교체 입회 요청 내용이 담긴 서한 전달
- 4월 22일 | 강영훈 한적 총재, 비전향 출소자 송환 요구 관련 남북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조치 촉구
- 4월 22일 | IAEA 한스 마이어 대변인, 북한의 연료봉 교체 입회 요청 수락 발표
- 4월 25일 | 빈 주재 북한대표부 윤호진 참사관, IAEA가 제시한 북한영변 5MW 원자로 원료봉교체시의 8가지 사찰활동 항목에 대해 거부 의사 표명
- 4월 26일 | 이성호 북적 위원장 대리, 비전향 출소자 김인서·함세환 송환 재촉구
- 4월 27일 | 이성호 북적 위원장 대리, 빨치산 출신 출소자 김병주의 딸 김지현 복송 요구
- 4월 28일 | 미·북 3단계 고위급회담 실무접촉 (뉴욕)
  - 북한측: ① 3단계 고위급회담이 이른 시일 안에 개최되어야 하며 ② 3단계 회담에서 두 나라 사이의 모든 현안들을 일괄타결해야 함.
  - 미국측: 3단계 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해서는 ① 5메가와트 원자로 연료교체 때 국제원자력 기구 사찰단의 입회와 견본채취 허용 ② 3월 핵사찰 때 다 이루지 못한 핵재처리시설에 대한 사찰 완료 ③ 핵시설 감시장비의 유지를 위해 2개월마다 실시하는 추가사찰의 허용이 이루어져야 함.
- 4월 28일 | 북한,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에서 군사정전위원회(MAC) 일방 철수 통보
  - 군 직통전화는 유지
- 4월 28일 | 북한 외교부,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대미협상 제의
  - 오늘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복잡하고 첨예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정전협정의 실제당사자들인 우리와 미국을 적대 쌍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전체제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제반 사태는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화해를 이룩하며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면서 반드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현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4월 29일 | IAEA 한스 마이어 대변인, 사찰단 방북 유보 발표
- 4월 30일 | 이흥구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취임,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통일정책 추진 방침 언급



- 5월 3일 | 통일원 대변인, 북한의 군정위 일방 철수 관련 이는 정전협정 제61항의 위반이며, 〈남북기본 합의서〉 제5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정상화 촉구
- 5월 3일 | 북한 외교부, 5MWe 원자로 핵연료봉 교체강행 표명
- 5월 6일 | 북한 김영남 외교부장, 일부 폐연료봉의 선택·분리·보관 문제는 우리의 현 특수 지위 하에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고 IAEA 사무총장에게 전문 발송
- 5월 6일 | IAEA 한스 마이어 대변인, 북한의 답신내용은 사찰단을 파견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써 사찰단을 파견하지 않을 것임을 언급
- 5월 7일 |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북한이 IAEA 요구를 거부할 경우 안보리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을 합의
- 5월 9일 | 강영훈 한적 총재,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사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촉구
- 5월 9일 | 미·북 3단계 고위급회담 실무접촉(뉴욕), 핵연료봉 교체 및 추가사찰 문제 협의
- 5월 12일 | 이흥구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북한 핵개발 때엔 비핵화 공동선언 무효 경고
- 5월 12일 | 북한 박용남 원자력 총국장, IAEA에 핵연료봉 교체작업 시작 통보
- 5월 13일 |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북한 벌목공 문제는 제3국을 자극 않는 방향에서 추진할 것을 합의
- 5월 18일 | 시베리아 벌목장을 탈출한 북한 벌목공 5명, 제3국을 거쳐 입국
- 5월 18~24일 | IAEA 사찰단, 북한핵 사찰 활동 시작
- 5월 19일 | 이성호 북적 위원장 대리, 김인서·함세환 및 김지현 송환을 재촉구
- 5월 21일 | 북한 조평통 서기국, 귀순 벌목공 송환 요구
- 5월 21일 | 통일원 대변인, 북한 벌목공 송환 요구 관련 이들은 자유와 복지를 찾아 귀순해온 만큼 시비 이유가 없다고 주장
- 5월 24일 | 북한, 유엔군과의 관문점 접촉에서 '조선인민군 관문점 대표부' 설치 통보(대표: 이찬복 중장, 부대표: 박림수 대좌)
- 5월 25일 | 북한 백남준 조평통 서기국장, 민족대회 소집제의 호응 촉구
- 5월 25~27일 | 북한·IAEA, 핵연료봉 교체 문제 관련 실무협상
- 5월 26일 |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 준수 입장 재확인
- 5월 27일 | 통일원 대변인, 민족대회 소집촉구 관련 북한은 핵문제의 최우선적 해결에 성의를 다해야 함을 주장
- 5월 27일 | IAEA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 유엔사무총장에게 북핵 보고서 제출  
- 북핵 연료봉 교체가 IAEA의 안전조치 이행능력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
- 5월 28일 | IAEA, 핵연료봉 교체문제 협상결렬 발표

- 5월 28일 | 북한 김영남 외교부장, 유엔 사무총장 앞 경고서한에서 “유엔이 제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한반도는 물론 전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
- 5월 30일 | 김영삼 대통령,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핵연료봉 교체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 5월 30일 | 유엔안보리, 북한 5MW 원자로 연료봉 교체 관련 의장성명 채택  
 - 북한 5MW 원자로 연료봉 연체작업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된다면 IAEA 기준에 따라 추후 계측을 위해 연료봉을 선택·분리·보관할 수 있는 기회가 수일내 상실될 것이라는 IAEA평가에 심각하게 우려함. 북한이 IAEA 요구에 따라 연료 계측의 기술적 가능성을 보존하는 방법으로만 5MW 원자로 연료봉 교체작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5월 31일 | 외무부 대변인,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관련 북한은 더 이상 사태를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시키지 말 것을 경고
- 6월 2일 | IAEA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 유엔안보리에 북핵연료봉 추후 계측 불가능 보고
- 6월 2일 | 미국 국무부, 특별성명에서 북·미 3단계 회담 취소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추진 발표
- 6월 3일 | 강석주 미·북회담 북측대표단장, 미국의 대북제재 추진에 대해 비난  
 - 우리는 우리의 핵활동의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것이며 지금의 방식대로 자립적 핵동력공업 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지 않을 수 없음. 우리는 경제제재가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로 된다 는데 대해서도 이미 유관국들에게 통지한바 있음. 이 경우 제재에 참가하는 측은 물론 되 바침하는 측들도 응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임.
- 6월 6일 | 유엔사, 북한에 정전위 비서장회의 개최 제의
- 6월 6일 | 북한, IAEA의 특별사찰 결의시 NPT탈퇴 위협
- 6월 8일 |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따른 군사적·경제적 대비태세 점검
- 6월 10일 | IAEA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 찬성 28, 반대 1(리비아), 기권 4(중국·인도·레바논·시리아)
- 6월 11일 | 외무부 대변인, IAEA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환영 성명에서 북한의 결의안 준수와 핵투명 성의 완전보장을 촉구
- 6월 11일 | 북한 김일성 주석, 미국 카네기재단 셸리그 해리스과의 면담에서 원자력개발 동결 용의 표명  
 - 만약 미국과 다른 나라로부터 경수로를 공여하겠다는 약속을 받으면 방사화학연구소와 현 재 건설중인 20만 킬로와트 원자로 개발을 동결할 용의가 있음. 한국에서 공산주의 혁명은 불가능함. 우리는 매우 현실적임. 한국에는 미국·일본·영국 등 여러 나라가 투자하고 있어 많은 적을 만드는 것이 됨. 우리에게 이미 하나의 적(미국)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적 을 확대하고 싶지 않음.
- 6월 13일 | 북한 외교부 대변인, IAEA 탈퇴 성명  
 ①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즉시 탈퇴

- ② 우리의 특수지휘하에서 받아 오던 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찰을 더 이상 지금처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
- ③ 유엔제재는 곧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재확인
- 6월 14일 | **외무부 대변인, 북한 IAEA 탈퇴 관련 NPT 당사국으로서 IAEA의 사찰 수락을 강력히 촉구**
- 6월 15일 |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이 대화에 응하도록 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다고 언급**
- 6월 15일 | **미국, 유엔안보리에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제시**
  - 1단계: 핵관련 기술·과학협력 중단, 비정기 항공기 이착륙금지, UN 경제원조 중단, 상호원조조약 효력중단, 북한 외교관 인원감축, 강제적 무기금수, 문화·교육 등 분야 교류금지 포함
  - 2단계: 해외자산 동결, 대북송금 금지
- 6월 15~18일 | **미국 지미 카터 전 대통령, 판문점 통해 방북**
- 6월 16일 | **북한 김일성 주석, 핵개발 동결용의 표명(김일성·카터 1차 회담)**
- 6월 17일 | **북한 김일성 주석, 남북정상회담 개최용의 표명(김일성·카터 2차 회담)**
- 6월 18일 | **김영삼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의 수락**
- 6월 20일 | **이영덕 국무총리, 남북정상회담 예비 접촉 개최(6월 28일 10:00, 판문점 평화의 집) 제의**
- 6월 22일 | **북한 강성산 총리, 예비 접촉 제의 수락**
- 6월 23일 | **이영덕 국무총리, 예비 접촉 우리측 대표 명단 통보(수석대표 이홍구 외 2인)**
- 6월 23일 |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정상회담 예비 접촉 대책방향 협의 및 대표단 구성문제 논의**
- 6월 25일 | **북한 강성산 총리, 예비 접촉 북한대표 명단 통보(단장 김용순 외 2인)**
- 6월 27일 | **북한 외교부, 미·북 3단계 회담 제네바 개최 공식발표**
- 6월 28일~ | **1994년 남북정상회담 예비 접촉**
- 7월 2일 |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
  - 남북정상회담을 1994년 7월 25~27일 개최(평양). 체류일정은 필요에 따라 더 연장할 수 있음.
  - 다음 회담은 쌍방 정상의 뜻에 따라 정하기로 함.
  - 남북정상회담 대표단 구성과 규모, 회담형식, 체류일정, 선발대파견, 왕래절차,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기타 실무절차문제들은 각기 예비접촉 대표 1명, 수행원 2명으로 구성되는 대표접촉에서 토의·합의함.
  - 대표접촉은 1994년 7월 1일(금요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
- 7월 1일 | **1994년 남북정상회담 실무절차 협의를 위한 제1차 대표 접촉**
  - 대표단 구성, 회담형식, 체류일정 등 기타 실무절차 문제 협의
- 7월 7일 | **1994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통신실무자 접촉**
  - ① 텔레비전 생중계를 위한 남측 중계요원 파견문제 ② 남북간 직통전화 회선 확대문제 등

## 원칙적 합의

- 7월 8일 | 1994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경호실무자 접촉
- 7월 8일 | 미·북 3단계 고위급회담 개최되었으나 김일성 주석 사망발표로 중단(제네바)
- 7월 9일 |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7월 8일) 공식발표  
- 1994년 7월 8일 02:00 사망, 금수산의사당 안치
- 7월 9일 | 북한 제네바 대표부, 미·북 3단계 고위급회담 연기 발표
- 7월 9일 |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김일성 주석 사망에 따른 대책 논의
- 7월 9일 | 김영삼 대통령, 긴급대책회의에서 김일성 주석 사망에 따른 정상회담 무산에 대해 유감 표명
- 7월 11일 | 북한 김용순, 남북정상회담 연기 통보  
- 우리측의 유고로 북남 최고위급회담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위임에 의하여 통지함.
- 7월 11일 | 북한 김수만 주유엔 부대사, 핵동결정책 지속 표명
- 7월 12일 | 법무부, 국회 법사위 제출자료에서 「통일 대비 재산권 특례법」 마련 발표
- 7월 14일 |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김일성 주석 사망에 대한 정부의 입장 언급  
- 정상회담 개최 원칙은 유효하며 북한의 사태 진전을 보아가며 유연하게 풀어갈 것
- 7월 14일 | 북한, 정부의 방북 조문단 불허방침에 대해 상식이하의 무례한 처사라며 비난
- 7월 18일 | 이영덕 국무총리, 김일성 주석 조문논쟁 관련 재야 및 운동권 학생과 사회일각에서 김일성 주석 장례식과 관련 조건 발송, 조문단 파견 논의 등은 무분별한 행동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정부입장 발표
- 7월 19일 | 북한, 김일성 주석 영결식(금수산의사당 안치)
- 7월 20일 | 통일원·내무부·문화체육부 등 3개 부처 공동명의로 된 정부의 입장에서 '94 남북인간띠잇기 대회 자제 당부
- 7월 21일 | 미·북 3단계 고위급회담 재개 일정에 원칙적 합의(뉴욕)
- 7월 27일 | 북한 강성산 총리 사위 강명도, 귀순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현재 최소한 5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
- 7월 27일 | 미국 백악관 대변인, 북한 핵탄두 5개 보유 부인  
- 북한이 1~2개의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핵물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나 핵무기를 보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음.
- 7월 27일 | IAEA, 북한 핵탄두 5개 보유주장에 대한 부인 성명
- 8월 1일 | 국제사면위, 북한 구금 정치범 55명 명단 공개
- 8월 2일 | 김영삼 대통령, 주례보고에서 남북 억류자 송환문제와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당당히 송환을

요구하고 역류의 부당성을 여론에 호소하라고 지시

8월 5일 | 북한 외교부 대변인, 미·북 3단계 회담 재개 관련 경수로 지원이 관건임을 강조

8월 5일 | 장영훈 한적 총재, 남북적십자총재 접촉 제의

8월 5일 |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미·북 회담관련, 종합적 검토 및 대책 논의

8월 5~12일 | 미·북 3단계 고위급회담 재개, 4개항 합의문 발표

- ① 북한은 흑연로감속로들과 연관시설들을 경수로 발전기술들로 교체할 용의를 표명하였으며 미국은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2백만KW 발전능력의 경수로발전소들을 북한에 제공하며 그동안 북한에 흑연감속로들을 대신할 대용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음.
- ② 북한과 미국은 각기 상대방의 수도들에 외교부 대표부들을 설치하고 무역 및 투자장벽을 완화하기로 하였음.
- ③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담보를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할 일관된 용의를 표명하였음.
- ④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의 회원국으로 남았으며 조약에 따르는 안전협정의 이행을 허용할 용의를 표명하였음. 쌍방은 북한의 흑연감속로 원자로 계획을 경수로 기술로 교체하는 사업과 폐연료의 안전한 보관과 처분, 대용에너지의 보장, 연락사무소 개설을 추진키 위한 전문가급 협상들이 필요하다고 합의하였으며, 1994년 9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담을 재개하기로 하였음.

8월 12일 | 장영훈 한적 총재, 남북적십자사 총재 또는 부총재 접촉 제의

8월 13일 | 외무부 대변인, 미·북 합의 성명관련 북한의 과거, 현재, 미래의 핵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한 일로 본다고 언급

8월 13일 | 북한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 북한 정책노선 불변 강조

- 김정일은 혁명위업의 계승자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 사업을 영도해 왔으며 앞으로 그 어떤 변화도 절대로 있을 수 없음. 특별사찰이란 말 자체도 인정하지 않으며 경수로 제공과 절대로 연관될 수 없음. 경수로 제공과 관계정상화로 조·미 사이의 신뢰가 보장되고 IAEA의 불공정성이 완전히 해소되고 IAEA와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핵투명성을 보장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명백히 함.

8월 15일 | 김영삼 대통령, 광복절 49주년 경축사를 통해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약칭: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재 강조

- \*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화해, 협력 - 남북연합 -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 완성
- 남과 북은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존공영하면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남북연합 단계로 나아가야 함.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과 북이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 발전시킴으로써 정치적 통합을 위한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야 함.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은 통일의 중간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1민족 1국가로 통일을 완성해 나가는 것임.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희망하고 있음. 그러나 통일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닥쳐올 수도 있음.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고 충분히 준비해야 함. 통일이 언제 어떻게 오더라도 통일은 결국 남과 북의 이질화된 민족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 발전시키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함.

**8월 17일 | 이홍구 통일원 장관, 경수로 비용 미·일도 분담해야 한다고 언급**

- 미국이 NPT체제 유지를 주요 정책목표로 삼아왔고 일본도 국제평화와 지역발전 기여를 천명하고 있는 만큼 경수로 건설에 상응한 몫을 분담해야 할 것임.

**8월 18일 | 김영삼 대통령, 한국형 경수로 채택 강조**

- 경수로 건설은 우리가 책임질 문제인만큼 절대 한국형이어야 함. 한국 기술진이 가고 한국의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수 없음.

**8월 18일 | 북한 노동신문, 김영삼 대통령 8.15 경축사 비난 논평**

- 점진이요 단계요 하며 통일을 늦잡은 것 자체가 거래의 통일지향에 대한 도전임.

**8월 20일 | 북한 외교부, 특별사찰을 전제로 한 경수로 도입 불가 표명**

- 우리는 결코 경수로나 받겠다고 자주권을 침해당하면서까지 군사대상에 대한 사찰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우리가 인정해 본적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이른바 특별사찰이라는 것을 문제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계속 복잡성을 조성하려 한다면 다시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임. 우리는 그에 대처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음.

**8월 25일 |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북한 핵투명성 보장이 미·북관계 개선에 필수요건임을 재확인**

**8월 26일 | 이홍구 통일부총리, 관훈클럽 토론회 연설에서 김정일 체제 안정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

**8월 27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한국형 경수로 거부 표명**

- 경수로 제공문제는 철두철미 조·미 사이에 해결할 문제이지 남조선 당국이 나서서 간참할 문제가 아님.

**8월 30일 | 중국, 군정위 철수결정 통보**

**8월 31일 | 미국 국무부, 북·미간 전문가회담 개최(9월 10일) 합의 발표**

**9월 2일 | 외무부 대변인, 중국의 군정위 철수 결정 관련 유감 논평에서 현 정전협정 체제의 효력 재확인**

- 정부는 중국측의 이번 결정이 현 정전협정체제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함.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한 쌍방 합의에 의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준수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임.

**9월 2일 | 북한 외교부 대변인, 미·북 전문가 회담 개최 발표**

- 연락사무소 문제: 9월 10일 평양, 경수로 문제: 9월 10일 베를린

**9월 2일 | 미국 국무부, 중국 군정위 철수 유감 성명을 통해 중국의 결정은 대표단을 소환하는 것이지**

- 철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  
- 북경측은 한반도 정전협정을 계속 인정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음.
- 9월 3일 | 통일안보정책회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체제로의 전환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남북 당사자원칙에 따라 해결해 나아갈 것
- 9월 6일 | 미·북,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관문점 협상 재개
- 9월 9일 | 북한 외교부, 미·북 회담에서 평화협정 문제 협의 주장
- 9월 10~13일 | 미·북 평양 전문가회담, 연락사무소 설치문제 논의
- 9월 10~14일 | 미·북 베를린 전문가회담, 경수로 지원문제 등 협의
- 9월 12일 | IAEA 정기이사회 개막(빈), 북핵 토의 '의장요약 성명' 채택  
- 핵안전조치협정은 북한의 IAEA탈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며 완전히 이행되어야 함. 최근 미·북회담에서 나타난 부분적 진전을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함.
- 9월 13일 |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남북정상회담 합의 원칙 계속 유효함을 확인
- 9월 13일 | 북한, 6.25실종 미군 유해 14구 인도  
- 90년 이후 현재까지 총 208구 인도
- 9월 16일 | 북한 외교부, 특별사찰 거부하며 이는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고, 반공화국 압살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
- 9월 23일 | 국제원자력기구 제38차 연차총회, 북한에 대해 핵안전협정 전면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  
- 찬성 76, 반대 1(리비아), 기권 10(중국, 쿠바 등)
- 9월 23~29일 | 북·미간 고위급 제3단계 2차 회담
- 9월 25일 | 북한 외교부, IAEA 총회의 사찰 촉구 결의안 거부  
- 만일 IAEA가 공정성과 독자성을 잃고 우리에게 대한 압력수단으로 계속 악용된다면 지금까지 IAEA 사찰과 관련하여 취한 선의적 조치들을 재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 9월 25일 | 북한 정당·사회단체, 단군릉 준공식에 남한인사 74명 초청
- 9월 27일 | 북한 인민무력부 대변인, 미 항공모함 동해 배치 비난
- 9월 27일 | 국회 외무통일위, 한국 주도 없이 북 경수로 부담 불가 천명  
- 북한 경수로 제공사업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부담도 대한민국의 참여 아래 그 주도적 역할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서만 약속, 시행될 수 있음.
- 10월 3일 | 강영훈 한적 총재, 북한지역 콜레라 공동방역조치 제의
- 10월 5일 | 김영삼 대통령, 경향신문 창간 48주년 특별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북한측 제의 차례라고 언급  
- 남북정상회담은 북측이 그들의 내부사정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한 만큼 북측이 우리측에 제의하는게 순리임. 회담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변화된 상황에 맞게 새로 협의해야 할 것임.
- 10월 5일 | 북한, 콜레라 공동방역 조치 제의 거부 논평

- 10월 6일 | 제2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95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한국측 분담금 3억 달러 합의
- 10월 8일 | 김영삼 대통령,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북핵 타결 안되면 안보리 회부 경고  
- 미·북회담에서 핵문제가 끝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UN 안보리에 회부하는 수 밖에 없음. 북한의 핵투명성이 보장된다면 경수로 지원과 기술·자본 지원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 T/S 훈련도 재개할 수 밖에 없음.
- 10월 14일 | 이홍구 통일원 장관,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핵문제 해결 5원칙 제시  
① 북한 핵개발 중지·동결  
② 한반도 전쟁재발 예방과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③ 남북당사자간 해결방향으로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포함한 남북대화의 재개  
④ 북한 핵의 과거·현재·미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IAEA의 기준·판단을 중시  
⑤ 대북 경수로 지원은 반드시 한국이 중심
- 10월 16일 |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100일 중앙추모회 거행  
- 김정일 참석(88일 만에 공식 등장)
- 10월 18일 | 이성호 북적 위원장 대리, 미전향장기수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송환 요구
- 10월 21일 | 한·미 국방장관회담, '94 팀스피리트훈련 중단 합의
- 10월 21일 | 미·북, 〈미·북 기본합의문〉(제네바합의문) 발표  
1. 쌍방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흑연 감속로와 관련시설들을 경수로 발전소들로 교체 하기 위하여 협조함.  
① 미합중국은 1994년 10월 20일부 미합중국 대통령의 담보서한에 따라 2003년까지 총 2,000MWe 발전능력의 경수로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책임지고 취함.  
ㄱ. 미합중국은 경수로의 재정조달 및 공급을 담당할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함. 이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하는 미합중국은 경수로제공사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본상대자로 됨.  
ㄴ. 미합중국은 국제컨소시엄을 대표하여 이 합의문이 서명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수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함.  
ㄷ.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필요에 따라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분야에 서의 쌍무적 협조를 위한 협정을 체결함.  
② 미합중국은 1994년 10월 20일부 대체에너지보장에 대한 미합중국 담보서한에 따라 국제컨소시엄을 대표하여 1호 경수로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흑연감속로와 관련 시설들의 동결에 따른 에너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함.  
ㄱ. 대체에너지는 난방 및 전력생산을 위해 중유로 제공  
ㄴ. 중유 납입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시작하며 납입량은 합의된 공급일정에 따라 연간 50만톤 규모까지 공급  
③ 경수로 제공 및 대체에너지 보장서한 접수 즉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흑연감속



- 로 관련시설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해제함.
- 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연관시설들에 대한 동결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날로부터 1개월안에 완전히 이행됨. 동 1개월간과 그 이후의 동결기간에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은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동결상태를 감시하도록 허용하며 이를 위해 IAEA에 전적인 협조를 제공
- ㄴ. 경수로 대상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관련 시설들은 완전히 해제
- ㄷ.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수로 건설기간동안 5MW 시험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재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폐연료봉을 처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협조
- ④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후 될수록 빠른 시일 안에 두 종류의 전문가 협상을 진행
  - ㄱ. 한 전문가협상에서는 대체에너지와 관련한 연관문제들과 흑연감속로 계획을 경수로로 교체하는데서 제기되는 관련 문제들을 토의
  - ㄴ. 다른 전문가협상에서는 폐연료봉의 보관 및 최종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토의
- 2. 쌍방은 정치 및 경제관계를 완전히 정상화 하는 데로 나아감.
  - ① 쌍방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후 3개월안에 통신 및 금융결제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여 무역 및 투자제한을 완화시켜 나감.
  - ② 쌍방은 전문가 협상에서 영사 및 기타 실무적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따라 서로 상대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들을 개설
  - ③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의 해결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는데 따라 쌍무관계를 대사급으로 승격시킴.
- 3. 쌍방은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
  - ①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공식보장을 제공
  - 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일관성 있게 취함.
  - ③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합의문에 의하여 대화를 도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따라 남북대화를 진행할 것임.
- 4. 쌍방은 국제적인 핵전파 방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
  -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의 당사국으로 남아 동 조약의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준수
  - ② 경수로제공계약이 체결되면 동결되지 않은 시설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제원자력기구 사이의 안전조치협정에 따르는 임시 및 일반사찰이 재개됨.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동결되지 않은 시설들에 대한 안전조치의 연속성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계속됨.

③ 경수로대상의 상당한 부분이 완료된 다음 그리고 주요 핵관련 부품들이 납입되기 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 핵 물질에 관한 최초보고서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IAEA와의 협의를 거쳐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IAEA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이행함.

\* 대외비 각서 별도 합의

10월 25일 | 이성호 북적 위원장 대리, 미전향 장기수 3명 송환 요구

11월 1일 | 이홍구 통일부 장관,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기본합의서에 바탕한 남북대화 추진 언급

- 남북 대화는 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한 핵통제공동위, 경제공동위, 화해공동위를 가동하는 것이 중요함. 우리의 경수로 지원은 단순히 제네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측면이 아니라 21세기 한반도 에너지 수급을 위한 민족공동체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함.

11월 1일 | 북한 외교부, <미·북 기본 합의문>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발표

- 핵연료 건설 중단, 연구용 원자로 핵 연료봉 철수를 미국에 통보

11월 1일 | 북한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논문 발표

- 사회주의는 기회주의에 의해 일시곡절을 겪지만 중국적 승리를 이룩했다는 것이 논문의 주장

11월 4일 | 이홍구 통일원 장관, '에너지 공동개발 남북협약체' 필요성 언급

- 대북 경수로 지원을 계기로 남북한의 에너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11월 4일 | UN 안보리, 미·북 합의 지지 의장성명 채택

11월 7일 | 김영삼 대통령, 경제인 초청 만찬연설에서 핵·경협연계 해제 방침 표명

- 그동안 남북관계는 핵문제에 얽매어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을 겪어왔으나 남북간 경제협력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진전시켜 나갈 시점에 이르렀음. 이러한 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인들의 방북 허용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단계적 조치를 취할 것임.

11월 7일 | 북한 외교부, 미·북 전문가 회담 개최 일정 발표

- 폐연료봉 관련 회담: 11월 12~19일(평양), 경수로 관련 회담: 11월 30일(북경), 연락사무소 관련 회담: 12월 6~10일(워싱턴)

11월 9일 | 이홍구 통일원 장관, 11월 8일 제17차 통일관계장관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발표

- ① 기업인 방북, 북한 경제인 초청 허용 등 남북경제인사의 상호방문 추진
- ② 기술자 방북, 시설재 반출 허용 등 위탁가공교역 활성화
- ③ 소규모 시범적 경제협력 사업 허용 및 국내기업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허용
- ④ 제3국에서의 북한인력 시범적 고용 및 제3국 합작 및 현지법인을 통한 투자 허용
- ⑤ 향후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따라 남북당국간 협의를 거쳐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경제협력의 기본틀 마련

- 11월 10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남북경협안 거부**  
- 국제적 고립과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술책의 산물이며 민족분열과 전면대결의 검은 정체를 가리기 위한 위장품에 불과함. 북남 협력과 교류가 호상신뢰에 기초해서 착실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루속히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함.
- 11월 11일 | **한승주 외무장관, 북한 APEC 가입 후원 용의 표명**
- 11월 11일 | **IAEA 특별이사회, 북핵 동결 이행 감시 착수 결정**
- 11월 14~18일 | **폐연료봉처리 관련 미·북 전문가 협상**
- 11월 17~18일 | **한·미 경수로 지원 관련 실무협의(워싱턴)**
- 11월 18일 | **북한 외교부, 핵동결 조치로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주장**  
- 우리는 조·미 합의에 따라 폐연료를 재처리하지 않고 안전 보관하다가 일정한 시기에 가서 완전히 처분하고, 방사화학 실험소를 봉인해 IAEA 감시하에 두다가 경수로가 완공되는 때에 궁극적으로 해체하게 됨. 이것은 북남 비핵화선언에 따르는 우리의 의무를 사실상 완전히 이행하는 것으로 됨. 이제 북남 비핵화선언을 위해 할 일은 미국과 남조선측에 더 많이 남아있으며, 앞으로 조·미합의문에 따라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임.
- 11월 18일 | **KEDO 구성·운영 문제관련 실무협의**
- 11월 18일 | **한·미 군사력평가회의(MCC) 개최, 북한 특수전부대에 공군저격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특수전부대의 규모가 10만여명에 달한다고 분석**
- 11월 24일 | **제25차 남북교류협력 추진 위원회, 「남북경제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심의·발표**
- 11월 28일 | **IAEA와 북한 원자력 총국, 북한의 핵동결 및 대미합의 이행확인**
- 11월 29일 | **정부, 북경 미·북 경수로 전문가 회담 관련 실무 대표단 4명 파견**
- 11월 30일~ | **미·북 경수로 전문가 회담 개시(북경)**
- 12월 2일
- 12월 1일 | **정부, 미군으로부터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 12월 6~9일 | **연락사무소 개설 관련 미·북 전문가 회담**  
- 자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문제, 통신시설문제, 행정사항문제, 연락사무소 외교관의 여행범위 등 4개항에 합의
- 12월 10일 | **정부, 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라 국내기업 방북승인**  
- 럭키금성, 삼성, 현대, 쌍용, 영신무역, 대동화학 등 6개 기업
- 12월 13일 | **북한, 상호비방 중지 제의**  
- 민족의 단합을 이루어가자면 북과 남사이에 정쟁을 중지해야 함. 지난 날의 대결관념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을 자극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일체 정쟁을 그만두고 비방중상을 중지해야 함.
- 12월 15일 | **유엔총회, '핵안전협정 이행 및 IAEA사찰 수용 촉구 대북결의안' 채택**

- 12월 15일 | 정전위 중국대표단, 판문점에서 완전 철수
- 12월 16일 | 국회, 남북한 거래는 민족내부 거래임을 명시한 「WTO 협정 이행 특별법」 통과
- 12월 17일 | 북한, DMZ 북측 지역에서 주한미군 헬기 격추 발표
- 12월 17일 | 한미연합사, 미군 헬기 격추 관련 군정위 소집 요구
- 12월 17일 | 미국 클린턴 대통령, 미군 헬기 추락 관련 조종사 송환 촉구 성명
- 12월 19일 | 북한 김종수 UN주재 부대사, 미군 헬기 추락 사건관련 평화협정 체결 주장  
- 이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함.
- 12월 20일 | 미·북, 미군 헬기 불시착 관련 군정위 실무접촉
- 12월 22일 | 북한, 미군 헬기 조종사 데이비드 하일만 준위 유해 송환  
- 방북 중이던 미국 빌 리처드슨 하원의원과 함께 판문점 통과
- 12월 22일 | 미국 마이애스 백악관 대변인, 북한 억류 미군조종사 조속 송환 촉구
- 12월 26일 | 미·북, 헬기 조종사 송환을 위한 장성급 접촉 개최
- 12월 30일 | 미군 헬기 조종사 보비 홀 준위, 판문점 통과 귀환

# 1995년

- 1월 1일 | 김영삼 대통령, 신년사에서 남북화해·협력 촉구  
- 1995년이 나라의 선진과 번영, 민족의 통일과 영광을 앞당긴 참다운 광복의 시대를 열어나간 해로 기록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1월 1일 | 북한, 로동신문·조선인민군·로동청년 공동사설, “위대한 당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새해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자” 발표
- 1월 6일 | 김영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에 정상이 나타났을 때, 자연스럽게 북한이 얘기해 오는게 순서라고 언급
- 1월 9일 | 북한 외교부, 미국상품 반입제한 조치 및 무역선박 입항금지 조치 해제결정 발표
- 1월 12일 | 통일원, 북한 내 이산가족에게 제3국을 통한 소액송금 가능 확인
- 1월 15일 | 미국, 대체에너지 중유 5만 톤(1차분) 북한 제공  
- 호남정유 수주, 제3국 공해상을 통한 남북 직수송
- 1월 16일 | 북한 외교부, 서류상 명기 않으면 한국형 경수로 수용 발표  
- 우리는 미국이 KEDO를 통해 경수로를 제공하는 것을 희망하나 다만 경수로 제공 계약문건에 한국형이라고 명기하는 것은 반대함.
- 1월 18-23일 | 폐연료봉 처리 관련, 미·북 전문가 회담
- 1월 19일 | 한·미·일, KEDO 설립 관련 실무회의  
- 대북 경수로지원에 있어 한국표준형 채택과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KEDO 설립협정 문안에 한국표준형 채택을 적절히 반영키로 합의
- 1월 20일 | 미국 국무부,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표  
① 북·미간 전화 전신 연결을 위한 거래(직통전화 허용)  
② 미국민의 북한 여행시 신용카드 사용 허용  
③ 북·미간 언론기관 사무소 개설 허용  
④ 북한과 제3국간의 거래시 미국은행 이용 허용(북·미간 직접금융 거래는 계속 불허, 달러에 의한 국제거래 허용)  
⑤ 미 은행의 북한 금융자산 동결 해제(1950년 이래 대북송금액에 대한 동결 해제, 동결 해제시 북한 아닌 원송금자에게 반환하고 북한으로부터의 송금액은 계속 동결)  
⑥ 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된 자본거래 허용  
⑦ 북한으로부터의 마그네사이트 수입 허용
- 1월 23일 |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발족  
- 통일관계장관회의 산하기구로서, 대북 경수로사업 지원관련 실무전담

- 1월 23일 | 북한 외교부,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반대입장 표명**  
 - 동북아지역 나라들이 한자리에 모여왔다고 해도 기대할 것은 없으며 도리어 복잡성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임. 아·태 지역에 이미 아세안지역 연단과 같은 포괄적인 안보대화 연단이 나온 실정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데 적극 기여할 것임.
- 1월 24일 | 북한 정당·단체 연합회의, '8.15 공동경축 및 대민축회' 개최 대남제의**
- 1월 25일 | 송영대 통일원 차관, 8.15 공동경축행사 및 현안 문제협의 차관급회담 제의**  
 - 쌍방 당국의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씩의 대표가 만나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음.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 한다면 대민축회의 같은 군중집회식 행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책임있는 당국간 대화에 응해 나와야 함.
- 1월 27일 | 북한 노동신문, 차관급 접촉 제의 거부**
- 1월 28일~2월 1일 | 경수로 제공문제 협의를 위한 미·북 전문가회담(베를린)**
- 1월 30일 | 북한 조평통 서기국, IAEA의 굴업도 핵폐기물 처리장 계속 추진 권고 비난**
- 2월 3일 | 김덕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의**  
 -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이 오는 4월 평양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 문화축전에 남쪽의 이산가족들도 함께 참관케 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함. 남북 언론인들의 자유로운 상호 방문취재와 관련, 북측이 한국 언론인들의 비정치적 분야에 대한 방북 취재 활동을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함. 현재 우리 기업인들이 남북경협 추진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있으나 이들은 제3국을 경유하고 있음. 우리 기업인들이 관문점을 통해 남북을 쉽게 왕래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장해 줄 것을 북측에 촉구함. 이상의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해 남북의 책임있는 고위당국자들이 서울·평양·관문점 등 어디서든 빠른 시일내에 마주 앉을 수 있기를 기대함.
- 2월 6일 | 북한 노동신문, 김덕 부총리의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의 거부**
- 2월 6일 | 북한 중앙인민위원회, 성명을 통해 김정일 생일인 2월16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발표**
- 2월 8일 | 북한 조평통, 남북대화 재개여부는 남측태도에 달려있다고 주장**  
 - 북과 남 대화문제는 민족내부 문제로서 남에게 청탁할 일도 아니며 또 누구에게 청탁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대화의 좋은 분위기만 마련되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음.
- 2월 8일 | 북한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 위원회 대변인, 중군위안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 참가 관련 담화 발표, 서울회의 참가에 따른 실무절차문제 협의를 위한 접촉 제의**
- 2월 9일 | 통일원 대변인, 북한의 중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참석용의 표명 관련 '정부는 북한대표단의 참석 허용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언급**
- 2월 15일 | 북한 외교부, 한국형경수로 강요 시 미·북 합의 파기 위협**

- 2월 20~26일 | 북한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 위원회, 종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참가 통보
- 2월 21일 | 이흥구 국무총리, 대북경수로 지원문제 관련 보고(임시국회)에서 우리의 중심적 역할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경수로 지원은 불가함을 언급
- 2월 22일 | 통일원, 제3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의 관련 북한 참가자들의 남한방문 승인
- 2월 24일 | 북한 외교부, “조선반도에서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문제는 우리와 미국 사이에 해결할 문제”라고 언급
- 2월 25일 | 국방부 대변인, '95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발표
- 2월 26일 | 북한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 위원회 대표단, 종군위안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 불참 발표
  - 우리 대표단이 회의성격상 관문점에 있는 적십자 통로는 이용하여 실무적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함.
- 2월 26일 | 통일원 대변인, 북한대표단 일본군 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의 불참 관련 북한이 민간교류 행사에 사실과 다른 이유를 들어 방문을 취소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언급
- 2월 28일 | 외무부 대변인, 북한의 평화보장체계 수립요구 관련 북한 주장은 법적·현실적 측면에서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우리의 지위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언급
- 2월 28일 | 중립국감독위원회 폴란드 대표단, 북한 강요로 철수
- 3월 1일 | 김영삼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에게 비방중상 중지 촉구
  - 이제는 북한이 변화해야 하며, 민족자존과 민족단합의 3.1정신에 반하는 같은 민족에 대한 비방중상을 중지해야 함.
- 3월 3일 | 미국 갈루치 국무부 핵대사,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 거부맨 협정체결 연기 표명
- 3월 7일 | 북한 외교부, 한국형 경수로 거부입장 재표명
  - 만일 남조선형을 고집하는 미국 태도로 말미암아 경수로협정이 합의된 기간내 체결되지 못하면 우리도 그에 상응한 결심을 내리고 행동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음.
- 3월 7일 | 김영삼 대통령, 독일 외교3단체 초청연설에서 북한에 곡물·원자재 제공 용의 천명
  - 우리는 북한이 필요하고 원하는 그 어떤 분야에서도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북한에 곡물을 비롯 필요한 원료와 물자를 장기저리로 제공할 용의가 있음.
- 3월 9일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공식 발족
  - 목적 및 기능: 1천메가와트 용량의 한국형 경수로 2기로 구성되는 대북경수로 지원사업과 관련한 재원조달과 공급, 대북 대체에너지 공급 등 북미핵합의문의 목적을 수행하기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위함. KEDO는 북한에 이전되는 핵물질·장비 및 기술이 전적으로 경수로 사업과 평화적 목적으로만 안전하게 이용되도록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인 보장을 받아야 함.

- 구성: 원회원국과 일반회원국으로 구성되며 원회원국은 한·미·일 3국이며, 일반회원국은 KEDO에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로서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국가로 구성됨. 집행이사회는 원회원국인 한·미·일 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되며, 집행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3국 전원합의를 통해 이루어짐.
- 재정 및 법적지위: 각 회원국은 적절한 자금제공 등으로 KEDO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며, 기여금은 KEDO뿐 아니라 KEDO의 계약자에게도 제공될 수 있음.

- 3월 9일 | **최동진 경수로 기획단장, “한국형 채택이란 한국이 경수로 공급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기업이 설계·제작·건설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
- 3월 10일 | **북한, 김영삼 대통령의 대북 물자 지원 제의 거부**
- 3월 10일 | **정부, 북·일 수교 교섭 재개 관련, 아직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반대 시사**
- 3월 10일 | **김영삼 대통령, 벨기에 르스와르지 회견에서 미·북 관계 개선과 남북관계의 조화 강조**  
- 개방을 통한 북한의 국제사회편입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기여하는 것인 만큼 남북관계의 진전과 조화되고 병행하는 미·북관계 개선에 반대하지 않음.
- 3월 11일 | **북한 외교부, 한국형 경수로 수용 거부 및 KEDO와의 협상거부 입장 표명**  
- 미국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설립목적이 한국형 경수로 제공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도전이며 조·미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스스로 선포하는 것과 같음. 우리는 조·미 기본합의문에 지적된 대로 경수로 제공사업에 미국만을 우리의 협상자로 간주할 것임.
- 3월 14일 | **미국 갈루치 핵대사, 핵연료 재가동시 유엔안보리 회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  
- 북한이 영변에 있는 두 개의 핵연료를 재가동함으로써 핵동결을 파기할 경우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한·일과 협의, 가능한 제재 방안의 하나로 유엔 안보리 회부를 고려하고 있음.
- 3월 15일 | **북한 백남준 조평통 서기국장, 굴업도 핵폐기물 처리장 확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남조선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모든 남북합의서가 전면 백지화 될 수 있다”고 경고**
- 3월 20일 | **통일원 대변인, 북한의 핵폐기물 처분장 중상모략 관련 굴업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언급**
- 3월 22일 | **김영삼 대통령, 육사 임관식 치사에서 북한의 핵합의 불이행시 세계의 응징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  
- 북한이 만약 핵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시대에 역행하는 선택을 한다면 전세계의 응징을 면치 못할 것임.
- 3월 25-27일 | **경수로 제공문제 관련 미·북 전문가 회담(베를린), 결렬**
- 3월 29일 | **김영삼 대통령, 한국형 경수로 거부 시 대북 경수로지원 불가능 표명**
- 3월 30일 |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한국표준형 채택 입장 재확인**
- 4월 7일 | **한·미·일 고위실무협의를, 한국형경수로 관철 재확인**
- 4월 7일 | **KEDO 제2차 집행이사회**



- 4월 8일 | **나옹배 통일부총리, 울진3호기 원자로 설치식 격려사에서 북한에 울진의 한국표준형 경수로 공개용의 표명**  
- 북한은 이제 한국표준형 경수로를 받아들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향해 함께 전진해 나갈 것 인지, 아니면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계속 마다할 것인지를 분명히 선택해야 할때가 되었음.
- 4월 10일 | **미국, 북한과 직통전화 개설**
- 4월 12~14일 | **경수로 제공 문제 관련 미·북 전문가 회담(베를린)**
- 4월 18~20일 | **경수로 제공 문제 관련 미·북 전문가 회담 재개(베를린)**
- 4월 19일 | **북한 외교부, 선 평화협정 후 경수로협상 주장**
- 4월 22일 | **북한 외교부, 미·북 베를린 전문가 회담 결렬 관련 미국에 책임 전가**  
- 미국이 부당하게도 있지도 않는 남조선행 경수로를 마지막까지 내려먹이려 한 것으로 해서 협상은 끝내 아무런 합의도 이룩될 수 없었음.
- 4월 23일 | **정부, 미·북 회담 5개 원칙 미국에 전달**  
① 북·미간 기본합의문 수정 불가  
② 경수로의 한국형 관철 및 한국의 중심역할 확보  
③ ‘남북대화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킬 것  
④ 핵연료봉 재장전 및 봉인 훼손 즉시 핵동결 파기 간주 및 제재 착수  
⑤ 제재 착수시 북·미간 막후 협상 배제
- 4월 25일 | **김영삼 대통령, 근대사법 1백돌 기념식 치사에서 이젠 북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  
- 북한 주민들은 아직도 진정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제 그들의 인권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4월 27일 | **국방부, 북한군의 최근 우리지역 침범과 관련 정전협정 위반이 재발될 경우 북한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북 경고문 발송**
- 5월 3일 | **북한 군 관문점 대표부, 중립국감독 위원회 사무실 폐쇄 조치**  
- 북측이 관리하던 중립국관리위원회 사무실과 휴게실 및 오락실을 완전봉쇄하며, 허가 없이 미군 및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들과 기자들이 관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지역을 출입하는 것을 일절 금지함.
- 5월 4일 | **통일원 대변인, 북한의 중감위 사무실 폐쇄는 정전협정 위반행위라고 경고**  
- 남북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평화체제로 전환될 때까지 정전협정 위배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정전협정 무효화 책동을 즉각 중지해야 함.
- 5월 9일 | **김영삼 대통령, 청와대 확대국무회의에서 북한 정세 혼미 도발 적극대비 지시**  
- 북한의 내부정세가 계속 혼미한 상황을 보여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므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 한·미 군사적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5월 11일 | **나옹배 통일원 장관, 한국형 명칭 양보 불가 표명**

- 북한이 한국형을 받아들인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명칭을 양보할 수는 없으나,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보장된다면 표현법은 신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을 것임.

5월 11일 | NPT연장회의, NPT조약 무기한 연장 결정

5월 15일 | 김영삼 대통령, 국제언론인협회 제44차 총회 연설에서 북한에 곡물·물자 제공용의 표명

- 북한체제의 안정과 질서있는 변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며, 그런차원에서 우리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곡물을 비롯한 원료와 물자를 장기저리로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거듭 밝히는 바임.

5월 15일 | 북한 조평통, 남북대화 재개 조건 제시

- ① 김영삼 대통령이 '94년 광복절 축사에서 밝힌 자유민주주의 통일방안 취소 ② 국제공조체제 포기 ③ 국가보안법 철폐

5월 16일 | 통일원, 대북교류 및 통일관련 행사에 관한 정부 입장 발표

- 대북접촉·교류 허용기준: ① 논의내용의 순수성 ② 대표성 ③ 범질서 존중 ④ 남북관계 개선 기여
- 민간통일 논의·행사추진 기준: ① 정치성 행사 불허 ② 전국규모 옥외행사 불허 ③ 관문점 행사 불허

5월 19일~ | 미·북 준 고위급회담(쿠알라룸푸르)

6월 12일

5월 26일 | 북한, 일본에 쌀 공급 공식 요청

5월 26일 | 나웅배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대북 곡물지원 제의

- 북쪽에 제공할 곡물의 종류와 수량, 인도장소와 시기, 수송 및 운반수단 등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쌍방 당국 대표들이 북쪽이 원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만날 것을 제의함.

5월 27일 | 정부, 대북 곡물지원관련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

- 민족의 복리·복지에 관한 사안은 민족내부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지는게 소망스럽다는 원칙을 설정

5월 27일 | 북한 외교부, 한국형 명칭 거부, 경수로 생산지 불문 입장 표명

- 우리는 첫 시기부터 어느 나라의 기술과 설계에 기초한 제품인가 하는 문제를 중시해오는 것이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하는데는 별로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음.

5월 30일 | 제86 우성호, 북한에 의해 나포

5월 31일 | 강영훈 한적 총재, 제86 우성호와 승선어부 송환요구

6월 1일 | 나웅배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남북 직교역 확대 추진방침 표명

6월 6일 | 송영대 통일원 차관, 대북 쌀 제공 관련 북한의 직접 호응 촉구

- 정부는 일본 정당측으로부터 북한이 한국의 쌀을 받겠다는 입장을 전해 받았으나, 오늘 현

재까지 이러한 통보를 북한측으로부터 직접 받지 못했음. 우리는 쌀제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측에게 철차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국자접촉을 제의해 놓고 있는 상황이므로 북한이 직접 우리의 제의에 호응해 주기를 바랍.

**6월 8일 | 나옹배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대북 쌀 제공 관련 일본에 신중대처 촉구**

- 일본이 곡물을 북한에 먼저 제공할 경우, 우리의 평화통일 노력에 지장을 초래하게 됨은 물론 한·일관계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우려됨을 강하게 지적해 두고자 함.

**6월 8일 | 미·북 준 고위급회담 관련 한·미·일 실무협의**

**6월 10일 | 북한 외교부, 미·북회담 지연 시 폐연료봉 재처리 경고**

- 폐연료봉 보관문제는 반드시 경수로 제공문제의 진전과 병행해 해결돼야 할 성격의 문제임.

**6월 12일 | IAEA 정기이사회(빈), 북핵 동결 감시상황 및 IAEA 관련 조치사항 논의**

**6월 12일 | 미·북 준 고위급회담 타결**

〈북·미 공동발표문〉

- ① KEDO는 미국 주도하에 북·미 기본합의문에 입각,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 사업의 재정조달 및 공급을 담당
- ② 경수로 사업은 각각 두 개의 냉각제 유로를 가진 약 1천MW(e) 발전용량의 가압경수로 2기로 구성됨. KEDO가 선정하는 경수로 노형은 미국이 원설계와 기술로부터 개발되어 현재 생산중인 개량형으로 함.
- ③ KEDO는 경수로 사업의 건설과 운전에 필요한 요건들을 확인하기 위해 부지 조사를 실행함. 북한 기업은 경수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이행에 관련된 계약에 참가함.
- ④ 양측의 전문가들은 기본합의문에 따른 중유의 단계적 공급을 위한 일정과 제반 협력조치에 합의하기 위해 6월중 가능한 조속한 기일내에 북한에서 만남. KEDO는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유의 1차분 공급을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함.

**6월 15일 | 한적 총재, 우성호 송환 관련 남북적십자 연락관 접촉 제의**

**6월 15일 | 미국, 중유 전용 감시 협상팀 파북**

**6월 17~21일 | 대북 쌀지원을 위한 제1차 북경회담, 쌀 15만 톤 제공 합의(북경)**

〈대북 곡물제공에 관한 합의서〉

- ① 남측은 북측에 제1차로 쌀 15만톤을 인도하며, 이 1차분은 무상. 남측은 본 합의서를 서명·교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첫 선박을 출항
- ② 남측은 상기 1차분을 해상을 통하여 남측 선박으로 청진항, 나진항 등에 인도. 이 경우 북측 항구까지의 수송비는 남측이 부담하며 남측의 필요에 의하여 제3국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
- ③ 북측에 제 1차로 인도되는 쌀은 정미 40kg 단위 PP포대로 포장하며 일체 표시를 하지 않음.
- ④ 본 합의서에 명시된 합의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쌍방 상사는 남측에서는 대한무역진흥공사, 북측에서는 조선 삼천리총회사로 함.
- ⑤ 남과 북은 쌀 인도·인수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필요한 모든 협조를 보장

- ⑥ 남과 북은 1995년 7월 15일 북경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
- ⑦ 이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본 대표단이 협의하여 해결

6월 18일 | 미국, 폐연료봉 처리 기술진 파북

6월 23일 | 김영삼 대통령, 김정일 주석직 승계 후 남북정상회담 재추진 시사

- 시기가 언제냐는 것을 알수는 없지만 김정일 비서가 주석직을 승계할 것으로 생각함. 그렇게 되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따를 것으로 믿음.

6월 23일 | 일·북, 쌀 제공 문제 관련 협상(동경)

6월 25일 | 대북 쌀 제공 2천 톤 선적 씨아팩스호 출항(동해항)

6월 25일 | 대북 쌀지원을 위한 남북실무자회담 개최(북경), 대북 쌀 제공 계약서 합의  
(계약서 합의내용)

- ① 계약 서명과 동시에 첫 선박을 출항시키며 잔량은 8월 10일 이내에 북측에 제공
- ② 포장은 40kg 단위 PP포대로 하며 포장에는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않음.
- ③ 쌀의 품질은 습도 15% 이하, 과쇄율 5% 이하 등 국내(남한)의 농산물 검사규격에 준해 제공
- ④ 쌀은 5천 톤 이상의 남측 선박으로 수송하며 청진항·나진항 등을 통해 북한에 인도하 되 필요시 제3국 선박도 이용할 수 있음.
- ⑤ 남측은 하역항 도착시까지 관련된 비용을 제공하고 북측은 항만비용과 하역비를 부담
- ⑥ 북측은 남측 선박 선원의 신변안전과 선박의 무사귀항을 보장하며 필요한 편의도 제공
- ⑦ 북측은 매 선박 및 인수확인서를 하역 완료 7일 이내에 남측에 통보
- ⑧ 계약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6월 21일 베이징에서 합의서에 서명한 쌍방 대표단이 합의해 해결하도록 함.

6월 29일 | 정부, 북한의 씨아팩스호 인공기 계양사건 관련 북한 당국의 공식사과 없으면 쌀 지원 중단 결정

- 지난 6월 25일 씨아팩스호가 북한측의 강요로 인공기를 계양하게 됨으로써, 북한측은 북한 항구에 입항시 쌍방의 깃발을 모두 달지 않기로 한 북경회담의 합의사항을 위반하였음.

6월 29일 | 북한 외교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주장

- 정전체제는 복구할 수도 재생할 수도 없는 존재로 되었으며 이제는 새로운 체계로 교체하는 길밖에 없음. 미국이 당장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유엔군사령부라도 해체하여야 할 것임.

6월 30일 | 북한 전금철 대외경제협력추진위 고문, 씨아팩스호 인공기 계양사건 관련 대남 공식 사과

7월 3일 | 송영대 통일원 차관, 북한의 사과 수용하고 대북 쌀 지원 재개 발표

7월 5일 | 나웅배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제2차 북경 쌀 회담부터 남북관계 진전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언급

7월 7일 | 대북 쌀 수송선 3척, 남북 국기 계양 없이 청진항 입항

1995

- 돌진호(7월 5일), 이스턴벤처호(7월 6일), 행진호 (7월 7일)
- 7월 9일 | 북한, 김일성 주석 시신 공개
- 7월 13일 |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관련 실무접촉
- 7월 15~19일 | 대북 쌀지원을 위한 제2차 북경회담(북경)
- 7월 19일 | 일본, 대북제공 쌀 8천 톤 첫 출항
- 7월 21일 | 김영삼 대통령, 미 비즈니스위크지 회견에서 수개월내 남북 중요대화 개최 전망 언급  
- 향후 수개월내에 남북한 간에 중요한 대화가 있을 것임. 현재 북한에는 김정일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 그가 주석직에 올라 대화를 갖게 되면 한반도 평화가 촉진될 수 있을 것임.
- 7월 25일 | 김영삼 대통령, 뉴스위크지 회견에서 북한 중대시기 봉착 언급  
- 북한이 현재 식량 및 에너지의 부족 등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시기에 봉착해 있음. 현실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사실을 북한은 알아야 할 것임.
- 7월 25~29일 | 제4차 폐 연료봉 안전보관 처리 관련 미·북 전문가 회담 종료
- 7월 27일 | 한·미 정상회담 '대북 공동 전략협의체' 구성 합의(워싱턴)
- 7월 31일 | KEDO 총회 및 집행이사회 개최
- 8월 2일 | 대북 쌀 수송선, 삼선비너스호 선원의 사진촬영 사건 발생  
- 1등 항해사 이양천, 청진항 촬영 중 북한 당국에 적발, 억류
- 8월 4일 | KEDO, 대북 중유(벙커C유) 4만 톤 공급권자로 '유공' 선정
- 8월 9일 | 송영대 통일원 차관, 삼선비너스호 억류 관련 북한 당국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보장 약속에 따라 조속히 선박과 선원을 송환할 것을 요구
- 8월 9일 | 이석재 재경원 차관, 쌀 수송선 억류 관련 남북대표 접촉 제의
- 8월 10~14일 | 대북 쌀 지원 관련 북경 실무접촉, 삼선비너스호 귀환문제 및 대북 쌀 지원을 위한 제3차 북경회담 재개문제 협의
- 8월 12일 | 이석재 재경원 차관, 북 쌀 수송선 억류 관련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유감표명과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대북전문 발송
- 8월 13일 | 북한 전금철 고문, 삼선비너스호 송환 대남전문
- 8월 13일 | 송영대 통일원 차관, 삼선비너스호 및 선원 귀환합의 발표
- 8월 15일 | 김영삼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기본원칙 제시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반드시 남북 당사자간에 협의 해결돼야 함. 또 관련 국가들의 협조와 뒷받침도 필요함. 아울러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간의 합의사항은 존중돼야 함. 이런 기본원칙 아래서 남과 북이 지금의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을 촉구함.

- 8월 15-22일 | KEDO 경수로 부지조사단 방북
- 8월 17일 | KEDO제공 중유 1차분 2만톤(중국 선적 웨이산후호) 울산항 출항
- 8월 19일 | 정부합동조사반, 삼선비너스호 억류사건 조사 결과 발표
  - 이번 사건은 1등 항해사 이양천(33)씨 개인적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사진촬영을 북한이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빚어진 사건
- 8월 23일 | KEDO 경수로 부지조사단, 방북 결과 발표
  - 예상부지는 신포시의 북쪽 5~6km, 해안에서 3km 떨어진 구릉지대임. 용수와 냉각수를 7km 떨어진 북청 남대천에서 끌어다 쓰는 것이 문제임.
- 8월 23일 | 북한, 유엔에 수재긴급구호 요청
- 8월 25일 | 김영삼 대통령, 기자회견담회에서 북한 사정 어렵다고 언급
  - 북한이 경제적으로 식량사정이 어렵고 비피해도 엄청남.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임.
- 8월 29일 | 북한, 유엔 인도지원국(DHA) 대표단 평양 도착 발표
- 9월 1일 | 한·미 국방장관, 중장기 안보대화 신실 합의
  - 북한의 향후 군사위협과 체제변화에 대비하고 양국 군사동맹관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중장기 안보대화 추진 합의
- 9월 2일 | 유엔의 3개 수해 조사단 세계식량계획(WFP)·식량농업기구(FAO)·유엔아동기금(UNICEF), 평양 도착
- 9월 2일 | 제5차 폐연료 안전보관 관련 전문가 회담 미국 대표단, 평양 도착
- 9월 4일 | 유엔 인도지원국(DHA), 북한 50만 명 이재민 발생 발표
- 9월 4일 | 북적, 국제적십자연맹(IFRC)에 수해 곡물 손실량 190만 톤 보고서 제출
- 9월 4~9일 | 유엔 홍수피해 조사단 방북
- 9월 6일 | 북한, 조총련 통해 일본에 수해지원 요청
- 9월 7일 | 미국, 북한 수해 2만 5천 달러 지원 결정
- 9월 7일 | 러시아 외무부, 조·소조약 폐기 공식 발표
  - 러시아는 북한에 지난 61년 체결한 조·소조약을 폐기하고 대신 새로운 우호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음.
- 9월 7일 | 외무부 대변인, 조·소조약 폐기 발표 관련 환영 논평
  - 러시아 정부가 조·러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냉전시대의 잔재인 구소련과 북한간 군사동맹관계를 법적으로 완전청산하였다는 점에서 금번 러시아 정부의 러·북한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폐기조치를 평가하며 이를 환영하는 바임.
- 9월 8일 | 북한 외교부, 조·소조약 폐기 관련 기자회견
  - 우리는 소련의 붕괴로 사실상 그 조약은 의의를 상실하고 폐기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인

정하고 이에 대해 러시아측에도 밝혔으며 그후 조약에 아무런 주의도 돌리지 않았음. 러시아측이 최근 새로운 친선관계의 기초에 관한 조약체결 문제를 제개해 오면서 그 초안을 보내왔으며, 우리는 이를 연구하고 있음.

9월 11~15일 | KEDO·북한, 경수로공급협정 체결 관련 고위급회담(콜리툼푸르)

9월 12일 | 유엔조사단, 북한 수해 조사결과 발표(제네바)

- 수해지역이 전국토의 75%라는 북한 보고는 사실로 판명. 수해복구를 위해 1천 5백만 달러의 물자 공급이 절실히 필요

9월 12~19일 | IAEA 협상대표단, 북핵 동결 감시 협의차 방북

9월 13일 | 강영훈 한적 총재, 북한에 5만 달러 수해지원 언급

9월 13일 | 통일원 대변인, 대북 수해지원 보도 관련 국제기구의 공식 요청시 검토한다는 정부입장 발표

9월 14일 | 나웅배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한적을 통해 대북 수해지원 5만 달러 지원 발표

9월 15일 | 강영훈 한적 총재, 수재물자 제공 제의 대북 방송통지문 및 대국민 성명 발표

9월 18일 | 미국 하원, 대북결의안 채택

- 남북대화 재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의 상당한 진전, 군사분계선상의 북한 군사력 감축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연락사무소개설 이상의 대북관계 격상이나 무역투자장벽 완화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촉구

9월 18일 | IAEA 사무총장, 북 핵 검증활동 허용 촉구

9월 18일 | IAEA 협상대표단, 핵시설 동결 관련 문제 토의 후 평양 출발

9월 20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우성호문제는 북한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보도

9월 21일 | 나웅배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기업인 방북 불허방침 표명

9월 21일 | 통일원 대변인, 우성호 즉각 송환 촉구 논평

9월 21일 | 북한, 유엔 군축포럼 가입(유엔군축포럼 전체회의 승인)

9월 22일 | IAEA, 제39차 정기총회에서 대북 핵안전협정 이행촉구 결의안 채택

9월 22일 | 일본 외무성, 북한에 50만 달러 수재지원 발표

9월 25일 | 나웅배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대북지원과 남북자 문제 연계 표명

9월 25일 | 미·북, 임시 영사보호권 합의

-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때까지 임시 영사보호권을 인정, 미는 스웨덴이, 북은 주유엔 북한대표부가 각각 행사하기로 결정

9월 26일~ | 대북 쌀지원을 위한 제3차 북경회담(북경)

10월 1일

9월 28일 | 공노명 외무부 장관, 북한 인권보장 촉구 유엔총회 기조연설

- 인권문제 공식거론으로 남북은 2시간 가까이 질의 답변의 공방전을 벌임.

- 9월 29일 | 북한, 미국 민항기 영공통과 허용 발표
- 9월 30일 | KEDO·북한, 경수로 협정 체결 제2차 전문가회담 개막
- 9월 30일~ | 북·일, 쌀 추가지원 문제 협의 2차 회담 (북경)
- 10월 3일
- 10월 1일 | 김영삼 대통령, 국군의날 연설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앞으로 2~3년은 국가안보면에서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언급
- 10월 2일 | 북한 전금철 북경회담 수석대표, 한반도 내에서의 남북대화 거부
- 10월 2일 | 북한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 교도통신 회견에서 나진·선봉에 증권거래소 설치 언급
- 10월 2일 | KEDO·북한, 경수로 협정 체결 관련 제2차 전문가회담 속개
- 10월 3일 | 공로명 외무부 장관, 우성호·안승운 목사사건 유엔 통해 해결 모색 언급
- 10월 3일 | 일·북, 대북 쌀 20만 톤 추가지원 합의(북경)
- 10월 3일 | 국제구호단체 국경없는 의사회(MSF), 북한에 구호품 61톤 지원 발표
- 10월 5일 | 중국 외교부, 대북 30억 원 상당 긴급원조 제공 발표
- 10월 7일 | 대북 쌀 지원 마지막 수송선 코렉스호 출항(동해항)
- 10월 9일 | 김영삼 대통령, 니혼게이지아이신문 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논의 시기상조 언급  
- 남북대화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 너머로 북한과 관계를 진전시키다면 일본이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것임. 주석도 없으니 남북정상회담을 할 시기가 아님.
- 10월 11일 | 북한 최수헌 외교부 부부장, 제50차 유엔총회연설에서 미·북 평화협정 체결 주장
- 10월 11일 | 미국 번스 국무부 대변인, 평양 연락사무소 곧 개설 언급
- 10월 12일 | 나용배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국정감사에서 우성호 송환·수해지원 연계 언급
- 10월 12일 | 국방부, '95 독수리연습(10월 13일~11월 17일) 실시 발표
- 10월 13일 | IAEA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 북한이 폐연료봉 측정거부 언급
- 10월 14일 | 김영삼 대통령, 미국 뉴욕타임즈지와의 회견에서 일·북 쌀 교섭이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언급
- 10월 16일 | 김영삼 대통령, 캐나다 글로브 앤 메일지 회견에서 북한 현 지도체제와의 화해 비관적 언급
- 10월 16일 | KEDO·북한,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관련 제2차 고위급회담 개최
- 10월 16일 | 일본 하야시 외무차관, 대북 쌀 지원 한국과 밀접 협의 언급
- 10월 17일 | 통합방위본부, 서부전선 무장공비 침투사건 발표



- 10월 17일 02:20경 경기도 파주군 임진강 하류 자유의 다리 남쪽 1.5km 지점에서 남측지역으로 침투하려던 무장 북한군 1명이 아군 경계병에 의해 사살
- 10월 17일 | **국방부 대변인, 무장공비 침투관련 성명**
  - 이번 사건은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통한 민족적 화해분위기 조성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가 아닐 수 없음. 또 다시 이같은 도발행위를 자행할 경우에는 우리군은 강력한 응징이 있을 것임을 경고함.
- 10월 17일 | **김태지 주일 대사, 아마사키 일본 자민당 정조회장에게 대북 수교협상 신중 촉구**
- 10월 18일 | **북한, 유엔사의 무장공비 침투사건 항의서한 전달 수령 거부**
- 10월 20일 | **나웅배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대북 수해지원 신중 결정 언급**
- 10월 20일 | **경수로기획단, KEDO 2차 경수로부지 조사단 10월 24일 방북 예정 발표**
- 10월 20일 | **미국 갈루치 핵대사, 미·북 핵 합의 1주년 회견에서 대북 공급 중유 비용 한·일부담 불요구 방침 시사**
- 10월 21일 | **북한 노동신문, 논평에서 우성호 송환 거부**
- 10월 21일 | **KEDO·북한,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관련 고위급회담 진전 발표**
- 10월 22일 | **김영삼 대통령, 캐나다 CBC-TV 회견에서 북한 체제 불안정 언급**
  -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불안정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작년 7월 김일성 사망 이래 지금까지 어떠한 공식적 지도자 승계도 없음. 북한의 무역이 현재 남한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 승부는 결정났다고 보며 구 소련과 동구가 몰락했듯이 북한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임.
- 10월 24일 | **무장간첩 사건 발생**
  - 충남 부여 인근에서 무장간첩 2명 중 김동식 체포, 박광남 도주
- 10월 24일 | **미국 국무부, 남파 무장간첩 사건 관련 간첩들의 대남 침투는 긴장 완화를 바란다는 북한의 기존 주장과 맞지 않는 도발 행위라는 논평 발표**
- 10월 24일~ | **KEDO 경수로 부지조사단, 방북 조사**
- 11월 4일
- 10월 25일 | **미국 의회, KEDO 지원금 2,220만 달러 제공 승인 결정**
- 10월 27일 | **도주 무장간첩 박광남 사살**
  - 10월 27일 11:00경 부여군 초촌면에서 총격전 끝에 검거했으나, 부상으로 병원에서 사망
- 10월 30일 | **릴리 전 주한 미국 대사, 서울신문 국제포럼에서 북한 핵폭탄 수개 보유 주장**
- 10월 31일 | **유엔 총회, 북한의 핵 안전조치 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
- 11월 2일 | **공로명 외무장관·미국 페리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 한·미 행정협정(SOFA) 1996년 1월까지 개정키로 합의

- 11월 6일 | 한적, 북한 수해 12만 달러 상당 현물 지원 발표
- 11월 7일 | 2차 KEDO 부지 조사단, 평양 출발
- 11월 8일 | 한국,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
- 11월 8일 | 북한 박길연 주유엔 대표부 대사, 유엔총회 의사발언에서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입장 표명
- 11월 9일 | 김영삼 대통령,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유엔안보리 진출계기 한반도 문제 평화해결 노력 강조
- 11월 9일 | WFP, 대북 880만 달러 수해 원조 제공 협정 서명
- 11월 9일 | 미국 상원, 남북대화 촉구 대북결의안 채택  
- 결의안 발효 90일후 남북관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그후 매 6월마다 진전상황을 보고토록 규정
- 11월 10일 | 중국 강택민 국가주석, 한국특파원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정전협정 유효 언급
- 11월 10일 | 나진-부산 간 정기 선박 운행 개통식(나진항)
- 11월 15일 | 북한 외교부, 미국 상원의 남북대화 촉구 결의안 채택 비난
- 11월 17일 | 미국 클린턴 대통령,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시사
- 11월 19일 | 외무부, 북한 벌목공 1명 귀순 발표
- 11월 22일 | 북한, 대외 거래용 새 화폐 유통 결정(러시아 언론이 보도)
- 11월 23일 | WFP, 대북지원 쌀 1차분 5천 톤 인도 발표
- 11월 24일 | 한적, 대북 수재구호품 남포항 도착 발표
- 11월 27일 | 국제적십자조사단, 북한 식량부족 심각하며 대규모 아사자 발생을 우려
- 12월 1일 | 국방부, 제29차 통합방위중앙회의에서 북한군 전방 증강 배치 보고  
- 북한은 사거리 25km의 2백 40mm 방사포와 전투·폭격기를 전방지역에 증강 배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심상치 않은 군사동향을 보이고 있음.
- 12월 4일 |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 남·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 참가
- 12월 6일 | 남·북한 등 5개국, 두만강개발협정 서명
- 12월 10일 | 일본 마이니치신문, 북한의 수재지원 쌀이 군량미로 전용되었다고 보도
- 12월 11일 | WFP 트레버페이지 북한 파견 단장, 북한 기아직전 상황 언급
- 12월 11일 | 일본 NHK 방송, 북한군의 이상행동 보도
- 12월 11일 | 통일원 대변인, 북한지원 쌀의 군사용 비축보도에 대해 부인

- 우리가 북측에 제공한 쌀은 하절기에 백미상태로 완전 도정을 하여 보냈기 때문에 북한이 군량미로 장기 비축하여 활용하는 것은 가능치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임.

- 12월 12일 | 한적, 대북 수재구호용 담요 3천장 추가지원
- 12월 12일 | 미국 번스 국무부 대변인, 뉴스브리핑에서 북한 군사동향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
- 12월 12일 | IAEA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 IAEA이사회 보고에서 북한의 핵연료 측정 거부 언급
- 12월 15일 | KEDO·북한, 경수로 공급 협정 타결  
 <협정문>
  - 상환조건: 각호기 완공후 3년 거치기간 포함 20년에 걸쳐 무이자 연 2회 균등 분할상환(현물상환 가능)
  - KEDO 공급 범위: 경수로 발전소 2기에 필요한 발전소 체계, 경수로 건설에 필수적이고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건설전 하부구조, 부지조사·부지준비
  - 북측 의무사항: 부지확보, 경수로 원전 시운전을 위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 기존 항만·철로·공항시설에의 접근, 골재원 및 채석장 확보
- 12월 15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두만강 개발 협정 조인 보도
- 12월 16일 | KEDO 3차 경수로 부지 조사단, 평양 도착
- 12월 19일 | WFP, 대북 수해지원 평양사무소 폐쇄
- 12월 19일 | 김영삼 대통령, 전방부대 시찰에서 북 도발시 단호대처 강조
- 12월 22일 | 통일원 대변인, 북한 제86 우성호 선원 송환 발표 관련 북한이 민간어선을 강제 납치하고,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성명 발표
- 12월 26일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나포(5월 30일)되었던 제86 우성호 선원 관문점 통해 귀환
- 12월 28일 | FAO·WFP, 북한 어린이 210만 명 기아에 직면해 있다는 공동성명 발표
- 12월 30일 | 공로명 외무장관, 대북 쌀 추가지원 조건에 대해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사실조사가 선행되고, 지원되는 식량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충족되면 북한에 쌀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

# 1996년

- 1월 1일 | 북한,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붉은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 발표
- 1월 3일 | 김영삼 대통령, 3부요인 신년 하례식에서 대북안보태세 확립 최우선 강조
  - 북한의 식량부족과 경제난이 극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만큼 어떤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는 국가안보태세 확립이 최우선 과제임.
- 1월 3일 | IOC, 북한의 애틀랜타 올림픽 참가 공식 확인
- 1월 5일 | KEDO·한전, 대북경수로건설 상업용역 계약 체결
- 1월 9일 | 김영삼 대통령, 새해 국정운영에 관한 담화에서 북한에 대해 화해와 협력이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직시하고 대남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
  - 북한이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면서 호혜적인 입장에서 경제난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적극협조할 것임.
- 1월 11~13일 | 미·북한, 미군 유해 송환 협상
- 1월 15일 | 미국 국무부, 미·북 유해 협상 결렬 성명
- 1월 16일~2월 25일 | 제4차 KEDO 경수로 부지 조사단 신포 방문
- 1월 18일 | WFP, 대북 식량지원 참여호소
  - 북한에서는 250만의 여성과 어린이들을 포함해 수백만명의 주민이 기아의 위협에 처하여 있음.
- 1월 19일 | 국제축구연맹(FIFA), 대한축구협회에 북한의 월드컵 공동개최 제의
- 1월 24일 | 한·미·일, 대북 쌀 지원 고위정책협의회 개최하여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 않기로 합의
- 1월 28일 | 유엔, 국제기구 등의 대북식량지원 2,800만 달러 발표
- 1월 30일 | WFP 평양사무소장, 북한 주민 기아보다도 오히려 병사우려 표명
  - 북한주민들이 영양실조로 사망하고 있지는 않지만 식량부족으로 면역력이 약화돼 폐렴이나 기관지염 증세로 죽어가고 있음.
- 1월 30일 | IAEA 대변인, 북한 주요핵시설에 대한 사찰 계속 거부 발표
- 1월 30일 | 북한 외교관 현성일(37세), 서울 도착
- 2월 2일 | 김운용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북한체육인 서울 방문 초청
- 2월 2일 | 북한 대외경제위원장 이성대, 일본에 추가 식량지원 요청

- 2월 7일 | **WFP 평양사무소장, 북한 곡물 등 판매 허용 발언**  
- 북한 당국은 정상적인 분배가 어려운 식량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완화하였음. 북한 농부들이 현지 시장에서 식량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으며 과일, 야채, 닭, 의복 등 판매시장이 다수 목격되었음.
- 2월 8일 | **뉴욕 타임즈, 북한 식량지원 중단 요청 보도**
- 2월 8일 | **미 국무부, 대북 2백만불 지원 예정대로 추진 발표**
- 2월 8일 | **북한, 미국의 2백만불 대북 수해지원 보도**  
- 미국의 이러한 조치들은 조·미 기본합의문의 순조로운 이행에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임.
- 2월 11일 | **북적 대변인, 한국정부의 탈북자난민수용소 설치계획 비난**  
- 우리에게 있어서 난민이란 있을 수 없으며, 남조선과 해외에서 번민하던 사람들까지 찾아와 인덕정치하에서 재생의 길을 걷고 있음.
- 2월 12일 | **북한 유엔 대표부, 국제 쌀 지원 선별 수용 방침 발표**  
- 외부에 식량지원을 추가로 요청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군부의 강력한 반발 때문임. 국가간의 쌍무적 지원은 종전과 같이 받아들여져 국제 구호단체들의 원조는 선별 수용할 것임.
- 2월 12일 | **강영훈 한적 총재, 제707 대영호 선원 송환 요구**  
- 대영호는 1995년 12월 26일 제주도 성산포항을 출항 1996년 1월 8일 실종, 북한은 1,284명이 월북하였다고 주장
- 2월 13일 | **북한, 애틀란타 올림픽 아시아지역 탁구예선 참가 신청**
- 2월 13일 | **김정일 전처 '성혜림' 망명설 첫 보도**
- 2월 14일 | **국방부, '96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발표**
- 2월 15일 | **러시아 정부 대변인,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북한 무장 망명 병사(25세, 정치범 수용소 경비병) 자살 발표**
- 2월 15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성혜림 망명설 관련 대남 보복 경고**  
-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남조선 괴뢰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시기에 정정당당한 수단과 방법을 다해 단호한 보복조치를 취할 것임.
- 2월 22일 | **북한 보안요원, 러시아 무역대표부 무장난입 망명 신청**
- 2월 22일 | **북한 외교부, 북·미 잠정협정체결 제의**  
① 조선반도에서 무장 충돌과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정전상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조미 사이에 잠정협정이 체결되어야 함.  
② 잠정협정을 이행·감독하기 위하여 판문점에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하는 조미공동군사기구 조직·운영되어야 함.  
③ 잠정협정을 채택하며 조·미 공동군사기구를 내오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해당쪽에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함.

- 2월 23일 | 통일원 대변인, 북한 잠정협정체결 대미 제의 관련 논평발표  
-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따라 현 정전 상태가 남북한 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될 때까지 현 정전 협정을 준수하고, 군사정전위원회에 하루 속히 복귀해야 할 것임.
- 2월 23일 | 미국 번스 국무부 대변인, 북한의 잠정협정 제의 관련 논평발표  
- 미국은 맹방인 한국을 포함하지 않은 채 북한과의 어떠한 협정체결도 고려하지 않고 있음. 북한은 잠정협정에 앞서 군사정전위원회에 복귀하는 문제부터 재고하여야 할 것임.
- 2월 23일 | 미국 국무부, 여행경고국 대상에서 북한을 제외
- 2월 25일 | 김영삼 대통령,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현재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불행한 종말을 맞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
- 2월 26일 | EU, KEDO에 625만 달러 지원 결의(브뤼셀)
- 2월 27일 |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일본 정부 북한 붕괴시 대응 시나리오 검토 보도  
- 북한이 중장기적으로 체제붕괴과정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유사시 대비 위기대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음.
- 2월 29일 | 국방부, 북한 선원 2명 구조 및 시신 2구 인양(염분진호) 발표
- 3월 1일 | 김영삼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통일을 위한 협력과 공동번영이지 북한의 붕괴가 아니다”라고 언급
- 3월 1일 | 이성호 북적 위원장 대리, 염분진호 선원 송환 요청
- 3월 2일 | 한적, 북한 화물선 염분진호 구조선원 조속 송환 방침 표명
- 3월 4일 | 일본, 표류 중 구조(2월 22일)된 북한 어부 4명 송환
- 3월 5일 | 북한 화물선 염분진호 선원 2명, 시신 2구 관문점을 통해 송환
- 3월 8일 | 북한 군 관문점 대표부, 평화보장 체계수립 관련 ‘비망록’ 발표  
- 미측이 우리의 협상제의에 응해 나오지 않고 시간을 끌 경우 우리는 낡은 정전체제를 새로운 장치로 바꾸기 위한 최적적이고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는대로 나갈 것임.
- 3월 11일 | 김영삼 대통령, 제52회 육사졸업식 치사에서 북한의 군사모험 가능성 경계 강조  
- 북한은 체제의 불안정성과 함께 흑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음. 북한은 체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엉뚱한 군사적 모험을 택할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함. 국가안보에 관련한 우리는 한치의 허점도 용납해서는 안되며, 평화는 힘이 있을때만 지킬 수 있는 것임.
- 3월 12일 | 김영삼 대통령, 이북 5도민 대표 청와대 초청오찬에서 탈북자 700여명 입국 희망, 선별 수용 언급
- 3월 12일 | 북한 이삼로 주태국 대사, 북·미 평화회담 성사 때 한국 읍저버 자격으로 참가 검토 발언
- 3월 13일 | 김영삼 대통령, 해사졸업식 치사에서 주권 훼손 단호히 격퇴 강조

- 북한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난을 겪으면서도 군비증강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체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막다른 골목에서 어떤 무모한 행동을 저지를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
- 3월 13일 | **게리 럭 주한미사령관, 미 하원 국가안보세출소위에서 북한 붕괴 시기·방법문제만 남았다고 언급**  
-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상황을 지켜볼 때 문제는 북한이 붕괴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붕괴할 것인가로 자체붕괴나, 남침이나 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임.
- 3월 15일 | **북한 장웅 올림픽위원회 전무이사, 남북한 월드컵 공동 개최안 부정**
- 3월 15일 | **김영삼 대통령, 공사졸업식 치사에서 북한이 교류·협력의 장에 나올 것을 촉구**  
- 북한은 하루빨리 군사모험주의를 포기하고 민족공영의 길로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함.
- 3월 16일 | **북한 박길연 주 유엔 대표부 대사 경질, 후임에 김형우 외교부 부부장 내정**
- 3월 18일 | **KEDO 집행이사회, 경수로 사업 주 계약자로 '한전' 공식 지정**
- 3월 18일 | **김영삼 대통령, 경찰대학 졸업식 치사에서 대북 경계유지 강조**  
- 북한이 체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무모한 군사적 모험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함.
- 3월 20일 | **북한 전금철 북경 접촉 단장, 대북 쌀지원을 위한 제4차 북경회담 개최(3월 27일) 제의**
- 3월 20일 | **KEDO·한전, 주 계약자 합의서에 서명**
- 3월 20일 | **WFP, 대북 쌀 수송선 중국선적 '첵다호', 대만해협에서 침몰 발표**
- 3월 20일 | **마드센 유엔 대북대표단장, 북한 붕괴 상황 아니라고 발언**
- 3월 22일 | **IFRC, 북한의 식량 원조 요청 발표**
- 3월 26일 | **KEDO 총장단 6명, 방북**
- 3월 27-28일 | **UNDP, 두만강 통신 및 하부구조 실무 회의 개최**
- 3월 29일 | **북한 김광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평화보장체제 제안 거부와 관련 비무장지대에서의 모종 조치 위협**  
- 남조선당국자는 최근 우리의 군사적 모험 가능성과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연발하면서 남북한 문제는 군사적 힘에 의한 해결만이 가능하다고 폭언하였음. 우리의 대응책에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된 상황에 따르는 조치들이 포함될 것임.
- 3월 30일 | **국방부, 북한 김광진 인민 무력부 제1부부장 담화 관련 “북한이 자신의 체제 내부 문제를 호도하기 위해 무모한 도발을 자행할 경우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성명 발표**
- 4월 4일 | **북한 조선인민군 관문점 대표부 대변인, 비무장지대(DMZ) 의무포기 선언**  
① 조선인민군은 정전협정에 의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임무를 포기함.

② 조선인민군측은 상기임무를 포기하는데 따른 조치로서 관문점공동경비 구역과 비무장지대 출입 우리측 인원·차량들에 식별표지를 착용치 않도록 할 것임.

- 4월 5일 | 북한 전금철 대북쌀지원을 위한 북경 회담 단장, 제4차 회담 개최 촉구
- 4월 5일 | 국방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위 불인정 선언 관련 “현 정전협정은 일방적으로 폐기 또는 수정될 수 없으며, 남북한 합의를 통하여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될 때까지는 엄수되어야 함”을 재차 언급
- 4월 5일 | 북한군, 1개 중대 관문점 공동경비구역 1차 진입(18시경 진입, 20:30경 철수)
- 4월 6일 | 북한군, 260여명 관문점 공동경비구역 2차 진입(19시경 진입, 22:20경 철수)
- 4월 6일 | 김영삼 대통령, 북한의 DMZ 도발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 군은 한·미간의 확고한 군사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격퇴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고 철통같은 대북경제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음.
- 4월 7일 | 북한군, 230여명 관문점 공동경비구역 3차 진입(20:07 진입, 22:35 철수)
- 4월 9일 | 유엔안보리, 북한의 DMZ 도발관련 긴급의제 채택
- 4월 11일 | 유엔안보리, 북한의 DMZ 도발관련 의장명명의 언론발표문 채택
  -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한 북한당국에 정전협정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4월 11일 | 국방부, 무장북한군 군사분계선 월선 발표
  - 무장북한군 3명이 중동부 전선에서 군사분계선 남쪽 200m까지 월선 후 복귀했음.
- 4월 12일 | 북한 외교부 대변인, 한반도 긴장상태 관련 담화
  - 남조선당국자들과 일부 불순세력이 우리의 자위적 조치가 그 무슨 특정한 목적을 노린 정치적 도발이라느니, 그 누구를 상대로한 외교적 압력전술이라느니 하면서 우리를 자극해 나르고 있음. 우리의 무장력이 전쟁의 발발을 미연에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자위권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것임.
- 4월 14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한반도 정세관련 단호한 조치·위협을 내용으로 한 보도 발표
- 4월 15일 | 러시아 파노프 외무차관, 한반도 주변국 남·북·미·일·러·중·유엔·IAEA의 ‘8자 회의’ 개최 제의
- 4월 16일 |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 4자회담 제의
- 4월 16일 | 중국 외교부 대변인, 4자회담 관련 중국의 적극적 역할 표명
- 4월 16일 | 손성필 주러 북한대사, 4자회담 제의 관련 거부 표명
  - 조선반도 평화보장 문제는 우리와 미국사이에 결정되어야 할 문제인데 미국측이 왜 갑자기 4자회담 제안을 내놓았는지 그 취지와 목적이 명백치 않음.
- 4월 16일 | 북한 이삼로 주태국 대사, 정전협정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인만큼, 정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회담도 북·미간에 열려야 함을 주장

- 4월 16일 | 일본 하시모토 총리, 4자회담 제의 지지 표명
- 4월 18일 | 통일원 대변인, 북한의 4자회담 반응 관련 “우리는 북한이 4자회담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하며, 북한의 태도를 지켜 볼 것”이라고 논평
- 4월 18일 | WFP, 2차 대북지원 쌀 8,265톤 남포항 도착 발표
- 4월 19일 | 북한 경비정 2척, 서해 북방한계선(NLL)침범
- 4월 20일 | 국방부, 북한 해군 경비정 2척 경계선 침범 발표
- 4월 20~21일 | 미·북 미사일 회담 제1차 회의(베를린)
- 4월 22일 | 북한 김정우 대외경제위원장, 워싱턴에서 주체경제노선의 획기적 정책전환,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적극적 침투, 자본주의 사업방식 도입 발언
- 4월 26일 | 미국 국무부, 대북 경제제재 해제 조건 통보  
- 미국은 대북경제제재 완화 조건으로 ① 테러리즘 포기 ② 미군유해 반환 ③ 미사일협상 계속 등을 통고하였음.
- 4월 27일~ | 제5차 KEDO 경수로 부지 조사단 방북, 귀환
- 5월 7일
- 4월 27일 | 북한, 긴급식량 원조 대유엔 요청
- 4월 29일 | (주)대우, 북한 남포공단에 첫 합영공장 설립 발표
- 5월 1일 | 미국 백악관 대변인, 북한 핵연료봉 봉인착수 발표
- 5월 2일 | IAEA 대변인, 북한 핵개발 계획의 과거를 알아보기 위한 연료봉 시료 채취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고 논평
- 5월 4일 | 미·북, 뉴욕에서 제2차 유해 협상 개최
- 5월 7일 | 북한 외교부, 미국에 4자회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요구  
- 조선반도의 평화보장 문제는 정전협정의 당사자들인 우리와 미국 사이에 토의·결정 되어야 함.
- 5월 8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경제정책을 전환시켰다는 보도 부인
- 5월 9일 | 김영삼 대통령, 제7차 Asia Society 서울 총회 치사에서 북한에 4자회담 호응 촉구  
- 4자회담은 북한의 입장을 감안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며 회담이 성공할 경우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임.
- 5월 9일 | 미국 국방부, <미·북 유해협상 합의문> 발표  
- 미국은 북한이 과거 미군유해 발굴 및 송환에서 보여준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명하고 그 대가로 2백만 달러를 지불함. 대가 지급이 향후의 보상에 선례가 되지 않을 것임. 양측은 6월 상반기중 추후 결정될 장소에서 공동발굴작업과 관련한 실무협상을 갖기로 했음. 양측은 이같은 기술적인 회동이 연내 공동발굴작업으로 이어지길 기대함.

- 5월 13일 | WFP, 북한 식량위기 관련 특별보고서 발표
  - 북한의 지난해 수확량은 거의 소비되었으며 식량재고가 심각하게 낮은 수준임. 이는 북한 전역에서 광범위한 식량부족 사태를 의미하여 식량난은 97년까지 이어질 것임.
- 5월 13일 | 북한 평양방송, 식량위기설 강력부인 보도 발표
- 5월 16일 | 한적, 북한에 4차 구호품 식용유 18만 리터 지원
- 5월 17일 | 국방부, 무장 북한군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침범 발표
- 5월 18일 | 국방부 대변인, 무장 북한군 침범 관련 성명
  - 북한군의 이번 도발행위는 관문점 공동경비구역 중무장 투입(4월 5~7일), 중동부전선 군사분계선 월선(4월 11일)에 이어 자행된 정전협정 위반임.
- 5월 19일 | 북한, 17일의 군사분계선 침범은 '정상적인 임무수행' 이었다고 주장
- 5월 20일 | 주한 유엔군사령부, 유해 발굴비 200만 달러 대북전달
- 5월 20일 | 북한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 4자회담 관련 4자회담은 아직 검토 중으로 미국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수용할 수 있으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언급
- 5월 21일 | 주한 유엔군사령부, 관문점에서 17일 북한군 7명이 군사분계선을 월경,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항의문 전달
- 5월 21일 | 미국 국무부, 4자회담 관련 남·북·미 3자 접촉 대북제의
- 5월 23일 | 북한 공군 책임비행사 이철수 대위, 미그 19기를 몰고 귀순
- 5월 23일 | 북한, 고속경비정 5척 서해 침범
- 5월 24일 | 북한 노동신문, 4자회담 공동 설명회 거부 논평
- 5월 27일 | 러시아 연해주 지사, "북한 탈출자 3명중 1명이 북한에 인도되자 즉각 사살당했다"고 언급
- 5월 29일 | 북한 김홍립 주 스웨덴 대사, 대미 4자회담 설명 요구
- 5월 29일~6월 29일 | 이인모 신병 치료차 방미, 귀환
- 6월 1일 | 일본 하시모토 총리, 대북 식량지원 표명
- 6월 6일 | 유엔 인도지원국, 대북 2차 지원 4,300만 달러로 확정
- 6월 8일 | 김영삼 대통령, 한국일보 창간 42주년 기념회견에서 북한이 개방하지 않는 한 식량난 불가피하다고 발언
  - 북한이 겪는 식량난과 에너지난 등 경제적 어려움은 북한경제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며, 따라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한 개선될 전망은 없음.
- 6월 10~14일 | 북·미, 미군유골 발굴관련 합의서 채택
  - 유골작업은 오는 7월과 9월에 각각 한번씩 진행하게 됨. 미국측은 유골발굴 작업에 필요한

일체 장비와 물자 등을 대며 모든 비용을 충분히 보상하기로 했음.

- 6월 11일 | 일본 정부, 대북 식량난 관련 6백만 불 지원 잠정결정
- 6월 11일 | 권오기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대북 300만 달러 상당 식량지원 방침 발표
- 6월 12일 | 권오기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4자회담 호응 대북촉구
- 6월 12일 | 유엔 인도지원국, 북한 식량난 실태보고서 발표  
- 북한 식량난이 심각하긴 하나 소요가 우려되는 상황은 아님.
- 6월 12일 | 미국 니콜라스 번스 국무부 대변인, 북한 식량난 관련 620만 달러 지원결정 발표
- 6월 14일 | 국방부, 북한 경비정 3척 서해 연평도 서남쪽 북방한계선 침범 발표
- 6월 14일 | KEDO·북한, 뉴욕에서 대북 경수로 통행·통신의정서 가서명
- 6월 14일 | 한적, 제5차 대북 수재민 지원계획(밀가루 572만 톤) 발표
- 6월 15~17일 | 북한·중국, 원정-권하 무비자 통행 합의
- 6월 17일 | 유엔군축회의, 남·북한 동시가입 승인
- 6월 21일 | IAEA, 북한 핵안전협정 위반 성명  
- 지난해 IAEA 사찰관들이 북한의 거부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사찰을 할 수는 없었음. 앞으로 기존의 핵안전협정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적 문서를 협상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음.
- 6월 21일 | 북한 외교부, 미국의 식량추가지원 결정에 사의 표시
- 6월 25일 | 제5차 IAEA 협상대표단, 평양도착
- 6월 26일 | 미·북, 4자회담 공동 설명회 관련 실무접촉
- 6월 26일 | 북한 외교부, 유엔군 사령부 해체관련 비망록 발표  
- 유엔사의 존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시대의 요구에 맞게 지체없이 해체되어야 함.
- 6월 28일 | KEDO, 대북협상 개최 발표
- 7월 1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중유제공 불이행시 핵동결 제고 보도  
- 우리는 중유가 합의된 일정대로 제때에 납입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핵동결도 부득이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음.
- 7월 1일 | 러 이타르타스 통신, 북한 소규모 개인상점 허용 보도  
- 북한 당국은 20여일전 가내방 이라는 소규모 자영업을 허용하였으며 주민들이 가판대에서 식품 의류 등을 판매함. 북한 주민들은 매출액의 10%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내방영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음.
- 7월 3일 | 국방부, 6.25당시 실종·포로 2만여 명으로 추정집계

- 7월 3일 | KEDO, 제6차 부지 조사단 방북발표
- 7월 5일 | 국가안전기획부, 북한 서해안 일대와 양강도에 콜레라 수백명 감염 발표
- 7월 8일 | 김영삼 대통령, 제15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북한에 4자회담 호응 촉구
  - 4자회담이 성사되면 남북 경제협력문제도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을 것임. 4자회담의 실현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결정적 계기가 되고 4자회담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이 될 것임.
- 7월 10~31일 | 제1차 미군유해 공동발굴조사
- 7월 11일 | 중국, 북한에 식량 10만톤 무상제공 통보
- 7월 11일 | KEDO·북한, 경수로 공급협정 이행을 위한 3개 부속 의정서(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통신, 통행부문)에 공식 서명
- 7월 14일 | 북한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 부위원장, 도쿄에서 나진·선봉지구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
- 7월 20일 | KEDO 의정서 협상 실무 대표단 방북
- 7월 25일 | 북한 조선인민군 관문점 대표부 대변인, 대미 장성급 회담 개최 제의
  - 우리는 정전협정의 실제 당사자인 조·미간 잠정협정을 체결하고 잠정기구로서 장령급회담 마련을 위한 실무협상 재개를 미군측에 제기함.
- 7월 25일 | 북한 중앙인민위, '휴전협정일'을 국가적 명절로 제정
- 7월 27일 | 이성호 북적 위원장 대리, 북한군 김영길 송환요구
- 7월 27일 | 국방부 대변인, 북한군 김영길 하사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조속히 송환키로 했다고 발표
- 7월 30일 | 북한, UNDP에 수해지역 점검 요청
- 7월 31일 | 김영삼 대통령, 서울경제신문 창간 36주년 기자회견에서 4자회담 수용 시 대북 경제지원 협력 표명
  - 4자회담이 개최되면 심각한 북한의 경제난을 덜어 줄 수 있는 대북경제 지원과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임. 북한이 한반도의 안정은 물론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기를 기대함.
- 8월 1일 | 강영훈 한적 총재, 최근 서해상에서 표류 중 발견 된 북한 선박과 시신의 송환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접촉을 갖자고 제의
- 8월 1일 | 국방부, 북한군 시신 2구 송환 계획 발표
- 8월 2일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북한은 12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외국 항공사들에게 북한 영공을 개방할 것이라는 합의 결과 발표
- 8월 2일 | 제프리 테니스 주북한 IFRC 대표, 북한 호우로 47명 사망 언급

- 8월 5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7월 30일 중국 연변에서 실종된 소설가 김하기(본명:김영)를 국경침입죄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
- 8월 5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홍수피해 심각 보도
- 8월 5일 | 강영훈 한적 총재, 김영 송환 요청
- 8월 6일 | 북한, 민간인 시신송환 관련 남북적십자 연락관 접촉 제의 수락
- 8월 7일 | 북한 군인, 민간인 시신 4구 관문점을 통해 송환
- 8월 7일 | 국방부·한미연합사, 을지포커스 훈련(8월 19~30일)실시 발표
- 8월 10일 | 이성호 북적 위원장 대리, 최근 서해상에서 발견된 한국인(강대회)시신 1구의 송환을 위해 적십자 연락대표 접촉(8월 12일)을 갖자고 제의
- 8월 12일 | 강영훈 한적 총재,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대북제의
- 8월 15일 | 김영삼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4자회담 실천방향 제시  
- 4자회담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광범위한 문제를 토의하되, 평화체제 구축문제, 군사적 신뢰문제, 긴장완화조치 차원의 남북경협문제 등 협의를 제시함.
- 8월 15일 | 중국 연길에서 실종, 북한에 들어간 소설가 김하기(본명:김영), 중국으로 송환
- 8월 20일 | 대북 식량지원 미국 선박, 쌀 3천 톤 외 옥수수 식품 등을 싣고 첫 방북
- 8월 23일 | 북한 외교부, 미국에 핵동결협정 파기 경고
- 8월 24일 | 김영삼 대통령, 나라를 걱정하는 모임 초청 오찬에서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발언  
- 최근 북한내부는 식량난 등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정부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음.
- 8월 29일 | 대우, 북 남포공단에 직원 첫 상주
- 9월 8일 | 김영삼 대통령, 대북 수해복구비 35만 달러 지원 표명
- 9월 8일 | 통일원 대변인, 나진·선봉 투자포럼 참가 문제 UNDP에 협조 요청 언급
- 9월 9일 | 한적, 제8차 대북 수해 물자지원
- 9월 10일 | 통일원, 나진·선봉 투자 포럼 불참 발표
- 9월 10일 | 북한, 개인 농·공 정책 전환 시도  
- 북한당국은 2개월 전 개인이 논밭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개혁을 했음. 개인경작 유효기간은 15년이며 수확량은 국가에 팔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도 있도록 하였음. 북한의 공장경영 제도와 관련 오는 10월부터 공장도급제가 시험도입될 예정임.
- 9월 10일 | 유엔총회,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채택  
- 북한 불참
- 9월 10~12일 | KEDO 제2차 정기 총회 개막

- 9월 11일 | IFRC, 북한 수해상황보고서 공개
- 9월 13일 | 남·북한, 북한 영공 남한 민항기에도 개방기로 합의
- 9월 13~14일 | 나진·선봉 국제 투자 및 기업 토론회 개최
- 9월 16일 | 북한 여객기 마카오 첫 취항
- 9월 17일 | 제6차 미·북 전문가 협상 미국 대표단(폐연료 처리 전문가) 평양 도착
- 9월 18일 | 북한, 잠수함 이용 무장간첩 26명 동해상 침투
- 9월 19일 | 유엔사, 북한 무장 잠수함 침투 관련 대북 항의서한 전달하였으나 북한 접수거부
- 9월 19일 | 국방부 대변인, 잠수함 침투사건을 ‘명확한 대남 도발행위로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사항’으로 규정
- 9월 20일 | 유엔안보리, 북한 무장 잠수함 침투 관련 의장성명 채택
  - 유엔안보리 의장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북한 대사를 불러 사건 해명을 요청토록 함. (북한 거부)
- 9월 20일 | IAEA, 북한 과거 핵 규명 촉구 결의안 채택
- 9월 22일 | 북한 인민무력부, 무장공비 침투관련 정상적인 훈련 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 좌초된 것이라고 주장
- 9월 23일 | 국회, 북한 무장공비 침투 관련 대북결의안 채택
  - 북한의 군용함정에 의한 무장병력 침투행위는 단순한 간첩행위가 아니라 무력적화 통일을 획책하는 군사도발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음.
- 9월 23일 | 국방부, 북한의 잠수함 침투인원 송환요구 관련 대북 규탄여론을 희석시켜 보려는 상투적 기만책략에 불과하다고 성명 발표
- 9월 23일 | KEDO·북한, 부지 인수 및 서비스 의정서 2차 협상 중단
- 9월 24일 | 김영삼 대통령, 일본언론 정치부장단 접견에서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관련 대북정책 재검토 표명
  -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국가 보위의 책임과 군의 최고통치권자로서 대북정책을 재검토 하는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겠음.
- 9월 24일 | 미국 클린턴 대통령, 잠수함 사건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라고 발언
- 9월 24일 | 미국 글렌 데이비스 국무부 대변인,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용의 언급
- 9월 26일 | 공로명 외무부 장관, 제51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 비난과 4자회담 수락 요구
- 9월 26일 | 유엔사·북한군, 북한 무장공비침투관련 비서장급 접촉
- 9월 26일 | 북한 최수현 외교부 부부장, 제51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미 평화보장 체계 수립 촉구

- 9월 27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무장공비 침투관련 우리는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보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천 배의 것으로도 될 수 있다고 보도
- 9월 29일 | 국방부, 북한무장공비 침투관련 입장 표명
  - 금번 사건은 잠수함과 특수무장병력을 동원한 무력도발로서, 수중침투, 공격 등 다양한 침투수행이 가능한 전투전력인 잠수함을 동원한 침투행위는 정규전과 다를 바 없는 도발행위임. 무력도발을 자행한 북한의 기도는 한반도 긴장고조로 현재 처해있는 대내외적 어려움을 타개해 보려는 것으로서, 금번과 같은 예측불허의 무력도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음.
- 10월 1일 | 김영삼 대통령, 국군의 날 제48주년 축하메시지에서 대북 힘의 우위 정책 언명
  - 북한은 동포애에 바탕한 우리의 지원과 성의를 저버리고 또다시 잠수함까지 동원하는 무력도발을 자행했음. 우리군은 확고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모험주의도 사전에 제압할 수 있는 정예강군으로 육성되어야 할 것임.
- 10월 1일 | 국방부, 틱스피리트 훈련 재개방침 표명
- 10월 6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미국 시민(에반 갈 헌자이크) 간첩혐의 체포 보도
- 10월 9일 | 미국 니콜라스 번스 국무부 대변인, 북한 자이크 체포관련 즉시 석방을 요구
- 10월 10일 | 김영삼 대통령, 신한국당 주최 '한마음 대 음악회' 기념다과회에서 공비의 민간인 학살 반드시 응징할 것을 강조
- 10월 12일 | 국회, 북한 무장공비 침투 및 보복협박관련 제2차 대북결의안 채택
  - 북한정권은 명백한 무장공비침투 사실을 솔직히 사과하고 더 이상의 재발방지를 온세계에 다짐할 것을 촉구함.
- 10월 12일 | 북한 조국전선, 국회 대북결의안에 대해 “국회의 결의문 채택은 공화국을 반대하는 도발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술책이며 나라의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것”이라고 비난
- 10월 15일 | 유엔안보리, 잠수함 침투 대북경고 의장성명 채택
  - 중국, 안보리 대북 의장성명 채택에 동의
  - 안보리는 이사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전협정이 준수될 것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말 것을 촉구함. 안보리는 정전협정이 새로운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게 존속해야 함을 강조함. 안보리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양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을 권유함.
- 10월 17일 | 미국 니컬러스 번스 국무부 대변인, 노동1호 발사 실험 대북 경고
- 10월 18일 | 권오기 통일부 총리, “북한의 분명한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일방적 시혜나 교섭에 의하지 않는 대북지원을 재고하겠다”고 언급
- 10월 21일 | 김영삼 대통령, 국회시정연설에서 무장공비침투 시인사과 및 재발 방지조치 대북 촉구
  - 북한이 우리의 인내와 의지를 무시하고 또 도발한다면 한미연합 방위태세에 의거 단호조치

할 것임. 북한이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약속을 지켜 정전협정 관리기구에 복귀하는 동시에 4자회담에 조속 호응할 것을 촉구함.

**10월 21일 | 두만강개발계획 5개국위 제2차 회의 개막(북경)**

**10월 25일 | 미국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핵동결 파기시 군사대응 대북 경고**

- 북한이 최근 수년간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여 왔으나 우리는 힘든 외교를 통하여 이를 중지 시켜 왔음.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제네바 핵합의 파기 위협관련, 우리는 국익수호를 위해 군사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음.

**10월 29일 | 생포 무장간첩 이광수(31세)기자회견**

**10월 29일 | 미국 국무부 대변인, 미사일 실험 중단 대북 촉구**

- 북한의 미사일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것으로 노동1호 발사계획의 중단을 거듭 촉구함.

**10월 29일 | 유엔 총회, 핵안전협정 이행촉구 대북결의안 채택**

- 찬성 141, 반대1, 기권8(중국, 시리아, 쿠바, 라오스, 수단, 레바논 등)

**10월 30일 | 미국 민트 국무부 한국과장·북한 외교부 이형철 미주국장, 쌍방 현안합의 2차 실무접촉**

**11월 1일 | 한·미 제28차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개최**

(공동성명)

-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의 확립은 한국인의 임무이며 미·북간 개별협상은 고려될 수 없음.
- 한·미 제안 4자회담에의 호응을 대북 촉구하며, 남북합의서에 기초하여 한국정부와 직접 대화할 것을 촉구함.
-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행위로서 이에 단호히 공동대처키로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대북 촉구함.
- 미국은 한국이 무력침략을 받을 경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즉각 지원하고 핵우산도 계속 제공할 것임.

(공동기자회견)

- 북한이 4자회담에 대한 수락이 있기 전까지 한미는 연합군의 현대화와 훈련을 강도높게 지속할 것임.
- T/S 재개문제는 한반도내 상황변화에 따라 금년말이나 내년초 양국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것임.

**11월 8일 | 김영삼 대통령,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와 회견에서 잠수함 침투 사과 전 대북 경수로 지원불가 언급**

- 북한이 잠수함 침투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한 어떠한 형태의 대북지원도 할 수 없음. 우리의 국민감정이 북한의 사과없이 경수로 지원을 허용치않고 있으며 현재 그 이행이 유보된 상태임. 우리는 여전히 4자회담을 지지하지만 이는 북한의 사과가 선행된 이후에야 가능할 것임.



- 11월 10일 | 주한 미국 대사, '북한 잠수함 침투 사과해야 4자회담 가능' 발언
- 11월 11일 | 북한 외교부, 4자회담 공동 설명회 거부 시사
- 11월 11일 | 북한 김요웅 민항 총국장, 북한영공 개방 시 남한 포함 언급
- 11월 13일 | 판문점 〈자유의 집〉 신축 착공식
- 11월 14일 | 유엔사·북한, 무장잠수함사건 관련 비서장급 접촉
- 11월 15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경수로사업 지연관련 제네바 합의 파기 위협
  - 우리는 경수로 제공관련 시한문제를 차요시한채 언제 중단될지 모를 중유나 제공받으면서 핵활동을 무한정 동결시킬 수 없음.
- 11월 16일 | 북한 조평통, 한국정부의 대북협력중단조치 비난 성명 발표, 자위책 강구 위협
  - 남조선통치배들이 폐쇄정책과 전쟁도발책동으로 대결을 강요하는 조건에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자위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음.
- 11월 17일 | 장정연 주한 중국대사, 4자회담 성사 기대 표명
- 11월 18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잠수함 등 송환 거부시 대남 보복 성명
  - 남조선 당국은 우리측 인원들을 무참히 살해한 살육만행에 대하여 사죄하고 희생된 우리측 인원들과 잠수함을 빠른 시일안으로 무조건 돌려보내야 함. 우리는 빈말을 좋아하지 않으며 보복을 한다면 하고 피값을 받아낸다면 받아내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질임.
- 11월 18일 | 통일원 대변인, 북한의 잠수함·승무원 시신 송환요구 관련 논평
  - 북한은 이른바 조선중앙통신사 명의로 최근의 무장공비 침투관련 잠수함과 승무원시신 송환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재차 위협해 나왔음. 이번 사건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이 중무장한 잠수함으로 우리 영해를 침범, 정탐행위를 하고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함으로써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유린한 무력도발 행위임. 북한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면서 상습적으로 보복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명시적으로 시인·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보장해야 할 것임.
- 11월 19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판문점 연락사무소 철수 및 업무 중지 보도
  - 우리는 1996년 11월 20일부터 잠정적으로 판문점 우리측 연락사무소 대표들을 철수하고 그 업무를 중지할 것임.
- 11월 19일 | 통일원 대변인, 북한의 판문점 연락사무소 철수관련 성명 발표
  - 정부는 북한이 이같은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북측 연락사무소를 원상 회복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함. 아울러 정부는 북한이 무장공비 침투사건관련 비이성적 행위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시인·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재차 촉구함.
- 11월 19일 | 유엔사·북한, 무장잠수함 침투관련 비서장급 접촉
- 11월 20일 | 북한 중앙방송, 판문점 연락사무소 철수는 응당한 조치 논평
- 11월 20일 | 미국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중국에 4자회담 성사 협력요청

- 11월 23일 | 국방부 대변인, 서해상 표류 북한군 1명 구조 발표
- 11월 23일 | 북적 대변인, 표류 북한사병 송환요구
- 11월 24일 | 김정일, 북한군 관문점 대표부 시찰  
- 70년대에 3차례 관문점 방문 이후 처음
- 11월 26일 | 서해 표류 북한 군인 정광선, 북한 송환
- 11월 27일 | 김영삼 대통령, 기자회견담회에서 4자회담에서 북한의 잠수함 침투 사과 시 수용의사 있음을 표명
- 12월 5일 | 김영삼 대통령, 통합방위중앙회의에서 북한의 사과 없이 대북지원 불가 표명
- 12월 7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잠수함 및 유해 송환 촉구
- 12월 9일 | 미·북, 잠수함 사건 및 미·북 쌍무 문제 협의관련 실무접촉
- 12월 11일 | 미·북, 잠수함 사건 및 미·북 쌍무 문제 협의관련 제2차 실무접촉
- 12월 11일 | 북한 김영남 외교부장, 독일 ZDF TV회견에서 북한 경제위기 시인  
- 지난해부터 발생한 홍수와 동유럽 국가들의 몰락으로 인해 대외무역 상대국이 사라지면서 북한 경제가 붕괴위기에 놓여있음.
- 12월 16일 | 제3차 미·북 실무접촉, 북한 잠수함침투사건에 대한 사과방법과 수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 12월 17일 | 제4차 미·북 실무접촉 진행
- 12월 17일 | 유종하 외무장관, 대북 경수로사업 정상화 위해 북한 사과 필수 언급
- 12월 17일 |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 12월 19일 | 제5차 미·북 실무접촉 진행
- 12월 20일 | 권오기 통일부 총리, 잠수함 사건 해결되면 식량지원 검토
- 12월 20일 | 제6차 미·북 실무접촉 진행
- 12월 21일 | 김영삼 대통령, 잠수함 사건 관련 특전사 및 동부전선 시찰에서 북한의 분명한 사과 및 재발 방지 않는 한 대북지원 불가 강조
- 12월 21일 | 제7차 미·북 실무접촉 진행
- 12월 23일 | 제8차 미·북 실무접촉 진행
- 12월 27일 | 제9차 미·북 실무접촉 진행
- 12월 28일 | 제10차 미·북 실무접촉 진행
- 12월 29일 | 북한 외교부, 잠수함 침투사건 사과성명 발표  
- 외교부 대변인은 위임에 의하여 막심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1996년 9월 남조선 강릉해상에 서의 잠수함 사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며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유관측들과 함께 힘쓸 것임.

12월 29일 | 유종하 외무장관, 기자회견에서 북한 사과성명 수락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

12월 29일 | 통일원 대변인, 북한 사과성명관련 성명 발표

- 북한이 뒤늦게나마 사과성명을 통해 시인·사과, 재발방지 노력을 다짐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함.

12월 29일 | 미국, 북한과 식량거래 허가

12월 30일 | 유엔사·북한군간 군정위 비서장급 접촉, 무장공비 시신(유골) 24구 송환

12월 30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4자회담 공동설명회 참가용의 보도

- 양측은 회담에서 경수로 계획 이행문제, 양측간 미해결문제, 4자회담 공동설명회, 잠수함사건 등을 건설적 분위기 속에서 논의(미·북 실무접촉 사실 보도)  
- 미국측은 공화국에 대한 제재완화 추가조치와 식량제공 약속, 우리측은 폐연료 저장재개를 허용할 용의가 있으며, 4자회담 공동설명회를 경청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음.

# 1997년

- 1월 1일 | 북한,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내나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 나가자” 발표
- 1월 1일 | 김영삼 대통령, 신년사에서 올해는 남북관계에서도 화해와 협력의 전기가 오길 진심으로 바란다 고 언급
- 1월 3일 | 김영삼 대통령, 신년 하례식에서 대북 정책 신중접근 표명
  - 남북문제는 새로 시작한다는 생각에서 심각하게 다뤄야할 입장이며 쉽게 감상적으로 판단할 시기는 절대 아님.
- 1월 3일 | 미국, 북과 식량거래 허가
  - 북한의 잠수함 침투 사과표명에 따라 미 행정부가 곡물회사 카길사에 50만톤 규모의 대북 식량거래를 허가함.
- 1월 7일 | 김영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북한에 4자회담 호응 재촉구
  - 올해는 4자회담이 성사되어 한반도에 평화정착의 기틀을 마련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이며, 북한이 4자회담에 호응해 나오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임.
- 1월 8일 | KEDO·북한, 대북 경수로 제공을 위한 서비스 의정서와 부지 의정서에 서명
- 1월 13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
- 1월 15일 | 통일원 대변인, 북한·대만간 핵폐기물매립 협정체결 중지 촉구
  - 북한은 최근 대만으로부터 핵폐기물 6만배럴을 반입·매입키로 하고 추후 그 규모를 20만 배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음. 이같은 행위는 한반도를 핵쓰레기장으로 만들어 환경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며, 핵폐기물 매립 추진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 1월 17일 |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 제임스 레이니 주한 미대사 북한암시장 존재 언급 보도
  - 북한 민간인들은 현재 암시장에서 각종 물건을 활발히 거래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에게는 북한 원화 대신 달러화로 상품값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1월 30일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대만 핵폐기물 북한 이전 비난 성명
- 2월 3일 | 북한 큰물피해대책위원회, 식량문제 관련 담화 발표
  - 국제단체들은 조선인민에 대해 이념,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식량 등 구호품을 보내주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었음. 그러나 남조선 당국자들은 의도적으로 방해해왔으며 북의 거레들의 고통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시대흐름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
- 2월 6일 | 미국 패트릭 휴즈 국방정보국장,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원조식량 군사용 전

**용 언급**

-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된 식량원조가 일부사례에서 군용으로 전용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믿고 있음.

**2월 12일 |** **외무부,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 황장엽 한국망명 발표**

**2월 12일 |** **북한 외교부, 노동당 국제담당비서 황장엽 납치주장**

- 남조선 당국자들이 황장엽 비서를 납치해놓고 그것을 망명이라고 떠든다면 우리는 지금껏 있어보지 못한 중대사건으로 간주하고 응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중국측에도 이와 관련한 해당한 조치를 취해 주리라 기대함.

**2월 13일 |** **북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서명 거부**

**2월 15일 |** **김정일 전처 성혜림의 조카 이한영, 피격**

**2월 17일 |** **북한 외교부, 황장엽 망명 목인 시사**

- 그가 망명을 추구했다면 그것은 변절을 의미하므로 변절자는 갈테면 가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임.

**2월 18일 |** **북한 평양방송, 북·미간 잠정 평화협정 체결 주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최근 조선반도에서 무장출동과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정전상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미사이의 잠정협정의 체결을 제안함.

**2월 19일 |** **미국 니컬러스 번스 국무부 대변인, 북한에 1천만불 원조 발표**

**2월 20일 |** **통일원 대변인, WFP를 통한 대북식량지원 참여 언급**

- 정부는 WFP가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3차 대북지원계획을 발표하고 국제사회의 참여를 요청한 것과 관련,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인도적 차원에서 WFP의 대북지원에 동참할 방침임.

**2월 25일 |** **러시아 이즈베스티야지, 북한 상층부 권력변동 보도**

- 북한권력 서열 상층부 30위권에 든 인사중 3분의 1가량이 교체됐으며, 권력상층부에서 탈락한 인사는 전문관료출신의 개혁파이며 권력서열 30위권에는 군출신 및 현직 군고위 인사가 11명이나 포진하고 있음.

**2월 27일 |** **남북 사회문화협력 사업처리 규정 제정**

**3월 5일 |** **4자회담 공동설명회**

- 우리측: 회담의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문제와 남·북한간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문제를 양대 의제로 하되 필요시 의제를 세분화하여 토의 진행할 것을 제의
- 미국측: 한반도의 평화정착 문제는 미·북한이 별도로 협상할 문제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직접관계 당사자인 남·북한간에 논의되어야 하며 바로 4자회담은 이러한 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
- 북한측: 남·북한 간에는 불가침 합의가 있으므로 미·북한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지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였으나, 현재의 한반도 정세로 미루어 볼 때 공동설명회에 참석한

것은 큰 용단이라고 강조

- 3월 6일 | 국방부, 팀스피리트 훈련 취소 발표
- 3월 7일 | 연락사무소 개설 등 관련 미·북 준고위급회담
- 3월 10일 | 김영삼 대통령, 육사 졸업 및 임관식에서 북한지도부 급변행동 가능성 언급  
- 지금 북한 권력층에는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만일 그들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해 온다면 그들에게는 파멸이 있을 뿐임을 엄중히 경고함.
- 3월 10일 | 합동참모본부, 북한군 5명 군사분계선 1시간 동안 침범 발표
- 3월 11일 | 미국 번스 국무부 대변인,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를 4자회담 진전과 연계 시사  
- 연락사무소 개설합의는 4자회담의 진전 등 광범위한 한반도 구도의 일부가 될 것이며, 미·북관계는 전적으로 남북한관계의 진전여부에 달려있음.
- 3월 13일 | 김영삼 대통령, 해군사관학교 임관식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적극 대비 언급
- 3월 14일 | 중국, 탈북 방조범 처벌 새 형법 공포  
- 사회질서관리방해죄의 하나로 국(변)경관리방해죄를 신설, 탈북자 등 다른사람들의 밀출입 국을 조직하거나 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준 사람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음.
- 3월 17일 | 북한·WFP, 긴급 식량지원을 위한 이해각서 조인
- 3월 19일 | 미국 번스 국무부 대변인, 4자회담 성사 전제로 미국 내 북한 자산 동결 해제 검토 언급  
- 미국내 북한자산은 현재 동결상태에 있으며 우리는 4자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의 응답을 받지 못했음.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응답을 때까지 그러한 사전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임.
- 3월 26일 | 권오기 통일부 총리, 아사히신문 회견에서 대북정책의 근본기조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북한의 완만한 변화 유도라고 언급  
- 한국과 미국이 제안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회담 성사전망은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으며, 장래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아시아판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한체제가 잘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군비를 제외한 모든 지표가 악화되고 있음.
- 3월 31일 | 김석우 통일원 차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확대 허용 발표  
-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이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각계의 참여와 협조 속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하며, 쌀을 포함한 곡물지원과 경제단체를 통한 기업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4월 1일 | 북한·FAO, 농업부문 수해지원 문건 합의
- 4월 5일 | 북한, 미국 카길사와 미국산 밀 3만 톤 반입 합의
- 4월 10일 | 김영삼 대통령, 국제의회연맹연설에서 북한에 4자회담 수용 촉구  
- 한국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과 경수로사업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공존공영을 위해 북한은 성실한 자세로 4자회담에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함.

- 4월 10~14일 | 북한·KEDO간 고위급 전문가 협상
- 4월 11일 | 일본 산케이신문, 북한 노동1호 미사일 10기 동해안 배치 보도
- 4월 12일 | 북한 외교부 대변인, 4자회담 개최와 식량지원은 별개문제 논평
  - 인도주의적인 식량지원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문제를 논의하는 4자회담은 별개이며, 우리의 당면한 식량형편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쌀문제 때문에 4자회담을 하고 안하는 결과를 내리게 되리라고 기대한다면 커다란 오산임. 우리의 식량난은 자연재해와 적대세력들의 경제제재와 봉쇄로 관련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극도의 원한을 품고 있음.
- 4월 14일 | IPU 서울총회, 대만핵 폐기물 북한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
  - 대만의 경우와 같이 방사능 폐기물의 개도국 이전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각국에 촉구함.
- 4월 14일 | 권오기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민간부문의 대북지원은 창구 단일화로 지원 당부
  - 민간차원의 지원은 적십자 창구를 통한 일관성 유지로 필요한 곳에 전달 가능토록 하고, 개별기업의 독자적 움직임은 과열경쟁을 초래 본래 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제단체를 통해 질서있게 이뤄져야 함.
- 4월 16~21일 | 4자회담 공동선명회 후속협의
  - 남측: 4자회담 개최이전에 식량지원은 불가하며 4자회담이 시작되면 논의 하겠다고 함.
  - 북측: 4자회담은 원칙적으로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한·미측에 4자회담의 개최를 전후하여 대규모 식량지원을 강력 요구
- 4월 18일 | 강영훈 한적 총재, 식량지원 및 물류제공 절차협의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 접촉 제의
- 4월 20일 |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 한국 도착
- 4월 24일 | 강영훈 한적 총재, 이성호 북적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에게 남북적십자대표 접촉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요원 접촉 제의
- 4월 28일 | 이성호 북적 위원장 대리, 남북적십자 대표 접촉(5월 3일, 북경) 제의
- 4월 30일 | 강영훈 한적 총재, 북한이 수정 제의한 남북적십자 대표 접촉 북경개최 수용
- 4월 30일 | 한적, 제18차 북한 수재민 구호물자 전달
- 5월 1일 | 미국, 대북쌀지원에 5개항의 조건 명시 법안 마련
  - ① 미국의 대북한 식량지원에 한국의 반대가 없을 것
  - ② 지원식량이 군용으로 전용되지 않을 것
  - ③ 북한 군량미가 식량난 해소에 사용될 것
  - ④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된 식량은 지정 수혜자에게만 제공될 것
  - ⑤ 미국정부와 국제농업기구는 북한 당국이 근본적인 농업개혁정책을 취하도록 촉구할 것
- 5월 2일 | 이성호 북적 위원장 대리,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대표단 명단 통보
- 5월 2일 | KEDO·북한, 채무불이행시 조치의정서 가서명

- 5월 3일 | 북한 외교부, 4자회담 협의 계속 표명**  
 - 4자회담의 기본취지에 비추어, 우리가 내놓은 3+1방식의 회담제안은 4자회담을 성사시켜 결실있는 것으로 되도록 하려는 입장에서 출발한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건설적 방도이며, 어떤 전제조건이나 4자회담을 반대하기 위한 것은 아님.
- 5월 3~5일 | 대북 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제1차 남북적십자대표 접촉(북경)**
- 5월 6일 | 북적 중앙위 대변인, 지원조건 구체적 제시하면 적십자회담 재개용의 언급**  
 - 남측 적십자사가 진심으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그 무엇을 하려 한다면, 남측이 지원물자를 책임적으로 마련한 다음 접촉시일을 알려온다면 어느때든지 마주았을 것임.
- 5월 10일 | 북적 중앙위 대변인, 한국의 대북지원 창구 단일화 비난**  
 - 남조선 대검찰청은 8일 민간단체들이 통일원이나 적십자사를 거치지 않는 지원활동은 불법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하면서 자체와 시정을 요구했음. 남조선 당국은 어제는 민간급 지원을 허용한다고 하고 오늘에 와서는 불법으로 뒤집는 어리석은 책동을 무조건 견어치워야 함.
- 5월 12일 | 유종하 외무장관, 북한의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가입 촉구**
- 5월 16일 | 강영훈 한적 총재, 남북적십자대표 접촉 판문점 또는 서울·평양 개최 제의**
- 5월 17일 | 이성호 북적 위원장 대리, 남북적십자대표 접촉(5월 23일) 수정 제의**
- 5월 20일 | 강영훈 한적 총재, 남북적십자대표 북경 접촉 수락**
- 5월 22일 | IAEA 사무총장, 북한의 핵 관련 정보 미공개 비난**
- 5월 23~26일 | 대북 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제2차 남북적십자대표 접촉(북경)**  
 -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 채택
- 6월 1일 | 북한 나진·선봉지대 경제개혁·개방 조치 시행**  
 - 외화거래 자율화, 외화와 바꾼 돈표 폐지, 환율 조정(달러당 2.16원에서 200원으로 조정,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2.16원으로 유지)
- 6월 1~6일 | 북한·KEDO간 제2차 고위급 전문가 협상**
- 6월 2일 | 강영훈 한적 총재, 이성호 북적 위원장 대리 앞으로 대북지원(지정기탁) 제1차 구호물자 수송 계획 통보**
- 6월 7일 | 이성호 북적 위원장 대리, 대북 구호물품 인수 계획 및 한적 인도요원 인적사항 통보 요청**
- 6월 7일 | 강영훈 한적 총재, 대북지원 제1차 구호물자 인도요원 인적사항 통보**
- 6월 7일 | 김영삼 대통령, 청와대 주요군지휘관 오찬에서 북한의 무력도발대비 안보태세강화 지시**  
 - 북한은 그들의 체제위기가 막바지에 이를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자포자기식 무력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북한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그들의 전쟁도발을 억지해야 할 것임.



- 6월 9일 | 이성호 북적 위원장 대리, 구호물자 지원관련 한국 인도요원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각서 통보
- 6월 9일 | 대북정책공조를 위한 한·미·일 3자 협의회 개최
- 6월 10일 | 일본 산케이 신문, 중국이 북한난민 유입 저지 위해 군동원 보도  
- 중국 인민해방군, 4월에 2개사단, 5월에 1개사단이 북한과의 국경으로 이동
- 6월 11일 | 김영삼 대통령, 농협중앙회 주최 제5차 농정회의에서 북한식량난은 구조적 문제라고 언급  
- 북한의 식량난은 수해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북한사회가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는 한 식량난은 해결되지 않을 것임.
- 6월 12일 | IAEA, 북한의 핵 안전협정 준수 촉구  
- 북한의 핵동결 선언을 IAEA가 아직도 검증할 수 없으며 북한이 핵안전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
- 6월 12일 | 권오기 통일부총리, 북한이탈주민 수용시설 건립 1998년 말까지 완공예정 언급
- 6월 12일 | 한적, 제1차 대북곡물지원 인도지점별 인도·인수 개시
- 6월 16일 | 미국 국무부 대변인, 북한과 미사일회담 정례화 추진 언급
- 6월 23일 | 이성호 북적 위원장 대리, 대북 식량지원 제1차 지정 기탁분 분배결과 통보
- 6월 24일 | 김영삼 대통령, 유엔 환경총회 연설에서 DMZ보존 남북한 협력 제의  
- 한반도의 분단현장인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를 한반도 평화와 환경생명의 모범지역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남북한 협력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함.
- 6월 24일 | KEDO·북한, 5월 2일 가서명 했던 채무불이행시 조치의정서에 서명·발효
- 6월 24일 | 일본 요미우리 신문, 북한의 부분적 시장경제 도입 보도  
- 북한이 최근 나진·선봉 자유경제특구에서 북한 원화를 90분의 1로 평가절하하고 사기업을 허용하는 등의 본격적인 경제개혁조치를 취했음.
- 6월 27일 | 북·중 간 무상원조(인민폐 2천만 엔 상당)에 관한 문건 조인식
- 6월 30일 | 4자회담 차관보급 3자협의  
- 남한, 북한, 미국, 중국 차관보가 참가하는 예비회담 개최(8월 5일, 뉴욕) 결정
- 6월 30일 | 미국 워싱턴 타임스지, 북한의 크루즈미사일 시험발사 보도
- 7월 9일 | 김일성 주석이 출생한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 연호를 사용, 생일인 4월 15일을 태양 절로 제정 발표
- 7월 9일 | 김영삼 대통령, 민주평통 8기 출범식에서 북한에 대남 적화노선 포기 촉구  
- 한반도에서 다시한번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며, 북한은 민족의 장래는 물론 자신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하루 속히 대남 적화노선을 포기해야 할 것임.
- 7월 12일 | 장영훈 한적 총재, 이성호 북적 위원장 대리 앞으로 제3차 남북적십자대표 접촉 제의

- 7월 14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발효·시행
- 7월 14일 | 중국의 대북한 식량 8만 톤 무상원조와 관련한 문건 조인식
- 7월 15일 | 이성호 북적 위원장 대리, 강영훈 한적 총재의 남북적십자대표 접촉 제의에 대한 수락 회신
- 7월 16일 | 북한군 14명이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군사분계선 월경, 한국군과 총격전
- 7월 18일 | 북한 조선인민군 관문점대표부 대변인, DMZ 무장충돌관련 담화 발표
  - 미국측이 우리의 잠정협정체결 제의와 조미군부간 장령급회담 제의를 무시하고 남조선에 비무장지대 관리를 일임하지 않았던들 이번과 같은 극적인 사태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임.
- 7월 22일 | 경수로 지원사업 관련 남북한 우편물교환 시행
- 7월 23-25일 | 대북 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제3차 남북적십자대표 접촉
  - 〈남북적십자사의 제2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 타결
- 7월 24일 | 경수로 사업 관련 남북한 우편물 교환 시행
- 7월 28일 | KEDO, 함남 금호지구에 현장사무소 개설
- 8월 4일 | 대북 경수로 관련 남북간 통신 개통
- 8월 4일 | 정원식 한적 총재, 제2차 대북지원계획 통보
- 8월 5~7일 | 4자회담 제1차 예비회담
  - ① 개최시기: 예비회담 종료 후 6주 이내 ② 외무장관들이 참석. 여타 본회담에는 고위관리  
가 대리 참석 ③ 개최장소: 스위스 제네바 ④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등은 본회담에서  
협의·설치 ⑤ 회담기간: 사전에 협의하여 정함.
- 8월 6일 | 주북 UNICEF 대표부 평양에 개설
- 8월 8일 | 정원식 한적 총재, 제2차 대북지원 첫 번째 수송계획 통보
- 8월 8일 | 이성호 북적 위원장 대리, 대북 구호물자 인수계획 통보
- 8월 10일 | 정부, 경수로 건설 부지인 북한 신포 금호 지구를 국내 사업장으로 규정
- 8월 11일 | 이성호 북적 위원장 대리, 한적의 제1차 대북 식량지원 분배내역 통보
- 8월 12일 | 정원식 한적 총재, 남북적십자회담 26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추진 언급
- 8월 15일 | 김영삼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4대 방향’ 등 제시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4대 방향으로 무력포기, 상호존중, 신뢰구축, 상호협력을 제시하  
고, 대북지원의 기본철학으로 ① 북한 식량난의 구조적 해결위한 실질협력 ② 남북대화를  
통한 협의 추진 ③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지원의지 재천명 ④ 북한당국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
- 8월 16일 | 북한 노동신문, 4자회담이 결실없이 끝난 책임을 미국에 전가
  - 조선반도에 평화가 보장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음. 조·미 사이에 평화협정

체결과 남조선 주둔 미군철수라는 제안을 미국측이 접수해야 함.

- 8월 19일 | **신포 금호 지구 경수로 부지 공사 착공식 개최**
- 8월 21일 | **유엔 인권소위원회, 북한주민 출입국 자유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 찬성 13, 반대 9, 기권 3
- 8월 21일 | **미국, 대북 미사일 제재조치 단행**  
- 북한의 용각산 수출회사와 조선부강무역 등 2개 업체가 미사일 수출활동에 관련 됐음을 적발, 북한정부에 대해 2년간 포괄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음.
- 8월 23일 | **통일원 대변인, 대북 추가지원(1천만 달러 상당의 외국산 옥수수 5만 톤, 국산분유 3백만 톤) 발표**
- 8월 28일 | **북한, 유엔 인권소위원회가 21일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난하는 결의를 채택한 데 대한 항의로 유엔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유엔인권협약)> 탈퇴 선언**  
- 서방국가들이 제49차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음. 이 비합리적인 결의안은 미국과 남조선이 군사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의 내부분쟁에 대한 도전과 간섭임. 이에 공화국 외교부장은 유엔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발송하여, 8월 23일부로 국제협약에서 탈퇴하기로 통지하였음.
- 8월 28일 |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 북한의 미사일 수출 중단 대가 요구 보도**  
- 북한은 지난해 4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차 미·북 미사일회담에서 스커드 미사일과 관련 장비의 수출 중단 조건으로 그에 상당하는 외화나 생필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음. 이러한 요구는 물물교환식 북한 대외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정부는 터무니없는 요구로 일축했음.
- 9월 3일 | **권오기 통일부총리, 서울클럽 주최 초청강연에서 북한지원 사업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 확대에 기여 언급**  
- 경수로 지원사업은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할 수 있게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남북한의 소통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임. 올해는 만주지방이 가뭄으로 내년 이곳의 옥수수를 싼값에 사 북한을 돕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9월 3일 |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지, 북한 산업 대다수 가동중단상태 보도**  
- 평양의 외국관계자들은 북한 사업의 90%가 가동 중단 상태에 빠져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대부분 공장들이 고철더미의 폐허로 전락할 것으로 보고 있음.
- 9월 8일 | **일본 산케이 신문, 북한의 최근 경제실태 보도**  
- 식량위기가 계속 되고 있는 북한에서 쌀 등 곡물을 매매하는 암시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지역 및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북한정부는 암시장에 대한 통제를 완화했으며, 원시적 시장경제가 생겨나고 있고 현재의 산업활동은 80년대의 20~30%까지 떨어졌음.
- 9월 10일 | **미국 국적 민항기 최초로 북한 도착, 북한에 전달할 2천30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과 구급품을 전달**
- 9월 18~19일 | **4사회담 제2차 예비회담, 본회담 의제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절충을 벌였으나 결렬**

- 9월 19일** | 스탠리 로스 미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미국의 대북한 기본정책은 연착륙이라고 언급  
- 미국의 대북한 기본정책은 연착륙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구현하는 것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이나 KEDO를 통한 경수로 건설 등 미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북한 정책은 이러한 기본정책에 따른 것임.
- 9월 20일** | EU, KEDO 정식 가입
- 9월 23일** | 김영삼 대통령, 4자회담은 실질적이어야 한다고 언명  
- 한반도 4자회담은 회담을 위한 회담이 돼서는 안되며 실질적인 회담이 되어야 함. 조기에 무엇인가 이루겠다는 식으로 회담에 임해서는 안됨.
- 9월 24-26일** | KEDO 연례총회 개최  
- KEDO집행이사회, 북한 위기사태시 파견인원 신변안전 결의
- 10월 1일** | 김영삼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고수 경계 촉구  
- 심각한 식량난과 주민들의 연이은 탈북, 망명은 북한체제의 모순이 극한에 달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북한은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언제 어떠한 모험을 저지르지 모르므로, 우리가 진정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함.
- 10월 5일** | 김정일 사진계재 노동신문 훼손 관련, 경수로공사 일시 중단사건 발생
- 10월 6일** | 장선섭 경수로기획단장, 대북 경수로 공사 재개 언급  
- 북한당국은 5일 신포 사무소에서 KEDO와 가진 회의에서 KEDO측에서 우리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호응할 것을 기대하면서 공사를 정상화 하겠다고 통보해왔음.
- 10월 7~9일** | 남북한, 대구-평양 관제소간 직통전화 설치 합의
- 10월 7~10일** | 남북한 비행정보구역(FIR) 통신·통과 항공노선 개설을 위한 남북한 당사자 회의 개최(방콕)
- 10월 8일** |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공식 추대
- 10월 14일** | 유종하 외무장관, 국회 통일외무위 국정감사에서 경수로 의정서 위반시 추가 비용 북한 부담 통보  
- 향후 북한이 KEDO와 체결한 의정서 등을 위반, 사업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전적으로 북한이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허종 외교부순회대사에게 전달함.
- 10월 17일** | 국방부 대변인, 대성동 주민 2명 남북사건 발표
- 10월 20일** | 김영삼 대통령, 북한 김정일 당 총비서 승계 계기 긍정적 변화 기대  
-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도해 나가야 할 과제임. 4자회담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회담이 열린다면 북한의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할 것임. 경수로 지원사업의 추진은 남북교류와 신뢰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임. 김정일 당 총비서직의 승계를 계기로 북한이 화해와 협력의 세계사적 흐름에 합류하고 대남자세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함.
- 10월 21일** | 남북 대성동 주민 2명, 판문점 통해 귀환

- 10월 27일 | **한적 총재, 남북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제의**
- 10월 29일 | **미·중 정상회담, 북한 4자회담 참여 촉구**  
- 오늘 회담에서 북한에 한국과의 4자회담에 참여하도록 촉구하기로 합의했음.
- 10월 30일 | **유엔 인권위, 북한 국제인권협약 탈퇴불가 성명**  
- 협약에 규정된 기본인권은 협약당사국 주민 모두에게 생래적으로 부여되는 것임. 따라서 국제법리상 이 협약에 서명, 수용, 의무승계한 국가는 탈퇴할 수 없음.
- 11월 3일 | **북한,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대표회담 거부**
- 11월 4일 | **북한 외교부, '4자회담 참가는 우리 자신이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  
- 미·중의 북한 4자회담 참가 촉구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 4자회담이 개최되지 않는 것은 미국이 회담의 의제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우려감을 해소시켜주지 못하는 데 있음. 이와 같은 여론은 좋게 조성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일 뿐임. 4자회담 참가여부는 자신의 결심에 따라 결정할 문제임.
- 11월 5일 | **DHL 평양사무소 개설**
- 11월 7일 | **북한, 제4차 남북적십자대표 접촉 제의**
- 11월 8일 | **정원식 한적 총재, 남북이산가족면회소 설치 제의**
- 11월 8일 | **정원식 한적 총재, 북한에 구호물자에 대한 분배결과 확인보장 요청**  
- 2차 지원 전체의 정확한 분배결과를 통보하고 국적 구호대상 지역 이외의 우리측 구호물자 전달지역에 대해 분배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제4차 적십자 대표접촉은 2차분 지원에 대한 북측의 분배결과를 통보받고 난후 우리측 입장 전달
- 11월 8~15일 | **북송 일본인 처 고향방문단 제1진 15명 일본방문**
- 11월 10일 | **4자회담을 위한 남북한과 미국·중국 간 4자 실무접촉**  
- 정부는 추가 예비회담 없이 본회담을 개최하지는 입장. 북한은 3차 예비회담을 열어 의제 문제 등을 협의할 것을 요구
- 11월 11일 | **정부, 통일장관회의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지속 방침**  
-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은 지키되, 북한측이 분배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함.
- 11월 12일 | **유엔, 북한의 핵관련 IAEA보고서 채택 결의안 통과**  
- 유엔총회는 결의에서 북한의 안전조치 불이행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에 대해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IAEA와 적극 협력하고 검증과 관련되는 조치를 할 것을 촉구
- 11월 13~14일 | **남·북·중, 속초·나진·선봉 카페리 항로 개설 실무 협의 개최(북경)**
- 11월 17일 | **대북 수해복구 장비 북송**
- 11월 19일 | **남북한 항로 관제소 간 직통전화 개통**

11월 20일 | 안기부, 북한 직파 부부간첩 검거(10월 27일) 수사결과 발표

11월 21일 | 통일원, 북한의 납치·테러사건 관련 대북성명

- 안기부의 부부간첩단 수사결과, 북한당국이 지난 1978년 8월 김영남, 이명우, 홍건표 등 당시 고교생인 우리국민을 납치한데 이어, 금년 2월에는 이한영씨에 대해 암살테러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확인 됨. 정부는 김영남씨 등 3명을 포함한 모든 납북억류자들을 송환할 것과 테러행위, 체제전복기도 중단을 촉구함.

11월 21~22일 | 4자회담 제3차 예비회담

〈합의사항〉

- 4자회담 본회담 개최: 1997년 12월 9일 스위스 제네바
- 의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제반 문제
- 대표단 구성: 세부사항은 본회담 개시전 발표

11월 25일 | 대북 경수로 공사비 51억 8천만 달러 확정

11월 26일 | 미·북간 준고위급 회담 개최

- 양국은 양자 주요 현안인 대북경제 제재 완화, 연락사무소 개설, 미사일 회담 재개, 한국전 실종미군 유해송환 등을 논의

12월 3일 | 지미 카터 전미국 대통령, UPI통신 회견에서 미국에 대북제재 해제 촉구

-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하며, 한국·일본 그리고 인접국들이 아무 조건없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도록 협력해야 함. 이렇게 되지 못할 경우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는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

12월 8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금호 지구 내 남한 경수로 건설자 부재자 투표 불허 담화

- 남조선 인원들의 부재자 투표는 금호지구에서의 정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우리와 KEDO사이의 협정자제를 위반하는 행위임. 우리는 남조선이 부재자 투표행위로 공화국 북반부를 저들의 영토로 명기한 헌법을 합법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보고, 추후도 이를 용납지 않을 것이며 합의사항에 배치되게 행동한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

12월 8일 | 정원식 한적 총재, 남북적십자대표 접촉(12월 22일, 북경) 수정 제의

12월 8일 |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북한 핵 폐 연료봉 내년 초 봉인 완료예정 발표

12월 9~10일 | 제1차 4자회담 본 회담

〈4자회담 제1차 본회담 관련 「4자회담 의장성명」〉

- ① 의장국에 의한 추천결과 차기 회의 의장국을 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합중국 순서로 함.
- ② 차기 본회담은 3월 16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
- ③ 1차 4자회담 의장국은 2차 4자회담 이전에 이 회담 준비를 위해 2월 중순 북경에서 특별 소위원회를 소집
- ④ 특별소위원회에서는 2차 4자회담에서 논의할 사안들을 검토하여 이를 본회담에서 심의하

도록 건의. 4자 대표단은 모두 금번 회의를 위한 스위스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함.

12월 11일 | 이성호 북적 위원장 대리, 제4차 북경 남북적십자대표 접촉(12월 22일) 동의

12월 11일 | 통일원 대변인 경수로 근로자 부채지투표 무산 발표

- KEDO인원은 소속국가의 국내법 규정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북한이 이를 방해하는 것은 KEDO와의 합의사항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함. 정부는 북한이 이들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부당한 행위로 경수로사업에 난관을 조성하지 않기를 기대함.

12월 19일 | 대만 핵폐기물 북한 이전계약 취소(대만 연합보)

12월 19일 |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 당선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제의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4대국 미·일·중·러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었으며, 4자회담을 앞으로도 성과있게 추진하겠음. KEDO에 의한 북한 경수로 지원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임. 남북한의 직접대화를 통해서 우리문제는 우리민족끼리 해결하는 길을 모색하겠으며, 여기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것임. 북한에 대해 남북합의서에 기초한 대화의 재개를 제안함. 현재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며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임. 통일은 그 이후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할 문제임.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을 재개하고 필요하다면 북한의 김정일 총비서와 정상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함.

12월 22~24일 | 대북 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제4차 남북적십자대표 접촉

# 1998년

- 1월 1일 | 북한,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새해의 총진군을 다그치자” 발표
- 1월 1일 |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신년사 발표
  - 튼튼한 안보는 정치·경제, 사회발전의 기초가 되고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가 됨. 남북관계의 개선은 91년 12월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따라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 그리고 교류·협력 등을 실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실행해 나가겠음.
- 1월 5일 |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한·미 연합사령부 방문시 한·미 안보협력 최우선 정책 피력
  - 미군의 주둔은 한반도를 공산주의 위협에서 지키기 위한 것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통일 후에도 계속돼야 함. 나는 통수권을 인수한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 한미양국의 긴밀한 안보협력을 최우선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
- 1월 7일 | 이성호 북적 위원장 대리, 정원식 한적 총재 앞으로 보낸 방송편지를 통해 비전향장기수 송환 요구
- 1월 12일 |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미셸 강드쉬 IMF 총재 접견에서 남북대화 신중접근 언급
  - 올해는 경제위기 극복, 국제신인도 제고, 행정개혁 등 난제가 산적해 있어 상황에 따라 남북문제를 신중하게 풀어나갈 것임. 북한은 우리가 IMF체제에 처한 것에 고무돼 있어 3,4월경 노동자 파업을 선동하며 당분간 우리를 지켜볼 것임. 그러나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며,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경제 협력에 나설 경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임. 북한과 정치적인 협력은 안되고 있으나 철저한 정경분리 원칙하의 경제협력을 위해 노력하겠음.
- 1월 17일 | 북한, KBS의 <진달래꽃 필 때까지> 방영 보복 경고
- 1월 17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주한 미8군사령부를 야전군사령부로 개편 비난
- 1월 18일 | 미국 뉴욕타임스지, 미국방정보국 비밀보고서 인용 북한의 지하 핵시설 건설 가능성 제기
- 1월 18일 |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칼 레빈 미상원의원 접견에서 북한 정세 언급
  - 새 정부는 4자회담을 성실하게 진행시키고, 대북경수로 사업도 합의대로 잘 지켜 나갈 것임. 미국의 대북제재는 남북대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제재보다는 교류가 증진되기를 바람. 나는 북한에 3가지 메시지를 보내며, ① 어떤 군사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도 군사위협을 않을 것임. ② 우리는 북한을 전복하거나 흡수통일할 생각이 없음 ③ 정부간 협력 이전이라도 정경분리 원칙하에 경제분야에서라도 화해, 협력이 이뤄지길 바라면서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놓을 것이지만, 강요하지 않을 것 등임.
- 1월 20~24일 | KEDO·북한, 고위전문가 회의 개최



- 1월 22일 |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일 아사히신문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점진적 개선 언급**  
- 지금은 통일보다는 평화와 공존을 정착시킬 단계이며, 중국과 대만처럼 쌍방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교류를 확대하는 일이 중요함. 동북아시아도 남북한,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이 유럽안보회의 같은 집단안보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음. 북한정권을 전복시켜 흡수통일을 하려한다는 인상을 주지도 않겠지만 북한의 무력도발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
- 1월 23일 |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찰스 카트만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면담에서 대북 식량지원 신중 검토 언급**  
- 대북식량 지원을 늘리는 문제는 외무부의 판단을 받아 신중히 검토하겠음. 찰스 카트만 동아태담당부차관보는 세계식량 계획의 대북식량지원에 한국의 분담분을 늘려달라고 요청하였음.
- 2월 5일 | 미국, 98년분 대북 식량지원 20만 톤 지원 발표**
- 2월 5일 | KEDO, 북한 실폐지구 해양환경영향 조사 실시**
- 2월 5~6일 | 경수로 재원분담 관련 KEDO집행이사회 개최**
- 2월 6일 | 손성필 주러 북한 대사, 새정부 취임후 대북정책 변화 촉구**  
-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뒤 휴전선 내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안기부 해산, 국가보안법 개정 등 한국쪽의 태도변화를 기대하고 있음. 김당선자가 정식으로 취임하는 25일 이후부터 한국 행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것임.
- 2월 11일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 포스트지, 북한 아사자 2백만 추정 보도**
- 2월 11일 |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 방중 수행기자 간담회에서 새정부,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위한 6개국 선언 추진 언급**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북한 당사자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개국이 함께 참여하는 6개국 공동선언을 중국 측에 제안할 것임. 74년 유럽 35개국이 헬싱키선언을 한 뒤 독일의 통일로 이어졌으며, 김대중 차기대통령도 이런 구상을 갖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중국을 방문하여 직접 얘기할 것임.
- 2월 12일 | 정권인수위, 새정부 추진 100대 과제 통일분야 발표**  
-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기반 마련  
- 정경분리 원칙으로 남북경제협력 적극 추진  
-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 추진  
- 이산가족 재회 및 편지왕래의 조속한 실현  
- 남북한 주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대북 경수로사업의 원활한 추진  
-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통일정책 추진
- 2월 12일 | 유엔, 4억 달러 규모의 제4차 대북지원 계획 발표**

- 2월 15일 | 북한 사회안전부, 이산가족 주소 안내소 설치 발표
- 2월 17일 | 인공위성(ASIASAT II) 이용 남북한간 관제통신망 개통(1회선)
- 2월 19일 | 이성호 북적 위원장 대리, 남한 정당 단체들에게 보내는 편지 전달관련 연락관 접촉 제의
- 2월 19일 | 정원식 한적 총재, 대북서한 발송 북한의 편지접수 수락
- 2월 20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6개국 공동선언 추진은 망국적 청탁외교라고 비난  
- 동북아의 현 실정은 헬싱키 선언이 나온 1975년의 구라파와 달리,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국가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가하면 법률적인 교전상태마저 종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동북아의 현실임. 이런 관에서 국가지도자들이 모여 공동선언까지 내온다는 것은 기초가 없이 사상누각을 지어보려는 것과 같음. 조선반도의 불안은 주변국의 선언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무력주둔과 군사적 위협때문임.
- 2월 25일 |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에서 대북 3원칙을 제시하고 정상회담 용의 표명,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특사교환을 제의  
<대북 3원칙>  
①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음.  
② 우리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음.  
③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북한이 미국, 일본 등 우리의 우방국가나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을 추진해도 이를 지원할 용의가 있음. 새정부는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수로 건설과 관련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며, 식량도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할 것임.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만나고 서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북한당국에 협조를 부탁하며, 이점에 관해서 최근 북한이 긍정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으며, 문화와 학술의 교류, 정경분리에 입각한 경제교류도 확대되기를 희망함. 우선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특사교환을 제의하며, 북한이 원한다면 정상회담에도 응할 용의가 있음을 밝힘.
- 3월 1일 | 김대중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남북특사교환 재촉구, 이산가족 생사확인, 상봉실현 촉구  
- 남북한은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일도 삼가야 함. 평화공존, 평화교류 그리고 장차의 평화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우리는 어떤 수준의 대화에도 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음. 우리는 4자회담을 꼭 성사시켜야 하며 남북합의서에 합의된 화해·협력·불가침의 관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된 대로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함.
- 3월 2일 | 김대중 대통령, 학군사관 후보생 임관식 치사에서 완벽한 안보태세 확립 주장  
- 위기상황을 맞을수록 우리는 한치의 허점도 없는 완벽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북한이 어떠한 오판도 할 수 없도록 해야 함. 우리는 지금 남북관계에서 이산가족 상봉, 경제·문화분야 교류협력, 튼튼한 평화체제 확립을 위한 새로운 모색을 추구해야 함.

- 3월 2일 | 북한 큰물피해대책위원회 대변인, 국제사회에 식량지원 호소
- 3월 3일 | 대한항공 화물기 첫 북한영공 통과
- 3월 4일 | 김대중 대통령, 조선일보 창간 78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대북식량지원 남북대화 전제로 신중 검토 언급
  - 대북식량지원 문제관련, 정부차원의 지원은 정부간 대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민간차원에서는 적십자사나 기타 단체들이 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각국 정부가 각출해서 줄수도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 식량은 우리도 부족하지만 북한과 합리적인 방안이 해결되면, 국민여론을 살펴가면서 지원문제를 절충해 나가겠음. 그러나 우선 북한식량 사정을 살펴야 하고, 지원 식량이 민간에게 확실히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어야 함.
- 3월 9일 | 김대중 대통령, 일본 요미우리 신문 회견에서 북·일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도록 유엔 대처 언급
  -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할 수 있도록 일본 및 미국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임. 앞으로 대북 경험에서 정부 차원의 제한을 대폭줄이고 민간 차원의 협력도 증진될 수 있도록 하고, 북측이 조금이라도 견디고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임. 이산가족문제는 뒤로 돌릴 수 없는 중대사안이며, 아직 북한측과 충분한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의 진의를 파악해 가면서 인도적 입장에서 해결을 추진할 것임.
- 3월 9일 | 정부, WFP를 통한 옥수수기준 5만톤 식량지원 표명
- 3월 10일 | 정원식 한적 총재, 대북지원 관련 제5차 대표접촉 제의
- 3월 11일 | 이성호 북적 위원장 대리, 제5차 남북적십자대표 접촉 개최 제의 관련 수정 제의, 민간단체의 기탁 비료(800톤) 지원계획 접수 수락
- 3월 13일 | 정원식 한적 총재, 제5차 남북적십자대표 접촉 수락 통보
- 3월 13일 | 합참, 북한군 군사분계선 월경 발표
- 3월 16일 | 김대중 대통령, 제54기 육사졸업식에서 한·미 안보체제 구축 필요 언급
  - 한반도와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과 평화유지에 결정적인 요인임.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한·미 안보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주변 강대국들과 한반도의 안정·평화를 위한 협력을 적극 도모해 나가야 함.
- 3월 16일 | IAEA, 북한 핵사찰 협조 거부 발표
  - 북한이 북·미 제네바 핵합의의 이행 지연을 이유로 IAEA의 핵사찰을 핵합의 이행진전과 연계시키고 있음.
- 3월 16-21일 | 제2차 4자회담 본회담(제네바)
  - 서로간의 입장만 밝히고 차기회담 일자도 정하지 못한 채 제2차 본회담 회의진행 과정을 밝히는 <4자회담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회담 종료

- 3월 18일 | 정부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조치 발표**  
- 대북지원관련 방북, 이벤트성 모금행사, 언론·기업의 협찬·협력사업 방식의 대북지원 허용
- 3월 19-20일 | 경수로 재원분담관련 KEDO집행이사회 개최**
- 3월 23일 | 북한 외교부, 4차회담 제2차 본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것은 미국의 책임이라고 주장**  
- 우리는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국가관계를 정상화하며 조미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 다른 협상참가자들과 똑같은 지위에서 회담에 참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음.
- 3월 25-27일 | 대북 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제5차 남북적십자대표 접촉(북경)**  
- 〈남북적십자간 제3차 구호물자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 채택
- 3월 28-30일 | 남북당국대표회담을 위한 비공개 접촉(북경)**
- 4월 2일 | 북한 평양방송, 새정부에 대북정책 전환 촉구**  
- 과거정권의 무분별한 전쟁책동은 북남대화들을 파탄시키고 남북합의서까지 휴지장으로 만들었음. 남조선에서 정권은 바뀌어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연이은 군사연습으로 총포성이 그칠 날이 없으니 남조선 당국자들의 통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4월 4일 | 이성호 북적 위원장 대리, 비료지원요청 관련 남북당국대표회담 제의**
- 4월 6일 | 정원식 한적 총재, 북한의 남북당국대표회담 개최 제의 수락 및 수정 제의**
- 4월 7일 | 이성호 북적 위원장 대리, 남북당국대표회담 개최 장소 베이징 고집**
- 4월 8일 | 정원식 한적 총재, 남북당국대표회담 베이징 개최 동의 및 대표단 명단 통보**
- 4월 10일 | 이성호 북적 위원장 대리, 남북당국대표회담 대표단 명단 통보**
- 4월 10일 | 장인덕 통일부 장관, 남북경제협력 기업의 자율성 최대한 존중 언급**  
- 정부는 앞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활성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것임. 승인기준 완화, 절차간소화, 대북투자제한 폐지,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방안 검토. 남북관계에 있어 경제협력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경제인들이 북한에게 새정부 대북정책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고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관계를 열어가는 향도가 되어주기를 당부함.
- 4월 11-17일 | 남북당국대표회담 개최(북경)**  
- 남북당국간 회담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지만 남측은 남북당국대표 회담을 통해 새정부의 대북정책 기초와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틀인 「상호주의 원칙」을 북한측에 분명히 인식시킴.
- 4월 13일 | 김대중 대통령, 전국검사장 오찬간담회에서 남북대화 비선조직 활용 불가 언급**  
- 지난해 12월 대선후 북한측이 은밀한 거래를 위해 개인적인 접촉을 희망한다는 신호를 보내왔으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음. 북측 제의를 거절한 이유는 전임자들의 대북 비밀거래가 생산적이지 않았기 때문임. 북한과의 대화에서 비선조직

을 활용하는 일은 없을 것임. 대북문제에 있어 강요도 구걸도 하지 않고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나아가야 할 것임.

**4월 18일 | 정세현 남북당국대표회담 수석대표, 회담 종결 기자회견**

- 우리 새정부는 변화된 정세에 발맞추어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 우리측이 제시한 최소한의 조치들은 바로 북측에 대한 비료지원이 남북관계 발전의 밑거름으로 되게 하기위한 총정에서 비롯된 것임.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문제 등에 의견집근을 본 것은 적지 않은 성과임. 우리는 대화를 통해 북한과 협력할 자세가 되어 있으나, 북측이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강요할 생각은 없음. 남북대화의 문은 열려있고 빠른 시일내에 제기된 사안을 타결하기 위해 북측이 전향적 자세로 나오기를 기대함.

**4월 18일 | 북한 전금철 남북당국대표회담 단장, 회담결과 기자회견**

- 향후 북남관계는 역풍이 불고, 후퇴하게 될 것임. 새정부의 대북정책은 전 정권보다 더 대결적이고 더 보수적임. 반북대결적이고 강경보수 장관이 이끄는 통일부와 함께 일하기 어려우며, 비료 지원 날짜에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시기를 맞추자는 남측주장은 가혹한 정치적 부대조건을 다는 것이고, 우리를 우롱하고 굴욕을 요구하는 것임. 자주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비료를 구걸할 생각은 없음.

**4월 23일 | 대구/평양 비행정보구역(FIR) 통과 항로 이용개시**

**4월 23일 | 경수로 재원분담관련 KEDO집행이사회 개최**

**4월 23일 | 김대중 대통령, 미국 외교협의회 방한단 오찬접견에서 한·미 합작 대북투자 바람직 언급**

- 한·미 기업이 합작으로 대북투자를 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고 보며, 북한을 대화에 응하게 하려면 미국 등 국제적 협력이 필요함. 남북통일 이후에도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위해 주한 미군은 반드시 필요하며, 주한미군 문제는 4차회담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님.

**4월 29일 | 김대중 대통령, 방한 일본언론정치부장단 접견에서 남북회담 적극 수용 및 상호주의 원칙 천명**

- 북한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남북회담에 응할 것이며, 북한이 이산가족문제에 최소한의 성의만 보이면 북한이 원하는 비료를 보낼 용의가 있음.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른 남북간의 거래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간섭하지 않을 것이나, 국민세금을 기초로한 예산이 필요한 남북거래(비료지원 등)에서는 반드시 상호주의를 견지할 것임.

**4월 29일 | 북한,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 5대원칙'을 공개**

- 민족자주, 애국애족 단결, 남북관계 개선, 외세지배 및 반통일세력 반대, 민족간 접촉·대화·연대

**4월 30일 |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발표·시행**

- 대기업·경제단체의 수시 방북제도, 확대 승인을 요하는 품목 축소 및 생산설비 반출제한 완화, 투자업종·규모제한의 완화

**5월 2~12일 | 리틀엔젤스 예술단, 평양 공연**

- 5월 5~9일 | KEDO·북한, 경수로관련 고위전문가 회의 개최**
- 5월 6일 | 김대중 대통령, 군 주요지휘관 간담회에서 북한은 곧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  
- 북한은 현상황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다시 남북대화에 나설 것임. 북한은 지난 북경회담에서 우리측의 상호주의에 동의할 듯 하다가 내부사정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북한은 결국 변화할 것이며, 미국도 그렇게 보고 있음.
- 5월 8일 | KEDO, 북한 실포지구 해양환경영향 조사 실시**
- 5월 10일 | 김대중 대통령, 국민과의 TV대화에서 대북 3원칙 재강조, 대북 교류협력 3원칙 제시**  
(대북 교류협력 3원칙)  
① 인도적 차원의 무상 지원  
②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민간기업 교류협력 실현  
③ 정부간 교류 상호주의 적용
- 5월 19일 | 김대중 대통령, 통일고문 위촉장 수여식에서 남북관계 점진적 변화 가능성 언급**  
- 남북관계에 새로운 조짐이 있다고 느끼며, 대북접촉에서 비밀접촉·사적통로로는 하지 않을 것임. 필요하면 비공개접촉을 하더라도 정부기구를 가동할 것임. 이산가족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없음.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면회소 설치, 나진·선봉 또는 중국에서의 상봉과 서신교환방법도 가능함.
- 5월 27일 | 김대중 대통령, 이북5도민 초청 오찬에서 남북이산가족 상봉 적극 실현 언급**  
-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편의적인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이므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문제를 실현하겠음.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의 방북은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것으로, 남북관계 변화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믿으며, 성실한 자세로 임하면 머지않아 북한의 입장을 변화시킬 것임.
- 5월 29일 | IAEA 대변인, 북한의 핵개발 능력보유 언급**  
- IAEA는 북한을 포함한 이란·이라크 등 6개국가는 이미 핵개발을 위한 과학 기술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북한은 자신들이 스스로 밝힌 것보다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한 것으로 미국은 믿고 있음.
- 5월 31일 | 김대중 대통령, 비즈니스 워크 인터뷰에서 김정일 주석직 승계후 남북대화에 긍정적 작용 기대 언급**  
- 김정일이 북한 국가주석으로 확정되면 북한체제를 안정시키고 남북대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우리는 매우 합리적이고 진지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북한은 더 이상 우리를 의심할 필요가 없음.
- 6월 1일 | 김대중 대통령, 코리아 타임스 방미 기념회견에서 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 추진 언급**  
- 기존의 한미 양자간 안보체제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그 기반 위에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봄.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한미안보체제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 전체의 안정과 힘의 균형에 긴요한 역할을 할 것임.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체제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6월 4일 | UNDP·북한간, 일부 시장경제 도입 합의**

- 북한이 식량난 극복방안의 하나로 개별 농가의 농산물 판매 및 농사·가축사육에 필요한 소액대출 제도를 허용하는 등 일부 자유시장 경제 도입

**6월 6일 | 김대중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북정책 추진 미국과 협력 필요성 언급**

- 향후 북한에 대해서는 햇볕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일관성있게 생각함. 분명한 것은 한·미간 협력에 의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밀착·협력하는 것이 필요함.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는 없었지만 북경 남북회담과 정주영씨가 북한에 들어가는 문제, 관문점 장성급회의 등 약간의 희망적인 부분도 있음. 우리가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고 한·미 공조체제 속에 북한에 대해 공존번영하는 길을 추구할 때 결국 북한도 반드시 바뀔 것임.

**6월 13일 | 김대중 대통령, LA Times 회견에서 언제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상회담 용의 표명**

- 북한의 김정일과 언제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음.

**6월 13일 | 통일부, 대북 장비 반출 자유화 및 북 예술품 반입 규제 완화 발표**

**6월 14일 | 김대중 대통령, 미국방문 귀국 기자회견에서 남북한 교류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대북한 정책에 대한 한·미 양국간의 불협화음을 해소했으며, 처음으로 한국 주도권이 공인받고 선포됐음. 장성급회담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방북으로 남북한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함. 대북한 3대원칙인 상호불가침, 흡수통일 지양, 평화교류에 입각해 정경분리 원칙에 의해서 경제교류를 지속해 나갈 것임.

**6월 16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미사일 개발 및 수출 필요성 강조**

- 미국의 미사일이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 이상 그에 맞먹는 미사일을 개발하여 배치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 따라서 앞으로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실험도 전개해 나갈 것임. 미국이 미사일수출을 막으려면, 우리에게 대한 경제제재를 해소하고 수출중지로 인한 보상을 해야 함.

**6월 16~23일 |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관문점 경유 한우 500두 대북지원 방북**

**6월 19일 | 김대중 대통령, 국가유공단체 회원 간담회에서 이산가족 서신왕래되면 북한에 비료 20만톤 지원 언급**

- 우선 남북이산가족간의 서신왕래만이라도 가능해지면 북한측에 비료 20만톤을 지원하겠음. 이산가족 상봉은 서울이건 평양이건 아니면 베이징이건 북한이 원하는 장소는 어디든지 좋음.

**6월 22일 | 장인덕 통일부 장관, 8.15경축행사 관련 실무접촉 제의**

**6월 22일 | 북한 잠수정 1척, 속초 동쪽 11.5마일 영해상에서 그물에 걸린 채 발견**

**6월 22일 | 북한·현대그룹, <경제협력합의서> 채택**

**6월 23일 | 유엔사·북한간 장군급 회담 개최**

**6월 23일 | 북한,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서 발견된 잠수정은 훈련 중 조난된 것이라고 보도**

- 6월 24일 | **김대중 대통령, 군부대 방문해서 북 잠수정 사건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 불변 언급**  
 - 북한 잠수정사건과 관련,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한 대북 햇볕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나 이를 위해서 강력한 국방태세와 긴밀한 한·미 안보공조체제가 뒷받침돼야 함. 햇볕정책은 북한의 어떠한 군사도발도 불용, 단호히 대응하고 제재할 것을 전제로 한 것임.
- 6월 26일 | **국방부 대변인, 북한 잠수정 침투관련 성명 발표**  
 - 북한 잠수정을 예인하여 조사한 결과, 북한의 행위는 우리의 영해를 침범하고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 침투작전 행위로 밝혀졌음. 우리는 북한측이 금번 사건이 북한당국에 의해 저질러진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즉시 시인하고 책임있고 납득할만한 해명과 더불어 관련자 처벌 등 재발방지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있기를 엄중히 촉구함.
- 6월 27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잠수정 침투관련 잠수정과 승조원들의 시신송환을 요구하는 성명 발표**  
 - 남조선 당국이 어떤 인도주의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침투를 우겨대며 반목과 대결을 고취하는 것은 정세를 긴장시키는 엄중한 도발임.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지해야 하며 희생된 승조원들의 시체와 잠수정을 당장 돌려보내야 함.
- 6월 28일 | **통일부 대변인, 잠수정 침투관련 북한의 성명에 대한 논평 발표**  
 - 북한이 잠수정 침투사실을 시인·해명하고, 재발방지 약속 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함.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억지주장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의 남북관계개선노력에 성의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함.
- 6월 28-29일 | **경수로 재원분담관련 KEDO집행이사회 개최(브릿셀)**
- 6월 29일 | **천용택 국방부 장관, 북한 잠수정 침투관련 담화에서 “이번 사건은 명백한 영해침범이며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 침투작전행위”라고 주장**
- 6월 30일 | **유엔사-북한군간의 장성급회담(2차)에서 잠수함 침투사건 논의**
- 7월 2일 | **유엔사-북한군간 대령급회담, 북한 잠수정 승조원 사체송환 문제 논의**
- 7월 3일 | **북한 잠수정 승무원 사체(9구) 송환**
- 7월 6일 |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 북한의 핵재처리 시설 보수공사 재개 보도**  
 - 북한은 최근 미·북 핵협정 체결 당시 문을 닫은 플루토늄 분리공장의 정비작업을 재개했음.
- 7월 9일 | **자유의 집 준공**
- 7월 12일 | **북한 무장간첩 시신과 침투용 수중잠행추진기 1대, 강원도 동해시 묵포동 해변가에서 발견**
- 7월 13일 | **이종찬 국가안전기획부장, 북한 무장간첩 사건 불구 햇볕정책 계속 추진 언급**  
 - 정부는 북한의 잇단 침투행위에도 불구, 중장기적 관점에서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임. 북한은 강경세력을 중심으로 햇볕정책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김정일 주석직 승계에 따른 충성선물 마련을 위해 긴장조성 책동을 계속 자행할 가능성이 있음.
- 7월 14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무장간첩 침투사건 북과 무관 주장**



- 무장간첩 침투니 뭐니 하는 것은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으며 따라서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님. 남조선의 극우강경 보수세력이 대세를 반복대결로 돌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꾸민 서툰 모략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가지게 됨.

**7월 15일 | 국가안전보장회의, 의결서 통해 잠수정 및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대한 시인, 사과, 재발 방지 등 촉구**

-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각종 대남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특히 최근 연이은 침투 도발행위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임을 시인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등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정부는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판문점 장성급회담, 국제기구 및 우방국들과의 협조 등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북한당국의 성의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며, 북한이 대남도발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이에 단호히 대처할 것임.

**7월 16일 | 유엔사-북한 판문점 장성급회담 개최(3차), 무장간첩 침투 사건 논의**

**7월 21일 | 농림부, 탈지분유(781톤) 대북지원 발표**

**7월 22일 | 북한 노동신문, 정경분리원칙 비난 논평**

- 남조선은 정경분리란 간판밑에서 초보적인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이나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도 정치화하여 그 실현을 가로막고 있음. 최근 있지도 않은 그 무슨 사건이라는 것을 가지고 반복모략대결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도 북남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가로막자는데 목적이 있음.

**7월 24일 |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지, 평양주민 시위설 보도**

- 최근 북한주민 수백명이 평양시 당위원회 건물에 모여 식량배급을 두배로 올려 달라며 항의시위를 벌였다는 소문이 베이징에 나돌고 있음.

**7월 27-28일 | 경수로 재원분담관련 KEDO집행이사회 개최**

- 재원분담액 각국 정부의 승인 조건으로 잠정 합의

**7월 29일 | 통일부, <남북기본합의서> 유효입장 재확인 발표**

-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당국의 어느 일방도 이를 무효로 선언하지 않은 이상 이행할 의무가 있는 유효한 약속이며, 정부는 현재 기본합의서 이행을 대북정책 추진의 기본으로 삼고 있음.

**7월 30일 | 국가안전기획부, 북한이 대남기구들을 재정비했다고 발표**

- 최근 북한에선 사회문화부가 대외연락부로, 해외활동을 통한 대남정보 수집과 테러활동을 맡았던 대외정보조사부가 35호실로 이름을 바꿨음. 모든 대남 공작기구를 대남담당비서 김용순이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질적으로 김정일이 직접 지휘하고 있음.

**8월 10일 | 김대중 대통령, 을지연습 준비회의에서 평화체제 정착시까지 안보의 중요성 강조**

-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는 안보가 가장 중요하며, 특히 현재의 안보상황에서는 민·관·군 통합방위체제를 확고히 해야 할 것임. 국민의 정부가 자신있게 안보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안보를 국내정치에 이용하지 않기 때문임.

**8월 15일 | 김대중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대북정책 3대원칙 견지, 모든 경제협력 지원 권장, 분야별 공동위원회 가동 촉구, 장·차관급의 남북상설대화기구 창설 제안, 대통령 특사 평양 파견 용의**  
- 지난 50년간 한반도를 지배해온 남북대결주의를 넘어서 확고한 안보의 기반 위에 남북간 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함. 국민의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입각하여 북한의 안정과 발전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 우리는 금강산 개발과 농업발전을 포함한 모든 경제협력을 지원하고 권장할 것임. 남북 양측이 인도적 정신과 동포애로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혈육에 대한 그리움속에 애태우고 있는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함. 이미 남북간 합의로 구성되어 있는 분야별 공동위원회들을 하루 속히 가동시켜야 함. 공동위원회의 정상운영에 앞서 우리는 장·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남북 상설 대화기구를 창설하여 성실한 대화의 장을 갖기를 제안함. 북한이 원한다면 이 모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특사를 평양에 보낼 용의가 있음.

**8월 17일 | 현대그룹, 금강산관광 사업관련 북한과 합영회사 설립 계약 체결 발표**

**8월 18일 | 통일부 대변인, 고령 이산가족 방북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발표(9월 1일부터 시행)**

**8월 20일 | 북한 조평통, 8.15 경축사 대북제안에 대해 공개질문장을 통해 사실상 거부**

- 미군의 영구강점을 애결하면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한 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대해 운운할 수 있는가?/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를 그대로 두고 남북화해를 실현할 수 있는가?/ 상호주의와 햇볕론을 들고 상대방을 우롱하면서 진정한 교류협력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가?/ 도발적인 무력증강과 복침을 위한 외세와 합동군사연습을 계속하면서 평화와 전쟁위협 제거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펼쳐나선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탄압은 역대 파쇼독재자들이 감행해온 반통일분열주의 책동의 재현이 아닌가?

**8월 21일 | 정원식 한적 총재, 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제의**

**8월 21일 | 통일부, 귀환자지원법 제정 계획 발표**

- 북한에 의해 강제납북·억류되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북억류자의 귀환에 대처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귀환자지원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음.

**8월 21일~ | 미·북 고위급회담 개최**

**9월 5일**

**8월 22일 | 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공개질문장 관련 논평 발표**

- 주한미군의 존재여부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는 별개의 문제로서 남북대화과 통일의 장애물이 될 수 없으며, 기본합의서에서 재확인한 자주원칙과도 관련이 없음. 상대측의 체제와 법질서를 문제 삼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도 어긋나며, 국가보안법과 안기부의 존재와 남북간의 화해는 상호 대립관계가 아님. 상호주의는 남북관계 개선과 상호이익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것이며, 햇볕정책도 흡수통일이 아니라 화해·협력을 통해 공존공영을

도모하지는 정책임. 한반도 평화와 전쟁위협은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과 무모한 군사주의에서 연유한 것이며, 우리의 군사적 대비 태세는 방어적인 것임. 민주주의라고 해서 국법질서를 부인하고 파기하는 것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며, 북한은 반정부투쟁을 선동하기보다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길로 나서야 하고 부당한 내정 간섭행위를 중지해야 함.

**8월 24일 | 김대중 대통령,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추진 표명**

- 북한의 일거수 일투족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북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것임. 정경분리 원칙 하에 금강산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각계 인사들의 방북을 북한이 수용하고 있는 것을 작은 변화로 보아야 함. 북한의 잠수정 침투사건에 대한 사과를 받는 것과 별도로 현대의 금강산 관광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 남북한 교류협력을 추진해가되,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도발은 용납하지 않을 것임.

**8월 31일 | 국방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관련 성명 발표**

- 북한은 8월 31일 정오경 동해안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장에서 장거리 지대지미사일 대포동 1호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을 시험 발사했음. 북한이 이와 같은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적인 미사일 비확산 노력에 참여할 것을 촉구함.

**8월 31일 | 미국 국방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 발표**

- 북한이 사정거리 2,000km에 달하는 다단계추진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은 처음임.

**8월 31일 | 일본, 북한의 로켓 발사사건에 대응하여 '재원분담결의안' 동의 유보**

**9월 1일 | 고령 이산가족 방북절차를 신고제로 전환**

**9월 3일 | 북한,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결성**

**9월 4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8월 31일 인공위성 발사했다고 보도**

- 공화국 창건 50돌을 즈음하여 다단계 운반 로케트로 첫 인공지구위성을 발사(8월 31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음.

**9월 4일 | 북한 외교부 대변인, 인공위성 발사를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이라는 주장관련 담화 발표**

- 주변국들 중에 우리의 과학기술 성과도 못 알아보고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이라고 떠들면서 심한 경거망동을 하고 있음. 우리가 위성보유국이 되는 것은 당연한 자주권이며, 이 능력이 군사적 목적에 돌려지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적대세력들의 태도에 달려있음.

**9월 5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 개최**

**9월 5일 |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 개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한·미·일 공동 대처**

- 미사일 발사이든 위성발사이든 이는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발사능력을 보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커다란 위협임. 오는 9월 말 유엔 총회 기간중 한·미·일 3국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함. 한·미·일 3국간 고위실무협의를 조기에 개최기로 함. 일본측 제의를 받아들여 한·일 국방당국간의 정보교류회의를 조기에 개최기로 함.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공동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임.

- 9월 7일 | 통일부, 현대상선, 현대건설, 금강산 개발 협력사업 승인
- 9월 8일 | 북한, 위성발사 준비 90년대 초에 완료 주장  
- 80년대에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다단식 로켓을 개발, 90년대 초에 이미 발사준비를 갖추었음. 8월 31일 위성이 탑재된 로켓을 일본 상공으로 발사했으며, 운반로켓에는 예상궤도를 벗어날 경우 안전한 지역으로 유도해 폭발시키는 장치가 장착 되었음.
- 9월 10일 | 미·북, 제네바합의 이행 관련 합의  
- 중유공급 9월 하반기 재개, 연말까지 공급완료, 연변 폐연료봉의 봉인작업 재개, 경수로 본 공사는 11월중 공사 개시, 영변 부근 지하시설에 대한 성격규명 위해 미·북간 협의, 제3차 미사일협상 10월 1일 재개, 한반도 4자회담 3차 본회담 10월 중 개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 협의위한 실무회담 이달중 개최
- 9월 10일 | 대구 비행정보구역 통과 일본·북한간 직항로 운영 개시
- 9월 15일 | 북한 평양방송, 인공위성 광명성 1호가 지구를 100바퀴 돌았다고 보도
- 9월 16일 | 일본 NHK, 북한 발사체 잔해 알래스카 근해 추락 보도  
-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3단계 추진장치로 구성돼 있으며, 1·2단계 추진장치는 동해와 태평양에 각각 탄착됐으나, 3단계 추진장치의 최종 부분이 6천km 떨어진 알래스카 근해에 떨어졌음. 3단계 추진장치의 첨단 부분에 탑재된 소형 인공위성은 공중에서 불탔을 가능성이 큼.
- 9월 18일 | 정부, 한적을 통한 민간단체 개별 지원 허용
- 9월 20일 | 북한, 정주영 지원 한우 폐사 관련 한국 정부의 의도적 불순물 투여 주장  
- 현대가 제공한 소 5백마리 중 8월 말까지 15마리가 죽었으며, 현재 8마리가 폐사 직전에 있음.
- 9월 21일 | 주 유엔 북한대표단,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유엔총회에서 북한 로켓이 일본 상공을 지나간 사건을 비난하자 일본에 '보복'하겠다고 선언
- 9월 22일 | 통일부 대변인, 북한 지원 한우 폐사관련 논평 발표  
- 북한측이 우리국민의 순수한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에 기초하여 지원해 준 소떼를 두고서 부당한 주장과 대남비방을 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 정부는 북한측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남북 쌍방의 소 사육전문가·수의사·당국자가 참여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의하는 바임.
- 9월 25일 |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개소(이북5도위)
- 9월 28일 | 이성호 복직 위원장 대리, 정주영 기증 한우 분배결과 통보  
- 한우를 판문점에서 가까운 황해남북도에 분배한 것은 정주영씨 측이 농사용으로 희망한 점을 고려, 함경도 등 거리가 먼 지역으로 수송할 경우 소의 관절 무리에 따라 농사용으로 이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수의학적 판단에 의한 것임.

- 10월 1일 | **김대중 대통령, 건군 5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남북간 평화와 화해·협력의 시대 추진 등 표명**  
- 북한의 새 지도부 등장을 계기로 북한이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길 바램.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강화하고, 일본과의 협조도 추진하면서, 중국·러시아와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
- 10월 7일 | **이성호 북적 위원장 대리, 정주영 기증 한우 폐사관련 수의 검역자료 통보**  
- 정주영이 보내온 소 500마리 중 10월 6일 현재 71마리가 위안에 들어있는 바줄과 수지박막으로 소화기관이 출혈·경색을 일으켜 폐사되었음. 사실적 자료와 수의학적 검사에 의하면 소들에 먹은 바줄과 수지박막은 소들을 우리측에 넘기기 전에 남측지역에서 강제주입한 것임. 조선 아·태평화위원회와 현대그룹은 현재 소들이 폐사된 것과 관련한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책을 협의하고 있음.
- 10월 9일 | **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한우 폐사관련 수의검역자료 검토결과 발표**  
- 수의 검역자료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소의 직접적인 폐사원인은 장시간 수송에 따른 소송열로 판단되며, 북측이 폐사 이후 관리상 부주의에 의한 책임을 은폐하고 우리측에 전가하기 위한 의도로 보임.
- 10월 16일 | **통일부, 현대 소 폐사 원인 공동조사 이전 추가 소지원 불가능 언급**  
- 현대 소 폐사 원인과 관련한 남북공동조사로 북한 주장의 진위여부를 가리거나 또는 북측이 잘못을 인정, 사과를 하기 전에는 현대측이 소떼 추가지원을 하기는 어려움.
- 10월 16일 | **북한, 정주영 지원 한우 폐사 관련 현대측에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서기장 명의로 해명문건 통보**
- 10월 17일 | **정원식 한적 총재, 4개 민간단체의 대북 개별지원 품목 통보**
- 10월 21~24일 | **제3차 4자회담 본회담(제네바)**  
(4자회담 제3차 본회담 공동 언론발표문)  
- 금번 회담에서 4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각각 논의하는 2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 또한 4자는 분과위 작업에 지침이 될 「분과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서」도 채택  
- 제4차 본회담은 1999년 1월 18일~22일 간 제네바에서 개최. 차기 본회담의 조직관련 사항을 토의하기 위한 차석 대표급 준비회의가 본회담 개최 하루전 제네바에서 개최  
- 본회담의 의장국은 직전 본회담의 종료시점부터 본회담 준비를 맡으며, 동 본회담 이전 개최되는 준비회의의 의장직을 수입  
- 4자대표단은 금번 회담을 지원해준 스위스 정부측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음.
- 10월 23일 | **북한 사회안전성 대변인,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 언급**  
- 민족의 화해와 단합, 참다운 조국애와 동포애의 정을 안고 금강산에 오는 모든 관광객들과 관계자들의 체류기간 중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담보하며, 사고 및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대책을 취할 것임.

- 10월 27일 |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기탁 2차분 한우 501두 대북지원 판문점 경유 방북
- 10월 28일 | 김대중 대통령, 문화일보 창간 7주년 회견에서 대북 햇볕정책 계속 추진 언급  
- 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며, 정경분리 원칙에 기초한 햇볕정책은 전세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
- 10월 31일~ | 윤이상 통일음악회 개최
- 11월 7일
- 11월 2일 | 김대중 대통령, 방북 정주영 명예회장 등 면담에서 남북경협, 단계적 추진 등 언급  
- 현대가 추진 중인 금강산 관광 등 대북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남북경협은 쌍방에 이익이 되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중요함.
- 11월 2일 | 김대중 대통령, 뉴스위크 한국판 창간 7돌 회견에서 임기중 김정일과 남북대화 기대 표명  
-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남북기업간 교류 등 가능한 모든 분야의 대화를 추진하겠지만 정부간 접촉을 서두르지 않을 것임.
- 11월 2일 | 유엔, 제53차 총회에서 북 핵 안전협정 이행촉구 결의안 채택
- 11월 3일 | 김대중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현대 대북경협 철저관리 지시  
- 대북 경협사업 추진은 현대가 주로 하겠지만 정부도 장악력을 확보,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하며, 통일부는 현대에만 맡기지 말고 충분히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임. 남북관계에서 민간기업이 실수하면 정부책임으로 돌아오며, 한가지 실수를 하지 않는게 다섯가지 성공보다 중요함. 남북경협은 남북 양측에 이익이 되고, 긴장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지만, 환상을 갖거나 지나친 기대를 해선 안되며 냉철하고 착실하게 진행시켜야 함.
- 11월 9일 | 북한 외무성, 핵관련 시설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내 지하시설물은 민수용이므로 미국이 이를 사찰한 후 핵시설이 아님이 밝혀지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  
- 지하시설물들을 사찰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내부를 다 뒤져보겠다는 것으로서 조·미기본합 의문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데 대한 중상모독이고 내정간섭이 아닐수 없음. 미국측이 합의를 깨버리게 되면 별로 덕도 보지 못하는 합의문에 대한 우리의 불평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될 것임.
- 11월 10일 | 경수로 재원분담관련 KEDO집행이사회 개최, 경수로 재원분담결의안 채택  
- 경수로 건설 예상사업비 총46억달러 중 한국 32억 2천만달러, 일본 10억달러를 각각 분담하고 미국은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그 조달에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됨.
- 11월 16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금강산 관광관련 성명 발표  
- 금강산 관광이 온 민족의 염원과 이익에 부합되게 성과적으로 추진되려면 관광적인 성격을 떠난 그 어떤 다른 것을 개입시키는 일이 없어야 함. 남조선 당국자들은 민족의 관심과 기대속에 첫 걸음을 내디디는 금강산 관광사업에 그들을 던지거나 이 사업을 위태롭게 하는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과 모든 형태의 반복대결 책동을 건어 치워야 할 것임.

- 11월 17일 | **금강산 관광지원을 위한 통신망 개통(6회선)**
- 11월 18일 | **현대 금강산 관광선 첫 출항**
  - 11월 18일 18:00 강원도 동해항 출항, 11월 19일 06:00 북한 장전항 도착, 3일간 만물상, 구룡폭포, 해금당 등 3개 코스로 금강산 관광 후 22일 오전 6시 동해안 귀환
- 11월 19일 | **미국 찰스 카트먼 특사, 북 지하시설 핵연관성 증거 있다고 언급**
  - 한미 양국은 북한 금창리에 건설중인 지하시설이 핵개발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공유하고 있음.
- 11월 23일 | **김대중 대통령, CNN 문답 아시아 프로그램 출연 북 지하 핵의혹 시설 점검 강조**
  - 클린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햇볕정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지하 핵의혹시설도 강조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음. 남북간 전쟁 억제 목적과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도 주한미군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국의 국익에도 중요하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떠나지 않으리라 생각함. 전쟁억제와 화해·협력에선 동서독과 일치하지만, 서독처럼 흡수통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음.
- 11월 24일 | **북한 외무성, 지하 핵시설 의혹설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
  - 94년 조미기본협정이 채택된 이후 오늘까지 그 이행에 충실해 왔고, 따라서 영변지구에 동결한 시설외에는 핵관련 지하시설은 없음. 지하시설을 핵시설과 연관시키면서 사찰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엄중한 유린이고 모독임. 미국이 기본합의문을 깨겠다고 하면 우리로서도 불편하게 합의문에 매어 있을 필요를 느끼지 않음. 응분의 보상을 한다면 조미관계를 고려하여 단 한번 특례적으로 현지 방문을 실현시켜주는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음.
- 11월 25일 | **정원식 한적 총재, 남북적십자 사무총장 접촉 제의**
- 11월 25일 | **김대중 대통령, 민주평통 해외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에서 북에 회초리·당근정책 병행 언급**
  - 북한이 협력으로 나오면 얼마든지 도와주겠지만, 핵문제와 미사일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철저히 대응하는 등 회초리와 당근정책을 병행할 것임.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지 않는 한 화해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지만 만약 무력적화 전략으로 나온다면 우방 동맹국들과 협력해 단호히 분쇄할 것임. 전쟁으로 나가려는 북한 내 세력에게 명분을 주어서는 안되며,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 11월 27일 | **이성호 북적 위원장 대리, 11월 25일 우리측 제의에 대해 거부**
- 12월 1일 | **제198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북한 핵의혹 해소 촉구 결의안',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 12월 2일 | **김대중 대통령, MBC 특별회견에서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등 언급**
  -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모든 회담에 대해서는 문호를 열어 놓고 있음. 정부간 대화는 못했지만 문화·언론·기업간의 교류는 진전되었으며, 이산가족 상봉도 이뤄졌음. 남북관계는 간첩선과 잠수정이 출현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4자회담의 진전과 금강산

관광 같은 긍정적인 면이 있으므로 안보와 화해협력 두가지를 병행하면서 변화를 기다려야 함.

- 12월 2일 |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미국의 5027작전계획에 대해 섬멸적 타격 위협 성명 발표**  
- 미국이 지하 핵시설 문제와 인공지구위성 발사로 정세 악화설을 요란스럽게 들고 나오는 것을 5027 작전 계획에 따르는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우리의 혁명무력은 섬멸적인 타격으로 대답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함.
- 12월 3일 | 미국 케네스 베이컨 국방부 대변인,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관련 북한 도발시 단호 응징 언급**
- 12월 7일 | 김대중 대통령, 페리 대북 정책조정관 면담에서 대북 현안 북·미간 일괄 타결 제의**  
- 지하 핵의혹 시설은 실제 핵무기를 건설하려고 하더라도 4~5년의 기간이 걸리므로 대북 포용정책을 포기하고 제재를 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함. 협력을 하면 돕고 도발을 하면 단호히 응징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북·미간 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북·미간 외교관계 정상화를 바라며, 대북 경제제재 완화 문제를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함. 식량도 인도적 입장이 기본이지만 북한의 협력에 대한 대가로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에 대해 줄 것은 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생각함.
- 12월 10일 | 김대중 대통령, 국민일보 창간 기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전망관련 언급**  
- 남북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비관만 하지 않으며 북한도 책임있는 정부이므로 전쟁을 원치 않을 것으로 보며, 그들이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갖고 호응해 온다면 언제라도 회담에 응할 것임. 금창리 지하의혹 시설 문제로 당장 북한에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남북문제는 미국과 합의할 것은 합의하고 우리가 주도해 나갈 것임.
- 12월 14일 | 박준규 국회의장,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상봉 촉구 국회결의문 전달**  
- 이산가족들의 재회가 남북간에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함. 만약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그들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쌍방의회가 해당 적십자가 적극 권고할 것을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제의함. 남북 쌍방 의회간에 만남이 이루어져 의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의견 교환이나 교류가 있기를 희망함.
- 12월 15~17일 |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판문점 경유 방북**
- 12월 18일 | 합동참모본부, 북한의 남해안 침투 반잠수정 격침 발표**  
- 12월 17일 오후 11:05 전남 여수시 돌산을 임포리 육군 00사단 해안초소 전방 2km 앞바다에 괴선박이 출현했다가 해안초병에게 발각되자 동남해상으로 도주했음. 군·경은 경남 거제 남방 100km 공해상까지 추격해 나포작전에 들어갔으나, 괴선박이 우리 함정에 사격을 가해와 해군 함포 등으로 응사, 12월 18일 오전 5:55경에 격침시켰음.
- 12월 18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남해안 잠수정 침투사건 관련 언급**  
- 남조선이 남해안에서 또 하나의 북 잠수정 침투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하고 우리를 걸고 든 데 대하여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음. 이는 미제의 반공화국 전쟁책동에 편승하여 북침전쟁 도발의 구실을 찾기 위한 것임.
- 12월 22일 | 장인덕 통일부 장관, 남북당국간회담 제의**



# 1999년

- 1월 1일 | 김대중 대통령, 신년사에서 포용정책 계속 유지 언급  
-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방과 공조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게을리 하지 않겠지만, 그들의 긍정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포용의 자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
- 1월 1일 | 북한,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발표
- 1월 4일 | 김대중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통일·안보관련 3대 목표와 기본방향 결정  
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  
② 남북화해·협력지속 추진  
③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지지와 공조관계 강화
- 1월 5일 | 정부 고위당국자, 남북당국간회담 북 의사 존중하여 비공개라도 추진 언급  
- 북한의 대화 의지만 확인된다면 어떤 형식으로라도 대화를 추진할 방침이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당국의 의사를 타진하는 작업을 시도할 것임.
- 1월 7일 | 북한 김용순 조선반핵평화위원회 위원장, 미국에 대해 제네바합의 이행 지연 고발장 발표  
① 제네바합의의 위반자는 누구인가?  
미국이 조·미 사이의 합의된 조항들 중에서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제네바합의의 위반자는 미국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음.  
② 제네바합의의 유린은 미국의 대조선 압살전략의 산물  
제네바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압살전략, 반공화국 대결정책에 있음.  
③ 미국은 우리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미국은 우리에게 끼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어떤 형태라도 그 값을 반드시 물어야 함.
- 1월 13일 | 현대, 금강산 시설물 30~50년 독점권 합의 발표  
- 현대가 금강산 지구에 건설할 온천·골프장·스키장·해수욕장·호텔 등 시설에 대해 각 시설별로 30~50년 장기간 독점권을 갖기로 했음. 이번 협상에서 북한측과 금강산 1·2차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 협의했으며, 북한 무역성과 아·태평화위로부터 금강산 지역 각종 시설의 독점권에 대한 보증을 받기로 했음.
- 1월 15일 | 정부, 현대의 금강산개발계획 승인
- 1월 15일 | 정원식 한적 총재, 금강산 솔잎혹파리 남북공동방제 제의
- 1월 16일 | 장재언 북적 위원장, 독일(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 직원 김경필 미국망명과 관련 안기부의 납치극이라고 비난 서한 발송

- 1월 16-24일 | **미·북 금강리 핵의혹시설 관련 제3차 협상(제네바)**
- 1월 18일 | **임동원 대통령 외교 안보수석 비서관, 독일 주재 북한대사관 직원 김경필 사건은 우리측과 무관하다는 대북 서한 발송**
- 1월 18-22일 | **제4차 4자회담 본회담(제네바)**  
-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등 2개 분과위원회의 토의 내용을 담은 '분과위 활동보고서'를 채택
- 1월 21일 | **김대중 대통령, 제32차 통합방위중앙회의에서 한반도 냉전을 종식시킬 때가 됐다고 언급**  
- 우리는 세계 유일의 냉전국가로 50년이 넘도록 냉전상태에 있음. 우리 국민의 역량과 세계적 지원으로 냉전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임. 금강산 관광과 관련, 북한에 돈을 주어 손해보는 것 같으나, 크게 보면 현대 뿐 아니라 다른 기업도 북한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어 결국은 북한을 우리 영향권으로 안게 되는 것임.
- 1월 26일 | **북한 조평통 서기국, 김경필 부부 납치사건 진상공개장 발표**  
- 이번에 발생한 납치사건은 오래전부터 독일 교포단체들과 베를린 주재 우리 대표부에 대한 체계적인 모략행위를 감행하여 온 안기부의 계획적인 책동의 산물임. 남조선당국과 미국이 우리 서기관을 납치하여 가두고 있는 조건에서 이제 그를 통해 어떤 모략적 요설을 퍼뜨린다 해도 그것은 그들 자신의 저열성을 보여주게 될 것임.
- 1월 28일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미·북 3차 협상 및 4자회담 관련 언급**  
- 미국측이 3억달러나 그에 맞먹는 것을 보상으로 내놓으면서 협조적으로 지하시설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경우 특수하게 단 한번 금강리 대상에 대한 현지방문을 허용해주는 식의 해결방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음. 미국과 남조선이 4자회담을 통해 신뢰조성 조치들이 취해질 것을 원한다면 협박하여 유괴한 우리 외교관을 돌려보내며 다시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담보를 해야 할 것임.
- 1월 30일~ | **국제옥수수재단 김순권 교수 방북**
- 2월 6일 | - 북한 1천여개 마을에 개량 옥수수 재배키로 합의
- 2월 2일 | **김대중 대통령, 박지원 공보수석 금강산 관광(1월 31일~2월 1일) 결과 보고서 대북관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진전 강조**  
- 대북관계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교차하지만 긍정적인 면을 살려 나간다면 우리가 북한에 갖는 영향력이 커지게 될 것임. 긍정적인 면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남쪽을 알게 되면서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진전된 길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함.
- 2월 3일 | **북한 정부·정당·단체연합회의, 남조선 당국과 정당, 단체 및 각계인사들에게 보내는 편지 채택**  
- 국가보안법 폐지, 외세와의 공조파기·합동군사훈련 중지, 통일대국단체들과 인사들의 권리 보장 등 선행 실천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그 해결이 늦어도 상반년안에 실현되어 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할 것임. 선행 실천사항들이 해결된 기초 위에 올해 하반기에 남북고위급정치회담을 열 것을 남조선 당국에 제안함. 고위급정치회담이 열리면 조국통일 3대원칙이 재확인되어 있는 북남합의서의 이행, 협력교류문제,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문제 등 북남관계의 당면문제들도 협의될 수 있을 것임.

- 2월 4일 | **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의 편지관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논평 발표**  
- 정부는 북한이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에서 채택된 편지를 통해 남북당국자회담을 제의해 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정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당국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한측에 촉구함.
- 2월 4~6일 |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관문점 경유 방북, 서해안 공단 조성 협의**
- 2월 8일 | **정원식 한적 총재, 비료를 포함한 영농물자 지원을 위한 실무자 접촉 제의**
- 2월 9일 | **장재언 북적 위원장, 2월 8일 우리측 제의에 대해 비료 등 영농물자 인도를 요구하고 실무자 접촉 거부**
- 2월 9일 | **한·미·일 3국, 대북정책협의회 개최**  
- 금창리 사찰문제를 둘러싼 북·미협상이 조기에 타결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추가시험이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긴밀한 3국간 협의를 유지해 나가기로 함.
- 2월 10일 | **정부, 대북지원 창구 다원화 조치 발표**
- 2월 11일 | **관문점 제4차 장성급회담 개최**
- 2월 11일 | **김대중 대통령, 도쿄신문 회견에서 대북 일괄 타결 구상 언급**  
- 북한에 대해 북·미 국교정상화, 경제협력 및 경제제재 완화, 김정일체제 보전 등 우리가 줄 것은 주고, 핵과 미사일 개발 중지, 한반도에서의 무력도발 배제 약속 등 얻을 것은 얻어야 함. 한반도 냉전구조 종식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주변국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2월 21일 | **김대중 대통령, 국민과의 TV 대화에서 대북 포용정책은 전쟁을 막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언급**
- 2월 21일 | **북한 조평통 서기국 대변인, 남한 정부의 3단계 일괄타결 방안 거부입장 표명**
- 2월 24일 |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대북정책 및 남북대화 전망 등 언급**  
- 우리는 특사교환을 제의했으며, 북한도 남북간 당사자 접촉을 제의하고 나오는 등 양측의 의견이 맞아가고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 대화를 추진해 정부 차원의 대화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음. 일괄타결은 양측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타결하는 것이며, 북한이 남북평화, 교류협력에 응하며 우리도 북한에 대해 안전보장, 경제지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돕는 것임.
- 2월 27일 | **미·북 금창리 핵 의혹시설 관련 제4차 협상개시**
- 2월 28일 | **금강산 휴게소 및 공연장 준공**  
- 분단 후 최초로 설립된 남북공동 민간 건축물
- 3월 1일 | **김대중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햇볕정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강조**  
- 현 단계에서 최소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민족을 보호하고 남북이 다같이 경제건설에 매진해 민족전체의 생활을 향상시켜야 함. 남한의 미전향장기수와 북한의 국군포로 및 억류 민

간인 송환문제가 인도적 차원에서 공정하게 논의되고 처리되기를 바라며, 이산가족 상봉이 하루속히 이뤄지길 바랍.

**3월 3일 | 김대중 대통령, KBS 창사기념 회견에서 남북대화 진전 가능성 등 언급**

- 여러 국제정세 움직임, 남북의 동향, 북한의 남북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 표시 등으로 봐서 앞으로 남북 당국자간 대화, 경우에 따라 남북 정상간 대화도 배제할 수 없음. 북한이 원하면 정상회담을 포함, 어떤 회담에도 적극 응해 나갈 것을 준비하고 있음. 출소 남과간 첩 북송과 대북 비료지원 등 대북정책에서 상호주의 원칙은 포기하지 않을 것임.

**3월 8일 | 북한 노동신문,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회견 관련 비난 논평**

- 남조선 집권자가 상호주의를 내세워 북출신 비전향장기수들과 군포로 및 남북어민들을 바꾸자고 했는데 북에는 군포로요, 남북어민이요 하는 남조선 사람들이 없음.

**3월 8일 | 정원식 한적 총재, 대북 비료지원 관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제의**

**3월 9일 | 판문점 제5차 장성급회담 개최**

**3월 9~11일 |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판문점 통과 방북**

**3월 10일 | 장제언 북적 위원장, 3월 8일 우리측 제의에 대해 비료지원 요구, 실무접촉 거부**

**3월 11일 | 한적, 대북비료지원을 위한 모금 계획 발표(3월 15일~6월 15일까지)**

**3월 16일 | 미·북 금창리핵의혹시설 관련 제4차 협상 타결**

- 북한은 1999년 5월 미국 조사단의 금창리 시설 최초방문 및 추가방문을 허용. 미국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을 지원 양국의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 취하기로 합의

**3월 17일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 촉구 국회결의안 및 국회의장서한 판문점 연락사무소 통해 북한에 전달**

-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기본합의서가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체결된 민족화해의 대장전임을 확인하면서, 이의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결의함. 남북당국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을 위한 남북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함. 남북 쌍방 의회차원의 의견교환이나 교류가 있기를 희망함.

**3월 17일 | 북한 조선중앙방송, 고위급정치회담 제의 관련 보도**

- 진정한 통일을 이룩하자면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햇볕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하며, 우리의 연합회의 제안에 긍정적인 호응을 보여야 함.

**3월 17일 | 외교부 대변인, 금창리 시설 관련 미·북 협상 결과에 대한 논평**

- 북한이 금번 합의내용을 완전히 이행함으로써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켜 주길 기대함. 나아가 북한이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핵확산 금지조약,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안전조치 협정, 미·북한 제네바 합의 등 제반 규범을 엄격히 준수해 나갈으로써 여하한 핵의혹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랍.

**3월 22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북한 식량사정 올해도 심각하다고 보도**

1999

- 3월 29-30일 | 제4차 미·북 미사일 협상
- 3월 30일 | 한적, 대북비료 5,000톤 지원 계획 발표
- 3월 31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대북창구 다원화 조치 발표(2월 10일) 관련 비난 담화
  - 남조선 당국자들이 창구 다원화를 들고 나오는 것은 정경분리 원칙과도 모순되는 뒤집어 놓은 창구 단일화 책동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님.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창구 다원화 조치를 통하여 우리가 연합회의에서 내놓은 북남대화의 선행 실천사항들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처럼 책동하고 있는 것임.
- 4월 3일 | 김대중 대통령, 육·공군 장성들의 진급 및 보직 신고에서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 언급
  - 북한은 미군이 평화군이라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도 좋다고 미군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을 했음. 이는 주한미군 철수반대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 정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햇볕정책에 대한 하나의 호응이라고 생각함. 북한의 침략을 막는 것뿐 아니라 동북아의 세력균형과 현상유지를 위해 통일 후에도 미군이 주둔해야 함.
- 4월 6일 | 장재언 북적 위원장, '현대 두크호'와 '만폭호' 선박 충돌관련 문제 협의하자고 제의
  - 북과 남의 동쪽사이에 발생한 이번 사고의 성격에 부합되게 다른 3자의 개입없이 당사자끼리 푸는 것이 문제해결의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고 인정함.
- 4월 8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 회의 개최
- 4월 10일 | 금강산 솔잎혹과리 방제 관련 남북 수목전문가 접촉
- 4월 19일 | 북한 조선반핵평화위원회 대변인, 북한의 생화학무기 보유설 부인
- 4월 22-28일 | 제5차 4자회담 본회담(제네바)
  - 각측의 입장차이로 차기회담 일자만을 정한 채 종료
- 4월 29일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제5차 4자회담 관련 언급
  - 이번 회담에서 미군 철수와 조·미 사이의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대한 토의는 한사코 외면하면서 비본질적이고 부차적인 문제에 매달리려는 것은 4자회담을 탁상공론으로 대치해 보려는 것으로 밖에 달리 볼 수 없음.
- 5월 5일 | 김대중 대통령, CNN 주최 제10회 세계언론인 국제회의 위성회견에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5대 과제' 제시
  - ① 미·일의 대북관계 개선
  - ② 남북간 화해·협력
  - ③ 북한의 대외개방 환경조성
  - ④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 ⑤ 정전체제의 남북간 평화체제로의 전환
- 5월 6일 | 김대중 대통령, 르몽드지 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성사시 북에 평화보장을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한에 평화 보장을 제안할 것임. 우리는 북한에 대해 위협하지 않을 것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 정상화를 도울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켜야 하며, 북한도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미사일 생산 및 핵개발 계획을 단념해야 할 것임.

- 5월 7일 | 민화협, 7.4 남북공동성명 채택 27주년 관련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 제의
- 5월 7일 |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백범 50주년 추모행사 초청 제의 대북서한 발송
- 5월 12~14일 | 북경 남북비공개 제1차 접촉(북경)
- 5월 14일 |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김구선생 추모행사 협의를 위한 접촉(6월초, 베이징) 제의
- 5월 14~15일 | 미국 카트만 특사 방북, 금창리 현장조사 협의
- 5월 18일 |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북한의 5월 14일 제의와 관련 판문점 또는 베이징 접촉(6월 3일) 제의
- 5월 18~24일 | 금창리 현장조사를 위한 조사단(단장: 미국 조엘위트 국무부 과장) 방북
- 5월 23~25일 | 북경 남북비공개 제2차 접촉(북경)
- 5월 25~28일 | 미국 페리 대북조정관 방북,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회담
- 5월 28일 | 미국 제임스 루빈 국무부 대변인, 북한 금창리의 지하핵 의혹시설 건설기록에 대한 조사 결과 북한이 '94년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
- 5월 29일~ | 북경 남북비공개 제3차 접촉(북경)
- 6월 3일
- 5월 31일 | 통일부, 이산가족의 북한주민접촉 신청 절차 간소화 발표
- 6월 1일 | 북한 노동신문·근로자, 공동사설을 통해 서구식 사상문화에 대한 경계를 촉구
- 6월 3일 | 남북 비공개 접촉에서 남북차관급 당국회담 개최 등 합의(북경)  
(차관급 접촉 합의서)
  - ① 남측은 1999년 6월부터 7월까지 비료 20만톤을 북측에 제공. 그중 6월 20일까지 10만톤을 전달
    - ㄱ. 비료의 종류는 남측의 생산계획에 따라 조정하되, 북측의 희망을 고려
    - ㄴ. 수송절차는 쌍방 적십자사가 1997년 5월 26일과 7월 25일에 합의한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따르되, 수송통로에 해주항, 원산항, 청진항을 추가
  - ② 남과 북은 6월 21일부터 쌍방 차관급(부상급) 당국회담을 개최
    - ㄱ. 회담의제는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로 되는 당면문제」로 하되, 이산가족 문제를 먼저 합의
    - ㄴ. 회담장소는 1차 북경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협의, 확정
    - ㄷ. 회담대표는 각기 차관급(부상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3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늘릴 수 있음.

리. 회담형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도 할 수 있음.

- 6월 3~7일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중국방문
- 6월 7~15일 | 북한 경비정 6척,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 6월 8일 | 김대중 대통령, 한국일보 회견에서 남북대화 정례화 방침 피력
  - 남북차관급당국회담에서 시급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면서 특사고환이나 고위급회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공동위 가동 등 남북간 대화를 확대하고 정례화할 방침임.
- 6월 9일 | 북한, 남한이 북한 영해에 불법침입했다고 주장
- 6월 9일 | 북한 외무성 대변인, 금창리 시설은 핵과 무관하다고 주장
  - 미국대표단의 현지방문(5월 20~22일)을 통해 문제의 지하시설이 핵과 무관한 텅빈 굴간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짐. 금창리 굴간의 미래용도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조·미 뉴욕합의 이행과 관련한 미국측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음.
- 6월 10일 | 국방부 대변인, 연평도 부근 해역 해군함정 증강, 53년 이래 해상경계선으로 유지된 북방한계선(NLL)을 지상의 군사분계선과 같이 지킬 것이라고 발표
- 6월 10일 | 북한, 남한이 북한영해에 전투함선 증강배치 주장
- 6월 10일 | 정부, 대북비료 20만 톤 지원에 필요한 자금 중 민간모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결정
- 6월 11일 | 유엔군사령부, 북한의 서해 영해 침범관련 장성급회담 제의
- 6월 11일 | 북한 인민군관문점 대표부, 북한 영해를 침범하고 있는 남한 전투함정의 즉각적인 철수, 영해 침범행위에 대한 사죄요구
- 6월 11일 | 김보현 남북 베이징접촉 당국대표, 남북차관급당국회담 대표단 명단 통보
- 6월 13일 | 북한, 유엔군사령부의 장성급회담 제의 수락
- 6월 15일 | 남북한 서해상에서 교전 사태발생(제1차 연평해전)
  -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침범 9일째,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남북한 함정 사이에 치열한 포격전이 벌어져 북한 함정 1척이 격침되고 5척이 대파됨. 우리 해군은 초계정 1척과 고속정 4척이 일부 파손되고 7명이 다치는 피해를 입었음.
- 6월 15일 |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 개최,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침범 행위가 명백한 영해침범일뿐 아니라 도발행위라고 판단,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발표
- 6월 15일 | 관문점 장성급회담 개최(6차)
- 6월 15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서해사태 관련 남측이 도발 사죄 요구
- 6월 16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서해상 교전 관련 남한 인사 평양방문 제한 성명 발표
  - 당분간 남측인사들의 평양방문 접촉을 제한 또는 중지한다는 것을 엄숙히 천명함. 남조선

은 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앞에 나서서 강경대응을 지령하고 국방부장관이 직접작전을 지휘하면서 우리 함정들에 수천발의 총포사격을 가하는 위협천만한 불안난도 서슴지 않았음.

**6월 18일 | 국회, 대북결의안 채택**

- 국회는 무력도발의 즉각 중지, 도발책임의 북한귀속,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노력 호응 등을 북측에 요구, 도발행위의 신속한 차단, 국민불안 최소화 등을 정부와 군에 촉구함.

**6월 20일 | 북한, 금강산 관광객 1명(민영미) 억류, 북한은 감시원에게 귀순을 권유했다고 주장**

**6월 21일 | 유엔군사령부·북한, 장성급회담 개최(6월 22일) 합의**

**6월 21일 |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 개최,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 강력 항의 및 조속귀환 요구, 남북차관급당국회담 조속 개최 촉구**

**6월 22일 | 정부, 금강산 관광객 미 송환 시 대북사업 중단 조치 발표**

**6월 22일 | 관문점 장성급회담 개최(7차)**

**6월 22일 |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민안전문제 확고히 해결 천명**

-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과 관련, 정부는 국민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자세를 갖고 해결해야 함. 베이징회담이 남북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차원에 맞게 진행되도록 해야 하며 북한은 우리와의 약속을 이행해야 함.

**6월 22일 | 현대, 금강산 관광 중지 발표**

**6월 22-26일 | 제1차 남북차관급당국회담(북경)**

- 북한, 서해상 경계선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규정된 데 따라야 한다고 주장

**6월 23-24일 | 미·북 고위급회담 개최(북경)**

- 북한, 서해 교전사태와 관련, 북방한계선 문제를 협정 당사자인 미국과 협상하자고 주장

**6월 24일 | 김대중 대통령, 국민회의 원외지구당 위원장들과의 담화에서 북한이 민영미씨를 돌려 보내지 않는다면 금강산 관광선도 달라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6월 25일 | 북한 아태위 대변인, 민영미 석방관련 담화 발표**

- 앞으로 남조선 당국이 아·태 평화위와 현대그룹 사이에 뜨거운 동포애적 입장에서부터 민간급에서 진행되는 관광사업에 끼어들어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려 한다면 그러한 행위가 크든 작든 다시는 용납하지 않을 것임.

**6월 25일 | 정부, 금강산 관광관련 '선 안전보장 후 관광재개' 방침 발표**

- 정부는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확실한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금강산 관광선 출항을 잠정 연기하고, 북한 아·태평화위와 신변안전보장에 관한 협상에 즉각 착수하라고 현대측에 통보

**6월 26일 | 김대중 대통령, 미국 외교협회 인사 접견시 이산가족과 비료지원 연계 추진 입장 표명**

- 북한에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더 진행하려면 투자협정이나 이중과세 방지협정 등 정부간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밝힘.

6월 28일 | 현대, 북한 아태위 측과 금강산관광객 안전보장협의 착수(북경)

7월 1~3일 | 제2차 남북차관급당국회담 개최되었으나 결렬

7월 2일 | 판문점 제8차 장성급회담

- 북한측은 서해사태는 우리측이 북한영해를 침범한 데서 비롯됐다면서 북방한계선을 무조건 철회하라고 주장함. 유엔사측은 서해교전은 북측의 장기간 남한 영해 불법침범과 선제공격에 의해 발생했다고 지적함.

7월 4일 | 민화협, 남북 정당·사회단체 공동회의 제안

7월 8일 | 탈북자 수용시설 하나원 개원

7월 10일 | 민화협, 판문점연락관 접촉을 통해 남북예비회담 제안서를 북한에 전달

7월 12일 | 김대중 대통령, 이북5도청 업무보고시 전쟁방지 정책으로 북한 고립 언급

- 북한은 우리의 전쟁방지 정책에 의해 완전 고립돼 있음. 클린턴 대통령은 최근 한·미 정상 회담에서 미국도 포용정책에 절대 변동이 있어서는 안되며 제네바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7월 21일 | 판문점 제9차 장성급회담

- 북한은 이날 회담에서 국제법에 따른 해상경계선 설정과 서해교전 책임자 처벌 및 보상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으며, 유엔사는 북방한계선은 사실상의 군사분계선으로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음.

7월 22일 | 유엔사, 남북 해상경계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 표명

- 해상경계선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간에 해결할 사안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돼야 하며 남북간 새로운 해상 불가침경계선 설정시까지의 현재의 북방한계선(NLL)이 준수돼야 함. 현재 중요한 것은 선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을 분리하는 데 있는 만큼 쌍방 합정간 신호 규정 합의 및 활용, 유엔사·북한군간 비서장급 직통전화 설치 및 운용을 북측이 우선 받아들여야 함.

7월 25일 | LA 타임즈, 북한 굶주림으로 210만명 사망 보도

-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 북한전역에서 기아나 이와 관련한 질병으로 사망한 주민이 210만명에 달할지도 모름.

7월 26일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북·미관계 개선 관련 담화 발표

- 최근 미국이 관계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보려는 기도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음. 미국을 백년숙적으로 보려하지 않으며, 우리와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인 우리에게 대한 경제제재를 전면적으로 철회해야 함.

7월 29일 | 김대중 대통령,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 접견시 사정거리 500km 이상 미사일 개발 필요 언급

- 한국이 사거리 500km 이상인 미사일을 갖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음.

- 7월 30일 | 현대·북한 아·태평화위, 금강산관광 재개 합의하고 <금강산 관광세칙과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합의서> 체결
- 8월 1일 | 통일부, 금강산 관광 8월 5일부터 재개허용 발표
- 8월 3~9일 | 미·북 고위급회담 개최(제네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 협의
  - 회담에서 미국측은 북한에 대해 미사일 재발사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재발사시 북한이 입을 손실과 재발사 중지시 얻을 혜택을 설명하였음. 북한측은 이에 대해 미사일 발사가 주권에 관한 문제이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함.
- 8월 5~9일 | 제6차 4자회담 본회담(제네바), 성과없이 폐막
- 8월 5일 | 금강산 관광 45일만에 재개
- 8월 9일 | 정부, 임진강변에서 발견한 북한주민 시체 2구의 인도를 위한 연락관 접촉을 제의
- 8월 9일 | 장재언 북적 위원장, 인수의사를 밝히고 절차협의 위해 10일 오전 판문점에 연락관 2명을 보내겠다는 의사 표시
- 8월 11일 | 정원식 한적 총재, 임진강 수계의 남북 공동수방사업추진을 위한 당국간 실무접촉을 북한에 제의
- 8월 11일 |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을지연습준비 보고회의 중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포용 정책 유지 표명
  -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다른 많은 손해가 있고 어려움을 겪을 것임. 그러나 안보와 포용정책이라는 기본정책을 유지하고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 사업은 계속한다는 것이 한·미·일 3국의 합의사항임.
- 8월 15일 | 김대중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문제는 남북당사자간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언급
  -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위해서는 안보와 화해가 같이 정착돼야 하며, 국민의 정부는 남북간 정부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질 것을 희망함. 북한은 동족끼리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미국과의 협상만 고집하는 불합리한 태도를 버려야 하며 한반도 문제는 남북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함.
- 8월 16일 | 수해때 임진강 주변 등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 3구,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도
- 8월 17일 | 판문점 제10차 장성급회담 개최
- 8월 18일 | 북한 외무성, 미국과 미사일협상 용의 표명
  - 적국이 우리의 우려를 완화시켜 줄 의향을 갖고 진심으로 협상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음. 우리에게서 평화적인 위성활동계획과 방위력을 위한 미사일개발계획도 있음. 이 두가지는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국제법에 구속되지 않음.
- 8월 20일 | WFP 캐서린 버티니 사무국장,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기근이 완화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정상적인 상황에는 훨씬 못미친다'고 언급
- 8월 26일 | 북한 박임수 인민군 대좌, 서해해상 군사분계선 설정문제와 관련 기자회견

-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을 설정하는 기준은 정전협정이며, 이 문제는 판문점 미·북 장성급회담에서 다루어야 함. 조선인민군측은 서해해상군사분계선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만 미군측이 문제토의를 거부하면 자위권을 수호하는 결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

8월 31일 | 북적, 비전향 장기수 김인서씨 송환 요구

9월 1일 | 판문점 제11차 장성급회담 개최

9월 2일 |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서해 군사분계선을 선포함에 대하여' 특별보도

- ① 서해 해상분계선은 정전협정에 따라 그어진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을 따라 북한 강령반도 끝단인 등산곶, 남한 굴업도 사이의 등거리점(북위 37도18분30초, 동경 125도31분00초) 북한 웅도와 남한 서격렬비도·소협도 사이의 등거리점(북위 37도 1분2초, 동경 124도 55분) 그로부터 서남쪽의 점(북위36도50분45초, 동경 124도 32분30초)을 지나 한반도와 중국과의 해상경계선까지를 연결한 선으로 하며 이선의 북쪽을 북한 인민군측 해상군사통제수역으로 함.
- ② 북방한계선은 무효
- ③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에 대한 자위권은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에 의해 행사될 것

9월 3일 | 국가안전보장상임위원회,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성명을 통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분계선은 인정할 수 없으며 NLL은 46년간 존재해온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라고 발표

- NLL은 53년 이후 남북간에 사실상 해상경계선으로 유지되어 왔음. 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부속합의서에서 남북간의 새로운 해상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경계선이 유지돼야 한다고 합의했는데 이러한 문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함. 우리는 북한이 남북간 합의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선포한 경계선은 인정할 수 없음. 남북간 새로운 해상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현재의 NLL을 확고하게 지킬 것임.

9월 3일 | 합동참모본부, 북 북방한계선 무효선언 관련 성명

- 우리군은 북한군이 지난 2일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한 데 대하여 결코 인정할 수 없음. 북방한계선은 46년간 엄연히 존재해 왔고, 현재도 실질적인 경계선임. 우리군은 앞으로도 북방한계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고 북한이 앞으로도 북방한계선을 침범할 경우 우리군은 이를 도발로 간주해 용납하지 않을 것임.

9월 7~12일 |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 및 타결(베를린)

-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고 미국은 대북경제 제재를 완화하기로 합의

9월 7일 | 김대중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북 해상경계선 불인정 표명

-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상분계선을 선포한 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음. 북방한계선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공동위에서 논의할 사항임. 우리는 대북정책에서 안보와 화해·협력이라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임.

9월 14일 | 김대중 대통령, 수행기자 간담회(뉴질랜드)에서 미·북 베를린 회담 타결은 한·미·일 공조와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의 포용정책을 지지한 결과라고 언급

**9월 15일 |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 대북정책권고안 의회 보고**

〈대북정책추진 3단계〉

- ① 북의 미사일 재발사 자제유도와 미국의 대북제재 일부 완화(단기)
- ② 북의 핵, 미사일 개발중단 보장(중기)
- ③ 한반도 냉전 종식(장기)

〈정책권고〉

-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방식의 대북정책 채택
- 미정부의 대북정책 조정을 위한 대사급 고위직 대북조정관 임명
- 한·미·일 공조체를 유지 위해 고위정책 조정감독그룹(TCOG) 존속
- 미 의회의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
- 북 도발에 의한 긴급상황 가능성 대비

**9월 17일 | 미국 클린턴 대통령, 대북경제제재 완화 발표**

- 「적성국 교역법」, 「수출관리법」, 「무기수출 통제법」 등 3개 법안에 의해 규정된 물자수출 입, 금융거래, 투자, 북·미간 항공기·선박 운항분야의 제재 조치 해제
- 테러국 지정, 공산국에 대한 일반적 제재인 무기·방산 물자 수출금지, 원조 금지, 최혜국 대우·일반 특혜관세 (GSP), 수출입은행 보증 금지는 제외

**9월 18일 | 국가안전보장상임위원회,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지지 발표**

- 미 정부의 대북한 제재완화조치는 한·미·일 3국이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접근방안의 일환으로서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기조와 일치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환영함.

**9월 20일 | 김대중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과 청와대 오찬에서 북 미사일 중단 지켜보아야 한다고 언급**

-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합의에 이르렀다는게 중요함. 북한이 합의하게 된 데는 중국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중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일본내 우익 세력들에게 명분을 줄 것을 우려하기도 함.

**9월 20일 | IAEA, 북핵 안전이행 촉구문 채택**

- 북한의 핵안전 조치·이행에 진전이 없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의 핵안전조치에 대한 최초 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과거 정보 보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IAEA와 북한이 체결한 핵안전협정의 유효성과 구속력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조속한 전면 이행을 촉구함.

**9월 24일 | 북한 백남순 외무상,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선언**

- 미국의 요청에 따라 북미사이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위급회담을 진행할 것이며 회담기간에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임.

**9월 28일~ |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방북**

- 10월 2일 - 남북 통일농구대회 관람 및 서해공단 사업 등 협의. 김정일 면담(10월 1일)에서 서해공단 개발문제협의

**9월 30일 | 임동원 통일부 장관, 북에 국군포로 244명 생존 발언**

- 현재 북한에서 신원이 확인된 미귀환 국군포로 244명이 생존하고 있음. 국가정보원이 지난 3월 231명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으나 귀환 국군포로의 증언 등을 토대로 숫자가 더 늘어남.
- 10월 1일 | IAEA, 북에 핵안전협정 이행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 북한이 핵안전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의 과거 핵 활동 규명에 필요한 정보보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함.
- 10월 3일 | 김종필 국무총리, 개천절 경축사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성실이행과 화해협력에 북한의 동참 촉구**
- 10월 4일 | 4사회당 수석대표 박건우 본부대상에서 장재룡 차관보로 교체**
- 10월 8일 | 미·북, 미군유해 평양에서 직접 인도·인수 합의**
  - 판문점을 통해 유엔사가 인수하던 관례 변경
- 10월 10일 | 김대중 대통령, 이북도민 체육대회에서 포용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대북정책의 제일 목표는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언급**
  - 정부는 대북정책의 제1목표를 남북 이산가족의 교류에 두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 끈질기게 노력할 것임. 이산가족 상봉이야말로 최고의 인도적 문제이며 이산가족들이 머지않아 북한의 친척과 친지들을 만나거나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임. 북한은 겉으로 뭐라고 말하건 현실에서는 포용정책에 기반을 둔 한·미·일 3국의 공동 노력에 점차 호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
- 10월 12일 | 미국 페리 대북정책조정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북 협상·위협저지 양면전략 강조**
- 10월 13일 | 김대중 대통령, 통일고문회의에서 대북정책 초점은 평화통일 언급**
  -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이므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하고 미국과 협조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됨. 북한도 처음에는 오해를 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10월 14일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동북아지역 다자안보협력체 구성 반대**
  - 한·미·일이 10월 14일 제주도에서 남·북과 미·일·중·러 등이 참가하는 협력체를 구성하려는 계획은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우리를 고립·압살하는데 이용하려는 위험한 시도임. 조선반도 문제는 미군을 철수하고 우리와 평화협정을 체결 후, 남과 북이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면 해결되는 문제임.
- 10월 19일 | 김대중 대통령,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남북민족경제공동체 건설 피력**
  - 남북한 화해협력을 위해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여 민족전체의 복리를 도모하는 민족경제공동체를 건설해 나갈 것임.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남북고위급회담도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10월 20~26일 | 미국 국무부 관리와 국제개발처 요원 방북, 북한 식량분배 투명성 검증**

- 10월 21일 | 통일부,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제정
- 10월 21일 | 일본, 경수로사업 재원분담금 협정 서명
- 10월 22일 | 통일부, 언론사의 북한 위성TV 방송 시청 허용
- 10월 23일 | 주한외국인 대상 금강산 시범관광 실시
- 10월 25일 | 미국, 미군유해 4구 평양에서 직접 송환
- 11월 1~20일 | 서해공단 후보지 조사단 16명 방북
- 11월 6일 | 미국, 대북 중유 50만톤 지원 완료
- 11월 9일 | 김대중 대통령, 독일 한델스 블라트 신문과 회견에서 동아시아 안보 포럼 등 제안
  -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보장을 위한 대화기구인 동아시아 안보 포럼을 창설하고 1단계로 남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6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구상에 성과가 있으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연계도 가능할 것임. 유럽연합(EU)이 북한과 접촉할 때 북한이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하며 한국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11월 15~19일 | 미·북 고위급회담 개최(베를린)
- 11월 15~19일 |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 겸 FIFA 부위원장, 방북
  - 월드컵을 비롯한 국제축구대회에 남북단일팀 구성 원칙적 합의, 그러나 월드컵 분산개최는 곤란 확인
- 12월 5일 |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 개최, 로저 클린턴과 한국가수들 참여
- 12월 14일 | 일본, '98 미사일발사 이후 취했던 대북제재 조치 해제
  -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중단과 대북식량지원 동결 등 2개항
- 12월 20일 | 민족통일음악회 개최 남북예술인 공연 및 녹화중계 실시
- 12월 22~25일 | 아·태평화위원회 농구대표단 62명 서울 방문
  - 남북통일농구대회 개최(12월 23~24일, 서울). 조선중앙TV 녹화중계(12월 25~26일)
- 12월 23일 | 정부, 박재규 신임 통일부 장관 임명
- 12월 27일 | 김대중 대통령, 시민·사회단체 145명 청와대 초청 오찬시 내년 남북관계 큰 진전 가능성 시사
  - 내년에는 남북관계에 상당히 큰 진전이 있을 수 있음. 우리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통일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남북이 서로 돕는 관계가 돼야 함.
- 12월 29일 | 김대중 대통령, 20세기 송년 특별담화에서 송년특별사면(12월 31일)시 장기수 2명 등 석방 발표
  - 간첩으로 남파된 장기수 2명(신광수, 손성모)을 석방할 것이며 이로써 이 나라는 장기수가 없는 나라가 되었음.
- 12월 30일 | 김대중 대통령, 일본 사민당 기관지 社會新報 신년호에 실린 도이 다카코 사민당수와 회견에

**서 통일 서두르는 것 좋지 않다고 언급**

- 통일을 서두르는 것은 북한에도 한국에도 좋은 일이 아님. 지금 곧 통일해도 우리에게서 북한을 지원할 능력이 없으며 더 나아가 전쟁이 일어나면 쌍방 모두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함. 내가 보는 한 북한은 정말로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함. 그러나 현재와 같은 형태로 경제개방을 하지 않고 사회주의·주체사상·자급자족을 계속 추구하면 발전할 수 없음. 북한과 일본관계도 서로 대화·협력해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일이야말로 양국에 있어서 필요할 것임.

**2000년대**



## 2000년

- 1월 1일 | 북한,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당 창건 55돐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발표
- 1월 1일 | 김대중 대통령, 아사히 신문 인터뷰에서 임기중 남북정상회담 개최 언급  
- 임기중 북한 김정일과의 회담이 실현될 것으로 보며, 통일은 장래의 문제로 후임자들에게 맡길 것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중·일 3국이 협력해 공동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동북아 협력기구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을 통일시킨 동아시아 전체의 협력기구 구성으로 세계와 협력하는 구상을 갖고 있음.
- 1월 2일 | 김대중 대통령, ‘뉴 밀레니엄 100시간 방송(CNN)’ 출연, 남북관계 등에 대해 ‘당근과 채찍’ 발언  
- 북한이 약속을 지키면 그에 상응하는 도움을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고통스런 대가를 받도록 해야 함. ‘당근과 채찍’을 같이 동원해야 함. 미사일 문제는 앞으로 북한과 힘들고 짜증스러운 협상을 계속해야 할 것이며, 핵 문제는 북한이 제네바 협상을 이행하고 있고 우리도 경수로발전소를 착공하는 등 형편이 나은 편임. 한반도 새천년은 분쟁과 갈등의 지역이 아닌 평화와 협력의 지역으로 변할 가능성이 큼.
- 1월 3일 | 김대중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제의  
- 올해에는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남북한간 화해 및 협력관계를 촉진해 나가겠음. 남북은 서로 협력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북한에 대해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국책연구기관간의 협의를 갖자고 제의하는 바임. 새해에는 우선적으로 이산가족의 상봉이 실현되어야 함.
- 1월 5일 | 국가안전보장회의, 2000년 대북정책 3대 방향 결정  
①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  
②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추진  
③ 냉전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 1월 5일 | 북한 주창준 주중대사, 남북정상회담 제의 거부 및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  
-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는 전적으로 김대중의 행동에 달려있으며 한국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을 해체해야 함.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중단해야 미국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며, 현 상황에서 베를린 북·미고위급회담에 따른 고위급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할 수 없음. 일본과 북한간 회담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음.
- 1월 6일 | 미국 워싱턴 타임스, 중국의 대북 미사일부품 수출설 보도  
- 중국은 북한에 장거리 미사일 부품을 직접 수출방식으로 계속 공급하고 있음.
- 1월 7일 | 김대중 대통령, 통일고문회의에서 안보·화해협력 병행추진 언급

- 안보와 화해협력의 햇볕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냉전의 종식이며 평화공존이라는 것을 북한에 되풀이해 확인해줌으로써 북한이 안심하도록 노력하겠음.

**1월 12일 | 중국, 러시아에서 중국에 인계된 탈북자 7명 북한으로 송환**

- 우다웨이 주한 중국대사는 1월 13일 홍순영 외무장관 면담시 탈북자가 단순히 경제적 이유에서 밀입국했기 때문에 북·중 국경조약에 따라 북한에 1월 12일 송환했음을 밝혔음.

**1월 12일 | 북한 노동신문, 대미회담(1월 22일)을 앞두고 미국의 태도변화 촉구**

**1월 14일 | 외교통상부 장관, 우다웨이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하여 탈북자 7명의 북한 송환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 이들의 신변안전을 위한 강력한 조치 요청**

**1월 15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1월 6일 워싱턴 타임스의 보도에 대해 부인**

**1월 16일 | 영국 쉐데이 헬레그래프 지, 북한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콩고민주주의공화국의 군사 훈련을 도와주는 대가로 핵무기용 우라늄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1월 20일 | 김대중 대통령, 새천년 민주당 창당대회 총재 취임사에서 총선후 남북정상회담 제의 피력**  
-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새천년민주당에 힘을 준다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 회담을 열어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남북간의 공존공영의 상호협력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의하겠음.

**1월 21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탈북자 7명 강제송환은 남한으로 유인 납치하려다 실패한데 따른 반공 광대놀음이라고 비난**

**1월 22일 | 북한 외무성, 최근 실시된 미국의 미사일 요격실험을 비난**  
- 협상 분위기와 조미고위급회담 성사를 위해 지난 9월부터 미사일 발사 임시중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때에 미국이 미사일 발사요격 시험을 벌려 놓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미사일 임시 중지문제를 신중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음.

**1월 22~28일 | 미·북 베를린 회담, 고위급회담 개최에 합의**

**1월 26일 | 김대중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총선 후 구체적 결정 언급**  
- 남북정상회담은 총선이 끝난 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제안을 할 것인지를 최종 결정하겠음.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이뤄지려면 필연코 이중과세 협정과 남북간 경제협력기구를 만들어야 함.

**1월 28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김대중 대통령이 언급(1월 2일)한 당근과 채찍전략을 '북한 붕괴론이 깔려 있는 반복대결 전략'이라고 주장**

**2월 3일 | 북한 내각 부총리, 북한 전력사정이 최악이라고 밝히면서 미국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경수로 건설 지연 등 '기본합의문 이행 태만'에 대해 보상하라고 주장**

**2월 7일 | 북한, 아프리카 콩고에서 군사훈련 대가로 우라늄을 도입했다는 보도(1월 16일)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모략'이라고 주장**

**2월 8일 | 김대중 대통령, 유럽·아프리카·중동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서 핵야망 버리면 북 안전 보장**

**언급**

- 북한이 우리의 화해협력 노력에 호응하고 핵과 미사일에 대한 야망을 버리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회복을 지원하며 국제사회의 진출을 도울 것임.

**2월 9일 | 김대중 대통령, 일본 도쿄방송 회견에서 김정일은 식견있는 지도자 평가**

- 남북문제를 풀어가려면 김정일 총비서와의 대화 외에 다른 길이 없으며, 김총비서는 지도자로서의 판단력과 식견 등을 상당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남북이 대화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게임이 될 것임. 확고한 안보체제 및 우방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포용정책을 펼치는 것이 유효하며 냉전종식과 남북화해, 협력·교류의 확대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음.

**2월 15일 | 경수로 본 공사 착공**

**2월 17일 | 정부, 북한이탈주민취업보호지침 제정·시행**

**2월 22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사상 유례없는 전력난으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보도**

**2월 22~25일 | KEDO·북, 고위 전문가회의**

**3월 2일 | 통일부, '이산가족 교류촉진 지원계획' 발표**

**3월 2일 | 북한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대변인, 서해해상에서 남한 군이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하면서 북방한계선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

- 북방한계선은 미군측이 우리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유령선이며 정전협정이나 국제해양법의 초보적인 요구마저 무시하고 설정한 비법적인 선임. 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있을 뿐임.

**3월 7~15일 | 북·미 고위급 회담(뉴욕, 김계관·카트만)**

**3월 9일 |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 선언' 발표**

- ①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 특히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안정된 투자환경 조성, 농업구조 개혁에 우리정부는 북한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음.
- ② 현 단계에서 우리의 당면 목표는 통일보다는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임. 따라서 우리 정부는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힘이 닿는 대로 북한을 도와주려고 함. 북한은 우리의 참 뜻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화해와 협력 제안에 적극 호응하기를 바람.
- ③ 북한은 무엇보다도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적극 응해야 함.
- ④ 이러한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당국 간의 대화가 필요함. 북한은 우리의 특사 교환 제의를 수락할 것을 촉구함.

**3월 9일 | 금강산 유람선(풍악호), 부산 다대포항 출항 시작**

**3월 9~11일 | 2000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 제1차 남북특사 접촉(싱가포르)**

- 3월 13일 | 김대중 대통령, 방송 관계자 초청 오찬에서 북, 베를린 선언 수용 전망**  
 - 북한은 결국 베를린 선언을 수용할 것으로 보임. 결국은 정부끼리 대화해야 하며, 일관되고 성의있게 대화에 나서도록 하면 임기 3년 내에 북한과의 화해 협력이 가능함.
- 3월 14일 | 김대중 대통령, 육군사관학교 임관식에서 어떤 레벨의 남북대화도 수용 언급**  
 - 정부는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어떠한 레벨의 남북대화도 적극 수용할 용의가 있음. 북한이 지금의 경제파탄을 수습하는 길은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대외개방을 하는 길밖에 없음. 우리는 진심으로 북한을 돕고 싶고 흡수통일할 의사가 없으니 안심하고 대화의 길로 나설 것을 성의를 다해 권고함.
- 3월 15일 | 김대중 대통령, 재향군인회 초청 간담회에서 대북인도적인 지원에 상호주의 적용하지 않겠다고 언급**  
 - 북한 동포를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을 생각임. 그러나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와주고 기업을 세워주는 대북 경제협력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할 것임.
- 3월 17일 | 2000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 제2차 남북특사 접촉(상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 3월 21일 | 김대중 대통령, YTN과의 회견에서 국민 찬성하면 남북정상회담 추진 언급**  
 - 4월 총선결과 국민의 다수 의사가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찬성한다는 판단이 서면 남북정상회담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겠음. 국제정세와 북한의 정책 방향 등을 지켜볼 때 남북한 정부 레벨의 대화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망됨. 베를린 선언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방북한 기업인이나 학자들을 통해 얘기(북한의 반응은 아주 부정적인 것 같지는 않음)를 듣고 있으며, 별도의 채널로 북한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없음.
- 3월 23일 | 북한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서해해상군사분계선 확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6개항의 <5개 섬 통항질서> 발표**
- ①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연평도, 우도 주변수역을 각각 제1구역, 제2구역, 제3구역으로 함.
  - ② 제1수로, 제2수로를 통해서만 제1구역, 제2구역으로 통항 가능
  - ③ 공인된 국제항행규칙의 준수
  - ④ 미군측 함정, 민간선박, 비행기는 지정된 구역과 수로를 벗어나지 못함.
  - ⑤ 동 수로와 통항구역은 우리 함정과 민간선박들의 통항을 막지 못함.
  - ⑥ 동 구역과 수로가 미군측 수역으로는 될 수 없음.
- 미군측은 서해해상에서 제정된 통항질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우리 혁명무력은 경고없는 행동으로 대답할 것임을 엄숙히 공포함.
- 3월 23일 | 해군본부 대변인, 북한이 NLL 침범엔 강력 대응 발표**  
 - 우리군은 북한군이 해군사령부 발표를 통해 서해상 군사분계선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서 5개섬 통항질서를 공포한데 대하여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음. 북방한계선은 53년이래 남북간 해상경계선으로 유지되어 왔고, 남북기본합의서(1992)에서 합의하였으며, 이는 현재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임을 분명히 밝혀 둠. 우리 군은 현 북방한계선을 확고히 지켜 나갈

것이며, 북한군이 불법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침범할 경우 이를 도발로 간주하여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

3월 23일 | 2000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 제3차 남북특사 접촉(북경)

3월 29일 | 김대중 대통령, 외교통상부의 업무보고에서 통일보다 평화공존에 역점 언급

- 현 상황에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북한과의 통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남은 임기동안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공존에 역점을 두고 통일은 다음 세대에 맡겨야 할 것임. 이제 북한도 남북관계가 안정돼야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음.

3월 29일 | 북한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미국에 대해 경수로 제공 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 보상을 요구

3월 30일 | 북한 조평통, 5개섬 통항질서 관련 성명

- 미군측과 남조선은 우리의 정당한 조치를 외면하고 비법적인 북방한계선을 계속 고집함. 서해상에서 5개섬 통항질서를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무조건 걷어치워야 함.

3월 31일 | 김대중 대통령, 동아일보 창간 기념 회견에서 총선후 북한 특수 언급

- 총선이 끝나면 국민과 야당에 설명하고, 본격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당국회담을 추진하겠음. 선거 후 중동특수와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북한특수가 있을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들에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투자의 길이 열릴 것임. 총선 후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현재 북한과의 비공식 접촉이 여러 경로를 통해 진행되고 있음.

4월 1~4일 | 경수로사업 관련 KEDO·북한 회의

4월 4~6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3차 회의 개최

4월 8일 | 2000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 제4차 남북특사 접촉(북경)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합의서〉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이 금년 2000년 6월 12~14일까지 평양을 방문  
- 평양 방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 되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  
- 쌍방은 가까운 4월 중에 절차문제 협의를 위한 준비접촉을 갖기로 하였음.

4월 10일 | 남북정상회담 개최 동시 발표(서울, 평양)

4월 11일 | 김대중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베를린 선언 4개항은 정상회담에서 협의 언급

- 남북정상회담에서는 7.4공동성명의 정신을 받들고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을 실현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베를린 선언에서 제안한 4개항의 실천에 노력할 것임.

4월 17일 | 김대중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남북정상회담은 국민적 공감대 속에 추진 언급

- 남북대화는 여야의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 속에 추진할 것이며, 당면목표는 베를린 선언에서 밝힌 4대원칙을 실현하는 것임.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은 구별되어야 하며, 경제협력은 공동의 이익기반과 상호주의에 입각해 진행될 것임.

- 4월 18일 | 정원식 한적 총재,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준비 접촉 재의
- 4월 18일 | 북한, 폐연료봉 밀봉 완료
- 4월 19일 | 북적 위원장, 정상회담 예비접촉 관문점 수용
- 4월 21일 | 미국 골드만삭스 보고서, 남북한 통일비용 최대 3조 5500억 달러 전망
  - 남북한 통일비용이 노동생산성 격차 정도, 통일시기 등에 따라 통일 후 10년간 최소 7천 700억달러에서 최고 3조 550억달러가 소요될 것임. 한국의 통일방식은 정치적 요소를 우선시했던 독일식보다 노동력 이동을 제한하고 자본이동을 촉진해 생산성 격차를 축소하는 등 경제적 요소를 중시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이같은 막대한 통일비용이 들더라도 통일에 따른 반대이익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됨.
- 4월 22일 | 2000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제1차 준비 접촉
- 4월 26일 | 북한 조선중앙방송,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온민족이 내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도
  - 민족 내부에 비록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이 자유로이 내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강화해 나가면 민족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뜻과 힘을 합칠 수 있음.
- 4월 27일 | 2000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제2차 준비 접촉
- 5월 3일 | 2000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제3차 준비 접촉
- 5월 6일 | 통일부, 대북 비료지원계획 발표
- 5월 7일 | 이헌재 재경부 장관, ADB총회에서 회원국에 북한의 가입 협조 요청
  - 한반도 경제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고 특히 ADB 등 국제기구가 북한의 국제금융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방법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희망함.
- 5월 8일 | 2000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제4차 준비 접촉
- 5월 8일 | 북한 외무성, 국가미사일방위체계 수립관련 미국을 비난
  - 미국 지배층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미사일 방위체계를 수립해 보려고 획책하고 있음. 이를 위해 미국이 방패로 내두르고 있는 것이 바로 북조선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론임. 미국이 우리 미사일에서 위협을 느낀다면 자기들이 우리에게 가하고 있는 군사적 위협부터 먼저 해소하여야 할 것임.
- 5월 9일 | <미·북 기본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제14차 협상에 참가할 IAEA 대표단, 방북
- 5월 13일 | 2000 남북정상회담관련 제1차 통신·보도 실무협의 접촉
- 5월 16일 | 2000 남북정상회담 관련 경호·의전 실무협의 접촉
- 5월 17일 | 2000 남북정상회담 관련 제2차 통신·보도 실무협의 접촉

5월 18일 | 2000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제5차 준비 접촉

〈남북합의서(2000년 4월 8일) 이행을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

① 대표단 구성과 규모

- ㄱ. 남측 대표단 수행원은 130명으로 함.
- ㄴ. 남측 대표단 취재기자는 50명으로 함.

② 상봉 및 회담 형식과 횟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 되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됨. 상봉과 회담은 최소한 2~3회 하며 필요에 따라 더 할 수 있음.

③ 상봉 및 회담 의제

상봉 및 회담 의제는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로 함.

④ 체류일정

- ㄱ. 남측 대표단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은 2000년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2박 3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더 연장할 수 있음.
- ㄴ. 북측은 남측 대표단의 구체적인 체류일정을 방문 10일 전에 남측에 통지하며 쌍방이 협의하여 이를 확정함.

⑤ 선발대 파견

- ㄱ. 남측은 30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대표단 방문 12일전에 북측지역에 파견함. 남측 선발대는 필요에 따라 관문점을 통하여 왕래할 수 있음.
- ㄴ. 남측 선발대의 체류일정과 구체적인 실무절차 문제는 남측 선발대의 북측 지역 도착 직후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함.

⑥ 왕래절차

- ㄱ. 남측 대표단의 왕래는 항공로 또는 육로로 하되 항공로로 하는 경우에는 남측 비행기로 하며 육로로 하는 경우에는 북측 자동차로 함.
- ㄴ. 남측 선발대는 북측 자동차를 이용하며 통과지점은 관문점으로 함.
- ㄷ. 남측은 정상일행의 명단을 방문 7일전에 북측에 넘겨주며 선발대의 경우에는 방문 4일전에 북측에 넘겨줌. 명단에는 성명, 성별, 직위, 소속을 밝히며 사진을 첨부함. 명단을 넘겨준 후 변동되는 사항은 관문점을 통하여 먼저 전화로 통지하며 그 다음에 문서로 전달함.

⑦ 편의보장

- ㄱ. 북측은 자기측 지역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들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 등 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함.
- ㄴ. 남측 대표단은 북측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북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름.
- ㄷ. 북측은 남측 대표단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 관문점을 통하여 1일 2회의 행낭 운반을 보장함.

⑧ 신변안전보장

- ㄱ. 북측은 자기측 지역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총리 명의의 신변

안전보장각서를 방문 3일전에 판문점을 통하여 남측에 넘겨줌.

ㄴ. 북측은 남측이 이번 방문의 성격에 맞게 휴대품을 소지하는 조건에서 그에 대한 불가침을 원칙적으로 보장함.

⑨ 수행원, 기자의 표지 및 증명서

ㄱ. 쌍방은 자기측 수행원들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를 각기 편리한대로 함.

ㄴ. 기자는 기자완장을 착용함.

ㄷ. 남측 수행원과 기자는 자기측 총리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휴대함.

⑩ 상봉 및 회담장 표지 및 시설

ㄱ. 상봉 및 회담장과 행사장(숙소 포함) 에는 어떠한 표지도 하지 않음.

ㄴ. 상봉 및 회담장에는 회담에 필요한 시설의 다른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음.

ㄷ. 북측은 상봉 및 회담장과 행사장(숙소 포함) 에서 남측이 연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제공함.

⑪ 상봉 및 회담 기록

쌍방은 상봉 및 회담 기록을 속기, 녹음, 녹화 등 각기 편리한대로 함.

⑫ 상봉 및 회담 보도

ㄱ. 상봉 및 회담 보도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되 필요에 따라 공동보도문을 작성·발표할 수 있음.

ㄴ. 북측은 남측에 실황중계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설치와 인원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텔레비전 영상송출을 위한 전송로 및 위성중계를 위한 편의를 제공함.

ㄷ. 북측은 남측에 실황중계를 위하여 남측 인원이 직접 촬영 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편의를 보장함.

⑬ 기자의 취재활동

ㄱ. 북측은 남측 기자들의 체류기간중 취재활동을 보장함.

ㄴ. 쌍방은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로 함.

⑭ 기타 실무절차 문제

ㄱ. 남측 대표단은 북측 지역 체류기간 이미 가설된 서울-평양간 직통전화 회선과 함께 예비통신으로 위성통신망을 이용

ㄴ. 그밖에 제기되는 실무절차 문제는 남북고위급회담 관례에 따름.

⑮ 합의서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함.

5월 24~30일 | 북·미고위급회담을 위한 준비회담 개최(로마)

5월 24~30일 | 북한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 방문, 공연(5월 26~28일)

5월 29~31일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방문

5월 29일~ | 북한 평양교예단 서울 방문, 공연

6월 10일



5월 31일 | 남북정상회담 선발대(30명) 방북

6월 5일 | 김대중 대통령, 제16대 국회 개원 연설

-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평화공존·경제협력·이산가족 문제 해결·남북한 대화 상설기구 설치 등 베를린 선언의 기초 아래 추진될 것임. 이번 회담에서는 모든 문제를 격의 없이 논의하되 가능한 일부터 합의하고, 합의가 안된 것은 2·3차 회담에서 처리해 나갈 것임.

6월 7~9일 | 북·미 미군유해 송환회담 개최(콜라롬푸르), 금년 중 5차례에 걸쳐 미군 유해를 공동 발굴기로 합의

6월 9일 | 북한 홍성남 내각 총리,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대표단의 신변안전보장각서 통보

6월 13~15일 | 김대중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 남북정상회담,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6.15 남북공동선언〉

- ①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함.
- ②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함.
- ③ 남과 북은 2000년 8월 15일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합의함.
- ④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 신뢰를 도모함.
- ⑤ 위의 네 개항의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남과 북의 당국이 빠른 시일 안에 관련 부서들의 후속 대화를 규정하여 합의 내용의 조속한 이행을 약속함.

6월 16일 | 김대중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각부처에 남북공동선언 이행 지시

-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경제·문화·체육·환경·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접촉과 협력이 다각적으로 진행될 것임. 각 부처별로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공동선언의 실천계획을 마련,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함.

6월 17일 | 장재언 북적 중앙위 위원장, 남북공동선언에 천명된 인도적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대책협의를 의제로 남북적십자회담 6월중 개최 제의

6월 19일 | 미국 정부,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공식 발표

6월 20일 | 북한 외무성, 미국의 전면적인 경제제재 완화를 요구하면서 미사일 발사유예조치의 유효를 재확인

- 미국정부는 대북제재완화조치(1999년 9월 17일)를 정식시행(2000년 6월 19일)하기로 결정한 것은 조·미 사이 논의 중에 있는 워싱턴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현안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임. 워싱턴 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취한 발사 임시중지 조치는 의연히 유효함. 미국은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한 일련의 상징적인 제재완화조치들을 취하는데 머무르지 말고, 대북적대시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고 전면적이며 실제적인 제재해제조치를 취해야 함.

6월 20-21일 | 북한 최수헌 외무상, '북한의 농업회복과 환경보호'(AREP)에 관한 제2차 UNDP회의에서 농업지원을 호소

6월 21일 | 장재언 북적 중앙위 위원장,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장소변경(관문점→금강산호텔) 제의

6월 25일 | 김대중 대통령, 한국전쟁 50돌 기념식에서 남북 군사위원회 설치해 평화를 위한 조치 협의 언급  
- 남북이 군사위원회를 설치해 긴장완화와 불가침 등 평화를 위한 조치에 대해 적극 협의해 나갈 것임. 주한미군 문제관련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체제가 이뤄질 때까지는 물론이고 통일된 후에도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북쪽에 설명했으며, 북쪽도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한 나의 설명에 상당한 이해를 보였음.

6월 27-30일 |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운영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관한 합의서〉

①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 ㄱ. 이산가족방문단은 2000년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3박4일) 동시 교환함.
- ㄴ. 방문단은 책임자 1명, 이산가족 100명, 지원인원 30명, 취재기자 20명으로 구성하며, 방문단 책임자는 각기 편리한 대로 함.
- ㄷ. 방문단의 방문지는 서울과 평양으로 함.
- ㄹ. 쌍방은 방문단 후보자 명단을 방문 30일전에 각기 200명씩 교환하며, 그중 생사·소재를 확인한 후 확정된 방문자 명단을 방문 20일전에 통보함.
- ㅁ. 쌍방은 지원인원, 취재기자를 포함한 방문단 최종 명단을 방문 7일전에 상대측에 통보함.
- ㅂ. 방문단 교환 절차는 1985년 방문단 교환 관례에 따르며, 교환 경로는 육로 또는 항공로로 함.

②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

- ㄱ. 쌍방은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함.
- ㄴ. 면회소 설치·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비전향장기수를 전원 송환하는 즉시 적십자회담을 열고 협의·확정함.

③ 비전향장기수 송환

- ㄱ. 남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전원을 2000년 9월초에 송환함.
- ㄴ. 남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들의 명단과 실태자료를 송환 15일전에 북측에 통보함.
- ㄷ. 북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명단을 넘겨 받은 다음 확인한데 따라 송환 10일전에 남측에 명단을 통보함.
- ㄹ. 비전향장기수 송환 절차는 1993년의 관례에 따르며, 송환 경로는 육로 또는 항공로로 함.

④ 합의서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함.

6월 28-30일 |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정몽헌 현대이산 회장 방북, 김정일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면담(6월 29일)

- 6월 29일 | **김대중 대통령, 제3군 사령부 방문시 주한미군 필요 언급**  
-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아·태지역 특히 동북아의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도 그리고 국가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함.
- 6월 30일 | **국방부, 북괴 대신 북한으로 용어 변경 발표**  
- 남북정상회담 정신에 맞춰 그동안 북한정부를 상대로 사용해 온 북괴라는 용어를 북한으로 북괴군을 북한군으로 용어를 바꿔 사용키로 했음.
- 7월 1일 | **북한 외무성, 'KEDO의 경수로제공 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흑연감속로식 전력생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 뉴욕에서 진행된 케도집행리사회(6월 26일)에서 경수로건설지연으로 인한 우리의 전력손실 보상 제안에 응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은 주제넘은 망언임. 경수로문제 당사자는 케도가 아닌 미국임. 전력손실보상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득불 자연부원과 자체의 기술에 의거한 흑연감속로식 전력 생산의 길로 나갈 수 밖에 없음.
- 7월 1일 | **KEDO대표단, 경수로대상 제공협정 관련 협상차 평양 도착**
- 7월 10일 | **김대중 대통령, 범죄예방대회 수상자 등 관계자 오찬에서 '통일은 20~30년 뒤에' 등 언급**  
- 통일은 서서히 해야 하지만 남북간 전쟁을 하지 않는 화해와 협력은 꼭 빨리 해야 함. 통일은 서로가 더 안심할 때까지 20~30년 정도 기다려야 함. 민족이 잘 지내려면 서로 체제가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함.
- 7월 10~12일 | **북·미 미사일회담, 의견차이로 결렬**
- 7월 14일 | **김대중 대통령, 고노 요헤이 일본 외상 접견시 '북, 차기정권의 대북정책 유지 우려' 등 언급**  
- 북한에서는 다음 정권에서도 현재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인지 걱정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림. 앞으로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려할 만한 일이 될 것임.
- 7월 19일 | **북·미 관계개선회담**
- 7월 20일 | **김대중 대통령, 민주당 당무보고시 월북자 가족 상봉은 화해에 큰 도움 언급**  
- 과거엔 북한에서 남으로 온 가족들이 상봉했으나 이번엔 월북자 가족들이 상봉함. 이는 민족화해에 큰 도움이 될 것임. 과거에는 남북관계가 일회성 단발성이었지만 이제는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변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활성화되고 있음.
- 7월 26일 | **제1차 남북외무장관회담, 국제무대서의 협력 등 합의**  
-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만남이 서로의 이해와 신뢰 증진, 남북관계 발전, 평화통일 실현하는데 있어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 데에 견해의 일치. 남북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확인하고 그 이행을 위한 제반조처들이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는 것을 평가. 남북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대외관계와 국제무대에서도 상호 협조
- 7월 26일 | **통일부, 대북 비료 10만 톤 추가지원 발표**

**7월 29~31일 |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 ① 남북장관급회담을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부합되게 운영
  - ㄱ. 남북장관급회담은 쌍방 정상들이 서명한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 이행문제를 협의, 해결하는 대화가 되도록 함.
  - ㄴ. 남북장관급회담은 불신과 논쟁으로 일관하던 과거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 신의와 협력으로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는 대화가 되도록 함.
  - ㄷ. 남북장관급회담은 민족 앞에 실질적인 결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실천을 중시하며,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 나아가는 대화가 되도록 함.
- ② 남과 북은 1996년 11월에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를 2000년 8.15를 계기로 재개
- ③ 올해 8.15에 즈음하여 남과 북, 해외에서 각기 지역별로 남북공동선언을 지지, 환영하며 그 실천을 위한 전민족적 결의를 모으는 행사를 진행
- ④ 총련 동포들이 방문단을 구성하여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이와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
- ⑤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을 연결하며, 이를 위한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
- ⑥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0년 8월 29~31일 개최(평양)

**7월 30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미국 의회의 북한 미사일 발사시 경제제재 재개 입법화 관련해 경제제재 조치를 재개하려는 무모한 시도라고 보도**

**8월 1일 | 김대중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남북장관급회담이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라고 언급**

- 이번 남북장관급회담은 과거의 남북대화와는 달리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음. 본격적으로 화해협력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음. 미국은 국제 및 경제관계에서 우리의 가장 주요한 협력자이므로 반미는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안됨.

**8월 4일 | 건설교통부, 경의선 복원사업 발표**

- 남북교류활성화에 대비해 경의선 용산-성산-운정-문산 구간(48.6km)의 복선 전철화 사업을 조기 완공기로 하고 오는 10월쯤 성산-운정 구간(23.5km) 노반공사를 착공할 계획임.

**8월 5~12일 | 언론사 사장단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남북 언론사들 간 언론 교류 등 공동합의문〉

- 양측은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통일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언론활동 전개
- 양측은 새롭게 조성된 정세의 흐름에 맞게 민족 내부에서 대결을 피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비방중상을 중지
- 양측은 언론, 보도활동에서 서로 협력하며 접촉과 왕래,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와 신뢰 조성
- 양측의 접촉은 남측에서는 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가 북측에서는 조선기자동맹중앙위원회

가 주관

- 남측 언론사 대표들의 초청으로 북측은 앞으로 적당한 기회에 서울 방문

8월 8~10일 |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 소 500마리와 함께 방북,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면담(8월 9일)  
(면담 합의사항)

- 개성이 북한 서해안공단 부지로 선정됨과 동시에 특별경제지구로 지정
- 서울에서 개성까지 육로를 이용한 관광을 올해 안으로 실시
- 북한측은 일본인과 해외동포의 금강산 관광을 전면 허용

8월 9~10일 |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관련 북·미 회담 개최

8월 14일 | 남북연락사무소 업무 재개

8월 15일 | 김대중 대통령, 광복절 축사에서 평화공존과 평화교류를 확립하는 통일의 제1단계를 실현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 남북간 군사 직통전화를 설치하고, 국방장관급 회담 등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할 것임. 앞으로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군사, 경제, 사회·문화의 3개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며 투자보장, 이종과세 방지 합의서 등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가 더욱 가속화 될 것임.

8월 15일 | 북한, 정부·정당·단체연합대회 개최,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4개항의 공동결의문> 채택

-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이 원칙을 관철.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방도와 연합제안의 공통성을 살려 하나의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현실적·실천적인 조치 실행. 여러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 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는 해내외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과 연대, 단결을 강화

8월 15~18일 | 제1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방문(서울, 평양 각각 100명)

8월 17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을지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8월 21일 시작) 비난

8월 18일 | 김대중 대통령, CNN 방송 기자회견에서 이산가족 편지왕래·재결합 적극 추진 언급

- 앞으로 더 많은 이산가족 상봉과 특히 편지왕래, 전화통화, 장기적으로는 재결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음.

8월 18~24일 |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 서울방문, 합동공연

8월 21일 | 김대중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이산가족 상봉 조기 제도화 지시

- 1천만 이산가족, 7만여명의 상봉신청자를 생각하면 이번 이산가족방문 방식을 갖고는 안된다고 생각함. 정부는 앞으로 남북간 서신왕래, 생사확인, 면회소 설치 등에 힘을 기울여 가능한 짧은 시간내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중점을 두어 노력을 해야 함.

8월 22일 | 현대·북한, <개성공단 개발관련 합의서>에 서명

8월 26일 | 김대중 대통령, 독일 디벨트지 회견에서 통일후 미군주둔 김위원장과 의견일치 언급

-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통일 이후에도 정치적 역학관계와 세력 균형을 위

해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 했음. 남북한 및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일이 추진될 것임.

**8월 29일~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9월 1일** <공동보도문>

- ① 올해 안에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 교환 사업을 두차례 더 진행.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는 남북 적십자 단체들이 곧 토의하며 이와 함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서신교환을 추진하는 등의 문제들을 협의
- ②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함. 이와 관련 하여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가지도록 협의
- ③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 이와 관련한 쌍방 전문가들의 실무접촉을 9월 중에 가짐. 그리고 남측은 북측이 연이어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실정에서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북측에 식량을 차관으로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추진
- ④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를 연결하며 문산-개성사이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9월중에 가지고 착공식 문제 등을 협의
- ⑤ 조속한 시일 내에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 ⑥ 백두산, 한라산 관광단을 각기 100명 정도의 규모로 하여 오는 9월 중순부터 10월초까지 사이에 상대측 지역에 보냄.
- ⑦ 제 3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0년 9월 27~30일 개최(한라산). 장관급회담 대표단의 규모는 각기 편리한대로 함.

**9월 2일** | **비전향 장기수 63명 관문점 거쳐 송환**

**9월 3일** | **김대중 대통령, 방송 3사 특별회견에서 국군포로·납북자 꼭 해결 언급**

- 1천만 이산가족 한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른 시일 안에 소식을 알게 해야 함. 700~800명으로 파악되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함. 이번달 중순에 착공하는 경의선이 내년 9월까지 완공될 것이며, 현대의 개성공단도 1년 내에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받고 있음.

**9월 4일** | **북한 김영남 상임위원장, 유엔 밀레니엄정상회의에 참가하려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미국 항공사의 과잉 몸수색 사건으로 중도 귀환**

**9월 6~8일** | **김대중 대통령,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 참가**

**9월 9일** | **김대중 대통령, 뉴욕타임스지 회견에서 2003년 이전 평화협정 체결 희망 피력**

- 2년여 남은 임기 중에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북한과의 평화·협력·교류가 공고해지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성원이 되는 것을 바라고 있음. 현 단계에서 한반도의 목표는 통일이 아니며 지금 당장 통일이 이뤄진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9월 9일** | **북한 외무성, 김영남 일행에 대한 비행장검색 관련 미국 정부당국이 재발방지 서한을 보내왔다고 언급**

9월 11~14일 | **김정일 국방위원장 특사 김용순 노동당 비서 일행, 방남**

〈김용순특사 방문 공동보도문〉

- ①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앞으로 가까운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시며 이에 앞서 김영남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함.
- ② 쌍방은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간의 회담을 개최하는 문제가 현재 논의 중에 있는데 대해서 환영
- ③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의 생사 및 주소확인 작업을 9월 중 시작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치기로 하였으며, 이들중 생사가 확인된 사람부터 서신을 교환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추진기로 함. 또한 남북적십자회담을 9월 20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여 위 문제와 함께 올해 2차례의 이산가족 방문단 추가교환 문제,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운영 문제를 협의하기로 함.
- ④ 남북간 경제협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9월 25일 서울에서 개최하며, 빠른 시일 내 이를 타결기로 함.
- ⑤ 남북간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남북이 기공식을 개최하기로 함.
- ⑥ 북측은 15명 정도 규모의 경제시찰단을 10월중 남측에 파견하기로 함.
- ⑦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 사업을 위해 금년 내 남북공동으로 조사를 실시,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하기로 함.

9월 15일 | **남북선수단, 시드니 올림픽 개최식 공동입장**

9월 18일 | **경의선 기공식(임진각) 개최, 김대중 대통령 기념사**

- 오늘의 기공식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민족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임.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의선의 복원은 그 동안 남한에만 머물렀던 우리 경제가 한반도 전체로 그 무대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임.

9월 20~23일 |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이산가족 서신교환 규모 등 합의**

〈합의서〉

- ① 이산가족 방문단 추가교환
  - 제2차 방문단 교환은 2000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제3차 방문단 교환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각각 2박 3일간씩 동시 교환
  - 방문단 규모 및 기타 교환절차는 8.15 방문단 교환시의 전례를 따름.
- ② 생사·주소확인
  -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명단을 시범적으로 9월에 100명, 10월에 100명씩 교환하며, 그 이후부터는 교환 규모를 확대
  - 상대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신청자 명단에 대해 생사·주소확인 작업을 즉시 개시하고, 그 결과는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상대측에 통보
  - 명단 및 결과통보 양식은 8.15 방문단 교환시의 전례를 따르되, 명단에는 신청자의 현 주소를 포함시키고, 결과 통보서에는 대상자의 현주소 및 사망일자(사망시)등을 포함
- ③ 서신 교환

-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들의 생사·주소가 확인되는 데 따라 그들 사이의 서신교환을 진행
- 시범적으로 11월중에 생사·주소가 확인된 300명을 대상으로 서신교환을 실시하고, 그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그 구체적 문제는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협의·확정

④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

-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면회소 설치·운영에 따른 구체적 절차 문제를 협의·확정

⑤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은 12월 13~15일 개최(금강산)

9월 22~27일 | **조총련 동포, 제1차 남한 고향방문**

- 고향방문자 50명, 지원요원 6명, 기자 7명 등 63명

9월 22~28일 | **제2차 장관급회담결과에 따른 백두산 관광단(110명) 방북**

9월 25~26일 | **남북경제협력 제1차 실무접촉, <남북간 식량차관제공에 관한 합의서> 채택**

<공동보도문>

-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빠른 시일내에 타결
- 투자보장합의서와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에 대한 토의를 진지하게 진행하였으며, 합의서 초안에 나타나는 차이점에 대해 2차 접촉에서 합의
- 상사분쟁 해결절차와 청산결제에 대한 합의서가 필요하다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앞으로 실무접촉에서 협의
- 제2차 접촉은 10월 18일 평양에서 개최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대한 합의서>

- ① 남측은 조속한 시일내에 북측에 외국산 쌀 30만톤 및 옥수수 20만톤을 차관으로 제공. 제공되는 식량의 인도·인수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식량 인도·인수절차」에 따름.
- ② 식량의 구입 및 인도는 남측이 지정한 식량공급대행사를 통해 이행
- ③ 차관금액은 식량구입비 및 식량의 북한 인도에 필요한 비용으로 함.
- ④ 차관의 상환기관은 식량차관 제공후 10년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1.0%
- ⑤ 이 합의서에 따른 차관공여 및 상환은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함.
- ⑥ 북측은 식량차관 제공이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며,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
- ⑦ 이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당국이 협의하여 해결

9월 26일 |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 ①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 협력을 보장하는데 따르는 군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
- ②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긴요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공동으로 노력

- ③ 당면 과제인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공사를 위하여 각측의 비무장지대 안에 인원과 차량, 기재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쌍방 실무급이 10월초에 만나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 세부사항들을 추진
- ④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 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
- ⑤ 쌍방은 2차 회담을 11월 중순에 북측지역에서 개최

9월 27~30일 |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 ① 이미 여러 갈래 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문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앞으로의 실천적인 사업들을 계속 폭넓고 깊이 있게 협의하고 성실히 추진
- ②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쌍방 적십자 단체들이 제2차 회담에서 합의한 문제들과 함께 금년말부터 생사확인, 서신교환, 면회소설치 등에 관한 조속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적극 협력
- ③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제1차 실무접촉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평가하고 투자보장과 이중과제방지 문제와 함께 분쟁 해결절차와 청산결제제도 마련 문제도 빨리 타결하기 위해 협력
- ④ 경제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제반문제를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협의·설치
- ⑤ 학술·문화·체육 등 제반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바탕위에서 남측은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며 정기적으로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문제와 시범적으로 교수·대학생·문화계 인사 등의 방문단을 상호 교환하는 문제를 제의하였고, 북측도 위의 제안을 포함하여 교류 협력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연구·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쌍방은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협의·결정
- ⑥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0년 11월 28일~12월 1일 개최. 장소는 추후 협의

9월 28일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대북 식량차관 제공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을 의결

- 식량차관 외에 외국산 옥수수 10만 톤을 국제기구 WFP를 통하여 북한에 무상지원하기로 결정

9월 28-30일 | 북·미 통합의제 회담

10월 1일 | 김대중 대통령, 제52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남북평화 구축 4자협상 추진 언급

- 이 땅에 냉전을 종식시키고 흔들림 없는 평화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중 등 4자간 협상을 추진할 것이며, 확고한 안보태세와 남북간 관계 개선으로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없게 할 것임.

10월 4일 | 한국수출입은행·북한 조선무역은행, 차관계약서 체결

10월 6일 | 미·북 국제테러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

- 미국은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를 위한 미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로 하고 국제테러에 반대하고 있음을 고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기 위해 북한과 공동으로 협력해 나갈 것임.

**10월 9일 | 김대중 대통령, 내일신문 창간 기념회견에서 북·미관계 개선 전망**

- 북·미관계가 북한 조명록 특사의 방미를 계기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교차방문할 때 더 큰 선물을 가져갈 것임.

**10월 9-12일 | 북한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특사로 방미**

**10월 12일 | 미·북 공동성명 발표**

- 정전협정을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한국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 문제는 4자회담 등 여러 가지 방도들이 있다는데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함.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할 것임.
- 북한측은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회답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모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임을 미국측에 통보함.
-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자기들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공약과 노력을 배가할 것을 확약함.
- 테러를 반대하는 국제적 노력을 지지·고무하기로 합의함.
- 미 대통령의 가능성 있는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가까운 시일내에 북한을 방문하기로 합의함.

**10월 13일 | 김대중 대통령, 200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

**10월 15일 | 현대아산, 북한 금강산여관 30년 임대계약 체결**

**10월 17일 | 김대중 대통령, 연합뉴스 기자회견에서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냉전 종식 언급**

- 남북간 긴장완화에 진전이 있게 되면 4자회담의 틀 안에서 남북이 주도하여 평화체제에 합의하고 미국과 중국이 이를 지지·보장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임.

**10월 20일 | 아셈(ASEM) 정상회의,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선언' 채택**

- 대화와 인적 교류·경제적 연계 뿐 아니라 북한의 다자대화 참여를 통하여 아셈과 북한간 및 아셈 개별 회원국과 북한간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음.

**10월 20일 | 북한·KEDO, 경수로건설 관련 훈련의정서 조인**

**10월 23일 | 김대중 대통령, BBC 방송 회견에서 북 인권제기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

- 현재는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 쉬운 것부터 풀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서로 자극을 줄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기아와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주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인권문제임.

**10월 23-25일 | 미국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두 차례 회담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기자회견)**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 북미 외교대표부 개설, 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특히 미사일 문제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룩했음. 또한 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논의했으며, 위성발사를 지원하는 대신 북한이 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자제하는 구상도 다뤘음. 미사일 문제에 대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 전문가 회담이 다음 주에 열릴 것임. 전날 집단체조 관람 도중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는 카드섹션이 나오자 김 위원장이 즉각 자신을 쳐다보며 처음이자 마지막 인공위성 발사라고 말했음.
- 10월 27일 | 북한, 제2차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을 11월 8일부터 3박 4일간 평양에서 개최하며 제2차 이산가족방문단 후보자 명단을 금일 오전 중에 교환할 것을 제의
- 10월 27일 | 남북 적십자연락관, 이산가족방문단 후보자 명단(각기 200명)을 교환
- 10월 31일 | 제55차 유엔총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통일 관련 결의안> 채택
  -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을 지지·환영하며 남북간에 평화통일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음.
- 10월 31일 | 김대중 대통령, 코리아타임스 기자회견에서 평화협정에 남한 배제 있을 수 없다고 언급
  - 평화협정은 전쟁당사자가 동의하고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야 함으로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배제되는 평화협정은 있을 수 없음. 남북이 주체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의 4자회담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것이 바람직함.
- 11월 1~3일 | 북·미 미사일 회담 개최
- 11월 8~11일 | 남북경제협력 제2차 실무접촉, 투자보장, 이종과세 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 해결절차 등 4개 부문 합의서에 가서명
- 11월 15일 | 북한, 남한 해군함정이 북측 영해 침범했다고 주장
- 11월 16일 | 북·유엔사 장군급회담, 경의선 공사구간 비무장지대(DMZ) 관리권 한국에 이양 합의
- 11월 17~22일 | 조총련 동포(119명), 제2차 남한 고향방문
- 11월 18일 | 이산가족방문단 최종명단 남북 각각 100명 교환
- 11월 21일 | 현대·북한, 서울-평양 민간 직통전화 개설
- 11월 25일 | 북한 전금진 남북장관급회담 대표단장, 남북장관급회담과 이산가족상봉이 동시에 진행되어 겹치게 되므로 12월 12일부터 3박4일 동안 갖는 것이 좋겠다고 수정 제의
- 11월 27일 | 박재규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 전금진 단장의 11.25 제의에 동의
- 11월 28일 | 제1차 남북군사실무회담
- 11월 30일~ | 제2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 12월 2일 | - 북측 이산가족 방문단 136명,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 151명
- 12월 5일 | 제2차 남북군사실무회담, <DMZ 공동규칙 합의서> 초안 교환

12월 7일 | 서울 가정법원, 북한 주민에 대해 남한 호적등재 승인

12월 8일 |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12월 10일 | 북한 최승철 남북적십자회담 단장, 제3차 적십자회담을 새해로 연기하자고 제의

12월 12~16일 |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 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 ② 어업부문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북측이 남측에 동해 북측 어장의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제공할 것을 제의한데 대해 쌍방 당국의 관계자들이 빠른 시일안에 금강산 지역에서 접촉을 가지고 협의
- ③ 태권도 시범단 교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쌍방 태권도 단체들 사이의 접촉을 권고
- ④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 확인 사업과 서신교환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되 생사·주소 확인은 2001년 1월과 2월에 각각 100명씩, 서신교환은 2001년 3월에 300명 정도로 함.
- ⑤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2001년 2월말에 100명씩 함.
- ⑥ 북측은 한라산 관광단을 2001년 3월, 경제시찰단을 2001년 상반기에 파견
- ⑦ 쌍방 수석대표(단장)들이 서명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관한 이종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대해 각기 발효절차를 거치며 그 결과를 상대측에 통보
- ⑧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1년 3월 중에 개최하며 장소는 추후 협의

12월 21일 | 제3차 남북군사실무회담

12월 27~30일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

- 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 ②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전력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전력협력실무협의회와 전력실태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
- ③ 임진강수해방지사업의 협력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와 임진강수해방지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
- ④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 연결 및 문산-개성간 도로 개설, 개성공단(공업지구)건설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2001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실무협의를 시작
- 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1년 2월 하순경 서울에서 개최

## 2001년

- 1월 1일 | 북한,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자” 발표
- 1월 2일 | 김대중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남북 평화협력 실현을 5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  
-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을 착실히 추진해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 가겠음.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국민이 신뢰하는 남북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완전한 평화체제가 이루어 질 때까지 확고한 안보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음.
- 1월 8일 | 남북경제추진위원회 관련 우리측 합의서안 북한에 전달
- 1월 11일 | 김대중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 노력 의지 피력  
- 정부는 올해에도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확립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음.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을 병행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아갈 것임.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약속대로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음.
- 1월 12일 | 북적, 제3차 적십자회담 금강산 개최(1월 29일) 제의
- 1월 12일 | 한미, 노근리 사건관련 공동 조사 결과 발표  
- 절박한 한국전쟁 초기의 수세적인 전투상황 하에서 철수 중이던 미군은 강요에 의해 1950년 7월 노근리 주변에서 수 미상의 피란민을 살상하거나 부상을 입혔음.
- 1월 12일 |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 노근리 사건 관련 유감 표명 성명 발표  
- 지난 1950년 노근리에서 한국의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은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함. 노근리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과를 정확히 가려낼 수 없었으나, 한미 공동 발표문을 통해 인원을 확인할 수 없는 무고한 한국인 피난민이 그곳에서 죽었다는 결론을 내렸음. 전쟁중 살해된 한국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위해 미국이 건립한 추모비가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이 사건의 종식을 가져 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함.
- 1월 12일 | 북한 전금진 장관급회담 단장, 태권도 교류를 위한 남북 단체 간 접촉 제의
- 1월 15~20일 |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방문 상해 등 경제특구 시찰
- 1월 17일 | 이정재 남북경제추진위원회 위원장,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에 대한 우리측 의견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 우리측 수정안 북한에 전달
- 1월 17일 | 국가안전보장회의, 2001년도 안보정책 3개 기본방향 설정  
① (남북화해협력 증진 관련)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문제 등 각 분야에서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②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구축 관련) 한·미·일 공조 유지를 통한 전쟁억제, 4자회담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 우리 주도의 대북관계 추진,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을 위한 지원

- ③ (안보태세 유지 관련)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유지, 안보정책과 주한미군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이해 확보

1월 22일 | 남북, 남북전략협력 실무협의회(1월 27일)와 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2월 8일)를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1월 28일 | 미국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 한화갑 민주당 최고위원 면담시 '햇볕정책' 용어 사용금지 건의

1월 29-31일 |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공동보도문〉

- ①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을 서울과 평양에서 2월 26~28일(2박 3일) 동시에 교환. 방문단 규모 및 기타 교환절차는 제1·2차 방문단 교환시의 전례를 따름. 제3차 방문단 교환을 위해 1월 31일 교환한 방문 후보자 명단에 대한 회보서는 2월 15일에 교환하며, 최종 방문단 명단은 2월 17일에 교환
- ② 생사·주소가 확인된 300명을 대상으로 한 이산가족들의 서신교환은 3월 15일 관문점 적십자연락사무소를 통해 실시. 이때 교환되는 서신은 편지로 하고, 1~2매의 가족사진을 함께 보낼 수 있음.
- ③ 2월중 실시하기로 한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확인 대상자(각기 100명)명단은 2월 9일에 교환하며, 그 결과에 대한 통보는 2월 23일에 함.
- ④ 쌍방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들의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그 구체적 사항은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협의·확정
- ⑤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과 관련한 구체적 문제들을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계속 협의·확정
- ⑥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은 4월 3~5일, 장소는 추후 협의·확정

1월 30일 | 북한, 남한 이산가족 가족·친척 생사 및 주소확인 회보서 한적 전달

1월 31일 | 제4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대한 쌍방의 합의서 초안을 기초로 이견사항에 대해 중점 협의

2월 2일 | 서영훈 한적 총재, 한나라당 총재 예방시 이산가족 생사확인 매년 1만 명 추진 대북 제의 언급

-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북 이산가족이 매년 1만 명 정도라도 생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고 북측에 제의했음. 이에 대해 북측은 통신사정 미비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조금 있으면 이를 받아들일 것임.

2월 3일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및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 서명·교환

2월 5일 | 김대중 대통령,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DMZ내 생태 보존 지시

-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비무장지대가 유네스코의 접경 생물권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남북협력방안 등을 포함해 관계부처가 노력해야 함. 비무장지대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생태 지대로서 인류의 보물이 될 수 있고 북한도 이 지역의 환경보존에 협력할 것을 믿음.

**2월 7~10일 | 남북전력협력 실무협의회**

- 남측은 남북전력협력을 위해 전력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북측은 남측이 50kw의 전력 지원을 약속한 후 실태조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여 합의점을 찾지 못했음.

**2월 8일 | 제7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경의선 연결사업 등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지원 결정**

**2월 8일 | 제5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채택**

- 관리구역 폭: 경의선 철도 노반을 포함하여 250m
- 관리구역 시설물: 관리구역내에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하지 않으며 다만 DMZ으로부터 250m 떨어진 곳에 각각 1개씩 경비초소 설치
- 지뢰제거 범위: 자기측 지역의 지뢰와 폭발물 제거
- 지뢰제거 작업시기: 작업개시 1주일 전에 상호 통보후 동시 작업

**2월 15일 | 통일부, 2001년도 업무추진 방향 대통령에게 보고**

- 추진목표: 남북화해협력 증진과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으로 남북평화 협력을 실현
- 추진방향: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의 본격화, 상생의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이산가족문제의 획기적·근본적 해결 추진, 대북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임.

**2월 21일 | 북한 외무성, 미국 부시행정부 외교팀의 대북 강경정책 비난**

**2월 21~24일 | 남북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 쌍방은 조사단 구성,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에는 의견접근이 됨.
- 조사관련 자료교환, 홍수 예·경보시설 설치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속 협의하기로 함.
- 차기회담 개최문제를 비롯한 1차회의 공동보도문 문안과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는 판문점을 통해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함.

**2월 23일 | 남북적십자위원회, 제3차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 작업 결과 통보**

**2월 26~28일 |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상호 교환방문(서울, 평양)**

**2월 27일 | 박재규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3월 13~16일, 서울) 제의**

**3월 1일 | 김대중 대통령, 경남신문·충청일보 창간기념 회견시 김정일 위원장 답방때 군사문제 등 합의 도출 언급**

- 김위원장의 서울 답방 때 냉전종식을 위해 평화협정 또는 평화선언 등 군사적 문제를 포함한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내겠음. 남북정상회담과 각료회담 등을 정례화하고, 이산가족 만남을 포함한 교류협력을 상례화하기 위해 문화·체육 교류 등을 활성화하겠음.

- 3월 3일 | 북한 외무성, 지난 2월 21일 외무성대변인 담화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을 비난하면서 미국에 대해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이행할 것을 촉구
- 3월 3일 | 최영철 남북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수석대표, <남북임진강수해방지 공동조사에 관한 합의서> 수정안 전달
- 3월 7일 | 북한 전금진 남북장관급회담 단장,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3월 13~16일, 서울) 제의 동의
- 3월 10~14일 |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방북, 문화·체육 교류 관련 협의
  - 남북은 개성과 고성 내금강을 포함한 금강산지역을 관광자유특구로 지정해 육로관광을 추진키로 합의했으며, 오는 4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단일팀을 출전시키기로 합의했음.
- 3월 13일 | 북한 전금진 남북장관급회담 단장,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불참 통보
- 3월 13일 | 통일부 장관,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연기관련 유감 표명 대북 전화통지문 발송
- 3월 15일 | 남북 이산가족 서신교환, 남북 각 300명, 600건
- 3월 20일 | 북한,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반대 공보 발표
- 3월 21일 | 김대중 대통령, 대통령 자문기구 위원 만찬에서 남북관계와 미북관계 연관성 강조
  - 남북관계는 미북관계의 진전없이 발전할 수 없고 미북관계도 남북관계의 발전없이 진전되기 어려움.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의견의 일치를 봤지만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립이 안됐고 북한에 대해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임.
- 3월 21일 |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사망
- 3월 24일 |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북한 조문단, 서울 방문
- 3월 26일 | 한적, 제4차 적십자회담 서울 개최(4월 3~5일) 제의
- 3월 28일 | 북한,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불참 통보
  - 현지점에서 쌍방이 완전합의를 이룩하기 어렵게 된 형편에서 준비상 관계로 유일팀으로 진출할 수 없게 되었음을 정식으로 알리는 바임.
- 4월 2일 | 김대중 대통령, 중국 인민일보 인터뷰에서 남북평화체제 구축 시급 강조
  - 현재 시급한 것은 남북간 상호 불가침과 냉전종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 것임. 또한 우리의 과제는 즉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방지하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임.
- 4월 3일 |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무산
- 4월 5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 회의 개최
- 4월 6일 | 조총련 동포(80명), 제3차 남한 고향방문
- 4월 9일 | 북한 경비정 1척,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 서해 백령도 서북방 6마일 해상에서 북방한계선을 3마일 정도 침범, 22분간 기동하다  
16:06 북한으로 귀환
- 4월 10일 | 북한 유엔주재 대표, 유엔군축회의 연설에서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위체계 구축 강행을 비난, 북한 미사일문제에 관한 입장을 재차 표명
- 4월 13일 | 남북적십자사, 남북 간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산가족 서신교환 결과를 상호간 구두 통보
- 4월 16일 | 북한 외무성,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RSOI)에 대해 “미국이 한반도에서 대결상태를 조성하려 한다”고 비난
  - 이 같은 전쟁연습은 대화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기로 한 조미사이의 합의를 뒤집고 힘으로 압살하려는 적대시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을 실증하는 것임. 미국의 전쟁책동에 남조선당국이 노골적으로 동조·가담하려는 것은 북남공동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 행위임.
- 4월 18일 | 임동원 통일부 장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예방시 김정일 위원장 답방시기 예측근관 언급
  - 김위원장이 서울에 온다는 것은 서로 합의된 만큼 약속을 지키리라 기대함. 다만 구체적인 일정협의를 없었으며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려움. 올 4~5월에 방문해달라는 의사를 표명한 적은 있으나 지금은 좀 지연되는 것으로 생각함.
- 4월 19일 | 장재언 북적 위원장, 한적에 비료 20만 톤 지원 요청
- 4월 26일 | 통일부 대변인, 대북 비료지원(20만 톤) 발표
- 5월 1일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 추정 인사,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불법 입국 혐의로 체포
- 5월 9일 | 북한, 경의선복원 인력·장비 철수
- 5월 16일 | 북한, 경수로건설 지연 관련 보상 요구 상보 발표
  - 우리는 합의문에서 지닌 자기의 의무를 100%이상 초과 수행하고 있으나, 미국측에 의해 경수로 발전건설은 대폭 지연되고 있음. 경수로 건설지연에 따른 전력손실분을 보상하지 않을 경우 흑연감속로를 되살리는 정황이 조성되지 않을 수 없음.
- 5월 24일 | 김대중 대통령, 서울상주 외신기자 다과회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서울답방 일정 제시 촉구
  -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계기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서울방문에 대한 확실한 스케줄을 밝혀주고 이를 세계에 밝혀줄 것을 진심으로 바랍.
- 6월 2-3일 | 청진2호(1만3천 톤 급), 령군봉호(6천700톤 급), 백막강호(2천700톤 급) 등 북한상선 제주해협 침범
- 6월 6일 | 김대중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 약속 이행 촉구
- 6월 6일 | 미국 부시 대통령, 북한과 대화재개 선언 발표
  -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하였고 안보팀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진지한 논의에 착수하도록 지시했음. 의제는 북한의 핵활동과 관련된 기본합의 의행의 개선, 북한 미사일계획의 검증 가능한 억제 및 미사일 수출금지, 재래식 군사력 태세 등을 포함하고 있음. 북한에 대한 포괄

적 접근의 틀에서 추진할 것임. 한반도 평화, 미국과의 건설적인 관계 및 지역내 안정증대를 향한 진전을 모색할 것임.

- 6월 9일 | 북한 아태위 관계자와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금강산 육로관광 및 대북지불금 관광객 수 비례 지급 합의
- 6월 13일 |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첫 북미 접촉
- 6월 13일 | 미국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서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5대 원칙을 언급
- ① 한국의 대북 화해노력 지지
  - ② 제네바합의 이행
  - ③ 북한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 확산 중지
  - ④ 북한과의 모든 합의에 효율적 검증 문제를 전제조건화
  - ⑤ 한·미·일 공조
- 6월 18일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미 대통령의 대북대화재개 성명 관련 담화 발표
- 미국이 재래식 군사력 문제를 논의하지는 제외(6월 6일)에 대해 경수로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 보상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자고 주장
- 6월 20일 |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 발표
- 6월 24일 | 해군, NLL 침범한 북한어선 첫 경고사격
- 6월 25일 | 대한광업진흥공사, 남북합작 북한 광산(강원도 평강군 압동탄탈륨광산) 개발 발표
- 6월 29일 | 북한 외무성, 장길수군 일가 7명이 제3국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남한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비난
- 6월 29일 | 김대중 대통령, 안보분야 장관 오찬간담회에서 남북대화 준비 및 안보태세 강조
- 남북은 평화공존과 교류를 통해 다시 전쟁을 하지 않는 환경을 정착시키고 통일은 장기적 목표로 보고 추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 남북관계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우리의 안보태세를 갖추고 한미 연합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북한이 미국을 비롯 국제사회와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야 함.
- 7월 3일 | 미국 국무부, 북미대화 첫 접촉결과에 대한 북한측의 직접적인 응답 촉구
- 우리는 북한측이 발표한 6월 18일 성명을 우리가 제시한 제안에 대한 응답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통상적인 창구를 통해 직접적인 응답이 있기를 기대함.
- 7월 4일 | 국정원, 보도자료를 통해 황장엽 씨의 신변안전보장문제를 양국정부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방문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발표
- 7월 13일 | 금강산관광, 쾌속선 '설봉호' 출항으로 재개
- '금강호' 동해항 귀항(6월 30일) 이후 일시적 중단상태였음.
- 7월 20일 | 북한 외무성, 미국의 미사일 요격실험(7월 14일)관련 대응조치를 언급하는 등 강력한 입장을

**표명**

- 미국의 미사일요격실험은 미사일방어체계가 본격적인 수립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부득불 자위적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

**7월 20일 | 한국관광공사, 금강산관광사업 실사단 방북**

**8월 6일 | 김대중 대통령, 카터 전 미대통령 면담시 미북 상호 신뢰구축 필요성 강조**

- 자신있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미국과 북한은 서로 신뢰감을 갖고 접촉하는 것이 필요함. 북한은 미국과 관계개선을 해 안전보장과 경제회복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아직도 그 같은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8월 8일 | 북한 아태위 대변인, 미국이 금강산 관광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

-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서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가로막기 위한 책동은 최절정에 이르렀으며, 여기에 온갖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되었음. 관광대가를 군사적 목적에 이용한다는 터무니 없는 여론을 호도하였고, 관광대가를 미사일개발에 이용한다느니 하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반대하는 대대적인 캠페니아를 벌였음. 미국이 지금과 같이 계속 금강산 관광사업을 방해하고 나선다면 그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임.

**8월 10일 | 서영훈 한적 총재, 적십자회담 제의 30주년(8월 12일) 맞아 성명문 발표**

- 남북적십자회담 조속 개최, 90살 이상 이산가족 1800명(남쪽 기준)의 상봉 또는 생사확인 우선 실시, 당국 간 대화 재개를 위한 남북적십자인의 노력 등을 제안

**8월 15일 | 김대중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6.15 남북공동선언을 준수 및 합의사항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대미 대화재개에서의 적극적인 자세 촉구**

**8월 15-21일 | 8·15민족통일대축전에 남한 방문단, 7대종단·민화협·통일연대 대표 등 394명 방북**

- 남한 대표단 일부, '조국통일 3대현장 기념탑'에서 열린 개막·폐막식 및 예술 공연 참석하고 만경대 방명록 서명

**8월 20일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8.15행사 파문 관련자 「남북교류협력법」, 「국가보안법」 등에 의거 사법처리방침 확정**

**8월 22일 | 김대중 대통령, 제10기 민주평통 운영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북정책 일관성 유지 강조**

- 남북관계가 당분간 정체상태에 있지만 단념하지 말고, 인내심과 일관성과 성의를 갖고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함. 언제 통일하느냐 하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가가 중요함. 마치 기차가 서울에서 평양으로 가고 평양에서 서울로 달릴 때, 언젠가 만나는 것처럼 일관되게 통일을 향한 길을 꾸준히 추진한다면 언젠가는 통일에 이를 것임.

**8월 24일 | 8.15행사 방북단 7명(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간부 6인, 강정구 교수), 구속수감**

**8월 24일 | 김대중 대통령, 통일·외교·안보분야 장관 간담회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냉전적 사고 및 급진적 통일지상주의 경계 당부**

- 남북관계에 대한 냉전적 사고도, 급진적 통일지상주의도 경계해야 함. 최근 남북관계가 일시적 정체를 맞고 있지만 자신감과 인내심을 갖고 대북화해 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9월 1일 | 북한, 대북 경수로사업 건설허가 발급

9월 2일 | 북한 임동옥 조평통 부위원장,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게 대화재개 전통문 발송

9월 2일 | 통일부 대변인, 북측의 남북당국간 대화 재의 관련 논평 발표

- 금일 북측이 남북당국간 대화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재의해 온 데 대해 환영함. 정부는 앞으로 북측과 대화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처해 나갈 것임.

9월 6일 |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서울 개최 재의, 북한 동의

9월 11일 | 미국, 9·11 테러 발생

9월 11일 | 북한 외무성, 일본의 로켓 시험발사(8월 29일)에 대해 일본과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을 비난 하면서 '미사일 재발사 중지를 재고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는 담화 발표

- 우리를 표적으로 미사일과 그 체제개발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 일본의 기도가 현실적인 위험단계에 이르고 있는 엄중한 사태는 위성발사 중지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부득불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음.

9월 13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지난 6개월간 남북대화 중단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임하는 입장을 표명

- 앞으로 북남상급회담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북남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하는가 못하는가는 전적으로 남측이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고 얼마나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하는가 하는 데 달려 있음.

9월 14일 | 경수로사업 본관 기초굴착공사 착공

9월 15~18일 |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 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을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민간급에서의 접촉과 왕래, 협력사업을 상호 이해와 존중의 바탕 위에서 적극 지원
- ②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인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을 10월 16~18일 서로 교환
- ③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함.
  - ㄱ.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쌍방사이에 군사적 보장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 발표되는 데 따라 연결공사에 곧 착수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개통

- ㄴ. 개성공단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가지고 공단의 규모와 구체적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공사에 착수
- ㄷ.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10월 4일 당국간 회담을 열고, 육로 관광을 비롯한 금강산 관광활성화 문제를 협의 해결
- ㄹ. 남과 북, 러시아 사이의 철도연결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가스관의 연결 사업도 검토
- ㅁ. 평화적인 민간선박들의 상호 영해통과 허용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해운 관계자들 사이의 실무 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가지기로 함.
- ㅂ.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협의한 바탕 위에서 쌍방 군사당국 사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대로 11월중 현지조사에 착수
- ㅅ. 이미 서명 교환한 남북경제협력의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보호,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4가지 합의서들을 각기 내부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발효
- ㅇ. 북측의 동해어장의 일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자들 사이의 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가지기로 함.
- ㅈ. 이상의 경제실무적 문제들의 구체적인 이행대책들을 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해당부문 접촉들에서 협의해 나가며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10월 23~26일 개최
- ④ 태권도 시범단을 교환하기로 하고, 북측 시범단을 10월에, 남측 시범단을 11월에 각기 상대측 지역에 파견하며, 이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관계자들 사이에 협의
- ⑤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1년 10월 28~31일 개최

**9월 20일 | 김대중 대통령, 대전시청 업무보고에서 경의선 철도·개성공단 도로사업 의의 강조**

- 경의선 철도와 개성공단 도로, 동해안 육로관광 등은 단순히 교통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비무장지대와 군부가 접하고 있는 전선을 여는 것임.

**9월 21일 | 제45차 IAEA총회, 북한의 핵 비확산의무 이행촉구**

**9월 25일 |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각기 후보자 200명 명단 교환**

**10월 3-5일 | 금강산관광 제1차 남북당국간회담**

- 양측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육로관광을 비롯한 금강산 활성화 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음.
-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음.
- 남과 북은 10월 19일부터 제2차 회의를 갖기로 하였음.

**10월 9일 |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명단 교환**

**10월 12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우리측의 최근 안보태세 강화를 이유로 제4차 이산가족 상봉단 및 태권도 시범단 파견연기 담화 발표**

**10월 12일 | 김대중 대통령, 통일·외교·안보분야 장관 간담회에서 남북현안 관련 북측에 분명한 입장 표**

## 명 지시

- 북측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태권도 시범단 방문을 일방적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우리 입장을 북측에 분명히 표명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

- 10월 13일 | 북한 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회담 단장 김택룡, 제2차 회담(10월 19일) 금강산 개최 대남 제의
- 10월 15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10월 9~10일 원산지역에서 해일과 폭우로 인해 수백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
- 10월 16일 | 북한 박창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단장,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10월 23~26일 금강산 개최 제의
- 10월 16일 | 홍순영 남북장관회담 수석대표, 금강산관광 제2차 남북당국간회담은 설악산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서울에서 각각 개최 할 것을 북한에 수정 제의
- 10월 16일 | 미국 부시 대통령, 연합뉴스 기자회견에서 통일 이후에도 주한 미군 유지 언급
- 10월 18일 | 북한 김령성 장관급회담 단장, 제6차 장관급회담 금강산 개최 주장
- 10월 19일 |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북한 올림픽위원회에 부산 아시안게임 초청장 발송
- 10월 19일 | 한적, 북한 원산지역 주민을 위해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해 성금 10만 달러 송금 계획 발표
- 10월 20일 | 북한 노동신문, 논평에서 이산가족 교환 무산은 남한의 긴장 조성 때문이라고 주장
- 10월 21일 | 북적 중앙위 대변인, 이산가족 상봉 위한 환경과 조건 보장 촉구  
- 지난 10월 18일부 우리측 전화통지문에서 밝혀둔 바와 같이 남측은 무엇보다 흠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남조선에 조성된 살벌한 환경과 분위기부터 일신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임.
- 10월 22일 | 홍순영 남북장관회담 수석대표, 제6차 장관급회담 10월 28일 평양 개최 제의
- 10월 23일 | 북한 김령성 장관급회담 단장, 제6차 장관급 회담 금강산 개최 거듭 주장
- 10월 24일 | 홍순영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 제6차 장관급회담의 평양개최 재차 촉구, 북한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묘향산에서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 전달
- 10월 25일 | 북한 김성령 장관급회담 단장, 제6차 장관급회담 금강산 개최 거듭 주장
- 11월 2일 | 남북장관급회담 대표단 수석대표, 금강산지역에서 개최하자는 북한 제의 수용하고 11월 9~12일까지 개최할 것을 제의, 북한 이에 동의(11월 3일)
- 11월 3일 | 북한 외무성, 반테러 국제협약 서명·가입 결정 발표  
- 〈테러에 대한 재정지원을 억제할 데 대한 국제협력〉, 〈인질반대 국제협약〉 가입
- 11월 9~14일 |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 11월 13일 | 북한 민주조선, 선군정치를 강조하면서 '용군사상(擁軍思想)'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제시
- 11월 14일 | 북한 제6차 남북장관급 회담 대표단장, 회담 종료 성명 발표  
- 북남상급회담 전망을 어둡게 만들어 놓은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의 무성의와 특히 남측 수

석대표의 전횡과 불순한 태도에 있으며, 남측의 태도를 지켜 볼 것임. 제6차 북남상급회담 북측 대표단은 이번 회담에서 취한 남측 수석대표의 부정적이며 독선적인 처사에 대하여 항의하며 깊은 유감을 표시함. 우리는 남측 수석대표라는 사람이 앞으로 우리의 대화상대가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음.

- 11월 18일 | **북한 경비정, 북방 한계선 침범**  
- 08:35경 서해 백령도 서북방 6.5마일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1.8마일 정도 남하했다가 36분 만에 귀환
- 11월 19일 | **서영훈 한적 총재, 강원도 거진 앞 공해상에서 표류중 구조된 북한 선박 1척과 선원 2명을 인도적 입장에서 송환한다고 통보**
- 11월 25일 | **북한 조평통 서기국,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결렬과 관련 우리측에 책임 전가**
- 11월 26일 | **미국 부시 대통령, 기자회견담회에서 북한에 대량과괴무기 확산 중단 촉구**
- 11월 27일 | **북한군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아군초소 총격**  
- 10:42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장파리 중서부 전선 비무장지대(DMZ) 북방 7km 지점의 북한군 경계초소(GP)에서 우리측 경계초소를 향해 2~3발의 총격을 가해왔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음.
- 11월 29일 | **국방부 대변인,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내 총격사건에 대한 대북성명 발표**  
- 북한군은 이번 사건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사측의 접촉제의에 즉각 응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임.
- 12월 3일 | **KEDO·북한, '품질보장 및 보증의정서' 서명**
- 12월 16~30일 | **북한의 경수로사업 관계자 19명, 원자력발전소 등 시찰 목적 남한방문**
- 12월 17일 | **북한 조평통, 남한이 정세를 계속 긴장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남한이 '전환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 12월 20일 | **통일부 대변인, 조평통 담화 관련 논평 발표**  
- 북측이 금번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남북 간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을 평가하며, 조속히 남북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으로 기대함.
- 12월 26일 | **김대중 대통령, 군주요지휘관 오찬에서 남북관계 안정적 발전의 중요성 강조**  
- 남북관계에 있어 우리가 일방적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있음. 사실도 그렇지 않지만 남북 긴장 고조때 부담해야 할 그런 부담은 돈으로 환산해도 엄청난. 외국 투자가가 몰려오는 것도 한국이 안전하기 때문임. 과거 62년부터 97년까지 외국투자가 246억불, 지난 4년간 외국투자가 501억불임.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임. 이런 의미에서도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음.

# 2002년

- 1월 1일 | 김대중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강화 및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추진 강조
  - 튼튼한 안보의 바탕위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 관계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강화시키고 국민의 여론의 바탕 위에서 서두르거나 쉬지 않고 가능한 만큼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언급
- 1월 1일 | 북한, <노동신문>, <조선인민군보>, <청년전위> 공동사설,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 발표
- 1월 4일 | 합동참모본부, 서해 북방한계선 북한 경비정 1척 월선 발표
- 1월 11일 | 표류중인 북한 주민 구조 선박 입항, 북한 송환(1월 15일)
- 1월 14일 | 김대중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국정추진방향 4대 과제의 하나로 남북관계 개선 제시
  - 금년도 국정추진방향 4대과제의 하나로 남북관계 개선을 설정하고, 여타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가 필수 불가결한 조건임을 강조. 특히 남북간 실천과제로 기합의한 경의선 복원·금강산 육로관광·개성공단 건설·이산가족 상봉·군사적 신뢰와 긴장완화 문제 등 5개 핵심과제가 차질없이 실천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언명
- 1월 15~19일 | IAEA 기술팀 방북, ‘동위원소 생산가공연구소’를 포함, 영변의 핵시설물들 방문
- 1월 22일 | 북한 정부·정당·단체합동회의, ‘3대 호소’와 ‘3대 제의’를 제시하고 해내의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 <3대 호소>
    - 6.15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 이행, 북남관계 진전과 통일운동 활성화,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장애하는 요인 제거
  - <3대 제의>
    - 우리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올해),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6월 15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5~8월)
- 1월 23일 | 정부, ‘금강산관광 지원방향’ 발표
  - <기본방침>
    -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아닌 금강산관광사업 자체에 대한 지원으로 접근,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지원
    - 관광공사-현대간 합의를 존중, 관광공사가 보다 능동적인 입장에서 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관광특구 지정, 육로관광 등 북한의 상응한 조치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 경주, 금강산 관광 당국회담 개최도 고려
  - <지원방향>
    - 이산가족, 학생, 교사 등에 대한 관광공사 보조



- 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2001년 6월 29일) 상환조건 완화
- 금강산 현지 외국상품판매소 설치 허용
- 1월 24일 | 통일부 대변인, 북한이 1월 22일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과 당국 간 대화의지를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논평
- 1월 29일 | 부시 미국 대통령, 2002년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an axis of evil)'으로 지목
  - 우리의 목표는 테러를 지원하는 정권들이 미국과 우리의 우방 및 동맹국을 대량살상 무기로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 북한은 주민들을 굶주리게 만들면서 미사일과 대량살상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정권임. 북한은 이란, 이라크와 함께 테러동맹국들과 더불어 세계 평화를 위협하기 위해 무장을 하면서 악의 축을 형성하고 있음. 우리는 테러리스트를 척결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나라들이 대량살상무기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임.
- 1월 30일~ 2월 2일 | 2002년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
- 1월 31일 | 북한 외무성, 부시 미국 대통령이 연두교서(1월 30일)에서 북한을 '악의 축'을 이루는 나라라고 한 것에 대해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강력히 비난
- 2월 6일 | 북한 외무성, 일본의 H2A 로켓 2호기 발사(2월 4일)와 관련 일본 비난
  -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해 경고하고 미국이 일본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난, 이러한 사태가 북한의 자주국방력 강화를 꾀하게 한다고 주장
- 2월 22일 | 김대중 대통령, 제2건국위원회 기초추진위원장 오찬간담회에서 남북 합의실천 주력 언급
  - 앞으로 1년 남은 임기동안 특별히 큰 일을 하지 않겠음.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실천하고 남북경협을 통해 개성공단을 만들고 철도를 연결하는 일이 이뤄졌으면 좋겠음.
- 2월 27일 | 김대중 대통령, LA타임스 회견에서 북한에 대미 대화 촉구
  - 부시 행정부가 진정으로 대화를 바라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북한을 위해 가장 좋은 것임.
- 2월 27일 | 북한 대표단, 남한의 통일연대 불참을 이유로 행사 불가 통보, 2002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무산 성명 발표
  - 미국과 그의 조종을 받는 남조선의 극우 보수 세력들의 책동에 의해 통일연대 대표들의 행사 참가가 불허되는 비정상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예정된 2002년 새해맞이 북남공동모임이 무산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되었음.
- 2월 28일 | WFP를 통한 대북지원 옥수수 수송·전달
  - 10만 톤 중 1차 선적분 23,500톤, 중국 허베이성 진황도항 출발
- 3월 1일 | 김대중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햇볕정책 지속적 추진 강조
  - 취임 이래 일관되게 햇볕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햇볕정책은 굳건한 안보체제의 토대 위에서 북한과 평화공존하고 평화교류하는 것이며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
- 3월 5일 | 6·25전쟁남북인사가족협의회, 6·25 남북자 명단 첫 공개

- 한국전쟁 당시 정부가 작성한 6.25사변 피납치자 명단을 지난달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에서 발견했다고 밝힘. 명단은 1952년 부산에서 피란 중이던 공보처 통계국이 작성한 다섯권으로 8만 2천 9백 59명의 인적사항과 납북경위 등이 수록되어 있음.

**3월 9일 | 미국 국방부, 핵태세 검토(NPR: Nuclear Posture Review) 보고서에서 핵 선제사용 가능 7개국(중국, 러시아, 이라크, 이란, 북한, 리비아, 시리아)에 북한 포함**

**3월 13일 | 북한 외무성, 북한 등 7개국을 핵공격대상으로 지정한 미국 국방부의 핵태세 검토(NPR)와 관련 규탄담화 발표**

- 우리는 지난 8년간 조-미 사이에 우리의 핵시설 동결 대 미국의 경수로 제공을 끝자로 하는 조-미 관계의 개선을 지향한 기본합의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음. 부시집단의 핵공격 계획은 미국이 그 어떤 국제적 합의에도 아랑곳없이 오직 힘으로만 세계제패를 추구하고 이에 장애가 된다고 보는 나라에는 쌍무적 합의도 다 뒤집고 핵공격을 하려 한다는 것임.

**3월 18일 | 외교통상부 대변인, 주 중국 스페인 대사관 진입 탈북자 25인의 국내 입국에 대한 논평 발표**

**3월 25일 | 남·북, 임동원 대통령 특사 4월초 방북 동시 발표**

**3월 26일 | 조선신보, 임동원 특사 방북 남북관계의 중요한 전기 기대**

- 조선반도에 조성된 현 난국을 타개하고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임.

**3월 27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 회의 개최**

**3월 29일 | 김대중 대통령,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대화태도 변화 조짐 진단**

- 단언할 수는 없지만 미국과 북한도 대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음. 남북간의 대화도 이런 방향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 북한이 지금까지의 대화 거부 자세에서 대화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추측이 됨.

**4월 3~5일 | 대통령특사(임동원) 제1차 방북**

〈공동보도문〉

- ①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
- ②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한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에 따라 그동안 일시 동결되었던 남북관계를 원상회복
- ③ 남북사이의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동부에서 새로 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서부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 및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빨리 연결
- ④ 남북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5월 7~10일 개최(서울). 개성공단건설 및 임진강 수해방지대책 등 논의 위한 실무협의회 가동
  -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사이의 회담을 6월 11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

-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을 4월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
- 북측은 이미 합의한 경제시찰단을 5월중에 남측에 보내기로 함.
- 이상의 합의사항들이 이행되고 진척되는 데 따라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개회
- ⑤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을 재개
- ⑥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서로 협력
- 4월 4일 | 북한 외무성,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북한의 <미·북 기본합의문> 이행에 대한 인증 유예를 통보한 조치와 관련하여 논평**
  - 경수로 제공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에 대한 보상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중유가 제때에 납입되게 하는 등 미국 측의 엄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조치가 있게 될 것임.
- 4월 4일 |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미국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
- 4월 6일 | (주)평화자동차(사장 박상권), 남포시 항구구역에서 '평화자동차 종합공장' 준공식 개최**
- 4월 6일 | 가수 김연자, 평양 공연**
- 4월 11일 | 민통선내 경의선 도라산역 개통식(1일 2회 운행)**
- 4월 11일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회견에서 북미대화 분위기 미조성 언급**
  - 조미대화는 반드시 재개돼야 하지만 아직은 대화를 위한 적절한 조건이 마련되지 못했고,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할 수 있을 때 대화에 나설 것임.
- 4월 19일 | 서영훈 한적 총재, 장재언 북적 위원장에게 비료 20만 톤 지원 계획 통보 (4월 25일~6월 2일, 25항차 예정)**
- 4월 21일 | 북한 노동신문, 미국의 양면주의 비난**
  - 미국은 북조선의 미사일수출을 무력으로 저지시키겠다, 미국에서의 동시테러 이후 국제적인 반테러연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북조선이 정보제공, 원조물자수송, 의료지원 등 모든 면에서 반응이 없었다고 말함.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양면주의에 격분하고 있으며 임의의 시각에도 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갖추고 있음.
- 4월 22일 | 합동참모본부, 북한 경비정 서해 해상 NLL 침범 발표**
- 4월 28일~ | 제4차 이산가족 상봉**
- 5월 3일**
  - 4월 28~30일: 남측 이산가족 99명, 북측 가족 186명 상봉
  - 5월 1~ 3일: 남측 가족 466명, 북측 이산가족 100명 상봉
- 5월 1일 | 북한 외무성, 영국 로이터 통신이 보도(4월 29일)한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의 평양 초청설 부인**
- 5월 1일 | 외교통상부 대변인, 미·북 대화재개 환영 논평 발표**
- 5월 3일 | 건설교통부, 홍수방지 대책, 평화의 댐 보장 등 금강산댐 안전대책 발표**
- 5월 5일 | 합동참모본부, 5월 4일 북 경비정 1척 백령도 서북방 4.8km 해상에서 NLL 침범 발표**
- 5월 6일 | 북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대표단,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의 미국 방문시 발언을 이유로 회의 무산 성명 발표하고 해임을 요구**

- 5월 6일 | 통일부 대변인, 북한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를 비롯한 특사 방북 합의사항들의 조속한 이행 촉구
- 5월 7일 |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 금강산댐 붕괴설을 부정하고 '안변청년발전소의 안정성은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 있다'고 주장
- 5월 11~14일 | 박근혜 의원 방북, 김정일 위원장 면담(5월 13일)하고 판문점 통해 귀환  
(기자간담회)  
- 김정일 위원장은 6.15공동선언을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적절한 시기에 남한을 답방할 의사가 있으며 동해안 철도 연결을 한국정부와 합의하면 육로를 통해 오갈 수 있는 적당한 곳에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설치, 금강산댐 공동조사와 남북철도연결을 위한 러시아 및 유럽국가와의 실무협의 설치제외에 대해서도 약속했다고 언급
- 5월 16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미·북 기본합의문>에 따른 경수로 건설 지연에 대한 상보에서 경수로 건설 지연의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보상을 요구
- 5월 19일 | 북한 백남순 외무상,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회견에서 김정일 위원장 서울 방문 용의 있음을 언급  
- 2차 남북정상회담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명시된 사항이며, 김정일 위원장은 서울을 방문, 김대중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를 원하고 있음.
- 5월 19~24일 | 북한 경수로·항공 관계자 10명 남한 방문, 양양공항·김해공항·울진 원자력발전소 견학
- 5월 24일 | 북한, 우리측 군이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탱크를 기동시키는 도발행위를 하였다고 보도
- 5월 30일 | 북적 중앙위원회 위원장, 임남댐 방류 사전 통지
- 5월 31일 | 북한 판문점 연락관, 금강산댐 수위조절계획 통보
- 5월 31일~6월 2일 | 6.15 공동선언 2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행사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민간급 실무접촉
- 6월 1일 | 북한 조선중앙TV, 지상파 방송을 통해 '월드컵 축구' 개막전을 녹화방영하고, 주요경기를 선별적으로 편집하여 방영
- 6월 6일 | 김대중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에서 굳건한 한미 안보동맹을 통해 햇볕정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언급
- 6월 7일 | 미국 나치오스 국제개발처 처장, 북한에 10만 톤의 식량 지원 성명 발표
- 6월 10일 | 미·북, 미군유해 공동발굴 일정 합의
- 6월 10일 | 통일부, 금강산 관광 남북당국자회담 대표단 성명 발표  
- 남북당국자회담이 예정대로 열리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 표명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도록 남북대화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
- 6월 12일 | 평양과학기술대학(남북한 최초의 합작대학) 착공, 2003년 9월 완공 예정
- 6월 14일 | 정세현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 6.15 남북공동선언 2주년 즈음 남북대화재개 촉구

- 6월 14~15일 | 6.15 공동선언 2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남·북·해외 각 200명씩 총 600명 참석
- 6월 19일 | 북한, 한·미 해군의 서해기동훈련에 대해 '민족 자주통일기운을 말살하고 전쟁을 겨냥한 의도적 책동'이라고 비난
- 6월 21일 | 북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치사사건'(6월 13일)과 관련, 각종 성명을 발표하고, 규탄집회 등을 통해 민족적 차원의 반미투쟁을 선동
- 6월 21일 | 김대중 대통령,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에서 남북대화 중요성 강조  
- 어떤 일이 있어도 남북대화는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야 함.
- 6월 29일 |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남북교전 아군 4명 전사(제2연평해전)  
- 오전 10:25분께 연평도 서쪽 14마일 부근에서 남북 해군간에 교전이 발생, 우리 해군 4명 전사 등 22명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우리 고석정 1척이 교전 종료 후 예인 중 침몰
- 6월 29일 | 국방부, 서해교전(제2 연평해전)관련 성명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항의하고 북한의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요구
- 6월 29일 | 북한, 서해교전에 대해 남한의 선제공격에 따른 자위적 조치였다고 보도
- 6월 30일 | 북한 해군사령부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회견을 가지고 NLL의 비법성을 주장  
- 남조선군 당국은 우리 함선들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와 선제사격을 했다고 거짓선전하고 있음. 북방한계선은 50년대에 제멋대로 그은 비법적인 유령선이며, 남조선 군함들과 어선들이 최근 거의 매일 우리 영해 깊이 침범했지만 우리 인민군 해군은 자제력을 발휘했음. 그런데 남조선군은 두 배 이상의 수적 우세 조건에서 기습공격을 했음. 남조선군은 이른바 북방한계선의 비법성부터 인정해야 함.
- 7월 1일 | 김대중 대통령, 도쿄 동포 간담회에서 햇볕정책 지속 의지 표명  
- 햇볕정책은 결코 공산당에 대한 유화정책이나 패배주의적 정책이 아니며,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는 한 평화 증진 노력을 계속해야 함. 북한이 군사대응을 해 피해를 입히려 하고 하면 북한도 큰 피해를 입을 것이고 협력하면 북한도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것임.
- 7월 1일 | 북한 외무성, 서해상 무장충돌의 원인을 미국이라고 언급  
- 서해해상의 충돌사건은 남한 군이 영해침범과 선제사격을 하여 발생한 것으로 우리의 대응은 자위적 조치였음. 북방한계선은 미국이 우리와 합의 없이 그은 비법적 유령선이며, 미국은 남조선군의 술한 우리 영해 침범에 대해 책임 있음. 이번 사건은 미국이 북남관계에 쐬기를 치기 위해 만든 결과물이며, 제3자들은 사건의 근본원인인 북방한계선의 비법성에 정당한 주의를 돌려야 함.
- 7월 1일 | 미국 콜린 파월 국무장관, 서해교전에 따라 특사방북 계획 재검토 방침 표명
- 7월 1일 |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시행  
- 국가계획위원회 권한의 하부단위 위임, 경영 자율성 부여 및 수익에 따른 분배 차등화, 배급계획 폐지와 임금인상

- 7월 2일 | **김대중 대통령, 방일 귀국보고 연설에서 북한 재도발에 대한 경고 및 햇볕정책 지속 의지 표명**  
- 북한이 또다시 군사력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려 한다면 북한도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임.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 한 평화 증진 노력을 계속해야 함.
- 7월 3일 | **미국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 북한에 대북특사파견 계획이 없음을 통보(7월 2일)하였다  
고 발표**
- 7월 7일 | **국방부, 서해교전 유사사태 재발방지책 발표**  
- 한미간 합의를 통해 정전시 유엔사 교전규칙을 보완 검토하고 차기 고속정사업 조기착수 예정
- 7월 15일 | **김대중 대통령, 서해교전 관련 북한의 납득할만한 조치 촉구**  
- 서해교전은 북한이 불법도발 한 것이며, 성의 있고 책임있는 자세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미북 관계도 북측이 서해교전에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때 미북 회담도 열리게 될 것임.
- 7월 20일 | **KEDO관련 남북직항로(양양-선덕) 시험비행**
- 7월 25일 | **북한 남북장관급회담 대표단장, 서해교전 유감 표명 및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 접촉 개최  
제의**  
- 얼마전 서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 서울에서 제7차 북남상급회담을 개최하고 이미 쌍방사이에 합의한 철도연결문제, 이산가족문제 등 4월 5일 공동보도문 이행문제와 그밖에 관심하는 문제들을 원만히 협의하기 위해 8월초 금강산에서 상급회담 대표들의 실무접촉을 제의함.
- 7월 25일 | **통일부 차관, 북측 유감표명 긍정 평가**  
- 북한이 유감표명 및 재발방지 노력을 언급한 것은 서해교전사태와 관련 사실상 사과의 의미를 갖는 것임.
- 7월 26일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미 특사 적극 수용입장 표명**  
- 서해사건 이후 미국의 특사 파견이 취소 됐지만 앞으로 조건이 마련돼 미국이 다시 특사를 보내겠다고 하면 우리는 일관한 입장에서 대할 것임.
- 7월 26일 | **북한 외무성, 요도호 납치범들의 귀국 의사 표명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동 문제와 전혀 관련  
이 없다고 주장**
- 7월 30일 | **정세현 남북장관급회담 대표단 수석대표,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 접촉 개최 동의**
- 7월 31일 | **미·북, 비공식 외무장관 접촉(파월, 백남순), 미·북 대화 재개 합의**
- 8월 2일 | **북한 이찬복 조선인민군 관문점대표부 대표, 서해교전 관련 장성급회담 제의**
- 8월 2~4일 |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  
<공동보도문>  
① 2002년 8월 12~14일까지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 ② 순차에 따라 서울에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 ③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다음의 문제들을 협의·해결, 4·5 공동보도문 이행 확정문제와 제4차 적십자회담 개최 및 제5차 이산가족상봉 실현문제 등
- ④ 제14차 부산아시아드경기대회 북측 참가와 편의보장 등 적극 지원
- ⑤ 8.15서울민족통일대회와 9월 축구경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

8월 5~6일 | KEDO집행이사회 개최

8월 6일 | UNICEF, 북한과 어린이 영양실태 개선을 위한 공동조사 실시 합의(9월~10월)

8월 6일 | 유엔사령부·북한군, 장성급회담

- UNC측은 서해사태 재발방지 대책과 상호긴장완화 방안 등을 제시

8월 7일 | 북한 경수로발전소 원자로 기초콘크리트 타설식이 금호지구 건설현장에서 진행

- 타설 작업은 KEDO경수로 건설 사업이 본격적인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8월 12~14일 |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 경협위 제2차회의 8월 26~29일 서울 개최
- 군사당국자회담 조속 개최
- 9월 중순 금강산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 개최
- 9월 10~12일 금강산관광 당국간 회담 개최
- 8월 17일 아시안게임실무협의 협조
- 남북축구경기 9월 6~8일 서울에서 진행되도록 협력
- 태권도 시범단 교환방문
- 북 경제시찰단 10월 하순 남측 방문
- 8차 장관급회담 10월 19~22일 평양 개최

8월 13일 | 북한 외무성, 미국이 〈미·북 기본합의문〉을 유지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시키려 한다면 조기 핵사찰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경수로 건설 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

8월 14~16일 | 8.15 민족통일대회 개최, 민족단합대회 공동호소문(8월 15일) 및 독도 관련 학술토론회 특별 호소문(8월 16일) 채택

8월 17~19일 |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제1차 실무접촉

8월 21일 | 장재언 북적 위원장, 탈북 선박(대두 8003호)의 기관장 리경성을 본인의사 및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에 송환해줄 것을 요구

8월 21일 | 8월 18일 서해상으로 탈북한 순릉범씨 일가족이 탄 선박의 기관장 리경성, 인도적 입장에서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

8월 25일 | IOC 위원(김운용·장웅),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 합의

8월 26~28일 |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제2차 실무접촉

- 북측 선수단 규모, 방문 방법, 공동 입장, 응원단 파견, 신변안정 보장 등 14개항 합의

**8월 27~30일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수해방지 공동노력, 임남댐 공동조사, 경제협력 4개합의서 발효, 북측에 쌀과 비료 제공, 북측 경제시찰단 남측 방문, 제3차 경추위 11월 6~11월 9일(평양) 개최 합의

**8월 29일 | 미국 볼튼 국무부 차관보, 제네바 합의 미래 우려**

-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를 즉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네바 합의의 미래는 심각한 우려에 빠질 것임. IAEA 핵사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005년 5월까지 경수로 핵심부품 인도는 곤란

**9월 2일 | 김대중 대통령, 통일고문회의 오찬에서 최근 남북 및 북미관계 언급**

- 경의선·동해선 철도 도로연결공사의 동시 착공 등의 일정과 실천방안 합의는 광복이후 처음있는 실질적 긴장완화 조치임. 북미 관계개선은 생존의 문제이며 김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푸틴과 만난 것은 북미관계 개선 여는 계기

**9월 5일 |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성화 백두산·한라산 동시 채화**

**9월 5~8일 | 남북통일축구대회 개최(서울, 0:0 무승부)**

**9월 6~8일 |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 상설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 생사 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 6.25 전쟁시 행불자 생사 주소 확인 문제 협의·해결, 면회소 설치·운영 등을 위한 실무접촉 개최(10월 중순 금강산), 제5차 이산가족 상봉(9월 13~18일) 실시

**9월 7일 | 제10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9월 10~12일 | 금강산관광 제2차 남북당국간회담**

- 육로관광과 관광특구 지정 등에 대해 의견 접근
- 북측이 밀린 관광대가에 대한 정부의 지불 보장을 요구함으로써 성과없이 종료

**9월 11~13일 | MBC 9시 뉴스테스크, 서울-평양(조선중앙TV)을 위성으로 연결, 이월 생방송 실시**

**9월 12일 | 유엔사·북, 〈동해선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DMZ 공사 관련 관리권 이양 합의문〉 서명**

**9월 12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신의주 특별행정구(경제특구) 지정 및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채택**

- 초대행정장관에 양민 어우야 그룹 회장 임명(9월 25일)

**9월 13~17일 |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관련 기술적 문제와 장비·자재 지원문제 등 협의

**9월 13~18일 | 제5차 이산가족 상봉**

- 9월 13~15일: 북측 이산가족 100명, 남측 이산가족 455명 상봉
- 9월 16~18일: 남측 이산가족 99명, 북측 이산가족 221명 상봉



- 9월 14일 | 제6차 남북군사실무회담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위해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공사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문안 타결. 남북은 18일 각기 편리한 지역에서 착공하되 19일 비무장지대 통문을 개방해 지뢰제거 작업을 동시에 개시하기로 함.
- 9월 14~17일 | 남한 태권도 시범단 평양 방문
- 9월 16일 | 제7차 남북군사실무회담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 기간에 현장의 양측 군실무자들이 연락할 수 있는 직통전화를 24일부터 가동. 동해선의 경우 경의선 핫라인을 통해 공사 관련사항을 협의하고 동해선 지뢰제거 작업이 끝난 뒤 별도 핫라인 개설 문제 논의
- 9월 16일 | 북한 인공기, 분단 이후 최초로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호텔에 공식계약
- 9월 16일 | 한국수출입은행, 대북식량(쌀 40만톤) 차관 계약
- 9월 16일 | 미국 럼즈펠드 국방장관,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언급  
-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분야를 포함해 전세계에서 최악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 확산국이며 핵무기를 보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은 북한주민에게 최대의 위협이며 한국에 대한 위협
- 9월 16~18일 | 남북임남담공동조사 실무접촉, 합의 실패
- 9월 16~22일 | KBS, 남북교향악단 방북  
- 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단독공연(9월 20일), 북한의 조선국립교향악단과 합동공연(9월 21일)
- 9월 17일 | 제8차 남북군사실무회담  
-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채택
- 9월 17일 | 제10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
- 9월 17일 | 북한 최수현 외무성 부상, 제57차 유엔총회에서 통일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연설
- 9월 17일 | 북한 외무성,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  
- 이번에 확인된 생존자들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일본으로 귀국 또는 고향방문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 표명
- 9월 17일 | 일본 고이즈미 총리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 4개항의 〈평양선언〉 발표  
- 오는 10월중 양국간 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키로 합의
- 9월 18일 |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 9월 19일 | 통일부 대변인,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입장 발표  
- 정부는 납북자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많은 논의를 해 왔으며, 이산가족 상봉시, 비록 소수이지만 국군포로·납북자의 가족상봉이 이루어지고 있음. 남북관계의 특수

상황은 일본의 납치자의 경우와 차이가 있으며, 앞으로 상호신뢰구축에 따라 점차 해결이 촉진될 것을 기대함.

9월 19일 | 남북 경의선·동해선 DMZ 지뢰 제거 동시 착수

9월 20일 | 북한 조평통 서기국, 남한 영화계 일각에서 남북대결을 조장하고 북한체제를 비방하는 영화가 제작·상영되고 있다면서 이의 중지를 촉구

9월 20일 | KBS 교향악단, 평양 공연

9월 22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신의주 특별 행정구 신설에 관한 정령 보도

-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신의주시 31개 동과 4개 리, 선상동 토성리 등 6개 동 일부와 2개 리 일부, 의주군 1개 리와 2개 리의 일부, 염주군의 1개 노동자구 일부와 1개 리 일부, 철산군의 2개 리 일부를 관할, 특별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수행정단위로서 중앙에 직할

9월 23일 | 남북 개천절 공동행사 개최 합의

9월 24일 | 남북 군 당국 간 직통전화 개통

- 자석식전화 1회선, 팩스 1회선을 오후 4시까지 운용

9월 24일 | 조선중앙통신, 양변 신의주 특구장관 조선의회에 합의이행 서약 보도

- 특별행정구를 빠른 시일에 세계적 수준의 도시로 건설해 강성대국 건설이행을 서약

9월 25~30일 | MBC 공연단 방북, 평양 특별공연

- 이미지·최진희 등 181명 방북, 북측과 합동공연

9월 26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신의주특구 기본법 발표

- 6장 101조와 부칙(4조)으로 된 기본법 전문은 크게 정치(1장), 경제(2장), 문화(3장), 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4장), 기구(5장), 구기-구장(6장) 및 부칙으로 구성

9월 29일~ |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10월 14일 - 북한 선수단(1진 9월 23일, 2진 9월 27일), 응원단(9월 28일) 등 총 688명 김해공항과 부산항을 통해 방남

10월 3일 | 제9차 남북군사실무회담

- 북측 유영철 대좌는 경의선·동해선 지역에서 각각 지뢰제거작업의 30% 안팎을 마쳤다고 밝힘.

10월 3~5일 | 미국 켈리 국무성 동아시아 및 태평양문제 담당 차관보,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방북해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회담(10월 4일)

<미 특사 성명 발표>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개발과 수출, 재래식 병력 위협, 인권 유린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중단을 요구

10월 3일~ | 남북군사실무접촉(1~5차, 판문점)

11월 3일

- 10월 4일 | 중국, 양빈 신의주 특별행정구 초대 행정장관 전격 연행, 탈세 등 불법 기업활동 관련 조사
- 10월 9일 | 윤진식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북한 박창련 위원장, 경제 분야 후속 남북회담 개최 일정 합의
- 10월 11일 | 제10차 남북군사실무회담
- 10월 12~14일 | 남북철도·도로연결 제1차 실무접촉  
- 1차분 자재·장비 제공 품목 및 수량과 자재·장비 인도 인수 절차에 합의
- 10월 13~14일 | 남북해외 청년학생 통일대회 개최, 6.15 공동선언 관철, 전쟁방지등 공동선언문 채택
- 10월 16~17일 | 남북여성 통일대회 개최  
- 여성사회의 연대와 단합도모, 남녀평등 기틀마련 등 4개항의 공동결의문 발표
- 10월 16일 | 제11차 남북군사실무회담
- 10월 17일 | 미국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 켈리 방북단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북한에 전했으며 북한측은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발표
- 10월 17일 | 이태식 외교부 차관보, 북한 핵개발 관련 정부성명 발표  
- 북한의 어떠한 핵 개발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제네바 합의, 비확산협정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모든 의무를 계속 준수할 것을 촉구함. 핵문제에 관한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함.
- 10월 17일 | 김대중 대통령, 북 핵개발 불용 표명  
-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개발은 용납할 수 없음.
- 10월 17일 | 미국 부시 대통령,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의 존재를 시인한 것은 “걱정되고 정신이 들게 하는 뉴스”라며 앞으로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언급
- 10월 18일 | 북한 철도성 대변인, 러시아의 북·남 철도와 시베리아철도와의 연결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남·북·러의 3자회담 제안  
-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결실을 기대함.
- 10월 19일 |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북한에 차관방식으로 제공하는 자재·장비 중 1항차 수송선박이 인천항과 속초항에서 동시 출항
- 10월 19~22일 |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 대화에 의한 핵문제 해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건설의 적극 추진, 개성공단내 사무소 설치, 해운합의서 채택, 통행합의서 채택을 위한 실무접촉 개최, 동해어장 공동이용 위한 실무접촉 개최, 금강산 면회소 건설, 이산가족 생사확인 사업 적극 추진, 제9차 남북장관급 회담 2003년 1월 중순 개최 합의

- 10월 20일 | 미국 콜린 파월 국무장관, NBC와의 회견에서 북의 비밀 핵개발 계획으로 제네바 합의가 무효화 되었음을 표명
- 10월 21일 | 미국 부시 대통령, 나토 사무총장과 회견에서 북핵 문제를 우방국과의 공동의 외교적 압력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언급
- 10월 22일 | 김대중 대통령, 백범기념관 준공식에서 북 핵개발 폐기 강조
  - 우리의 태도는 확고하며 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물론 남북한의 공존을 위해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함.
- 10월 23~26일 | 북한 태권도 시범단(41명), 서울 공연
- 10월 25일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및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동시개최 합의(10월 30일~11월 2일, 평양)
- 10월 25일 | 북한 외무성,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제의
  - 미 특사는 아무 근거자료도 없이 우리가 핵무기 제조목적으로 농축우라늄 계획을 추진하여 조미기본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그것을 중지하지 않으면 모든 대화는 파국상태에 들어갈 것임. 미국이 불가침 조약을 통해 우리에게 대한 핵불사용을 포함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음.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방법은 협상과 억제력의 방법도 있으나, 우리는 될수록 전자를 바라고 있음.
- 10월 25일 | 외교통상부 대변인,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10월 25일)에 대해 북한이 핵개발 계획의 실체를 밝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 핵개발 불용 원칙 재천명
- 10월 25일 | 미국 맥코맥 백악관 대변인, 북한 불가침 조약 체결 제안 일축
  - 국제사회가 이미 북한이 자체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해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기정사실화 했다고 강조
- 10월 25~26일 | 제12차 남북군사실무회담
- 10월 26일 | 한·미·일 정상, 북한의 핵 폐기 및 국제적 의무 준수 촉구
- 10월 26일~ | 북한 경제시찰단(박남기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등 18명), 방남
- 11월 3일 | - 전국 18개 지역 38개 산업시설, 연구소 등 방문
- 10월 29일 | 미국 콜린 파월 국무장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폐지에 대한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
- 10월 30일~ |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 11월 2일 | - 12월 중 건설착공, 1단계 100만명 개발을 2003년까지 끝내도록 협력, 북측은 개성공업지구법을 11월에 발표할 수 있도록 제기, 남측 해당부문 사무소 설치 등 7개항 합의
- 10월 30일~ | 남북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 11월 2일 | - 2003년 1월 3차 회의를 서울에서 갖기로 합의

- 10월 31일 | 남북적십자 제1차 실무접촉, 합의없이 종료
- 11월 2일
- 11월 2일 | 북한 외무성, 미국의 '선 핵 포기, 후 대화'의 부당성 비난
- 미국의 선 핵포기 주장은 새로운 충돌을 불러오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그에 상응한 대응책을 강화하는데로 떠밀 뿐임.
- 11월 6~9일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 동해선은 금강산지역에 연결, 북측은 11월 중순 개성공업지구법 공포, 남측은 기반시설건설을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 해운협력 및 동해어장 공동이용 관련 실무접촉 개최, 경제협력 4개 합의서 발효 등 6개항 합의
- 11월 12일 | 북한, 우리측 군이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하여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고 보도
- 11월 13일 | 합동참모본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는 북한방송 보도는 왜곡보도라고 확인
- 11월 13일 | 제13차 남북군사실무회담
- 11월 13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선군정치는 조선의 기본정치방식 논평
- 선군정치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하여 사회주의 위업전반을 밀고 나가는 혁명영도 방식임.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압력과 위협에도 끄떡하지 않는 자주적, 혁명의 앞길을 주동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결단성은 군사적 위력에 바탕을 두고 있음. 민주주의정치와 인덕정치가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 주고 값높은 삶과 행복을 누리게 한다면 그러한 정치를 가장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것이 선군정치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노동당과 사회주의정권 하에서 선군정치 보다 위력한 정치방식은 없음.
- 11월 13일 | 미국 부시 대통령, 국가안보회의에서 11월분 대북중유는 예정대로 지원하되 12월분부터는 중유지원 중단할 것임을 발표
- 11월 15일 | 미국 부시 대통령, 북핵폐기 촉구·북 침공 않겠다는 대북성명 발표
- 미국은 북한과 다른 미래를 가지기를 희망하며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음. 핵무기 계획의 완전하고 가시적인 제거를 촉구
- 11월 16일 | 북한 철도성 대변인, 미국의 DMZ내 남북철도 도로연결공사 방해 행위 중단 촉구 관련 성명 발표
- 미군측은 북과 남의 검증인원들의 명단을 제기하라는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북남동·서해 철도·도로연결을 노골적으로 방해해 나서고 있음. 지난 9월 북남 군부 책임자들이 서명한 합의서에서도 북남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모든 군사적 문제들을 북과 남이 협의처리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음.
- 11월 16일 | 북한 경비정, 서해교전 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침범

- 11월 18~20일 | 남북해운협력 제1차 실무접촉
  - 2002년 12월 제2차 실무접촉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11월 18~20일 | 남북철도·도로연결 제2차 실무접촉
  - 남북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공동측량 절차와 방법에 대해 합의
  - 경의선은 11월 29~30일에 공동측량
- 11월 20일 | 합동참모본부, 북한 경비정의 NLL침범 발표
- 11월 21일 | 북한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우리측 해군 전투함선들이 11월 20일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발표
- 11월 21일 | 북한 외무성, KEDO의 대북 중유제공 중단결정(11월 14일)에 대한 비난
  - 이 결정은 경수로 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 대용 에너지로 중유를 제공한다는 조·미 기본합의문 제1항에 대한 여지없는 기만임. 미국이 기본합의문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행의무까지 일방적으로 포기한 조건에서 우리는 기본합의문이 완전히 깨어지게 된 책임한계를 명백히 그어야 할 때가 왔다고 인정함.
- 11월 25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금강산관광지구 지정(10월 23일), 「금강산관광지구법」 채택(11월 13일) 사실 보도
- 11월 26일 |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공동측량 완료
- 11월 27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개성공업지구 지정(11월 13일), 「개성공업지구법」 채택(11월 20일) 사실 보도
- 11월 29일 | 경의선 철도·도로연결 공동측량 완료
- 11월 29일 | IAEA 이사회, 북한 우라늄 농축 핵무기 개발문제와 관련 결의안 채택(비엔나)
  - IAEA가 지난달 요구한바 있는 해명 요구에 신속하게 응하고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 모든 관련 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받고 안전조치를 취하는 한편 신속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모든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할 것을 촉구
- 12월 1일 | 북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단장, 남북왕래 인원의 군사분계선 통과절차 관련 미국 비난
- 12월 2일 | 북한 백남순 외무상, IAEA 사무총장에게 결의문 채택의 부당성과 접수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서신 발송
- 12월 6~8일 | 개성공단건설 제1차 실무접촉
  - 12월 26~30일 사이 착공식에 앞서 개성-문산간 임시도로 개통, 개성공단 통신, 통관, 검역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
- 12월 10일 | IAEA 사무총장, '신고가 되지 않은 핵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
- 12월 10일 | 스페인 해군, 북한 화물선 '소산호' 인도양에서 나포, 미국 해군이 수색한 결과 15개의 스킵드 미사일 발견

- 12월 11~13일 |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 없이 종료
- 12월 12일 | 북한 외무성, 미국의 대북 중유제공 중단에 따라 핵시설 가동 재개 담화 발표  
- 중유제공을 전제로 하여 취하였던 핵동결을 해제하고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 핵시설을 다시 동결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음.
- 12월 12일 |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동해선 임시도로 완공
- 12월 13일 | 북한 외무성, 미국의 북한 화물선(서산호) 억류 관련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한 해적행위'라고 비난
- 12월 13일 | 김대중 대통령, 북한 핵동결 해제 관련 미국 부시 대통령과 전화 통화  
- 한·미·일 3국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통해 냉정히 대응 할 것을 언급
- 12월 13일 | 북한 원자력총국장, IAEA 총국장에게 '동결된 모든 핵시설들에 대한 봉인과 감시 카메라를 최단 시일내에 철거해 줄 것'을 요구 하는 내용의 서한 발송  
- 국제원자력기구가 동결된 우리의 모든 핵시설들에 대한 봉인과 감시 카메라를 최단 시일내에 전부 견어내도록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의 요구를 실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
- 12월 14일 |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 남북관리구역 지뢰제거 완료
- 12월 15일 | 북한 조평통, 전력생산을 위해 핵동결 해제 조치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
- 12월 15~17일 | 남북철도·도로연결 제3차 실무접촉  
- 자재·장비가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임시 도로를 개성공단 착공 전까지 개통, 차량운행기본합의서 조속 발효, 열차운행기본합의서도 빠른 시일내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 남북 철도·도로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의 2003년 1월 중순 평양 개최 등 4개항 합의
- 12월 15~17일 | 남북적십자 제2차 실무접촉  
- 금강산면회소 장소, 설계 문제와 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 구성 등에 의견을 같이하고 제6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 문제에 대한 원칙적 합의
- 12월 16일 | 북한 남북개성공업지구건설분과 대변인, 미국이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
- 12월 16일 | 북한 외무성, '미국과 일본이 인도주의 협조를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앞으로 정치적 조건이 붙은 지원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12월 19일 | 제16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노무현 후보 당선
- 12월 20일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한·미간 긴밀한 공조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의지 표명
- 12월 22일 | 북한,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핵시설 봉인 및 감시카메라 제거 발표
- 12월 23일 | 제14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경의선과 동해선 임시도로 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문제 논의

- 12월 23일 | 외교통상부 대변인, 북한의 원자로 봉인 제거와 감시카메라 작동 중지 등에 대해 즉각 원상복구 할 것을 촉구
- 12월 23일 | 제6차 남북군사실무접촉 개최
- 12월 25-28일 | 남북해운협력 제2차 실무접촉
  - 15개항의 남북 해운합의서에 가서명
- 12월 26일 | IAEA, 북한의 영변 3개 핵시설에 대한 대부분의 봉인 제거 및 감시장비 작동중단조치 실행 확인
- 12월 27일 | 북한 원자력총국장, IAEA 총국장에게 서한을 통해 방사화학 실험소 가동 및 IAEA 사찰단원들의 추방을 통보
  - 중단하였던 원자력발전소들의 건설을 완공하게 되며 이 발전소들이 운영되는 때에 나오게 될 수많은 폐연료봉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방사화학실험소도 가동시키게 될 것임. 사찰원들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 상주할 명분이 없어진 조건에서 우리 정부는 그들을 내보내기로 결정하였음.
- 12월 27일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북한에 핵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북핵 성명 발표
- 12월 29일 | 북한 외무성, 미국의 핵문제 국제화 움직임 관련 NPT 탈퇴용의 표명하고, 전제조건 없는 대화 촉구
  - 뉴욕 조미 공동성명에 따라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 조약에서의 탈퇴 효력을 임시정지시켰음. 하지만 미국이 기본합의문까지 파기하기 시작함으로써 우리의 특수지위마저 위태롭게 되었음.
- 12월 29일 | 북한 조평통, 미국의 방해로 동·서해 지구 임시도로 통행을 위한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이 결렬되었다고 주장
- 12월 30일 | 김대중 대통령,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핵관련 언급
  - 관계가 경색되면 될수록 햇볕정책은 유효하며 우리가 햇볕정책을 가지고 북한을 유도할 때 그것은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임.
- 12월 31일 | IAEA 사찰관 3명 전원, 북한의 추방 통보에 따라 베이징을 통해 북한 철수
- 12월 31일 | 미국 부시 대통령, 북핵 외교적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 천명



## 2003년

- 1월 1일 | 북한,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위대한 선군기치 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자” 발표
- 1월 2일 | 김대중 대통령, 2003년도 신년인사회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4강 외교에 주력할 것을 표명
- 1월 4일 | IAEA, 북핵문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한달 유예 결정
- 1월 6일 | IAEA 특별이사회, HEU 핵개발계획에 대한 해명 및 핵동결 원상복귀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 1월 6일 | 통일부 장관, 서울에서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1월 14~17일) 제의
- 1월 6~7일 |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그룹 회의(TCOG), 북한 핵무기 개발계획 폐기 촉구 공동성명 발표
- 1월 8일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북핵문제 해결에 외교적 진력 강조
- 1월 8일 | EU 집행위원회, 대북긴급식량지원 결정(9백 50만 유로 상당)
- 1월 9일 | 북한 김령성 남북장관급회담 대표단 단장,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날짜 1월 21~24일로 수정 제의
- 1월 10일 | 북한, 정부 성명을 통해 NPT 탈퇴 선언
  - 1993년 6월 11일부로 정지시켜 놓았던 NPT 탈퇴효력이 자동적으로 즉시 발생한다는 것을 선포, 자주권과 생존권을 고수하기 위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 핵 활동은 현 단계에서 전력생산을 위한 평화적 목적,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주장
- 1월 10일 |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 소집
  - 북한의 NPT 탈퇴의 위협성을 경고, 탈퇴성명의 즉각 철회 촉구
- 1월 11일 | 북한 최진수 주중 대사, 미사일의 개발·시험·대비·수출은 자주권의 문제로서 미국에 의해 북·미합의가 무효화 된 상황에서는 시험발사 가능하다고 주장
- 1월 12일 | 북한 노동신문, 사설에서 ‘어떠한 경제제재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경고
- 1월 13일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제임스 켈리 면담에서 북한 핵을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임을 언급
- 1월 14일 | 미국 부시 대통령, 핵 포기하면 북에 경제 지원 표명하며 다자간 협상 제의
- 1월 15일 | 북한 외무성, 미국의 대북 대화용의 표명과 에너지·식량지원 언급이 국제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기만극에 불과하다고 비난
- 1월 15일 | 정부, 북한의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1월 21~24일, 서울) 제의에 동의
- 1월 16일 | 북한 박창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개최

(1월 22~25일, 평양) 제의

1월 17일 | 북한, 한국의 식량차관 40만 톤 제공에 사의 표명

1월 17일 | 정부, 북한의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개최(1월 16일) 제의에 동의

1월 17일 | 미국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모든 대량살상무기 폐기와 북한 안보 보장을 교환하는 포괄적 협약도 가능하다고 언급

- 불가침 조약 체결은 비현실적이며, 평화적 의도에 대한 서면 보증이나 서한은 가능

1월 18일 | 조선신보, 북한 중유공급 중단으로 인한 전력난으로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준비 보도

1월 18일 | 북한 오성철 외무성 국장, 북한의 핵 개발 시인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꾸며낸 허위극이며 NPT 탈퇴 조치는 김정일의 용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

1월 20~22일 | 남북적십자 제3차 실무접촉,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운영, 제6차 이산가족상봉 등 합의 <합의서>

① 금강산면회소 설치 및 운영

② 제6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2003년 2월 20~25일, 금강산)

③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된 사람들의 생사·주소확인문제,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문제와 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관한 문제 등은 제6차 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 건설 착공식 후에 협의·해결

④ 제4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2003년 4월말 개최(금강산)

1월 21~24일 |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공동보도문>

-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6.15 공동선언을 계속 준수하고 이행

- 핵문제에 대하여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며,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

-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교류·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2003년 2월 11~14일 개최(서울)

-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2003년 4월 7~10일 개최(평양)

1월 22~25일 |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적 사항 합의

<합의서>

①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를 군사분계선에서 자기측 방향으로 진행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 연결

② 궤도부설 자재·장비 등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연결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공사 일정에 맞추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③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상호 교환하고 많은 부분에서 의견일치를 보

- 았으며, 빠른 시일내에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
- ④ 열차 및 차량운행사무소 개설 문제, 신호·통신·전력 계통 설계에 필요한 현장조사 문제 등 기타 제기되는 문제들을 실무접촉과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
  - ⑤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는 앞으로 진행되는 실무접촉을 통해 협의·확정
- 1월 24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한·미 군사당국이 수립 중인 새 작전계획(작전 계획-5027)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려는 침략계획이자 제2의 조선전쟁 기도라고 비난
- 1월 25일 | 북한 외무성, 북한 핵 문제의 국제화와 미국의 다자회담 주장에 반대의사 표명, 미·북 직접회담 촉구
- 1월 25일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해 북측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용의 표명
- 1월 26일 | 남북적십자사, 제6차 이산가족상봉(2월 20~25일, 금강산) 후보자 명단 각각 200명 교환
- 1월 27일 | 제15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 합의서〉 채택
- ①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각각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개방
  - ② 임시도로를 통하여 비무장지대의 일부인 남북 관리구역 상대측 지역으로 들어가려는 경우 인원 명단과 차량, 자재 및 장비의 수, 군사분계선 통과시간을 사전에 다른 일방에 통보
  - ③ 승인된 인원, 차량, 자재 및 장비에 한하여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하며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에서의 안전보장을 책임
  - ④ 본 잠정합의서는 어느 일방이 합의서의 기본정신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방의 통보에 따라 또는 동·서해지구 기본도로가 개통되어 새로운 합의서가 채택·발효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
- 1월 27~29일 | 대통령 특사(임동원) 제2차 방북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면담 및 김용순 당 비서 등과 회담 진행, 김대중 대통령 친서 전달, 2월 중 경의선 철도 연결 및 금강산 육로관광 2월 초 실현 등 합의
- 1월 28일 | 미국 부시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북한 등 3개 국가는 무법 정권,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 않겠다고 언급
- 1월 30일 | 북한 외무성, 미국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해 “우리 제도를 전복하려는 노골적인 침략선언”이라고 비난
- 1월 30일 | 김대중 대통령, 대북유입 현대자금에 대해 사법대상 제외 입장 표명
- 1월 30일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NHK와의 회견에서 유엔 통한 대북제재 반대의사 표명
- 1월 30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원자력 발전기지 동결조치로 인해 전력사정이 악화되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
- 2월 1일 | 북한 아태위, 금강산 육로시험답사와 기본 육로관광을 2월 4~14일 사이에 진행한다고 발표

- 2월 1~8일 | 제5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 폐막식 남북한 공동 입장
- 2월 2일 | 북한 아태위 대변인, 현대의 대북송금 관련 의혹을 일축하고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맞게 남북간 협력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을 주장
- 2월 5일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대출제도 개선 조치 발표
- 2월 5일 | 북한 외무성, 북한 핵문제의 UN회부 관련 IAEA 특별이사회 소집이 미국의 불순한 정치적 기도에 출발한 것이라고 비난  
 - 우리는 이미 우리의 핵활동이 현 단계에서 전력생산을 비롯한 평화적 목적에 국한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언하였음. 미국이 우리의 핵활동에 그 어떤 다른 성격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유엔에 끌고 가 국제화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기도에서 출발한 것임.
- 2월 5~6일 |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사전답사 실시
- 2월 6일 |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개선안 시행
- 2월 6일 | 미국 파월 국무장관, 대북침공 의사 없지만, 어떠한 군사적 선택도 배제되지는 않고 있다고 경고
- 2월 7일 | 한·미, 북핵 전담기구 신설
- 2월 11~14일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공동보도문>  
 - 남북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사업, 임진강수해방지사업 등 이미 합의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 대책을 세워 계속 협의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를 4월 중 개최(평양)
- 2월 12일 | IAEA, 북핵 관련 대북 결의 채택, 핵안전조치협정 위반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
- 2월 12일 | 조지 테넷 CIA 국장, 미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은 이미 알래스카, 하와이 및 미 서부 해안을 강타할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 언급
- 2월 13일 | 북한 박길연 주유엔 대사, IAEA의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 결정관련, 핵문제의 국제화에 반대한다고 주장
- 2월 13~15일 |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추진단 제1차 회의  
 - 면회소 규모 및 설계 문제 등을 협의하였으나 쌍방 입장 차이가 현격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함. 제2차 추진단회의를 2003년 3월 3~5일까지 금강산에서 열어 면회소 건물형태 및 기본시설, 규모, 설계 등 쟁점사항 등을 계속 협의하기로 함.
- 2월 14일 | 김대중 대통령, 현대의 대북송금(2000년 6월) 관련 대국민담화  
 - 현대는 대북 송금 대가로 북측으로부터 철도, 전력, 통신, 관광, 개성공단 등 7대 사업권을 얻었음. 정부는 그것이 평화와 국가 이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정법상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했음. 남북관계의 이중성과 북의 폐쇄성 때문에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비공개로 범의 테두리 밖에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음.

- 2월 14~16일 |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 및 금강산 시범 육로관광 실시
- 2월 17일 | 북한 조선인민군 관문점대표부 대변인, 미국이 대북 제재조치를 감행한다면 정전협정 의무이행을 포기할 수 있다고 경고
- 2월 17일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개통
- 2월 19일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간담회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군사적 조치도 반대한다고 언급
- 2월 20일 | 북적 장재언 위원장, 대구지하철 참사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달
- 2월 20일 | 북한 전투기 1대,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침범  
- 미그-19기로 추정되는 북한 전투기가 NLL 상공을 넘어 13km 남하,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접근하자 2분만인 10:05경 황해도 과일비행장 쪽으로 귀환
- 2월 20~25일 | 제6차 이산가족상봉행사  
- 2월 20~22일: 북측 이산가족 99명, 남측 이산가족 461명 상봉  
- 2월 23~25일: 남측 이산가족 99명, 북측 이산가족 191명 상봉
- 2월 21일 |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 경의선 임시도로 이용하여 개성공업지구 육로사전답사 실시
- 2월 23일 | 일반인 대상으로 첫 육로 금강산관광 실시(204명)
- 2월 25일 | 북한, 지대함 미사일 1기 동해상으로 발사(함경남도)
- 2월 25일 | 북한 외무성, 3월 4일~4월 2일 예정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북한을 핵 선제 타격으로 압살하기 위한 계획적인 군사작전의 일환이라며 비난
- 2월 25일 | 노무현 대통령 취임,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라는 제목의 취임사에서 평화번영정책의 대북정책을 천명  
- 이를 위한 4원칙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국민참여와 초당적 협력 제시
- 2월 26일 |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영변 원자로 재가동 발표
- 2월 27일 | IAEA, '북한의 원전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핵 비확산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
- 2월 28일 | 외교통상부 대변인, 북한의 5MWe 원자로 재가동은 한반도 안전과 평화 및 국제사회의 NPT 확산노력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
- 3월 1일 | 노무현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북한 핵개발 반대 및 주변국과의 협력의지 표명
- 3월 2일 | 북한 공군기, 동해의 공해상에서 정찰 중이던 미 공군 RC-135기 위협
- 3월 3일 | 미국 부시 대통령, 발티모어 선지와외 회견에서 외교적 노력으로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마지막 선택은 군사적 행동이라고 언급

3월 3~5일 |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추진단 제2차 회의

- 면회소의 기본시설과 공용시설, 추진단 구성 등에 대해 의견접근. 건물형태, 연건평 규모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함.

3월 4일 | 북한 조평통, 대북 비밀송금에 관한 특별검사제 법안의 국회 통과를 비난하면서 특검 도입시 남북관계가 동결될 것이라고 위협

3월 7일 | 국방부, 북한 공군기의 미국 정찰기 위협사건(3월 2일) 관련, 북한군에 의한 일련의 긴장조성 행위가 한반도 안보정세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신중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

3월 9일 | 미국 파월 국무장관, 다자대화 틀 내 북미대화 입장 확인

3월 10일 | 북한 노동신문, 국방부 대변인의 대북성명(3월 7일) 관련 새 정권이 출현하자마자 우리를 심히 자극하는 언동이 나왔다고 비난

3월 10일 | 북한, 12:00경 동해안으로 지대함 유도탄 미사일 시험발사

3월 10-12일 | 남북철도·도로연결 제4차 실무접촉 개최

〈합의서〉

- ① 경의선·동해선 궤도 연결공사를 3월말에 군사분계선에서부터 동시에 착수하여 자기측 방향으로 공사를 중단없이 진행
- ② 철도 및 도로연결공사 자재·장비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제공된 자재·장비의 정상 이용을 위한 사용결과 통보 및 남측 기술인원들의 현장방문을 진행
- ③ 경의선·동해선 궤도연결공사 착수를 위한 자재·장비 품목과 수량, 1차분 자재·장비 품목과 수량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첨부 1, 첨부 2와 같이 함.
- ④ 철도·도로 연결공사용 자재·장비들을 경의선·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해 인도·인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⑤ 자재·장비 전체제공분과 열차운행합의서를 문서 교환 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결

3월 13일 | 노무현 대통령, 북한의 핵문제는 반드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

3월 14일 | 북한 아태위 대변인, 대선 전 한나라당 대북밀사를 평양과 중국에서 접촉했다고 주장

3월 18일 | 통일부, 개성관광 남북협력사업자로 현대아산을 승인

3월 19일 | 주한 유엔군사령부, 장성급회담을 개최(3월 20일) 제의했으나 북한군 거부

3월 19일 | 이라크 전쟁 발발

3월 19일 | 미국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 대북문제에 임하는 부시 대통령의 입장은 다자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언급

3월 20일 | 통일부 대변인, 북한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대북논평 발표

- 3월 20~24일 | 경의선·동해선 자재·장비 북한 사용현장 방문 실시, 경의선은 3월 20일, 동해선은 3월 24일부터 각각 2박 3일간 진행
- 3월 22일 | 북한,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3월 26일, 평양)와 제3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을 일방적으로 연기 통보
- 3월 22일 | 통일부, 북한의 경협·해운회담 연기 통보에 유감 표명
- 3월 24일 | 동해선 철도·도로연결 공사현장 확인 방문단, 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해 방북
- 3월 25일 | 합동참모본부, 북한 어선 NLL 월선사실 발표
- 3월 25일 | 중국 외교부 대변인, 북핵문제 관련 유엔 안보리가 아닌 북·미 대화를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언급
- 3월 26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6차 회의 개최
- 3월 26일 | 북한 이찬복 북·미 장성급회담 수석대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유엔사측에 쌍방 참모장교 정례 접촉 중단 통보
- 3월 27일 | 유엔사, 북한군의 판문점 연락장교회의 불참 통보에 유감 표명
- 4월 1일 | 북한 박길연 주유엔 대사, 유엔군축위원회 회의(3월 31일~4월 17일) 기조연설을 통해 핵문제 관련 미국의 대북압력을 비난하고 북·미 직접 대화를 거듭 촉구
- 4월 6일 | 북한 외무성, 북한의 NPT 탈퇴 문제 유엔안보리 회의관련 유엔의 어떤 결정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
- 4월 7일 | 정세현 통일부 장관, 북한이 예정된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 표시 조속한 시일 내 회담 개최를 촉구
- 4월 10일 | 북한의 NPT 탈퇴 발표
- 4월 10일 | 노무현 대통령,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미국의 주장에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 4월 12일 | 북한 외무성, 북·미 직접대화 대신 북핵문제 관련 다자회담 수용 가능성을 시사
- 4월 13일 | 미국 부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문제의 해결에 진전이 있다면 다자간 대화가 곧 성사될 것 같다고 언급
- 4월 15일 | 노무현 대통령, 지금은 남북정상회담 보다 북핵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언급
- 4월 16일 |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 유럽연합(EU)이 제출한 ‘북한인권 규탄 결의문’ 채택, 한국 기권
- 4월 17일 | 북적 장재언 위원장, 한적에 쌀·비료 지원 요청
- 4월 18일 | 북한 외무성, 베이징 3자회담(미국·북한·중국) 참가사실 발표
- 4월 18일 | 북한 외무성, 8천여 대의 폐연료봉들에 대한 재처리 작업 마지막 단계까지 성과적으로 진행 주장하며 핵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들은 조미 쌍방 사이에 논의해야 하나 대북

적대정책 포기 시에는 대화형식에 구애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4월 19일 | 북한,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4월 27~29일) 제의
- 4월 20일 | 호주, 북한선박 '봉수호' 마약밀반입 혐의로 강제 예인 후 조사
- 4월 21일 | 미국 국무부 대변인, 북핵문제 관련 미·중·북이 참가하는 다자간 대화 개최 공식 발표(4월 23~25일, 베이징)
- 4월 21일 | 정부,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의 평양 개최(4월 27~29일) 동의
- 4월 23~25일 | 북핵 문제 관련 베이징 3자회담(미·중·북)
- 4월 23일 | 노무현 대통령, 베이징 3자회담 관련,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문제해결 모색이 중요하다고 언급
- 4월 24일 | 북한, 「개성공업지구 개발 규정」 및 「기업창설운영규정」 채택
- 4월 25일 | 북한 외무성, 베이징 3자회담에서 북한이 대담한 해결 방도를 제의하였다고 언급  
- 그러나 미국은 선 핵포기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토의도 한사코 회피하였음.
- 4월 26일 |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북한 핵보유 관련 언급에 대해 북한이 3자회담에서 밝힌 핵 보유 관련 언급이 사실이라면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다양한 통로를 통해 핵폐기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 4월 26일 | 현대아산, 북한의 금강산관광 불허 조치에 따라 당분간 금강산 관광을 중단한다고 발표
- 4월 27일 | 통일부, WHO 경유하여 30만 명분의 말라리아 치료·예방약(70만 달러 상당) 대북지원
- 4월 27~29일 |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 ①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재확인하고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준수 하며 계속 철저히 이행
  - ②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협의하고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 협력
  - ③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3주년을 계기로 개최되는 6.15 민족통일대축전이 화해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 정례화 되도록 지원
  - ④ 쌍방 사이에 이미 합의하여 이행중에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
  - ⑤ 제7차 이산가족 상봉을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3주년을 계기로 실시(금강산)
  - ⑥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7월 9~12일 개최 (서울)
- 4월 28일~ | 제2차 NPT평가 준비회의
- 5월 9일
- 4월 29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베이징 3자회담이 결실 없이 끝났다고 보도
- 4월 30일 | 북한 외무성, 핵문제의 국제화에 대해 경고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 운명은 전적으로 미국의



정책에 달려 있다며 미국을 압박

- 4월 30일 | 미국, 북한을 테러지원국 재지정
- 5월 3일 | 북한, 경비정 NLL 침범
- 5월 5일 | 미국 뉴욕타임스지, 미국 대북정책의 초점이 핵무기 생산 금지에서 수출금지로 전환 중이라고 보도
- 5월 5일 | 미국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 뉴욕타임스지 보도를 부인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입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제거”라고 강조
- 5월 7일 | 북한 외무성, 북한 화물선 봉수호가 마약밀매 혐의로 호주에 억류(4월 20일)된 것과 관련 북한의 무관함을 주장
- 5월 12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파괴해 왔다고 주장
- 5월 13일 | 한적, 제7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금강산 개최(6월 19~24일) 제의
- 5월 15일 | 노무현 대통령과 미국 부시 대통령, 워싱턴 정상회담 개최
  -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주한미군 재배치의 신중한 추진 등 원칙적 입장을 확인하는 공동성명 발표
- 5월 16일 | 미국 브렌다 그린버그 국무부 대변인, WFP을 통한 대북 식량지원(4만 톤) 사실 발표
- 5월 17일 | 남북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노반공사 완료
- 5월 19~23일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 〈남북간 주요 경협사업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실천방안과 이행일정을 담은 합의문〉과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를 발표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합의문〉
  - ① 경의선·동해선 궤도연결을 위한 행사를 군사분계선 연결지점에서 2003년 6월 10일경에 진행하고, 철도와 도로 연결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② 개성공단 건설 착공식이 사업자간에 합의되는데 따라 6월 하순에 개최되도록 하며,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적극 협력
  - ③ 임진강수해방지를 위한 공동조사를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 데 따라 6월중에 진행하고, 장마 전에 홍수에보체계를 구축. 북측은 금년 장마에 대비하여 남측에 임남댐의 방류와 관련한 필요한 통보
  - ④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와 남북해운합의서 및 개성공단건설을 위한 통신·통관·검역합의서 등을 각기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가급적 빨리 발효
  - ⑤ 금강산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금강산 육로 및 해로 관광을 6월중에 재개하기 위해 적극 노력
  - ⑥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인도주의적 협조를 진행해 나가며 남측은 북측에 쌀 40만 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

- ⑦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를 8월 하순 개최(서울)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 ① 남측은 북측에 쌀 40만 톤을 차관으로 제공
- ② 차관금액은 제공하는 쌀 가격을 톤당 US\$265(미화 이백육십오달러)로 계산하고, 남측은 북측항까지의 수송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며, 북측은 하역·항만비용과 체선료 등을 부담
- ③ 차관의 상환기간은 차관제공 후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
- ④ 이 합의서에 따른 차관공여 및 상환은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함.
- ⑤ 제공되는 쌀의 인도·인수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식량 인도·인수절차」에 따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남측은 식량인도회사를, 북측은 식량인수회사를 각각 지정하여 상대방에 통보
- ⑥ 북측은 식량차관 제공이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및 선박의 안전운행을 보장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
- ⑦ 북측은 남측의 분배투명성 확인보장 등 쌀제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⑧ 이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당국이 협의하여 해결

- 5월 25일 | 북한 외무성, 먼저 북·미 회담을 개최하면 미국이 제기하는 다자회담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
- 5월 25일 | 북한 조평통, 한미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한반도 위협 증대 시 북한에 대한 추가적 조치가 실천에 옮겨지면 남한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
- 5월 26일~6월 3일 | 조업 중이던 북한 어선 11척(26일 6척, 27일 3차례 3척, 29일 2척, 30일 7척, 6월 1일 8척, 2일 4척, 3일 1척)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 5월 27일 | 노무현 대통령, 민주당 의원과의 만찬에서 대북정책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포용정책,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언급
- 5월 27일 | 한적, 대북 비료지원 관련 1~5항차 수송계획 북측에 통보
- 5월 27일 | 미국 콜린 파월 국무장관, 북한이 24일 제의한 '선 쌍무회담, 후 다자회담'과 관련 '우리는 여전히 다자회담을 선호한다'며 북한의 제의를 사실상 거부
- 5월 28일 | 남·북 적십자사, 판문점에서 제7차 이산가족 상봉후보 200명의 명단이 담긴 생사·주소확인 의뢰서 교환
- 5월 28일 | 한적, 북한 선박의 NLL 월선으로 불필요한 긴장이 조성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재발방지를 촉구
- 5월 29일 | 북한, 남한이 서해 북측 영해에 전투함선들을 연이어 침범하는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하고 있다고 보도
- 5월 29일 | 북한 아태위 대변인, SARS로 인해 임시 중단되었던 금강산관광의 6월초 재개 발표

- 5월 30일 | 한적, 대북 비료지원 관련 6~10항차 수송계획 복직에 통보
- 5월 30일 | 노무현 대통령, 북한 어선들의 서해 북방한계선 월선 관련 우발적인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언급
- 5월 31일 | 국방부·주한미군사령부, 최신형 패트리엇(PAC-3)를 한국에 배치하는 등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 발표
- 5월 31일 | 미국 부시 대통령,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추진 선언
- 6월 1일 | 해군, 북한 어선 NLL 침범에 첫 경고 포격을 실시해 추방
- 6월 2일 | 남북, 제5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개최(6월 7~9일, 개성) 합의
- 6월 2일 | 노무현 대통령, 대북송금사건 특검수사 관련 남북정상회담의 정치적 역사적 평가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6월 3일 | 북한 해군사령부 대변인, 해군의 NLL월선 어선에 대한 경고사격을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비난
- 6월 4일 | 제16차 남북군사실무회담  
- 경의선과 동해선 양쪽 상대방 지역에서 공사 진척상황을 직접 확인키로 합의
- 6월 4일 | 미국 볼튼 차관, 북이 완전하며, 검증가능하며, 번복불가능한 방식(CVID)으로 핵무기 개발을 종료할 경우 북측의 담대한 제안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재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피력
- 6월 7~9일 | 남북철도·도로연결 제5차 실무접촉  
<합의서>
  - ① 남북 철도 연결행사를 2003년 6월 14일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지점에서 공동으로 진행
  - ②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분 자재·장비의 품목과 수량을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의 첨부 1로 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이 제공되도록 적극 협력
  - ③ 남측은 철도 및 도로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장비 설치와 정상 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6월 중순부터 7월말 사이에 진행하며 북측은 기술지원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
  - ④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공사용 자재·장비에 대한 인도·인수와 기술지원 인원들의 왕래는 경의선·동해선의 임시도로를 이용
  - ⑤ 신호·통신·전력계통설계를 위한 현장조사를 7월중 합의되는 시기에 진행
  - ⑥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는 7월 2~4일 진행(문산)
- 6월 8일 | 북·일간 부정기 여객화물선 만경봉호, 일본 니가타 항 입항 포기
- 6월 8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주한미군의 전력증강 계획(5월 31일)을 ‘북침을 노린 도발적 무력증강 계획’으로 규정하고 이로써 ‘미국의 침략적 군사행동이 실천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
- 6월 8일 | 북한 외무성, 미국의 대북 봉쇄강화를 비난하고, 일단 자주권이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물리적 보복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

- 6월 9일 | 일본 후쿠다 관방장관, 만경봉호 이외의 북한 선박에 대해서도 검사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
- 6월 9일 | 에리 플라이셔 미국 백악관 대변인, 북한주민의 최대위협은 바로 북한 정권이라고 언급
- 6월 10~13일 | 현대·아태평화위원회 실무접촉
  - 6월 25일 금강산 관광 재개(육로관광은 7월 초 시범 실시) 및 6월 하순 개성공단 착공에 합의
- 6월 14일 |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행사, 동·서 두 곳의 군사분계선(MDL)에서 동시 진행
- 6월 15일 | 남북적십자, 제7차 이산가족 상봉단(6월 27일, 금강산) 명단 교환
- 6월 17일 | 미국, 대북 식량 지원 유보
- 6월 18일 | 북한 외무성, 미국이 표방하는 다자회담에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
- 6월 20일 | 남·북 군 당국, 군사분계선 선상에서 실무접촉을 가지고 동해선 군사직통전화(핫라인) 개통 합의
- 6월 20일 | 북한 조평통, 한미 양국이 유사시를 가상해 실시하고 있는 전시연합증원훈련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
- 6월 23일 | 대북송금 특검팀,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현대 통해 북한에 1억불 지불 발표
- 6월 26일 | 북한 백남순 외무상, 유엔안보리 의장에 서한 발송 통해 북핵문제 관련 미국의 책임을 주장, 안보리의 공명정대한 노력을 촉구하면서 선차적으로 주목해야 할 5가지 문제 제기
  - ① 안보리는 악의 축, 선제공격 교리와 그에 기초한 정책이 유엔헌장의 정신에 부합되는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② 안보리는 미국의 다자회담 주장과 북의 선 북미회담 주장 중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입장을 가려보고 장려해야 할 것임.
  - ③ 북은 NPT 탈퇴시 절차를 준수하는 등 국제적 의무를 위반치 않았는 바, 안보리는 이중기준을 적용하지 말아야 할 것임.
  - ④ 안보리는 PSI 등 미국과 일본의 대북 압박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음.
  - ⑤ 미국의 전력증강 및 해상봉쇄 계획 등은 미국의 정전협정 위반행위이며 이 같은 행위를 통한 정전협정 무실화시 다른 억제력에 대한 수요 제기는 불가피함.
- 6월 27일~ | 제7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 7월 2일
  - 1차: 남측 이산가족 110명, 북측 이산가족 217명 상봉
  - 2차: 북측 이산가족 100명, 남측 이산가족 472명 상봉
- 6월 29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채택된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및 기업창설 운영규정」(4월 24일), 「금강산관광지구 개발규정 및 기업창설운영규정」(5월 12일) 뒤늦게 보도
- 6월 29일 | 서영훈 한적 총재, 북적 장재언 위원장에게 6.25 전쟁 중 납북되거나 실종된 언론인 225명의

명단을 전달하고 이들의 생사확인을 요청

- 6월 30일 |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착공식 개최
- 7월 1일 | 국회, 북한인권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 7월 1일 | 북한 아태위, 대북송금 문제 관련 특검수사결과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평양 상봉 관계자들의 전원 무죄석방을 주장
- 7월 1일 | 북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 및 재배치, 해상 및 공중봉쇄가 개시될 경우 무자비하게 보복하겠다고 위협
- 7월 1일 | 미국 뉴욕 타임스, 미 CIA가 아시아 동맹국에 미 정찰위성이 북 영덕동에 핵탄두 미사일 탑재 기술 개발 단지가 탐지되었다고 통고 보도
- 7월 2일 | 북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미국이 제기한 미군유해발굴 관련 회담 참가 발표
- 7월 2~4일 |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 〈합의서〉
  - ①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공사 자재·장비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측이 제공하는 전체분 자재·장비들의 품목과 수량에 대해 합의
  - ②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를 경의선은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동해선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
  - ③ 제공된 장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남측의 기술지원을 계속 실시
  - ④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와 열차와 차량운행을 위한 사무소의 설치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며, 열차 및 자동차 운행에 앞서 발효·이행
  - ⑤ 남북철도·도로연결 제6차 실무접촉은 2003년 8월 초 개최(개성)
- 7월 4~6일 |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북한참가 관련 실무접촉  
  - 〈합의서〉
  - ① 북측은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선수, 임원, 심판진을 포함하여 200명 정도의 선수단과 310명 정도의 응원단을 파견하며 기자단은 19명
  - ② 북측은 7월 21일까지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에 종목별 최종 선수단 명단과 등록서류를 제출
  - ③ 북측 선수단은 8월 17일, 응원단은 8월 18일 북측 항공기를 이용하여 직항 노선으로 남측에 오며 남측지역 이동시에는 남측이 제공하는 운송수단을 이용
  - ④ 남측 선수단과 북측 선수단은 개폐회식 행사에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공동으로 입장
  - ⑤ 남측은 북측의 선수단, 응원단에 대해 숙소배정, 수송, 훈련과 경기, 응원활동, 신변안전 등 체류기간 동안의 편의를 보장하며, 북측은 경기대회 참가기간 남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름.
  - ⑥ 남북 선수단은 경기에 각각 출전하며 시상식 때에는 각기 자기의 국기를 게양하고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찬가를 연주
  - ⑦ 남측은 북측 선수단에 대해 체류기간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부담하며, 북측 응원단 및 기

자단에 대해서도 최대한 편의를 제공

- ⑧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기간 중 한반도기는 남북 공동입장 및 남북간의 경기시에 사용하며 남측은 북측의 국기 게양과 국호표기를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규정과 국제관례에 따름.
- ⑨ 남측은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에 각각 국제전화 1회선, 남북직통전화 5회선을 보장하며, 북측 기자단에 TV전송 1회선, 사진전송 1회선, 남북직통전화 2회선과 국제전화 4회선, FAX 2회선을 제공
- ⑩ 남측은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의 남측 체류기간 중 제기될 수 있는 기타 제반 문제에 대해 쌍방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우호적으로 협의 해결
- ⑪ 대회기간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 기자단의 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신속히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 쌍방은 현지에 연락관을 파견
- ⑫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의 경기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추후 제기되는 구체적인 실무절차 문제는 관문점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세부협의를 진행

7월 6일 | 북한 조평통, 국방부의 '핵심적인 적(주적)' 규정에 대해 비난 성명

7월 9일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탈북자에게 미국 망명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보호 법안 가결

7월 9-12일 |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 ① 최근 한반도에 조성된 정세에 우려를 표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핵문제를 적절한 대화의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 ②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제8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건설 착공식을 갖도록 협력
- ③ 진행중인 경제협력사업이 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력하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를 2003년 8월 26~29일 개최(서울)
- ④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를 구성하는 문제를 검토
- ⑤ 올해에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8.15 광복절 행사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⑥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3년 10월 14~17일 개최(평양)

7월 10일 | 북한 경비정, 남쪽 0.3마일 해상까지 내려왔다가 해군 고속정 편대가 출동하자 9분만인 11:48경 NLL을 넘어 북상

7월 15일 | 유엔사, 정전협정 서명 50주년을 기리는 기념행사(7월 27일, 자유의 집)관련 북한과 의견을 교환하지는 입장을 인민군 관문점 대표부에 전달

7월 17일 | 북한군, 연천 DMZ서 아군 GP 향해 총격, 아군도 대응사격, 우리군은 교전규칙에 따라 대응사격과 경고방송 실시

7월 18일 | 조선인민군 관문점 대표부 대표, 유엔사의 정전협정 관련 행사 초청은 '정전협정 상대방을 우

통하고 세계여론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전화통지문 발송

7월 21일~ |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측량·토질조사

8월 8일

7월 22일 | 미국 백악관 대변인, 미국은 북한에 불가침 약속을 제의한 것이 없으며 이를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언급

7월 23~25일 | 북한, 다자회담 수용 의사를 한·미·일·중·러에 통보

7월 24일 | 남북 쌍방, 판문점 연락관 협의를 통해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개최(7월 29~31일, 개성)와 제6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개최(8월 7~8일, 개성) 합의, 쌍방 대표 단 명단을 교환

7월 25일 |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북한과 금강산관광 재개(9월 1일) 잠정 합의 발표

7월 29~31일 |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개최

〈합의서〉

- ① 2000년 12월 16일 서명한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에 관한 4개 합의서의 발효 통지문을 2003년 8월 6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상호 교환
- ②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 ③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측은 한국수출입은행을, 북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은행을 각기 청산결제은행으로 선정
- ④ 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개성·금강산 지구 통행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문서교환 등을 통해 계속 협의
- ⑤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의 장소와 일자는 차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정하기로 함.

7월 30일 | 북한 김령성 남북장관급회담 단장, 8월 1일부터 구국의 소리방송 중단 통보

7월 31일 | 북한 김령성 남북장관급회담 단장,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취소 요구

8월 1일 | 정세현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 북한의 7월 31일 전화통지문에 대해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방어 목적의 훈련이라는 답신 전달

8월 1일 | 러시아 외무부, 성명을 통해 북한 6자회담 전격 수용 발표

8월 2일 | 북한,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북한 참가단(180명, 대표: 대학생체육협회 전극만 위원장) 명단을 대구 조직위에 제출

8월 3일 | 미국 파월 국무부 장관, 미국은 북한문제에 대해 외교적인 해답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관리들이 강경발언을 하고는 있지만 북한 정권의 붕괴를 시도하고 있지는 않다고 언급

8월 4일 | 정몽헌 현대아산 사장 투신자살

8월 4일 | 노무현 대통령, 정몽헌 회장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남북경협 사업이 고인의 뜻대로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임을 표명

- 8월 4일 | 북한, 외무성 대변인 6자회담 참가 발표
- 8월 5일 | 북한, 4대 경협합의서·발효통지문 교환(8월 6일)과 제6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8월 7~8일, 개성)을 정몽헌 회장의 장례식 이후로 연기할 것을 제의
- 8월 13일 | 북한 박창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 4개 경협합의서 발효통지문을 8월 18일 판문점을 통해 교환하고, 제6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개최(8월 19~20일, 개성)할 것을 제의
- 8월 13일 | 북한 외무성 대변인, 6자회담에 임하는 입장을 표명
  - 미국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 북미 외교관계 수립, 북한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경제 협력 불간섭 등의 조치를 취해야 사찰을 통한 검증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
- 8월 14일 | 외교통상부, 6자회담 중국 베이징 개최(8월 27~29일) 공식 발표
- 8월 15일 | 노무현 대통령, 제58주년 광복절 경축식 축사에서 “북핵 문제 조속한 해결 후 남과 북은 평화체제 구축과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 8월 15일 | 북한 조선중앙TV, KBS와 공동 제작한 평양 노래자랑 방영
- 8월 16일 | 김운규 현대아산 사장, 9월 1일부터 금강산 육로 관광을 재개할 것을 합의했다고 발표
- 8월 17일 | 한적, 제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9월 20~25일) 북측후보 200명 명단 공개
- 8월 17일 | 북한 조평통,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8월 21~31일) 불참을 시사
- 8월 18일 | 4개 경협합의서 발효통지문 교환, 제6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8월 19~20일 예정) 개최 무산
- 8월 18일 | 정세현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 북한의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참가를 촉구하는 전화통지문 발송
- 8월 19일 | 남북 판문점 연락관 접촉
  - 4대 경협합의서 발효통지문을 8월 20일 10:00에 교환하고, 제6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을 8월 21~22일, 개성 개최에 합의
- 8월 19일 | 노무현 대통령, 인공기와 김정일 위원장의 초상화를 불태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유감 표명
- 8월 19일 | 정세현 통일부 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8.15 행사시 인공기 소각과 관련 유감 표명
- 8월 19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참가의사 표명
- 8월 20일 | 4대 경협합의서 발효 통지문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교환
- 8월 21~22일 | 남북철도·도로연결 제6차 실무접촉 개최
  - 〈합의서〉
  - ① 자재·장비 제공합의서 첨부 1의 전체분 자재·장비가 10월부터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② 남북철도·도로연결 공사를 위해 제공된 장비의 설치와 수리·정비를 위한 기술지원을 다



음과 같이 진행

- ③ 남북철도·도로연결 제6차 실무접촉 합의서 부록에 준하여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진행하며, 설계 및 시공을 위한 기술협력
- ④ 경의선·동해선 본도로나 개통될 때까지 쌍방이 합의하는 인원, 자재·장비 등의 이동통로로 본도로 노선을 이용하는 문제를 검토
- ⑤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와 열차, 차량운행사무소 설치문제를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여 빨리 확정
- ⑥ 남북철도·도로연결 제7차 실무접촉은 추후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

**8월 21~23일 |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 상호 양보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타결 모색하였으나 규모 및 시설관리·운영 등 면회소 건설의 필수적 사안들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협의를 도출하지 못함.

**8월 21~31일 |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북한 선수단 참가**

**8월 22일 | 북한 조선중앙TV,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여자축구경기 및 개막식 방영**

**8월 24일 |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의 북한 기자단과 남한 시민단체 간 충돌**

**8월 24,26일 | 북한,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기간 중 발생한 보수단체의 반복시위(8월 24~26일)와 관련, 우리 당국의 사과를 요구**

**8월 25일 | 북한 '만경봉-92호', 일본 니가타에 입항, 5개 항목에 걸쳐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즉시 시정을 명령, 8월 26일 원산으로 출항**

**8월 25일 | 조해녕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장, 북한 기자들과 시민단체와의 충돌사태와 관련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 약속**

**8월 26일 | 북한 경비정 1척 연평도 해상 북방한계선(NLL)을 0.3마일 월선, 해군 1,200톤 급 초계함이 76mm 함포 2발을 경고사격하자 3분 만에 복상**

**8월 26~28일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합의문〉

- 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적극 추진하여 1차적으로 경의선에서 문산-개성간, 동해선에서 저진-온정리간 궤도부설과 도로 노반공사를 올해 말까지 완료
- ② 개성공단 1단계 개발구역에 대한 종합설계가 끝나는 데 따라 기반시설 건설에 착수하고 관련 하위규정들도 조속히 제정·공포하며 공단개발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
- ③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해로관광과 육로관광, 관광지구 개발 등 사업자간 합의가 원만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④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의 후속조치 등과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및 부속합의서 체결을 위한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가기로 함. 이와 관련하여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제3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을 10월 초순경에 동시에 개최

- ⑤ 문서교환 협의 중에 있는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토의를 진행하여 수해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
- ⑥ 남북간 상품 및 임가공 거래를 직접거래방식으로 더욱 확대하며 이와 관련한 사업의 협의 통로 개설 등 실무적 조치를 조속히 취해 나가기로 함.
- ⑦ 남측 경제시찰단의 북측 방문과 북측 경제실무시찰단의 남측 방문이 적절한 시기에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
- ⑧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합의에 따라 식량 제공과 분배현장 방문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력
- 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0월 하순경 개최(평양)

- 8월 27~29일 | 북핵문제 관련 제1차 6자회담 시작, 남북한 미·일·중·러 등 6개국 참가, 공동발표문 채택없이 폐막
- 8월 30일 |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북핵 6자회담 결과와 관련,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과 미국의 유연한 태도를 회담의 성과로 평가
- 8월 30일 | 북한 외무성,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비난하면서 6자회담의 무용성과 자위적 핵 억지력을 강조
- 8월 31일 | 현대아산, 금강산 육로관광 재개(9월 1일) 발표
- 9월 3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 회의 개최, 김정일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출
- 9월 3일 | 유엔 사무총장, 북한, 중국, 미국 등에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
- 9월 5일 | 미국 파월 국무장관, 북한 핵폐기 의지 보일 땐 안전 보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
- 9월 5~7일 | 금강산면회소건설 제1차 비공개 접촉, 북한의 회신 지연으로 일정 연기
- 9월 7일 | 한적,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남북간 상봉 가족 최종 명단 교환
- 9월 7일 | 북적 장재언 위원장, 가을 비료 10만 톤을 9월 중 지원해 줄 것을 요청
- 9월 7일 | 김운규 현대아산 사장,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각각 50만평 규모의 '평화와 번영의 공원'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
- 9월 13~15일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 6명 금강산 방문
- 9월 14~18일 | 평화관광, 일반인 대상 평양 관광 실시  
- 남한 관광객 114명, 북한 고려항공을 통해 방북(4박 5일)
- 9월 15일 | 중국 외교부, 북한 접경 지역 수비 임무를 경찰에서 해방군으로 교체했음을 확인  
- 국경수비를 굳이 맡고 있는 상대국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년 전에 계획된 정상적인 조치라고 밝히고 배치 병력규모는 언급 회피
- 9월 15~19일 | 제47차 IAEA 총회, 북한 핵문제 결의안 채택
- 9월 17일 | 제17차 남북군사실무회담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의 보충합의서〉 채택

- ① 철도·도로 통행과 관련한 새로운 군사보장합의서가 채택 발효될 때까지 동·서해 남북관리구역 본도로 노반을 임시도로로 사용
- ②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상에서 새로운 임시도로가 연결되는 구간(동해10m, 서해 20m)을 개방. 이미 이용하던 임시 도로상의 10m 군사분계선 구간들은 폐쇄

9월 19일 | IAEA, '북핵폐기촉구 결의안' 채택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6자회담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

9월 20일 | 북적, 제14호 태풍 매미로 우리측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위로전문 발송

9월 20일 | 북한 조평통, 주한미군의 최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발표(9월 16일)에 대해 '북침전쟁능력을 위한 무력증강'이라고 비난

9월 20-25일 | 제8차 이산가족상봉행사

- 1차: 북측 이산가족 100명, 남측이산가족 453명 상봉
- 2차: 남측 이산가족 143명, 북측이산가족 246명 상봉

9월 22일 | 친북인사로 분류돼 37년간 입국이 불허되었던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 일가족과 함께 입국

9월 23일 | 미국 부시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을 요구

9월 24일 | 노무현 대통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장착과 남북간 교류협력력을 강조

9월 25일 | 한·미·일·중·러 5자 외무장관회담, 각국의 일정 조정 문제 등으로 무산

9월 26일 | 서울지법 형사 22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대북송금은 통치행위가 아니며 송금과정의 위법 행위에 대해선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9월 30일 | 최수현 북한 외무성 부상, 유엔 기조연설에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책임과 북한 요구의 정당성을 강조

10월 1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제1호, 제2호)으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및 「노동규정」(9월 18일)을 채택한 사실 보도

10월 2일 | 북한 외무성, 영변 5MWe 원자로를 가동하고, 8,000여대의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를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발표

10월 4일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탈북자를 난민으로 간주한다고 발표

10월 7일 | 한·중·일 정상,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합의

10월 8일 | 북한, 보도매체를 통해 송두율 교수를 북한과 연결시키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

10월 11-12일 |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공동보도문〉

- ①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고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 ②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빠른 시일내에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실무협의회는 3명으로 구성하되 대표는 국·과장급
- ③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 통행에 관한 문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하여 나가기로 하였으며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청산결제 신용한도, 품목선정, 이자율 등을 차기 회의에서 협의하기로 하고 청산결제는행간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협의
- ④ 경제협력을 원만히 진행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 및 규정들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하고 적절한 시기에 교환
- ⑤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장소와 날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정하기로 함.

**10월 11~12일 | 남북해운협력 제3차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간 해운분야에서의 협력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을 토의
- 이미 채택된 〈남북해운합의서〉의 발효와 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채택 의의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많은 부분에서 의견일치
- 이번 접촉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항로대 및 통신보장 문제들에 대하여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제4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의 장소와 날짜는 문서교환방식으로 정하기로 함.

**10월 14~17일 |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를 2003년 11월 초에 개최(평양)
-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4년 2월 3~6일 진행(서울)

**10월 16일 | 북한 외무성, 미국이 동시행동방식 등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위적 차원의 핵 억제력을 유지·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

**10월 19일 | 평화축전 북한 준비위,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술단과 취주악단의 불참 통보**

**10월 20일 | 한미 정상(부시-노무현), 방콕 APEC 정상회담서 북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철폐하는 대가로 다자간안보보장을 북에 제공하는 문제에 관해 환담**

**10월 20~21일 | 일본 NHK, 북한 동해 미사일 발사(20일, 21일)사실 보도**

**10월 21일 | 북한, APEC 회의시 부시 대통령이 언급한 다자안전보장안에 대해, 미국의 책임회피라고 비난**

- 10월 23~25일 | 금강산면회소건설 제2차 비공개 접촉
- 10월 24일 | 남북, 제7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개최합의(10월 27~28일, 개성)하고 체류일정과 대표단 명단 등을 교환
- 10월 25일 | 북한 외무성, 미국의 대북 서면 불가침보장 방안 고려용의 표명
- 10월 25일 | 반기문 외교보좌관, 부시 미대통령의 다자틀 내 대북 안전보장 문서화 제안을 북한이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데 대해 고무적인 반응이라고 평가
- 10월 27일 | 북한의 평양관광 연기 요청에 따라 11월 2일 출발 예정이던 10차 관광부터 일시 중단 결정
- 10월 28일 | 남북철도·도로연결 제7차 실무접촉  
<합의서>
- ① 자재·장비 제공합의서 첨부 1의 전체분 자재·장비 인도·인수를 10월말부터 시작하여 쌍방간 합의된 공사일정에 맞춰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②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공사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암반제거 등에 필요한 자재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
  - ③ 제공된 자재·장비의 수리·정비를 위한 제6차 기술 지원을 경의선은 2003년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동해선은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하기로 하며 앞으로 진행되는 기술 지원 날짜는 실무접촉 또는 문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함.
  - ④ 남측이 전달한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자료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실무접촉 등을 통해 협의, 확정되는 데에 따라 자재·장비 제공 및 기술지원을 진행
  - ⑤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보다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쌍방 공사구간 현장방문과 제8차 남북 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며 일정과 장소, 방법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함.
- 10월 29일 | 북한, 최근 우리측이 서해상의 자신들의 영해에 전투함선을 침입시키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주장
- 10월 30일 | 북한 경비정 NLL 침범  
- 11:37분 북한 경비정 1척이 NLL을 0.5마일 침범하여 우리 해군함정이 경고사격을 실시, 북한 경비정은 11:47분에 복상
- 10월 30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6자회담이 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한 일괄타결안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된다면 앞으로 6자회담에 나갈 용의를 표시했다고 보도
- 10월 31일 | 남북 판문점 연락관 접촉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 합의(11월 5~8일, 평양)하고 대표단 명단을 교환
- 11월 4~6일 |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 ① 면회소를 착공 후 1년 내에 완공한다는 목표로 적극 협력. 면회소 건설 부지는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구역으로 함.

- ② 남측은 면회소 건설을 전담하며, 계획(형성)설계는 북측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 북측은 남측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자재를 보장하며, 그 비용은 남측이 지불
- ③ 북측은 면회소 건설과 관련하여 출입하는 남측 인원들에 대한 신분안전과 편의 등을 금강산관광 남측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관례에 따라 보장하며, 면회소 건설과 관련한 자재·장비에 대한 반출입을 보장
- ④ 면회소 설계·시공·완공 등 공사전반에 걸쳐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와 관련하여 각기 자기측 해당사항을 책임지고 단계별로 완료
- ⑤ 면회소건설 착공식은 부지 지질조사와 실시(기본)설계 완료 후 1개월 내 진행
- ⑥ 남측은 면회소의 완공 후 관리·운영을 전담
- ⑦ 면회소 내에 각기 300평(1,000㎡) 규모의 면회 사무소를 설치하여 면회 운영문제 등을 협의하고, 시설 사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의견은 남북면회사무소간 상호 협의를 거쳐 시설관리자에게 제시
- ⑧ 면회소는 금강산관광사업 등 면회 이외의 용도로도 이용
- ⑨ 금강산 면회소 건설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할 경우 관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활용하며, 현지에 별도의 연락체계를 마련
- ⑩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음.

**11월 5~8일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

〈합의서〉

- ① 경의선·동해선에서 1차적으로 올해 말까지 끝내기로 한 철도·도로 연결구간의 궤도부설과 도로 노반공사를 위해 자재·장비 제공 등 실무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 제8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은 2003년 12월 2~5일 개최(속초)
- ② 개성공단 개발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하위 규정의 제정·공포, 1단계 100만평 개발구역에 대한 설계 등을 올해 안에 끝내고 내년 초부터 기반시설 건설에 착수하며, 빠른 시일 안에 공단관리기구도 구성·운영
- ③ 2004년부터 시범적으로 청산결제 거래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실무적인 협의를 2003년 11월 하순 평양에서 갖기로 함.
- ④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및 부속합의서 체결과 문서교환 협의 중에 있는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토의를 빠른 시일 내에 타결
- ⑤ 개성공단에 직거래 확대 등 경제협력사업의 실무적 문제 협의를 위한 협의사무소를 내년 상반기 안에 개설
- ⑥ 쌍방사이의 거래물품에 대한 시범적인 원산지 확인사업을 위한 실무협의회와 개성·금강산지구 통행문제 등을 올해 안에 협의·타결하기 위한 남북경제제도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를 2003년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순 사이에 평양 또는 개성에서 개최
- ⑦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는 2004년 3월 4~7일 개최(서울)

**11월 6일 | 북한 외무성, 미국의 경수로 건설 중단 예정관련 기자회견에서 “경수로 건설 중단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중유제공 중단에 이어 기본합의문을 완전히 깨버리는 것”이라고 비난**

- 11월 6일 | 부시 미국 대통령, 민주주의기부재단(NED) 연설에서 북한, 미얀마, 쿠바, 짐바브웨 4개국을 압제의 전초기지라고 비난
  - 이들 국가의 주민들은 속박과 두려움, 그리고 침묵 속에 살고 있음. 그러나 이들 정권은 자유를 영원히 가두어 둘 수 없음. 언젠가는 수용소, 감옥, 망명지 등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지도자들이 떠오를 것임.
- 11월 6일 | 북한 리영호 영국주재 대사,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에서 북은 이미 핵억지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
- 11월 11일 | 북한 외무성, 미국에 경수로 건설 중단으로 인한 북한 전력손실에 대해 보상 요구
- 11월 12일 | 한국토지공사, 북한과 <개성공업지구 개발 사무소 설치에 대한 합의서> 체결
- 11월 14일 | 제18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
  - 남북관리구역 내 경비초소 설치와 운용 문제에 대해 협의
- 11월 16일 | 북한 외무성,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시 핵 계획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
- 11월 20일 | 남북,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와 청산결제를 위한 실무협의 개최(12월 17~20일, 평양) 합의
- 11월 21일 | KEDO, 북한이 핵개발 계획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을 들어 대북 경수로 공사 1년간 한시적 중단 발표
- 11월 28일 | 제19차 남북군사실무회담, 남북관리구역내 경비초소 설치와 운용문제를 협의
- 11월 29일 | 북한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미국이 경수로 건설을 중단시켰다고 비난하고, 그간 인민경제에 끼친 막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 11월 29일 | 일본, 북한동향을 감시하는 정찰위성 2대를 탑재한 H2A로켓 발사했으나 실패
- 12월 2~5일 | 남북철도·도로연결 제8차 실무접촉
  - <합의서>
    - ① 철도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부록 1(신호·통신·전력계통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확정하고, 신호·통신·전력계통 공사를 2004년 2/4분기부터 착수
    - ② 남측은 동해선 북강·남강 교량을 합성보로 2004년 1월중으로 설계하여 빠른 시일내에 제 공하도록 하고 북측은 이에 앞서 현장기술협의를 이루어지도록 협력
    - ③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를 위한 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을 부록 2와 같이 조정하며, 레일, 침목 등 궤도부설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공사 일정에 맞추어 빠른 시일 내에 제공
    - ④ 제공된 자재·장비의 수리·정비를 위한 제7차 기술지원을 경의선은 2004년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동해선은 1월 8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하기로 하며 앞으로 진행할 기술지원 날짜는 실무접촉 또는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정하기로 함.
    - ⑤ 차량운행사무소를 200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하며, 남북사이의 열

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도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여 차기 실무협의회에서 채택

⑥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실무접촉 포함)는 문서교환방식 또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정함.

12월 8일 | 통일부, 이산가족 면회소 공사계획 발표(2004년 상반기 시작, 2005년 말 완공 계획)

12월 9일 | 북한 외무성, 6자회담 재개는 일괄타결안의 1단계 행동조치를 합의할 수 있으나에 달려있다고 주장

12월 10~11일 | KEDO·북한 고위 전문가회의(금호 부지)

12월 14일 | KEDO, 경수로 공사가 1년간 중단에 따른 인력철수계획 발표  
- 2004년 1월 중, 보존조치 완료 후 현장관리인력 80여명과 경비인력 40여명을 제외한 인력 철수 예정

12월 15일 | 2003년도 대북식량차관 전달 완료

12월 16일 | 중국 류젠차오 외교부 대변인, 제2차 6자회담의 연내 개최 무산 시사

12월 17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제11호, 제12호, 제13호)으로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출입·체류·거주규정」, 「세관규정」을 채택(12월 11일)한 사실을 보도

12월 17일 | 북한, 대북식량차관 전달완료에 대한 사의 표시

12월 17~20일 | 남북청산결제 실무협의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

① 청산결제를 2004년 2/4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하며, 청산결제기간은 시행 첫해에는 시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하고, 차기연도부터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② 청산결제한도를 시행 첫해인 2004년에는 미화 1천만~3천만 달러 범위내로 함.

③ 청산결제 은행간 지급지시를 위한 통신수단으로 세계은행간금융통신망(SWIFT)을 이용하며, 이 밖에 은행업무수행을 위해 전화, 팩스 등을 이용

④ 청산결제 시행을 위한 실무문제들을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

⑤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제2차 회의의 날짜와 장소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정하기로 함.

12월 17~20일 |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공동보도문〉

① 개성·금강산지구 통행합의서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접촉을 통하여 토의

② 경제협력과 직교역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남북간의 통신연결 문제를 협의하여 서울-개성-평양으로 정하기로 함.

③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에 필요한 관련 법령 및 규정들을 상호 교환하기로 하고 차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산업재산권 문제도 계속 협의



12월 17~20일 | 남북원산지확인 실무협의회

〈공동보도문〉

- ①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8조 「원산지확인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
- ② 쌍방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을 주 또는 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상호 통보
- ③ 남북간 통관절차 및 공정교역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기로 하고, 교환할 자료목록을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
- ④ 남북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의 장소와 날짜는 추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정하기로 함.

12월 22일 | 조선신보, 북한 종합시장의 체계화를 위한 조치 보도

- 지난 3월 김정일 지시로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확대한 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의 맥락에서 시장의 운영방식을 크게 전환시킨 것임.

12월 23일 | 제20차 군사실무회담 개최

- 〈동,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자기 측 지역에 경비(차단)초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문제에 대한 합의서〉 타결

12월 24일 |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 개소

12월 29일 | 북한, 미국 정부가 12월 24일 WFP를 통해 북한에 식량 6만 톤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

# 2004년

- 1월 1일 | 북한,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당의 령도 밑에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공세를 벌려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발표
- 1월 3일 | 현대아산, 겨울철 관광객 급감으로 속초-북한 장전항을 오가는 설봉호를 11일 부터 3주간 중단기로 결정
- 1월 5일 | KEDO·북한, 고위전문가회의(1월 14~16일) 개최 합의  
- 북한이 경수로 1년 중단에 반발해 허용하지 않고 있는 공사자재·장비 반출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
- 1월 6일 | 통일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범국민적 통일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
- 1월 6~9일 |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 핵물리학 과학자 헤커 박사, 전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 프리처드가 인솔하는 비공식 대표단 영변 핵시설 방문
- 1월 6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차기 6자회담 준비는 말 대 말 공약과 함께 첫단계의 행동조치가 합의되도록 하는 데로 지향되어야 한다면서 차기 6자회담이 궤도에 들어서는가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주장
- 1월 7일 | 운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날 핵동결 관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북한이 자신들이 취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재차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
- 1월 7일 | 미국, 북한의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보유 사실 확인
- 1월 9일 | 제8차 국군포로 대책회의  
- 국방부와 국정원, 외교부 등 유관부처 국장급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귀환 국군포로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방안 등을 논의
- 1월 10일 | 북한 외무성, 핵시설을 방문한 미국 교수 일행에게 핵관련 시설을 보여주었다고 언급
- 1월 11일 | 북한 노동신문, 남북경협은 민족간 협력사업으로 그 진전 속도에 미국이 간섭할 그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지적
- 1월 12일 | 북한 외무성, 미국이 동시 일괄타결안의 1단계 조치로 ‘동결 대 보상’에 합의한다면 후연감속로에 의한 핵활동을 동결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
- 1월 13일 | 통일부, 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접촉과 제2차 청산결제실무협의 대표단 명단 발표
- 1월 13일 | 북한, 대북 식량차관 4차분 10만 톤 분배결과 통보  
- 2003년 대북식량차관사업 종료

- 1월 15일 | 미국 프리처드 전 대북교섭담당 대사, 1월 6~9일 방북 시 북한 폐연료봉 이전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표
- 1월 15~17일 | 이산가족면회소 건설부지 측량 및 지질조사를 위한 남북 실무자간 접촉 개최
- 1월 17일 | 한·미,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6자회의에서 용산기지 내 모든 시설과 병력을 평택·오산 지역으로 옮기는데 합의
- 1월 27~29일 |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접촉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채택
- 1월 27~29일 | 남북청산결제 실무협의 제2차 회의  
<공동보도문>
  -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2004년 합의서와 <수출입은행과 무역은행 사이의 청산결제업무에 관한 합의서>를 빠른 시일안에 채택
  - 제3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날짜와 장소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정하기로 함.
- 1월 30일 | KEDO집행이사회
- 2월 2일 |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켈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 북핵문제를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로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
- 2월 3일 | 북한, 2차 6자회담 2월 25일 개최 발표
- 2월 3~6일 |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 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제2차 6자회담이 결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
  - ②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 군사당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
  - ③ 조속한 시일내에 개성공단의 1단계 100만평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며, 금년 상반기 중에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도록 적극 협력
  - ④ 임진강수해방지사업, 해운합의서 발효 문제, 상대방에 대한 방송중지 문제 등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계속 협의
  - ⑤ 제9차 이산가족 상봉을 2004년 3월말 실시(금강산)
  - ⑥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4년 5월 4~7일 개최(평양)
- 2월 4일 | 북한 아태위 대변인, 남한당국에 금강산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 2월 4일 |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 주역인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86년~93년 사이 북한과 이란, 리비아 등에 핵무기 제조기술을 유출시켰음을 자백했다고 밝힘.
- 2월 5일 | 반기문 외무장관, 평양이 핵동결 및 검증 요구를 수용한다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에너지 및 기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
- 2월 6일 | 외교통상부, 북핵 외교 기획단(Task Force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설치
- 2월 10일 | 북한 외무성, 핵기술 파키스탄 이전설 부인

- 2월 11일 | 북·미, 미군유해 송환 재개 합의
- 2월 16일 | 노무현 대통령, 열린 통합방위 보고회의에서 북핵문제 평화해결의 전기 마련, 한·미동맹관계 강화, 협력적 자주국방 실현, 남북관계 내실화, 효율적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 등 5대 전략과제를 성공시켜 나갈 것을 강조
- 2월 17일 | 한·미 4자 고위협의회(2+2회의)  
- 한·미동맹, 이라크 파병, 북핵문제와 2차 6자회담, 한·미 미래동맹 문제 등 외교·안보 분야 전반의 협력강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
- 2월 20일 | 정세현 통일부 장관, 워싱턴 포스트지와 인터뷰에서 북한 핵폐기와 체면살리기의 동시 모색 필요성을 밝히고 북한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유연한 입장을 강조
- 2월 20일 | 북한 조선인민군 관문점 대표부 대변인, 미군 유해발굴회담(2월 11일)과 관련 발굴장비와 물자, 유골 등을 미군 수송기로 운반하자는 미국측 제안을 거부했다고 언급
- 2월 25~26일 | 남북철도·도로연결 제9차 실무접촉  
(합의서)  
① 경의선·동해선 연결공사 완공을 위하여 도로 포장용 자재·장비를 3월부터, 동해선 교량 상판을 5월부터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② 남북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위하여 제공된 자재·장비의 수리·정비 및 아스팔트혼합장 설치·운행을 위한 기술지원을 진행  
③ 차량운행사무소 설치·운영문제와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는 남북철도·도로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에서 합의하기로 함.
- 2월 25~26일 | 남북해운협력 제4차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 빠른 시일내에 문서교환방식으로 부속합의서를 최종 확정, 채택하기로 함.  
-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날짜와 장소는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함.
- 2월 25~28일 | 제2차 6자회담  
- 의장성명서 채택, 핵문제의 CVID 방식에 따른 평화적 해결 동의 표명(북한 제외)
- 2월 27일 | 미국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 미국은 6자회담에서 어떠한 예외도 없는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 계획과 관련된 모든 것이 논의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
- 2월 28일 | 남북적십자사, 관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제9차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200명 명단 교환
- 2월 29일 | 북한 냉동운반선, 서해 백령도상 북방한계선(NLL) 월선
- 2월 29일 | 북한 외무성, 6자회담 결과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
- 3월 2일 | 육군, 9월 말 완공예정인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재개
- 3월 2~5일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 합의문〉,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채택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 합의문〉
- ① 개성공단 개발을 진척시켜 올해 상반기 안으로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에서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기업들이 생산에 착수하도록 하고, 1단계 100만평 개발구역에 대한 내부 기반시설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다음해부터는 부지조성공사가 진행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협력
- ② 올해안에 1차적으로 경의선 개성-문산 사이, 동해선 온정리-저진 사이 가능한 구간에서 철도 시험운행을 진행하며, 경의선·동해선 도로 포장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끝내기로 함.
- ③ 금강산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강산관광특구개발계획을 빠른 시일안에 확정하고 하위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
- ④ 개성공단에 올해 상반기 안으로 직접거래 확대 등을 위한 경제협력협회사무소가 개성공단 개발사무소와 동시에 개설되는데 따라 협의 절차를 거쳐 그 운영에 들어가며,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적극 협력
- ⑤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하고 이에 따라 4월부터 현지조사에 착수
- ⑥ 남측 경제시찰단의 북측 방문과 북측 경제실무시찰단의 남측 방문을 차후 합의하는데 따라 빠른 시일내에 실시
- ⑦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는 6월 2~5일 개최(평양). 제3차 청산결제실무협회는 3월 중순 파주,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와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는 3월 하순 개성에서 각각 개최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 ① 임진강 유역의 수해방지를 위한 쌍방지역의 현지조사를 2004년 4월부터 진행
- ② 현지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실무협의회에 제출하며, 실무협의회는 이를 토대로 홍수예보시설 설치 및 묘목 제공 등 구체적인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 보고

**3월 4일 | 정부, 국가안보 전략기조 4가지 설정, 전략기조에 바탕해 참여정부의 안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과제와 2대 기반과제 제시**

〈4대 국가안보 전략기조〉

- 평화번영정책 추진,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포괄안보 지향

〈3대 전략과제〉

-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 구축,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 발전, 남북한 공동번영과 동북아 협력 주도

〈2대 기반과제〉

- 전방위 국제협력 추구, 대내적 안보기반 확충

**3월 5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제16호, 제17호)으로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규정」 및 「광고규정」을 채택(2월 25일)한 사실을 보도**

- 3월 9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COVID를 계속 요구할 경우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와 대북 적대시 정책의 영구 포기를 핵심으로 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안전담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주장
- 3월 11일 | 남북, 제3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를(3월 15~16일, 파주),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와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3월 24~26일, 개성) 개최 합의
- 3월 11일 | 북한 해군사령부 대변인, 남한 당국이 꽃게잡이철에 들어서면서 중국어선을 단속한다는 미명 하에 서해 해상 무력을 증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
- 3월 12일 | 국회,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 3월 12일 | 북한 민화협 대변인, 정부가 3월 4일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기조를 '냉전식 반공화국 대결정책' 이라고 비난
- 3월 14일 | 북한, 남한 정세를 이유로 파주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3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를(3월 15일) 회담장소를 개성으로 변경 요구
- 3월 15일 | 김광림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 제3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를 조속한 개최 촉구
- 3월 15일 | 남북적십자사, 제9차 이산가족 상봉단 후보자 각각 200명에 대한 생사 및 주소 확인 결과 확인서 교환
- 3월 17일 | 김광림 경추위 위원장, 북한의 청산결제실무협의를 장소변경 제의(3월 16일, 개성으로 재주장) 관련 유감 표명
- 3월 18일 | 남북, 9차 이산가족 상봉 최종명단 교환
- 3월 22일 | 북한 경추위 위원장, 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 연습 실시로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등 예정된 남북 간 회담이 진행될 수 없게 되었다면서 이들 회담을 4월초로 연기할 것을 제의
- 3월 25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2차 회의 개최
- 3월 26일 | 북·KEDO, 경수로 근로자 안전문제 협력 합의
- 3월 29일~ | 제9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 4월 3일 - 1차: 남측 이산가족 147명, 북측 이산가족 235명 상봉  
- 2차: 북측 이산가족 101명, 남측 이산가족 486명 상봉  
\* 일정 중 삼일포 참관상봉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남한 행사관계자의 부적절한 발언을 문제 삼은 북한의 공식사과 요구로 무산
- 3월 31일 | 북한 외무성, 미국의 동해 이지스 구축함 상시 배치계획을 비난
- 4월 2일 | 북한 노동신문, 동북아시아안보기구 창설논의는 현실과 먼 시기상조라는 입장 표명
- 4월 2일 | 북한,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및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개최(4월 8~10일, 개성) 제의
- 4월 3일 | 북한,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교체 통보(김령성→권호웅)

- 4월 6일 | 김광립 경추위 위원장,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와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개최 관련 북측 제안(4월 8~10일, 개성)에 동의하고, 제3차 청산결제실무협의회(4월 20~22일, 파주) 개최 제의
- 4월 6일 | 북한, 제3차 청산결제실무협의회에 대한 제안에 동의
- 4월 8~10일 |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합의서>  
 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합의한데 따라 철도 개통에 필요한 분계역사 등에 대한 설계 및 기자재 제공문제들을 적극 협력  
 ② 분계역사 등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와 시공과 관련한 기술지원에 적극 협력  
 ③ 「남북사이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빠른 시일안에 교환, 발효  
 ④ 빠른 시일안에 차량운행사무소를 약식으로 설치·운영  
 ⑤ 제공된 자재·장비의 수리·정비를 위한 기술지원을 다음과 같이 진행  
 ⑥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은 문서교환 등을 통해 협의
- 4월 8~10일 | 남북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위해 우선 임진강 유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조사항목과 세부조사 내용에 합의  
 <공동보도문>  
 ① 단독조사 항목과 세부조사내용 및 조사용 기자재 제공목록, 북측의 기상·수문 등 자료제공 항목에 합의하고 이를 「임진강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의 부록으로 첨부  
 ②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 날짜와 장소를 문서교환방식으로 정하기로 함.
- 4월 13일 | 김진호 한국토지공사 사장·박창련 북한 조선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국장, 개성공업지구 공장구역 1백만 평에 대한 토지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
- 4월 13일 | 합동참모본부, JSA의 군사임무 전환계획 표명
- 4월 15일 |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제네바), ‘북한인권결의안’ 통과(한국 기권)
- 4월 19-21일 | 김정일 중국 비공식 방문
- 4월 22일 | 남북청산결제 실무협의 제3차 회의  
 - 2/4분기 중 청산결제 시범실시를 목표로 청산결제 거래방식, 신용한도·이자율 등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  
 <합의서>  
 ① 청산결제에 의한 거래는 당국이 합의하여 정한 이 합의서의 부록 1과 2의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  
 ② 청산결제에 의한 거래는 기업들간에 계약의 방식으로 진행  
 ③ 청산결제에 의한 거래를 2004년도 2/4분기의 합의되는 시기부터 12월 31일까지 함.

- ④ 청산결제에 의한 거래를 미화 3천만 달러 범위내에서 진행
- ⑤ 신용한도를 청산결제한도의 15%로 하며 이자율은 연 1%로 함.
- ⑥ 청산결제 대상품목에 대하여 남북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위탁가공 교역은 제외)으로 함.
- ⑦ 2004년도 청산결제 대상품목을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협의·확정하고 이 합의서의 부록 1,2로 첨부
- ⑧ 청산결제 은행간 지급지시를 위한 통신수단으로 세계은행간금융통신망(SWIFT)을 이용하며, 이 밖에 은행업무수행을 위하여 전화, 팩스 등을 이용
- ⑨ 청산결제 거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제공
- ⑩ 2004년도 청산계정 차액잔고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계약방식에 의한 물자반출 또는 미달러화 중 상환측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청산하며 2004년 4/4분기 내에 <남북사이의 청산결제 거래를 위한 2005년도 합의서>를 체결
- ⑪ 북은 합의되는 적절한 시기에 쌍방이 정한 장소에서 기업들 사이에 이 합의서의 대상품목에 대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함.
- ⑫ 이 합의서의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남북청산결제실무협에서 협의·조정하여 처리

4월 22일 | 북한, 평북 용천역에서 대규모 폭발사고 발생

4월 23일 | 정세현 통일부 장관, 북한 용천역 사고 관련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할 생각이라고 언급

4월 23일 | 통일부, 개성공단 1단계 조성사업에 대해 남북협력사업 승인

4월 24일 | 북한 용천역 열차 폭발사고에 따른 재해대책 관계장관회의 소집, 1차적으로 100만 달러 상당 긴급구호 의약품 등 지원기로 결정

4월 24일 | 정부, 북한 용천의 재난구호를 위해 남북간 접촉 제의

4월 25일 | 북한 조선인민군 관문점 대표부, 4월 13일 미군이 관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임무를 국군에게 위임하기로 한 것과 관련 JSA 안전보장과 관련한 정전협정조항과 쌍방 합의사항을 전면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

4월 26일 | 북적, 대북 긴급구호품 지원계획에 대한 답신을 보내고 사의 표명, 용천재난 구호 관련해 남북 대표 접촉 개최(4월 27일, 개성) 제의

4월 27일 | 용천재난구호 남북간 실무접촉

- 남측은 용천재해 구호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 했고 북측 필요로 하는 사안들 제시함.
- 남측은 요청 사항에 대해 회담 종료 후 내부 검토 후 통보 제의하였으며 북측도 이에 대해 동의

4월 27일 |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실무절차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연락관 접촉 진행

- 북한은 제14차 장관급회담(5월 4~7일)을 평양 고려호텔에서 진행할 것을 알림

4월 28~30일 | 남·북·러, TKR-TSR 연결회담(모스크바)



- 4월 29일 | 북한 외무성,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 개최(5월 12일, 베이징)와 회의 참석 선언
- 4월 29일 | 미국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간 직접대화 거부 의사 표명
- 5월 4~7일 |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4년 8월 3~6일 개최(서울)
- 5월 10~11일 | 용천재해복구지원을 위한 제2, 3차 자재·장비 지원
- 5월 11일 | 이연택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아테네 올림픽 남북공동입장을 위한 실무회담 개최(6월 8~10일, 북경) 제의
- 5월 12일 | 북한 유영철 남북군사실무회담 단장, 제1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개최(5월 26일, 금강산) 제의
- 5월 12일 | 한성렬 북한 유엔 대표부 부대표, USA Today와 회견 중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킨 모든 국가가 평화조약에 서명할 때까지 북한은 핵억지력을 보유할 것이라고 언급
- 5월 12일 | 북핵 6자회담 실무그룹 회의
- 5월 14일 |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 시행
- 5월 14일 | 한적, 제10차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 개최(6월 19~24일) 제의
- 5월 15일 | 북한 외무성,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려 세울 수 없는 선 핵포기만을 강조하는 미국의 태도로 인해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주장
- 5월 17일 | 한국토지공사, 북측과 토지임차료 타결(4월 13일) 후, 통일부로부터 협력사업 승인을 얻고 북측에 개발계획을 제출
- 5월 18일 | 정부, <임진강수해방지에 관한 합의서>(2004년 3월 5일 채택)에 따라 현지조사용 기자재를 경의선 임시도로를 통해 북한에 전달
- 5월 18~19일 | 남북청산결제 거래를 위한 제1차 은행간 실무접촉  
- 합의서 명칭, 전문 서명란에 들어 있는 은행명칭, 이자계산방법에 대해 의견 불일치. 지급 거절 사유통지, 서류송달방법(경협협의사무소 개소 전까지 관문점 이용) 등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루어짐.
- 5월 24일 | 뉴욕타임스, IAEA사찰관들은 약 2톤에 가까운 원자탄 제조에 필수적인 핵사플로오르화 우라늄을 북한이 사들인 증거를 포착했다고 보도
- 5월 24~25일 | 남북적십자 제4차 실무접촉  
- 쌍방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제10차 이산가족상봉 일자 등 절차문제는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회담 종료
- 5월 25일 | 전국 12개 지역에 설치된 '북한관'을 '통일관'으로 명칭 변경
- 5월 26일 |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 서해상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 논의

5월 26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결정(제23호, 제24호, 제25호)으로 「금강산관광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금강산관광지구 세관규정」, 「금강산관광지구출입, 체류, 거주규정」 등 3건의 규정을 채택(4월 29일)한 것을 보도

5월 29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제27호, 제28호, 제29호)으로 「금강산관광지구 외화관리규정」과 「금강산관광지구 광고규정」 및 「금강산관광지구 로동규정」을 채택(5월 5일)하였음을 보도

6월 2일 |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미 하원 국제관계 아태소위 청문회에서 대북억지력 불변 표명 -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적 모험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한다는 우리의 결의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해두고자 함.

6월 2~5일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합의문)

- ①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구역안의 시범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04년 말까지 제품생산에 들어가도록 하며, 2004년 6월까지 개성공산 관리기관을 구성·운영하는데 적극 협력
- ②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개통을 2005년에 동시에 진행하며, 이에 앞서 이미 합의한 가능한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열차 시험운행을 2004년 10월경에 진행
- ③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채택·발효
- ④ 남북간에 합의하였거나 가서명된 합의서들을 조속히 발효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이와 관련한 부속합의서 마련 등 후속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함.
- ⑤ 민간급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해당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 협력
- ⑥ 남측은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북측에 쌀 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
- ⑦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8월 31일~9월 3일 개최(서울).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는 6월중 개성에서,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은 6월 30일~7월 2일(금강산), 제5차 해운실무접촉은 7월 13~15일 진행(속초), 그 밖의 필요한 실무협의회 또는 실무접촉들은 차후 일정을 정하여 개최

6월 3~4일 |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채택

- 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
- ②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2004년 6월 15일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음.
  - 서해해상에서 함정(함선)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
  - 서해해상에서 상대측 함정(함선)과 민간 선박에 대하여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음.
  - 서해해상에서 쌍방 함정(함선)이 항로미실, 조난, 구조 등으로 서로 대치하는 것을 방지

- 하고 상호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상선공통망(156.8Mhz, 156.6Mhz)을 활용
- 필요한 보조수단으로 기류 및 발광신호규정을 제정하여 활용
- 서해해상의 민감한 수역에서 불법적으로 조업을 하는 제3국 어선들을 단속·통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 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데 상호협력하며 불법조업선박의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
- 서해해상에서 제기된 문제들과 관련한 의사교환은 당분간 서해지구에 마련되어 있는 통신선로를 이용

- ③ 쌍방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쌍방군대들 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들을 제거
  -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4주년이 되는 2004년 6월 15일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
  - 2004년 8월 15일까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모든 선전수단을 3단계로 나누어 제거
- ④ 위 합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후속 군사회담을 개최

- 6월 4일 | 북한 경비정 2척 12:00경 서해 연평도 NLL을 0.5마일 침범, 우리 해군 함정이 출동하자 12:09경 북상
- 6월 4일 | 북한 외무성, 경수로 건설 중단 책임을 미국 측에 전가하고, "미국 정부와는 신뢰에 기초한 관계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동시행동원칙에 입각한 1대 1 해결'을 주장
- 6월 7일 | 남북 적십자 총재, 제10차 이산가족상봉행사 개최(7월 11~16일) 합의
- 6월 9일 | 남북, 제10차 이산가족 생사 확인 의뢰서 교환(남북 각 200명)
- 6월 9일 | 북한 해군사령부, 서해해상에서의 남조선군의 군사적 도발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
- 6월 10~12일 | 제21차 남북군사실무회담
  -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 채택
- 6월 14일 | 남북경비정, 서해 NLL 인근 해상 5개 구역에서 국제 공용 주파수를 통해 무선교신 성공
  - 6월 10~12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개최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 접촉 합의에 따른 것
- 6월 15일 |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유엔인권위가 4월 채택한 '대북인권 규탄결의안'을 표결 승인
- 6월 18일 | 남북,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6월 24~25일, 개성)진행 합의
- 6월 21~22일 |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북경)
- 6월 23일 | 2004년도 대북지원 비료 20만 톤 전달 완료
- 6월 23~25일 | 아테네올림픽 공동입장을 위한 실무접촉(북경)
  - 〈제28회 아테네올림픽 개·폐회식 남북공동입장에 관한 합의서〉

- ① 선수단 호칭은 우리말로 ‘코리아’로, 영어로는 ‘KOREA’
- ② 선수단 단기는 흰색 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 넣은 ‘한반도기’
- ③ 선수단 공동입장시의 음악은 제27회 시드니올림픽에서 사용했던 ‘아리랑’
- ④ 공동입장 순서는 ① 선수단 표지판 → ② 단기 → ③ 남북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 ④ 남북선수단장 → ⑤ 남북임원 → ⑥ 남북선수의 순서로 하며 공동기수는 남측은 여자, 북측은 남자
- ⑤ 선수단 복장은 동일한 것으로 하되, 남자 상의는 청색, 하의는 베이지색, 여자 상의는 적색, 하의는 베이지색

**6월 23~26일 | 제3차 6자회담(북경)**

**6월 24~25일 | 남북청산결제 거래를 위한 제2차 은행간 실무접촉**

- 합의서 제목, 이자계산 및 차액잔고 청산 합의. 연말 미결제 차액잔고 발생시 원금 및 이자가 청산될 때까지 다음연도 청산결제 업무가 정지된다는 것 재확인

**6월 24~25일 |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공동보도문〉

- 개성공단개발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전력·통신·용수 및 폐기물 처리와 통관·검역 등 당면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
- 앞으로 개성공단 개발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실무접촉 등을 통해 해결

**6월 25일 | 한국수출입은행·조선무역은행, 〈청산결제업무에 관한 합의서〉에 가서명**

-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논의되었음.

**6월 25일 |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1차 통신실무자 접촉**

-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통신선로 연결과 통신연락소 설치·운영문제에 대해 양측 입장 교환

**6월 28일 | 북한 외무성, 6자회담 관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사항만을 단계적으로 열거했다”고 불만 표출**

**6월 29~30일 | 제22차 남북군사실무회담**

- 군사분계선 지역 선전수단 1단계 제거 및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등,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사항의 이행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이행문제를 협의

**6월 30일 | 개성공업지구 시범공장부지 준공식 개최**

**6월 30일~ | 남북철도·도로연결 제10차 실무접촉**

**7월 2일 | 〈합의서〉**

- ① 경의선·동해선 북측 분계역사 등 건축계획설계를 확정하고, 남측은 9월말까지 건축실시설계를 완료하며 이에 따라 기자재를 제공. 남측은 북측 분계역사 등 건축 기초공사에 필요한 기초도면을 8월 초순 북측에 제공. 분계역사 등의 건축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기에 맞추어 건축시공 등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을 협의·확정

- ② 남측은 10월 중 도로 개통에 필요한 도로 안전용 자재를 제공하고, 북측은 자재 제공에 필요한 편의를 보장
- ③ 북은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를 위한 기술지원을 다음과 같이 진행
- ④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에 필요한 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을 본 합의서 부록과 같이 조정
- ⑤ 차기 회의를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함.

7월 1일 | 정동영 통일부 장관 취임

7월 3일 | 금강산 당일관광 시작

7월 5일 | 제23차 남북군사실무회담

-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관련 무선 통신망 상시 운영 및 7월 6일 부터 2단계 선전 수단 철거 작업 실시에 합의

7월 8일 |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승인절차에 대한 특례」 시행

7월 9일 | 북한 경추위 위원장, 제5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7월 13~15일, 속초)을 예정대로 개최할 수 없음을 통보

7월 9일 | 미국 콘돌리자 라이스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한해 북 핵폐기시 늘랄만한 대가 있을 것(리비아식 제안)이라고 언급

7월 11~16일 | 제10차 남북이산가족상봉

- 1차: 북측 이산가족 100가족, 남측 이산가족 471명 상봉
- 2차: 남측 이산가족 100가족 149명, 북측 이산가족 237명 상봉

7월 13일 | 남북,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채택

- ① 남측은 북측에 남측에서 생산된 쌀 10만톤과 외국산 쌀 30만톤을 차관으로 제공
- ② 차관금액은 제공하는 쌀 가격을 톤당 미화 삼백달러(US\$300)로 계산하고, 남측에서 생산된 쌀의 북측지역까지의 수송에 관련된 비용은 남측이 부담하며, 북측은 하역·항만비용과 채선료 등을 부담
- ③ 차관의 상환기간은 차관 제공 후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로 함.
- ④ 이 합의서에 따른 차관공여 및 상환은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함.
- ⑤ 제공되는 쌀의 인도·인수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쌀 인도·인수 절차」 및 「육로수송 절차와 방법」에 따르며 이의 이행을 위해 남측은 쌀 인도회사를, 북측은 쌀 인수회사를 각각 지정하여 상대방에 통보
- ⑥ 북측은 쌀 차관 제공이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및 선박·차량의 안전운행을 보장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
- ⑦ 북측은 남측의 분배투명성 확인 보장 등 쌀 제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⑧ 이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당국이 협의하여 해결

\* 제9차 경추위(2004년 6월 2~5일, 평양)에서 협의, 문서교환방식으로 최종 합의

- 7월 14일 | 북한 외무성, ‘동결대상 및 검증방법’에 대해 “평화적 핵활동은 우리 국가의 자주적 권리에 속하는 문제로서 동결이나 폐기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 표명
- 7월 14일 | 북한 경비정 1척, 중국 어선 단속 중 NLL 남방 0.7마일 침범, 우리 해군 함정의 경고사격을 받고 7분 만에 복상
- 7월 19일 | 개최 예정이었던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제3차 실무대표회담이 북측의 답신 미발송으로 무산
- 7월 20일 | 대북식량차관 쌀 40만 톤 중 10만 톤, 경의선·동해선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수송 시작
- 7월 21일 | 연평도 동북방 4.3마일 해상에서 표류 중 NLL 월선한 북한어선, 뒤따라 넘어온 북한 경비정에 의해 북으로 예인
- 7월 21일 | 미국 하원, 북한인권법안 통과
- 7월 24일 | 북한 외무성, 리비아식 선 핵포기 방식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히고, 핵동결에 따른 보상조치에 미국이 참가하는 것이 핵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주장
- 7월 26일 | 조업 중이던 북한어선 2척 백령도 인근 NLL 0.4마일 침범, 우리 군 고석정의 경고방송에 복상
- 7월 26일 | 통일부 대변인,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의 무산과 관련해 유감 표명
- 7월 27일 | 동남아 국가에 체류하던 탈북자 1진 입국(200명)
- 7월 28일 | 동남아 국가에 체류하던 탈북자 2진 입국(260명)
- 7월 29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우리 정부가 탈북자들을 대량으로 끌어가는 반민족적 행위를 감행했다고 비난
- 7월 30일 | 한적, 북한 용천 피해복구용 자재장비 추가지원 계획 통보
- 7월 31일 | 노무현 대통령,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화해협력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며 철도·도로연결사업 등 경협사업과 민간교류는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
- 8월 3일 | 북한 외무성, 최근 탈북자들의 대규모 입국과 관련 미국과 베트남, 우리나라 비정부 단체 등을 비난
- 8월 6일 | 정부, 범민련과 한총련의 8.15통일행사 참가 불허
- 8월 9일 | 남북올림픽위원장, 아테네올림픽 공동입장관련 논의(그리스 아테네)
- 8월 14일 | 북한,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8월 15일 임남담 방류계획 통보
- 8월 14일 | 남북, 2004 아테네 올림픽 공동입장
- 8월 15일 | 노무현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교류협력 강조
  -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일은 멈출 수 없음.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하나하나 착실히 실천해 나갈 것임.
- 8월 16일 | 북한 외무성, 미국의 적대행위 급증 때문에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

- 8월 18일 | 한적, 용천재해 피해복구용 자재·장비 지원 완료(5월 7일 시작)
- 8월 18일 | 북한 조국전선 중앙위, 탈북자 대상 회유편지 발송
- 8월 19일 | 북한 남북경협추진위 대표단, 미국의 전략물자 반출제한과 관련해 미국이 개성공단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
  - 미국이 테러지정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수 없도록 한 관련법규를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는 남한 기업들에게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통보했음. 미국이 개성공업지구에 대해 생산 설비와 자재의 반입을 철저히 통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
- 8월 19일 | 제12차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개최, 북한이탈주민 종합대책안 심의
- 8월 23일 | 북한 외무성,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 최고수뇌부를 모독했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견지로 6자회담의 기초가 파괴되고 있다고 비난
- 8월 25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결정(제33호)으로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 채택(7월 29일) 결정 보도
- 8월 27일 | 북한, 탈북자 대량 입국 관련 적십자 국제위원회에 편지 발송하여 탈북자 유괴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
- 8월 27일 | 유엔환경계획(UNEP), 최초의 북한 환경상태보고서(State of Environment, DPRK 2003) 출간
- 8월 30일 | 북적, 용천재해지원에 대한 사의 표명하고 긴급구호품 및 피해복구용 자재·장비 분배결과를 우리측에 전달
- 8월 31일 | 정부, 남북경추위 제10차 회의 연기 관련 북에 유감 표명 및 회담재개 촉구
- 9월 2일 | 과학기술부, 국내 소수 과학자들에 의한 극소량의 우라늄 분리실험 실시 사실을 밝히고, 동내용을 8월에 IAEA에 신고했다고 발표
- 9월 9일 | 북한 동북 지역에서 거대한 버섯구름 포착
- 9월 11일 | 북한 외무성, 남한의 핵실험을 군사적 성격이라고 규정하고 6자회담과 연계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
- 9월 15일 | 북한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주장 담화 발표
- 9월 18일 | 국가안전보장(NSC) 상임위원회,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 발표
  - ① 정부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함.
  - ② 정부는 핵투명성 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국제협력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
  - ③ 정부는 핵 비확산에 관한 국제 규범을 성실히 준수할 것임.
  - ④ 정부는 국제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임.
- 9월 20일 | 북한, 남한의 핵물질 실험과 관련하여 미국이 이중기준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
- 9월 20~24일 | IAEA 총회, '북한의 NPT 복귀 및 6자회담 참가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 9월 23일 | 북한 경비정 1척 서해 연평도 동북방 NLL 약 0.7 마일 침범
- 9월 23일 |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제도 시행
- 9월 23일 | 북한 노동신문, 미국이 핵전쟁을 개시하면 주일 미 기지들이 도화선이 되어 일본 전지역이 화염의 바다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
- 9월 27일 | 북한 최수헌 외무성 부상,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8,000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무기화할 것이라고 주장
- 9월 29일 | 미국 상원, '북한인권법안' 통과(7월 21일 하원 통과)
- 9월 30일 | 정부, 북한산 모래 반입 활성화 조치 시행
- 10월 3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남한 핵물질 실험의 진상이 해명됨이 없이 북남관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
- 10월 5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DMZ 세계유산등록' 추진관련 비난 담화 발표
- 10월 5일 | 북한 노동신문, 시안화나트륨 반입 과정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남한당국이 문제삼고 소동을 피운 것은 반민족 처사라고 비난  
- 시안화나트륨(화학무기 원료로 의심)
- 10월 5일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설치
- 10월 7일 |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 상에서 군사실무책임자 접촉,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한 인원·차량의 통행과정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입장 교환
- 10월 11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제35호·36호)으로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및 「금강산 관광지구 부동산규정」을 채택(9월 21일)한 사실을 뒤늦게 보도
- 10월 12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급변사태발생시 비상계획(총무계획)의 백지화 요구
- 10월 12-14일 | 경의선·동해선 철도역사 설계 기술협의
- 10월 14일 | 북한 외무성, 남한 핵물질 관련 실험에 대한 IAEA의 조사 태도를 비난
- 10월 16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4개 대안은 본질상 제2의 보안법이라고 비난
- 10월 18일 | 부시 미국 대통령, 「북한인권법」 서명
- 10월 18일 | 대북식량차관 제1차 분배현장확인(10월 14일 고성, 10월 15일 개성) 결과 발표
- 10월 20일 |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개소식 및 입주기업 건설착공식
- 10월 21일 | 미 백악관, 북한인권법은 북한정권을 탈출한 사람들과 북한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모두를 돕고 북한의 비참한 인권상황에 대처할 유용한 새 도구들을 제공할 것이라는 성명 발표
- 10월 22일 | 북한 외무성,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요구사항 제시  
-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고, 동결 대 보상에 참가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조선반도 비



핵화를 위해 남한 핵문제를 우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3대 조건 제시

- 10월 23일 | 파월 미국 국무부 장관, 북한의 6자회담 재개조건 일축
- 10월 25~26일 | PSI 다국적 해상합동훈련 실시  
- 10월 25~26일,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22개국 참여
- 10월 27일 | 대북 식량차관 육로수송 종료  
- 7월 10일~10월 27일, 매주 화-금 2000톤, 개성 7만 5천 톤, 고성 2만 5천 톤 지원
- 10월 29일 | 한적, 북적에 비료 10만 톤 지원 통보하고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의 개최 촉구
- 11월 1일 | 북한 경비정 3척 서해 소청도 및 연평도 인근 NLL 침범, 우리측 해군함정의 경고통신과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
- 11월 2일 | 북한 인민군 해군사령부, 남한 해군이 서해 북한수역에서 북한 경비정에게 도발을 감행(11월 1일)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조치를 요구
- 11월 3~4일 | 개성공단 남북사업자 간 전력·통신 협상
- 11월 4일 | 조지 W. 부시, 제44대 미국 대통령 당선
- 11월 6일 | 북한 통일신보, 탈북자 명칭 변경 관련해 '그 어떤 이름이든 그것은 동족을 적대시하고 체제 붕괴를 꾀한다는 의미에서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비난
- 11월 7일 | 일본 교도통신,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북한지역에 핵무기 30개를 사용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모의탄두 투하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
- 11월 9일 | 북한 경비정 1척 서해 백령도 부근 NLL 침범
- 11월 12일 | 노무현 대통령, LA World Affairs Council 연설 중,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은 엄중한 결과 초래 경고
- 11월 12일 | 한적, 북한에 이산가족 사망자 107명의 기일 통보
- 11월 15일 | 정보통신부, 친북사이트 31개 접속 차단
- 11월 18일 | 국방부,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 발표  
①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② 전쟁억제능력 조기 확충  
③ 군 구조 개편/국방개혁  
④ 국방비 확충: 2008년까지 국방비 단계적 증액, GDP대비 3.2%획득할 수 있도록
- 11월 19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최근 미국이 군사정전위 미국 측 인원들을 관문점에 상주시키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비난
- 11월 19일 | 북적 장재언 위원장, 금강산면회소 건설관련 제3차 실무접촉(11월 25~27일) 제의
- 11월 25~27일 | 이산가족 면회소건설 실무협의

- 11월 26일 | KEDO, 경수로사업 중단조치 1년 연장 결정
- 11월 26일 | 국내 과학자들의 우리나라 분리실험(9월 2일 발표), IAEA 이사회 ‘의장 결론(Chairman’s Conclusion)’으로 처리
- 11월 26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18일 발표한 국방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 비난 담화 발표
- 11월 30일~ | 남북, 개성공단 통신협의 재개
- 12월 1일
- 12월 1일 | 동해선 남북연결 본도로 이용시작 및 도로이용 대상 확대
- 12월 1일 | 북한 외무성, IAEA이사회가 남한 우리나라 분리실험에 대해 의장결론을 내린 것(11월 26일)을 비난
- 12월 3일 | 한국전력·조선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단 전력공급방식에 대해 최종 합의
- 12월 3일 | 노무현 대통령, 6자회담 진행 중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낮다고 언급
- 12월 4일 | 국가안전보장회의(NCS), 일반 탈북자 해외여행 제한 않기로 결정
- 12월 4일 | 북한 외무성, 2기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 과정을 주시하겠다고 언급
- 12월 5일 | 노무현 대통령, 프랑스 파리 교민 간담회에서 한·중과 다른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북의 정권 교체 이견으로 인해 북핵문제 풀기 어렵다고 발언
- 12월 6일 | 해군, 오전 7시45분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연평도 동쪽 2마일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소형어선 1척을 발견, 북쪽으로 송환
- 12월 6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미국이 북침 전쟁시나리오를 비밀리에 작성, 추진하여 왔다고 비난
- 12월 6~9일 | KBS·북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드라마 ‘사육신’ 제작관련 협의
- 12월 7일 | 북한 경비정 1척 서해 NLL 침범
- 12월 8일 | 일본 호소다 관방장관, 북한에서 가지고 온 납치 피해자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에 대해 DNA 감정을 한 결과 다른 사람의 것으로 판명되었음을 발표
- 12월 9일 | NSC, 북한 수역에서 조난 시 대응매뉴얼 마련
- 12월 9일 | 북한, 금강산면회소 지질·측량 조사 연기 요청
- 12월 10일 |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 북한정세 분석가와 구호단체들의 말을 빌려 북한 장성·고위관리 130명이 중국으로 탈출했다고 보도
- 12월 11일 | KEDO 사무총장, 경수로사업 폐기 후에도 KEDO의 존속 희망 표명
- 12월 13일 | 북한 외무성, 북한군 장성 대거 탈북설 부인하고, 미국의 흑색선전이라고 비난
- 12월 13일 | 미국 켈리 국무부 차관보, 북한의 모든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전면 폐기시 현행 한반도 정전협정체계를 다자간 평화조약 체제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

- 12월 14일 | 북한 외무성, 일본인 납북사망자 유골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판명되어 일본 내 대북제재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을 비난
- 12월 15일 |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 준공식, 첫 제품 생산
- 12월 21일 | 하반기 비료 10만 톤 추가지원 완료
- 12월 23일 | 정부, '탈북자수용대책 개선안' 발표
- 12월 24일 | 북적 장재언 위원장, 비료 10만 톤 추가지원이 완료된 것과 관련하여 사의 표시
- 12월 29일 | 동해상 표류 중이던 북한 선원 2명 구조, 판문점을 통해 송환
- 12월 29~30일 | 남한 KT·한국전력·토지공사와 북한 특구총국·조선체신회사간 개성공단 전력·통신협상 진행, 〈개성공업지구 통신공급에 관한 협력 합의서〉 체결

# 2005년

- 1월 1일 | 북한,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발표
- 1월 7일 | IAEA 사무총장, 우라늄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의 건설을 향후 5년간 동결하는 방안을 오는 5월 열리는 NPT 재검토회의에 제출하겠다고 표명
- 1월 8일 | 북한 외무성 대변인, 6자회담 재개 지연은 미국에 원인이 있다는 비난 담화 발표
  - 6자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 북·미 핵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철두철미 미국 때문임. 북·미 핵문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로서 그 해결의 근본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북미 평화공존정책으로 바꾸는데 있음.
- 1월 13일 | 북한, 남한에 비료 50만 톤 지원 요청
- 1월 13일 | 노무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올해는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
  - 북핵문제 역시 6자회담 틀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
- 1월 14일 | 통일부, 북한지역 관광객 신원조사 개선방안 발표
  - 북한관광의 경우 현재 일률적으로 신원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초·중·고 학생 단체관광, 수시방북증 소지자 등의 경우 신원조사 면제
- 1월 14일 | 북한 조평통, 탈북자 명칭변경(새터민)관련 비난
  - 남한당국이 탈북자대체용어를 조작하고 북이탈주민보호법까지 꾸며낸 것은 앞으로도 조직적인 유괴를 계속 감행하겠다는 의도임.
- 1월 20일 | 미국 부시 대통령 집권2기 공식출범, 자유 확산을 통한 테러의 종식 강조
  - 북한 핵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야망 포기 설득을 위해 아시아 국가의 정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
- 1월 20일 | 북한수역에서 남한 화물선 파이오니아호 침몰
- 1월 21일 | 제3차 식량차관에 대한 분배 현장 확인(청진)
- 1월 21일 | 북한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남측 해군이 서해 북측 수역을 침범하여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다고 비난
- 1월 23일 | 해경, 경북 울릉도 북방 20마일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15일 동안 표류하던 북한 선원 2명 구조
- 1월 24일 | 23일에 동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선원 관문점 통해 귀환
- 1월 25일 | 북한, 20일에 북측수역에서 침몰한 파이오니아호 구조를 위한 우리측 해경 경비정 재투입 허용
- 1월 25-26일 | 한국전력·북한 특구총국, 개성공단전력공급 실무협의

- 1월 27~28일 | 개성공단 통신·용수 실무협의
- 1월 28일 | 해군본부, 우리측 서해정상경제활동에 대한 북측의 비난보도(1월 21일, 24일, 27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경고
- 1월 28일 | 통일부, 북한의 해난 구조협조 관련 사의표명 논평 발표
- 1월 29일 | 국방부, 2004년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현 삭제하고, 표현방법을 대내·외로 구분해 사용키로 했음을 발표
- 2월 2일 |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발표
  - 개성공단 등 특구지역에 대한 투자자산의 담보인정 및 후취담보 취급 근거 마련
  - 기업의 대출수요에 맞추어 운영자금, 산업용지분양권 구입자금 등의 경협대출제도 다양화 및 투자자금 대출기간 확대
  - 북한내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자금 대출제도 도입 및 지원요건 구체화
  - 점증하는 자금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조대출제도 도입
  - 손실보조제도 내용중 교역손실보조의 수수료율은 위험부담 크기에 따라 차등화하고, 경제 협력사업 손실보조의 지급사유 발생요건 완화
- 2월 2~4일 | 동북아 전력망 연계 제4차 3자회의 개최(러시아)
- 2월 3일 | 외교통상부, 부시 대통령 연두 국정연설에 대한 논평 발표
  - 북한 핵 문제와 관련, 부시 대통령이 금번 연두교서에서 북한의 핵 야망 포기 설득을 위해 아시아 국가의 정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대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함. 이제는 북한의 호응으로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진전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봄.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회담 참가국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
- 2월 5일 | 해군, 북한의 NLL 수역에 대한 '도발' 주장에 대해 북방한계선 수호의지를 재천명하고, 이러한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 해군에게 있음을 경고
- 2월 10일 | 북한 외무성,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 및 핵무기고 중대 주장
  - ① 참가명분이 마련되고 회담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할 것임.
  - ②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고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임.
- 2월 10일 | 외교통상부 대변인, 북한 외무성 성명(2월 10일) 관련 북한의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 유감 표명 및 즉각적인 6자회담 참여 촉구
- 2월 11일 | 국방부,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문제 등의 협의를 위해 제3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제의
- 2월 11일 | KT, 북한 특구총국과 개성공단 통신협상
- 2월 11일 | 통일부, 2004년 대북식량차관(쌀) 인도 완료 발표

- 북측에 지원된 쌀은 10개 시도 194개 시·군(구역)으로 분배됨
- 1차 분배현장확인: 1차 2004년 10월 14일(고성), 10월 15일(개성)
- 2차 분배현장확인: 2004년 12월 5일(남포), 12월 11일(함흥)
- 3차 분배현장확인: 2005년 1월 16일(송림), 1월 21일(청진)
- 4차 분배현장확인: 2005년 1월 29일(함흥), 2월 4일(남포)

2월 16일 | 미국 국방부 대변인, 4월부터 북한에서 미군유해 발굴작업 실시 계획 발표

2월 20일 |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 결성식

[공동보도문]

- ① 남북 언어학자들은 민족어공동사전을 우리 말과 글의 민족적 특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통일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며 오랜 역사를 통하여 창조된 우리 민족어 유산을 총집대성한 겨레말 총서로 편찬하기로 하였음.
- ② 민족어공동사전 이름을 겨레말 큰사전이라고하기로 하였으며 남북 언어학자들은 겨레말 큰사전공동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 편찬 사업을 2005년 2월부터 시작하여 빠른 기간 안에 완성하기로 하였음.
- ③ 남북 언어학자들은 겨레말 큰사전공동편찬위원회를 분기에 1차씩 합의되는 장소에서 진행하며 여기에서 사전편찬과 관련한 제반문제들을 협의결정하기로 함.

2월 22일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당 대외연락부장 접견시 “6자회담 조건이 성숙되면 언제든지 회담에 나갈 것이며, 미국이 믿을만한 성의를 보이고 행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

2월 25일 | 노무현 대통령,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 북핵문제의 근본구조는 변하지 않았으며, 유연성을 가지되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2월 28일 | 북한 인민군 해군사령부, ‘우리 해군 영해침범’ 비난 보도

2월 28일 | 미국 국무부, 연례인권보고서 발표

3월 2일 | 북한, 2004년 대북식량차관 4차분 10만 톤 분배 결과 통보

3월 3일 | 「2005 민주주의 증진법안(독재종식법안)」, 미국 상·하원에 동시 상정

- 향후 20년이내 전세계 독재국가 종식 및 민주화 달성을 목표로 관련조직을 신설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

3월 3~5일 |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결성식 및 1차회의

3월 4일 | 미·북간 유해 발굴작업 관련 제1차 실무접촉

3월 5일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에서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연례인권보고서(2월 28일)는 논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일축

3월 7일 | 북한, 「2005 민주주의 증진법안」 제출에 대해 내정간섭과 정권 전복책동이라고 비난

3월 7~10일 | KBS,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개성촬영 관련 실무협의

3월 8일 | 관세청, 개성공단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차량 통행 등의 특례를 규정한 「개

- 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및 통행차량 관리에 관한 고시」의 시행(3월 10일)을 발표
- 3월 9일 | 미국 라이스 국무장관, 하원에서 재미교포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에서 의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
- 3월 14일~4월 22일 | 제61차 유엔 인권위원회 개최(제네바)
- 3월 16일 | 한국전력, 개성공단에 전력공급 시작
- 3월 16~17일 | 미·일·중·한·러 북핵 5개국 전문가 회의(상하이)
- 3월 19~25일 | 한·미 연합전지증원연습 및 독수리합동군사연습
- 3월 21일 | 개성주민 월동용 연탄(1.5만 톤) 2차 지원 개시
- 3월 22일 | 북한, ‘개성공업지구 출입국사업부’ 발족 우리측에 통보
- 3월 23일 | 통일부, ‘남북간 교역 및 통행 절차 개선방안’ 발표
  - ① 협력사업을 위한 물품 반출입시 신고제 폐지
  - ② 경의선 남북관리구역 통행절차 간소화
  - ③ 경의선 민통선 출입절차 개선
  - ④ 개성공단 반입물품 통관검사를 선별검사로 전환
  - ⑤ 수송장비 운행승인절차 간소화
  - ⑥ 통일부와 관세청간 차량운행 민원절차 통합
- 3월 23~24일 | 〈개성공단 통신공급 부속합의서〉(KT·조선체신회사) 및 〈용수시설합의서〉(토공·조선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체결
- 3월 27일 | 북한, 평양 하당 닭공장 등 2~3개 닭공장에서 조류독감 발생
- 3월 27일 | 북한 평양방송,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이산가족 관련 발언(3월 9일)에 대해 ‘대북 인권공세의 일환이며 또 하나의 대북 붕괴책동’이라고 비난
- 3월 28일 | 통일부, 북한 조류독감 관련 차관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
- 3월 29일 | 유엔 빗딕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6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탈북자 인권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에 다양한 보호·지원을 요청하는 인권보고서 발표
- 3월 29일 | 북한, 북한인권 보고서에 대해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비난
- 3월 29~31일 | 금강산지역의 체계적인 공중보건·위생대책 마련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 3월 31일 | 북한 외무성,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된 이상 6자회담은 군축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 4월 8일 | 북한 국가수의방역위원회, 우리측의 조류독감 퇴치 지원 의사(3월 29일 발송)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필요한 장비와 약품을 제공해 줄 것을 희망
- 4월 9일 | 북한에 조류독감 관련 장비 및 약품 긴급제공 통보

- 4월 9~11일 | 6.15통일대축전 준비위원회 실무협의(심양)
- 4월 11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3차회의 개최
- 4월 11~12일 | 겨례말큰사전 남북편찬위원회 제2차 회의
- 4월 14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낮 12시 보도를 통해 황만호의 월북 보도
- 4월 14일 | 제61차 유엔 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 4월 18일 | 북한, 4월 14일 동해상에서 월북한 어민(황홍련)·선박(황만호) 우리측에 인계
- 4월 18일 | <북한 철도역사 건축지원 합의서> 서명·교환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 합의에 따라 실시  
 ① 경의선, 동해선 철도분계역사 등의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제공에 협력  
 ② 경의선·동해선 철도 분계역사 등의 설계에 따라 제8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에서 합의한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수정하고 철도연결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자재·장비 제공에 상호 협력  
 ③ 신호·통신·전력 및 역사 건축공사 기술지원을 중단없이 진행하여 철도 연결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상호 협력
- 4월 18일 | 북한 해군사령부, 남한 해군함정이 서해 접적해역에서 북측 수역을 침범했다고 비난
- 4월 19일 | 북한 한성렬 유엔 주재 차석대사,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영변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으며,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 폐연료봉을 재처리할 계획이라고 언급
- 4월 19~23일 | KEDO·북한 회의(향산), 기존합의 효력 재확인
- 4월 20일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 비난담화 발표
- 4월 21일 | 미국 라이스 국무장관, FOX TV와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들어간 그 틀(6자회담)의 가능성이 소진될 경우 북핵문제의 유엔안보리 회부 및 다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 4월 22일 | 북한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남북실무접촉  
 - 남측은 최대한 지원한다는 협력의지 전달, 북측은 긴급약품 등 제공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 표명  
 - 실무접촉 이후에도 몇차례 쌍방은 전화통지문을 통해 의견조율을 시도했으나, 양측간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남측은 인도적 차원에서 북측 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 퇴치를 위해 필요한 약품과 장비를 남포항을 통해 북측에 전달
- 4월 25일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미국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핵문제의 유엔안보리 회부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 제재는 곧 선전포고라고 주장
- 4월 25일 | 금강산 임시도로 CIQ(세관, 출입국관리, 검역) 개설·운영, 북한에 구선봉 임시 출입사무소 설치
- 4월 26~28일 | 6.15통일대축전 준비위원회 실무협의
- 4월 27일 | 미국 국무부, 국가별테러리즘 보고서에서 북한 등 6개국(북한, 이란, 쿠바, 시리아, 리비아, 수



단)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 4월 27~28일 | <개성공단 본단지 전력공급 부속합의서> 협의
- 4월 30일 | 북한 외무성, 29일 부시 대통령이 제2기 취임 100일 기념 특별기자회견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위험한 사람(dangerous person)’, ‘폭군(tyrant)’, ‘국민을 굶기는 사람(man who starves his people)’ 등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인신비난
- 5월 2~4일 | 개성공단 시범단지 추가 전력공급
- 5월 4일 | 통일부, 남북간 수송통신장비운행 승인절차 간소화방침 발표
- 5월 4일 | 현대아산·북 아태위, 금강산특구개발 관련 선진관광제도 조사를 위한 해외공동시찰 실시 합의
- 5월 4일 | 미국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 북한의 6자회담과 별도의 양자회담요구 보도와 관련하여 이는 미국과 북한간 양자문제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언급
- 5월 9일 | 북한 외무성, 북미 양자회담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6자회담 재개 분위기 마련을 위해 북한을 무시, 모욕하는 언행을 중단할 것을 미국에 요구
- 5월 11일 | 북한 외무성, 가동 중단된 영변 5MWe 원자로에서 8,000개의 폐연료봉을 모두 인출했다고 보도
- 5월 11일 | 북한 해군사령부, 남한 당국이 5월에 들어와서도 서해 북측 수역에 전투함선을 불법 침입시키고 있다고 비난
- 5월 13일 | 북핵·6자회담 관련 북·미 접촉
- 5월 15일 | 외교통상부 대변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폐연료봉 인출완료 발표(5월 11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6자회담 즉각 복귀를 촉구
- 5월 16~19일 | 장관급회담 재개를 위한 남북차관급회담  
<공동보도문>
  - 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
  - ② 6.15 통일대축전에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당국 대표단을 파견하며 이를 위한 실무협의 진행
  - ③ 제15차 장관급회담을 6월 21~24일, 서울에서 개최
  - ④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5월 21일부터 북측에 당면한 봄철비료 20만톤 제공
- 5월 20일 | 북한 조류인플루엔자 퇴치 약품·장비 추가지원 관련 대북조치
- 5월 21일 | 대북 비료지원 개시  
- 육로 1만 톤, 해로 19만 톤
- 5월 21일 | 개성공단 시범단지 주변도로 포장공사 완료
- 5월 23~24일 | KEDO 집행이사회

- 5월 23일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과의 기자회견에서 미국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대북 위협 발언에 대해 비난  
- 우리는 미국측의 태도를 계속 주시할 것이며 때가 되면 우리의 입장을 뉴욕접촉선을 통해 미국측에 공식 전달하게 될 것임.
- 5월 24일 | 2005년 6·15 남북당국공동행사 제1차 실무접촉
- 5월 25일 | 미국 국방부, 북한의 미군 인력의 안전위협을 이유로 북한지역 미군 유해발굴 공동작업 잠정 중단 발표
- 5월 27일 | 2005년 6·15 남북당국공동행사 제2차 실무접촉
- 5월 27일 | 개성공단 전력요금 관련 관계기관 회의
- 5월 28일 | 2005년 6·15 남북당국공동행사 제3차 실무접촉  
<6.15 공동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 남북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한 실무 합의서> 채택  
- 쌍방은 각기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20명의 대표를 파견하기로 하였으며, 우리측 대표단에는 자문단, 지원인원, 기자단 등 50명이 동행하기로 하였음.  
- 우리측 당국대표단의 체류기간은 2005년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로하기로 하였으며, 이동은 민간대표단과 별개의 전세기를 이용하여 서해직항로로 왕래하기로 하였음.  
- 남북 당국대표단은 '6.15 통일대축전'의 주요행사에 참여하며, 이와 별도로 '6.15 남북당국 공동행사(6.15), 당국대표단간 오·만찬과 참관 등 당국대표단간의 별도일정을 갖기로 하였음.  
- 이밖에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대표단 표지, 통신 등 기타 실무절차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관례를 준용하기로 하였음.
- 6월 2일 | 북한 관문점 대표부, 미군 유해발굴 중단(5월 26일) 관련 군 유골 공동발굴 작업을 위해 조직되었던 조선인민군측 조사 발굴대를 전부 해체해 버리기로 하였다고 입장표명
- 6월 6일 |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조셉 디트리니 미국 국무부 대북 협상대사, 접촉
- 6월 7일 | 북한 아태위 대변인, 금강산 관광객 100만 명 돌파 담화 발표
- 6월 7~8일 | 금강산 관광객 100만 명 돌파 기념행사
- 6월 7~9일 | 한완상 한적 총재, 북한 아태위 리종혁 위원장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면회소 조기 착공 등의 건 교환
- 6월 8일 | 김계관 북한 외무성 차관, 미국 ABC 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충분한 양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
- 6월 10일 | 북한, 미국이 핵확산방지조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NPT를 준수할 것을 요구
- 6월 10일 | 한·미 정상회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재확인
- 6월 14일 | 6·15통일대축전 참가 대표단 방북(민간 295명, 당국 34명)

- 6월 14~17일 | 2005년 6.15 남북당국공동행사
- 6월 14~17일 | 정동영 대통령 특사, 제3차 방북  
-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하고 북핵문제의 정치·경제·군사 및 인도적 분야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협의
- 6월 19일 | 봄철 대북비료 20만 톤 수송 완료
- 6월 20일 | 한성렬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미국이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 of tyranny)’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철회 한 것으로 간주, 7월중 6자회담 복귀” 표명
- 6월 21~24일 |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 ① 8.15 남북공동행사에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실무접촉을 7월중 개성에서 진행
  - ②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분위기가 마련되는데 따라 핵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
  - ③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을 8월 26일부터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금강산면회소 건설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측량 및 지질조사를 7월중 완료
    - 제6차 적십자회담 8월중 개최, 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
  - ④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시범 개시,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7월 10일경 개성 개최
  - ⑤ 을사 5조약 날조 100년이 되는 올해 이 조약이 원천무효임을 확인
    - 북관대첩비를 반환받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적 조치 추진
    -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 ⑥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을 백두산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쌍방 군사당국이 직접 협의·결정
  - ⑦ 서해 평화정착 촉진을 위해 경추위 산하에 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이 협의회를 7월중 개최, 공동어로 등 수산협력문제들을 협의·해결
  - ⑧ 농업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제1차 회의를 7월 중순경 개성에서 개최
  - ⑨ 북한측 민간선박들의 제주해협 통과에 합의하고, 그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
  - ⑩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한측에 식량 제공, 구체적 절차는 경추위 제10차 회의에서 처리
  - ⑪ 경추위 제10차 회의를 7월 9~12일 서울 개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
  - ⑫ 제16차 장관급회담을 9월 13~16일 백두산에서 개최, 제17차 장관급회담을 12월중 남측지역에서 개최
- 6월 21~25일 | KEDO 실무협의(향산)

- 6월 22일 | 미국 애덤 어릴리 국무부 부대변인, 북한에 식량 5만 톤 지원 결정 발표
- 6월 22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족경제협력 위원회' 신설 발표
- 6월 24일 | 한완상 한적 총재·장재언 북적 위원장, <남북적십자간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체결
- 6월 29일 | 대북 비료 추가지원분 15만 톤 수송 시작
- 6월 29일 | 이산가족 화상상봉 제1차 기술실무자 접촉 개최  
(협의사항)  
- 전송로는 개성-문산간 광케이블을 이용하기로 의견접근을 봄.  
- 화상단말기(화상회의 시스템) 설치와 관련, 양측은 차기 접촉시 기종, 제조사, 성능 등 구체적인 구성안을 집중 토의하기로 함.  
- 내주초 2차 접촉을 개최하여 기술적 사항을 추가 협의한 후 7월 10일경 화상상봉을 위한 구체적인 실시방안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한다는데 의견접근
- 6월 29일 | 미국 부시 대통령,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혐의로 북한 기업의 미국 내 활동·자산 동결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연봉총회사
- 7월 5일 |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 대북발송
- 7월 5일 | 이산가족 화상상봉 제2차 기술자 실무접촉 개최
- 7월 6일 | 국회,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문> 채택  
①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2000년 발표된 '6.15 남북 공동선언'에 화해와 공존공영의 한반도 시대를 갈망하는 우리 민족의 염원이 담겨 있다는 점과 함께 '6.15 정신'을 바탕으로 한 남북 교류·협력은 물론 이를 위한 국회차원의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②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의 문제는 서로 힘을 합쳐 남북당사자 원칙 하에 스스로 해결해 나가자는 6.15정신에 따라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던 당국간 대화가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하는 등 질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남북당국에 요구함. 특히 6.15 공동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5년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는 2차 남북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촉구함.  
③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핵문제 등 남북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경제와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강화돼야 함을 확인하며 정부차원에서 대북지원을 위한 법적 장치와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함. 특히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공동어로 등 민생관련 분야의 조기타결을 위해 노력함.  
④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국회·정당차원의 교류·협력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남북 국회회담 조기재개를 북측에 촉구함.  
⑤ 대한민국 국회는 오는 8월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광복 60주년 기념행사'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남북간 노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하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함.

7월 7~8일 | KEDO 집행이사회

7월 9일 |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미국 크리스토퍼 힐 국무차관보 회담, 7월 마지막 주에 제4차 6자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

7월 9~12일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문(12개 항) 채택

〈합의문〉

- ① 쌍방이 가지고 있는 경제요소를 결합,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 추진
  - 남측은 2006년부터 의복류·신발·비누 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 북측은 아연·마그네사이트 등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남측에 보장하고 생산물을 제공
  - 남북은 앞으로 경제협력사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연구·검토
  - 이와 관련 경제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8월 중 평양에서 실무자간 협의 진행
- ② 9월중 개성공단내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
  - 협회사무소 개설을 위한 공동준비단을 9월초부터 구성, 개성공단으로 파견하여 실무적 문제처리
- ③ 남북은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구역 기반시설을 조속히 건설, 전력·통신·용수 등을 원만히 보장, 15개 시범공장 건설을 금년내 완료, 공업지구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도록 통행절차 개선, 본단지 분양 등에 적극 협력
- ④ 국장급을 대표로 하는 3~4명 규모의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구성, 서해상 평화정착과 남북어민의 공동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공동어로·양식·수산물 가공 등 어업협력 문제들을 협의·해결
  - 이와 관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7월 25~27일 개성에서 진행
- ⑤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 공사를 빨리 끝내고, 군사적 보장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는데 따라 올해안 철도 개통식 진행
  - 8월중 철도연결구간 공사실태 공동점검, 10월경 열차시험운행과 도로개통식 실시
  - 5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를 7월 28~30일 개성에서 개최
- ⑥ 북측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오는 8·15 계기로 실현, 실무적 문제들은 제5차 해운협력실무접촉을 8월 8~10일 문산에서 개최하여 협의
- ⑦ 빠른 시일내 임진강 수해방지 단독조사 상호교환, 군사적 보장조치가 조속히 마련되는 데 따라 8월 하순경 공동조사 진행
  - 당면한 올해 홍수철 피해대책을 위해 북측은 임진강과 임남댐의 방류계획을 남측에 통보
- ⑧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9개 합의를 필요할 절차를 거쳐 8월 초까지 발효
- ⑨ 남북은 쌍방의 경제시찰단을 경제협력대상들이 협의되는데 따라 11월중 상호교환
- ⑩ 과학기술협력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남북과학기술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문제를 문

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 ⑪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측에 쌀 5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
- ⑫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는 9월 28일~10월 1일 평양에서 개최
  - 제2차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 제1차 임진강수해방지실무접촉, 제2차 경제협력제도실무접촉, 제2차 원산지확인실무접촉은 9~10월 중 개성에서 진행, 구체적 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정함.

**7월 10일 | 북한 외무성, 6자회담 재개 합의 발표**

- 회담의 근본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들이 심도있게 논의되어 실질적 진전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우리는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7월 12일 | 정동영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보고에서 '중대제안' 발표**

-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할 경우, 현재 중단상태인 경수로 건설공사를 종료하는 대신 우리측이 독자적으로 200만Kw의 전력을 직접 송전방식으로 북한에 제공할 것임.

**7월 12~13일 |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 제1차 실무접촉, 합의서 채택**

〈남북이산가족 시범화상상봉에 관한 합의서〉

- ① 올해 8월 15일에 화상상봉을 시범적으로 실시
- ② 시범화상상봉의 규모는 남과 북 각기 20명씩으로 하며, 1명의 상봉자가 상대측 가족 5명 정도를 만남
  - 상봉후보자는 각기 100명씩 정하고, 후보자 명단은 7월 18일, 회보서는 7월 27일, 최종 명단은 8월 2일에 교환
- ③ 시범화상상봉은 당일 오전 8시부터 한번에 10가족씩 오전 20가족, 오후 20가족이 상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상봉순서는 최종명단 교환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함.
- ④ 시범화상상봉의 원활한 진행과 기술적 보장을 위해 가족동의를 전제로 진행인원 1명이 상봉보조
- ⑤ 화상상봉의 시험과 행사보장을 위하여 서울과 평양의 화상상봉 장소에 서울-평양간 직통 전화를 2대씩 설치 운영
- ⑥ 기술적 보장을 위한 일정
  - 남측은 7월 18일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광케이블을 연결
  - 남과 북은 7월 20일전까지 각기 10가족이 동시에 상봉할 수 있는 화상상봉설비를 갖추고, 7월 25일전으로 서울-평양간 SDH 전송로 총연장시험 진행
  - 남과 북은 남북 SDH 전송로가 확인된 후 서울-평양간 인터넷망(IP망) 연결시험을 7월 30일전으로 진행
  - 남과 북은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단말기 연결시험 진행
  - 총연결시험이 완료된 후 남과 북은 8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화상단말기 운용방법 완성
- ⑦ 제6차 적십자회담에서 화상상봉의 확대문제를 협의

**7월 12~14일 | 한국관광공사·아태위, 백두산 시범관광 합의**

- 7월 18일 |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 남북 광케이블 연결(군사분계선)
- 7월 18-30일 |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관련 측량 및 지질조사
- 7월 19일 |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 남북직통전화 설치
- 7월 19일 | 북한인권대회 개최(워싱턴)
- 7월 19일 | <8.15 이산가족 화상상봉 합의서> 교환
  - ① 8.15에 화상상봉을 시범적으로 실시
  - ② 상봉 규모는 남북 각기 20가족씩, 총 40가족
    - 7월 18일 생사확인회의서 교환→7월 27일 회보서 교환→8월 2일 최종명단 교환
  - ③ 오전 8시부터 한번에 10가족씩, 오전 20가족, 오후 20가족 기준으로 상봉
    - 가족별 상봉순서는 최종명단 교환시 협의
  - ④ 원활한 상봉진행과 기술적 보장을 위하여 진행인원 1명 배치 가능
  - ⑤ 서울-평양 화상상봉 장소에 남북직통전화 2대 설치·운영
  - ⑥ 화상상봉의 기술적 보장을 위한 조치 진행
    - 7월 18일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광케이블 연결
    - 7월 20일전 남북 각기 10가족 동시상봉 화상상봉 설비 구축
    - 7월 25일전 서울-평양간 SDH 전송로 총연장시험 진행
    - 7월 30일전 서울-평양간 인터넷 망(IP망) 연결시험 진행
    - 8월 1~5일 단말기 연결시험 진행
    - 8월 6~14일 화상단말기 운용방법 완성
  - ⑦ 제6차 적십자회담에서 화상상봉의 확대 추진 문제 협의 해결
- 7월 19일 | 북한, 국내언론의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의 남한 망명설 보도(월간조선 8월)에 대해 이는 완전한 날조라고 비난
- 7월 20일 | 제24차 남북군사실무회담
- 7월 22일 | 2005년 8.15 남북당국공동행사 제1차 실무접촉
  - <8.15 민족통일대축전에 대한 남북 당국대표단 파견하기 위한 실무접촉 합의서> 채택
  - ① 8.15 민족대축전에 당국대표단을 파견하며 대표단의 구성과 규모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고, 단장은 6.15 민족통일대축전때와 같은 급으로 함.
  - ② 북측 당국대표단의 남측 지역 체류기간은 2005년 8월 14일부터 8월 17일까지 3박 4일로 하며, 세부일정은 관문점을 통해 협의·확정
  - ③ 8.15 민족대축전 행사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쌍방 당국대표단간에 공동행사 등을 가짐.
  - ④ 북측 당국대표단의 왕래수단은 북측 비행기를 이용하며, 왕래는 서해직항로로 함.
  - ⑤ 기타 왕래절차,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등 실무적 문제들은 6.15 민족통일대축전때의 관례에 따름.

7월 22일 | 북한 외무성,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비핵화 목적 달성을 위한 과정이라고 주장

7월 24일 | 6자회담 남북 수석대표 접촉, 중대제안 등 관련 의견 교환

7월 25일 | 대북 비료 추가지원분 15만 톤 전달 완료

7월 25-27일 | 남북수산협력 실무협의회, 합의서 채택

〈합의서〉

① 서해에서 남북공동어로 수역 설정·이용

- 공동어로 수역 및 시작 시기는 남북군사당국회담에서 합의되는데 따라 확정
- 공동어로기간, 어선 수, 어구, 입어료 등은 쌍방이 합의 결정

② 서해에서 불법어선들의 어로활동방지를 위해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에 협력

③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분야에서의 협력사업 진행, 이를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은 남북수산협력실무접촉에서 협의

④ 수산물 생산향상을 위한 우량품종의 공동개발 추진, 이를 위한 수산분야 기술교류 추진

⑤ 제3국 어장진출에서 서로 협력

⑥ 남북수산협력실무접촉 날짜 및 장소는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확정

7월 26일 | 대북식량차관 차관계약서 합의(7월 25일) 및 육로 첫 수송 시작

7월 26일 | 2005년 8.15 남북통일축구경기 제1차 실무접촉

7월 26일~ | 제4차 6자회담(북경)

8월 7일

7월 26일~ | 동아시아축구경기(7월 31일~8월 7일) 관련 북한대표단 방남

8월 8일

7월 28일 | 한국전력 개성사무소 개소식(개성공단)

7월 28-30일 |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5차 회의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5차 회의 합의서〉 채택

①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연결구간 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끝내기로 하며, 남측은 역사 건축에 필요한 추가 자재·장비들을 제공

② 철도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을 경의선은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동해선은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며, 절차와 방법은 본 합의서 부록에 따름.

③ 경의선 및 동해선의 열차시험운행과 도로 개통식을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남북 공동행사로 10월 하순경 동시에 개최하기로 하며, 이와 관련한 실무적 조치들은 계속 협의

④ 철도운영공동위원회와 도로운영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남북위원 명단을 빠른 시일내에 문서로 교환

⑤ 철도연결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기술지원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

⑥ 필요한 시기마다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수석대표 또는 대표 접촉을 가지며, 제11차 남북



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은 개성에서 진행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 7월 29일 | 이산가족 화상상봉 제3차 기술자 실무접촉
- 7월 29일 | 북한, 9개 경협합의서 중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를 제외한 8개 합의서 발효 통보
- 7월 29-30일 | 2005년 8.15 남북통일축구경기 제2차 실무접촉, 〈8.15 남북통일축구경기 합의서〉 채택
- 8월 2일 |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 8월 2일 | 2005년 8.15 남북당국공동행사 제2차 실무접촉
- 8월 3일 | 화상상봉 관련 최종명단 교환 및 서울-평양간 화상 시험통화 실시
- 8월 4일 | 2005 동아시아연맹 축구선수권대회 남북한경기(전주)
- 8월 5일 | 9개 경협합의서 최종 서명본 교환
  - ①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 ②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 ③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 ④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 ⑤ 남북상사 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⑥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 ⑦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 ⑧ 남북해운합의서
  - ⑨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8월 10일 | 남북해운협력 제5차 실무접촉
  - 〈공동보도문〉
  - ① 북한측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8월 15일 부터 개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 수정·보충 합의서를 채택
  - ② 남북해운합의서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직접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의 이용을 8월 15일 부터 개시
  - ③ 남북해사당국간 유선통신연결: 2회선(전화 1회선, 모사전송 1회선)을 판문점 선로를 통하여 8월 11일 연결, 8월 12일 부터 운용 개시
  - ④ 정박중 선박에 설치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장거리 직접통신을 금년중에 보장하도록 노력
  - ⑤ 안정적인 선박운항을 위한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한 자료교환 실시(문서교환 방식)
  - ⑥ 해운합의서 발효에 따른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의 명칭을 ‘남북해운협력협의회’로 명명 하고 제1차 회의 날짜와 장소는 추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결정
- 8월 10일 |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단독조사 결과 상호교환
- 8월 10일 | 남북통신연락소(도라산 군 상황실-개성시) 개통
- 8월 11일 | 제11차 이산가족상봉행사 참가 최종명단 교환

**8월 12일 | 제25차 남북군사실무회담**

- 전제회의와 수석대표접촉을 통해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완전한 이행문제와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 일정 및 절차에 대해 논의

**8월 12일 |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 센터 개소식**

**8월 12일 | 해운협력 관련 남북해사당국간 통신망 설치·운영**

**8월 13일 | 북한 인민군 관문점 대표부, ‘을지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8월 22일~9월 2일)을 정전협정을 위반한 대규모 전쟁연습이라 비난**

**8월 14~17일 | 2005년 8.15 남북당국공동행사**

- 8.15 남북공동행사 북한측 대표단 방남 및 국립현충원 방문(8월 14일)
- 8.15 남북통일축구 남자경기(서울월드컵경기장)(8월 14일)
- 8.15 남북통일축구 여자경기(고양종합운동장)(8월 16일)
- 8.15 행사 당국대표단 경주 참관(8월 16~17일)

**8월 15일 | 남북 각 20가족, 이산가족 화상상봉 시범실시**

**8월 15일 | 북한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개시**

**8월 18일 | 현대·북 아태위, 개성 시범관광 3회(8월 26일, 9월 2일 9월 7일) 실시 타결**

**8월 19일 |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회의**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7개항) 채택

- ① 일정한 지역의 협동농장을 선정,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확대해 나가기로 함.
  - 남측은 육묘시설,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기자재, 배합사료 및 영농기술 등을 2006년부터 지원
  - 이를 위해 북한측은 남측 전문가와 기술자의 필요한 시기 해당 지역 방문을 보장
- ② 현대적인 종자생산 및 가공·처리·보관시설을 2006년부터 지원하는데 적극 협력
- ③ 우량한 유전자원의 교환과 육종 및 재배기술, 생물농약의 개발과 생산기술, 농작물 생육 예보 및 종합적 병해충 관리체계(IPM)형성, 남측 농업전문가들의 방문 등 농업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
- ④ 축산, 과수, 채소, 잠업, 특용작물 등의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나감.
- ⑤ 토지 및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양묘장 조성 및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자원을 늘려 나가는 데 서로 협력
  - 북한측의 동·서부지역에 각각 1개씩의 양묘장을 조성, 구체적인 장소는 향후 결정
- ⑥ 상기 명시된 사업들의 체계적 추진 및 실무적 협의를 위해 필요한 시기마다 각각의 실무 접촉 개최
- ⑦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를 향후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날짜와 장소를 협의 확정

하기로 함.

- 8월 18-20일 | 개성공단 본단지 1차 5만 평 분양신청 접수 완료
- 8월 22-25일 | SBS 주관 조용필 평양공연 실시
- 8월 23일 | 국회의장, 7월 6일 국회에서 채택된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문’ 전달
- 8월 23-25일 |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
  - ① 국군포로 및 납북자(전쟁시기 및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 ② 이산가족 화상상봉 지속 실시 ③ 이산가족 서신교환 및 대면상봉의 정례화에 대해 논의. 쌍방의 입장 차이로 합의서를 도출하지 못한 채, 간략한 공동보도문을 내는 것으로 회담 종료
- 8월 23-25일 | 동해선 남북철도연결 공사실태 남북 관계자 공동점검
- 8월 24-27일 |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제1차 실무협의
  -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관련하여 원자재 품목, 용도, 규격, 생산공장의 공정, 설비, 생산능력 등을 확인하는 문제와 지하자원개발 협력문제를 중심으로 협의 진행
  - 경공업 원자재 제공 규모와 지하자원개발 협력 등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쌍방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문이나 공동보도문의 채택 없이 회의 종료
- 8월 25일 | 북한 외무성, 4차 6자회담 2단계 회담을 9월 12일이 시작되는 주에 재개할 것이라고 언급
- 8월 26일 | 북한 최수현 외무성 부상, 유엔 OCHA와 WFP 평양사무소장관 면담시 금년말까지 인도적 지원사업 종료 요구
- 8월 26-31일 | 제11차 이산가족상봉
  - 1차 상봉: 남측 이산가족 145명, 북측 이산가족 229명 상봉
  - 2차 상봉: 북측 이산가족 100명, 남측 이산가족 434명 상봉
- 8월 29일 | 북한 외무성, 9월 첫째 주에 6자회담 2단계 회담 발표
- 8월 30일 | 북한, 9월 13~16일까지 백두산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한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의 장소를 기상조건 악화를 이유로 평양으로 변경할 것을 제의, 남측 제의 수용(9월 1일)
- 8월 31일 |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착공
- 9월 1~4일 | 아시아 육상선수권 대회, 북한 선수단 참가
- 9월 3일 | 북적, 미국 남부 카트리나 태풍피해 발생관련 미국 적십자사에 위문편지 발송
- 9월 6일 | 통일부, 임진강 댐 방류(9월 2일)로 인한 남한 어민 피해에 대해 유감 표명
- 9월 6일 | 제16차 장관급회담 관련 일정 등 협의 연락관 실무접촉
- 9월 6일 | 북한, 평화적 핵활동 권리 포기 불가 주장
  - 평화적 핵활동 권리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력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국이 평화적 핵활동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9월 7일 |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 제1차 실무접촉**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실무접촉 합의서〉(4개 항) 채택

- ① 일제의 을사5조약 날조 100년, 안중근의사 순국 95년이 되는 올해에 안중근의사의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사업을 적극 추진
- ② 안중근의사 유해위치 관련자료 조사 및 확인사업에 적극 협력
- ③ 안중근의사의 유해위치를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 현지에서 전문가회의를 통해 이를 확정하며, 각기 필요한 수의 인원으로 “안중근의사유해발굴단”을 구성하여 발굴사업을 공동으로 진행
- ④ 안중근의사의 유해공동발굴 및 확인, 봉환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중근의사를 기념하는 사업을 지원

**9월 8일 | 남북경협협회사무소 개설관련 제1차 실무접촉**

**9월 8일 | 북한, 임진강 하류의 우리측 어민들이 큰 물로 재산피해를 입은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

**9월 12일 | 개성공단 1차 5만평 입주기업(18개) 선정·발표**

**9월 12일 |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통해 북한 선원(김규호) 북한에 송환**

**9월 12일 | 정동영 통일부 장관·미국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면담**

**9월 12일 | 미국 재무부,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통해 위조 달러 지폐를 유통시키고 불법 국제거래 대금을 세탁해왔다고 공식 발표**

**9월 13일 | 북한 노동신문, 우리측 농축 계획서는 미국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억지이며 그 어떤 우리측 농축계획도 없다고 주장**

**9월 13~16일 |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 ①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맞게 남북관계에서 일체 체면주의를 버리고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질적으로도 도모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함.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당면하게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위에서 낡은 관념과 관행을 없애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해 협의하고 실천
- ②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6.15시대에 맞게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들을 적극 모색. 군사당국자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함.
- ③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 민족경제의 통일적·균형적 발전을 촉진시키고 남북 사이의 경제 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함.
- ④ 이산가족 문제해결 등 인도주의적 사업들을 적극 추진
- ⑤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사업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적극 지원

⑥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5년 12월 13~16일 개최(제주도)

9월 13-19일 |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개최(북경), 9·19 공동성명 채택

- ①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음.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음.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음.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음.
- ②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음.
- ③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시킬 것을 약속하였음.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음.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2백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년 7월 12일자 제안을 재확인하였음.
- ④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음.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임.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음.
- ⑤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음.
- ⑥ 6자는 제5차 6자회담을 11월 초 북경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9월 14일 | 대북식량차관 제1차 분배현장 확인(개성, 고성)

9월 14-20일 | 북한 선박(구봉령호), 제주해협 통과 운항(남포-제주해협-청진)

9월 15일 |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사업 남북공동추진 합의

〈합의서 요지〉

- 금년에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사업 적극 추진
- 유해위치 관련자료 조사 및 확인사업에 적극 협력

- 유해발굴단 구성, 발굴사업 공동 진행
- 안중근의사 기념사업 지원

9월 15일 | 미국 재무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BDA)이 북한의 위폐·마약 등 국제 불법거래 대금을 세탁 해왔다고 발표

9월 20일 | 북한 외무성, 4차 6자회담 종료 관련 경수로 제공 없이는 보유한 핵 억제력을 포기하는 없다고 언급

9월 22일 | 북한 최수현 외무성 부상, 제60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안보이사회 개혁은 불리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대표권을 보장해야 하며,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반대한다고 언급

9월 22~23일 | 개성공단 보험제도 관련 남북 보험사간 협의

9월 23일 |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합의서> 최종본 북한전달

9월 27일 | 남북경협협회사무소 공동준비단 제2차 접촉

9월 27일 | 평화항공여행사, 10월 6일부터 일일 150여명 규모로 9회 평양관광 개시한다고 발표

9월 29~30일 | 남북해운협력 실무협의회

- 남북해운항만관계자 상호 교환 방문과 남북 해난구조기관간 직통 연락망 구축 등 새로운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
- 유선통신망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기타 새로운 협력사업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이루었으나, 장거리 직접통신의 보장 등 몇가지 문제는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하기로 하고 공동보도문 없이 회담 종료

9월 30일 | 비전향장기수 정순택 유해 북한에 인도

10월 5일 |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 제2차 실무접촉

[합의서 요지]

- ① 올해 2회 추가 화상상봉 실시
  - 1차 11월 24~25일, 2차 12월 8~9일 각각 양일간 실시
- ② 매회 남북 각기 40가족 (1일 남북 각기 20가족씩 상봉, 4일간 남북 총 160가족)
  - 가족 대 가족 상봉방식으로 가족당 2~5명씩 참여
- ③ 1차 화상상봉은 시범화상상봉시 생사 확인자 중 미상봉자 대상 실시
  - 2차 화상상봉은 쌍방 각기 120명 후보자명단을 교환하여 선정
- ④ 1차 최종명단 교환은 11월 16일, 2차 상봉후보자명단은 10월 21일, 회보서는 11월 14일, 최종명단은 11월 16일 교환
- ⑤ 화상상봉 참가 대상자의 사진을 관리운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환
- ⑥ 상봉 시작일 7일전에 남북간 전송로 및 화상단말기 운용시험을 진행
- ⑦ 기타 화상상봉 진행에 따른 실무적 절차와 관리운영 방법에 따르는 기술적 보장문제는 시범화상상봉시 전례 준용
- ⑧ 남측은 북한측이 화상상봉 준비와 실시 및 설비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

10월 6~15일 | 평양관광 실시(총 9차, 1200명)

10월 7일 |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 제3차 실무접촉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에 관한 합의서〉 채택

- ① 올해에 두 차례의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실시하되 제1차 화상상봉은 2005년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제2차 화상상봉은 12월 8일부터 9일 사이에 진행
- ② 이산가족 화상상봉 규모를 가족 대 가족 상봉 원칙에서 남북 각기 40가족씩 정하며, 1가족당 상봉참가자 수는 2~5명 정도로 함.
- ③ 제1차 화상상봉은 시범화상상봉 때에 생사가 확인되었지만 상봉에 참가하지 못한 대상으로 하고 그 최종명단은 11월 16일에 교환하며, 제2차 화상상봉 후보자는 쌍방 각기 12명씩으로 정하고 그 후보자 명단은 10월 21일에, 회보서는 11월 14일에, 최종 명단은 11월 16일에 판문점을 통하여 교환
- ④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 시간을 시범화상상봉 때와 같이 정하며 가족별 상봉순서는 최종명단을 교환할 때 서로 협의하여 정함. 상봉에 참가하는 가족명단은 성명, 성별, 나이, 가족 및 친척관계를 밝힘.
- ⑤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참가하는 대상들에 한하여 화상상봉 관리운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진을 서로 교환
- ⑥ 이산가족 화상상봉 설비시험과 행사보장을 위하여 서울과 평양의 화상상봉 장소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서울~평양 직통전화를 2대씩 설치·운영
- ⑦ 상봉시작 7일전에 화상단말기들을 서로 연결하여 시험통화를 진행하며 시험통화 시간은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함.
- ⑧ 기타 화상상봉과 관련한 실무적 절차와 관리운영 방법에 따르는 기술적 보장 문제는 시범 화상상봉시의 전례에 따름.
- ⑨ 남측은 북측이 화상상봉 준비와 실시 및 설비를 운영하는데 소요 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
- ⑩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

10월 10일 | 미국 상무부, 한국으로 수출됐지만 수입기록이 없는 천연우라늄 플로라이드 6만 8천 693kg은 통계자료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하고 자료를 정정

10월 11일 | 제12차 이산가족 상봉 생사확인 의뢰서 교환

10월 11일 | 북한올림픽위원회, 제4차 동아시아경기대회(10월 29일~11월 6일, 마카오) 남북공동입장 제안

10월 12일 |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에 따른 남북 해운여건 변화 반영한 북한산 모래반입 활성화 조치 시행

10월 13일 | 박병원 경추위 위원장, 열차시험운행 및 도로개통식 합의이행 촉구

10월 13일 |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권당간 교류협력을 제안

10월 13일 | 정부, 제4차 동아시아경기대회 남북 공동입장 동의

10월 14일 | 남북경협협회사무소 개소 공동준비단 제3차 실무접촉

10월 14일 | 제2차 개성공단 보험협상

- 10월 15일 | 북한 조선반핵평화위원회 대변인, 한미간 핵물질 거래과정에서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200톤 우리놈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동 사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 및 진상 규명을 주장
- 10월 17일 | 남북경추위 제11차회의 토의의제 및 대표단 명단교환
- 10월 18일 | 북한 외무성, 미국의 BDA 금융제재는 우회적 압박수단이며, 미국이 적대행위에 계속 매달린다면 자위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
- 10월 19-22일 | 제2회 평양여자권투대회 참가차 선수단 및 방송관계자 69명, 방북
- 10월 20일 | 북한 아태위, 현대아산의 김윤규 부회장 해임관련 현대와의 사업 전면 재검토 주장
- 10월 20-21일 | 남북경제협력추진협의회 제11차 회의관련 제1차 위원급 준비 접촉
- 10월 21일 | 미국 재무부, WMD 확산방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382)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확산개입 혐의로 북한 8개 기업의 자산 동결  
- 해성무역회사, 조선광성무역회사, 조선부강무역회사, 조선용왕무역회사,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 조선국제화공합영회사,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토성기술무역회사
- 10월 21일 | 북한, 제4차 동아시아대회(10월 29일~11월 6일, 마카오) 기간 중 남북단일팀 구성위한 남북체육인간 실무회담 개최 제의
- 10월 21일 |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개최
- 10월 21일 | 제12차 이산가족 상봉 생사확인 의뢰서 회보서(200명) 및 화상상봉 후보자(120명) 명단 교환
- 10월 22-25일 | 한국관광공사 주관 평양관광단 방북
- 10월 24일 | 통일부, 북한 연형묵 국방위부위원장 사망 관련 조의 전통문 발송
- 10월 24일 | 북한 외무성, 11월 초 제5차 6자회담에 나갈 것을 밝히면서 미국의 대북 CVID에 의한 선택포기 요구 및 인권문제 등 압력에 대한 불만을 제기
- 10월 24일 | 정부, 남북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실무회담 대표단 규모(5명)와 실무접촉 진행안(10월 30일~11월 3일 중 시행)을 북한에 전달
- 10월 25일 | 남북경협협회사무소 개소 공동준비단 제4차 실무접촉
- 10월 25일 | 북한의 남북단일팀 구성 실무회담 개최 동의
- 10월 25-26일 | 남북경제협력추진협의회 제11차 회의관련 제2차 위원급 준비 접촉
- 10월 26일 | 대북식량차관 육로 수송분 10만 톤 수송 완료
- 10월 28일 |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소
- 10월 28일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  
<공동보도문>  
-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들과 이미 여러



- 차례 합의한 철도·도로연결, 수산협력, 개성공단건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등이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하루빨리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
- 앞으로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민간 및 당국차원에서 제기되는 경제협력문제들을 신속하게 지원 또는 협의추진하며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새로운 형식과 방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폭넓게 진행
- 10월 30일~ | '06년 아시안게임 및 '08년 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관련 남북 체육인 실무접촉
- 11월 3일 | - 단일팀 구성 합의
- 11월 2일 |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법」(2004년 10월 19일 채택)에 의거하여 '북한내 정보자유 증진을 위한 조치' 시행
- 11월 3일 |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 최종 교환
- 11월 3일 | 제26차 남북군사실무회담
- 11월 5~10일 | 제12차 이산가족상봉행사  
- 1차 상봉: 11.5~7 북측 이산가족 100명, 남측 이산가족 441명 상봉  
- 2차 상봉: 11.8~10 남측 이산가족 143명, 북측 이산가족 219명 상봉
- 11월 6일 | 미국 부시 대통령, 브라질에서 기업경영자들과 면담시 "일본은 미국에 있어 북한의 폭군(김정일)에 대처하는 절친한 친구"라고 언급
- 11월 7일~ | 개성공단 관리를 위해 북측 세무·회계인력(10명) 중국 연수 개시
- 12월 20일
- 11월 8일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미국 부시 대통령의 '폭군' 발언에 대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최고수뇌부에 대해 감히 험담하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비난
- 11월 9일 | 북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미군측이 판문점 회의장 구역에서의 행동질서를 규제한 합의(1987년 10월 28일)를 무시하고 그 이행을 포기하였다고 비난  
① 판문점회의장 구역 군사분계선상에 있는 미군 관리 세 체의 건물에 대한 점검·보수를 위해 미군측의 인원과 차량, 기재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불허  
② 미군측이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 설치한 설비의 이용과 보수를 금지
- 11월 9~11일 | 제5차 6자회담(북경)  
- 9·19 공동성명을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하는 내용의 의장성명 채택하고 5차 2단계회의를 가능한 가장 이른 일자에 열기로 합의
- 11월 10일 |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합의서> 서명·발효
- 11월 10~11일 | 현대(현정은)·북 아태위(리종혁) 개성 접촉, 11월 18일부터 금강산관광을 정상화하기로 합의
- 11월 10~19일 | 국제적십자사연맹총회(11월 11~14일, 서울) 북한대표단 방문
- 11월 11일 | 북한 외무성 김계관 부상, 1단계 5차 6자회담의 결과 요약 발표하고 금융제재에 대해 북미간 양자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

- 11월 11~18일 | 국제적십자사연맹 총회, 북한대표단 8명 참가
- 11월 14일 | 한국관광공사·북 아태간 실무접촉
- 11월 16일 | 제2·3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최종명단 교환
- 11월 17일 |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 채택
- 11월 17일 | 북한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체육회담(12월 7일, 개성)에 대한 합의를 재확인  
- 우리측, 11월 18일 이에 호응하는 전통문을 전달, 대표 수는 남북 양측 각기 5명으로 결정
- 11월 18-20일 | 금강산관광 7주년 기념행사
- 11월 20일 | 북한, 미국 국무부의 자산동결조치(10월 21일)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며 그에 대처하여 응당한 자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
- 11월 21일 | 북한 외무성, 제60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11월 17일)된 북한인권결의는 제도전복을 위한 날조라고 비난
- 11월 21-22일 | KEDO 집행이사회, 경수로 건설사업 종료에 합의
- 11월 22일 |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북측 협력부 직원 근무 시작
- 11월 22일 |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2차 실무접촉, 합의문 채택  
(합의문)  
-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의 유해위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양측이 연구한 결과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고, 유해공동발굴사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위치확인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함.  
- 남과 북은 현지답사 이전까지는 관련 자료의 조사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면서 조사 및 연구의 결과자료를 교환  
-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의 순국기념일인 내년 3월 26일을 계기로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11월 23-24일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위원급 실무접촉
- 11월 24일 | KT, 북한 조선체신회사·개성총국과 통신망 개통 협의
- 11월 24-25일 | 제2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 남측 40가족, 북측 39가족 총 79가족(547명)이 남한의 13개 상봉실(서울, 지방)과, 북한의 10개 상봉실에서 광전용망으로 연결된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상봉
- 11월 24-26일 | 거래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 11월 28일 | 북한 외무성, 경수로 건설 완전중단(11월 22일)에 대해 미국과 KEDO에 정치·경제적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
- 11월 29일 | KT·북 조선체신회사, 연내 개성공단 통신개통 합의

- 12월 1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남한당국이 경제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북을 와해시키려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
- 12월 1일 |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관련 제1차 연락관 실무협의
- 12월 2일 | 북한 외무성, 미국이 6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북·미간 접촉을 갖고 대북 금융제재 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을 촉구
- 12월 3일 | 제3차 화상상봉 추진 관련 명단 교환
- 12월 6일 |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제2차 연락관 실무협의
- 12월 7일 | 남북단일팀 구성 위한 제1차 남북체육회담
- 12월 7일 | 버시마우 주한 미국대사, 관훈토론 초청연설에서 북한 정권을 '범죄정권'으로 지칭하고, 대북 금융제재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
- 12월 8일 |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제3차 연락관 실무협의
- 12월 8일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12월 8~9일 | 제3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 남북 총 80가족 561명(남측 324명, 북측 237명)이 남측의 9개 도시(서울, 인천, 수원, 대전, 광주, 춘천, 대구, 부산, 제주) 13개 상봉실과 북측의 평양 고려호텔내 10개상봉실을 연결한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가족별 1~2시간씩 상봉
- 12월 8~10일 | 북한인권 국제대회(서울)
- 12월 9~10일 |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준비위원회(심양)
  - <주요 합의내용>
  -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 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의 명칭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약칭 「6.15민족공동위원회」로 하기로 함.
  - 이에 따라 남과 북, 해외측 각 지역준비위원회의 명칭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로 하기로 함.
  -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 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를 남과 북, 해외의 연대조직으로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규약을 12월 10일부터 채택·발효하기로 함.
  - 남과 북, 해외측 대표들은 뜻깊은 올해의 통일운동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06년에도 민족자주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것에 대해 일치한 견해를 표시
- 12월 10일 | 북한 외무성, 주한 미국 대사가 북한을 범죄국가로 지칭(12월 7일)한 것을 비난하고 대북금융제재 문제를 6자회담과 연계할 것임을 언급
- 12월 11~13일 | 현대아산·북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 실무협의

12월 13~16일 |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 ①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대결시대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함.
- ②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핵문제가 민족공동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 협력
- ③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함. 이와 관련하여 군사당국자회담을 새해 들어 조속히 개최
- ④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 민족경제의 균형적이며 통일적 발전을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확대발전
  -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이 민족내부의 협력사업이라는 원칙 아래 지역과 업종, 규모면에서 투자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함.
  -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통행·통관·통신,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등을 조속히 추진시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하여 협의·해결
- ⑤ 새해 음력설을 계기로 인도주의 사업들을 적극 추진
  - 2006년 2월 안으로 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상호 관심을 갖는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해결
  - 2006년 2월말 경에 제4차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실시하며, 3월말 경에는 제1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진행
- ⑥ 민족무도인 태권도의 통일적 발전을 위하여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
- ⑦ 개성지구 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보존·관리사업에 서로 협력
- ⑧ 일본으로부터 되찾아온 북관대첩비를 빠른 시일 안으로 원소재지인 북측지역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기로 함.
- ⑨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6년 3월 28~31일 개최(평양)

12월 16일 | 유엔 총회, 대북 인권결의안 가결(찬성 88, 반대 21, 기권 60)

- 유엔 인권위 차원에서 2003년부터 3년째 채택되고 있지만 유엔 총회 차원에서 상정·통과된 것은 처음

12월 20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KEDO 종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흑연감속로 건설 재개를 통한 평화적 핵활동 강화와 6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태도변화를 촉구

12월 20일 | 윤광웅 국방장관, 미2사단을 방문, “평화번영 정책 추진 결과 남북경협은 진전됐지만 북한의 군사위협은 변화가 없고 핵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

12월 21일 | 외교통상부 장관, 내외신 정례브리핑 질의답변에서 북한이 위조지폐를 제조한 것이 확실하다면 불법행위이며 즉시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

- 12월 23일 | 북한 조선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사무소 개소식
- 12월 24일 | 북한 조평통,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방장관의 발언(12월 20일)에 대해 '동족 대결로 나아가려는 것'이라고 비난
- 12월 25일 | 북한 조국전선 대변인,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12월 21일)은 반공화국 대결행위이며 우리에게 대한 참을 수 없는 도발이라고 비난
- 12월 26일 | 북한,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정부간 협의 결과 발표  
[협의 요지]
- ① 쌍방은 북·일 평양선언의 정신과 원칙에 따라 빠른 시기에 국교정상화 실현을 위해 과거 청산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함.
  - ② 쌍방은 회담을 아래와 같이 3개 분과로 나누어 '06.1월중 개최하기로 함.
    - 국교정상화: 대사급, 경제협력·재일조선인 지위·문화재 반환 등 과거청산 관련 문제 토의
    - 안전보장: 6자회담시 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6자회담 재개 전에도 해당급수에서 토의
  - ③ 남치문제: 납치 및 기타 현안 토의
- 12월 28일 | 문산전화국-개성전화국-개성공단 간 통신개통  
- 분단 이후 남북간 상업용 통신망 최초 연결
- 12월 28일 | 북한, 남북경제협력협의를사무소를 통해 임진강 유역 북측지역에 대한 단독조사 결과 전달
- 12월 29일 | 정부, NSC 개최해 미국 요청 PSI 관련 요청 사항 중 역내외 차단훈련 참관단 파견, PSI에 관한 포괄적 구체적 브리핑 청취, 한미 군사훈련에 WMD 거래 차단 훈련 포함 등의 항목에 사안별로 협조할 것을 결정

# 2006년

- 1월 2일 | 북한,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더 높이 비약하자” 발표
- 1월 5일 | 미국 국무부 힐 차관보, 6자회담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북금융제재 관련 미·북간의 대립으로 6자회담의 1월중 개최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
- 1월 8일 | 경수로 건설 KEDO 및 현장잔류 인원 최종 철수
- 1월 9일 | 북한 외무성, 금융제재와 관련해 미국이 제시한 불법행위 증거를 부정하면서 금융제재 해제 후 6자회담 재개를 촉구
- 1월 10-18일 | 김정일 위원장 방중, 북·중 정상회담(1월 18일)
- 1월 12일 | 한적, 북적에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2월 7~9일), 제4차 이산가족 화상상봉(2월 23~24일), 제13차 상봉행사(3월 18~23일) 개최 제의
- 1월 16일 | 북적, 한적이 제의한 일정에 대해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2월 21~23일), 제4차 이산가족 화상상봉(2월 25~28일), 제1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3월 20~25일) 수정 제의
- 1월 18일 |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개정 시행
- 1월 18일 | 미·북·중 3자회담(북경)
  -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실행 입장은 불변이나, 금융제재 문제가 장애가 되고 있으며, 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조건과 분위기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
- 1월 19-20일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위원급 실무접촉
- 1월 20일 | 한국관광공사·북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백두산 도로포장 추가지원 합의
- 1월 23일 |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입장표명 유보 결정
- 1월 23일 | 경의선 도로출입사무소 개소
- 1월 23일 | 북한 조평통, KBS가 입수·보도한 미국 CIA의 북한 붕괴 시나리오 시사점 연구보고서와 관련 북 붕괴를 기정사실화하여 모의훈련까지 한 사실이 폭로되어 온 겨레의 격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
- 1월 25일 | 노무현 대통령,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체제에 압박을 가하고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 내 일부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
- 1월 26일 | 미국 부시 대통령,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북한 금융제재관련 금융제재는 불법행위로 번 돈의 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며 경제제재와 다르고 우리는 법과 미국화폐를 보호할 것이라고 언급
- 1월 27일 | 동해선 도로출입사무소 개소

- 1월 29일 | 개성공단 생산품 수출컨테이너 인천항 첫 출항
- 1월 31일 | 미국 부시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폭정 종식 및 북한과 이란에 평화와 정의 수립을 위한 자유 확산 강조
- 2월 1일 | 정부, 김대중 전 대통령 4월 중 방북의사 북한에 전달
- 2월 2일 | 미국 존 네그로폰테 CIA 국장,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북한은 핵보유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인 듯하다고 증언
- 2월 3일 | 제27차 남북군사실무회담
  -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의 의제, 개최 일자, 장소 등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
  - 의제(서해상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수역 설정문제)의 일치 재확인 하였으나, 회담장소와 개최일자에 있어 의견차이를 보임.
  - 2월말에서 3월초 사이에 이틀간 판문점 북한측지역 통일각에서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전화통지문을 통해 확정하기로 함.
- 2월 7일 | 남·북올림픽위원회, 토리노 동계올림픽 남북동시입장 합의
- 2월 7~11일 | 임채정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의원 11명 방북
  - 북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회동·환담(2월 10일)
- 2월 9일 | 북적 중앙위원회 위원장, 한적에 비료 45만 톤 지원 요청
- 2월 9일 | 북한 외무성, 미국의 화폐 위조 주장을 부정하고 국제적 돈세탁 방지규범 참여 의사를 표명하면서 미국의 정책변화를 촉구
- 2월 9일 | 북한 조평통, 우리정부의 'PSI 부분 선택적 협력 결정'과 관련하여 "PSI 훈련참가 결정 철회"를 촉구
- 2월 10일 | 이종석 통일부 장관 취임
- 2월 11일 | 토리노 동계올림픽 남북공동입장
- 2월 13일 | 남북, 북관대첩비 북측에 인도(3월 1일)하기로 합의
- 2월 16일 |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북한 당국은 물론 관련 법인과도 거래하지 않겠다고 발표
- 2월 18일 | 재외공관장 99명, 개성공단 방문
- 2월 20일 |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6월로 연기
- 2월 20일 | 북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 <남북간 쌀차관 제공 합의서>(2005년 7월 12일)에 따라 쌀 50만 톤 제공을 성공적으로 완료한데 대하여 사의 표명
- 2월 20일 | 6자회담 수석대표 천영우(외교부 외교정책실장) 임명
- 2월 21일 | 북한 외무성,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통한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것이라며 비난

**2월 21~23일 |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국군포로 생사확인 등 7개 항 합의**

- ① 이산가족 금강산 특별상봉을 진행(남북 각각 200명씩)
- ② 이산가족 특별 화상상봉을 진행(남북 각각 60가족씩)
- ③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사업을 지속적으로 폭넓게 실시하기 위한 문제를 계속 협의
- ④ 쌍방은 이산가족 문제에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확인문제를 포함시켜 협의·해결
- ⑤ 남측은 화상상봉센터 준비와 이산가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는 데 필요한 설비 자재 등을 북측에 제공, 이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3월중)
- ⑥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6월경, 금강산)
- ⑦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

**2월 22일 | 통일부, 북한에 비료 15만 톤 지원 발표**

**2월 23일 | 비료 15만 톤 대북지원 관련 북측 회신 접수**

- 해로 13만 톤은 남포, 해주, 홍남, 청진, 원산의 5개 항구로, 육로 2만 톤은 개성과 고성으로 전달해 달라고 요청

**2월 24~25일 |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실무회의**

**2월 27~28일 | 남북철도·도로연결 제11차 실무접촉**

- 남측: 열차시험운행과 철도·도로개통식은 이미 남북간에 수차례 합의한 사항인 만큼, 행사 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
- 북측: 열차시험운행과 철도·도로 개통식을 조속히 개최한다는 입장과 의지는 변함이 없으나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 일정 합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 우리측에 자재 장비의 추가지원을 요청
- 합의 이루지 못하고, 추후 경협협회사무소를 통하여 차기 접촉일자를 정해 계속 협의하기로 함.

**2월 27~28일 | 제4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 1차: 남측 40가족(동반가족 124명) 총 153명, 북측가족 100명 상봉
- 2차: 북측 40가족(동반가족 79명) 총 119명, 남측가족 181명 상봉

**3월 1일 | 북한 외무성, 북한의 위폐제조 주장에 대해 증거가 없는 날조품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금융 제재 해제를 촉구**

**3월 1일 | 북관대첩비 인도·인수식, 함경북도 김책시에 복원**

**3월 2~3일 | 제3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세부조치 등에 대해 논의하여 공동어로 실시, 충돌방지 개선 등 서해상의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기본입장에는 공통된 인식을 가졌으나,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일치점을 보지 못함.
-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 체결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나, 구체적 협의 진행되



지 못함.

3월 4일 |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3월 6일 | 관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제13차 이산가족 상봉(3월 20~25일, 금강산) 후보자에 대한 생사 확인 회보서를 교환

3월 7일 | 위폐관련 북·미 접촉, 미국에 4개 제안 제시

- ① 북·미 비상설협의체 구성
- ② 미국 은행에 북한 계좌를 한 개 개설 제안(금융거래 차단으로)
- ③ 전반적인 금융제재 해제는 아니더라도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라도 풀어 줄 것
- ④ 위폐 감시기술 자문

3월 9일 | 남북 연락관 접촉을 통해 제13차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최종명단(남북 각 100명) 교환

3월 9~12일 |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 중국 방문

3월 10일 | 미국 부시 대통령, 미국 신문협회 연설에서 이란과 북한이 안보위협으로서는 똑같다고 언급

3월 11일 | 북한 전호웅 남북장관급회담 단장,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4월로 일방 연기 통보

3월 13~14일 |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 일본 방문

3월 14일 | 미국, 북한의 위폐문제 관련 4개 제안(3월 7일) 거부

3월 15일 | 경의선·동해선 도로 남북출입시설 준공

3월 17일 | 남·북·러 3국 철도운영자 회의

- 한반도 종단철도(TKR) 북한을 통과해 건설기로 합의

3월 17~22일 | 남북적십자 제5차 실무접촉(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접촉 주요내용>

- 이산가족사업 확대에 필요한 차량 및 물품구입 비용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취했으나, 물품구입 비용의 구체적 액수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 화상상봉센터 설비자재 지원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측은 설비자재의 구체적 사용내역 확인과 더불어 우리측 인원의 현장방문을 북한측에 강력히 요구하였고, 북한측은 현장방문을 구두로 약속하겠다고 하였음.
- 우리측은 생사확인 후보자 수를 확대할 것을 북측에 제의, 북측은 세부일정 등에 대해서 판문점을 통해 공식적으로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임.
- 쌍방간에 이견이 가장 컸던 분야는 화상상봉 정례화 문제, 우리측은 화상상봉센터 준비에 필요한 자재설비를 지원하는 만큼 5월부터 월 1회 화상상봉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나 북한측은 화상상봉 정례화 문제는 실무접촉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대응함으로써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

3월 18~19일 | 북한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3기 발사

3월 20일 |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3차 실무접촉

- 3월 20~25일 | 제13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 1차: 3월 20일~3월 22일, 우리측 방문가족 148명, 북측 가족 239명을 상봉  
 - 2차: 3월 23일~3월 25일, 우리측 상봉가족 420명, 북측 가족 100명을 상봉
- 3월 21일 | 북한 외무성,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핵전파, 테러방지,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서도 전쟁을 하겠다는 것을 밝힌 강도적인 선전포고 문건이라고 비난
- 3월 22~23일 | 3차 북한인권 국제대회(벨기에 브뤼셀)
- 3월 22~25일 |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 미국 방문
- 3월 23일 | 북한 외무성, 한미 합동군사훈련(RSOI/FE)을 대북 핵 선제공격연습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자위적 행동조치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 3월 24일 | 개성공업지구 반출컴퓨터 관리지침 제정
- 3월 28일 | 개성공단제품 인천항 첫 선적
- 3월 29일 |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출범  
 - 6자회담을 비롯한 북핵 업무와 한반도 평화정착 업무를 위해 3년 기한의 한시조직으로 설립
- 3월 30일 | 미국 국무부, 북한에 대량살상무기 지원 혐의로 스위스 코하스 AG(Kohas AG)의 미국 내 자산 동결 조치
- 3월 31일 | 통일부, 금강산 사업자인 현대아산에 대해 금강산 관광지구내 통일수련원 및 직원숙소 건립·운영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승인
- 4월 2~4일 | 제15차 국가올림픽위원회(ANOC) 총회 개최(서울)  
 - 조선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2006 도하아시안 게임 및 2008 베이징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방안 논의
- 4월 2~4일 |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 러시아 방문
- 4월 4일 | 미국 레비 재무부 차관, 상원 테러자금 및 돈세탁 관련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 금융·경제제재 조치의 유효성을 밝히며, 김정일 정권으로의 더러운 돈의 유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
- 4월 4~6일 | 남북 적십자사 '제3차 공동식목 행사' 개최
- 4월 6일 |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6개국 대량살상무기 저지를 위한 확산방지구상(PSI)훈련 시작
- 4월 7일 | 1977년 납북된 일본인 메구미 남편은 피랍 한국인(김영남)으로 확인
- 4월 7일 | 북한, 비료 30만 톤 추가지원 요청
- 4월 10~11일 | 동북아시아협력대화 개최, 6자회담 남·북·미 수석대표 참가
- 4월 13일 | 청와대 '안보정책조정회의' 신설, 외교분야 장관급, 고위인사 등 참여
- 4월 14일 |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총회에서 아시아황단철도(TAR) 노선·일정

합의

- 4월 20일 | 북한 인민보안성 대변인, 미국과 일본의 정보기관이 대북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관련 정보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주장
- 4월 21일 | 2006 남북공동 나무심기 행사
- 4월 24일 |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 ①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신뢰를 증진
  - ②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실현을 위해 협력
  - ③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9.19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 핵문제가 민족공동의 이익과 안전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 협력
  - ④ 민족의 단합을 위하여 노력하며 당면하여 6.15 공동선언 발표 6주년을 맞아 남측지역에서 개최되는 민족통일대축전에 쌍방 당국 대표단이 적극 참가하여 민족적 행사를 의의있게 진행
  - ⑤ 경제분야에서 민족공동 번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협력을 실현해 나가기로 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5월중에 개최
  - ⑥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
  - ⑦ 자연재해 방지, 보건 의료, 문화유적 보존 등 여러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추진
  - ⑧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2006년 7월 11~14일, 부산)
- 4월 25일 | '금강산 윤이상음악회', 남북인사 270여명 참석
- 4월 27일 | 제17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북한에 대한 비료 20만 톤 지원안 등 의결
- 4월 27일 | 남북 첫 합작 정춘 흑연광산 준공
- 4월 27일 | 미국 법원, 한국 국적 취득한 북한군 장교출신 서재석에 대해 정치적 망명 최초로 허용
- 4월 27일 |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북 공동위원장, 6.15공동선언 발표 6돌 기념 공동통일 행사 개최문제 토의
- 4월 28일 |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북한 개성공단 방문
- 4월 28일 | 미국 부시 대통령, 탈북 김한미 가족 면담
- 4월 28일 | 미국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 인권특사, '개성공단 노동착취 우려', '개성공단 북 근로자 일당 받는지 의문' 등의 주장 담은 기고문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게재
- 4월 30일 | 통일부 대변인, 미국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 기고문 관련(4월 28일, WSJ) 논평 발표  
- 개성공단사업의 취지와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근로자 임금과 노동환경 문제를 인권문제와 연계시켜 왜곡함으로써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논평

- 5월 2일 | 중국, 6차회담 수석대표 비공식 회동 제안(일본 교토통신 보도)
- 5월 3~4일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위원급 실무접촉,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문제와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경제분야 합의사항에 대해 협의
- 5월 4일 | 북·중, '국경무역구'를 온성·투먼 접경지대에 신설할 것을 합의
- 5월 5일 | 미국, 「북한인권법」을 적용해 탈북자 6명을 난민으로 첫 수용
- 5월 5일 | 북한 권호웅 남북장관급회담 단장,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협의 실무접촉 제의
- 5월 9일 | 이종석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 방문
- 5월 9일 | 노무현 대통령, 몽골 방문 중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에 대해 북한의 융통성 있는 기대와 북에 많은 양보 할 것이라고 언급
- 5월 9일 | 한국, 유엔 인권이사국에 선임
- 5월 9~11일 | 제7차 북한 인권·탈북자 국제회의에 박경서 인권대사와 김영석 주 노르웨이 대사 참석  
- 북한 인권관련 NGO 회의에 정부대표 첫 공식 참석
- 5월 10일 | 통일부·열린우리당 당정협의, 개성공단 본단지 57만 평 6월부터 단계별 분양 예정 설명
- 5월 11일 | WFP, 대북식량지원 재개하기로 북한 당국과 합의
- 5월 11~12일 | 남북 철도·도로 연결 제12차 실무접촉  
<합의서>
  - ① 경의선 및 동해선의 철도 연결구간에서의 열차 시험운행을 5월 25일 진행
  - ②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구간의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③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연결구간에서의 열차 운영을 위한 통신망을 구성하며, 열차 운영을 위한 열차운행주파수는 155.9250MHz로, 작업용 주파수는 155.9625MHz
  - ④ 빠른 시일 안에 차량운행사무소를 소규모로 설치·운영, 점차 그 규모와 범위를 확대
  - ⑤ 철도운영공동위원회와 도로운영공동위원회 명단을 빠른 시일 안에 교환하고, 합의되는 날짜에 제1차 회의를 진행
- 5월 12일 | 개성공업지구방문 및 협력사업 승인 절차에 대한 특례 개정
- 5월 15일 | 대북 추가 20만 톤 비료지원 시작
- 5월 15일 | 미국 라이스 국무장관, WMD 폐기에 있어 리비아는 북한과 이란에 중요한 모델이라고 언급
- 5월 16일 | 한·아세안 FTA 최종타결, 개성공단 생산 100개 품목 한국산으로 인정
- 5월 16~17일 |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관련 제1차 실무접촉  
- 방북시기·절차, 왕래경로, 방북단 규모 등에 대한 각기 입장을 밝히고 협의를 진행
- 5월 16~18일 | 제4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 서해상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수역 설정문제,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 채택 문제 등을 논의하였으나, 쌍방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

**5월 17일 | 민단·조총련 반세기만의 만남, '화해·협력 6개항 공동성명' 발표**

- ① 두 단체의 화해·화합 도모 및 교포사회 단합을 위한 협력
- ② 6.15 민족통일대축전 일본지역위원회 공동 참가
- ③ 8.15 기념축제 공동개최
- ④ 교육·민족문화 진흥사업 공동노력
- ⑤ 교포사회 복지·권익옹호 활동 협력
- ⑥ 합의 이행을 위한 창구 설치

**5월 18-19일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위원급 실무접촉**

- 경의선·동해선의 열차 시험운행 기념행사 2006년 5월 25일 문산역과 금강산역에서 공동 진행하기로 합의

**5월 22일 | AP 계열사 APTN 평양지국 설립, 서방언론의 첫 북한 상주**

**5월 23일 | 2006년 6.15 남북당국공동행사 실무접촉**

〈합의서〉

- ①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쌍방 당국대표단이 참가하여 대축전이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을 촉진시키는 민족공동의 행사로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
- ② 이번 행사가 의미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해 8.15민족대축전 때와 같은 급을 단장으로 하는 20명 정도의 당국대표단을 구성하며, 구체적인 명단은 행사 10일전에 교환
- ③ 북측 당국대표단의 남측 지역 체류기간은 2006년 6월14일부터 6월17일까지 3박 4일로 하며, 세부일정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확정
- ④ 쌍방 당국대표단은 대축전 기간 민간급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에 기본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 당국대표단간의 상봉모임 등을 진행
- ⑤ 기타 왕래절차,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등 실무적 문제들은 지난 해 공동행사의 관례에 따름.

**5월 23일 | 미국 백악관 정례브리핑, 미·북 평화협정이 먼저 체결되어야 북한이 핵프로그램 포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한성렬 대사의 언급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먼저 포기해야 상황이 진전될 수 있음을 수차례 걸쳐 분명히 해 왔다"고 언급**

**5월 24일 | 북한, 남북 열차시험 운행(경의·동해선, 5월 25일 예정) 쌍방 군사적 보장 미조치, 남한의 불안정 정세 등을 내세워 전격 취소 통보**

**5월 26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남북 철도시험운행 중단 책임을 남한에 전가**

**5월 27일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전금렬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서기장, 내금강 지역 관광을 위한 공동답사 실시**

**5월 28일 | 북한 남북군사회담 대표단 대변인, 철도·도로 서해안 충돌방지 등에 관한 담화 발표**

- 서해해상 충돌과 같은 중핵적인 군사적인 문제해결에 책임있는 결단을 내릴 때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가 제대로 풀릴 수 있을 것

**5월 29일 |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관련 제2차 실무접촉**

- 6월 27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육로이용 평양방문 합의

**5월 30일 |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월드컵 중계방송 한국방송위원회에 협조 요청**

**5월 31일 | KEDO, 대북 경수로 사업 공식종결 선포**

- 신포에 건설 중인 경수로 사업 종결, 10년 6개월간 15억 6,200만 달러 투입

**6월 1일 | 북한 외무성, 6자회담 재개 지연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면서 6자회담 미국측 단장(힐 차관보) 초청**

**6월 2일 | 미국 의회 전문위원·입법조사관(줄리 헤르위그 하원 세입위원회 전문위원 등 10명), 개성공단 방문**

**6월 3~6일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 ①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문 1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 ②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을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협의 추진
- ③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마련, 이를 위해 제2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개최(6월 20~21일, 개성)
- ④ 제1차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접촉 개최(6월 26~27일, 개성) 개최
- ⑤ 홍수, 산불, 황사 등 자연재해를 공동으로 방지하는데 있어 적극 협력, 7월중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개최
- ⑥ 경제 및 자원개발 분야에서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문제를 7월중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협의
- ⑦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는 시점에서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
- ⑧ 수산협력실무협의회와 과학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 일정, 남북 경제협력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상사중재위원회, 개성·금강산 출입·체류 공동위원회의 명단 교환과 회의 일정을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 확정
- 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는 2006년 9월중 평양에서 진행

**6월 4일 | ‘금강산 가극단’ 첫 남한 단독공연**

**6월 7일 | 자크 로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위원장, 남북정상에 2008년 북경올림픽 단일팀 참가 요청 친서 전달**

**6월 8일 | 북한, 김영남의 북한내 행적 확인, 남측 어머니와 6.15 이산가족 특별 상봉시 모자 상봉 마련 통보**

- 6월 10일 | 북한 안경호 조평통 서기국장, ‘한나라당 집권시 남북교류 파탄’ 위협
- 6월 13일 | 북한 외무성, 일본에 납치문제와 관련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의문을 가지게 하는 여론조작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촉구
- 6월 14~17일 | 2006년 6.15 남북당국공동행사
  - 남북 당국대표단 32명(남 13명, 북 19명), 남북 민간대표단 598명(남 470명, 북 128명), 해외대표단 144명 참가
- 6월 19~30일 | 제14차 이산가족상봉행사
  - 1회차(6월 19~21일): 북측 이산가족 99명, 남측 이산가족 407명 상봉
  - 2회차(6월 22~24일): 남측 이산가족 99명, 북측 이산가족 231명 상봉(우리측 동반가족 43명 별도)
  - 3회차(6월 25~27일): 북측 이산가족 100명, 남측 이산가족 415명 상봉
  - 4회차(6월 28~30일): 남측 이산가족 100명, 북측 이산가족 237명 상봉(우리측 동반 가족 50명 별도), 김영남씨 모자 상봉(6월 28일)
- 6월 21일 | 개성공단건설 제2차 실무접촉
  - 개성공단건설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출입증제의 조속한 실시를 비롯한 통행·통관 절차의 간소화,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 개성공단 근로자 증가에 따른 숙소·편의시설 건설문제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 진행
- 6월 21일 |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단체들의 협력사업에 관한 합의서 채택
  -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접촉(제5차 적십자실무접촉, 3월 17~22일)에서 협의하였으나 미합의
  -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서 채택
  - ① 남측은 이산가족 상봉 및 생사주소확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차량(버스 10대, 승용차 6대)과 일부 물품의 구입비용으로 40만 US\$를 북측에 제공
  - ② 남측은 이산가족의 화상상봉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기 위하여 북측지역에 설치하는 화상상봉센터 건설에 필요되는 별첨의 설비자재들을 빠른 시일내에 북측에 제공
  - ③ 북측은 남측이 제공한 차량, 물품구입 비용, 설비자재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남측에 통보하며, 남측 인원의 화상상봉센터 현장방문을 보장
  - ④ 위와 같은 사항들의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협의
- 6월 21일 | 김대중 전대통령 방북 무기한 연기 발표
- 6월 22일 | KOTRA·현대아산 공동주관, 개성공단 외국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 6월 26~27일 | 남북임진강수해방지 실무접촉
  - ① 2005년 실시한 쌍방의 단독조사결과 검토 ② 임진강 유역 공동조사 실시방안 ③ 홍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세부대책 등에 대해 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담 종료
- 6월 29일 |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2차 남북체육회담

-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차기 회담 7월 중순(금강산) 진행

6월 30일 |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6월 30일 | 국회 내에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 구성(2006년 12월 31일까지 활동)

6월 30일 | 북한, 김영남 가족상봉(6월 28일) 보도

7월 3일 | 북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연락장교 접촉(7월 7일, 10:00) 제의

7월 4일 | 남북상사중재위원회 남북위원 명단 상호 교환

7월 4~8일 | 북한, 메구미 납치 논란 해명 위해 일 언론인 초청

7월 5일 | 북한, 대포동 1기를 포함한 미사일 7기 발사

- 03:32경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소재 발사장에서 첫 발사가 이루어졌고, 04:04, 07:12, 07:31, 08:17 및 17:22경 추가 발사, 총 6기의 스킵드 및 노동급 미사일 발사 05:00경 함경북도 화대군 대포동에서 대포동-II호 1기 발사

7월 5일 | 청와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 심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명치 못한 행위로 심각한 유감 표명

- 북한은 이번 발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

7월 5일 | 일본 정부, 미사일 발사강행에 따른 대북제재조치로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 92호'의 입항을 6개월간 금지하기로 결정

7월 6일 | 노무현 대통령,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북한 미사일 문제의 외교적 해결 논의를 위해 전화 통화

7월 6일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미사일 발사에 대해 입장 표명

- 우리 군대는 앞으로도 자위적 억제력 강화의 일환으로 미사일 발사훈련을 계속하게 될 것이며, 그 누가 이에 대해 시비질 하고 압력을 가하려 든다면 다른 형태의 보다 강경한 물리적 행동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7월 6일 |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마카오 자금동결 해제시 6자회담 복귀' 시사

7월 7일 | 통일부,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쌀·비료 제공 유보', '장관급 회담 예정대로 개최' 입장 발표

7월 7~9일 | 미국 힐 국무부 차관보, 방한

- 외교장관 예방,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통일부 장관 예방, 안보실장 면담

7월 11~13일 |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 남측: 북한측의 미사일 발사 문제와 6자회담 복귀문제를 핵심의제로 삼고, 이들 문제 해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한다는 입장

- 북측: 6·15 공동선언 이행 및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강조하면서 참관지 철폐와 국가보안법



철폐 등 근본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강조하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 입장 차이를 해소하지 못한 채 당초 계획했던 회담일정(7월 11~14일)보다 하루 앞당겨 종결

**7월 15일 | 유엔안보리,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안보리 결의 1695호> 채택**

- ① 북한에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중지하고 발사유예선언 등 기존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
- ② 모든 회원국들에 미사일과 관련 물품, 재료, 기술이 북의 WMD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못하게 할 것 요구
- ③ 이와 관련 북에 각종 재정 자원을 북에 제공하지 말 것 요구
- ④ 북의 전제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 및 핵개발 프로그램 포기 결정

**7월 16일 | 북한 외무성, 유엔안보리 결의안 전면 배격과 자위적 전쟁억제력 강화 입장 발표**

**7월 16일 | 외교통상부 대변인,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채택 지지 성명 발표**

- 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우리 정부는 북한측이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도발적 행동을 자행한 데 대해 심대한 우려를 가져왔음.
- ②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적시에 전달함으로써 유사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응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음.
- ③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뉴욕 현지시각 7월 15일(토) 15:45경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결의 1695호를 지지하며, 동 결의 채택을 위한 안보리의 그간의 노력을 평가함.
- ④ 북한은 상기 안보리 결의 채택을 통해 확인된 국제사회의 엄중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받아들여 상황 악화조치를 자제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함.
- ⑤ 또한, 북한이 6자회담 과정에 조속히 복귀하고, 2005년 9월 19일자 공동성명 이행 방안에 대한 협의가 조기 개시됨으로써, 대화를 통해 제반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함.

**7월 18일 | 남북피해자보상 관련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 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7월 19일 | 북적 장애인 위원장, 미사일 발사 후 한국의 쌀·비료지원 중단에 대해 8.15 특별 화상상봉행사와 금강산면회소 건설 등의 남북 사업 중단 통보**

**7월 21일 |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인력 철수**

**7월 21일 | 노무현 대통령,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에서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 정책 참여하지 않기로 의견 합의**

**7월 25일 | 미국 하원, 「북한 비확산법안」 통과**

- 미사일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제조 및 보유 관련 물품, 서비스 및 기술 등을 북에 이전하거나 북으로부터 구입한 업체 및 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권을 미 대통령에게 부여

- 8월 1일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장성명 채택
- 8월 1일 | 국정원 진실위, KAL기 폭파사건 조사결과 발표
- 8월 1일 | 북한, '8.15 민족대축전' 수해로 취소 불가피 통보
- 8월 1일 | 북한, WFP와 IFRC 등 국제기구의 수해지원 거부
- 8월 1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아리랑2호'가 북한정탐을 위한 군용위성이며, 동 위성발사는 지역정세를 격화시키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
- 8월 7일 | 조선신보, 북한 수해로 844명 사망·실종 보도
- 8월 9일 |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남측위원회에 필요한 피해복구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요청
- 8월 10일 | 여야 5당, 북 수해 쌀 지원 동의
- 8월 10일 | 미국 부시 대통령, 북한은 도둑정치의 정수를 보여 준다고 주장
- 8월 11일 | 정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수해 긴급구호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  
- 북한 수해 복구위해 민간 대북지원단체에 100억원 제공, 민간 100억원과 함께 총 200억원 규모 지원, 적십자사 통해 쌀·장비는 별도 제공
- 8월 18일 | 북한, WFP 식량지원 수용 의사 표명  
- 1만 3천여 주민의 30일 분 밀가루와 식용유 150톤 전달
- 8월 18일 | 미국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USTR) 대표, 개성공단 생산품 FTA 협상 대상 수용 불가 입장 표명
- 8월 19일 | 대북 수해복구지원 관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 쌀 10만톤, 복구자재·장비 등 지원품목 및 규모에 대해 합의. 남측이 복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분배지역 방문 요구, 북측은 남측 제안에 동의
- 8월 22일 | 북한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은 정전협정의 무효를 선언하는 전쟁행위로 방위를 위하여 자위적 선제행동을 단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
- 8월 26일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미의 금융제재에는 절대로 6자회담에 나갈 수 없으며 필요한 모든 대응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
- 8월 30일 | 미국, 북한 미사일 대비 MD(미사일방어) 시험
- 8월 31일 | 개성공단 출입 승인절차 간소화 (출입신청 30일 전→7일 전)
- 9월 5일 | 북한 노동신문, 남북자 단체의 6.25 남북자 실태 발표를 날조로 비난하면서 남북자의 존재를 전면 부인
- 9월 8일 | 미국 스텐턴 레비 재무부 테러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 AEI 주최 세미나에서 중국·베트남·일본·몽골·싱가포르 등 세계의 24개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거래를 완전히 끊었다고 언급

- 9월 14일 | 한·미 정상회담, 북핵문제, 전시 작전권 등 논의, 6자회담 복귀, 계좌 해제 등 일괄타결안 마련하기로 하는 등 '대북 공동 포괄접근' 합의
- 9월 17일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대북한 제재를 계속하는 한 6자회담 복귀는 없다고 주장
- 9월 20일 | 국방부, 사거리 500km 크루즈 미사일 '천룡' 10년 만에 개발 발표
- 9월 22일 | IAEA, '북한, 무조건 6자회담 복귀 결의문' 채택  
 - 북한의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즉각 복귀 및 9.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 특히 모든 핵무기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의 포기 공약 이행을 촉구  
 - 6자회담 지지 및 모든 당사국들의 9.19 공동성명 이행 중요성 강조  
 - 북한에 대해 IAEA 안전조치의 전면적 이행을 위해 IAEA와 조속히 협조할 것과 아울러 NPT 의무이행 촉구  
 -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
- 9월 26일 | 북한 최수현 외무성 부상,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제재 해제 없이는 6자회담 복귀 불가 입장 표명
- 9월 27일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에 북한인권 10개항 권고  
 ① 인권 증진 재원 마련을 위한 국방예산의 일부 이전 편성  
 ② 이주의 자유를 위한 법 개정  
 ③ 정치범에 대한 제재 철폐  
 ④ 납치문제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해결  
 ⑤ 인도적 국제기구의 북한 체류 허용  
 ⑥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실질적 개선  
 ⑦ 법집행 담당자에 대한 인권 교육·훈련  
 ⑧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HCHR)의 지원 요청을 통한 인권 보호·증진  
 ⑨ 특별보고관 및 다른 기구의 방북 허용  
 ⑩ 북한이 가입한 4개 인권 관련 협약에 따른 각종 국제인권감시기구의 초청
- 9월 29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개발이 완료된 우리군의 순항미사일 '천룡'(사거리 500km급)의 실전배치를 남북관계를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몰아가는 용납못할 도발이라고 비난
- 10월 2일 | 제28차 남북군사실무회담  
 - 북측: 남측이 장성급군사회담 합의를 위반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체제 비난 전단을 지속적으로 살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휴대폰, GPS 등 반입금지 물품 휴대, 근무초병에 대한 자극 등 통행질서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방지를 촉구  
 - 남측: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 임진강 수해방지 등 경협사업의 군사보장 조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 등에 대해서 조속한 이행을 강조하고, 열차시험운행의 조속한 실시를 위해서 군사보장합의서 채택 문제를 협의할 것을 촉구

- 북측: 경협사업의 군사적 보장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를 위한 여건조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못하고 회담 종료

**10월 3일 | 미국 하원, 「대북정책조정관 임명법」 통과**

- 대북정책조정관은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6자회담 당사국들과 협의, 핵·미사일 등 안보 문제와 관련한 대북 협상의 정책지침을 마련하고 협상을 지휘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2011년 말까지 활동)

**10월 3일 | 북한 외무성, 안전성이 담보된 핵시험 실시 천명**

- ①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앞으로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시험을 하게 됨.
- ② 절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통한 위협과 핵 이전을 철저히 불허할 것임.
- ③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핵군축과 중국적인 핵무기 철폐를 추동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할 것임.

**10월 4일 | 통일부 대변인, 북한 외무성 성명(10월 3일)에 대해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

**10월 6일 | 유엔안보리, '북한 핵실험 포기 촉구 의장 성명' 채택**

- ①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미래에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지난 3일 북한 외무성 발표 성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함.
- ② 안보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투발 수단 확산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재확인함. 안보리는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발표와,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의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을 규탄함. 안보리는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실시한다면 이는 해당 지역과 그 이상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전을 위협에 빠뜨리는 것으로 평가함.
- ③ 안보리는 그와 같은 실험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하고 북한이 안보강화 차원에서 우려를 표명했던 것들에 대처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함.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핵실험을 실시하지 말 것과 긴장을 악화시키는 어떤 행동도 금지할 것, 비확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정치적·외교적 노력을 통해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을 촉진할 것을 촉구함. 안보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 1695호의 모든 조항들을 따를 것을 거듭 강조함.
- ④ 안보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6자회담을 지지하며 그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함.
- ⑤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전제조건 없이 즉각 6자회담에 복귀하고 2005년 9월 19일 마련된 공동성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함. 특히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들을 포기할 것을 촉구함.
- ⑥ 안보리는 급변의 상황을 면밀히 감시할 것임. 안보리는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이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만약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청들을 무시하면 안보리는 유엔헌장하의 책무에 부합되게 행동할 것임을 강조함.

- 10월 7일 | 북한군 5명, 군사분계선 침범
- 10월 7일 | 외교통상부 대변인, 북핵관련 안보리 의장성명관련 국제사회의 분명한 입장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6자회담 관련국들의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 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로 인해 야기 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
- 10월 8일 | 북한, 북한군 5명의 군사분계선 월선에 대한 우리군의 경고사격(10월 7일)에 대해 비난
- 10월 9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지하 핵실험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
- 10월 9일 |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북한 핵실험 관련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발표
- 10월 10일 | 미국 버시바우 주한대사, 현 상황에서 모든 정부는 북한 정권에 혜택을 주는 모든 지원 프로그램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
- 10월 11일 | 북한 외무성, 미국의 압력가중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연이어 물리적인 대응조치들을 취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언급
- 10월 11일 | 미국, 유엔안보리에 대북제재 수정안 제출
- 10월 12일 | 국회의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통과
  - ① 대한민국 국회는 금번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밝힘.
  - ② 북한은 금번 도발행위의 심각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조속하고 근본적인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핵무기와 모든 관련 계획을 폐기하고 NPT체제로의 복귀와 6자회담에 나설 것을 촉구함.
  - ③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연합(UN) 및 관련 당사국들과의 확고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보유 시도에 대해 단호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함.
  - ④ 국제사회는 동북아 군비증강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긴밀한 공조와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근본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함.
  - 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정부의 대응을 긴밀히 감시·감독하며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설 것을 천명함.
- 10월 13일 | 미국 부시 대통령, 「북한 비확산법안(North Korea Nonproliferation Act off 2006)」서명
- 10월 14일 | 유엔안보리, '북한 핵실험 관련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 채택
  - 비군사적 제재만 허용하는 7장 41조 적용
  - 핵무기·미사일 관련 물자 제품 교역 금지, 북한 자산동결 및 금융 중단, 무기 제조 관련자 여행 금지, 북한 화물 검색 협력, 이행 조치 보고, 제재위원회 설치
- 10월 15일 | 통일부 대변인, 유엔안보리 결의 관련 지지 및 이행 협조 논평 발표
- 10월 16일 | 미국 국가정보국(DNI) 북한 핵실험 사실 공식 확인

- 함경북도 풍계리 인근에서 채취한 대기 샘플에서 방사능 물질 탐지, 핵 폭발력은 1kt 미만
- 10월 17일 | 북한 외무성,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 관련 향후 미국의 동향을 주시할 것이며 그에 따라 해당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
  - 누구든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내들고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려 든다면 가차없이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 것임.
- 10월 18일 | 청와대 송민순 안보정책실장,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 정부보조금 중단 결정 발표
- 10월 18일 | 미국 부시 대통령, 북한이 핵무기를 이전하려 한다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
- 10월 20일 | 경의선·동해선 우리측 기술지원팀 철수
- 10월 20일 | 제3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개최
  -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
- 10월 21일 | 북한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대북한 압박정책으로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비난
- 10월 22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공식 출범
- 10월 22일 | 중국, 단둥-평양간 북한 관광 중단
- 10월 24일 | 중국 외교부, '추가 핵실험 없다' 김정일 발언 공식 확인
- 10월 24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후, 북한 선박 홍콩서 첫 해상 검색·억류
- 10월 25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남한이 대북한 제재에 가담할 경우 동족에 대한 대결선언으로 간주해 해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
- 10월 25일 | 미국 라이스 국무장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을 이룰 때까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1718호는 유지하기로 한·미·일·중·러 5개국과 합의했다고 발언
- 10월 26일 | 통일부 대변인, 조평통 대변인 담화(10월 25일)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지지·준수 논평 발표
- 10월 27일 | 외교부 차관, '한반도 수역서 PSI 불참' 입장 발표
- 10월 29일 | 북한 민화협 대변인, 미국이 남한에 대북제재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
- 10월 31일 | 북·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6자회담 재개 합의
- 10월 31일 |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 완전 가동
- 11월 1일 |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1718호 결의 첫 이행으로 북한 금수대상 품목 확정
- 11월 1일 | 북한 아태위 대변인, 핵실험 이후 금강산 관광비의 물자제공은 쌍방간 합의에 전면 배치되고, 공인된 국제관례나 규범에도 심히 어긋나는 논의할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
- 11월 1일 | 북한 외무성, 북·미 양자 접촉 진행을 언급하면서 6자회담 내에서의 북미간 금융제재 해제

- 논의·해결을 전제로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라고 언급
- 11월 6일 | 한완상 한적 총재, 조건없는 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 11월 6~11일 | 제3차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 교통장관회의 개최(부산), 아시아횡단 철도(TAR)정부간 협정 조인식
- 11월 7일 | KEDO·한국정부, 대출금 상환유예 양해각서(MOU) 체결
- 11월 8일 | 미국, 림즈펠드 국방장관 경질
- 11월 9일 | 독일 폴크스바겐, '사치품 금수' 유엔 제재 동참, 북한에 판매 중단
- 11월 13일 |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의 이행을 위한 국가보고서'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제출
- 11월 14일 | 일본, 쇠고기·차 등 24개 품목 33개 항목의 대북 수출금지 의결
- 11월 16일 | 북한 올림픽위원회,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공동입장 및 2008년 북경올림픽 단일 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제의
- 11월 17일 | 유엔 총회, '대북인권결의안' 통과  
- 한국 첫 찬성표
- 11월 17일 | 북적 중앙위원회 대변인, 일본이 만경봉-92호의 운항을 금지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
- 11월 17일 |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11월 18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찬성한 우리정부를 비난  
-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에 또 하나의 장애를 조성한 범죄행위로 초래될 모든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임.
- 11월 18일 | APEC 정상회담 참가중 한·미 정상, '핵 폐기시 경제지원과 안전보장 제공'에 의견 일치
- 11월 21일 |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1만 명 돌파
- 11월 22일 | 정부,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 남북공동입장' 북한 제의 수락
- 11월 28일 | 북·미 6자회담 수석대표 북경 회동
- 11월 28일 | 러시아, 남북한에 철도회담 제의  
-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한반도횡단철도(TKR) 연결논의
- 11월 30일 | 미국, 대북 사치품 60여 품목 금수조치 공식 발표  
- 품목: 천연 및 인조 모피, 가죽, 크리스털 제품, 샴페인류, 코냑, 캐딜락 승용차, 경주용차, 요트, 수상 스쿠터, 제트스키, 오토바이, 세그웨이(2륜 탈것), 왜건형 승용차, DVD플레이어, 29인치 이상 TV, 플라즈마TV, 상어알(캐비어)과 상어지느러미, 고급 참치, 고급 의류, 샤넬 5, 희귀 우표, 실크 스카프, 고급 만년필, 아이팟 등
- 11월 30일~ | 2008 베이징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3차 남북체육회담(도하)
- 12월 2일 | - 제15차 도하아시아경기대회 남북선수단 개·폐막식 공동입장과 단일기 독도표기 등 세부사

항에 합의

- 이에 따라 남북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 이후 국제경기대회에서 통산 8번째로 공동 입장

- 12월 7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지난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개념계획 5029를 완성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실제 군사작전계획으로 만든 것으로서 북침전쟁책동의 연장이며 선제타격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도발책동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
- 12월 8일 | KEDO, 북 경수로 청산협약 승인
- 12월 11일 | 이재정 통일부 장관 임명
- 12월 12일 | KEDO·한전, 사업종료 협약(TA) 서명 발효
- 12월 14~18일 |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파악차 방한
- 12월 18-22일 |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 12월 20일 | 미·북, BDA 실무회의(베이징 주중 미대사관)
- 12월 21일 | 개성공단 남북간 송전선로 연결



## 2007년

- 1월 1일 | 북한,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발표
- 1월 11일 | 북한, 중국 장춘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입장 제의
- 1월 16일 | 북한(김계관 외무성 부상)·미국(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양자 협의 개최  
- 6자 회담 재개방안 및 9.19 공동성명의 이행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 BDA 문제 합의
- 1월 18일 |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개정·시행
- 1월 19일 | 북한 외무성, 북·미간 양자협의 개최와 관련 진지하게 진행되었고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언급
- 1월 19일 | 월스트리트 저널,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Wallace 대사가 UNDP 총재보에게 보낸 서신을 인용하여 북한이 유엔개발계획(UNDP)의 개발자금을 핵개발에 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 제기 보도
- 1월 19-20일 | 한국관광공사·북한 아태위, 백두산 도로포장 추가지원 합의
- 1월 23일 | 동해선 도로출입사무소 개소
- 1월 24일 | 미국 부시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한·중·일·러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응집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
- 1월 25일 | 북한 외무성, 월스트리트 저널의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지원 자금의 핵개발 전용의혹 제기(1월 19일)에 대해 미국의 반공화국 소동이라고 비난
- 1월 25일 | UNDP 집행이사회, 대북제재 참여
  - ① 유엔회계 감사단에 의한 대북감사실시
  - ② 2007년 3월 1일까지 의혹이 제기된 경화자금 중단
  - ③ 북한정부를 통한 현지직원 선발중단
  - ④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1,700만불 규모의 07~09년간 대북사업의 최종 승인여부를 재검토
- 1월 27일 | 북한 외무성, 서방언론들이 북·이란 핵협조설을 유포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를 핵전파자로 몰아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게 하려는데 목적을 둔 완전히 무근거한 허위날조”라고 비난
- 1월 27일 | 동해선 도로출입사무소 개소
- 1월 28일 | 중국 장춘 동계아시안게임 남북공동입장
- 1월 29일 | 개성공단 생산품 수출컨테이너 인천항 첫 출항
- 2월 2일 | 미국 재무부, 미국인에 의한 북한 선박 등록 및 북한 국적기 사용 금지 조치 발표

## 2월 8~13일 |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

### -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13 합의(초기조치)발표

I. 6자회담 참가국들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초기단계에서 각측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진지하고 생산적인 협의를 하였음.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재확인 하였음. 참가국들은 「공동성명」 상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행동 對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음.

II.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음.

1. 북한은 궁극적인 핵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함.
2. 북한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되어있는, 사용 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한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리스트를 여타 당사국들과 협의함.
3. 북한은 미국과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회담을 개시함.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북한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갈.
4. 북한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와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양자회담을 개시함.
5. 참가국들은 「9.19 공동성명」의 1조·3조를 상기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음. 이와 관련, 참가국들은 초기 단계에서 북한에 긴급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음. 중유 5만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지원의 최초 선적은 60일 이내에 개시됨.

참가국들은 상기 초기 조치들이 향후 60일 이내에 이행되며,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한다는데 합의하였음.

III. 참가국들은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초기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W/G를 설치하는데 합의하였음.

1. 한반도 비핵화
2. 미·북 관계 정상화
3. 일·북 관계정상화
4. 경제 및 에너지 협력
5.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W/G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협의하고 수립함. W/G들은 각각의 작업 진전에 관해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 보고해야 함. 원칙적으로 한 W/G의 진전은 다른 W/G의 진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5개 W/G에서 만들어지진 계획은 상호 조율된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이행됨.

당사국들은 모든 W/G를 향후 30일 이내에 개최하는데 합의하였음.

IV. 초기조치 기간과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소로 및 재처리 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한 다음 단계 기간중, 북한에 최초 선적분인 중유 5만톤을 포함한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 제공됨.

상기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W/G의 협의와 적절한 평가를 통해 결정됨.

V. 초기조치가 이해되는 대로 참가국들은 「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회담을 즉시 개최함.

VI. 참가국들은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을 재확인 하였음. 직접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짐.

VII. 참가국들은 W/G의 보고를 청취하고 다음단계 작업계획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제6차 6자 회담을 2007년 3월 19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2월 12일 | 미국, 북한 계좌 1,100만 달러 해제 통보**

**2월 13일 | 2008 베이징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4차 남북체육회담**

**2월 15일 |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

-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월 27일~3월 2일 평양에서 개최하여 제반 현안들을 협의

**2월 15일 |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후속 이행계획 관련 주요국 외교장관과 2차 전화협의**

**2월 27일~ |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3월 2일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 ① 남북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쌍방 당국사이의 회담을 통하여 협의 해결
- ②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
- ③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함. 쌍방은 6.15와 8.15를 계기로 평양과 남측지역에서 진행하게 될 민족통일대축전에 적극 참가
- ④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재개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
  - 제5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3월 27~29일,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5월 초순(금강산) 실시
  -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 쌍방 적십자 단체간 실무접촉을 3월 9일(금강산) 진행
  -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을 4월 10~12일(금강산) 개최
- ⑤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 발전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4월 18~21일(평양) 개최
- 군사적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올해 상반기 안으로 열차시험운행을 실시. 이와 관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접촉 3월 14~15일(개성) 개최
- 개성공단 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함

⑥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5월 29일~6월 1일(서울) 개최

- 3월 2일 | UNDP 사무국, 집행이사회 결정 불충족을 이유로 대북사업 중지 결정
- 3월 5일 | 조선신보, HEU 핵개발설은 “대북적대시정책을 합리화하고 조미간의 합의를 파기하기 위한 미국의 고안품”이라고 비난
- 3월 5일 | 북한, 남북자가족모임 대표 최성용씨 부부 금강산 관광 방북 거부
- 3월 6일 | 미국 국무부, 고농축우라늄(HEU) 핵무기 개발 계획 포함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해야 한다고 언급
- 3월 9~10일 | 남북적십자 제6차 실무접촉  
 <금강산 면회소 건설추진을 위한 남북적십자실무접촉 공동보도문>  
 - 금강산면회소 건설을 3월 21일부터 진행하며, 면회소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기 필요한 인원의 연락체계를 구성·운영  
 - 화상상봉을 확대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남측은 북측에 화상상봉센터 건설 설비자재 및 물품구입 비용과 상봉행사용 운수기재들의 제공을 3월말부터 시작
- 3월 13일 | 북한 외무성, UNDP의 대북협조 중단에 대해 “어리석은 시도에 대해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화되고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협조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3월 14~15일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위원급 실무접촉
- 3월 19일 | 미국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글레이저 재무부 차관보, 미국 정부의 BDA 자금 해결 원칙을 담은 성명 발표  
 - 베이징 중국은행에 개설된 조선무역은행 계좌로 송금, 인도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을 포함하여 북한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에만 사용할 것임.
- 3월 19~22일 | 제6차 6자회담 1단계 회의  
 - ‘북핵 불능화 로드맵’ 논의
- 3월 20일~4월 20일 | 북한 청소년축구팀 방남 전지훈련(제주, 수원, 순천, 광양, 서울)
- 3월 21일 |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공사 재개
- 3월 25일~4월 6일 | 미국 재무부 대표단, 북·중과 BDA 북 계좌 동결 해제 논의
- 3월 27일 | 정부, 비료 30만 톤 대북지원 착수
- 3월 27~29일 | 제5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 3월 28일 | 미국 헨리 오버링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장, 미사일방어체제의 지속적인 확대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주표적으로 북한과 이란을 언급
- 3월 30일 | 북한 구제역 방역지원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 쌍방은 북한측이 요청한 지원요구 품목 가운데 지원이 가능한 품목을 제공한다는데 합의하고 방역전문가가 방북하여 기술지원 및 현장방문 실시하기로 함.
- 4월 3일 | 한덕수 국무총리,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FTA 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한에 10개의 공단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10개를 다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는다면 모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며 “한반도를 우리의 영토로 한다는 헌법 조항과 일치하는 개념을 집어넣은 것”이라고 언급
- 4월 6~9일 | 북한 장웅 IOC 위원 및 태권도시범단, 방남
- 4월 8~11일 | 미국 빌 리차드슨 뉴멕시코 주지사 일행 방북, 판문점을 통해 방한
  - 미군 유해 6구 송환
- 4월 10일 |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4차 실무접촉
  - 〈공동보도문〉
  - 안중근의사의 유해위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수집한 관련자료 및 공동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여순감옥구지 뒷산 일대’를 유해발굴 우선대상지역으로 확정
  - ‘안중근의사유해남북공동발굴단’(이하 남북공동발굴단)을 구성하여 우선 1단계로 4월 하순부터 약 1개월간 현지조사 및 유해 시·발굴을 실시
  - 발굴장소 보존조치 등 중국측에 요청할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중국정부에 공동으로 협조요청
  - 남북공동발굴단 구성 및 추진일정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판문점을 통하여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 4월 10일 | 마카오 당국, 북한 동결자금 해제조치가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해 계좌 소유주들의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발표
- 4월 10일 | 미국 재무부, 마카오 당국의 BDA 동결자금 해제 지지 성명 발표
- 4월 10~13일 |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채택
  - ① 8.15와 추석을 계기로 40가족씩 이산가족 화상상봉 진행
  - ② 추석을 계기로 각 100명씩 제16차 이산가족상봉 진행
  - ③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영상편지를 시범적으로 교환
  - ④ 전쟁시기,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주소 확인문제를 협의·해결
  - ⑤ 적십자단체들 협력사업을 더욱 발전, 적십자종합병원(평양) 현대화 협력사업 추진
  - ⑥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은 10월말경 (금강산) 개최
- 4월 11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개최

4월 13일 | 북한 외무성, BDA 자금동결 해제발표와 관련 제재해제가 현실로 증명되어 있을 때 우리도 행동할 것이라고 주장

4월 18-22일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합의문〉,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채택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합의문〉

- 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투자와 협력
- ②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철도연결구간에서의 열차시험운행 5월 17일 진행, 이에 관한 실무접촉 4월 27~28일 개성에서 진행,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의 개통을 협력
- ③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를 채택
- ④ 개성공단 건설 활성화를 위해 통관·통신, 북측 노동력 공급, 숙소·편의시설 건설, 2단계 개발 준비사업 등에 대해 5월 중 개성에서 제3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개최
- ⑤ 제3국 공동진출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6월 중 개성에서 개최
- ⑥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5월 초 문서교환 방식으로 채택·이행
- ⑦ 한강하구 골재채취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
- ⑧ 합의하였던 자연재해방지 실무접촉과 과학기술협력 실무접촉 6월 중 개성에서 진행, 수산협력 실무접촉과 상사중재위원회, 개성·금강산 출입·체류공동위원회 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확정
- ⑨ 남측은 쌀 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북측에 제공
- ⑩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4차 회의는 7월 남측에서 진행, 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확정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 ① 남측은 북측에 쌀 15만톤, 외국산 쌀 25만톤을 차관 제공
- ② 차관금액은 톤당 미화 삼백팔십달러(US\$380)로, 수송비용은 남측이, 하역·항만비용과 충전(차)료 등은 북측이 부담
- ③ 차관 상환기간은 30년, 이자율은 연 1.0%로 함.
- ④ 차관공여, 상환은 한국수출입은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은행 사이 차관계약
- ⑤ 제공식량의 인도·인수는 첨부된 「식량 인도·인수 절차」, 「육로수송 절차와 방법」로, 남측은 식량 인도회사, 북측은 식량 인수회사 지정
- ⑥ 북측은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안전운행을 보장, 필요한 편의 제공
- ⑦ 남, 북은 식량제공의 원활 진행을 적극 협력
- ⑧ 합의서 이행 과정의 문제는 남북이 협의하여 해결

4월 20일 | 북한 이제선 원자력총국 총국장, IAEA 총국장에게 IAEA 실무대표단 초청 서신 발송  
- 우리는 마카오 아시아 델타 은행(BDA)에 동결된 자금이 실지 해제되는 것이 확인 되는 즉시 국제원자력기구 실무대표단을 초청하고 2.15합의에 따르는 영변 핵시설 가동중지와 그에 대한 검증 감시절차 문제를 토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바임.

4월 27일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정·공포

- 4월 27일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
- 4월 27일 | 조선신보, 미국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해결의 관건은 “동결자금의 송금을 통한 국제금융체계 속 정상적인 거래”라고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를 비난
- 4월 27~28일 | **남북철도·도로연결 제13차 실무접촉 제1차 회의, 합의서 채택**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합의서 요지)
- ① 명칭: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 날짜: 2007년 5월 17일
  - ② 참가인원: 남측에서 100명, 북한측에서 50명, 참가급: 장관급
  - ③ 열차시험운행 시간: 10:30~15:30,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동시 진행
  - ④ 시험운행 구간: 경의선 문산역-개성역, 동해선 금강산역-제진역
  - ⑤ 시험운행 방식: 각기 자기측 기관차에 객차 5량씩 연결
    - 경의선은 북한측 인원이 남측으로와 문산역에서 개성역까지 이동
    - 동해선은 남측 인원이 북한측으로와 금강산역에서 제진역까지 이동
- 5월 2~4일 |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제2차 실무협의**  
(공동보도문)
- ① 남측은 2007년에 북측에 제공하기로 한 경공업 원자재 8,000만 달러분 중 1항차로 폴리에스터(polyester) 단섬유(1.4D×38mm) 500톤을 6월27일 인천항↔남포항간 정기해상 수송을 통해 제공
  - ②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관련하여 10명으로 구성된 남측 기술지원단이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북측의 경공업 공장 현장방문 및 기술지원을 실시
  - ③ 북측은 검덕광산(아연), 룡양광산(마그네사이트), 대흥광산(마그네사이트)에 대한 △지질도 △지질단면도 △매장량 산출도면 △장비현황 등 광물관련 자료(첨부: 관련 자료 목록)를 6월 12일 이전에 남측에 제공
  - ④ 단천지역의 검덕광산(아연), 룡양광산(마그네사이트), 대흥광산(마그네사이트)에 대한 지하자원 현지 공동조사를 6월25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하기로 하며, 공동조사단은 각기 15명 이내로 구성
  - ⑤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제3차 실무협의 5월 22~23일, 개성에서 진행
- 5월 8일 | **북한 산림병충해 방제 지원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
- 쌍방은 남측에서 디프액제, 포스파미드 등의 약품과 연무기, 천공기 등 방제장비 제공과 함께 참나무시들음병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관한 기술자료 지원에 합의. 메프유제와 메탐소디움(소나무재선충,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의 경우는 현장방문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후 논의하기로 함.
- 5월 8~11일 | **제5차 남북장성군사회담, 남북 열차 시험운행 군사보장 잠정 합의**  
(공동보도문)
- ①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서해해상 충돌방지와 공동어로 실현문제를 지속 협의

- 서해 평화정착 및 공영, 공리 도모의 원칙에서 공동어로 실현
- 서해해상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 수역설정 등과 관련 지속 협의
- 서해상 군사적 신뢰가 조성되는데 따라 해주항 직항로 통행문제 협의
- ② 남북 경제협력·교류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 마련
  - 5월 17일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 합의를 채택,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협의를 지속
  - 임진강 수방, 한강하구 골재채취 등 관련 군사적 보장조치 마련
- ③ 기 합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수 및 원만한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
- ④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빠른 시일 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
- ⑤ 제6차 남북장성급회담을 7월 중 개최

**5월 9~14일 | 제15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5월 13일 | 남북철도·도로연결 제13차 실무접촉 제2차회의**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에 관한 합의서〉 채택

- ① 명칭 및 날짜: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 2007년 5월 17일
- ② 참가인원 및 참가급수: 남측에서 100명, 북측에서 50명의 인원이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참가급은 장관급(상급)
- ③ 열차시험운행 시간: 10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동시에 진행
- ④ 열차시험운행 구간: 경의선에서는 남측 문산역에서 북측 개성역까지, 동해선에서는 북측 금강산역에서 남측 제진역까지
- ⑤ 열차시험운행 방식: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남북 쌍방은 각기 자기측 기관차에 객차 5량(남측발전차 포함)씩 연결
- ⑥ 열차시험운행 행사: 열차출발역들에서 경과보고와 남북단장들의 기념사(축하발언)를 한 다음 열차시험운행을 하는 형식
- ⑦ 통행 및 세관검사: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합의된 잠정합의서에 준하여 진행
- ⑧ 통신방법: 남북 철도통신. 이와 관련하여 남과 북은 5월 14일에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동시에 연결
- ⑨ 열차운행 통보: 남북 쌍방 분계역장들이 열차출발 5분전 상호 통보(폐색)하고 열차를 출발시키며, 열차출발을 상호 통지. 쌍방 분계역장들은 열차도착시 상대측에 통보
- ⑩ 신호방식: 수신호
- ⑪ 열차운행 안내: 상대측 기관사가 동승하여 자기측 구간에 대하여 안내
- ⑫ 철도시설 점검: 열차시험운행 이전에 각기 자기측 해당지역의 철도시설을 책임지고 점검 보장
- ⑬ 문건교환: 열차시험운행 참가인원에 대한 사진명단과 필요한 발언문들은 5월 16일 오전에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통하여 교환
- ⑭ 열차시험운행 일정

**5월 15일 | 북한 외무성, 미국 언론의 BDA관련 지연전술 보도를 비난하며, BDA자금이 송금되면 '2.13**



- 합의'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 언급
- 5월 17일 |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문산-개성, 제진-금강산)
- 5월 18일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발족  
- 남북간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총괄 이행기구
- 5월 21일 | 북한 인민군 해군사령부, 남측 군이 서해 북 영해 깊이 전투 함선들을 침입시키는 군사적 도발행위를 연이어 감행했다고 주장
- 5월 22~23일 |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제3차 실무협의  
- 경공업 원자재 제공 품목, 수량, 가격문제와 지하자원 개발 관련 현지 공동조사, 대가 상환 문제 등에 대해 협의 진행
- 5월 24일 |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남북협력사업을 핵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엄중한 도발이라고 주장
- 5월 25일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8월 26일 발효)
- 5월 25일 | 북한,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 1발 발사
- 5월 26일 | 개성공단 송전방식(154kv, 10만kw)의 전력공급 시작
- 5월 28일 |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 지정(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5월 29일~ |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6월 1일 <공동보도문>  
- 지난 20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이룩된 성과와 교훈을 평가하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부합되게 보다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켜나가기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함.  
-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원칙적이며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제기하고 진지하게 협의  
-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더 연구해 나가기로 함.
- 6월 1일 | 금강산 내금강 관광 개시
- 6월 5일 | 미국 부시 대통령, 프라하 연설에서 북은 최악의 독재국가라고 언급
- 6월 7일 | 북한 서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 6월 7일 | 미국 톰 케이지 국무부 부대변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기존 훈련과 차이 없지만 긴장 높이는 행동 말아야한다고 언급
- 6월 7~8일 |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 제1차 실무협의  
- 쌍방 이행기구: 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명지총회사)  
- 지하자원 개발관련 현지 공동조사 일정 및 자료제공, 경공업 원자재(신발·의류·비누) 제공 가격, 품질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
- 6월 8일 | 제29차 남북군사실무회담

- 남측: 함대사간 직통전화 설치, 함정간 정기시험통신 실시 등 서해충돌방지 개선조치와 공동어로 실현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의, 철도·도로의 완전개통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의 조속한 채택과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사업 및 한강하구 골재채취관련 군사보장문제 협의를 제의하였음.
- 북측: 넓은 수역에 걸쳐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할 것을 주장하고 공동어로 수역을 비무장수역으로 하여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에 기여할 것을 제안, 서해해상에서의 충돌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해해상경계선 재설정문제가 협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회담은 북한측이 서해해상 경계선문제의 우선 해결, 공동어로구역 우선 설정 등을 고집함에 따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종료

**6월 9일 | 미국 뉴욕타임즈, UNDP 대북사업자금 전용의혹 보도**

- UNDP의 수백만 달러가 재래식무기 개발 및 미사일 수출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 업체로 유입되었으며, 북한은 동 개발자금을 '이중용도' 물품구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음.

**6월 11일 | UNDP, UNDP 대북사업 자금 전용 의혹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6월 12~13일 | 개성공단건설 제3차 실무접촉**

**6월 13일 | WFP 조셧 시런 사무총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에게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을 거듭 요청하는 서한 발송**

**6월 14~17일 | 6.15 공동선언 7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6월 16일 | 북한 이계선 원자력총국 총국장, 영변 핵시설 가동중지에 대한 검증감시 절차문제 토의와 관련하여 IAEA 실무대표단 초청**

**6월 19~28일 |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공동주관으로 남북 경협관계자 합동 해외시찰단 구성**

- 남북 각 7명, 총 14명으로 구성, 중국(상해, 심천, 광주) 및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지역을 시찰

**6월 21일 | 개성공단 본단지 전력(10만 kw)공급용 평화변전소 준공식**

**6월 21일 | 북한 해군사령부 대변인, 북측 영해 침범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서해해전을 넘어선 큰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불씨로 되고 있다고 경고**

**6월 25일 | 북한 외무성, BDA 동결자금 해결 관련 동결 해제된 자금은 계획대로 인민생활 향상과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며,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2.13합의를 행할 것이라고 언급**

**6월 26일 | IAEA 실무대표단, 북한의 16일의 초청에 따라 영변 핵시설 가동중지에 대한 검증감시 절차문제 토의를 위해 방북**

**6월 29~30일 | 중유 5만 톤 제공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공동보도문〉

- ① 남측은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북측에 중유 5만톤을 제공
- ② 북측에 제공되는 중유의 품질은 첨부1 「중유 인도·인수절차」에 따름.

- ③ 남측은 북측이 지정하는 선봉항, 남포항으로 중유를 수송하되 각 항구별 수송량은 첨부1에 따름.
- ④ 북측은 중유제공이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보장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
- ⑤ 중유제공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통해 협의하여 해결

6월 30일 | 식량(쌀)차관 40만 톤 대북지원 착수

7월 4일 | 북한 한성렬 전 유엔주재 대표부 차석대사, 2.13합의의 이행을 위해서는 미국의 경제제재가 다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

7월 5~7일 |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 제2차 실무협의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세부이행합의서 채택

① 경공업 원자재 제공

- 남측은 북측에 2007년중 총 미화 8,000만 달러(의복류 \$2,700만, 신발 \$4,200만, 비누 \$1,100만)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현물을 차관으로 제공함.
- 총 94개 품목 중 가격과 수량에 합의된 원자재 품목은 62개(섬유 34, 신발 21, 비누 7)
  - \* 미합의 32개 품목(섬유 4, 신발 28)
- 1항차(단섬유 500톤) 7.25(인천항↔남포항), 11월말까지 완료 노력
- 우리측 기술지원단 10명 구성, 북측 경공업 공장 1차 현장방문(8.7~11) 및 추가 3회(9월, 11월, 12월) 실시
  - \* 경공업 원자재는 우리측이 제시한 FOB 가격으로 합의하였으며, 해상 수송료·보험료 등 부대비용은 우리측이 부담하기로 하였음.

② 원자재 대가 상환

- 경공업 원자재 대가 3%(아연과 및 마그네슘크링카)는 2007년중 2회(원자재 50% 및 100% 제공시점)로 분할하여 상환
- 잔여분은 지하자원 개발권, 생산물 처분권 등으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상환

③ 지하자원개발 협력

- 북측은 3개 광산(검덕, 대흥, 룡양)에 대한 자료를 7월 19일 제공하고, 제1차 현지 공동조사(7.28~8.11, 남북 각기 15명 이내로 구성) 실시
  - 관련자료는 5.4 합의한 목록(지질도, 지질단면도 등)
  - 2차 조사(9월 초), 3차 조사(10월 중) 실시
- 북측은 현지공동조사, 기반시설조사 등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적극 지원

7월 6일 | 북한 외무성, 2.13 합의에 따른 초기이행조치의 대가로 공급되는 중유 5만 톤의 첫 선적분이 들어오는 대로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에 들어갈 것이라고 표명

7월 10일 | 제30차 남북군사실무회담

- 남측: 6월 8일 기 제시한 「서해해상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 실현에 관한 합의서(안)」에 대한

북측의 수용을 촉구하고, 철도·도로통행의 군사적 보장합의서 채택문제 협의를 제의. 또한 한강하구 골재채취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이들 사업의 군사보장 문제에 대한 북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

- 북측: 민간단체에 의한 진단살포의 중지를 요구하면서 서해해상에서의 공동어로 실현과 군사적 충돌방지,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등과 관련한 합의서(안)을 우리측에 제시
-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7월 24~26일), 군사실무회담(7월 16일) 개최에 합의

7월 12일 | 2.13 합의 이행에 따른 대북 중유 5만 톤 지원 착수

7월 13일 | 통일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입법 예고

7월 13일 | 북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표, 유엔대표도 참가하는 북·미 군사회담 개최 제의

7월 14일 | 북한에 제공한 중유, 선봉항 도착(총 5만 톤 중 1차분)

7월 14일 | 조선신보, 미국이 제기한 북한의 유엔자금 전용의혹은 고의적 도발이라고 비난

7월 15일 | 북한 외무성,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했다고 공식 발표

- 중유 5만톤의 첫 배분이 도착한 14일 영변핵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인원들에게 그에 대한 감시를 허용하였음.

7월 16일 | 제31차 남북군사실무회담

7월 18일 | IAEA, 영변 5개 핵시설 폐쇄 확인

- 5MWe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 제조 공장, 50MWe 원자로, 200MWe 원자로

7월 18~19일 |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 실무접촉

7월 18~20일 |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 중유 95만톤 상당 북한에 제공, 8월말 이전 한반도비핵화, 미·북 관계정상화, 일·북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 회의를 각각 개최, 9월초, 참가국들은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를 북경에서 개최, 장관급 회의 개최

7월 24~26일 |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채택

① 매일 07:00~22:00까지 상시적 통행을 보장

- 일요일 등 공휴일의 통행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

② 2008년부터 인터넷과 유선 및 무선전화통신을 허용

- 통신센터 건설 및 운영방식 등은 해당 실무접촉에서 협의

③ 선별검사 방식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 세관검사장 신설·확장

7월 25일 | 경공업 원자재 대북지원 착수(폴리에스터 단섬유 500톤 인천항에서 첫 출항)

7월 26일 |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개최

-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발전법」 제14조에 근거한 포괄적인 대북정책협의기구

- 7월 27일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공청회 무산에 대해 통일부 유감 표명
- 7월 27일 | 북적 장재언 중앙위원회 위원장, 비료 30만 톤 지원에 대한 사의 표명
- 7월 28일~8월 18일 | 제1차 북한 단천지역 지하자원 남북 공동조사
- 8월 1일 | 남·북 적십자사, 제6차 이산가족 화상상봉(8월 13~14일)대상자 최종명단 교환
- 8월 2일 | 7월 12일 시작한 대북 중유 5만 톤 공급 완료
- 8월 2일 | 북한 조평통, 한국과 미국이 진행하는 을지포커스렌즈 합동군사훈련(8월 20~31일)을 비난
- 8월 2일 | 제14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남북외교장관회담(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박의춘 외무장)
- 8월 2~3일 | 2007 남북정상회담 개최관련 제1차 남북특사 접촉
- 8월 4~5일 | 2007 남북정상회담 개최관련 제2차 남북특사 접촉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  
- 노무현 대통령이 8월 28~30일 평양에 방문하기로 함.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을 개성에서 갖기로 함.
- 8월 7~8일 |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회의
- 8월 7~11일 | 제1차 기술지원단 북한 평양소재 4개 경공업공장 현장방문 및 기술지원
- 8월 8일 | 국가안전보장회의, '2007 남북정상회담' 개최(8월 28~30일) 의결·발표
- 8월 8일 | 미국 국가정보국 기밀해제 보고서, 북이 우리나라 농축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는 데에 높은 확신 표명
- 8월 10일 | 북한 판문점 대표부,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실시 계획관련 엄중 항의·규탄과 강력대응 입장 미군측에 통보
- 8월 13~14일 | 제6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남북 각 40가족씩 총 80가족)
- 8월 14일 | 남북정상회담 준비 접촉 및 분야별 제1차 실무접촉  
- 준비접촉에서 쌍방은 지난 2000년 정상회담의 전례를 준용하여 주요쟁점을 신속히 협의하고 회담을 준비해 나가는데 공감, 정상회담 준비에 따른 대표단 규모, 왕래절차, 체류일정 등 제반 절차문제 합의
- 8월 16일 | 2007 남북정상회담 관련 분야별 제2차 실무접촉  
<주요 합의사항>  
- 대표단 규모: 수행원 150명, 취재기자 50명 등 총 200명  
- 회담의제: 「8.5 남북합의서」에 기초하여 협의  
- 체류일정: 참관 등 구체적 체류일정은 마련되는대로 북측이 전달

- 왕래절차: 평양 방문과 서울 귀환시 서해선 도로(개성경유) 이용, 대통령은 전용차량으로 방북(행사기간 내내 사용, 경호차량 수행)
- 선발대 파견: 35명, 대표단 방북 7일 전 파견
- 편의보장·신변보장: 북측은 남측 인원들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 취재활동 등 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

**8월 16-17일 | 6자회담 비핵화 실무그룹회의(선양)**

-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 2.13합의에 따른 북측의 완전한 신고와 불능화 이행의지를 표명

**8월 18일 | 청와대 대변인실, 북한 수해로 남북정상회담 개최 10월 초로 연기 발표**

**8월 20일 | 6자회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회의**

**8월 23-25일 | 대북 수해복구 긴급구호물자 및 자재·장비 지원 착수**

**8월 24일 | 대북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8월 31일 | 북한 민화협, 미국 의회에서 상정 시도중인 남북자 결의안에 대해 정치적 도발이며 반민족적 망동이라고 비난**

**9월 1~2일 | 6자회담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회의(제네바)**

**9월 3일 |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제2차 회의(제네바)**

- 연내 북핵불능화와 북한에 정치·경제적 보상 등을 합의

**9월 7일 | 북한 계간지 「정치법률연구」 2007년 제3호, '경제원조를 통한 미국식 민주주의 전파책동의 반동성'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미국의 경제 원조는 예측의 올가미"라고 주장**

**9월 10일 | 대북 수해복구 자재·장비지원 개시**

**9월 11-15일 | 미·중·러 북핵 불능화기술팀, 방북**

**9월 12일 | 뉴욕 타임즈, 북-시리아 핵 커넥션 의혹 제기 보도**

**9월 18일 | 북한 외무성, 최근 미국 행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과 시리아간 핵 협조설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

**9월 18-21일 | 남북정상회담 제1차 선발대 방북**

**9월 20일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공포**

**9월 26일 | 미국 국무부, 미사일 거래에 연루된 북한 조선광업산업개발회사 제재 조치 부과 결정 발표**

**9월 27일 | 남북정상회담 우리측 대표단 300명 확정 발표**

**9월 27일~ | 남북정상회담 제2차 선발대 방북**

**10월 1일**

**9월 27일~ |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10월 3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합의(10.3 합의)>**

- 북한은 핵 물질,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 재확인
- 미국은 미북 관계정상화 WG에서 컨센서스를 기초로 북측 조치와 병행하여 미측 공약 이행할 것이며, 일북 또는 평양선언에 따라 신속한 관계정상화 노력 경주
- 중유 100만톤 상당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
- 적절한 시기에 6자 외교장관회담 북경에서 개최 재확인
- ① 미국은 불능화 활동을 주도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초기 자금을 제공할 것, 첫 번째 조치로서 미국은 불능화를 준비하기 위해 향후 2주내에 북한을 방문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할 것
- ② 북한은 2.13 합의에 따라 모든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합의
- ③ 북한은 핵 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타국에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함.
- ④ 북한과 미국은 양자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간다는 공약을 유지함.

9월 30일 | 개성공단 총생산액 2억불 달성

10월 2일 |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 헨리 오버링 국장,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미사일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

10월 2~4일 | 2007 남북정상회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 발표

- ①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갈.
- ②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 ③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음.
- ④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 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 ⑥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 ⑦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⑧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10월 11~19일 | 북핵 불능화 실무팀(성 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 외 8명), 방북

- 영변 5MWe 원자로,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 3대 핵시설의 연내 불능화를 위한 기술적 방안 등을 협의

10월 12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부시 미국대통령의 야만정권 발언에 대해 이는 우리의 존엄과 권위를 깎

아내리려는 어리석은 행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위협

- 미국은 이제라도 6자회담과 핵문제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주의를 돌리고 심사숙고하며 대북정책에서 일관성을 견지해야 함.

10월 16일 | 대북 식량차관 제1차 분배현장 확인(개성·고성)

10월 17~22일 | 제16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 1회차(17~19일): 북측 97명, 남측의 가족 404명  
- 2회차(20~22일): 남측 94명, 북측의 가족 219명

10월 20일~ | 제2차 북한 단천지역 지하자원 남북 공동조사

11월 7일

10월 21일 | 북한 해군사령부, 남측 해군함선들이 북측영해를 침범했다면서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10월 23일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10월 23~27일 | 제2차 기술지원단 북한 경공업 현장방문 및 기술지원

10월 26일 | 남북총리회담 제1차 예비 접촉

- 제1차 남북총리회담을 2007년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 총리회담 대표는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수행원·지원인원은 40~50명으로 하되, 각기 편리한대로 구성  
- 의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 문제  
- 회담운영에 있어 필요시 분야별 접촉도 진행  
- 왕래경로는 서해직항로(항공편)를 이용  
- 회담기록, 신변안전, 교통, 통신, 편의제공 등 기타 제반 절차 문제는 남북회담 전례를 준용

10월 30일 | 2007 남북정상회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국무회의 의결·발효

10월 30일 | 현정은 현대그룹회장 방북, 2008년 5월부터 서울-백두산 직항 관광 합의

10월 31일 | 개성공단 월생산액 2천만 불, 월 수출액 4백만 불 돌파

10월 31일 | 유엔총회,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과 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

11월 1~5일 | 미국 북핵 불능화팀 2차 방북 및 불능화 착수

11월 3~7일 | 남북 조선협력단지 제1차 현장실사(남포·안변)

11월 5일 | 남북피해자 지원단 사무실 개소

11월 5일 | 남북농업협력 제1차 실무접촉

〈합의서〉

① 시범적으로 축산협력사업 착수, 평양시 강남군 고읍리 일대에 상시 사육두수 5천두(연산 1천톤, 사업기간 2년) 규모로 양돈협력사업진행, 확대 실시



- ② 남측은 양돈협력사업 관련 시설 건축과 사육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 물자를 차관방식으로 제공, 차관합의서는 별도 체결  
북측은 필요 토지, 전력, 용수, 노동력 제공,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 안전운행, 기타 편의 보장
- ③ 제2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을 금년 중 개성에서 개최
- 11월 6일 | 미국 루거의원 보좌관 방북, 협력적 위협감축 프로그램 협의  
- 협력적 위협감축 프로그램: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로 인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미 상원의 리처드 루거 의원과 샘 닐 의원의 주도로 만들어진 법안을 근거로 한 군축·비확산 프로그램
- 11월 7일 | 북한 노동신문, 한미연합사령부 창설(1978년 11월 7일) 29주년을 맞아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것을 주장
- 11월 8일 | 경공업 원자재 1차 대가상환을 위한 남북이행기구관 실무협의
- 11월 9일 | 남북총리회담 제2차 예비 접촉
- 11월 11일 | 남북총리회담 제3차 예비 접촉  
(합의내용)  
① 제1차 남북총리회담을 2007년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② 총리회담 대표는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수행원·지원인원은 40~50명으로 하되, 각기 편리한대로 구성  
③ 의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 문제  
④ 회담운영에 있어 필요시 분야별 접촉도 진행  
⑤ 왕래경로는 서해직항로(항공편)를 이용  
⑥ 회담기록, 신변안전, 교통, 통신, 편의제공 등 기타 제반 절차 문제는 남북회담 전례를 준용
- 11월 12일 | 제32차 남북군사실무회담
- 11월 14~15일 | 제7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 11월 14~16일 | 남북총리회담,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채택  
①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신뢰의 관계로 전환, 통일지향적으로 발전  
②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③ 도로 및 철도분야 협력, 조선협력단지 건설, 개성공단 건설, 자원개발·농업·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적극 협력  
④ 사회문화분야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 취하기로 함.  
⑤ 인도주의분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⑥ 자연재해 발생할 경우 상호 통보, 피해확대 방지 조치 취하며 피해복구 등에 적극 협력  
⑦ 남북총리회담을 6개월에 1회 진행, 제2차 회담을 2008년 상반기 평양에서 개최

- 11월 19일 | 제62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대북인권결의안' 채택(한국은 기권)
- 11월 20-21일 | 제33차 남북군사실무회담
- 11월 20-21일 |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실무접촉,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합의서> 채택  
 ①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 채택, 수정 보충  
 ②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가동  
 ③ 12월 11일부터 경의선 문산-봉동 구간 화물열차 정례 운행  
 ④ 개성공단 화물운송을 위해 구 봉동역 화물역사, 부대시설, 철도 건설에 협력, 협의 확정  
 ⑤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을 계기로 남북열차운행을 점차 확대  
 ⑥ 개성-신의주간 철도 공동 이용위한 개보수,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북공동응원단 경의선 열차이용을 위한 현지조사 진행
- 11월 22일 | 북한 외무성, 제62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된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을 비난
- 11월 24일 | 제34차 남북군사실무회담  
 - 서해해상경계선 문제, 공동어로구역 설정문제 등 의견대립이 첨예한 쟁점사안과 추가적인 세부문안 협의는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함.
- 11월 24일 | 남북공동자원개발 제품(흑연) 최초 반입
- 11월 27일 | 6자회담 북핵 불능화실사단, 방북
- 11월 27-29일 |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 회담 합의서> 채택  
 ①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긴장완화와 평화 보장 위한 실제적 조치 취하기로 함.  
 ② 전쟁을 반대하고 불가침의무 준수 위한 군사적 조치 취하기로 함.  
 ③ 서해해상에서 충돌 방지, 평화 보장 위한 실제적 대책 취하기로 함.  
 ④ 현 정전체제 종식,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위해 군사적 상호 협력하기로 함.  
 ⑤ 남북교류협력사업 군사적 보장 위한 조치 취하기로 함.  
 ⑥ 본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로 함.
- 11월 27일~ | 백두산 관광 사전답사  
 12월 1일
- 11월 27일 | 남북농업협력(양돈)사업 북한 현장답사
- 11월 28-29일 |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실무접촉,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합의서> 채택  
 ① 경의선 도로 공동이용, 물자수송 활성화 위해 책임지고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개보수, 2008년 중 공사에 착수하여 빠른 기간안으로 완공하기로 함.  
 ②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위한 기본적 현지조사를 2007년 12월 11~27일 까지 완료하기로 함.  
 ③ 현지조사 인원을 각 20명 내외로, 개성에서 평양까지의 구간으로 하기로 함.  
 ④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8년 2월에 개성에서 개최,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범위와 추진 방향 및 공동 이용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함.

11월 28일~ |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12월 1일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 ① 이산가족 상봉 확대
- ②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 실시
- ③ 전쟁시기, 전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계속 해결하기로 함.
- ④ 12월 7일 금강산면회소 쌍방 사무소 준공식에 각기 필요한 인원들 참가
- ⑤ 제10차 남북적십자회담은 금강산면회소가 준공된 다음에 금강산에서 개최

11월 29일 | 제1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고시

11월 29일~ | 북한 김양건 통전부장의 6명, 방남

12월 1일

12월 1일 |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회의

12월 3일 | 미국 힐 국무부 차관보,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현장 참관 및 10.3 합의 이행방안 협의차 방북

12월 4일 | 통일부, (주)현대아산의 개성관광 남북협력사업 승인

12월 4~6일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 ①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성-신의주철도 개보수를 적극 추진
- ② 조선협력단지 건설,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문제 등에 협력
- ③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제반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
- ④ 「남북자원개발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단천지역의 광산 투자협력과 관련한 제3차 현지공동조사를 12월 20일~26일까지 하기로 함.
- ⑤ 농업 및 수산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
- ⑥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분야 협력사업을 추진
- ⑦ 「남북경제협력제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제1차 회의(2008년 4월초에 개성에서) 진행
- ⑧ 수출 및 투자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협의
- ⑨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년 상반기(평양) 진행

12월 4~8일 | 제3차기술지원단 북한 경공업 현장방문 및 기술지원(평양 소재 4개 공장)

12월 5일 | 육로이용 개성관광 개시

12월 5일 | 제35차 남북군사실무회담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보장 합의서> 채택

- ①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철도가 연결되는 지점에서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열차 통과 시간에 개방
- ② 남북관리구역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는 경우 인원 명단과 열차 현황, 적재화물의 품목과 수량, 군사분계선 통과시간 등을 24시간 전에 통보하여 승인

- ③ 남북관리구역 통과 열차는 기관차 앞면에 주황색 깃발을 부착
- ④ 남북관리구역 통과 열차는 최저 시속 20km/h, 최고 시속 60km/h로 제한, 합의 분계역에서 정지하여 통보된 인원과 장비, 화물의 출입 및 세관심사 등 받음.
- ⑤ 열차운행구간에서 상대측 지역에 대한 촬영 금지, 반출입금지규정 지켜야함.
- ⑥ 자기측 철도의 유지·보수를 위해 인원, 장비가 군사분계선 100m이내로 접근하는 경우 사전에 통보해야 함.
- ⑦ 열차운행시 비정상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측에 신속히 통보, 정상회복에 협력

12월 6일 | 북한 외무성, 큰물피해 복구 지원을 제공한 유엔 등 국제기구에 사의 표명

12월 7일 |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사무소 남북 사무소 준공식

12월 10일 | 경의선(도리산)물류센터 준공식

12월 11일 | 문산-봉동간 남북 화물열차 정기운행 개시

12월 11-13일 |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제1차 남북 공동 현지조사

12월 12-14일 |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보장 합의서〉 채택

#### 1. 통행의 군사적 보장

- ① 남북관리구역 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동해지구에서는 10m 구간, 서해지구에서는 2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각각 개방하고 도로통행시간을 늘이는 원칙에서 연간 매일 07시부터 22시까지 상시적으로 통행을 보장. 주요 명절과 기념일, 일요일의 통행은 상호 합의하여 그때마다 편리하게 결정
- ② 도로를 통하여 남북관리구역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는 경우 인원명단과 차량, 적재한 기차재들의 품목과 수량, 군사분계선 통과날짜를 24시간 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통행을 그대로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된 날짜의 도로 통행이 마감되기 3시간 전에 상대측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다시 승인을 받은 다음 통행하기로 함.
- ③ 동·서해지구 인원 및 차량통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질서와 표식규정 등을 동·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접촉에서 협의·확정
- ④ 서해지구에서는 통행편의와 통행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통행시간 간격을 두고 도로통과를 보장하며, 동해지구에서는 검사장과 주차장이 건설될 때까지 현 통행질서를 유지하기로 함. 인원과 차량이 증가하는데 따라 통행편의 보장방안을 해당실무접촉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함.
- ⑤ 도로통행을 지체시키는 일이 없도록 상대측의 통제품 및 금지품 등의 반출입 규정을 철저히 지키기로 함.
- ⑥ 인명피해를 비롯하여 불의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인원과 차량 등에 대한 긴급 통행을 보장
- ⑦ 철도화물 통행을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에 규정된 대로 하기로 함.

⑧ 도로통행시간이 늘어나고 야간통행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재·장비 등을 제공하는 문제를 해당 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함.

2. 통신의 군사적 보장

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안의 통신의 신속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2008년부터 인터넷 통신과 유선 및 무선전화통신을 허용. 개성공업지구 통신센터 건설과 운영방식, 통신중계국 구성 등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는 해당 실무접촉에서 협의

② 쌍방은 자연재해로 통신이 두절되는 경우 상호 통보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남북통신망의 2중화를 위한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함.

③ 쌍방은 남북관리구역 작업현장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현재의 군통신 선로와 군통신연락소를 남북 교류와 협력의 군사적 보장에 그대로 이용하며 통행시간이 늘어나는데 맞게 통신 근무시간을 늘이기로 함.

3. 통관의 군사적 보장

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시간을 단축하는 원칙에서 통관의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

② 통관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통관질서를 철저히 지키기로 함. 이와 관련하여 통관질서를 위반하는 인원, 차량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함.

③ 선별검사 방식 등을 통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세관검사장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기로 함. 필요한 검사설비와 자재·장비를 제공하는 문제는 해당 전문일꾼들의 실무접촉에서 협의·해결

12월 12~18일 | 개성-신의주 구간 철도 개보수 제1차 현지조사

12월 13일 | 경공업원자재 대북차관 상환광물 1차분 도착

12월 13~14일 | 경공업 원자재 2차 대가 상환을 위한 이행기구간 실무협의

12월 14일 | 경공업원자재 대북차관 1차 상환광물(아연괴 498톤) 인천항 도착 및 하역 완료

12월 14~15일 |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회의 합의서〉 채택

- ①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저장고 건설을 올해안에 착수하고, 조속히 완료
- ② 동식물의 검역체계를 확립하며 동식물방역에 관한 기술과 정보를 상호 교환해나가면서 중요 검역소의 검사·소독장비의 현대화, 가축질병의 예방·진단·치료약품 협력을 우선 추진
- ③ 과수, 채소, 잠엽, 축산, 농업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
- ④ 수산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
- ⑤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기타 실무접촉 날짜·장소는 문서교환으로 협의·확정

12월 15~18일 | 남북 조선협력단지 제2차 현장실사(남포·안변)

12월 16일 |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긴급제공 1차분 출항(철강류, 포항항→남포항)

**12월 17~18일 |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 기상정보교환, 기상설비 현대화 및 남북간 기상 인력 및 기술 교류 등 기상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지속
- 차기회담 2008년 2월 중 개최 (개성)

**12월 18일 | 남북농업협력 제2차 실무접촉**

〈남북농업협력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채택

- ① 남측은 2년 내에서 북측에 상시사육두수 연산 1천톤 규모(5,000두) 양돈시설 건축에 필요한 자재·장비와 종돈, 종돈 입식 후 1년간 소요되는 사료·약품 등을 차관방식으로 제공
- ② 차관의 상환기간은 차관 제공 후 30년, 이자율은 연 1.0%로 함.
- ③ 차관금액은 남측에서의 실구매 금액 또는 임대료로 함.
- ④ 사업기간 내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속품 교체는 남측이 보장, 비용은 차관금액에 포함.
- ⑤ 북측은 남측인원들의 북측 체류시 필요한 편의 보장

**12월 19일 | 미국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 방북, 우리농축육프로그램(UPE) 추진 및 대 시리아 핵확산 의혹 관련사항 신고문제 논의**

**12월 19일 | 제17대 대통령 선거, 이명박 대통령 당선**

**12월 20~21일 |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개성공단협력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채택

- ① 군사당국이 합의한 시행일부터 인원과 차량들이 매일 7~22시까지 상시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
- ② 2008년내 개성공단 통신센터의 완공, 유무선전화통신 서비스 제공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통신공급 합의서」 체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 ③ 통관절차를 선별검사 방식을 통해 간소화, 물자하차장을 2008년 중에 건설하는 문제 협의하기로 함.
- ④ 북측 근로인력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협력
- ⑤ 북측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적극 협력
- ⑥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년 2월중 개성에서 진행

**12월 20~21일 |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채택

- ①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
- ② 환경보호·산림분야 협력 적극 추진
- ③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년 상반기 중 개성 경제협력 협의사무소에서 진행

**12월 20~26일 | 제3차 북한 단천지역 지하자원 남북 공동조사**

**12월 21일 |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청사 준공식**

- 12월 21~25일 | **남북 농업협력사업 현지조사**  
- 대상: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과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사업, 장소: 평양, 황남 은율군
- 12월 21~27일 |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제2차 남북 공동현지조사**
- 12월 25일 |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제1차 실무접촉**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실무접촉 합의서> 채택  
① 빠른 시일내에 금강산 관광지구에 금강산관리위원회 설치  
② 금강산 통행검사소 건설 등 기반시설 문제가 빠른 시일안에 원만히 해결
- 12월 25-26일 | **10·3 합의에 따른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과 관련, 비중유 지원(에너지 관련 설비·자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2차 한·중·북 3자 협의 개최**
- 12월 25-28일 | **남북조선·해운협력분과위원회 회의**  
<공동보도문>  
- 남포지역에서의 조선협력사업과 해주직항로 통과 등 해운협력사업과 관련한 제반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함.  
-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위한 측량 및 지질조사를 2008년 1/4분기에,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년 3월 중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조선 및 해운협력분야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각기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계속 협의
- 12월 26일 | **북한 외무성 현학봉 미국국 부국장, 불능화 속도 조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경제적 보상의무 이행을 촉구**
- 12월 28일 |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 경의선 열차 이용 관련 제1차 실무접촉**  
- 차기접촉은 2008년 1월중 개성에서 개최
- 12월 28-29일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회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채택  
① 해주경제특구 건설을 개성공업지구와의 연계를 통해 점차 발전  
② 해주항을 공동으로 개발·활용  
③ 공동어로를 실시, 2008년 상반기안에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해 문제들 협의·해결  
④ 한강하구를 단계적으로 개발, 공동 이용 위해 2008년 상반기내에 「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 문제들 협의·해결  
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년 상반기안에 개최, 추진위원회 2차 회의 및 그 산하에 「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 「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 「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장소는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협의·확정
- 12월 31일 | **외교통상부 대변인, 북한이 10.3합의에서 공약한대로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신고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논평**

- 12월 31일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출범
- 12월 31일 | 북한, 전면 핵신고 기한 미준수
- 12월 31일 | 북한, 영변 불능화 작업인원 감축 통보



## 2008년

- 1월 1일 | 북한,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발표
- 1월 2일 | 조선신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비핵화 이행의지를 재천명하고,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한 과제를 제시  
-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종식, 정전협정의 평화협정교체, 한미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저지, 미군철퇴 등
- 1월 4일 | 북한 외무성, 핵신고서를 작성했으며 그 내용을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 언급  
- 신고의 핵심인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에 대해 “우리는 그들의 요청대로 수입 알루미늄관이 이용된 일부 군사시설까지 특별적으로 참관시키고 우라늄 농축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성의 있게 다 해명해 주었다”고 강조
- 1월 4일 | 인천항에 경공업 원자재 대북 현물차관 제공에 따른 2차분 상환 광물 도착
- 1월 9~10일 |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방한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면담(1월 10일), 북 핵프로그램 완전한 신고 촉구
- 1월 14일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신년외신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  
-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 정권이나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꾸준히 설득하겠음. 그러한 전제하에 국제사회와 더불어 10년 내 북한경제 수준을 일인당 3000불 소득 수준으로 도약하도록 돕는 구상을 갖고 있음.
- 1월 22일 | 북한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 대변인, 조·미 평화협정 체결 요구
- 1월 23일 | 조선신보,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앞으로 2단계 조치(불능화·핵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도 조선은 철저히 행동 대 행동 원칙에 기초하여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
- 1월 25일 | 제36차 남북군사실무회담  
- 북측, 하루 한번씩 오가는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의 운행 횟수를 감축할 것을 제안
- 1월 29~30일 |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  
- 개성-신의주 철도의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문제,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수송을 위한 긴급보수 문제, 개보수 착수시기 등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였음.
- 1월 29일~ |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방북
- 2월 2일 | 김정일 면담(1월 30일), 개성공단 및 판문점 방문(1월 31일)

1월 31일~ | 미국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 일행, 방북

2월 2일

2월 2일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동아일보, 아시히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경협  
4원칙으로 북핵문제의 진전 감안, 경제성, 재정부담 능력과 가치, 국민적 합의를 제시

- 4원칙에 따라 대북경협 사업을 검토해 우선 할 것과 못할 것을 구분

-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협력사업은 대통령 취임 뒤에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언급

2월 2일 | 조선신보,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 계기 미국에 10.3 합의 이행 촉구

2월 4일 | 베이징올림픽 공동응원단 정의선 열차 이용 관련 제2차 실무접촉

〈합의서〉

① 남북 응원단 규모는 300명(지원인원 포함)

② 남북 응원단은 개막식과 폐막식에 참가, 경기종목은 확정된 다음 선정

③ 남북은 응원곡 선정, 응원복장, 응원도구, 응원형식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앞으로 협의·결정

④ 남북 올림픽위원회는 남북응원단 규모를 베이징올림픽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각기 통보,  
개·폐막식을 비롯한 경기장 입장권 예약 및 구입문제는 추후 협의·결정

⑤ 남북응원단이 이용할 열차 및 그 편성 등 정의선 열차이용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 협의

⑥ 제3차 실무접촉은 앞으로 편리한 시기에 개성(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

2월 5일 |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제2차 실무접촉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실무접촉 합의서〉 체결

① 금강산 관광지구에 「금강산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함.

② 금강산 통행검사소 건설 등 기반시설 문제가 빠른 시일안에 원만히 해결되도록 함.

2월 5일 | 남북 적십자단체, 〈남북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에 관한 합의서〉 체결

- 남북 적십자단체 관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체결

① 남북은 2008년 설날을 계기로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 제작된 시범영  
상편지는 관문점을 통해 교환

② 남북은 시범교환 이후 분기마다 이미 상봉한 대상자들 가운데서 각각 30가족씩 영상편지  
를 교환

③ 남북은 영상편지를 이산가족들의 소식 등을 담아 10분~20분정도 분량의 CD 또는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

④ 남북은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을 위하여 「영상편지 교환관련 제공 자재·장비 명세」에  
합의

2월 5일 | 미국 마이크 맥코넬 국가정보국장, 상원정보위에 출석해 북한의 HEU 프로그램 지속 추진 및  
핵확산 활동의 지속, 대포동 미사일은 미 본토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라고 주장

2월 12~13일 |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두 차례의 공동현지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 설  
계작성, 공사범위와 방법, 공동이용 문제, 필요한 정밀조사를 추진하는 문제 등 실무적 문

제들을 협의

- 2월 19일 | 6·25전사자 유해 발굴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월 22일 | 북핵 불능화 대가 대북 에너지 설비 자재 2차 우선 지원분 출항
- 2월 25일 |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에서 '비핵·개방·3000' 구상 공식화  
-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임.
- 2월 26일 | 2010 남아공월드컵 남북예선경기 제2차 실무접촉
- 2월 26일 | 뉴욕 필하모닉 평양 공연, 남북 동시 생중계(평양 동평양대극장)
- 2월 26일 | 북한 조평통, 한미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 확대에 대하여 북에 대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  
- 한미는 연합해병사령부를 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로 확대 창설했는데 이는 작전과 전투수행까지 담당하는 기능이 확대된 것임.  
- 대화상대방에게 충구를 대며 대화와 평화를 운운하는 것은 궤변이며 우리는 그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경각성을 갖고 주시, 단호히 대응할 것임.
- 2월 29일 | 조선신보,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구상은 비현실적이며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도
- 3월 3일 | 북한 외무성, 한미 합동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북침 핵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모든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
- 3월 3~28일 | 제7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의  
- 박인국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실장, 기조연설(3월 3일)에서 북한에 인권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 3월 5일 | 북한 노동신문, 최근 6자회담 합의사항의 이행 지연과 관련하여 미국 강경보수세력의 대북 강경정책을 비난
- 3월 6일 | 개성공단 「자동차 관리규정 시행세칙」관련 대북 실무협의
- 3월 11일 | 북한, 최근 한·미·일이 구성에 합의한 '3국조정위원회'를 대북 침략동맹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축 중단을 촉구
- 3월 13~14일 | 미·북 제네바 회담
- 3월 15일 | 북한,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상원 군사청문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고 남한의 미사일방어(MD) 참여 요구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데 대해 비난
- 3월 16~24일 | 2008 아시아 주니어 레스링선수권대회 북한 대표팀(15명), 방남
- 3월 17일 | 금강산 승용차 관광 실시
- 3월 19일 | 김하중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북핵문제 타결 없이 개성공단 확대 어렵다'고 언급
- 3월 20일 | 「자동차 관리규정 시행세칙」 2차 남북실무협의

- 3월 22일 | 북한 노동신문, '10.4선언' 이행을 촉구
  - 10.4선언이야말로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지침이라고 강조
- 3월 24일 | 북한, 통일부 장관의 발언(3월 19일)을 문제 삼으며 개성의 남북교류협력협사무소의 남한 당국자 철수 요구
- 3월 25일 | 북한 노동신문, 북한의 미사일에 관한 미국내 발언에 대해 항변하고 미사일방위체계 수립 등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
  - 미국의 동북아전략은 일본, 남한과의 종속적 군사동맹에 의거하여 우리와 주변대국들을 견제하고 제압하기 위한 침략적 냉전구조의 유지강화전략임. 최근 남한에서 감행된 한미 합동군사연습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기본요인이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집중적 표현임.
- 3월 25-26일 |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조사단 파견
- 3월 26일 | 김태영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 북의 핵공격시 대처방법 질문에 대해 “중요한 것은 적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고 답변
- 3월 26일 | 2010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남북축구경기(상하이)
- 3월 27일 | 북한의 요구로 남북경제협력협사무소 우리측 직원 11명 철수
- 3월 27일 | 통일부 대변인, 남북경제협력협사무소 직원 철수와 관련 북한측 조치에 대한 유감 표명, 남북간 합의사항 위반임을 지적하고, 남북경제협력협사무소 정상화를 촉구
- 3월 27-28일 |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남북 대표단 제1차 접촉
- 3월 28일 | 북한, 서해상에서 함대함 단거리미사일 수발 발사
  -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6월 KN-02 단거리 지대지미사일(사정거리 120km) 발사 이후 9개월 만임.
- 3월 28일 | 북한 남북장성급회담 단장, 합참의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공격 대책에 관한 발언(3월 26일)에 대해 취소와 사과를 요구,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모든 남북대화가 전면 차단될 것이라고 주장
- 3월 28일 | 북한 외무성,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 등과 관련 미국이 핵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킨다면 핵시설 무력화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치게 될 수 있다고 언급
- 3월 31일 | 경공업 원자재 대북수송 마지막 제26항차 출항(인천-남포)
- 4월 1일 | 미국 레비 국무부 차관보, 미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재무부 소속 비밀검찰국(Secret Service)이 북한 위폐제작활동을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슈퍼노트로 알려진 북한에서 만든 정교한 달러화 위폐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
- 4월 3일 | 북한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우리군의 북한 영해 침범을 비난하며 예상외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

- 4월 7일 | 북한, 4월 7·8·10·11일 노동신문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에 대해 연이  
어 비난
- 4월 8일 | 북한의 출입제한 요구조치로 열차운행사무소 직원(통일부) 탑승 없이 화물열차 운행
- 4월 8일 | 미·북 양자회담, 핵 신고서 내용 잠정 협의
- 4월 8일 | 국방부, 서해교전(2002년 6월 29일)의 명칭을 제2연평해전으로 바뀌어 칭하게 됨을 발표
- 4월 8일 | 북(김계관 부상)·미(힐 차관보), 양자회담  
- 핵 신고서 내용 잠정협의
- 4월 9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6차 회의 개최
- 4월 9일 | 북한 외무성, 북·미 양자회담(4월 8일)에 대해, 10.3 합의 이행을 완결하는데서 미국의 정치  
적 보상 조치와 핵 신고 문제에서 견해일치가 이룩되었다고 언급  
- 힐 차관보는 기자회견에서 진전을 이뤘지만 세부적인 계획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
- 4월 10~11일 | 한·중·북 3자협의 2단계회의  
-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한·중이 북한측에 제공하는  
제3차분 에너지 관련 설비·자재 공급 방안에 합의  
- 남한은 철강재 등(중유 3.5만톤 상당)을, 중국측은 코크스탄을 제공기로 합의
- 4월 17일 | 이명박 대통령,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 회견에서 북한에 서울·평양 연락사무소의 설치, 남북한  
간의 고위급 외교채널 구축 방안을 제의 할 것이라고 언급
- 4월 19일 | 북한 노동신문, 통일부 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
- 4월 22일 | 성 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 등 5명, 북핵 신고·검증 방안 실무조율 관련 방북
- 4월 24일 |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 의회서 북·시리아 원자로 개발 협력 브리핑서 시리아 알-키바르 원자  
로와 영변 원자로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사진 등 공개
- 4월 24~28일 | 2008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북한선수단 17명 방남(제주)
- 4월 26일 | 청와대 대변인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거부에 대해 대북전략 차원의 제안이 아닌 만큼 북  
측의 거부 의사에 대해 일회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
- 4월 27~28일 | 북핵 관련 대북 에너지 설비 자재 2차분(경량레일 5,000톤 및 강관용 2,689톤) 대북 수송
- 4월 30일~  
5월 2일 | 한·미 공군 연합훈련(쌍매훈련 Buddy Wing Exercise) 실시
- 5월 5~8일 | 미국 식량 협상 대표단 방북, 인도주의적 식량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5월 6~7일)
- 5월 8~10일 | 미국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 등 5명, 북핵 신고 문제 실무협의 관련 육로 이용 방북  
- 영변 원자로 플루토늄 생산관련 기록 입수
- 5월 8~27일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5월 14일 | 조선신보, 성 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의 방북(5월 8~10일)시 핵관련 문서 제공을 보도하고 미국에 전략적 결단을 촉구
- 5월 17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북한 식량제공 결정 보도
  - 16일 미국은 북한에 식량 50만톤을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공식 발표하였음. 10만톤은 미국 비정부단체들을 통하여, 나머지 40만톤은 세계식량계획을 통하여 제공되게 되며, 첫 배분 식량을 6월말 전에 도착시킬 목표일에 평양에서 곧 유관측 전문가들의 회의를 가지게 됨.
- 5월 20일 | 통일부, '통일교육기본계획', '통일교육지침(학교용, 일반용)' 확정
- 5월 22일 | 중국 투먼-함북 남양 보행 관광 개통, 중국인 관광객 30여명 도보 관광
- 5월 24일 | 북한 조평통, 통일부가 발간한 '2008년 통일교육지침서'를 '반북대결고취안', '반통일교육안' 등으로 비난
- 5월 27일 | 북한 경비정 1척, 서해 연평도 서쪽 NLL침범
- 5월 27-28일 | 미·북 양자회담
- 5월 30일 | 북핵 6자회담 남북 수석대표 회동
- 5월 30일 | 남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전후 남북피해자 피해위로금 지급신청 35건을 심의하여 2008년 6월중 10억 6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
- 5월 30일 | 북한 박림수 남북군사실무회담 단장, 북한을 비난하는 뼈라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
  - 반공화국 뼈라살포 행위가 동결상태에 놓여있는 현 북남관계를 수습할 수 없는 파국적 사태로 몰아가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임.
- 5월 31일 | 북한, 평안남도 증산 인근 서해상에서 함대함 단거리 미사일 3발 발사
- 6월 5일 |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남북 수석대표간 사전준비 협의
  - 북한은 금번 협의시 제2단계 비핵화 이행 진척 정도에 맞추어 5자의 경제적 상응조치가 가속화됨으로써, 향후 2단계 마무리 및 3단계 진입 등 6자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진전되기를 희망
  - 남북 양측은 5자 공여국의 제2단계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이행과 북측의 불능화·신고 등 제2단계 비핵화 조치 이행이 상호 추동하며 진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함.
- 6월 6일 | 이명박 대통령, 제53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남북간 진지한 대화 제의
  -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함께 추진할 교류와 협력 사업에 관해 남과 북이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
- 6월 6일 | 조선신보,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보의 대북정책을 소개하고, 6자회담의 변화가 대세가 되고 있다고 주장
  -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오바마' 상원의원은 "북한의 최고영도자와 조건없이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였으며, 이러한 외교구상은 언론들의 주목을 받아왔음. 최근에는 "6자회담과 같은 임시기구를 넘어서는 효과적인 외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음.

- 북·미 양자가 「10.3 합의」 이행 완결을 위한 행보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데 외교가에서는 비핵화의 다음 단계에 관한 해석과 논의가 분분함. 「10.3 합의」 이행이 마무리되고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추진되어온 비핵화의 2단계가 완료되면 동북아시아 정세는 새로운 전환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임. 일본이 그동안 추구하였던 강경일변도 정책이 실효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음.
- 6월 9일 | 북한 관문접대표부 대변인,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뤄진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중단, 미국의 대한 무기구매국 지위 향상, 한미간 합동군사연습 등에 대해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 책동을 추구한다면 조선인민군은 모든 전쟁억제력을 보다 확고하게 강화해 나가는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
- 6월 10일 |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5차 공여국 회의
- 6월 10일 | 북한 외무성, 온갖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 일관한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반테러 투쟁에서 존엄 있는 유엔 성원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갈 것이라는 것을 천명
- 6월 10~11일 |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 일행, 신고·불능화 관련 협의차 육로 방북
- 6월 11일 |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수석대표회의
- 6월 11일 | 유엔공동실사단, 북한 식량 사정에 대한 현장조사
  - 함경남북도, 량강도 등 8개 지역의 53개군, 560개 가구, 2주에 걸쳐 조사
- 6월 19~23일 | 월드컵 아시아 예선 남북경기 북한선수단(손광호 조선축구협회 부위원장 등 30명), 방남
- 6월 21~24일 | EU 의회 대표단(피그커 한반도 관계위 위원장 등), 방북
- 6월 22일 | 북한 경비정 1척, 서해 백령도 북쪽 북방한계선(NLL) 침범
- 6월 22일 | 북한,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 폭파 취재 6자회담 참가 5개국 언론사 초청
- 6월 22일 | 북한 남북군사회담 대변인, 남한정부의 3통 합의 미이행으로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에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
- 6월 23일 | 독일 슈피겔, 북한-이란-시리아 핵개발 삼각 커넥션 의혹 보도
- 6월 25일 | 대북 에너지 설비 자재(2차 6월 분, 철강류 2,534톤) 남포 수송
- 6월 26일 | 북한, 핵 프로그램 신고서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
  - 내용: 약 26kg의 플루토늄을 핵무기용으로 재처리, 사용후 연료봉 가운데 7~8kg의 미추출 플루토늄 보유
- 6월 26일 | 미국 부시 대통령, 북한에 대한 테러리즘 지원국 명단제외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해제 지시
- 6월 26일 | 미국 셔먼 민주당 하원 외교위 산하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회 위원장과 공화당 간사 레티던 의원,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 법안을 제출
- 6월 26일 | 외교통상부 대변인,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환영 논평 발표하고, 6자회담의 진전

## 기대를 언급

- 6월 26-28일 |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 방북
- 6월 27일 | 북한, 오후 5시 5분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발
- 6월 27일 | 북한 외무성, 핵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강조하고,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9.19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6월 27일 | 통일부, 북한이 6월 24일부터 오전시간대 개성공단에서 남한으로 복귀하는 인력과 물자의 통행을 허용치 않고 있다고 발표
- 6월 29일 | 미국 대북 식량 1차분(밀 3만 7천 톤), 남포항 입항(6월 30일 하역)
- 6월 30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계기로 일본의 대북정책 전환 촉구
- 7월 4일 | 북한 외무성,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핵 10.3 합의에 따라 의무이행을 완결해야 다음 단계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
- 미국은 「10.3 합의」에 따르는 정치적 보상조치를 발표하였지만,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조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적성국무역법 적용종식조치로 완전하지 못함. 5자의 경제보상 의무도 현재 40%밖에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음. 6자회담에서 「10.3 합의」가 나올 때 찬성하고도 그 이행에 참가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참가국이 있지만 아직까지 묵인되고 있음. 우리는 핵신고서를 검증하는데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지만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견지하고 있음.
- 7월 6일 | 이명박 대통령, BBC 통신 및 교도통신 합동인터뷰에서 핵 폐기에 도움이 되면 언제라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언급
- 7월 7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이명박 대통령의 교도통신 회견 발언(7월 6일)에 대하여 언어도단이라며 부정적 의견 표명
- 7월 7일 | 경의선 열차 운행 중단
- 김일성 주석 애도기간(7월 7~9일) 즈음 철도 운행 휴무 요구, 7월 14일 재개
- 7월 8일 | 북·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양자회담
- 7월 8일 | 중국 친강 외교부 대변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개최(7월 10일) 공식 발표
- 7월 9일 |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김숙(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계관(외부성 부상) 회동
- 7월 10일 | 북·미 대령급 회담
- 한·미 연합군 사령부, 을지 프리덤 가디언 군사연습을 실시(8월 18~22일)한다고 북한에 통보
- 7월 10~12일 | 6자 수석대표회담, 7.12 합의 도출
- ① 한반도 비핵화 검증체제 수립
  - ② 6자회담 틀 내에 감시체제 수립
  - ③ 핵 포기과 경제지원 위한 시간계획 작성



- ④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지도원칙 계속 논의
- ⑤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회의 개최
- 7월 11일 | **이명박 대통령, 국회 개원 시정연설에서 남북대화 제의 및 6.15, 10.4선언 이행 시사**  
-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함. 남과 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영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임. 남북 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되어야 함. 호혜의 정신에 기초하여 선언의 시대를 넘어 실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함.
- 7월 11일 |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금강산에서 북측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
- 7월 12일 |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 관련 담화 발표**  
- 남조선 관광객이 관광구역을 벗어나 비법적으로 울타리밖 우리측 군사통제구역안에까지 들어온데 그 원인이 있으며, 이번사고의 책임은 남한에 있음.
- 7월 12일 | **조선신보, 6자 수석대표회의 결과 발표 및 관련 입장 표명**  
- 전 조선반도 비핵화를 검증 가능하게 실현할 데 대한 9.19공동성명의 원칙에 기초해 조·미를 포함한 6자의 행동 대 행동을 보장하는 체제가 마련됐다고 분석
- 7월 12~15일 |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진상 조사 위해 방북**
- 7월 13일 | **통일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 유감을 표명하고 경위와 진상 조사를 위해 우리측의 진상 조사단을 수용할 것을 북한에 촉구**
- 7월 13일 | **북한 노동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7월 11일)에 대해 전면적인 대화재개를 운운 하였으나 대북정책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난**
- 7월 14일 |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해 여야 대표로 구성된 국회 차원의 특별기구를 통한 남북정치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
- 7월 14일 |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 '정부합동조사단' 발족**
- 7월 15일 | **통일부,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 관련 2차 대북통지문 통해 현지조사단 파견 수용 촉구**  
- 정부는 구체적으로 박씨 사건이 (남측)인원의 신체 불가침을 보장한 금강산 등 체류 합의서, 관광객의 신변안전과 무사 귀환을 보장한 1998년 7월 북측 사회안전부장의 신변안전보장각서, 관광객의 신변 안전을 보장한 1998년 6월 현대와 아태평화위 계약서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
- 7월 16일 |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3차(7월분, 환강 1,441톤) 제공(인천항→남포항)**
- 7월 16일 | **금강산 사건 국과수 부검결과 발표**
- 7월 18일 |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 개성관광 현장 안전점검 등 위해 방북**
- 7월 18일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북핵 6자회담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 등을 논의**
- 7월 18일 | **북한 조평통, 「을지 프리덤 가디언」(8월 18-22일)·「림팩」 등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비난**

- 7월 23일 | 6자회담 출범 이후 참가국 외무장관들 최초 비공식 회동, 6개항 합의 도출(싱가포르)**  
 - 6자회담이 진행되면서 이론 업적들이 있었다는데 동의, 각국의 의무사항 앞으로 완수, 6자회담 과정에서 양자 관계 및 정상화 문제 해결하고 동북아 평화 화해 실현, 북핵 검증 이행 계획 신속히 마련, 6자회담 진전 위해 수석대표 분발 촉구, 공식 외교장관 회담 중국 베이징에서 조속히 개최
- 7월 24일 | 에너지 설비·자재 국제입찰 품목 제공 관련 대북 통지문 발송**
- 7월 25일 |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정부합동조사단, 활동 결과 브리핑 실시**  
 - 고 박왕자씨의 사망 지점이 북측의 최근 설명과 100m차이가 난다고 밝히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현지조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
- 7월 28-31일 |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국제경쟁입찰 품목 인도 목적 방북(단둥→남포)**
- 7월 31일 | 미국 국방부, 신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보고서 승인**  
 - 북한과 이란이 국제질서를 위협하므로 미국이 충분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기술
- 7월 31일~8월 2일 | 북·미 베이징 회동, 북·미·중 북핵 검증의정서 협의**
- 8월 1일 |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정부합동조사단, 금강산 사건 모의실험 결과 발표**
- 8월 3일 | 북한 조선인민군 금강산 지구 군부대 대변인, 금강산 사건에 대한 특별담화 발표**  
 ① 우리는 금강산관광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불필요한 남측 인원들을 모두 추방할 것  
 ② 금강산지구에 들어오는 남측인원과 차량들에 대한 군사분계선 통과를 보다 엄격히 제한, 통제할 것  
 ③ 앞으로 금강산지구의 관광지와 군사통제구역 안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하여 강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
- 8월 3일 | 통일부 대변인, 북한 조선인민군 금강산 지구 군부대 대변인의 특별담화에 대해 남측 인원추방 등의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히 금강산 사건의 진상조사에 호응하는 등의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 8월 6일 |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 양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 2단계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비핵화 3단계 조치를 통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의 완전한 포기를 이행할 것을 촉구함. 양 정상은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상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으며, 6자회담의 지속적 진전을 위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하면서,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부시 대통령은 지난 7월 11일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발생한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 대해 유감과 조의를 표명하고, 동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이러한 비극의 재발방지를 위해 북한이 남북 당국간 대화에 응해 나올 것을 촉구함.
- 8월 9일 | 북한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군사실무책임자, 8월 10일부터 금강산관광지구 내 우리측 인원**

**추방조치 통보**

- ① 금강산관광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불필요한 남측인원들에 대한 추방조치는 8월 10일부터 실시함. 1차적인 추방은 ‘한국관광공사’와 ‘금강산면회소’의 인원들을 비롯하여 남측당국 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추방은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됨.
- ② 추방조치와 함께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남측인원들과 차량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는 보다 엄격히 제한, 통제하게 됨.
- ③ 금강산관광지구와 군사통제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든 위반행위들에 대해서도 강한 군사적 제재조치를 취할 것임.

8월 12일 | 금강산 사건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및 경찰청 조사 결과 발표

8월 12일 | 남한 모래운반선 동이1호(658톤), 장전항 북동쪽 해상에서 북한 어선과 충돌

8월 12일 | 북한 노동신문, 미국의 국방전략보고서(7월 31일)의 내용은 북한에 대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

8월 14일 | 북한, 현대아산에 20일까지 금강산관광지구 내 체류인원 200명 이하로 축소 통보

8월 15일 | 이명박 대통령,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남북간 전면적 대화와 경제협력 촉구

- 유감스러운 금강산 피격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적 대화와 경제협력에 나서기를 기대함.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놓쳐서는 안될 변화의 호기이기 때문임.

8월 18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8월 6일)에 대해 비난

8월 20일 | 북한 외무성,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비난하면서 “미국이 핵문제와 관련해 들고 나오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검증과 같은 부당한 요구들에 대해 더더욱 각성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

8월 22일 | 북·미 뉴욕회담, 북핵프로그램 검증 협의

8월 26일 | 북한 외무성, 10.3 합의에 따라 진행 중이던 핵 시설 무력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핵시설 복구를 고려하겠다고 언급

- 미국이 약속된 기일 안에 우리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10.3 합의 위반이므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

8월 26일 | 외교통상부 대변인, 북한의 불능화 조치 중단 발표관련 불능화 조치의 조속 재개 촉구

9월 4일 | 통일부, 브리핑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복구 움직임과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

9월 6일 | 조선신보,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겠다는 외무성 성명(8월 26일)의 입장을 강조하고, 미국의 검증 요구 수용할 수 없음을 언급

9월 11일 | 대북 에너지 설비 자재 국제입찰분 제공 관련 대북 통지문 발송(중유 환산 약 1.6만 톤 상당 철강류 제공)

- 9월 18일 | 통일부, 10.4선언의 합의 사업 이행하려면 14조 3000억여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언급**  
 -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기반 조성, 경제협력 대가 등으로 재정과 민자를 합해 북한에 모두 3조 5000억 원 정도를 지원  
 - 구체적으로 식량 차관과 비료 무상 지원 등 인도적 지원 2조 366억 원, 철도·도로 건설 차관, 개성공단 기반시설 등 경협 기반시설 조성 4,171억 원, 현대 포괄사업권(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대북 송금), 금강산 관광 비용,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등 민간기업 상거래 형식 10억 3048만 달러(약 1조 305억 원) 등임.
- 9월 19일 | 6자회담 경제·에너지관련 실무그룹 남북 대표단 제3차 접촉**
- 9월 19일 | 북한 외무성, 영변핵시설 원상복구 중이라고 발표**  
 - 어느 합의에도 없는 '국제적 기준'의 검증을 걸고 저들이 공약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조치의 효력 발생을 연기한 미국의 처사는 결국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됨. 핵무기전파방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성원국도 아닌 우리에게 '국제적 기준'의 미명 하에 가택 수색을 강요해보려는 미국의 기도는 실현될 수 없는 허황한 망상에 지나지 않음. 미국의 본성이 다시금 명백해진 이상 우리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으며 우리대로 나가면 될 것임.
- 9월 22일 | IAEA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 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이 일주일내에 영변 핵시설의 재처리시설을 재가동할 것임을 IAEA에 통보해 왔다고 언급**
- 9월 22일 | 이명박 대통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서울지역회의 개최사에서 통일과 남북관계에 대한 세 가지 새로운 시각을 제시**  
 ① 우리의 사고를 남한 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로 옮겨야 함. 선진일류국가와 성숙한 세계 국가 건설은 남한 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목표임. 이 땅의 8천만 우리 민족이 주체이자 수혜자가 되어야 함.  
 ② 통일은 우리의 목표이자 시대적 사명  
 ③ 남북관계는 더욱 생산적이고 실용적으로 바뀌어야 함. 남북교류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경제협력 역시 남북이 함께 이익을 내고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함. 남북 교류협력의 성과가 더 큰 협력을 일으키는 선순환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함.
- 9월 24일 | 유명환 외교부 장관, 북한의 핵 재처리 시설 가동에 대하여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 1718호의 유효성을 강조**
- 9월 25일 | 북한, 남북 군사통신 채널 통해 군사실무회담 전격 재개**
- 9월 28일 | 국방부,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10월 2일) 수정 재의**
- 10월 1일 | 북한, 유엔인구기금(UNFPA)과 공동으로 인구주택총조사(인구센서스) 실시**
- 10월 1~3일 | 미국 힐 국무성 차관보 방북,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면담하고 북핵검증의정서 및 테러지원국 해제문제 등을 협의**

10월 2일 | 제37차 남북군사실무 회담

- 남측:

- ① 북측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속 비방하는 것은 상호 비방·중상하지 않기로 한 남북간 합의에 배치 되는 것임.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함.
- ②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협의·해결하자는 입장, 남북간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한 모든 수준의 대화가 전면적으로 재개되어야 함.
- ③ 북측 군인의 총격으로 인해 금강산 관광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보장 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것을 요구함.
- ④ 현재 개성관광객과 개성공단 사업자들이 남북관리구역 출입·통행에 있어 불편과 애로를 겪고 있음. 북측이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함.

- 북측:

- ① 금강산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
- ② 뼈라살포행위는 쌍방 군사적 합의에 대한 위반이며, 침예하고 긴장한 현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행위임. 전단살포행위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관광에 엄중한 후과가 있을 것이며, 군사분계선을 통한 우리측 인원의 통행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고, 개성 및 금강산 지구내 우리측 인원의 체류가 불가할 수 있을 것임.

10월 7일 | 북한, 서해 상공서 병력수송용 AN-2기 이용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10월 9일 | 북한, IAEA 검증팀 영변 핵시설 접근 금지

10월 9일 | 북한 해군사령부 대변인, 남한이 NLL을 '정책화' 하였다고 주장하며 서해상의 충돌 가능성을 경고

- 조선인민군 해군은 아무런 법적 조치도 우리와 사전협의도 없이 미군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북방한계선을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만들려는 남조선 괴뢰군당국의 처사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

10월 9일 | 해군, 북한 해군사령부의 주장(10월 9일)에 대해 반박, 남측 함정은 NLL을 넘은 적이 없다고 발표

10월 10일 |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 북한 핵문제 진전이 있을 경우 '비핵·개방·3000' 구상에 따라 각종 대북 사업에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

10월 10일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10월 10일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북과 남의 화합과 대결,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이라며 "누구나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

- 조선중앙방송·평양방송·조선중앙TV,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정권 수립 60주년(9월 9일)을 앞둔 9월 5일 노동신문과 민주조선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는 장문의 담화를 썼다며 전문을 보도

- 10월 11일 | 미국 국무부,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발표하고 협의진행 상황과 핵검증에 관한 합의 내용 발표**  
 <북-미, 핵검증 합의문>
- ① 6자회담 당사국의 전문가들이 검증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의 전문가도 포함
  - ②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검증에 중요한 자문과 지원 역할을 담당
  - ③ 전문가들은 신고된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에 의해 접근
  - ④ 샘플링과 실증적으로 규명해내는 과학적인 절차의 이용에 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음.
  - ⑤ 검증체계에 포함된 모든 조치들은 플루토늄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모든 우라늄 농축, 핵확산 활동 등에 적용됨. 여기에 6자회담 당사국들 사이에 이미 합의된 감시체계는 핵확산과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해 적용됨.
- 10월 12일 | 북한 외무성, 핵 불능화 작업 재개와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감시성원들의 임무수행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고 언급**  
 - 이는 10.3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전제로 하여 핵시설무력화대상들에 대한 검증에 협력한다는 것을 의미. 앞으로 10.3합의의 이행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은 미국의 테러지원국명단 삭제조치가 실제적 효력을 발생하며 5자가 경제보상을 완료하는데 달려 있음.
- 10월 12일 | 외교통상부 대변인,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관련 환영 성명 발표**
- 10월 13일 | 북한, IAEA 검증팀 영변 핵시설 접근 허용**
- 10월 14일 | IAEA,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을 재시작 발표**
- 10월 27일 | 남북중령급군사실무 책임자 접촉(남북관리구역 서해지구)**  
 - 남측의 전단 살포 행위 중단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군 통신망용 자재·장비 제공을 요청
- 10월 28일 | 북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대변인, 남측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이 계속될 경우 단호한 실천행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며 3개항의 입장 발표**
- ① 남조선 괴뢰당국의 뼈라살포행위와 날조된 모략여론전이 계속된다면 이미 경고한대로 우리 군대의 단호한 실천행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명백히 밝힘.
  - ② 괴뢰호전광들이 우리에게 대한 기본타격방식으로 정식 선포한 선제타격에 대하여서는 이미 세상에 천명한대로 보다 강력한 우리식의 앞선 선제타격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입장임.
  - ③ 남조선 괴뢰당국이 의연히 역사적인 북남선언들과 그에 따른 모든 북남합의들을 말과 행동이 다르게 대한다면 북남관계의 전면차단을 포함한 우리의 중대결단이 실행되게 될 것임.
- 11월 3일 | 통일부, 관세청과의 시스템 연계 강화로 경의선 개성공단 출입차량의 통행 절차 간소화 결정**
- 11월 4~11일 | 북한 외무성 리근 미국 국장, 북핵 검증 문제를 논의차 뉴욕 방문**
- 11월 5일 | 북한 노동신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정감사시 발언(10월 22일, 핵검증 결과 북의 핵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우선 북에 대한 여러 제재해제를 복원하는 조치가 상정될 것)에 대해**

‘주제넘은 망동’이라고 비난

- 11월 6일 | 미·북 연쇄 회동, 북핵 검증 및 핵 불능화 에너지 지원 문제 논의
- 11월 6일 | 북한 군부조사단(단장 김영철 국방위원회 정책국장), 개성공단 현지 실태점검
- 11월 12일 | 북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단장,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하는 모든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는 조치 실시 통보
- 11월 12일 | 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조치에 대해 유감 표명
- 11월 12일 | 북적 중앙위원회, 남측 정부가 EU와 일본 등이 주도한 제63차 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이유로 관문점 직통전화 단절 통보
- 11월 12일 | 북한 외무성, 핵 신고서 검증과 관련하여 시료채취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 검증방법은 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
- 11월 13일 | 국방부, 북한의 군사분계선 통행제한 통보 관련 서해지구 군 통신망 정상화를 위한 자재·장비 제공 및 대북전단 살포문제 방지노력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답신 전달
- 11월 15일 | 조선신보, 시료채취는 불능화 이후 논의 주장  
- 무력화 단계는 핵시설 폐기 과정의 도입부에 지나지 않으며 핵무기 문제의 논의는 조선이 현존 핵계획을 포기한 다음의 의제임.
- 11월 18일 | 금강산 관광 10주년
- 11월 19일 | 통일부 차관 주재 유관부처 국장급회의, 일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대책 협의
- 11월 24일 | 북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단장,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통행제한, 개성관광 중지, 남북간 열차운행 차단 조치 시행 통보(12.1 조치)
- 11월 24일 | 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12.1 조치에 대해 유감 표명하고 남북간 합의사항 위반임을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
- 11월 26일 |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금강산 우리측 체류인원 50%로 제한 통보
- 11월 27일 | 북한 동서해지구 군사책임자, 12.1 조치의 구체적 내용 통보  
① 동해지구 통행은 기존 1일 왕복 2회에서 매주 화요일 왕복 2회로 제한  
② 서해지구 통행은 기존 1일 왕복 19회에서 1일 왕복 6회로 제한  
③ 통행인원 및 차량도 기존 1회당 100명/200대 이하에서 1회당 250명/150대 이하로 제한
- 11월 28일 | 개성관광·남북열차운행 중지, 경협사무소 철수
- 11월 30일 | 북한, 개성공단 체류허용 인원(880명) 규모 내용 통보
- 12월 1일 | 북한, 12. 1 조치 시행  
- 군사분계선 통행제한, 개성관광 중지, 남북간 열차운행 차단, 남북육로 통행 제한(개성공단 우리측 체류상주인원 880명으로 제한)

- 12월 1일 | 통일부, 12.1 조치 관련 성명 발표
  -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북한 스스로 무조건 이행을 요구하는 10.4 선언에서 남과 북은 분쟁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 합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함.
- 12월 2일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발효
- 12월 4일 | 북한의 12.1 조치 관련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역 비상주 인원 철수 완료
- 12월 4~5일 | 북·미 6자 수석대표, 싱가포르 회동
- 12월 6일 | 북한 조평통, 개성관광 중단 등 북한의 12.1조치와 관련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남북경색은 남한정부 책임이라고 주장
- 12월 6일 | 북한 외무성, 일본이 10·3합의에 따른 비핵화 2단계의 경제적 보상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8일부터 열리는 6자 수석대표 회담에서 일본과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12월 8일 | 남북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양자회동
- 12월 8~10일 |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 합의된 검증 방식 도출에 실패
- 12월 12일 | 미국, 북 핵 검증절차 합의 거부로 대북 중유지원 중단 발표, 나머지 5개국도 대북 중유제공 중단을 양해했다고 발표
- 12월 17~18일 | 북한 군부조사단(단장 김영철 국방위원회 정책국장), 개성공단 방문
  - 9개 입주 업체 방문 및 대표적 기업인 등과 면담
- 12월 18일 | 미국 국방부 핵무기 관리 T/F의 보고서, 북한·인도·파키스탄이 핵무기들과 미사일 운반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기술
- 12월 18일 | 제63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 2009년

- 1월 1일 | 북한,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 발표
- 1월 1일 | 미국의 소리(VOA) 방송, 극동방송 AM(1188kHz)을 통해 매일 22:30~24:00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대북방송 시작
- 1월 2일 | 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에서 대화하고 동반자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올 것을 촉구
- 1월 2일 | 북한 노동신문, 미국의 핵 선제공격 전략과 이중적 핵정책이 국제적인 핵문제의 근원이라고 비난
- 1월 8일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1월 8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1월 13일 | 북한 외무성, 북·미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미국의 핵위협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
- 1월 13일 | 외교통상부, 외무성 대변인 담화(1월 13일)에 대한 당국자 논평 발표
- 북한측은 존재하지도 않는 한국내 미국의 핵 무기 반입, 배비 및 철수 경위를 확인하는 검증절차를 마련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상황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임.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한반도 전역에 대한 검증”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완전히 제거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받고있는 의혹을 해소하고 평화적 핵 이용을 위한 국제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우리와 동등한 자격을 획득한 연후에나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 순서임. 우리나라는 NPT 당사국으로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전면안전조치 협정 체결 및 추가의정서 가입을 통해, 모든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IAEA는 2008년 6월 우리나라에 대한 ‘포괄적 결론(Broader Conclusion)’ 승인을 통해 우리의 평화적 핵 활동의 투명성을 공식 인정한 바 있음.
  - 우리는 북한이 9.19 공동성명에 따라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를 바라며, 비핵화 2단계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궁극적인 핵 포기를 위한 협의를 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함.
- 1월 14일 | 미국 라이스 국무부 장관, 워싱턴 포스트지와 인터뷰에서 북한에 공개되지 않은 무기 급HEU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
- 1월 15일 | 미국 대북 지원식량 7차분 ‘옥수수과 콩 혼합물’과 식용유 등 4,940통 선적 완료
- 1월 15~19일 | 북핵 실사단, 영변 핵시설 원자로용 미사용 연료봉 처리문제 협의위해 방북
- 1월 17일 |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1월 2일)을 공공연한 대결선언이라고

## 비난

- 강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와 북한이 제시한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고수할 것이라고 주장

- 1월 17일 | 북한 외무성,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와 핵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며 미국의 핵위협이 남아있는 한 관계정상화가 이뤄져도 핵보유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1월 20일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  
- 터프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겠다는 북한 비핵화정책을 공식 천명
- 1월 30일 | 북한 조평통, 남북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 등을 무효화하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서해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발표
- 1월 30일 | 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남북간 합의사항 무효화 조치에 대한 유감 표명 논평 발표  
- 남북간 합의가 일방의 주장에 따라 폐기되는 것이 아님을 지적, 북한이 대화와 협력에 나올 것을 촉구, 최고지도자 비난 중단 촉구
- 2월 2일 |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의 근원적인 청산이 없는 한 100년이 가도 핵무기를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불변의 입장이라고 주장  
- 한반도의 비핵화가 북한의 핵 폐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한반도 핵 검증을 위해서는 남한도 검증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
- 2월 2일 | 북한 노동신문, 통일부 장관 내정과 관련하여 '비핵·개방·3000' 정책에 대해 비난
- 2월 3일 | 국내·외 언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보도
- 2월 3일 | 미국 정부, 미사일 및 관련 기술 거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활동 개입에 대해 북한의 3개 회사에 대해 제재조치 부과  
- 북한의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모공(Mokong)무역회사, 시노-키(Sino-Ki) 3개 회사와 중국의 2개 회사
- 2월 5일 | 통일부, 남북언론기사교류 첫 불허
- 2월 6일 | 미국 리언 파네타 CIA 국장 지명자, 북한이 지난 2006년 핵무기를 폭발시켰다며 북한의 핵무기 폭발실험을 공식 인정
- 2월 9일 | 이명박 대통령, 제8차 라디오 연설에서 남북관계에 있어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원칙이라고 강조
- 2월 10일 | 미국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준비를 계속한다면 우리(미국)는 이를 요격하기 위한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언급
- 2월 11일 | 미국 CNN 인터넷판, 미군 첩보위성에 북한 함경북도 무수단리 기지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한 준비로 보이는 추가 활동이 포착됐다고 보도
- 2월 12일 | 현인택 통일부장관 취임
- 2월 13일 | 미국 힐러리 국무부 장관,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에서 북한이 진정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

- 식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은 관계정상화, 평화조약체결, 에너지·경제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언급
- 2월 14일 | 북한 조평통, 남북언론기사고류 불허 비난
- 2월 15일 | 통일부 대변인,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촉구, 북한화폐의 무단반입 시 법적조치가 불가피함을 지적
- 2월 15일 | 일본 산케이 신문,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대포동 2호 발사 대비해 탄도 미사일 감시기 RC135S(코브라볼) 2대를 일본 오키나와의 가테나(嘉手納) 기지에 긴급 배치했다고 보도
- 2월 16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최근 남한, 미국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논란에 대해 모독과 도발이라고 주장
- 2월 18일 |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대변인, 전면대결태세 진입 재경고  
- 남한정부에 대해 북한군이 전면 대결태세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 2월 19-20일 | 북핵 6자 동북아 안보회의 개최(러시아)
- 2월 24일 |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평화적 우주이용 권리의 보편성을 재차 주장하면서 광명성 2호 발사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  
- 현재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2호로 쏘아 올리기 위한 준비 사업이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 위성발사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2월 24일 | 북한, 민주조선 논평을 통해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과 공동작계 수립 움직임 등을 대북 군사적 압박 강화라고 비난
- 2월 28일 | 북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군사실무책임자,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미군의 도발과 위반행위가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  
- 만약 미군이 북남관리구역에서 계속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우리 군대는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
- 3월 1일 | 이명박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남북간 합의사항 존중 및 조건 없는 남북대화를 제의
- 3월 2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이명박 대통령의 3.1 기념사에 대해 대결자세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
- 3월 2-27일 |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제네바)
- 3월 3일 |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 공감을 표하고, 북한이 국제인권법과 북한이 당사국인 인권조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면서 인권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
- 3월 5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비난하며 민간항공기의 항공안전 위협
- 3월 6일 | 통일부 대변인, 조평통 대변인 성명(3월 5일)에 대해 국제규범에 위배됨은 물론, 비인도적인 처사로서 민간 항공기에 대한 군사적 위협 즉각 철회 촉구

- 3월 9일 |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 관련 동서해 남북관리구역에 보다 엄격한 군사적 통제실시와 남북 군통신 차단 발표
- ① 우리 혁명무력은 나라의 자주권과 신성한 령토, 령해, 령공을 침범하는 적들의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그 즉시 무자비한 군사적 행동으로 대응할 것임.
  - ② 우리의 평화적 위성에 대한 요격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위력한 군사적 수단에 의한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대답하게 될 것임.
  - ③ 당면하여 북침전쟁연습이 진행되는 기간 개방되어있는 동,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다 엄격한 군사적 통제를 실시하게 될 것이며 북남군통신도 차단할 것임.
- 3월 9일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에서 북한 발언관련 논의
- ICAO 이사회는 ① 북한의 발표가 국제민간항공 및 여행객들의 안전과 보안에 중대한 위협이며, ② 북한은 동 발표를 철회하고 ICAO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③ 이사회의장이 북한의 조치에 대한 우려 및 북한의 발표 철회와 협약 준수를 촉구하는 서한을 즉시(immediately) 북한에 발송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
- 3월 9~20일 | 북한, 개성공단 육로통행 제한(3월 9일, 3월 13~15일, 3월 20일)
- 3월 11일 | 북한 평양발 해사국(Maritime Administration) 국장, '광명성 2호' 발사 관련 정보를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
- 3월 13일 | 외교통상부 대변인, ICAO/IMO에 대한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 통보 관련 북한의 행동은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대한 위반인 바, 이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는 성명 발표
- 3월 16일 |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C57 보고서(A/HRC/10/18)와 구두보고를 통해 북한인권상황을 식량 및 생필품에 대한 권리, 신변안전, 자유권, 망명 및 이주, 특정그룹의 5개 분야별로 평가하고, 북한정부 및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를 제시
- 3월 17일 | 북한, 개성공단 통행 승인
- 3월 18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국경선이나 경계선, 관할권 등이 존재하지 않는 무한대한 우주는 전 인류의 것이라며 우주이용의 정당성을 강조
- 3월 19일 | 정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 3월 20일 | 북한 동·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차단했던 남북간 군통신을 3월 21일 08:00부터 정상화 한다고 통보
- 3월 21일 | 군통신 및 육로통행 전면 허용
- 3월 21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북중 국경지역을 통해 불법 입국한 미국 국적의 여기자 2명을 억류하고 해당 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보도
- 3월 23일 | 조선신보, 인공지구위성 발사는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우람찬 총진군이 벌어지고 있는 속에서 우리나라의 인공지구위성 발사는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귀중한 한걸음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

- 3월 24일 | 북한 외무성, 평화적 로켓 발사에 대한 적대행위는 6자회담의 존재 기초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
  - 유엔안보리가 의장 성명이든 공보문이든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비난하는 문건 같은 것을 내는 것은 물론 상정 취급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대한 난폭한 적대행위임. 이런 적대행위로 인해 9.19 공동성명이 부정당하는 그 순간부터 6자회담은 없어지게 될 것임.
- 3월 26일 | 제10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 인권상황 결의안' 가결
- 3월 26-27일 | 외교·통일·국방부, 미사일 상황 대책반 가동, 24시간 운영
- 3월 27일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3월 28일 | 조선신보, 우주개발은 모든 나라에 인정된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국제법상 문제없다고 강조
- 3월 29일~4월 1일 | 2010 남아공 월드컵 예선 남북한전(4월 1일) 북한선수단, 방남
- 3월 30일 | 북한, 개성공단 우리 근로자 1인 억류
- 3월 30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남한 당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를 내세워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가한다면 이는 곧 북한에 대한 선고포고라고 주장
- 3월 31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미 기자들의 불법입국과 적대행위 혐의 확정 및 기소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
- 4월 1일 | 2010년 월드컵경기대회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북한과 경기
- 4월 2일 |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위성발사에 사소한 요격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지체 없이 정의의 보복타격을 가하겠다고 주장
- 4월 4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동해위성발사장에서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 로켓 은하 2호로 쏘아올리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보도
- 4월 4일 | 통일부, 개성공단 체류인원에 안전관리지침 시달
- 4월 5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국가우주개발전망계획에 따라 운반로켓 은하-2호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고 보도
- 4월 5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2010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한국과의 경기(4월 1일, 서울)에서 정대세 선수의 컨디션 이상, 심판의 판정 등을 반복대결 책동이라고 비난하고 사과를 요구
- 4월 5일 |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성명 발표
  - ① 북한이 2009년 4월 5일 11시 30분 15초 함북 무수단리 소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 확인,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과 긴밀한 정보 공조
  - ② 북한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 북한의 어떠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

- ③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대하여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크게 실망
- ④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은 북한에 대해 발사계획을 철회할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경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발사를 강행한데 대해 정부는 심각한 우려 표명
- ⑤ 우리 정부는 향후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강화함은 물론 유엔 및 관련국들과의 협의하에 이번 발사에 대한 구체적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음.

**4월 5일 |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관련 성명 발표**

- 대포동 2호 미사일의 발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어떤 행동도 명확히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명백한 위반임. 북한은 국제사회에 편입되는 길을 갖고 있음.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추구를 포기하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지 않는 한 편입되는 길을 찾지 못할 것임.

**4월 6일 | 이명박 대통령, 제12차 라디오 연설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언급**

- 세계 안보와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당국의 무모한 행동은 어떤 명분도 결코 가질 수 없음.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도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

**4월 6일 | 북한 노동신문, 장거리 로켓발사 관련 우리 정부의 북 유엔결의 위반, 제재, PSI 참가 관련 논의 등에 대해 강력히 비난**

**4월 9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개최**

**4월 13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관련 의장성명 채택**

**4월 14일 | 북한 외무성,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발표와 관련해 비난, 핵동력 공업구조를 완비하기 위하여 자체의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

-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에 근거하여 우리의 자주적인 우주 이용 권리를 계속 행사해 나갈 것임. 6자회담이 없어지고 비핵화 과정이 파탄됐어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가 선군의 위력으로 책임적으로 지켜나갈 것임.

**4월 14일 | 북한 노동신문,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하여 일본이 대북제재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등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로켓에 대한 요격 등 군사적 대응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 비난**

**4월 14일 | 외교통상부 대변인,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관련 유엔안보리의 조치에 대해 환영 지지 성명 발표**

**4월 16일 | 북한 조선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개성공업지구사업과 관련한 중대문제를 통지할 것이라고 밝히며, 우리측 당국과의 접촉을 제의하는 통지문 발송**

**4월 17일 | 북한 조평통 서기국, 한미 전투기 교환 지휘비행(4월 10일)을 공공연한 적대행위라고 비난**

**4월 18일 |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우리 정부의 북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제재 및 PSI 참여 방침에 대해 선전포고라고 강조하고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0km 안팎에 있다는 것**

을 잊지 말라고 위협

- 4월 18일 | 정부, PSI 전면참여 발표 연기
- 4월 20일 | 미국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제출
- 4월 20일 |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
- 4월 21일 | 조선신보, 4월 21~25일까지 <6자구도의 붕괴 1~4> 제하로 연속보도
- 4월 21일 | 남북 당국 간 접촉, 개성공단사업과 억류 근로자 문제 등에 대해 상호 입장 교환하였으나 각자의 입장만을 통보한 채 22분 만에 종료
- 4월 22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최근 남한정부가 전선동부 군사분계선 표식물을 옮겨다 끗는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위협
- 4월 22일 |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연설에서 “북한의 우발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준비중”이라고 언급하고, 공개 자료에서 “한·미는 작계 5027과 5029를 통해 즉응전투태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적시
- 4월 24일 |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정식명칭: 1718 위원회), 대북제재 조치 확정
  - 제재 대상 단체 지정: 조선광업무역회사(Korea Mining Development Trading Corporation), 단천상업은행(Tanchon Commercial Bank), 조선연봉총회사(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 미사일 관련 통제리스트 조정: 안보리결의 1718호상 미사일 관련 통제리스트(S/2006/815)는 2005년 MTCR 통제리스트(총 200여 품목)를 기준으로 작성된 바, 제재위원회는 신규 품목 추가 및 세분화 등 그간 개정된 MTCR 통제리스트를 반영하여 1718호상 리스트를 조정
- 4월 24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억류된 미국인 기자 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재판에 회부하기로 정식 결정하였음을 보도
- 4월 24일 | 미국 국무부, 북에 억류된 여기자 2명 석방 촉구
- 4월 25일 | 북한 외무성,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 시작 발표
  - 4월 14일부터 외무성 성명으로 선언한데 따라 우리 시험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폐연료봉들을 재처리하는 작업이 시작됨. 폐연료봉 재처리는 적대세력들의 가중된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임.
- 4월 29일 | 통일부, 2009 이산가족 초청행사 개최(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
- 4월 29일 | 북한 외무성, 유엔안보리의 사죄가 없으면 핵실험, ICBM 발사시험, 경수로 발전소 연료 자체 해결(우라늄 농축) 등 추가적 자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
- 4월 29일 | 외교통상부 대변인, 북한 외무성 성명(4월 29일)관련 앞으로 상황 악화에 따른 국제적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논평 발표
- 5월 1일 | 북한 조선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개성공단 억류직원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와 보수언론이 모략책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

- 유씨가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악의에 차서 헐뜯으면서 공화국의 지주권을 침해하고 해당 법에 저촉되는 엄중한 행위를 감행함. 해당 기관에서 현재 조사를 계속 심화하고 있음.

**5월 3일 | 북한 조평통, 사프 주한미군사령관의 핵 및 작전계획 관련 발언(4월 22일) 등을 비난하며, 전쟁도발책동을 중지하라고 주장**

**5월 7일 |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 대변인, 광명성 2호의 우주궤도 성과적 진입 강조 및 위성관측과 관계시험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

-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의 발사를 통해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초기에 계획한 종합적인 위성발사관제체계 수립과 위성궤도 진입, 위성에 의한 시험통신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함으로써 평화적 우주개발활동에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됐음.

**5월 8일 | 북적 중앙위 대변인, 통일부가 4월 주최한 2009 이산가족 초청 행사를 북남관계 악화의 책임을 모면해 보려는 광대극이라고 비난**

**5월 12일 | 북한 노동신문,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에 대해 사죄 촉구**

-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공화국은 이미 선언한 대로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포함한 추가적인 자위적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5월 12일 | 북한, 미국 이지스함의 남한 입항을 계기로 미국이 대북 군사적 압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미국의 이중적 핵정책으로 인해 세계적 핵군비 경쟁이 촉발된다고 주장**

**5월 14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중앙재판소가 억류된 미국기자들에 대한 재판을 6월 4일 실시 발표**

**5월 15일 | 북한 조선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단의 기존 법규와 계약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

-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와 계약 무효,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

**5월 15일 | 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5.15조치 수용 불가함을 표명하는 논평 발표**

**5월 18일 | 통일부 차관,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북한의 개성공단 기존 계약 및 법규무효 주장에 대해 입주기업들의 의견 청취**

**5월 23일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5월 25일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에게 조전 발송**

**5월 25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2차 핵실험 성공 보도**

- 이번 핵시험은 폭발력과 조종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안전하게 진행됨. 이번 핵시험의 성공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150일 전투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크게 고무하고 있음.

**5월 25일 | 청와대 대변인실,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한 성명 발표**

- 이는 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6자회담의 합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추가 핵실험을 금지한 UN안보리 결의 제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



임.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모든 관련 계획을 폐기하고 즉각 NPT 체제에 복귀하여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규범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함.

5월 26일 | 북한, 2차 핵실험 성공 경축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

5월 26일 | 외교통상부 대변인, PSI 승인 발표

-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26일자로 「확산방지구상」(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함. 단, 남북한 간에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임.

5월 26일 | 북한 노동신문, 개성공단사업의 원만한 추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으나, 남한이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

5월 26일 | 북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1발 발사

5월 27일 | 북한 조선인민군 관문점 대표부, 우리정부의 PSI 가입은 선전포고로서 우리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참여를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임. 이에 따라 우리 선박에 대한 단속, 검색행위를 포함하여 사소한 적대행위도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로 낙인하고 즉시적·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임.

② 우리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임. 정전협정이 구속력을 잃는다면 법적 견지에서 조선반도는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가며, 우리 혁명무력은 그에 따르는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임.

③ 당면하여 서해 우리의 해상군사분계선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 5개 섬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수역에서 행동하는 미군 및 남한 해군함선, 일반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임.

6월 1일 | 이명박 대통령, 16차 라디오 연설에서 2차 핵실험에 관해 언급

- 북한의 핵보유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임. 위험한 핵무기 경쟁을 유발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을 어렵게 만들 것임.

6월 6일 | 이명박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해 단호한 대처의지 표명

-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남북대화화 6자회담에 나와야 함.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화해와 협력의 마당으로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임.

6월 10일 | 북한 노동신문, 핵실험의 정당성 주장

6월 11일 |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제1차 실무회담

- 남측: ① 장기간 억류중인 근로자 문제 ② 출입·체류 제한 조치 철회 등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현안문제 ③ 최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입장 밝힘.

- 북측: 개성공단 특혜조치들을 재검토, 재협상을 요구

6월 13일 |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 채택

- 무기금수 대상을 핵과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와 중화기 등에서 거의 모든 무기로 확대하고, 금수대상 품목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도 기국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심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도 금지
- 금융제재도 기존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의 금융자산만 동결하던 것에서 인도주의적이거나 개발 목적 등을 제외한 금융지원을 하지 말도록 하는 등 북한의 무기 개발·거래 활동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내용들이 포함

**6월 13일 | 북한 외무성,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1874호 강력 반발, 우리늄농축 작업 착수,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봉쇄 시 군사적 대응 등 3개 대응조치 선언**

- ①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함. 현재 폐연료봉은 총량의 3 이상이 재처리 되었음.
- ② 우리늄 농축 작업에 착수함. 자체의 경수로 건설이 결정된 데 따라 핵연료 보장을 위한 우리늄 농축 기술 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시험단계에 들어섰음.
- ③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봉쇄를 시도하는 경우,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함. 제재에는 보복으로, 대결에는 전면 대결로 맞서 나가는 것이 북의 선군사상에 기초한 대응방식임.

**6월 13일 | 외교통상부 대변인, 북한 외무성 성명(6월 13일)에 대해 유감 표명 및 조속한 6자회담 복귀하여 진정한 의미의 비핵화를 이루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논평 발표**

**6월 19일 | 미국 재무부 대금융범죄법집행장, 미국 금융기관에 북한 불법 금융거래 경계 조치**

**6월 19일 |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제2차 실무회담 개최**

- 남측: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3대 원칙(규범 확립 원칙, 경제원리 추구 원칙, 미래지향적 발전 원칙) 제시하고 외국공단 남북합동시찰 제의
- 북측: 토지임대료 및 사용료, 임금, 세금 등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토지임대료 문제 우선 협의를 계속 주장

**6월 26일 | 미국 백악관, 북한 등에 대한 제재를 조율하기 위해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전부, 재무부 대표들로 구성된 부처간 협의체 구성**

**6월 30일 | 미국 국무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연계되거나 이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무역회사 남촌강(NCG)에 대해 자산동결 및 거래금지 등의 제재조치**

**7월 2일 |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제3차 실무회담 개최**

-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오전 회담만 개최되고 오후 회담은 개최되지 못하였음.

**7월 4일 | 북한,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 발사(17:20, 18:00, 19:50, 21:20 경)**

**7월 4일 | 외교통상부 대변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7월 4일)에 대해 논평**

-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제1695호, 제1718호 및 제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임. 정부는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안보리 결의 제1874호의 전면적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관련국들과 대응 조치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임.

- 7월 9일 | 북한 조선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남한의 불성실한 태도로 개성공업지구 실무접촉이 결렬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
- 7월 16일 |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추가 제재 리스트 지정
  - 단체: 남천강무역회사, Hong Kong Electronics, 조선혁신무역회사, 원자력총국, 조선단군무역회사
  - 개인: 윤호진(남천강무역회사 간부), 리제선(원자력총국장), 황석화(원자력총국 간부), 리홍섭(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 한유로(조선용약산총무역회사(조선용봉총회사) 간부)
  - 품목: EDM(Electrical Discharge Machining, 방전가공)에 사용되는 특수 그라파이트(탄소화합물), 파라-아라미드 섬유(케블러 및 유사품)로 제작된 필라멘트 및 테이프
  - \* 상기 품목은 미사일 제조에 활용 가능
- 7월 16일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 예고
- 7월 18일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이집트에서 개최된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은 영원히 종말을 고하였다고 주장
- 7월 27일 | 북한 외무성, 6자회담 거부 및 북·미 대화 촉구 담화 발표
- 7월 28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7월 29일 | 중국, 단둥서 북한으로 반입 시도하던 약70kg의 마나둠 적발·압수
- 7월 30일 | 800 연안호, NLL월선으로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
- 7월 30일 | 미국 재무부, 북한의 조선혁신무역회사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거래와 관련해 추가 대북 금융제재 대상기업으로 지정
- 7월 31일 | 북한 동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남한 어선 연안호에 대하여 북측 해당기관에서 조사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선원들과 연안호 문제가 처리될 것이라고 통보
- 7월 31일 | 정부, 연안호의 북방한계선 월선은 항로착오로 인한 것이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조속한 송환 요구
- 8월 4~5일 |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 억류된 여기자 석방
- 8월 8일 | 북한 노동신문,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나간다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과 전쟁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
- 8월 10일 | 북한 외무성, 남한의 나로호 발사와 관련하여 유엔안보리 상정 여부를 주시할 것이라고 언급
- 8월 10~17일 |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방북
  - 김정일 위원장 면담, 현대그룹-조선아태 공동보도문 발표(8월 17일)
- 8월 11일 | 미국 재무부, 북한의 조선광선은행(KKBC)을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활동과 관련한 금융제재 대상기업 추가 지정
- 8월 13일 |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개성공단 억류근로자), 136일간 북한 억류 후 귀환

- 8월 15일 | 이명박 대통령,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 천명**
- 북한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
  -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설치하고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 추진
  -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남북간 재래식 무기의 감축도 논의
  - 남북이 재래식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면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는 남북이 함께 경제를 일으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임.
  - 우리 정부는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
- 8월 16일 |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한미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합동군사연습에 대해 침략전쟁행위라고 비난**
-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면 우리도 핵으로 맞설 것이며 미사일로 위협하면 우리도 미사일로 맞설 것이고 제재를 행동으로 옮기고 대결을 극한점으로 끌고 간다면 우리는 우리 식의 무자비한 보복으로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응할 것임.
- 8월 18일 |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
- 8월 19일 | 북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김정일 위원장 명의의 조전 발송**
- 8월 19-23일 | 북한 아태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특사 조문단 서울 방문**
- 현인택 통일부 장관·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면담(8월 22일), 북 특사 조의방문단·이명박 대통령 면담(8월 23일)
- 8월 20일 | 북한, 남한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관련해 취한 중대 조치(12.1조치)의 해제, 철도 화물열차 운행재개, 개성 남북경협협회사무소 재가동 통보**
- 8월 21일 | 한승수 국무총리, 나포된 800연안호 송환 재촉구**
- 8월 21일 | 통일부 대변인, 북한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일방적으로 취해 온 우리측 인원에 대한 통행·체류 제한 관련조치들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시키기로 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논평 발표**
- 8월 21일 | 조선신보, NASA 홈페이지의 표기를 근거로 미국이 광명성 2호를 인공위성으로 인정했다고 주장**
- 8월 25일 | 북적 위원장, 남한의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의 수용 표명,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 재개 공식 통보**
- 8월 25일 | 나로호 발사, 궤도 진입 실패**
- 8월 26-28일 | 남북적십자회담, 이산가족 상봉행사(9월 26일~10월 1일) 진행, 상봉규모는 각각 100명씩, 이산가족문제 등 인도주의 문제를 계속 협의 합의**  
 〈합의서〉  
 ①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오는 9월 26일~10월 1일까지 진행

- ㄱ. 상봉규모는 남과 북이 각각 100명씩
  - ㄴ. 생사확인회의서는 9월 1일에 쌍방이 각기 200명씩, 회보서는 9월 15일, 최종명단 100명은 9월 17일에 교환
  - ㄷ. 상봉 장소는 단체상봉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개별상봉은 금강산호텔
  - ㄹ. 상봉의 원만한 보장을 위해 선발대사업을 상봉시작 5일전부터 진행
- ② 이산가족 문제 등 적십자 인도주의 문제를 남북관계 발전의 견지에서 계속 협의

8월 29일 | '800 연안호' 선박 및 선원(4명) 송환

9월 3일 | 개성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9월 7일부터 정상운영하기로 합의

- 9월 3일 양측 사무소명단을 교환, 9월 7일부터 남한 13명, 북한 6명이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근무 예정

9월 4일 | 유엔주재 북한 상임 대표, 유엔 안보리 의장에 편지 발송 보도

- 폐연료봉의 재처리가 마감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있으며 추출된 플루토늄이 무기화 되고 있음. 우리측 농축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결속단계에 들어섰음.

9월 6일 | 북한의 임진강 상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 민간인 6명 실종

9월 7일 | 국토해양부 장관, 임진강 수해관련 유감 표명 및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 요청과 재발방지 강력 촉구

9월 7일 | 북한, 임진강 상류 방류는 강 상류의 수위 상승 때문에 긴급 방류했다고 공식 해명, 방류 전 사전 조치 취할 것이라고 언급

9월 8일 | 통일부 대변인, 임진강 수해 관련 무단 방류에 의해 우리 국민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데 대하여, 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

9월 8일 | 미국 국무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혐의로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원자력총국과 조선단군무역회사를 자산동결 대상 기업으로 지정

9월 9~15일 | 제22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9월 16일 | 개성공단관리위원회·조선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 월 임금 5%인상 합의

9월 16~18일 | 중국 다이빙귀 국무위원, 후진타오 주석 특사로 방북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 또는 양자 회담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언급

9월 17일 | 북한 노동신문, 경제·사회·문화·인도주의 등 제반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 실현해 나갈 것을 강조하며, 특히 금강산·개성공단 관광 재개 및 개성공업지구 활성화 등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9월 18일 |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적이 핵공격을 해올 경우 핵기지를 선제타격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이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평상시라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전시 핵공격 움직임이 있을 때에는 한미간 타격 협의를 거쳐 이뤄질

## 것"이라고 답변

- 9월 21일 | 이명박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 CFR·KS·AS 공동주최 오찬연설에서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제안
-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즉 Grand Bargain을 추진해야 함.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함으로써 미국 및 국제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며, 이는 북한 스스로를 살리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임.
- 9월 21일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100일 전투 개시 공식 발표
- 대중동원형 경제증산 운동인 150일 전투의 마감과 연말까지 새로운 100일 전투의 진행을 발표
- 9월 22일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존속기간이 10월 4일로 만료됨에 따라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지구지원단'을 신설
- 9월 23일 | 개성공단관리위원회·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 <개성공단내 탁아소 건립과 관련한 합의서> 체결
- 9월 23일 | 이명박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나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즉 그랜드 바겐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관련국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
- 9월 25일 | 유엔안보리, 북·이란 겨냥 핵물질 회수 결의문(결의문 1887호) 채택
- 민간 핵기술을 제공받은 뒤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한 국가에 대해 핵물질을 회수 할 수 있는 권리를 담은 결의문
- 9월 26일~ | 남북 이산가족 상봉
- 10월 1일 | - 남한 554명, 북한 334명
- 9월 28일 | 북한 박길연 외무상,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핵무기의 관리와 사용, 전파(확산) 방지와 핵군축 문제에서 책임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언급
- 9월 30일 | 북한 외무성, 유엔안보리 결의문 1887호 채택에 대해 전면배격하며 거기에 조금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9월 30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제안에 대해 비핵·개방·3000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며 거부
- 미국의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 철회가 없이 우리의 핵포기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허황한 꿈
- 10월 1일 | 북한 주민 11명, 어선을 이용 동해를 통해 귀순
- 10월 2,4일 | 북적 중앙위원회·동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선박을 타고 귀순한 북한주민 11명 전원 송환 요구
- 10월 4일 | 한적, 이들이 모두 귀순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과 북한이 이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위한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입장 회신
- 10월 4~6일 | 중국 원자바오 총리, 방북,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

- 김정일 위원장, 미·북 양자회담의 결과에 따라 다자회담 참가용의 표명
- 10월 12일 | 정부,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10월 14일) 및 적십자 실무접촉(10월 16일) 제의
- 10월 12일 | 북한, 동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 5발 발사
  - 발사 장소: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이남에서 강원도 원산시 사이의 동해안 일대
- 10월 13일 | 통일부 대변인, 이번에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은 과거에도 수차례 시험 발사된 것과 동일한 미사일이며, 14일과 16일로 예정돼 있는 남북대화에 지장이 없다고 언급
- 10월 13일 | 북한, 우리 정부의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 및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에 동의
- 10월 14일 | 임진강 수해방지 남북실무회담
  - 남측: 임진강을 비롯한 남북공유하천에서의 피해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3원칙(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의 원칙, 상호협력의 원칙, 신뢰의 원칙)을 제시,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통보체계 관련 댐명칭, 방류량, 방류이유 등을 담은 양식을 전달하고 방류시 사전통보를 요구
  - 북측: 방류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유감표명, 향후 방류시 남측에 통보하겠다고 밝힘.
- 10월 15일 | 북한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우리 함선의 북한 영해 침범 주장 및 위협
- 10월 16일 |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대북지원 규모 관련 이견으로 성과 없이 종료
- 10월 19일 | 정부, 군 통신선로 개선공사 자재장비 지원용의 통보
- 10월 20일 | 북한, 군 통신선로 개선공사 자재장비 수락
- 10월 26일 | 한적 총재, 옥수수 1만 톤 대북지원계획 통보
- 10월 28일 | 군 통신선로 개선공사 자재장비 전달 개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연결공사 완료(12월 22일), 시험통화(12월 24~25일), 정식가동(12월 26일)
- 11월 2일 | 북한 외무성, 미국에 대해 북·미 간 양자회담에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
- 11월 3일 |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 개최
- 11월 3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8월말까지 8,000대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성과적으로 완료하였다고 발표
  - 폐연료봉 8,000개의 재처리를 지난 8월 말 끝냈으며 여기서 추출된 플루토늄을 핵무기화하는 데서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있다고 주장
- 11월 4일 |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북핵문제 해결하는 방안은 패키지 딜 언급
- 11월 5일 | 미국-EU정상 공동선언 발표
  - 북한의 9.19공동성명 의무 준수 및 비가역적이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조치의 조속한 이행 촉구
- 11월 9일 |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지지 표명
- 11월 10일 | 북한 경비정 대청도 인근 NLL침범, 퇴거 조치(대청해전)  
<사건일지>

10:33 대한민국백령도 레이더기지, 월래도에서 출항한 북한 경비정이 남하하는 것을 포착  
 11:20 북한 경비정인 '등산곶 383호'(150t), 북방한계선 향해 남하  
 11:22 해군 제2함대사령부, 국제공동상선통신망을 통해 경고통신 2회, 답변 없자 인근 쫓개 어장을 순찰 중이던 고속정 4척과 전남함 1척 긴급 파견  
 11:27 북한 경비정, 북방한계선 침범  
 11:28 해군 제2함대사령부, 재차 2회 경고 통신을 보냈으나 무시  
 11:32 북한 경비정, 경고 통신 무시하며 2.2km 남하  
 11:36 해군 경고사격  
 11:37 북한 경비정, 우리 해군을 향해 50여발 조준사격  
 11:37 - 11:39 대한민국, 비상사태를 발령 후 즉각 대응사격  
 11:40 북한 경비정, 함포와 기관포 파괴로 교전이 불가능해지자 반과(추정)된 상태에서 퇴각, 우리 해군 사격중지 명령

**11월 10일 | 북한 군 최고사령부, 보도를 통해 서해상 교전을 무장도발 사건이라고 주장, 우리 측 사죄와 재발방지 조치 요구**

**11월 12일 | 일본 NHK,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10월 17~18일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을 만나 남북 정상회담 논의했다고 보도**

**11월 13일 | 북한 남북장령급군사회담 단장, 대청해전관련 남한에 사태의 진상과 군대의 원칙적 입장을 밝힌 4개항의 통지문 발송**

- ① 남측은 이번 사건을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긴데 대하여 민족앞에 사죄,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
- ② 남측의 북방한계선 고수입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시대의 요구와 민족의 지향에 맞게 분별을 가려 처신하여야 할 것
- ③ 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있음. 지금 이 시각부터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
- ④ 남측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파괴하고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

**11월 13일 | 미국 오바마 대통령, 연합뉴스 서면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포괄적인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완전한 의견일치를 했다고 언급**

- 6자회담이 북핵문제 평화적인 해결 위한 최선의 틀
- 2005년 9·19 공동성명은 우리가 성취해야할 분명한 목표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이의 운반수단 획득 시도는 불안정 요인으로, 평화와 안보에 위협
-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제거를 향해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은 안전과 존중을 향한 평화적인 길을 걸을 것

**11월 14일 | 조선신보, 전력증산을 위해 경수로 발전소 건설이 준비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는 주체적 핵동력공업의 완비 차원에서 이행되고 있다고 주장**



- 11월 17일 | 북한, 11월 17일 노동신문 보도를 시작으로 하여 비핵·개방·3000 등을 소재로 통일부 및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있다’며 연일 비난
- 11월 17일 | 조선신보, 미·북 양자회담에서는 적대관계 전환 등 미·북간에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 11월 19일 |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 이명박 대통령: 우리 두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본인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으로 제시한 일괄타결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음.
  - 오바마 대통령: 양국 공동 접근 방식에 대해 완전히 의견이 일치함. 만일 북한이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통해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완전히 통합될 수 있게 도와줄 것임.
- 11월 19일 | 유엔 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가결(찬성 96, 반대 19, 기권 65)
- 11월 20일 | 북한 외무성, 유엔 인권결의의 전면 배격을 주장
- 11월 23일 | 북한, 대청해전을 거론하며 한반도에서 무장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북간에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
- 11월 23일 | 통일부, 북한이 최근 현대를 통한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대화를 제의한 것에 대해 북한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 당국간 회담 채널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회담 제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11월 26일 | 북한 아태위 대변인, 금강산 관광 중단 관련 비난
- 남조선 당국이 민간업자와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통일부를 비롯한 남측 당국의 속셈은 금강산 관광을 하지 않겠다는 것임.
- 11월 27일 |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남북정상회담 장소문제와 관련해 ‘융통성’을 표명
- 정상회담은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국군포로, 남북자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 만날 수 있음. 장소는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음.
- 12월 4일 | 조선신보, 북한의 화폐발행, 교환사업 실시 보도
- 〈화폐발행, 교환사업 내용〉
- 11월 30일~12월 6일 진행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새돈을 발행함에 대하여”)와 집행을 위한 내각 결정을 통해 실시
  - 새 화폐는 종이돈 9종(5000원, 2000원, 1000원, 500원, 2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주화 5종(1원, 50전, 10전, 5전, 1지)
  - 교환비율은 현금의 경우 100:1, 은행에 저금한 몫의 경우 10:1
  - 화폐 교환 후 전반적인 외화거래는 2002년 7월 1일 수준으로 조정, 공장·기업소에서 받는

생활비(임금)는 종전의 금액수준을 새 화폐로 보장

- 모든 상점, 식당 등에서 외화거래는 없어지고, 외국인이나 해외동포들이 가는 상점, 식당에서도 화폐교환소에서 외화를 북한돈으로 교환하여 사용

- 12월 8일 | 이명박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북한 내 신종플루 발생관련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 없는 치료제 지원방안 마련 지시
- 12월 8~10일 | 미국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북, 외무성 미국담당부상과 회담
- 12월 9일 | 북한 보건성, 신의주와 평양에서 신종플루 확진환자 9명 발생 사실 발표
- 12월 10일 | 미국 보스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의 필요성과 역할, 9·19 공동성명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통의 이해에 도달했다고 언급
- 12월 11일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북관련 6자회담 재개 필요성과 9.19 공동성명 이행 중요성 등 공동인식이 이룩됐다고 평가
- 12월 11일 | 태국 정부, 방콕 돈므아 공항에서 북한제 무기(대공미사일, 지대공미사일 발사대, 대전차 로켓 포, 탄약 등)를 적재한 그루지야 국적 수송기 억류
- 12월 11일 | 국제핵물질위원회(IPFM), '2009 국제핵물질보고서'에서 북한이 2006년 10월에 실시한 1차 핵 실험에서 플루토늄을 2kg 사용했으며, 2차 핵실험에는 플루토늄 5kg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
- 12월 12~22일 | 남북 해외공단 합동시찰(중국 칭다오, 쑤저우, 선전 공단 및 베트남 엔퐁 공단)
- 12월 16일 | 북한, 인민문화궁전에서 2008년 인구 일제조사 결과 발표회 진행, 조사 결과 2008년 10월 1일까지 북한의 인구수는 2,400여 만 명
- 12월 16일 | 미국 국무부, 보즈워스 특별대표 방북결과 브리핑에서 6자회담 재개시 비핵화와 연관된 모든 단계, 새로운 평화체제로의 진전, 평화협정, 에너지 및 경제적 지원 공급, 관계 정상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표명
- 평화협정 협상의 당사자는 4개국(한·북·미·중)임을 6자회담 참여국 모두가 동의함. 비핵화 논의 재개 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의제임.
- 12월 18일 | 정부, 북한에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타미플루 40만명 분, 리렌자 10만명 분 등)
- 12월 18일 |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찬성 99개국, 반대 20개국, 기권 63개국)
- 12월 18일 | 미국 재무부, 미국 은행이 거래를 주의할 북한 은행 리스트에 금강은행 추가
- 미국 금융기관들에 주의를 요구한 북한은행은 총 18개
- 12월 21일 | 북한 해군사령부 대변인,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북한 수역을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하고, 동 사격구역 내 모든 어선·함선의 자체 안전대책 강구 주문
- 12월 21일 | 서해 덕적도 서남방 16마일 해상 표류 중이던 북한선원 7명, 우리측 경비함에 구조
- 12월 22일 | 정부, 7명 전원이 북한으로 귀환을 희망함에 따라 월선한 북한주민 7명 모두 송환 통보

- 12월 28일 |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 파카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 박사는 북한이 2002년까지 3천기 또는 그 이상의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소규모 우라늄을 농축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
- 12월 29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북·중 국경지역을 통해 불법입국(12월 24일)한 미국인 1명 억류, 해당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보도
- 12월 30일 | 중국 중앙TV, 북한 2010년 1월 1일을 기해 외화 사용을 금지한다는 북한 인민보안성의 포고문을 인용 보도

**2010년대**

## 2010년

- 1월 1일 | 북한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신년 공동사설, “당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 발표
- 1월 4일 | 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6자회담의 조속한 복귀 촉구, 남북간 상시대 화기구 마련 언급
- 1월 11일 | 북한 외무성, 정전협정 당사국에 대해 평화협정 회담 개최 제의  
- 조미사이에 신뢰를 조성하자면 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부 터 체결, 위임에 따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함.
- 1월 12일 | 외교부 대변인, 6자회담 재개와 북한 비핵화 과정 진전 시 평화체제 협상 가능 입장 재확인, 북한에 6자회담 조속 복귀와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 이행 촉구
- 1월 12일 | 북한인권단체, 임진각에서 북한체제 비판 전단 살포
- 1월 12일 | 미국 벤 로즈 백악관 안보담당 부 보좌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관련된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해야만 관계개선을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고립을 감수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이라고 언급
- 1월 13일 | 북한 남북군사실무회담 단장, 남측 당국이 반공화국 뼈리를 살포하였다고 비난, 강력 항의
- 1월 14일 | 남북 개성공단 공동시찰 평가회의(1월 19일, 경협협회사무소) 개최 합의
- 1월 14일 | 북한 아태평화위,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1월 26~27일) 제의
- 1월 14일 | 일본 요리우리신문, 북한이 지난해 11월 말 화폐개혁을 단행한 이후 외국인에 대해서도 환전 시 개인 정보를 포함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등 북한 내 외화 사용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고 보도
- 1월 15일 | 북적 위원장, 옥수수 1만 톤 지원(2009년 10월 26일 제의) 수용 입장 통보
- 1월 15일 |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부흥계획 보도 관련 “비상통치계획-부흥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 전복을 기도한 남조선 당국의 단독 반공화국 체제전복 계획”이라며 보복 위협  
- 계획작성을 주도하고 뒷받침하여온 남조선당국자들의 본거지를 송두리째 날려보내기 위한 거족적인 보복성전이 개시될 것임.
- 1월 15일 | 통일부 대변인, 확인되지 않은 일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우리측에 대해 위협적 언동을 하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
- 1월 18일 | 북한 외무성, 제재 해제 전 6자회담 복귀 불가 입장 표명  
- 우리가 제재 모자를 쓴 채로 6자회담에 나간다면 그 회담은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평등한 회담이 아니라 피고와 판사의 회담으로 되고 맘.

- 1월 21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남북 해외공단 합동시찰 평가회의(1월 19~21일) 진행 보도, 남측은 개성 공업지구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풀어야 할 노임인상을 비롯한 중요현안 문제에 대한 협의를 회피하면서 실무접촉에 인위적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
- 1월 22일 | 북한 군사실무회담 단장, 개성공단 통행·통관·통신 등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군사실무회담 개최 제안
- 1월 23일 | 니혼게이자이 신문,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6자회담의 복귀의 전제로 미국·중국과의 평화협정체결, 안전보장에 관한 미국과의 양자 협의,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보도
- 1월 24일 |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 최근 김태영 국방장관의 북한의 핵 공격시 선제타격 발언에 대해 선전 포고로 간주, 단호한 군사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
- 1월 25일 | 북한, 1월 25일~3월 29일까지 서해 백령도와 대청도 인근 해상 2곳에 항행금지구역 선포
- 1월 25일 | 북한 김양건 노동당 중앙위 부장, 개성·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군사실무회담(2월 8일, 개성) 개최 제의
- 1월 25일 | 정부, 북한의 군사실무회담 개최 제의에 대해 2월 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 결과를 본 후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효율적, 적절한 시점에 회담 개최일자를 통보할 것이라고 언급
- 1월 27일 | 북한 군 총참모부, 27일 오전 서해에서 연례적 포실탄 사격훈련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훈련이 계속 될 것이라고 주장
- 1월 27~29일 | 북한, 서해 NLL 북쪽지역에서 포사격 실시
- 1월 27일 | 남측 장성급군사회담 수석대표, 북한측 도발행위에 단호 대처입장 표명 및 모든 사태 책임이 북한 측에 있음을 경고
- 1월 27일 | 북한군-유엔사, 실무급 접촉 개최, 북한내 미군 유해발굴에 대해 논의
- 1월 28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1월 25일 북중 국경지역으로 불법입국한 미국인 1명 억류 보도
- 1월 28일 | 미국 오바마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핵무기 포기 촉구  
- 핵무기를 갖기 위해 계속해서 국제적 합의를 위반하는 국가들을 다루기 위한 외교적 노력 들은 더욱 강화될 것임.
- 1월 30일 | 이명박 대통령, BBC와의 인터뷰에서 '연내라도 김정일을 만날 수 있다'고 시사
- 1월 31일 | 북한, 서해상 4곳과 동해상 1곳에 항행금지구역 추가설정(2월 2일까지)
- 2월 1일 | 개성공단 제4차 실무회담 개최  
- 향후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3통문제 협의 후 숙소와 임금문제 등을 당국간 실무회담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
- 2월 1일 | 미국 탄도미사일방어계획 검토보고서, 북한이 조만간 대포동 2호 미사일 실험에 성공하고 10년 내에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탄도미사일방어(BMD)체제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
- 2월 2일 |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2월 8일 개성 경협사무소에서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실무회담 개최하는 우리측 제의 수용 입장 통보
- 2월 2일 | 이명박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확고한 원칙 아래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원칙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사될 수 없다”고 강조
- 2월 3일 | 북한, 서해 NLL 근해 해상사격구역 설정 통보(5~8일)
- 2월 4일 | 북한, 동·서해상 5곳 해상사격구역 설정 통보(6~8일)
- 2월 4일 | 미국 국방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포함한 3가지 유형(한반도, 중국, 이란)의 비상사태 시나리오에 대비 이미 군병력 운용계획 실험을 실시
- 2월 5일 | 북한, 불법입국한 재미교포 대북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 석방 결정
- 2월 6~9일 | 중국 왕자루이 당 대외연락부장, 평양 방문, 김정일 면담(2월 8일)
  - 북중관계, 평화협정 체결, 제재 해제, 6자회담 재개 등 신뢰를 조성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문제들을 논의
- 2월 8일 |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 개최
  - 남측 관광재개를 위해 3대 조건 우선 해결 강력 표명, 북한측이 호응하지 않음에 따라 회담을 종료
- 2월 8일 | 북한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 남조선 당국이 반공화국체제전복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난, 전면적인 강력조치 등 위협
  - 남측의 체제전복 시도 사례로, 서해 북방한계선 고수를 노리는 남조선 군부호전과들의 모험적인 군사적 준동, 전연(전방)과 해안, 국경지역을 통해 감행하고 있는 분별없는 대북내 부교란 작전, 반공화국 뼈라 살포 행위가 전방에서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온갖 정탐 역량과 수단이 투입된 체제전복책동이 우리나라 주변으로부터 내륙지대 깊이까지 뻗치고 있는 것 등을 꼽음.
- 2월 9일 | 일본 요미우리 신문, 북한 화폐개혁 이후 중국 위안화 대비 신화폐의 가치가 10분의 1로 추락했다고 보도
- 2월 9~12일 | 파스코 유엔 사무총장 대북특사 방북,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면담(2월 11일)
- 2월 9~13일 |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 방중
- 2월 11일 |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안’ 의결
- 2월 12일 | 남측 장성급군사회담 수석대표, 북한에 3통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실무회담 개최 제의
- 2월 12일 | 방북 유엔 대북특사, 기자회견에서 북한측은 대북제재 등의 조건 때문에 6자회담에 돌아올 준비가 안됐다고 말했다고 전언
- 2월 13일 | 북한 외무성,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방중해 북·중관계와 평화협정 체결, 제재 해제, 6자회담

- 재개 등 신뢰를 조성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문제들을 심도있게 토의했다고 언급
- 2월 16일 | 탈북자단체, 대북전단(2만부) 살포
- 2월 18일 | 조선신보, 북한은 “북남관계 개선과 화해협력의 상징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특별히 중시하고 있으며 있는 조치는 다했다”고 주장하면서 남측의 성실한 자세를 촉구
- 2월 19일 | 북한, 서해 NLL 인근 해상사격구역 선포(20~22일)
- 2월 22일 | 북한 장령급군사회담 단장, 3통관련 군사실무회담 개최(3월 2일, 개성 경제협력협회사무소) 수정 제의
- 2월 23일 | 통일부, 작년 12월 18일 신종플루 치료제 50만명 분 전달에 이어 손소독제 20만 리터를 개성 육로를 통해 북한측에 전달
- 2월 25일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키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선제공격을 위한 선행작전, 핵전쟁연습이라고 비난, 군사연습 감행시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
- 2월 26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해당기관에서 불법 입국한 남조선 주민 4명 단속·조사 중이라고 보도
- 2월 27일 | 대한적십자사, 의약품(14억원 상당) 대북 지원
- 2월 28일 | 남북, 개성공단 3통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접촉 개최(3월 2일, 개성) 합의
- 3월 1일 |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이 행동으로 국제사회에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  
- 북한이 남한을 경제협력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한반도 평화 등 남북간 여러 현안을 진지한 대화로 풀어야 함. 우리가 제안한 그랜드 바겐도 논의해야 할 것임.
- 3월 2일 | 개성공단 3통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접촉 개최  
- 남측: 3통문제 해결의 기본방향과 통행·통관·통신으로 분리하여 회담을 운영하자고 제의  
- 북측: 이에 동의하면서도 6.15/10.4선언 이행, 대북 적대 및 대결조장 행위 중지 등을 주장하면서 개성공단과 동해지구 3통 관련 설비·자재·장비를 우선 제공해 줄 것을 요청
- 3월 2일 | 교도통신,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으로 인해 통화 공급과 재화 분배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통지문을 해외 주재 북한 공관에 보냈다고 보도
- 3월 4일 | 북한 아태평화위 대변인, 남측 당국이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방해 시 관련 계약·합의 파기 위협  
- 3월부터 개성지구 관광, 4월부터는 금강산 관광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이며, 관광을 위해 우리측 지역에 들어오는 남녘 동포들의 편의와 신변안정은 완벽히 보장될 것임. 관광이 재개되지 못해 초래되는 문제의 책임은 남측 당국이 지게 될 것임.
- 3월 7일 | 북한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 연습을 비난하며 비핵화 중단과 남북·북미 간 군사대화 단절 선언
- 3월 8일 |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대해 조선 인민군 육·해·공군 부대들은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려는 명령 하달



- 3월 9일 | 북한 외무성 대변인, 한미합동군사연습을 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이 계속 되는 한 핵 억제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
- 3월 10일 | 한적, 북한에 탈지분유(20톤) 전달(경의선 봉동역)
- 3월 15일 | NHK, 북한이 지난해 화폐개혁의 후속조치로 금지했던 외화 교환을 최근 다시 허용했다고 보도
- 3월 16일 | 비릿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 당국이 지난해 장마당을 폐쇄하고 텃밭 등을 이용한 소규모 영농을 금지한 이후 식량 사정이 더 악화되고 있다며 이를 다시 허용할 것을 촉구
- 3월 17일 | 북한 노동신문, 남측 당국이 금강산관광 재개 거부 시 부득불 결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
- 3월 18일 | 북한 아태위, 3월 25일부터 금강산관광지구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 실시 통보
  -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몰수 및 금강산 입경제한조치 등을 취할 것임. 또한 남측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4월부터는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서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해외 및 국내관광이 시작될 것임.
- 3월 18일 | 통일부, 금강산 관광관련 북한 통보는 남북사업자간 합의와 남북당국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언급
  - 금강산과 개성관광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변안전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재개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 3월 19일 |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금강산 관광길이 열리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주장
- 3월 22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해당기관에서 불법입국한 미국인(아이잘론 말리 곱즈, 남, 1979년 6월 19일 생, 보스턴 거주)에 대하여 재판에 기소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
- 3월 24일 | 미국 매튜 버로우 국가정보위원회 분석국장,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할 역량은 있지만,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미 행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언급
- 3월 25~31일 | 북한, 금강산관광지구 부동산 조사 실시
- 3월 25일 | UN 인권이사회,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
- 3월 25일 |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 한미의 급변사태 대처 공조방안 모색 보도에 대해 반공화국 체제전복 책동이라고 비난
- 3월 26일 | 천안함 피격사건 발발, 북 어뢰공격으로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46명 전사)
- 3월 27일 | 이명박 대통령,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모든 가능성 염두에 두고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언급
- 3월 29일 | 북한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6월 26일 60주년 기념 정부의 DMZ 견학 및 취재허용에 대해 미국측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비무장지대의 안전질서를 파괴하려는 책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 주장

- 3월 30일 | **침몰 천안함 탐색작업 중 UDT 한주호 준위 순직**
- 3월 31일 | **통일부 대변인, 북한 금강산 부동산 조사 관련 성명**  
- 북한의 위협과 일방적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산권 침해시 사업자간·당국간 합의 및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점을 지적,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경고, 당국간 대화를 통해 관광재개 문제 협의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
- 4월 1일 | **국방부, 천안함 TOP 화면 전체분량 공개**
- 4월 2일 | **천안함 실종자 수색 참여 '극양 98호' 침몰**
- 4월 4일 | **국방부,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서 선체 인양작업으로 전환**
- 4월 5일 | **북한 관문점 대표부,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는 미군 유해 송환문제를 미국이 "정치적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며 향후 "미군 유해들의 유실책임은 인도주의 문제를 정치화한 미국의 책임"이라고 주장**
- 4월 7일 | **민, 군 합동조사단, 천안함 사고 발생시각 등 조사결과 발표**
- 4월 7일 | **천안함 생존 장병들 기자회견**
- 4월 7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억류 미국인 곰즈 8년 노동교화형과 7천만원(북한 원화 기준)의 벌금형을 언도했다고 보도**
- 4월 8일 |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남측당국 금강산지구내 부동산동결 및 관리인원 추방 등 선포**  
- 남측 당국 자산 금강산 면회소, 소방대, 관광공사 소유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동결 및 관리인원 추방, 현대와의 관광합의와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국내 및 해외 금강산관광 시작, 남측 당국 대결의 길로 나가는 경우 개성공업지구사업도 전면 재검토 할 것임.
- 4월 8일 | **통일부, 북한 명승지개발지도국 대변인 성명에 대한 정부입장 발표**  
- 북한의 일방조치는 사업자간 계약 및 당국간 합의위반 및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 즉각 철회 촉구, 당국간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모든 책임이 북한측에 있다는 점을 경고
- 4월 9일 |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현대아산에게 전통문 통해 정부 소유 면회소와 소방서, 관광공사 소유 문화회관 등 5개 동결대상 부동산 소유자·관계자 입회하에 4월 13일 조치 실행 통보**
- 4월 9일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와 관련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억제력으로 각종 핵무기를 필요한 만큼 늘리고 현대화 할 것이라고 언급**
- 4월 10일 | **북한 남북장성급회담 단장, 심리모략 중지 대책 강구 및 공식 통고 요구, '결정적 조치' 위협, 1차적으로 남측 인원의 남북관리구역 통행의 군사적 보장 합의 이행 문제 공식 검토 주장**
- 4월 12일 | **남측 장성급회담 수석대표, 북한측 주장의 부당성 지적 및 유감표명, 향후 발생문제에 대해**

대북경고

- 4월 13일 | 북한, 이산가족면회소 등 5개 시설 동결, 면회소 관리인원 추방
- 4월 15일 | 천안함 침몰 20일만에 인양 시신 36구 수습
- 4월 16일 | 합동조사단, 천안함 외부폭발가능성 공식 발표
- 4월 17일 | 북한, 천안함 침몰 사고가 자신들과 무관하며 북한이 관련됐다는 주장은 날조라는 공식입장 표명
- 4월 19일 | 이명박 대통령,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 라디오 연설에서 희생장병들에 대한 추모와 남은 가족들을 위로
- 4월 19-20일 | 북한 국방위 정책국장 박림수 소장 등 8명,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기반시설 실태조사
- 4월 21일 |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현대아산에 '국방위 정책국이 4월 22일 금강산 부동산 조사결과 검토를 위해 방문할 것'이라고 구두 통지
- 4월 21일 | 북한 외무성, 필요한 만큼 핵무기를 생산할 것이지만 핵군비경쟁에 참가하거나 핵무기를 필요이상으로 과잉생산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핵보유국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국제적인 핵군축 노력에 참가할 것이라고 언급
- 4월 22일 | 국회, 대북 쌀 지원 촉구 결의안 의결 보류
- 4월 22-23일 | 북한 국방위 정책국장 박림수 소장 등 10명, 금강산 민간소유 부동산 조사
- 4월 23일 |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이미 동결된 금강산면회소와 소방대, 한국관광공사 소유인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5개 대상 몰수하고 나머지 민간부동산은 동결한다고 선언  
- 이는 장기간 관광중단으로 북한측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
- 4월 23일 | 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조치는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 부당한 조치로 향후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경고
- 4월 24일 | 천안함 함수 침몰 29일만에 인양  
- 천안함 수색작업 종료, 실종 6명 미 발견
- 4월 25일 | 합동조사단, 천안함 사건 1차 조사 결과(비접촉 폭발) 발표
- 4월 27-30일 | 북한 금강산관광지구 부동산 동결 및 몰수 조치 실행, 최소 인원(16명) 외 관리인원 5월 3일까지 추방 통보
- 4월 28일 |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 구성안 처리
- 4월 30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불법입국 혐의로 억류된 미국인 곰즈씨가 미국에 있는 가족과 통화했다고 보도
- 5월 1일 |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현대아산 직원은 현재 조사 심화중임을 언급
- 5월 2일 | 금강산 인원 철수 개시, 중국인 직원 귀환

- 5월 3일 | 금강산 인원 철수 완료, 한국인 직원 귀환
- 5월 3~7일 | 김정일 방중 (다렌, 천진, 베이징, 심양)  
- 북·중 정상회담(5월 5일)
- 5월 4일 | 이명박 대통령,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안보태세 전면 재점검 강조
- 5월 12일 | 북한 노동신문, 과학자들이 핵융합 반응을 성공시키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했다고 보도  
- 열핵반응장치가 설게 제작되고 핵융합반응과 관련한 기초연구가 끝났으며 열핵기술을 우리 힘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과학 기술 역량이 마련
- 5월 15일 | 한·중·일 외교장관 경주서 회동, 천안함 논의
- 5월 15일 | 북한 함정, 천안함 사태 이후 첫 NLL 침범, 경고사격에 부상
- 5월 15일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이스라엘 외무장관리가 북을 시리아, 이란과 함께 새로운 악의축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비난하며 “북은 그 어떤 대량 살육무기전파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
- 5월 16일 | 북한 남북장성급회담 단장, 남측의 대북전단(빠라) 살포가 계속되면 동·서해 육로 통행 차단 이상의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
- 5월 17일 | 북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천안함 침몰사건과 북한이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남조선 괴뢰패당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
- 5월 19일 | 미국 백악관 로버트 기버스 대변인, 한국정부의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입장, 이번 사건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강력 규탄
- 5월 20일 | 미국 하원, 대북규탄 결의안 발의
- 5월 20일 |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 천안함은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으로부터 발사된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로 인해 침몰
- 5월 20일 |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의도적인 모략극·날조극이라고 비난  
- 물증확인을 위한 국방위 검열단 파견, 응징과 보복행위에 대해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로 대응, 보복타격, 강력한 물리적 타격 등 주장
- 5월 20일 | 북한, 군사전문통해 국방위 검열단을 현지로 파견하겠다고 통보
- 5월 21일 | 유엔사, 천안함 특별조사팀 구성,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착수
- 5월 21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전쟁국면으로 간주, 북남관계 모든 문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  
- 대응·보복시 북남관계 전면 폐쇄, 북남불가침 합의 파기, 북남협력사업 전면 철폐 등 무자비한 징벌로 강력 대응 주장
- 5월 21일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천안함 사건의 무관함을 거듭 주장하면서 미국의 지지 입장을 비난  
- 이번 사건의 조작과 그 조사결과라는 것은 철두철미 미국의 승인과 비호, 조작에 의한 자

작극임. 오바마 행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걸어 비핵화 과정까지 전면적으로 차단시켰다고 비난

5월 21일 | **장성급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북한측의 군사적 도발행위는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전협정 관리체제에서 다뤄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

5월 22일 | **북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북남사이 문제로 군사정전위를 끌어들이 명분이 없으며 기본합의서 10조와 부속합의서 8조에 따라 국방위 검열단을 수용할 것을 촉구**

5월 24일 | **이명박 대통령, 천안함 사건 관련 대통령 담화문 발표**  
 - 국제합동조사단의 확실한 물증으로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음.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치해 나가겠음.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음. 남북간 교역과 교류 중단,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임.  
 -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할 것임.  
 - 정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 군의 기강의 재확립,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음. 한미동맹을 통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 한층 공고히 할 것임.

5월 24일 | **통일·외교·국방 3부장관 공동 기자회견, 정부의 대북조치 발표**  
 - 통일부: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전면 중단, △우리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  
 - 외교부: △국제사회의 대북규탄 여론 조성, △유엔안보리 회부 등 안보리차원 조치 협의 및 기존 대북제재결의 엄격 이행  
 - 국방부: △대북심리전 재개, △한미 연합 對 잠수함훈련 실시, △PSI 강화

5월 24일 | **미국 백악관 대변인, 천안함 사태 관련 북한에 대해 즉각적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호전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성명 발표**  
 -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공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해 대북 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을 군 사령관들에게 지시, 북한의 도발과 국제법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기관들에게 기존의 대북 정책을 재검토할 것도 지시

5월 24일 |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날조극이라고 비난, 검열안 수용 촉구**

5월 24일 | **북한 전선중부지구사령관, 대북심리전 구호 즉각 제거·가담자 처벌 요구 및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직접 조준 격과 사격 개시 주장**

5월 25일 | **정부, '북한=주적' 개념 6년만에 부활 확정**

5월 25일 | **미국 하원, 천안함 관련 대북 규탄 결의안 의결**

5월 25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남측 당국과 모든 관계 단절 등 8개항의 1단계 실행조치 선언**

- ① 남 당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
- ② 현정부 임기기간 일체 당국사이의 대화와 접촉 중단

- ③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들의 사업을 완전중지
- ④ 남북사이의 모든 통신연계 단절
- ⑤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동결, 철폐하고 남측 관계자들을 즉시 전원 추방
- ⑥ 괴뢰패당의 대북심리전에 대한 북 전면적인 반격을 개시
- ⑦ 남 선박, 항공기들의 북측 영해, 영공 통과를 전면 금지
- ⑧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법에 따라 처리

**5월 25일 | 북한 남북군사실무회담 단장, 5월 14~24일까지 남측 해군함정 수습여척 북측 영해 연속 침범 주장**

- 북남관계를 전쟁국면으로 몰아가려는 고의적인 도발행위라고 비난하면서 해상침범행위 지속 시 실제적 군사조치 실행할 것임.

**5월 26일 | 북한 적십자 중앙위,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 사업 완전 중지 및 통신연계 단절 통보**

**5월 26일 | 북한 남북 장성급회담 단장, 남측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할 경우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에서 남측 인원, 차량에 대한 전면 차단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위협**

- 확성기가 설치되는 족족 조준 격파사격으로 없애버리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

**5월 27일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3부 장관의 대북 제재조치 발표(5월 24일)와 관련 7개항의 중대통고문 통보**

- ① 남북협력교류와 군사적 보장조치 전면 철회
- ② 남 군부가 재개하려는 반공화국 심리전책동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대응
- ③ 서해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쌍방향의 완전히 무효화
- ④ 서해 북측 해상분계선 침범시 즉시 물리적 타격
- ⑤ 북 영해, 영공, 영토를 통한 남 함선, 비행기 및 기타 기동수단들의 통과를 전면 불허
- ⑥ 남 당국자 북한 출입 엄금
- ⑦ 검열단 차단행동이 계속되는 한 날조극, 모략극 정체 끝까지 규명

**5월 28일 | 북한 박림수 국방위원회 정책국장, 북한에는 언어급 잠수함, 상어급 잠수정이 없고 130t짜리 잠수정도 없다고 주장**

- 남측은 날조된 조사결과라는 것만 일방적으로 고집하면서 검열단의 사건 현지조사를 거부하고 있음.

**5월 28일 | 북한 외무성,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 미국에 대해 비난**

- 만약 유엔 안보리가 또 다시 미국의 거짓말에 놀아나 천안호 사건의 조사 결과라는 것을 상정 논의만 해도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는데 도용되는 것으로 간주하겠음.

**5월 29~30일 |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 공동발표문 채택**

- 일본과 중국 정상은 한국과 국제합동조사단에 의해 수행된 공동조사와 각국의 반응을 중시. 3국 정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동 문제를 적정하

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음.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6자회담 과정을 통해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음.

- 5월 30일 | 북한, 평양서 10만 군중대회 열어 우리 측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를 다시 모략극이라고 주장하고 남한 정부를 비난
- 6월 1일 | 북한, 남측 주민번호 도용해 천안함 날조 유포
- 6월 1일 | 이명박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보통 안보라고 하면 대결과 대치상태만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통일을 염두에 둔 안보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고 지시
- 6월 4일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천안함 사태가 유엔 안보리 회부되는 경우 “미국과 남조선이 피해 당사자인 우리가 제기한 국방위 검열단을 받아들여 ‘조사결과’를 확인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6월 4일 | 이명박 대통령, ‘천안함 피격사건 유엔 안보리 회부’ 발표
- 6월 6일 | 이명박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을 평화와 번영의 길로 이끌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언급
- 6월 7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회의 개최
- 6월 9일 | 북한 신선호 유엔주재 대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장 앞 서한에서 천안함 사건 논의에 앞서 북한 국방위 검열단의 조사결과 확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 6월 11일 | 북한 국방위 대변인, 안보리 회부를 반복 실천행동 진입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자비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 검열단 수용 재차 요구
- 6월 12일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대북 확성기 설치에 대해 선전포고라고 주장, 심리전 수단 청산을 위한 전면적 군사적 타격행동 진입 선언, 서울 불바다까지 내다 본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 주장
- 6월 14일 | 통일부 대변인, 6.15 선언 10년 정부입장 발표
  - 북한은 천안함 무력공격을 하고도, 이를 부인하고 '서울 불바다' 등 위협과 비난을 하는 등 10년 전과 변하지 않았음을 지적,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해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핵실험, 대화중단, 통행차단, 천안함 사태 등 각종 도발을 통해 6.15공동선언 정신을 훼손한 것은 북한이라는 점을 강조, 6.15 공동선언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통해 이행 문제를 협의해 나간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 북한에 대해 진정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와 관련자 처벌 등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핵개발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
- 6월 15일 | 정부, 유엔 안보리에서 천안함 조사 결과 브리핑
- 6월 15일 | 북한 주유엔 대사, 천안함 조사결과 반박하는 브리핑 개최
- 6월 17일 | 유럽의회, 대북 결의안 채택
- 6월 21일 | 이명박 대통령, 제9차 아시아 안보대화 기조연설에서 한국정부가 제안한 그랜드 바겐 구상은

국제사회의 확실한 안전보장 및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을 폐기시키고자 하는 일  
괄타결 방안이라고 강조

- 6월 23일 | 국회, 천안함 피격사건 대북규탄결의안 가결
- 6월 24일 | 북한, 교화중인 미국인 곰즈씨에게 전시법 적용, 추가조치 검토 언급
- 6월 26일 | 북한, 9월 상순 조선노동당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위한 당 대표자회 소집 결정(당 중앙위 정치  
국 결정서) 보도  
- 북한이 노동당 대표자회를 개최하는 것은 1958년과 1966년에 이어 세 번째로, 44년 만에  
개최
- 6월 27일 | 북한 장성급군회담 대표, 천안함 사건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논의하지는 유엔군사령부의 제  
안을 거부, 북한의 검열단 파견과 남북고위급군사회담 실무접촉 개최 주장
- 6월 27일 | G8 정상회의, 천안함 대북 비난성명 발표
- 6월 28일 | 북한 외무성 대변인, 1969년 북한의 미국 정찰기 격추사건 당시 미정부가 북한에 대한 전술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거론, “우리의 핵억제력을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더욱 강  
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
- 7월 1일 | 북한 조평통,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여 연  
기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위험천만한 현 사태를 더욱 극단으로 몰아가며 우리와의 전면전쟁  
도 불사하는 극히 엄중한 도발”이라고 주장
- 7월 5일 | 북한 노동신문, 우리 군이 오는 10월 PSI 해상차단 및 검색훈련 실시 예정에 대해 “군사적 충  
돌과 북침전쟁 도발을 서슴지 않으려는 흥계의 발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고 위협
- 7월 7일 | 북한 조평통 대변인, 천안함 사건 관련 안보리에서 규탄 문건 채택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  
리의 국가적 존엄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침해로 간주하고 국권수호를 위한 정의의  
결사대전을 불사할 것”이라고 위협
- 7월 9일 | 북한, 교화중인 미국인 곰즈가 자살 기도 보도
- 7월 9일 | 천안함 사태 관련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 7월 9일 | 북한 북·미 장성급회담 단장, 천안함 사건에 대해 해명 기회를 주겠다는 유엔사령부의 북·미  
장성급 회담 관련, 북한이 대령급 사전 접촉 제의
- 7월 10일 | 북한 외무성, 유엔안보리의 규탄성명에 관련 6자회담을 통한 대응 강조  
- 우리는 의장성명이 조선반도의 현안문제들을 적절한 통로들을 통한 직접대화와 협상을 재  
개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장려한다고 한데 유의함. 우리는 평등한 6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하게 기울여 나갈 것임.
- 7월 15일 | 북한·유엔사, 천안함 대령급 실무회담, 장성급 회담 개최
- 7월 18일 | 북한, 비가 많이 내리게 되던 저녁 8시 이후 임진강 상류 언제(댐)의 방류 가능성 통보 (7월  
22일, 오전 6시부터 방류 예정 통보)



- 7월 21일 | 한·미 외교, 국방장관회담(2+2) 개최
- 7월 22일 | 북한, 임진강 강류 댐 방류계획 추가 통보
- 7월 23일 | 북·유엔사, 천안함 2차 대령급 실무회담 개최
  - 북한 국방위원회 검열단 20~30명 구성, 조사기간은 쌍방 합의에 따라 3~5일 또는 더 길게 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을 제시
  - 검열단의 현지조사에는 현장답사와 물증 분석, 증언청취, 자료수집과 요해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최대한으로 동원, 미군측은 국방위원회 검열단이 요구하는 모든 사건관련 자료들과 대상, 물증들을 제공, 국방위원회 검열단 왕래는 북한측 차량과 관문점을 통한 육로 이용, 국방위원회 검열단원들에 대해 안내와 편의제공, 신변안전보장 등 현지조사와 관련한 모든 실무적 보장은 미군측이 책임
- 7월 24일 |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한미연합훈련 관련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핵억제력에 기초한 보복성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위협
- 7월 24일 | 북한 외무성, 한·미 외교, 국방장관회담(2+2) 개최시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발표에 대해 “강력한 물리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대응 할 것”이라고 위협
- 7월 26일 | 조선신보, 오바마 정권은 출범년도에 “북한의 2차 핵시험을 촉발시켰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천안함 피격사건의 “강은 양면술 외교로 정세를 오판하면 북한은 같은 일(핵실험)을 되풀이 할 수 있다”고 시사
- 7월 27일 | 북한 조평통,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과 관련 “적들의 억제력 과시에 선군으로 다져진 더 크고, 더 무서운 억제력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
- 7월 30일 | 북·유엔사 대령급 실무회담 개최
- 8월 2일 | 미국 국무부, 북한의 미국 달러 위폐제작 연루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를 국제사회와 협력해 근절하겠다고 언급
- 8월 3일 | 북한 전선서부지구사령부, 백령도·대청도·연평도 인근 수역의 해상훈련을 직접적 군사도발이라고 비난,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진압할 것이라고 위협
- 8월 5일 | 북한 조평통, 한국군의 서해 해상기동훈련에 대해 계획적인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타격 위협
- 8월 5일 | 개성공단관리위원회-북한 조선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2010년도 개성공업지구 북한 근로자 월 최저임금 5.5% 인상 합의(57.881달러 → 60.775달러)
  - 북한 근로자 기업별 공급문제 사전협의 정례화, 근로자 배치문제 관련 기업 권한 강화
- 8월 8일 | 북한, 대승호 나포
- 8월 9일 | 북한, 서해 해안포 117발 발사(백령도, 연평도 인근 해상)
- 8월 10일 | 장성급군사회담 수석대표, 서해 해안포 사격은 정전협정 및 남북간 불가침 합의 위반임을 지적,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고 중단을 촉구

- 8월 11일 | 한적, 대승호와 선원 7명(한국인4명, 중국인3명)에 대해 조속한 송환 요청  
- 국제법과 관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선박과 선원들이 조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우리측 어선이 나포된 경위도 설명해 줄 것을 요청
- 8월 15일 | 이명박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민족공동체 등 한반도통일과정 제시, 통일세 등 현실적 방안 논의 제안, 한반도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와의 호혜적 파트너십 구축 강조
- 8월 15일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을지 프리덤 가디언(UGF) 연습에 대해 무자비한 대응의 철우를 내릴 것이라고 위협
- 8월 17일 | 북한 미그기 전투기, 중 라오닝서 추락
- 8월 17일 | 북한 조평통,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통일세 구상에 대해 전면적인 체제대결 선언이라고 비난
- 8월 19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대승호 나포 사실 뒤늦게 보도
- 8월 20일 | 한적 총재, 북한측이 조사중이라고 밝힌 대승호와 선원들을 국제법과 관례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조속히 송환해 줄것을 촉구
- 8월 22일 | 통일부, 통일세 추진단 구성
- 8월 25-27일 | 미국 카터 전 대통령 평양 방문, 곰즈 동반 귀환
- 8월 26-30일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3개월 만에 전격 중국 방문,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8월 27일)
- 8월 26일 | 한적 총재, 신의주 지역 등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들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긴급 구호물자 지원의사를 전달
- 8월 27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신의주 지역 수해피해 보도
- 8월 30일 | 미국,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13551호) 발효  
- 대북제재 리스트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천안함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북한의 무기수출업체 청송연합, 김영철 정찰총국장 추가
- 9월 4일 | 북적 위원장, 쌀 및 중장비, 시멘트 등 지원 요청
- 9월 6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대승호 송환(9월 7일) 결정 보도
- 9월 7일 | 대승호 선원 및 선박 귀환
- 9월 10일 | 북적,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제의
- 9월 10일 | 이명박 대통령, 러시아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사죄를 하고 다시 정상적 관계로 가야 한다고 본다면서 남북이 평화적 관계를 맺고 평화가 유지돼 경제 협력이 활발해지면 남북 관계가 정상화 될 것이라고 언급
- 9월 13일 | 국방부,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보고서 발간 공개

- 9월 15일 | 북한, 남북군사실무회담(9월 24일) 개최, 전단살포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을 협의하  
자고 제의
- 9월 15일 | 북한 조평통,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보고서 발간에 대해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
- 9월 17일 |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개최(개성)  
- 상봉일정 및 사전준비절차에 의견접근, 9월 24일 차기 실무접촉 개최 합의
- 9월 19일 | 국방부,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정(9월 30일) 제의
- 9월 24일 |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개최(개성)  
-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문제를 협의. 상봉장소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당국자 접촉을  
10월 1일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9월 28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김정은·김경희 등에게 ‘대장’ 계급 부여 보도  
- 대외적인 공식 발표에 후계자 김정은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처음
- 9월 28일 | 북한, 조선노동당 당대표자회 개최  
-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추대,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노동당 지도기관 선거 등 토의
- 9월 29일 | 북한 박길연 외무성 부상,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 핵 항공모함이 우리 바다 주변을 항  
해하는 한, 우리의 핵 역지력은 결코 포기될 수 없으며,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
- 9월 30일 |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관문점 평화의 집)  
- 남측: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측 소행임이 밝혀졌다는 것 지적. 이에 대한 시인 및 사과, 책  
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등 책임있는 조치 촉구. 남측 해역에 대한 북측의 군사적 위협,  
적대적 도발행위, 남측 당국에 대한 비방·중상 행위 중단 요구  
- 북측: 남측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중단 요구. 남측 해군함정들이 북측 해상경비계선 침범 주  
장.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 남측 조사 결과를 인정 하지 않고 검열단 파견 수용하라는  
기존 주장 반복
- 10월 1일 | 제3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개최(개성), 이산가족 상봉 합의  
① 이산가족 상봉 진행(10월 30일~11월 5일, 금강산)  
②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포함한 인도주의 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해 남북적십자 회담  
진행(10월 26~27일, 개성)
- 10월 2일 |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적십자실무접촉에서 협의된데 따라 금강산지구 부동산 문제, 관  
광재개문제와 관련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10월 15일, 개성) 제의
- 10월 5일 | 북한 김정은, 첫 공개활동으로 김정일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10215군부대 예술선전대의 공연  
관람
- 10월 10일 | 황장엽, 서울 강남구 안전가옥에서 타계
- 10월 10일 | 북한, 당창건 65주년 열병식 생중계, 사상처음
- 10월 12일 | 통일부,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제의에 대해 적십자회담 및 이산가족상봉 행사 일정 등을

- 고려하여 금강산관광문제 논의를 위한 당국간 회담 관련 입장 추후 통보하겠다는 의사 전달
- 10월 14일 |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금강산관광 실무회담 조속 개최 촉구
- 10월 15일 | 북한 남북장성급회담 단장, 대북 심리전 방송·전단살포를 중지시키지 않으면 물리적 타격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
- 10월 18일 | 남북항공관제 통신망 복원  
- 10월 16일 북한 통신망 복원 통보(5월 25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 따라 5월 26일 통신망 단절)
- 10월 19일 | 북한 남북군사회담 대변인,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10월 22일) 제의
- 10월 20일 | 한적, 북한에 수해지원 물자 전달 계획 통보  
- 10월 25일 1항차 쌀, 김라면 출항, 단동에서 신의주로 전달
- 10월 26-27일 | 남북적십자회담 개최(개성)  
- 11월 25일 적십자회담 개최 합의, 북측 쌀 50만톤과 비료 30만톤 지원 요구
- 10월 28일 | 국방부, 북한의 군사실무회담 제의 관련 북측의 입장과 태도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실무회담 개최는 의미가 없다는 내용의 전통문 북측에 발송
- 10월 29일 | 북한, 우리 군 GP에 총격
- 10월 30~ | 이산가족 상봉행사
- 11월 2일 | - 북측 상봉신청자 97명, 남측 가족 436명
- 11월 3~5일 | 이산가족 2차 상봉행사  
- 남측 상봉신청자 93명, 북측 가족 203명
- 11월 9~13일 |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방북
- 11월 11일 |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 및 천안함 사태 대응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유지해 온 긴밀한 공조체제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언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재확인, 북한이 진정한 핵포기 의지를 조속히 행동을 보임으로써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 11월 11일 |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논의를 위한 당국간회담 개최(11월 19일) 제의
- 11월 13일 |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 방북 뒤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을 방문해 경수로 건설 사실을 전해 들었으며 발전 용량은 25~30MW”라며 “북한이 경수로 건설을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완공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언급
- 11월 16일 |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방북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영변 지역에 100MW규모의 실험용 경수로 건설을 추진중이라고 언급

- 11월 17일 | 통일부,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의 제의(11월 11일)에 대해 회담을 하려면 금강산지구내 부동산 동결·물수 조치부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 전달
- 11월 18일 |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적십자 회담에서 금강산관광 재개관련 협의 제안
- 11월 18일 | 미국 재무부, 북한 노동당 39호실이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북한의 조선대성은행, 조선대성무역총회사 제재대상 기관으로 추가 지정
- 11월 20일 |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방문시 영변에서 수백개의 정교한 원심분리기가 설치돼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언급
- 11월 23일 |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
- 11월 23일 |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관한 정부성명 발표  
- 연평도 포격행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무력 도발, 우리군은 북한의 추가도발시에는 단호히 응징할 것임. 북한 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11월 23일 | 통일부, 남북 적십자회담(11월 25일 예정) 무기한 연기 결정
- 11월 23일 | 장성급군사회담 단장, 북한에게 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토록 촉구
- 11월 23일 | 미국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 북한 연평도 포격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이번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북한은 적대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 발표
- 11월 23일 | 북한 최고사령부, 연평도 해안포 공격에 대해 남측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는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였고 앞으로도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타격을 계속 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 11월 24일 | 국방부, 연평도 포격은 UN헌장, 정전협정,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하여 계획적·의도적으로 자행한 불법적 공격행위이며,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 거주지역까지 무차별적으로 포사격을 가한 비인도적 만행이라고 비난
- 11월 24일 | 한적, 북 수해 지원문자 전달 전면 중단, 남북적십자회담(11월 25일) 무기한 연기 통보
- 11월 24일 | 유엔사, 판문점 장성급군사회담 개최 제의
- 11월 24일 | 북적 중앙위원회, 남측이 남북적십자회담 무기한 연기를 선포한 조건에서 더 이상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 연연할 생각이 없고, 인도주의 사업을 파탄시킨데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난
- 11월 24일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이번 사건은 정전협정 체결 후인 1953년 8월 30일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가 일방적으로 그어 놓은 북방한계선 때문에 초래된 위험천만한 사태발전”이라고 주장  
-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는 지금 초인적인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우리 군대의 포문은 열려있는 상태임.
- 11월 25일 | 국회, 북 무력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
- 11월 25일 | 중국, 한·미 서해군사훈련에 우려 표시
- 11월 26일 | 북한 조평통, “우리 영해에 직접 불질을 한 괴뢰군 포대를 정확히 명중 타격해 응당한 징벌을

- 가했다”고 연평도 공격 사흘만에 처음 시인  
- 또 다시 우리의 존엄과 주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보다 무서운 불벼락을 안길 것임.
- 11월 27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연평도 포격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보도  
- 그 책임은 이번 도발을 준비하면서 포진지 주변과 군사시설 안에 민간인들을 배치하여 인간방패를 형성한 적들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있음.
- 11월 28일~12월 1일 | 서해 한·미 연합훈련,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 참가
- 11월 28일 | 북한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무분별한 전쟁연습 책동으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지역 평화와 안전을 파괴한 데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비난
- 11월 28일 | 중국 외교부, 중대발표를 통해 12월 초순 북핵 6자회담 개최 제안
- 11월 28일 | 이명박 대통령, 중국 다이빙게 국무위원과의 면담에서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할 때 아니더라는 입장 언급
- 11월 29일 | 이명박 대통령,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  
- 민간인을 향해 군사 공격을 하는 것은 전시에든 엄격히 금지되는 반인륜적 범죄,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 서해5도는 어떠한 도발에도 철통같이 지킬 것.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국방개혁은 계획대로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
- 12월 5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남한의 해상사격 훈련 재개 계획 및 연내 연합훈련 추가 실시를 위한 한·미간 협의 등을 거론하면서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겠는가 하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위협 보도
- 12월 6~12일 | 군, 대청도 등 29곳서 사격훈련
- 12월 7일 | 이명박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서해 5도를 군사적으로 요새화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
- 12월 9일 | 북한 조평통,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에 의해 면밀히 꾸며지고 의도적으로 감행된 또 하나의 엄중한 반공화국 군사 도발”이라고 주장
- 12월 14일 | 북한 조평통,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북에 대한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
- 12월 16일 | 미국 국무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5대 의무 이행 사항을 제시  
- 북한의 도발행위 중지, 역내 긴장완화, 남북관계 개선,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따른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 이행,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국제적 의무 준수
- 12월 16일 | 북한 외무성, 6자회담을 포함한 모든 대화 제안을 지지하지만 결코 대화를 구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

- 12월 17일 | 북한 남북장성급회담 단장, 연평도 포사격을 강행하는 경우 예상할 수 없는 자위적 타격이 가해질 것이고, 더 심각한 상황을 재현시키게 될 것이라고 위협
- 12월 18일 |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북한이 지난달 공개한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공식 조사를 결정
- 12월 19일 | 북한 박덕훈 유엔 주재 차석대사,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열린 안정보장이사회 긴급회의와 관련 “외교적으로 해결이 안되면 우리 군이 나설 것”이라고 언급
- 12월 19일 | 유엔 안보리, 한반도 긴급회의 합의 도출 무산
- 12월 20일 | 우리 군, 연평도 해상 사격 훈련 실시
- 12월 20일 | 북한 인민군 총사령부,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 사격 훈련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유치한 불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
- 12월 21일 | 유엔, 대북 인권침해 비난 결의안 채택(찬성 106, 반대 21, 기권 55)
- 12월 23일 | 북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19주년을 기념한 중앙보고대회에서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터지면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
- 12월 26일 | 북·중 나진항 개발 협약, 중국 부두 50년 사용
- 12월 27일 | 국방부, <2010 국방백서>에서 ‘북한정권·북한군’을 <적>으로 명기
- 12월 29일 | 니혼게이자이 신문, 미국 페리 전 국방장관이 북한이 연간 우라늄 핵무기 1개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
- 12월 29일 | 산케이 신문,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 대포동 2호를 이란에 제공하기 위해 비밀 교섭을 하고 있다고 보도
- 12월 29일 | 북한 우리민족끼리, 2010 국방백서에서 북한정권·북한군을 적으로 표현 한것에 대해 “동족인 우리에게 대한 공공연한 대결선동이며 북침전쟁도발의 전주곡”이라고 비난
- 12월 31일 | 신의주-단둥 잇는 신압록강대교 착공식

# 2011년

- 1월 1일 | 북한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신년 공동사설, “올해에 다시 한번 정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 발표
- 1월 3일 | 이명박 대통령, 신년 특별연설 ‘확고한 안보와 한반도 평화’에서 북한 도발시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 도발 억지를 위한 확고한 억지력 확보, 북핵 관련 관련국들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역할 필요,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는 경우 대화 및 획기적 경제협력 의지 언급
- 1월 5일 | 북한,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에서 남측 당국을 포함하여 정당, 단체들과의 대화와 협상을 가질 것을 제의
- ① 남한 당국을 포함한 정당, 단체들과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가질 것을 정중히 제의함.
  - ② 우리와 손잡고 나가려는 사람이라면 과거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음.
  - ③ 대화와 협상·접촉에서 긴장완화와 평화, 화해와 단합, 협력사업을 포함하여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갈 것임.
  - ④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서로의 비방증상을 중지하며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 제기
- 1월 8일 | 북한 조평통, 연합성명의 제안을 실현하여 당국간 회담을 조속 개최할 것을 제의
- ① 남북 당국 사이의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 공식 제의
  - ② 적십자·금강산관광재개·개성공업지구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재개
    - 회담대표단은 종전대로 하거나 새로 구성할 수도 있으며, 장소는 개성으로 하고 날씨는 1월말 또는 2월 상순으로 할 것 제의
  - ③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로서 폐쇄된 관문점 남북 적십자통로를 다시 열며 개성공업지구의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동결을 해제할 것임.
- 1월 10일 | 북한 아태 평화위·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경협사무소 북측소장, 통일부·대한적십자사 총재·경협사무소 남측소장에게 회담 제의
- 남북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1월 27일, 개성), 남북적십자회담(2월 1일, 문산) 개최 제의 및 1월 12일부터 관문점 적십자연락통로 재개, 경협사무소 정상 운영 통지
- 1월 10일 | 통일부, 북한의 대화제의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
- 북한 당국은 금강산 피살 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막대한 우리 국민의 희생을 초래하고도 아무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제지원과 원조를 받기 위한 회담만 제의하고 있음.
  - 남북간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약속 ②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를 위한 남북 당국간 만남을 제안함.
  - 북한이 제안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위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남북 당국간



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

- 1월 11일 | 북한 노동신문, “지난해 유관측들이 우리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에 성실한 자세로 호응했으면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도
- 1월 11일 | 미국 로버츠 게이츠 국방장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화에 앞서 선행해야 할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미사일과 핵 실험의 모라토리엄(유예)을 주문
- 1월 12일 | 관문점 적십자 직통전화 운영 재개
- 1월 12일 | 북한,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2월 11일)·개성공단 실무회담(2월 9일) 개최 제의, 경협협회사무소의 조속한 정상화 촉구
- 1월 13일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연합뉴스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우리늄 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으로 보기 어려우며 우리늄 핵무기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언급
- 1월 13일 | 미국 월터 사프 한미연합사령관, 미국 PBS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억제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지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언급
  -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중대한 위협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타격할 수 있음.
- 1월 20일 | 북한 인민무력부장, 모든 군사적 현안문제 논의를 위한 고위급군사회담 개최 제의
  - 의제는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할 데 대하여로, 회담 시기는 2월 상순의 합의하는 날자로, 회담 관련 실무적 문제 토의를 위한 쌍방 예비회담 날짜는 1월말 경으로 제의
- 1월 20일 | 통일부, 북한의 군사회담 제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발표
  -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의제로 하는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에 나갈 것이며, 예비회담 등 구체적 사항들을 추후 북측에 제의
  -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을 위해 별도의 고위급 당국 회담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추후 이를 위한 당국 회담을 제의할 예정
- 1월 20일 | 미국 의회조사국(CRS), ‘북한의 핵무기, 기술적인 문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현재 핵폭탄 4~7개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
- 1월 24일 | 시그프리트 헤커 박사,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북한 영변에 있는 우리늄 원심분리기는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진 2세대(P-2)로 미국당국자들도 현대적이고 정교한 데 대해 매우 놀라워했다고 언급
  - 영변 우리늄 원심분리기는 외견만 봐서는 기술적으로 얼마나 정교한지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통제실이 상당히 정교한데다, 원심분리기 자체도 P-2 즉, 2세대에 속한 것처럼 보이고, 북한기술자들이 확인해 준 원심분리기 재료가 강철합금인 점과 우리늄 핵사플루오라이드를 만드는 방법 등도 모두 P-2의 것과 일치함.
- 1월 26일 | 국방부 장관, 고위급 군사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2월 11일, 관문점) 개최 제의

- 1월 26일 | 통일부, 핵문제에 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남북 당국간 회동 제안을 북한 당국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
- 1월 26일 | 북한 외무성, 한반도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방적인 전제조건을 내세우거나 여러 대화의 순서를 인위적으로 정하려는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
- 1월 26일 | 미국 제프 모렐 국방부 대변인,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능력을 추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은 아니지만, 5년 보다는 빠른 시기에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언급
- 1월 28일 |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남북 국회간 협상 제의
- 1월 28일 | 북한 외무성 대변인, 6자회담 재개를 묻는 평양 주재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한반도 핵문제는 북한에 핵 위협을 가한 미국의 적대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 - 북한과 미국 및 남한과의 관계에서 적대성이 유지되는 한 어느 한 편의 활동은 도발로 해석될 것임. 이것이 바로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전 조건 없이 평화적 대화와 협상을 통해 신뢰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제안한 이유임.
- 1월 29일 | 북한 인민무력부장, 남북고위급군사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2월 1일) 제의
- 1월 31일 | 국방부 장관, 우리가 제의한 2월 11일 회담 개최 제의, 대표단 구성은 북한측 제의 수용 입장 통보
- 1월 31일 | 북한 아태위, 남북 당국간 회담 조속 개최 촉구
- 2월 1일 | 북한 인민무력부장, 남북고위급군사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2월 8일) 제의
- 2월 1일 | 국방부 장관, 북한 제의 수용 통보
- 2월 1일 | 북적 위원장, 적십자회담 조속 개최 촉구
- 2월 2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조선사회민주당·조선아태위·민족화해협의회·6·15 북측위원회, 의원 접촉 및 협상을 요청하는 편지 국회 발송
- 2월 5일 | 북적 최성일 부위원장, 남북간 적십자회담 재차 촉구
- 2월 5일 | 북한 주민 31명 어선타고 연평도로 월남
- 2월 8-9일 | 남북 군사실무회담 개최 합의없이 종료
  - 북측: 의제로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쌍방 군부사이의 상호 도발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군사적 행동을 중지할 데 대하여'를 지속 주장
  - 남측: 의제와 수석대표 급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북측이 제기하는 의제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북측: 천안함 사건은 철저히 우리와 무관한 사건이라고 강변하면서 미국의 조종하에 남측의 대북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주장, 우리측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비난하면서 철수

- 2월 9일 | 한적 총재, 북한의 적십자회담 개최 제의에 원칙적 동의 입장 통보
- 2월 9일 | 북적, 서해 연평도 인근 NLL을 통해 남하한 북한 주민 31명과 선박의 송환 요구
- 2월 10일 | 일본 산케이신문, 영변 우리늄 농축 시설에서 생산한 농축 우리늄을 이란에 제공하는 대신 북한은 이란으로부터 20억불 제공받았다고 보도
- 2월 10일 | 미국 재무부, 회사명 바꿔 거래한 북한 기업 적발, 명단 추가
  - 청송연합이 지난해 8월 제재 대상이 된 이후 청송연합무역회사, 조선자원개발투자회사, 진달래, 금해령 유한책임회사, 자원개발과 투자사, 생필사 등 총 8개의 이름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짐. 미 재무부가 이를 파악하고 거래금지 명단에 6개 이름 추가
- 2월 10일 | 북한 군사실무회담 대표단, 북남군사회담 북측대표단 공보를 통해 남북군사실무회담 결렬에 대해 남측 비난
  - 겉으로는 대화에 관심이나 있는 듯이 흉내를 내고 속으로는 북남대화 자체를 거부해 6자회담 재개와 조선반도 주변국들의 대화 흐름을 막고 대결과 충돌국면을 지속시켜 저들의 반공화국 대결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내외여론을 무마시켜보려는 것이 역적패당의 흉악한 속내
- 2월 11일 | 국회 여야 정당, 의원접촉·협상 관련 북한 아태평화위 명의 서한 접수
- 2월 17일 |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 북한이 제2 미사일 기지의 발사타워 공사를 끝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에 따르면 높이 100피트(약 30m)의 현대식 발사타워 옆에 커다란 발사대가 설치돼 있는 것이 포착됨.
- 2월 23일 | 북한 국방위원회 검열단, 작년 11월 연평도 포격이 남한의 포격에 대한 대응포격이었다고 재차 주장
  - 현실은 조선 서해상에서 충돌과 분쟁을 방지하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서해 해상경계선을 바로 설정하는데 있다는 것을 보여줌.
- 2월 23일 |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중국의 반대로 전문가 패널의 북한 우리늄 농축 프로그램(UEP) 보고서 채택 무산
- 2월 27일 | 북한 장성급군사회담 단장, 남한 당국이 민간단체와 의원들을 내세워 반공화국 뼈라 살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면 임진각 등 발원지에 대해 직접 조준 격파사격을 가하겠다고 위협
- 2월 27일 | 북한 판문점대표부, 키 리졸브 및 독수리훈련에 대한 총공세에 진입, 전면전으로 대응하여 '서울불바다전과 같은 무자비한 대응' 위협, 핵억제력과 미사일 타격전으로 맞서 나가겠다고 주장
- 3월 1일 | 이명박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에 대해 진정한 화해와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대화입장을 표명,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을 적극적으로 축적해 나갈 것임을 천명
  - 북한은 핵과 미사일 대신 대화와 협력으로, 무력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으로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함. 우리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음. 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한편, 통일에 대비한 우리의 역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축적해 나아가고자 함.

- 3월 3일 | 한적 총재, 2월 5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역으로 온 북한 주민 31명중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한 27명 송환 통보
- 3월 3일 | 북적 대변인, 북한 주민 31명 전원을 배와 함께 송환 요구
- 3월 4일 | 연평도 인근 해역으로 온 북한 주민 31명중 귀순 의사를 밝힌 27명 송환, 북측의 거부로 무산
- 3월 7일 | 한적 총재,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27명을 3월 7일 16:00 관문점을 통해 송환할 예정,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적십자실무접촉(3월 9일 10:00, 관문점 평화의 집) 수정 제의
- 3월 7일 | 북적 위원장, 4명의 귀순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직접대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3월 9일 관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
- 3월 8일 | 한적 총재, 송환 희망 27명에 대한 필요조치 협조를 촉구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확인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지적, 우리측 지역에서 귀순 의사 밝힌 4명의 자유의사를 공정하고 객관적 방식으로 확인시켜 줄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실무협의 입장 통보
- 3월 15일 | 미국 국가정보국(DNI), 의회에 제출한 2010 세계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 획득과 이전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장비와 부품, 소재, 기술을 비롯해 미사일 시스템 전체를 중동, 남아시아, 북아프리카에 수출해 왔다고 지목
- 3월 15일 |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체신상 앞 서한에서 GPS 주파수 혼신행위 항의 및 재발방지 촉구 - 북한 접수거부
- 3월 15일 | 북적 위원장, 우선 27명을 배를 타고 표류했던 해상경로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
- 3월 15일 | 한적 총재, 인도적 차원에서 해상을 통해 27명 송환 통보, 기상여건 등으로 인원을 먼저 넘겨받기 원하면 3월 16일 11:00 관문점으로 27명 송환 입장 전달 - 북한은 연락관 통화 시 서해상 날씨가 좋아지면 해상 경로로 넘겨받겠다는 입장 표명
- 3월 17일 | 북한 지진국장,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와 현지답사 및 학술토론회 등 협력사업 추진 위한 협의 진행 제의
- 3월 22일 | 기상청장, 백두산 화산활동에 남북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 우선 백두산 화산 관련 전문가간 협의(3월 29일, 문산) 제의
- 3월 23일 | 북한 전선서부지구사령관, 심리전 행위가 계속되면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직접 조준격과 사격 위협 - 연평도 포격전의 교훈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거든 뼈라 살포를 포함한 모든 심리전 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함.
- 3월 24일 | 북한 지진국장, 우리측의 3월 29일 접촉 제의에 동의하면서 화산연구소 부소장이 대표로 나올 것이라는 입장 통보

- 3월 25일 | 북한, FAO에게 구제역 봉쇄를 위한 백신과 관련 장비 긴급지원 요청
- 3월 27일 | 월선 북한주민 27명과 선박 송환
- 3월 29일 |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전문가 회의(문산, 출입사무소)  
-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 필요성에 대해 공감, 차기 회의는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
- 3월 30일 | 테리 도요타 WFP 대외협력·공여국장, 북한내 식량가격이 지난해 보다 80%가량 올라 주민들이 식량구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
- 3월 30일 | 북적 위원장, 지난 3월 27일 송환되지 않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주민 4명에 대하여 대면확인 및 송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적십자실무접촉(4월 6일 10:00,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제의
- 3월 30일 | 통일부, 귀순자 송환과 대면확인을 위한 적십자회담은 응할 수 없다고 대응
- 3월 31일 | 통일부, 투명성 강화 조건 하에 민간차원의 북한 취약계층 지원 재개 허용
- 4월 1일 | 한적 총재, 북한이 주장하는 대면확인 방식은 귀순의사 확인방법으로 적절치 않으며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자유의사를 존중해 처리한 귀순자 송환문제 협의 불필요, 북한이 원한다면 우리측 지역에서 귀순자 자유의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시켜 줄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통보
- 4월 1일 | 북적 위원장, 귀순자의 대면확인 및 송환문제 협의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지체없이 가질 것을 거듭 요구
- 4월 6일 | 백두산 화산 관련 전문가회의 남측 수석대표, 제2차 백두산 화산관련 남북 전문가회의 개최(4월 12일, 개성) 제의
- 4월 7일 | 북한 지진국장, 제2차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 전문가회의 4월 12일 개최에 동의
- 4월 8일 | 북한 아태평화위 대변인, 현대측과 맺은 금강산관광에 관한 합의서에서 현대측에 준 독점권에 관한 조항의 효력을 취소, 북측지역을 통한 금강산관광은 북이 맡아 하되 해외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남측지역을 통한 관광은 현대가 계속 맡아한다는 입장 통보
- 4월 11일 | 통일부, 북한이 금강산관광 사업에 현대자산의 독점권을 취소한다고 밝힌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언급
- 4월 12일 | 제2차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전문가 회의(개성, 자남산 여관)  
- 5월초 평양(또는 편리한 장소) 학술토론회, 6월 중순 백두산 현지답사를 하기로 합의, 구체적 실무절차 추후 협의
- 4월 14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2010년 11월 미국공민 반공화국범죄행위 감행하여 체포·조사, 조사과정에서 범죄 인정, 재판 기소 준비 보도  
- 해당 경로를 통해 미국측에 통보, 주조 스웨덴 대사관과 연계하여 영사접촉을 비롯한 필요한 인도주의적 편의 보장

- 4월 16일 |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금강산관광 문제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 북한측 조치는 합의에 위반되는 것이 없으며, 공화국법과 국제법·국제관례에 부합 주장
- 4월 22일 | 북한 장성급군사회담 단장, 뼈아살포 행위는 심리전으로 교전상대방에 대한 전쟁도발 행위라고 비난, 선포한 조준격과사격범위를 전면격과사격으로 넓히겠다고 위협
- 4월 22일 | 북적 위원장,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재촉구
- 4월 22일 | 통일부, 북측이 주장하는 대면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인도주의와 자유의사에 따라 귀순을 결정한 4명의 송환문제를 협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
- 4월 23일 | 북한 조평통, 남측이 끝까지 외면한다면 우리는 대화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4월 26-28일 | 미국 카터 전 대통령과 전직 국가원수(3명) 등 The Elders 그룹, 방북
- 4월 27일 | 한적 총재, 귀순 4명 자유의사 확인 문제와 자유의사에 반해 북한지역에 억류된 우리 국민 자유의사 확인 문제 논의를 위해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5월 4일, 판문점 평화의 집) 제의
- 4월 27일 | 북한 조선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에 동해 표기 관련 남북역사학자간 공동대처 제의
- 4월 28일 | 백두산 화산 전문가회의 수석대표, 백두산 화산문제 관련 학술토론회 개최(5월 11~13일, 서울 또는 평양) 제의
- 4월 29일 | 동북아역사재단, 5월 중순 개성에서 동해 표기 관련 남북역사학자간 협의 제의
- 5월 3일 | 통일부, 북한의 GPS 교란행위나 민간 금융기관 전산망 해킹행위는 도발이며 규탄 받아 마땅, 무분별한 사이버 테러 행위 즉각 중단 촉구
- 5월 4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마약 및 위조화폐 범죄로 일본인 2명 억류, 1명 추방, 2명 법적 처리중 보도
- 5월 4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6.25 전쟁 참전 영국군 유해 1구 판문점을 통해 송환 보도
- 5월 5일 | 북한 조평통, 남한의 북한자유주간 행사와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이라고 비난  
- 우리 인민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징벌할 것임.
- 5월 9일 | 이명박 대통령, 한·독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 초청 제안(베를린 제안)
- 5월 10일 | 북한 국방위 인민무력부, 농협해킹 북한 소행이라는 결과발표는 반민족적 모략극이며 날조극이라고 비난
- 5월 11일 | 통일부, 북한이 농협 해킹사건에 대해 날조극 등의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테러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  
- 북한이 그간 우리 동서해역에서 반복해 시도해 온 GPS 교란행위나 이번 민간금융기관 전산망 해킹 등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 대한 도발이며 규탄받아 마땅함.

- 5월 11일 | 북한 조평통,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5월 9일) 대해 '반공화국 핵소동과 대결책동을 정당화해 보려는 발언'이라고 비난
- 5월 17일 |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 채택 불발(중국 반대)
- 5월 17일 | 미국 폭스뉴스, 북한은 해킹 등 사이버전쟁을 펼칠 3만 명의 병력을 육성하고 있으며, 그 능력은 CIA에 필적한다고 보도
- 5월 20~26일 | 북한 김정일, 방중
- 5월 23일 | 미국 국무부,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에 따라 14개 외국기업과 2명의 외국인에 대해 제재 단행  
- 북한(기업 1개), 중국(개인 1명, 기업 4개), 벨라루스(기업 2개), 이란(개인 1명, 기업 4개), 시리아(기업 2개), 베네수엘라(기업 1개)
- 5월 24일 |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 등 북한식량평가팀, 방북
- 5월 27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미국인 전용수 석방 보도
- 5월 30일 | 북한 국방위, 남측이 반공화국대결책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남측과 상대를 하지 않을 것이고, 거족적인 전면공세에 진입하며, 실제적 행동조치로 동해지구 군통신 차단 및 금강산 지구 통신연락소 폐쇄 주장
- 6월 1일 | 북한 국방위, '남북 비공개 접촉' 사실왜곡 주장  
- 5월 9일부터 비밀접촉 진행, 남측이 친안함·연평도 관련,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을 만들자'고 애걸, 5월 하순경 정상회담을 위한 장관급회담을 열어 합의사항을 선포, 6월 하순경 제1차 정상회담 관문점에서, 제2차 정상회담은 두 달 뒤(8월)에 평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은 내년(2012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개최할 것을 예견하고 있으니 딱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구걸했음.
- 6월 1일 | 통일부, 북한 보도는 우리의 진의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으로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명
- 6월 2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채택 발표
- 6월 3일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국내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김정일 위원장, 김정은 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사진을 사격 표적지로 사용한다에 대해 특대형 도발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주모자 즉시 엄벌 조치와 사회·재발방지 담보 요구, 실제적이고 전면적인 군사적 보복행동 진입 위협
- 6월 6일 | 이명박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에서 언젠가 올 한반도 통일에 대비해 우리 국민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  
- 북한은 대결과 갈등의 길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와야 함. 우리는 이를 위해 인내심을 갖고 진지하고 일관된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임.
- 6월 6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를 내움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발표 보도

- 6월 9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착공식(6월 8일), 라선 경제무역지대 착공식(6월 9일) 보도
- 6월 9일 |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표, 베이징 접촉 관련 남측이 진실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모략날조에 매달린다면 접촉 녹음 기록을 공개할 것이라고 위협
- 6월 10일 | 통일부, 남북 비밀접촉에 관한 북측의 공개 위협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유감 표명
  - 정부는 이번 비공개 접촉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시인·사과를 받기 위한 접촉이었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음. 이번 접촉이 북한이 먼저 제의해서 열리게 됐다는 경과에 대해서는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바 있음.
- 6월 10일 |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북한 영변 핵시설 일대에 건물 신축·리노베이션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
- 6월 15일 | 일본 산케이 신문,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2011년부터 조선노동당 공작기관인 통일전선부 대신 외무성이 한국과 일본을 담당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
- 6월 16일 | 북적 위원장, 보도에 의하면 6월 11일 북한 주민 9명이 연평도 해상에서 월선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즉시 송환 요구
- 6월 16일 | 한적 총재, 조사결과 북한 주민 9명 모두 귀순을 희망하고 있는 바,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통보
- 6월 17일 |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국제관광특구내의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정리,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남측 당사자들은 동결, 몰수된 재산들의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올 것을 통고
- 6월 20일 | 북한 조평통, 북한인권법 제정은 제2의 표적사건으로 간주하고 무자비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
  - 북한인권법을 끝내 조작하는 경우 우리 제도와 인민에 대한 공식선전포고로, 제2의 표적사건으로 간주하고 무자비하고 단호한 대응에 나갈 것임.
- 6월 20일 |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2011년 실패국가지수(FSI) 조사에서 북한이 22위를 기록
  - 지난해 19위에서 세 단계가 내려간 22위 랭크
- 6월 20일 | 일본 산케이신문, 북한이 지난달 이란에 핵·미사일 전문가 160명을 파견했다고 보도
- 6월 27일 | 미국 국무부, 연례 인신매매실태(TIP)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관리가 최악인 3등급 국가로 분류
- 6월 28일 | 북한 정부 대변인, 남한의 일부 전방부대가 훈련을 위해 호전적 구호 사용관련 도발을 걸어온 조건에서 도발에는 징벌, 전쟁에는 보복성전으로 나설 것이라고 위협
- 6월 29일 |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남측이 민족 앞에 사죄할 때까지 군사적 보복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



라고 위협

- 6월 29일 | 금강산관광지구 재산정리 문제 협의, 협의방식 이견으로 실질적인 논의 불발
- 6월 30일 |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7월 13일까지 금강산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남측의 모든 당사자들이 재산 정리안을 연구해 가지고 현지에 들어올 것과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재산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해당한 법적 처분을 할 것이라고 주장
- 6월 30일 | 북한 조평통, 정부가 서해 5개섬을 국제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한데 대해 또하나의 도발이라고 비난  
- 서해 5개 섬을 국제관광지로 만들려 하는 것은 저들의 범죄적인 북침전쟁준비책동을 가리우고 불법무법의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을 기정사실화하며 서해수역 영유권을 공인받아보려는 것임.
- 7월 8일 | 남측 민관합동협의단, '금강산 관광지구 재산권 문제 관련 협의(7월 13일 우리측 지역 또는 북측이 편리한 시기와 장소)' 제의
- 7월 13일 | 금강산 관광지구 재산권 문제 협의
- 7월 22일 |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간 비핵화 회담(ARF 계기, 발리)
- 7월 23일 | 남북 외교장관 비공식 접촉(ARF 계기, 발리)
- 7월 25일 | 통일부, 금강산관광 사업 협의를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7월 29일, 금강산) 제의
- 7월 26일 |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남측이 민간기업과 같이 오는 조건에서 당국실무회담 개최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기업인을 데려오지 않거나 재산정리 협상 방해 목적으로 당국실무회담을 이용하려 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법적 처분을 실행할 것이라고 주장
- 7월 28~29일 | 북·미 고위급 회담 진행
- 7월 29일 | 통일부, 당국간 회담 제의에 금강산 관광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우리측의 당국간 회담 제의에 성의 있는 태도로 나올 것을 촉구
- 7월 29일 |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오늘부터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내의 모든 남측 부동산들과 재산들에 대한 법적 처분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선포
- 8월 3일 | 한적 총재, 북한에 50억 원 규모의 수해지원 제의
- 8월 4일 | 북적 위원장, 생필품·의약품보다 식량·시멘트 등의 지원 요구
- 8월 4일 | 한적 총재, 지원물자의 조속 전달을 위한 조치 촉구
- 8월 4일 | 북한 조선인민군 관문점대표부, 합동군사연습 중지, 평화체제 전환 용단, 조미관계와 북남관계 정상화 의사 표명 등을 요구
- 8월 8일 | 북한 조선인민군 관문점대표부, 을지 프리덤 가디언훈련 연습 중지 요구
- 8월 10일 | 한적 총재, 북한에 수해지원 물자 품목·전달경로·시기 등 통보  
- 품목은 영유아용 영양식 140만개, 영유아용 과자 30만개, 초코파이 192만개, 라면 160만개.

경로는 경의선(황해도) 및 동해선(강원도) 육로. 물자 준비기간 3~4주 소요. 전달 일자 별도 통보

- 8월 10일 | 현대아산 장경작 사장 등 금강산 방북, 금강산 재산권 문제 협의
- 8월 10일 | 북한,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 포사격-우리군 대응 사격
- 8월 10일 | 북한 남북군사실무회담 단장, 평화적 건설과정에 있는 정상적인 발파소리를 남측은 포사격도발로 날조하였다고 주장
- 8월 11일 | 북한 남북군사실무회담 단장, 남측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통지문에서 남측이 발파 작업을 포사격으로 날조하였으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대응 포격을 한 것이 계획적인 조작임을 실증한다고 주장하며 주범 처벌 및 사실 공개촉구
- 8월 11일 | 미국 국무부 대변인, 북한군의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 포 사격과 관련 북한의 자제를 촉구
- 8월 11일 | 북한 외무성, 미국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의 상봉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 8월 12일 | 월선(8월 11일) 북한 주민 4명, 판문점 통해 송환
- 8월 15일 | 이명박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
  - 남북은 대결의 시대를 뛰어넘어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함. 도발을 통해서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 남과 북이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여 번영의 길로 함께 가야 함. 어린이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자연 재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임.
- 8월 17일 | 북한 외무성,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관련 자위적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언급
- 8월 17일 | 북한 조평통,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관련 "우리 군대와 인민은 도발적인 전쟁연습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짓밟개버릴 것"이라고 주장
- 8월 18일 | 월선(8월 16일) 북한 주민 2명, 판문점 통해 송환
- 8월 19일 | 현대아산 관계자 금강산 방북, 금강산 재산권 문제 협의
- 8월 20~26일 | 김정일 방러, 북러 정상회담(8월 24일, 김정일·메드베데프)
- 8월 22일 |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26조와 제40조 등 관련법률에 따른 조치 시행 발표
  -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있는 남측 부동산과 설비 및 운전기재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들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 처분을 단행. 금강산에 들어와 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남아있는 남측 성원들은 72시간내 나가야 함.
- 8월 22일 | 통일부, 북한이 금강산 지역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재산과 인원에 대해 일방적 조치를 취한데 대해, 정부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상회복을 요구

- 8월 23일 | 금강산 체류 우리 국민 14명 철수
- 8월 28일~ | 북한, 라선-금강산 시범관광 실시. 중국 연길 출발(8월 28일), 북한 라진항 복귀(9월 2일)
- 9월 2일 - 북한, 라선-금강산 시범국제관광단 고성항 도착(8월 31일) 보도
- 9월 3~7일 | 대한불교조계종 지승 총무원장 등, 「팔만대장경 판각 1천년 기념 고불법회」 참석(묘향산 보현사) 및 광범사·범운암 등 방문(평양 인근) 위해 방북
  - 천안함 폭침 이후 종교단체 첫 방북
- 9월 6일 | 한적 총재, 대북 수해지원 관련 실무사항 통보
  - 대북 수해지원 1차분 9월 15일 경의선·동해선 통해 인도. 이후 10월 중순까지 매주 1~2회 인도 예정
- 9월 6일 | 한국관광공사, 금강산에 있는 자사 소유의 재산을 동결·몰수한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전통문을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 국장에게 발송
- 9월 12~15일 |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겸 유니세프 친선대사, 평양 방문
  - 북한 조선예술교류협회 측과 북한 어린이 대상 음악 교육·교향악단 교환 연주 등 논의
- 9월 13일 | 북한 원유공업성 대표단(단장: 김희영 원유공업상), 러시아 방문
- 9월 14~17일 | 주장수 한국가스공사 사장, PNG 프로젝트 실무협약차 러시아 방문
- 9월 19일 | 류우익 통일부 장관 취임
- 9월 20일 | 이명박 대통령, 세계 정치지도자상 수상 연설에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남과 북이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
  -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고,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함. 대통령 재임 중에 내가 할 역할은 그러한 날이 오도록 기초를 닦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9월 21일 | 이명박 대통령, 제6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상생과 공영의 길을 택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이를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언급
- 9월 21일 | 제2차 남북 비핵화 회담(베이징)
- 9월 21~24일 | KCRP(한국종교인평화회의) 7대 종단 대표 등 24명 방북(평양·백두산)
  - 남북 종교인 모임 및 남북 종교인 공동성명 발표(평양), 김영남 면담(만수대 의사당)
- 9월 26일 | 6.15 북측위, 북한 아태위원장이 9월 27일 개성에서 故 박용길 장로 유가족과 장례위 관계자들을 만나겠다는 의사 전달
- 9월 27일 | 김정일, 박용길 여사 유가족에게 조전(중통)
- 9월 30일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개성공단 방문
- 10월 1일 | 북한 체신성 대변인, 남측의 대북방송 송출은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몰아가는 반민족적 망동, 심리모략전”이라며 지속시 “방송본거지들과 가담자들을 섬멸적·무자비한 징벌” 위협

- 10월 4일 | 일본 표류(9월 13일) 탈북자 9명, 인천공항 통해 입국
- 10월 4일 | 북한 주민 2명, 동해상으로 월선, 귀순의사 표명
- 10월 4일 | 정부, '대북 수해지원 계획 종결 절차' 진행
- 10월 5일 | 북적 중앙위원회, 북한 주민 2명 및 선박 송환 요구
- 10월 6일 | 한적, 북측에 북한 주민 2명은 본인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할 것임을 통보
- 10월 6일 | 북적중앙위원회, 동해 월선 북한 주민 2명 및 일본 표류자 9명 송환 요구
- 10월 6일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복송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 결의안은 중국 정부에 탈북자들의 강제복송을 중단토록 촉구하는 동시에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당부하고 있음.
- 10월 7일 | 세계은행, 2010 전세계 통치구조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정치적 안정 지수는 2008년 0.47점으로 세계 상위 40%안에 들었지만 2009년 -0.11점으로 떨어진데 이어 2010년에는 -0.45점으로 다시 하락  
- 북한은 정부 효율성 부문 -1.87점, 규제의 질 -2.44점, 법치 -1.30점
- 10월 8일 | 북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단장, 서해 일대에서의 우리 군부대 훈련과 시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관련 위협  
-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남측의 계속되는 도발적인 전쟁행위에 부득불 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게 돼 있으며 그에 따른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남측은 우리 군대의 최종통고에 심사숙고해야 함.
- 10월 11일 |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애로 해소 조치 발표  
- '5.24 조치'로 공사가 중단된 기업들의 건축공사 재개 허용, 개성공단 소방서와 응급의료시설 건립 조속 추진, 개성시와 개성공단간 출퇴근 도로 보수 공사 및 원거리 북측 근로자 수송위해 출퇴근 버스 확대 운영
- 10월 17~20일 | 남북미 3자 민간 학술회의(조지아대)
- 10월 19일 | 김정일 위원장,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아무런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가 북한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언급  
-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9.19공동성명을 전면적이고 균형적이며 동시행동의 원칙에 입각해 이행하며, 그럼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실현시키는 것이 우리의 변치 않는 원칙적 입장임. 만일 미국이 지금이라도 조선에 대한 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갖고 접근한다면 우리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로 나갈 용의가 있음.
- 10월 24~25일 | 미북 제네바 협의
- 10월 28일 | 남북 만월대 공동발굴사업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 개최(개성)
- 11월 2~5일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남북공동기도회 관련 방북(평양)

- 11월 2~7일 | 류우익 통일부 장관 방미(워싱턴·뉴욕)
- 11월 3일 | 류우익 통일부 장관, 방미 중 CFR에서 열린 한반도 전문가 간담회에서 “북한이 핵 포기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변화의 길에 들어선다면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
- 11월 8일 | 정부, WHO를 통한 대북지원 재개 승인
- 11월 14~23일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개성 만월대 유적에 대한 문화재 안전조사를 위해 방북
- 11월 24일 |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 연평도 도발 1주년을 맞아 연평도와 백령도 일대에서 실시한 군 합동훈련 관련 비난
  - 우리의 존엄을 건드리고 우리의 영해·영공·영토에 단 한발의 총포탄이라고 떨어진다면 연평도의 그 불바다가 청와대의 불바다로, 청와대의 불바다가 역적패당의 본거지를 송두리채 없애버리는 불바다로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함.
- 11월 21일 | 유엔총회 제3소위(인권문제 담당), 대북 인권 결의안 채택
  - 찬성 112, 반대 16, 기권 55표
- 11월 21~23일 | 류우익 통일부 장관, 한·중간 고위정책협의를 위해 방중
- 11월 24일~ | 남북, 개성 만월대 복구·보존공사 재개
- 12월 23일
- 11월 25~29일 | 대북지원 물자의 분배 모니터링을 위한 민간단체와 정부 관계자, 방북
- 11월 30일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시험용 경수로 건설과 저농축 우라늄 생산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
  -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우리의 정당한 평화적 핵활동을 걸고들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 문제의 해결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있음.
- 12월 1일 | 미국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 북한 외무성 발표(11월 30일)와 관련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경수로 건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자신들이 스스로 한 2005년 9.19 공동성명 위반이라고 비판
- 12월 8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법 제정 보도
- 12월 9일 | 북한 조평통, 남한 내에서 북한에 억류된 신숙자씨에 송환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우리 존엄과 체제를 들먹이는 인권모략소동”이라고 비난
- 12월 12일 | 북한 노동신문, ‘우리에게는 그 어떤 위협 공갈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에서 미국이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군사적 대결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비난
- 12월 19일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7일 오전 8시 30분 급병으로 사망했다고 발표
  - 김정일 동지의 질병과 서거원인에 대한 의학적 결론서에서 17일 달리는 야전열차 안에서 중증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되고 심한 심장성 쇼크가 합병됐음. 발병 즉시 모든 구급치료대책을 세웠으나 17일 8시 30분에 서거하셨음. 18일 진행된 병리해부검사에서는 질병의 진단이 완전히 확정됐음.

- 국가장의위원회 명단 232명 발표
- 김정은을 위대한 영도자, 위대한 계승자 등으로 표현해 후계자임을 명시

**12월 19일 | 북한, 오진 함경남도 동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 시험 발사**

**12월 20일 | 류우익 통일부 장관, 김정일 사망관련 정부 담화문 전문 발표**

-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함. 북한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남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함. 정부는 북한이 애도기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12월 23일로 예정했던 전방 지역에서의 성탄 트리 점등을 금년에는 유보하도록 교계에 권유하기로 했음. 정부는 조문단을 보내기 않기로 하였음. 다만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하여 북측의 조문에 대한 답례로 방북 조문을 허용할 방침임.

**12월 23일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해 남한의 모든 조문단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도**

**12월 25일 | 북한 조평통,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조문하는 남측 당국의 태도를 지켜보고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

- 온 겨레는 이번에 남조선 당국의 도덕적 한계뿐 아니라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임.

**12월 26~27일 | 이희호 여사·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조문을 위해 방북**

**12월 28일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영결식 개최**

- 김정은, 장성택, 김기남, 최태복, 리영호, 김영춘, 김정각, 우동측 영구차 호위

**12월 28일 | 북한 노동신문, '김정일 동지의 혁명유산' 이라는 제목의 정론을 통해 김 위원장의 3대 혁명유산으로 '핵과 위성', '새 세기 산업혁명', '민족의 정신력'이라고 강조**

**12월 30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여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했다고 보도**

## 2012년

- 1월 1일 | 북한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신년 공동사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발표
- 1월 2일 | 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온다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이며 대화를 통해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상생공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
- 북한이 진행 중인 핵관련 활동을 중단하는 대로 6자회담은 재개될 수 있을 것임. 우리는 6자회담 합의를 통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를 희생시키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를 갖추고 있음.
  -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 우리는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임. 도발 시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통일은 누구보다도 한반도의 주인인 남북한이 함께 해결할 과제임. 주변국들도 기꺼이 협력할 것으로 기대함.
- 1월 2일 | 류우익 통일부 장관, 신년사에서 북한의 새 지도부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회를 맞고 있으며 폐쇄와 낙후에 빠지는 ‘나쁜 선택’을 하지 말고, 개방과 발전을 향한 ‘좋은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언급
- 1월 5일 | 북한 조평통,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에 대해 “큰 변화니 뭐니 하고 떠든 것은 아직도 체제대결의 헛된 망상에서 깨어 나지 못한 자의 가소로운 넋두리”라고 비난
- 우리는 원수들의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임.
- 1월 11일 | 북한 외무성, 작년 7월 북미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우리측 농축 임시 중지 등을 북한 제재 임시 중지, 식량 제고 지원 등과 연계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조치 이행을 촉구
- 미국이 초기에 논의되던 30만t 이상의 식량지원과는 다르게 제공량과 품목을 대폭 변경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신뢰조성의지에 대해 의문시 하고 있으며 2011년 5월에 토의한 제선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임.
- 1월 16일 | 미국 AP통신, 평양에 종합지국 개설
- 1월 17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2011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농작물종자관리법(5개장, 43개조)이 제정되었다고 보도
- 1월 17일 | 미국 국무부, 한미일 3자협의 뒤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 약속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
- 우리는 대화 재개를 위한 길이 북한에 열려 있으며, 대화를 통해 한미일과 관계를 개선할 길이 북한에 열려 있다는데도 의견을 함께했음.

- 1월 18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2011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고등교육법(7개장 68개조)을 제정했다고 보도
- 1월 25일 | 유니세프, 북한의 5세 미만 아동 중 급성 영양실조와 중증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아동비율이 각각 14.9%와 2.9%로 전체 영양실조 아동 비율은 17.8%로 집계됐다고 발표
- 1월 30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8개장 51개조)·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10개장 72개조)·외국투자기업회계법(4개장 59개조)을 수정·보충했다고 보도
- 1월 30일 | 국제평화연구소(SIPRI), '불법해상수송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무기 운송 적발 선박수가 세계 4위라고 발표
- 1월 31일 | 북한 4.25축구단 유소년팀, '2012 인천평화컵 국제유소년(U-14) 축구대회'에서 인천구단의 유소년팀인 광성중학교와의 경기 거부
- 1월 31일 | 미국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이 무기시스템 수출 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언급  
-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 등 일부 국가에 대해 탄도미사일과 관련 물품을 수출하는 것은 북한의 확산 행위를 보여주는 것
- 2월 1일 | 미국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면담 직후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회담 재개와 관계개선의 길이 열려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언급  
- 오늘 면담에서 9.19공동성명의 이행 필요성과 그 공동성명의 핵심목표인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원칙도 재확인했음.
- 2월 2일 |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 텔레콤, 공시를 통해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
- 2월 2일 |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우리 정부에 보내는 공개질문장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조문 태도를 사죄하라고 요구
- 2월 3일 |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는 북한 내부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당장 예상치 못한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
- 2월 7일 | 산림청장, 북한 국토보호상 앞으로 '고구려 고분군 산림 병충해 방제 문제 협의 관련 통지문' 발송  
- 북한 통지문 수령 거부
- 2월 10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해 외국투자기업 등록법(6개장 34개조),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이 수정 보충되었다고 보도
- 2월 10일 | 국회 남북관계특위와 외통위 의원 8명, 개성공단 방문  
- 김충환·남경필·구상찬·김동철(외통위), 박주선·김성수·박선숙·이정현(특위) 의원



- 2월 12일 |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실무접촉(2.9~11, 중국 선양)에서 6.15 공동선언 12주년을 기념하는 민족공동행사를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안
- 2월 13일 | 중국 선양에서 공안에 억류돼 북송위기에 처한 탈북자들,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요청
- 2월 14일 | 한적, 북적에 이산가족 상봉행사 협의를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  
- 북한 통지문 수령 거부
- 2월 16일 | 북한 조선중앙TV,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함에 관한 공동결정을 공표 보도
- 2월 16일 |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 및 평화연구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에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시아 평화가 달렸다고 주장
- 2월 17일 |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이하 UNHCR), 중국 정부에 북송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들에 대해 안전보장이 확인될 때까지 강제 송환을 유보해 줄 것을 촉구
- 2월 18일 |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통해 2012년 4월 중순에 조선노동당대표자회 소집 결정 발표
- 2월 19일 | 북한 조선인민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 공개통고장을 통해 서해 5도 일대에서 20일 실시예정인 한미군사훈련과 관련 “군사적 도발이 시작되면 무자비한 대응타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  
- 서해 5개 섬과 그 주변에서 살고 있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모든 민간인들은 괴뢰군부호전광들의 도발적인 해상사격이 시작되는 20일 9시 전에 안전지대로 미리 대피할 것임.
- 2월 19일 | 외교통상부, 중국에 억류된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우려와 관련 중국 측에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협약 준수를 촉구
- 2월 21일 | 중국 홍콩이 외교부 대변인, 한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요구에 대해 “관련 인원들은 경제문제 때문에 중국에 넘어온 이른바 불법 월경자”라고 강조
- 2월 22일 |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남북의 가장 1차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언급  
- 북한이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미래를 위해서 변화할 수 있는 좋은 시기에 있음. 그래서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함. 기다리면서 남북관계가 더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탈북자가 범죄자가 아닌 이상 중국 정부가 국제 규범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한국 정부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중국 정부와 협력을 하게 될 것임.
- 2월 23-24일 | 제3차 미·북 고위급 회담 개최(북경)  
-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 미국 측은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과 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대량살상무기(WMD) 실험 모라토리엄 선언 등의 비핵화 사전조치 요구, 북측은 30만 규모의 곡물지원과 대북제재 해제 등을 주장

- 2월 24일 | UNHCR,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처벌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송환 중단을 중국 정부에 촉구
- 2월 25일 | 북적, 탈북자 송환 문제를 둘러싼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괴뢰역적패당의 탈북자 복송반대 소동은 또 하나의 반공화국 모략 광란극”이라고 비난
- 2월 25일 |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북미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서울 외교부 청사)  
-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북미관계의 근본적 진전은 없을 것  
- 대북 식량지원 규모는 북한이 얼마나 식량을 필요로 하는지와 미국의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임.
- 2월 25일 |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 관련 비난 성명 발표  
- 이번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우리의 애도기간을 노리고 감행되는 불한당들의 용납할 수 없는 전쟁광기이고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침해
- 2월 27일 | 국회, ‘북한이탈주민 강제복송 중단 촉구 결의안’ 통과
- 2월 27일 | 중국 푸잉 외교부 부부장 방북(2.20~24), 식량원조 문제 협의
- 2월 27일~ | 한미 키 리졸브 훈련 실시
- 3월 9일
- 2월 29일 | 북한 외무성, 제3차 미·북대화 관련 결과 발표  
- 미국은 문화, 교육,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조치들을 취할 의사를 표명하였음.  
- 미국은 조선에 24만t의 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식량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쌍방은 이를 위한 행정실무적 조치들을 즉시에 취하기로 하였음.  
- 미국은 대조선제재가 인민생활 등 민수분야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음.  
- 미국의 요청에 따라 조미고위급회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결실 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시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 냉변우라니움농축활동을 일시중지하고 우라니움농축활동 일시중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하였음.
- 3월 2일 | 이명박 대통령, 방한한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탈북자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
- 3월 2일 |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최근 인천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내무반에서 벽과 문에 ‘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그 아래위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글까지 버젓이 써 붙이는 천하 무도한 망탕짓을 벌여놓고 있다”고 비난
- 3월 4일 | 국방부,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에 대해 “이번 북측의 억지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고 언급
- 3월 4일 | 북한 외무성·조평통, 담화를 통해 우리 군부대 내무반에 부착된 구호 관련, ‘최고 존엄’에 대한 무분별한 중상모독행위이며, 특대형 도발행위라고 비난

- 3월 6일 |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북한이 영변 핵시설 단지에서 진행 중인 실험용 경수로 건설 공사가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
- 3월 7~8일 | 미·북 대북 식량(영양) 지원 회담 개최  
-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사, 안명훈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
- 3월 8일 | FAO,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3월호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식량부족국가로 분류
- 3월 12일 | 북한 리용호 외무성 부상,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 질 것이라고 언급
- 3월 13일 | 국경없는기자회, '2012년 인터넷 적대국'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터넷 적대국으로 지목  
- 지난해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이 이틀간 비밀로 지켜지다가 조선중앙TV의 특별 방송으로 발표된 것은 언론과 정보에 대한 북한정권의 철저한 통제를 보여준다고 지적
- 3월 14일 | 정명훈, 북한 은하수관현악단-라디오프랑스필하모닉 합동공연 지휘(파리)
- 3월 16일 |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광명성 3호 위성(장거리로켓)' 발사계획 발표  
- 광명성-3호는 극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관측위성으로서 운반로켓은 은하-3으로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남쪽방향으로 4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발사하게 됨.
- 3월 16일 | 외교통상부, 북한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담화에 대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논평  
- 북한이 발표한 대로 '실용위성'을 발사한다면,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  
-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함.  
-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도록 6자회담 당사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
- 3월 16일 | 미국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매우 도발적인 계획"이라고 비난  
- 이러한 미사일 발사는 지역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며 또한 북한이 최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삼가겠다고 다짐한 것과는 모순된 태도임.
- 3월 16일~4월 13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AP 공동사진전 뉴욕에서 개최
- 3월 19일 | 정부,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관련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 개최  
- 우리 정부는 북한의 소위 '실용위성' 발사 계획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핵무기의 장거리 운반수단을 개발하는 중대한 도발적 행위로 규정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한편, 다음 주 개최되는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에 미, 일, 중, 러, EU 등 관련국 정상들과 협의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음.

- 3월 19일 | 북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국제해사기구(IMO)에 인공위성 ‘광명성 3호’ 발사 계획 신고  
- 자체 개발한 지구관측 위성인 ‘광명성 3호(Bright Star-3)’를 다음달 12~16일 사이에 발사할 것임.
- 3월 19일 | 미국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 북한이 IAEA에 사찰단 파견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인 초청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언급  
- 사찰단 초청 여부가 위성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자 그들이 우리에게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꿔 놓지는 못한다고 강조
- 3월 19일~ | 남북 종교단체 협의(북경, 심양)  
4월 2일
- 3월 21일 | 미국 국방부, 로켓 발사계획을 포함한 북한의 최근 도발적인 행동으로 유해발굴 작업 중단 발표
- 3월 21일 | 미국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 미국은 핵 사찰단 파견 문제를 놓고 IAEA와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
- 3월 22일 |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 제19차 이사회 본회의에서 한국 등 43개 나라가 공동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없이 채택
- 3월 23일 | 북한 조평통, 2012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와 광명성 3호 발사를 거론한다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
- 3월 26-27일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 미·중·러·일 등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지할 것을 촉구
- 3월 27일 | 북한 외무성,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우리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고 경제발전의 필수적 요구인 평화적 위성발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3월 27일 | 류우의 통일부 장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내·외신 브리핑  
- 북한은 미사일 발사 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함. 지금이라도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평화의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 3월 31일 | 북한 외무성, 미국이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대북식량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 “2.29 조미합의의 핵심사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조미합의를 통째로 깨버리는 유감천만한 행위로 될 것”이라고 비난
- 4월 1일 |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금강산을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을 환영하며 그들이 관광을 즐기도록 성의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
- 4월 1일 | 미국 의회조사국(CRS), ‘대북지원 보고서’에서 제네바합의가 체결된 이듬해인 1995년부터 미국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 에너지, 의약품 등은 금액으로 따져 총 13억 1천 375만 달러(약 1조 4천 870억 원)로 집계
- 4월 5일 | 북한 조평통, 우리 군의 ‘평양 보복타격’과 ‘광명성 3호 위성’ 요격 발언에 대해 “무모한 군사

- 적 도발시 무자비하고 섬멸적인 타격으로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비난
- 만일 그 누가 무슨 구실로든지 우리의 령공, 령해를 한치라도 침범하거나 우리의 위성발사체잔해물에 대한 요격과 회수놀음을 벌린다면 우리는 즉시 가차 없이 무자비하고도 섬멸적인 타격으로 단호히 징벌할 것임.
- 4월 6일 | 북한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 담화 발표
- 북한은 이 담화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첫 노작으로 규정
- 4월 10일 | 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 움직임에 대해 논평
-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도발 행위로 인해 북한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제재를 자초하게 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음.
  - 북한이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해결의 길로 나서기를 촉구함.
- 4월 11일 | 북한, 제4차 당대표자회 개최
-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
- 4월 13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광명성 3호 발사가 4월 13일 오전 7시 38분 55초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진행되었으나, 궤도진입은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보도
- 4월 13일 | 정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성명 발표
- 북한의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임.
  - 우리 정부는 북한의 새 지도부가 국제사회의 일치된 발사 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함. 북한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임.
  - 북한이 만성적 식량부족 등 절박한 민생 문제를 제쳐두고 막대한 재원을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 개발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임.
- 4월 13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 개최
-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
  -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
- 4월 13일 | 미국 벨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식량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언급
- 4월 15일 | 북한, 김일성 100회 생일 대규모 중앙보고대회 개최
- 김정은 군 열병식서 첫 공개연설
- 4월 16일 | 조선신보,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위성’ 발사가 2012년부터 시작된 북한 ‘우주개발 5개년계획’의 첫 단계 사업이었다고 보도
- 4월 16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관련 ‘강력히 규탄하는(strongly condemn)’ 의장성명 채택

- 안보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말 것과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준수하고,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함.

**4월 16일 | 이명박 대통령, 제8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북한이 살 길은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언급**

- 이번 미사일 발사로 지난 2월 29일 북·미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영양 지원 24만 톤도 받을 수 없게 되었음. 북한 주민 세 명 중 한 명이 영양부족에 시달린다는 상황에서 이는 주민들의 식량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음.
- 북한은 변화에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음. 어느 누구도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북한을 위협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음. 북한 스스로 변화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함께 북한과 협력하게 될 것임.

**4월 16일 | 외교부 대변인,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관련 성명 발표**

-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핵 프로그램 폐기를 포함하여 안보리 결의 상 의무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 발사, 핵실험 또는 도발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기존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시 안보리가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한 것을 평가함.

**4월 17일 | 북한 외무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전면 배격하고 우주이용 권리를 계속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

-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보다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하는 보편적인 국제법들에 의해 공인된 자주적인 우주이용권리를 계속 행사해 나갈 것
- 우리는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우주개발기관을 확대강화하고 정지위성을 포함해 경제발전 전에 필수적인 각종 실용위성들을 계속 쏘 올릴 것

**4월 17일 | 미국 마크 터너 국무부 부대변인, “2.29합의는 북한이 한 약속이고, 이에 따라 우리는 영양지원을 검토했던 것”이라면서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해 그들이 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측 약속을 중단한 것”이라고 언급**

**4월 18일 |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 기념행사 기간에 남측 반북단체들의 활동이 “동족의 축제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의 최고 존엄을 함부로 모독”하고 있다고 비난**

- 서울 한복판이 최고 존엄을 모독한 도발원점이 된 이상 모든 것을 날려 보내기 위한 특별 행동 조치를 취할 것임.

**4월 18일 | 일본 요미우리 신문,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 북한의 17개 기관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을 요구했다고 보도**

**4월 19일 |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우리에게는 우주개발기구들을 최첨단 요구에 맞게 확대강화하고 실용위성들을 계속 쏘아 올리는 것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가우주개발계획이 있다”고 주장**

- 지금 미국이 몇 푼어치의 식량 지원 보따리를 흔들면서 우리의 우주개발권리를 빼앗으려 획책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에 지나지 않음.

- 4월 19일 | 미국 패트릭 오라일리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 국장, 상원세출위원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이번 실패는 북한이 우주항공 프로그램에서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
- 4월 20일 | 이명박 대통령, 통일교육원 통일정책최고위과정 강연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 농지개혁 단행을 촉구
- 4월 23일 |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교육원 특강내용(4.20),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의 발언(4.19)에 대해 비난하며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고 위협
- 4월 23일 | 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대남 특별행동 위협과 관련 북한이 대남위협·비난을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올 것을 촉구
- 4월 23일 | 미국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 북한의 ‘대남 특별행동’ 위협과 관련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 북한 정권은 분명히 도발적인 행동으로 알려져 있고, 연속적으로 도발을 해왔다 따라서 도발을 배제할 수 없음.
- 4월 27일 | 북한 김정은, 당·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에게 한 담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 관리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 발표
  - 김정은 두 번째 노작
- 4월 27일 | 38 North, 북한의 과거 핵실험 장소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용 갱도굴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탄광차 행렬과 여타 작업이 위성사진에 포착되었다고 발표
  - 이 사진들을 보면 북한이 지난 몇 달 동안 핵실험 준비를 해왔음이 분명하지만 언제 실험을 단행할 지는 명확하지 않음.
- 4월 27일 | 한·미, 제1차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최근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핵위협 시나리오’를 공동연구·개발하기로 합의
- 5월 1일 | 미국 오바마 대통령, 미·일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
  - 북한의 도발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고립을 심화할 것임.
  - 도발을 통해 관심을 끌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자신들의 좋은 행동을 얻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식의 오래된 패턴은 무너졌음을 북한이 인식해야 한다고 취임 이후 계속 주장했음.
- 5월 2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의 기업 3곳 추가 제재 결정(총 11개 단체)
  - 추가 제재 대상 : 청송연합, 압록강개발은행, 조선홍진무역회사
- 5월 2일 | 프리덤 하우스, ‘2012 국제언론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의 언론 자유상황이 전 세계 197개국 가운데 최악이라고 발표
- 5월 2일 | 세계보건기구(WHO), ‘세계 조산 보고서’에서 북한의 신생아 10명 중 1명은 조산아라고 발표

- 조사 대상 184개국 중 80번째로 높은 수치

5월 4일 | 한국 수출입은행, 북한 조선무역은행에게 북한 식량차관 원리금 상환기일(6.7) 통보

5월 6일 | 북한 외무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 결정에 대해 비난

- 우리는 자위적인 핵 억제력에 기초해 우주개발과 핵동력공업 발전을 추진하면서 강성국가를 보란 듯이 건설할 것임.

5월 10일 | 북한 조평통, 한·미 정부의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비용 문제 지적에 대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 억제력을 비롯한 국방력을 더욱 강화해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끝까지 지켜 나갈 것”이라고 주장

5월 12일 | 통일부 장관, ‘통일항아리’ 제작 행사(경북 문경) 참석

5월 16일 | 세계보건기구(WHO), ‘2012 세계보건통계’에서 북한 주민의 기대수명을 평균 70세로 추정

- 2010년 북한 총인구 2천 434만 6천명, 중간나이를 33세, 북한 인구 중 15세 미만 어린이는 23%, 60세 이상 노인은 14%로 추정

5월 16일 | 미국 하원,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가결 처리

5월 18일 | UNDP, ‘2012 아시아태평양지역 인간개발 보고서’에서 북한 전체 인구 중 26%만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한다고 발표

- 2009년 현재 북한의 전력사정은 20개 아시아 국가 중 5번째로 열악한 수준, 2008년 북한의 1인당 전력 사용량 809kWh에 불과

5월 18일 | 북한 체신성 대변인,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16일간 우리 측 영공과 해상에서 감지된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교란전파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며 우리 정부의 모략 날조극이라고 주장

5월 19일 | G8 정상회담 공동성명, 북한이 도발의 길을 계속 걸을 경우 더 심한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

5월 22일 | 북한 외무성, G8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공화국의 신성한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8개국 집단의 무모한 정치적 도발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비난

-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은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적대시정책 때문에 생겨난 것이며 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억제력은 순간도 멈춤 없이 확대 강화될 것임.  
- 원래 우리는 처음부터 평화적인 과학기술위성발사를 계획하였기 때문에 핵시험과 같은 군사적 조치는 예견한 것이 없었음.

5월 23일 | 미국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대북 식량지원 가능성과 관련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대남비방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

5월 30일 | 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자국을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했다고 보도

6월 4일 |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공개통첩장을 통해 5월 29일부터는 조선일보사, 중앙일보사, 동아



- 일보사의 A채널방송과 KBS, CBS, MBC, SBS방송을 비롯한 언론매체들을 동원하여 일제히 우리 어린이들의 경축행사를 비난하는 여론공세를 펴고 있으며 그것을 계기로 우리의 최고 존엄을 위협하는 새로운 악행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
- 역적패당의 본거지들인 조선일보사는 서울시 중구 북위 37° 56' 83" 동경 126° 97' 65" 위치에, 중앙일보사는 서울시 중구 북위 37° 33' 45" 동경 126° 58' 14" 위치에, 동아일보사는 서울시 종로구 북위 37° 57' 10" 동경 126° 97' 81"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며 KBS, CBS, MBC, SBS 방송국자리표도 확정해놓은 상태
- 6월 4일 | 통일부 대변인,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공개통첩장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발적 행위”로 규정하고 “협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
- 6월 8일 | 한국수출입은행, 대북 식량차관 원리금 연체사실을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통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 지급 요구
- 6월 11일 | 북한 조평통, 공개질문장을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정몽준 전 대표, 김문수 경기지사 등 새누리당 대권주자들의 친북·종북 언행을 공개할 수 있다고 언급
- 남측의 전직, 현직 당국자들과 국회의원들이 평양에 와서 한 모든 일과 행적, 발언들을 전부 공개할 수 있음.
- 6월 12일 | 유엔, 북한의 인권 상황 최신 보고서에서 수많은 북한 어린이가 신체와 정신 발육에 필요한 식품, 의약품,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
- 5세 이하의 북한 어린이 중 3분의 1이 발육이 늦고 특히 농촌의 식량난은 심각하며 깨끗한 물, 위생, 전기 서비스의 접근이 어려워 많은 어린이가 이질로 죽어가고 있음. 병원은 깨끗하지만 텅 비고 물, 전력, 의약품 공급이 부족
- 6월 12일 | 미국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행동으로 평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 6월 13일 |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 대변인, 자국기업이 북한에 탄도미사일 탑재차량을 판매했다는 보도를 비난
- 중국은 대량살상 무기 및 운반 도구의 확산에 결연히 반대하고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와 자체적인 반확산 수출 법규를 준수해 왔음.
- 6월 18일 | 미국 오바마 대통령,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북한은 미국 안보와 외교경제 정책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대북 제재를 1년 연장한다고 통지
- 6월 20일 | UNHCR, 세계 각지에서 난민 자격으로 사는 탈북자가 지난해 말 현재 1천 52명이라고 발표
- 또 난민 지위를 받으려고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탈북자가 작년 말 현재 490명
- 6월 20일 | 미국 상원,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법 개정안을 통과
- 6월 30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어긴 북한의 불법화물이 중국 다롄항에서 최초로 환적 또는 경유해 국제운송망을 통해 이동한다는 내용이 안보리의 문서로 공식 채택

- 7월 2일 | 이명박 대통령, 제19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통일준비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통일재원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언급
- 우리의 마지막 남은 과제는 평화통일임. 평화통일은 우리 세대의 역사적 사명이자, 이제 서둘러 준비해야 할 단계에 왔음.
  - 북한 인권문제는 핵문제와 더불어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로 세계 모든 나라가 큰 관심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음.
- 7월 5일 | 북적, 탈북여성 박정숙 재입북 기자회견을 통해 “괴뢰패당의 비열한 유인·납치·인권유린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사회와 북한 주민의 전원 송환 촉구
- 괴뢰패당에게 속아 남조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나서 자란 조국으로 돌아오는데 대해서는 언제든지 자애로운 품으로 안아 재생의 길을 활짝 열어줄 것임.
- 7월 13일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 한반도 문제 관련국은 어떠한 추가 도발을 해서도 안 되고 유엔안보리 결의와 2005년 6차 회담 공동성명을 준수해야 함.
- 7월 15일 |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리영호 정치국 상무위원 겸 인민군 총참모장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키로 결정
- 7월 16일 | 이명박 대통령, 통일항아리에 금일봉 기부
- 7월 16일 | 통일부 대변인, 북한이 상환 만기가 도래한 대북 식량차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에 유감을 표시, 성실한 이행을 촉구
- 7월 16일 | 북한 조평통, “괴뢰정보기관의 지령을 받고 우리 공화국에 침투하여 동상과 대기념비를 파괴하려던 자들이 적발, 체포됐다”고 주장
- 7월 18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방송·평양방송, 낮 12시 중대보도를 통해 김정은에게 공화국 원수 칭호 수여 결정 보도
- 7월 19일 | 북한이 주장한 탈북자 테러범 전영철,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정부의 지령을 받아 김일성 동상파괴 계획에 가담했다고 주장
- 7월 20일 | 북한 외무성, 탈북자 전영철씨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제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주장
- 7월 25일 | 북한 외무성, 정전협정체결 59주년 즈음 담화에서 미국에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용단 촉구
- 7월 29일 | 북한 국방위원회, 전영철 사건과 관련 “공화국을 겨냥한 미국의 국가정치테러에 강한 물리적 대응 공세로 맞설 것”이라고 위협
- 7월 31일 | 북한 외무성, 미국 고위당국자들이 북한을 집중적으로 걸고드는 정치적 도발행위를 감행하고 있다고 비난
- 미국의 적대시정책에는 핵억제력 강화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선택임.

- 8월 8일 | 한적, 이산가족 상봉행사 협의를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
- 8월 9일 | 북적, 5.24조치 해제·금강산 관광 재개를 구실로 우리 측 제의(8.8) 사실상 거부
- 8월 15일 | 이명박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은 실질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평가
  -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은 물론 6자회담의 합의일 뿐만 아니라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함.
  - 통일 한국이야말로 '더 큰 대한민국'의 도약대임. 앞으로 정부는 상생공영의 길을 여는 노력에 더하여 통일준비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임.
- 8월 18일 |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현행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에 서명
- 8월 20일 | 한적, 국제적십자연맹(IFRC)을 통해 북한에 수해복구 관련 10만 불 지원 발표
- 8월 20일 | 북한 외무성,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에 대해 "공화국을 노린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
- 8월 25일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 영도 개시 52주년 '8.25 경축연회'에서 연설
  - 나는 이미 서남전선의 최전방부대에 나가 만약 적들이 우리 영토와 영해에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즉시 섬멸적 반타격을 안기고 조국통일 대업을 성취하기 위한 전면적 반공격전 이행에 대한 명령을 전군에 하달했으며 이를 위한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최종수표했음.
- 8월 27일 | 국토해양부 장관, 2009년 남북 간 합의대로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할 것을 촉구하는 대북 전통문 발송
- 8월 31일 | 북한 외무성, 비망록에서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 "미국이 끝내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의 핵 억제력은 미국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화되고 확장될 것"이라고 위협
  - 조선반도 핵문제도 다름 아닌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며 따라서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포기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문제임.
- 9월 3일 | 한적, 대북 수해지원을 위한 실무접촉 제의
- 9월 10일 | 북적, 우리정부의 대북 수해지원 제의에 수용의사를 통보하면서, 지원 품목과 수량을 알려달라고 요청
- 9월 11일 | 한적, 통지문을 통해 밀가루 1만 톤, 라면 300만개, 의약품 및 기타 물품 등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전달하고자 하며, 추가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북측과 조속히 협의하자고 제안
- 9월 12일 | 북적, 수해지원 관련 지원 품목 및 수량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지원 거부 통보
- 9월 15일 | 북·중, 황금평 경제특구 관리위원회 청사 착공식
- 9월 21일 | 해군, NLL 침범한 북한 어선에 경고 사격

- 9월 22일 | 북한 조선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 우리 군의 NLL 침범 북 어선에 경고사격을 가한 것에 대해 “북방한계선을 마치 우리 어선들이 넘은 것처럼 거짓과 억지주장을 꾸며냈다”고 주장
- 9월 25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개최
  -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법령 발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2명의 보선과 예산위원회 위원장 교체
- 9월 27일 | 한국수출입은행,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대북 식량차관 연체 원리금 상환 촉구
- 9월 27일 | 북한 조평통,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5.16 쿠데타’와 ‘유신’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의 술수에 속지 말고 제2의 유신독재 부활을 허용하지 말며, 반대 배격에 나설 것”을 선동
- 9월 27일 | 북한, 평안남도 서해안에서 지대함 단거리미사일 1발 시험발사
- 9월 28일 | 북한 외무성, 미국의 미얀마 대북관계 단절 요구에 대해 “우리를 고립 압살해 보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난
- 9월 28일 | 통일부 대변인, 북한 조평통 대변인이 우리 내부의 대선과 관련한 명시적 언급(9.27)을 한 것은 도를 넘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 촉구
- 9월 29일 | 북한 국방위 정책국, 서해 5개 섬 주변 수역에서 우리 측이 영해 깊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난
  - 북방한계선은 유엔군의 병거지를 뒤집어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군이 우리의 신성한 영해에 제멋대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유령선
  - 북방한계선 고수주장은 우리의 국가주권과 영해에 대한 침범을 정당화하려는 궤변이며 우리의 국방과 안전을 해치려는 로골적인 침략행위
- 10월 5일 | 조선신보, 남한의 차기 정권이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면 북한도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이라고 언급
- 10월 6일 | 북한군 1명, 경의선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
- 10월 10일 | 북한 조평통, 한미 양국 간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포함한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 “미사일 정책선언은 우리에게 대한 선제공격 선포이며 전면전의 도화선에 불을 달리는 노골적인 도발”이라고 비난
- 10월 10일 | 북한 외무성, 미국이 미사일 발사를 자제해 온 북한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한미 양국의 새 미사일지침을 비난
  - 지금까지 미국은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도 탄도미사일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제재소동을 고취해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군사적 목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단행해도 할 말이 없게 됐음.
- 10월 13일 | 금강산 신계사 복원 5돌 기념 ‘남북불교도합동법회’ 개최
  - 조계종 지홍 스님(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등 19명 방북

- 10월 15일 | 북한 어선 1척, 백령도 인근 NLL 월선, 우리 군의 경고통신 후 복귀
- 10월 18일 | 이명박 대통령, 서해안 북방한계선(NLL) 인근인 연평도 군 기지 방문  
- 통일이 될 때까지는 우리 NLL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전 해병 장병들이 인식을 해야 함. 요즘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군은 통일 될 때까지는 NLL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며, 그 선을 잘 지키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됨.
- 10월 19일 | 북한 조선인민군 서부전선사령부, 탈북자단체들이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날릴 계획을 발표  
한데 대해 “임진각과 그 주변에서 사소한 빼리살포 움직임이 포착되는 즉시 서부전선의 경고  
없는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  
- 지금 이 시각부터 괴뢰들의 빼리살포지점으로 공개된 파주시 임진각과 그 주변은 우리 군  
대의 직접적인 조준격과사격 대상이 될 것
- 10월 19일 | 북한 어선 1척, 연평도 서북방 NLL 월선, 우리 군의 경고통신 후 복귀
- 10월 19-20일 | 통일부, 민간단체를 방문하여 전단살포를 자제할 것을 요청
- 10월 20일 |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이명박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10.18) 발언에 대해 “국제법  
적 근거도 없고 정전협정에 전면 배치되는 유령선”이라며 “서해바다를 아무선도 없는 바다로  
만들어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위협
- 10월 20일 |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이명박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10.18) 발언에 대해 “조국이 통일되는  
날까지 조선 서해에는 북방한계선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 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하  
게 될 것”이라고 주장
- 10월 22일 | 국내 탈북자 단체가 임진각에서 계획했던 대북 전단지 살포 경찰의 임진각 진입로 통제로 무산
- 10월 22일 | 미국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특별대표, 북한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발표를 구실로 임진  
각을 직접 타격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 위협적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
- 10월 25일 | 북한 외무성, 미국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특별대표 발언(10.22)에 대해 “미국이 9.19공동성  
명에서 공약한 자기의 의무는 전혀 리행하지 않고 우리보고만 리행하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  
단”이라고 주장
- 10월 25일 | 북한 경비정 1척, 백령도 인근 NLL 침범, 우리군의 경고 사격 후 복귀
- 11월 1일 | 북한, 한미 양국이 제44차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증진 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재확인한 것에  
대해 “위험천만한 흥계”라고 비난
- 11월 3일 | 북한 조평통, “남조선 각 계층은 새누리당의 재집권 기도를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대  
선을 계기로 정권교체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11월 4일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개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국가  
체육지도위원회를 내올데 대하여》 채택  
- 체육지도위원장에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 11월 8일 | 북한 조평통, 박근혜 대선 후보가 최근 발표한 대북정책 공약을 ‘전면대결공약’이라고 비난  
- 이번 공약으로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대결이 한층 첨예화돼 북남관계가 더욱 파국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내외의 우려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음.
- 11월 15일 | 북한 노동신문, ‘실패한 대북정책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라는 글에서 남한의 차기 정권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경우 그동안 중단된 남북한 협력 사업이 전면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
- 11월 15~16일 | 북·일 국장급 회담 개최(몽골)  
- 후속회담 조기 개최 합의
- 11월 26일 | 북한, ‘전국 사법검찰일꾼 열성자대회’ 개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보낸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법검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란 제목의 서한 전달  
- 사법검찰일꾼들은 비사회주의적 현상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법적으로 엄격히 다스려 온 사회에 혁명적인 생활기풍이 차 넘치도록 하라
- 11월 28일 | 유엔 총회 제3위원회,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결의안을 처음으로 표결절차 없이 컨센서스(의견일치)로 채택
- 11월 29일 | 북한 외무성,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적들의 정치모략 선전물”이라고 비난
- 12월 1일 |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공식 발표  
- 이번에 쏘아 올리는 광명성-3호 2호기 위성은 전번 위성과 같이 극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 관측위성으로서 운반로켓은 은하-3으로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남쪽방향으로 12월 10일부터 22일 사이에 발사하게 됨.
- 12월 1일 | 외교통상부, 북한의 소위 실용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  
- 북한이 재차 발사를 시도하려는 것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한 엄중한 도발이자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
- 12월 1일 | 일본 정부, 북·일회담(12.5~6, 베이징) 연기 발표
- 12월 1일 | 미국 국무부,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강력 대응할 것임을 경고
- 12월 1일 | 북한 조평통,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공개질문장 발표  
① 6.15, 10.4선언 이행, ② 자유민주주의질서에 기초한 통일, ③ 선택포기, ④ 한미동맹 강화, ⑤ 북한 인권법 제정, ⑥ 5.24조치 해제, ⑦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승계 여부
- 12월 4일 | 중국 외교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큰 틀에서 출발해 신중히 행동하기 바란다”는 입장 발표
- 12월 5일 | 통일부, 제2 하나원 개원식 개최

- 12월 6일 | 북한 조평통,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는 “우리에 대한 적대분위기를 조성하여 반복 국제공조를 실현해보려는 흉책”이라고 비난
- 12월 6일 | FAO, 북한을 식량부족국가로 재지정
- 12월 7일 | 조선신보,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의 필수적 공정’이라는 글에서 “광명성 3호 발사가 성공해야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며 “다음 단계는 정지위성의 개발이다. 은하 3호보다 더 큰 대형 운반 로켓의 개발에도 착수한다”고 설명
- 12월 8일 |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진상공개장에서 “금강산관광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재개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그 어떤 구실도 있을 수 없다”고 언급
- 12월 9일 |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일련의 사정이 제기되어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광명성-3호 2호기 발사시기를 조절하는 문제를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
- 12월 10일 |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광명성-3호 2호기 운반로켓의 1계단 조종 발동기 계통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어 발사예정일을 12월 29일까지 연장하게 된다”고 발표
- 12월 12일 | 북한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운반로켓 은하3호를 통한 광명성-3호 2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다”며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다”고 보도
- 12월 12일 | 정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 12월 12일 | 북한 미사일 발사관련 정부 성명 발표
  - 북한의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및 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도전이며 위협임.
  - 북한은 이번 발사로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임.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허비하는 막대한 재원을 절박한 민생 문제 해결에 사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 12월 12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가 명백한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규탄
- 12월 12일 | 북한 외무성,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김정일 동지의 유훈이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발전 계획에 따르는 평화적인 사업”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
  - 누구 뭐라고 하든 합법적인 위성발사권리를 계속 행사하면서 우주를 정복해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할 것임.
- 12월 14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2일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찾아 장거리 로켓 ‘은하3호’의 발사를 현장에서 지휘했다고 보도
- 12월 14일 | 북적, 한적이 최근 이산가족 모습을 담은 영상편지를 제작해 북한에 보내기로 한 것에 대해 “재집권 기도를 위한 유치한 술책”이라고 비난
- 12월 16일 | 북한 노동신문, ‘악몽의 5년은 절대로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원의 글에서 “남조선에서 진정으로 평화와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번영을 바라는 민주정권이 선다면 기꺼이

함께 손잡고 나갈 것"이라고 주장

- 12월 19일 | 대통령 선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당선
- 12월 20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내외신들 보도 인용 “대선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새누리당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다”고 간략 보도
- 12월 20일 | 국방부, 12월 22일 ~ 1월 2일간 애기봉 점등계획 발표
- 12월 20일 | 유엔 총회 본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절차 없이 컨센서스(의견일치)로 최종 채택  
- 결의안은 북한의 주변국이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지 말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김정은 체제 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희망하는 내용 포함, 고문과 불법적 자의적 구금, 연좌제, 사상과 표현 및 이동의 자유 제한, 여성 어린이 등 취약 계층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도 포함
- 12월 21일 | 조선신보, ‘실패한 대결정책과의 결별을 요구’라는 글에서 “대결인가 대화인가, 전쟁인가 평화인가, 북남관계 파탄인가 개선인가, 제2의 이명박인가 아닌가라는 물음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조선의 변함없는 관점과 입장”이라고 보도
- 12월 21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지난 11월 3일 라선시에서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였던 미국공민 배준호가 반공화국적대범죄를 감행한 것으로 하여 해당기관에 억류되었다고 보도  
- 배준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금 법적취급을 받고 있음.
- 12월 21일 | 국방부, 2012 국방백서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1953년 8월 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규정
- 12월 23일 | 국방부, 12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의 1단 추진체 잔해물 3점이 추가로 수거됐다고 발표  
- ‘은하-3호’의 1단 추진체 연료통으로 추정되는 잔해 수거(12.14)
- 12월 24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서부전선 애기봉 등탑 점등에 대해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킴으로써 대결정책이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을 꾀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 지역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위협
- 12월 28일 | 북한 조평통, 국방부가 2012 국방백서에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공식화 한데 대해 “전쟁의 불씨를 다음 정권에 넘겨주어 대결정책의 실패를 만회해보려고 최후발악을 하고 있다”고 비난  
- 조선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우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미국이 남의 집 마당에 제멋대로 그 어놓은 이러한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이 정전협정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날강도적인 불법·무법선이라는 것을 논할 여지도 없음. 그것은 영해권에 대해 규정한 국제해양법을 비롯한 국제법과 규범들을 난폭하게 무시한 비법선임.



## 2013년

- 1월 1일 | 이명박 대통령, 신년사에서 튼튼한 안보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북한주민의 마음과 삶 속에 시작된 조용한 변화의 움직임이 통일의 큰 물결로 넘쳐흐르길 소망한다고 언급
- 1월 1일 | 이명박 대통령, 백령도에 근무 중인 해병대 6여단장 조동택 준장과의 통화에서 “북방한계선(NLL)은 남북통일까지 우리의 영토선이자 평화선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고 발언
- 1월 1일 | 북한 김정은, 육성으로 신년사 발표  
-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어 올해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  
- 김정일 사망 이후 19년 만에 북한 지도자 신년사 육성 낭독
- 1월 2일 | 류우익 통일부 장관, 신년사에서 대북정책의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성을 확대, 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를 해결, 통일 준비에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고 실천을 담보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
- 1월 2일 | 북한 국방위원회, 이명박 대통령의 NLL 사수 발언(1.1)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새해 첫 장관 서신(북 위협예상, 국방태세 강조) 등을 동족대결소동이라고 비난
- 1월 3일 | 북한 조평통, 이명박 대통령의 NLL 사수 발언(1.1)에 대해 “동족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자들은 과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하며 “우리는 남조선 당국의 금후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
- 1월 3일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 국무부의 난민입국보고서를 인용해 2012년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총 23명이라고 보도
- 1월 3일 | 미국 하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을 규탄하는 결의안 통과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여러 결의를 위반한 것임을 밝히고 중국에 대해 대북 제재에 적극 참여·협조하고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
- 1월 7~10일 | 미국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 방북  
- 인민대학습당과 조선컴퓨터센터 등 방문
- 1월 9일 | 북한 노동신문, ‘대결상태 해소는 조국통일을 위한 선결 과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6.15선언과 10.4선언 등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남북간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주장
- 1월 9일 | 조선신보, ‘좀 두고보자’라는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박근혜의 선거공약이 빈말인가 어떤가를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
- 1월 14일 | 북한 외무성, 비망록을 통해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며 주한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촉구
- 1월 18일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중국 국가여유국 자료를 인용 2012년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총 18만600명으로 2011년 보다 18.6% 증가했다고 보도

- 취업목적 근로자 7만9천6백 명(44%), 사업목적 방문자 5만2천2백 명(31%)

1월 21일 | 조선신보, '정전 60년을 평화실현의 원년으로/조선의 경제부흥전략과 전쟁종결'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지난해 미국 NSC와 CIA 관계자를 통해 핵문제와 관련한 최후통첩을 미국 정부에 보냈다고 보도

1월 23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 2087호 만장일치 채택  
- 북한의 기관 6곳, 개인 4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  
- 안보리 결의에는 북한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공해상의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 이용 수법의 환기, 전면적 성격의 대북 수출 통제 강화 등의 조치 포함.

1월 23일 | 북한 외무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대해 비난 성명 발표

- ① 평화적위성발사권리를 말살하려는 유엔안보리장리사회의 부당천만한 처사를 단호히 규탄 배격함.
- ② 국제법에 따라 자주적이며 합법적인 평화적위성발사권리를 계속 당당히 행사해 나갈 것임.
- ③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비핵화도 불가능하다는 최종결론을 내리었음.
- ④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임.

1월 23일 | 외교부 대변인,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 채택관련 환영 논평

- 정부는 이번 결의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의 위반으로 규탄하면서, 제재 대상 개인·단체 및 품목의 추가 지정 등 기존 결의 1718호와 1874호 상의 대북 제재 조치를 강화·확대하고 있음을 평가함.

1월 23일 | 중국 외교부,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 채택에 대해 전체적으로 신중하고 적절하며, 균형이 잡히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 발표

-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가기 위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세를 악화시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야 함.

1월 24일 | 북한 국방위원회,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 채택에 대해 전면 배격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주장

-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실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될 것임.

1월 24일 |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조치를 거부할 경우 계속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고 언급

1월 24일 | 미국 백악관, 정레브리핑에서 북한의 성명(1.24)은 불필요하게 도발적이며, 추가 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될 것이라고 언급

1월 24일 | 중국 외교부, 정레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예고한 것에 대해 현재 한반도 정세가 매우 복

잡, 민감한 상태이므로 관련 당사국이 냉정을 유지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라고 번갈아 가면서 정세를 격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

- 1월 24일 | 북한 조선중앙방송, 재입북자 김광호 부부·고경희 기자회견 진행 보도
- 1월 25일 | 북한 조평통,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 채택과 관련하여 '우리의 정의의 위업에 감히 맞서는 자들은 무서운 보복과 철추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성명 발표
  - ① 미국과 함께 반공화국 핵, 미사일소동에 더욱더 엄중히 매달리는 조건에서 앞으로 북남사에 더이상 비핵화론의는 없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1992년에 채택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완전백지화, 전면무효화를 선포함.
  - ② 반공화국적대정책에 계속 매달리는 한 우리는 그 누구와도 절대로 상종하지 않을 것임.
  - ③ 유엔 제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임. 제재는 곧 전쟁이며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임.
- 1월 26일 | 북한 김정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 소집
  - 세계의 비핵화 실현 전에는 한반도 비핵화도 없음.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강도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결심을 표명, 해당부문에 구체적 과업 제시
- 1월 28일 | 미국 국무부, 북한 핵실험 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87호가 명시하듯이,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
- 1월 28일 | 조선신보, '우리민족끼리가 유일한 출로'라는 시론에서 차기 박근혜 정권이 2000년 6월 첫 남북 정상회담의 화해·협력 정신을 가리키는 '6.15 정신'으로 전환할지 주목한다고 보도
- 1월 28-29일 | 북한, 제4차 전당 당세포비서대회 개최
  - 김정은 개회사(1.28), 연설(1.29), 폐회사(1.29)
  - 2007년 10월 이후 5년만에 개최
- 1월 31일 | 이명박 대통령,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 소집,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대책 논의
- 2월 2일 | 북한 외무성, 미국정부가 한국의 나로호 발사를 두둔하면서 자신들의 위성발사를 부정하는 것은 이중기준의 적용이라고 비난
- 2월 2일 | 북한 조평통,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1.31) 소집과 관련하여 "만약 누가 그 어떤 형태의 제재로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털끝만치라도 건드린다면 무서운 보복의 불벼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비난
- 2월 3일 | 북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개최
  - 군력강화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문제와 조직문제 토의, 김정은이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나가는 데서 강령적 지침으로 되는 중대한 결론 도출
- 2월 4일 | 조선신보, '개성공업단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촉구
  - 개성공업단지와 금강산관광은 북남화해와 경제교류의 상징적인 사업임.

- 2월 4~6일 | 한·미연합 해상훈련 실시(핵잠수함, 이지스함 등 참여)
- 2월 6일 | 북한 민족경제협력위원회, 통일부의 외교통상통일위 보고자료(2.4, 개성공단 등 대북반출 물품 점검 강화 등)에 대해 “반공화국 대결망동,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  
- 만일 그 누가 어떤 형태로라도 공업지구를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에게 대한 극악한 제재로 간주하고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모든 특혜를 철회하고 그 지역을 우리의 군사지역으로 다시 만드는 등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
- 2월 9일 |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10대 죄행록에서 이명박 정부의 5년간 대북정책 평가 비난
- 2월 11일 |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개최  
- 광명성계열의 인공지구위성과 위력한 장거리로켓들을 계속 발사할 것이라고 강조
- 2월 12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3차 핵실험(11:57,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발표  
- 주체102(2013)년 2월 12일 북부지하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음.  
- 핵시험은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평화적위성발사 권리를 란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
- 2월 12일 | 이명박 대통령, 북한 3차 핵실험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개최
- 2월 12일 | 정부, 북한 3차 핵실험 관련 성명 발표  
- 북한은 도발행위로 야기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  
-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핵포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 2월 12일 | 북한 외무성 대변인, 3차 핵실험을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한 1차적 대응조치라며 미국이 끝까지 적대적으로 나오면서 정세를 복잡하게 하면 2, 3차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
- 2월 12일 | 이명박 대통령·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긴급회동
- 2월 12일 | 북한 핵실험과 관련 유엔안보리 언론 성명, 미 백악관 성명, 중국 외교부 성명, 일본 총리 성명 발표
- 2월 13일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  
- 국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
- 2월 13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조선반도 사태악화의 책임은 도발자들이 져야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오늘의 조선반도 정세는 자그마한 우발적 사건에도 능히 지역전체를 뒤흔들어 전면전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엄혹하고 침예한 상태”라고 주장
- 2월 14일 | 북한 노동신문,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라는 정론에서 “제국주의가 핵무기를 잡으면 우리도 핵무기를 잡아야 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면 우리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해야 하며

- 그 어떤 우주 무기로 위협하면 우리도 우주 무기로 원수들에게 공포를 줘야 한다”고 주장
- 2월 14일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북한의 핵확산 및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A bill to prevent nuclear proliferation in North Korea, and for other purposes S.298)’ 통과
- 2월 19일 | 제네바 주재 북한 유엔대표부, 유엔 군축회의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끝까지 적대적인 접근을 하면 북한으로서는 계속해서 제2, 제3의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위협
- 2월 23일 | 북한 박림수 관문점대표부,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 등과 관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화통지문 발송을 통해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들의 시간은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시간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
- 2월 25일 |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고 언급
  -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국민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임.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람.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고자 함.
  -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는 쌓일 수 있음.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람.
- 2월 26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광명성-3호 2호기’를 인공위성으로 등록하는 문건을 유엔에 제출 보도
  - 최근 유엔우주사무소는 광명성-3호 2호기 등록과 관련 유엔공식문건(ST/SG/SER.E/662)을 작성하여 유엔우주사무소웹사이트 위성등록부와 유엔전자문서고웹사이트에 각각 게재함으로써 위성등록사업 완결
- 2월 27일 | 조선신보, 박근혜 대통령 취임을 전하면서 취임사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조선반도 핵문제의 본질을 왜곡해 전제조건을 내걸면 아무런 진전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 ‘잃어버린 5년’이 남긴 교훈”이라고 강조
- 2월 27일 | 북한 대표, 제네바군축회의 전원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미국의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대처한 단호한 조치라고 주장
- 3월 1일 | 박근혜 대통령, 제9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신뢰를 쌓아서 행복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언급
- 3월 5일 |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키 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대응해 취하게 될 중대조치 발표
  - ① 이미 우리가 천명한대로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보다 강력한 실제적인 2차, 3차 대응조치를 련속 취하게 될 것임.
  - ② 조선정전협정을 완전히 백지화해 버릴 것임.
  - ③ 조선반도의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협상기구로서 우리 군대가 잠정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

던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의 활동도 전면중지하게 될 것임.

- 3월 6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이 발표한 중대조치는 반미대전의 최후승리를 위한 결정적 조치라고 강조
- 3월 6일 | 합동참모본부, 대북 경고 성명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
- 3월 7일 | 북한 외무성, 키 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선제타격을 노린 북침핵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선포한 보다 강력한 2차, 3차 대응조치들을 더욱 앞당기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
- 3월 8일 |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094호 채택
- 3월 8일 | 북한 조평통, 키 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침략행위로 “정전협정이 백지화되는 3월 11일부터 남북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 것”이라고 선언
  - ①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 것을 공식 선언함.
  - ② 오늘의 엄혹한 사태로 하여 판문점 연락통로가 더는 자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그의 폐쇄를 선포함. 그에 따라 북남직통전화를 즉시 단절한다는 것을 통고함.
  - ③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완전 백지화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천명함.
- 3월 8일 | 통일부 대변인, 북한 조평통의 〈남북간 불가침에 관한 합의〉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파기선언 성명에 대해 유감 논평
- 3월 8일 | 국방부 대변인, 조평통 성명과 관련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한다면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인류의 의지로 김정은 정권은 지구상에서 소멸될 것이라고 논평
- 3월 8일 | 박근혜 대통령, 2013년 장관 합동임관식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처할 것이나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선다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해서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과 조국 통일의 길을 탄탄히 닦아 나갈 것이라고 연설
- 3월 8일 | 북한 조평통, 합동참모본부의 대북입장 발표(3.6) 관련 북한 지휘세력 응징을 시도하는 순간 청와대는 박살나고 서울이 불바다 천지가 될 것이라고 위협
- 3월 9일 | 북한 외무성,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대해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비난 성명 발표
  - 이제 세계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도용해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조작해 낸 대가로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와 위성 발사국 지위가 어떻게 영구화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임.
- 3월 11일 | 북한 조평통,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 시작에 대해 “최소한의 전쟁억제 장치였던 정전협정과 불가침 합의들은 전면 폐기되게 됐으며 전쟁을 막을 제동장치가 완전히 풀린 조선반도 정세는 이제 사정없이 전쟁폭발의 길로 질주하게 됐다”고 비난
- 3월 12일 |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정전협정 관련 규정과 일반적인 국제법적 원리에 비춰봐도 (북한의) 일방적 폐기 또는 종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언급

- 3월 12일 | 북한 노동신문, 정전협정의 일방적인 폐기가 불가능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협정 당사자가 아닌 남한 정부는 “정전협정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
- 3월 13일 | 북한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합동참모본부의 대북입장 발표(3.6)에 대해 “이땅에 이제 더는 정전협정의 시효도, 북남불가침선언에 의한 구속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며, 남은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행동, 무자비한 보복행동 뿐”이라고 위협
- 3월 14일 | 북한 외무성, 정전협정은 다른 협정들과 달리 특성상 협정 체결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준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백지화되는 것이라고 주장
- 3월 15일 | 북한, 단거리 미사일 두발 동해서 시험발사
- 3월 16일 | 북한 외무성, 미국 고위당국자들이 “우리의 핵보유 때문에 정세가 격화된 듯이 사태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하여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정한 선군의 항로를 따라 끝까지 끝바로 나갈 것”이라고 주장
- 3월 17일 | 북한 우리민족끼리,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개 섬과 군사분계선 지구에 사는 주민은 피난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위협 보도
- 3월 18일 | 북한 조평통, 우리 정부의 유엔의 북한 인권조사기구 설립 논의 동참을 비난하며 “남조선은 세계 최대의 인권유린지대”라고 비난 하는 백서 발표
- 3월 20일 | 북한 조평통, 미국 애슈턴 카트 국방부 부장관의 방한을 비난하며 “미국은 전략폭격기 B-52 든 핵잠수함이든 우리의 조준타격권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위협
- 3월 20일 | 북한 외무성, 미군의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재차 출격하면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주장
- 3월 21일 | 북한 조선인민군 방송, 전체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공습경보’ 발령(09:30)·해제(10:28)
- 3월 21일 | 북한 최고사령부, 미국 전략폭격기 B-52·핵잠수함의 한미 훈련 참가 등에 대해 “미국의 핵공갈과 위협”이라며 “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강한 핵공격으로 맞설 것”이라고 주장  
- 미국은 B-52가 이륙하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와 핵잠수함이 발진하는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의 해군기지도 우리 정밀타격 수단의 타격권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
- 3월 22일 |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규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무 1년 연장  
- 북한 인권 상황 및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1년간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창설 규정
- 3월 22일 | 북한 외무성,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대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해마다 벌여놓는 반공화국 인권결의 채택 늘음은 정치협잡행위”라고 비난
- 3월 22일 | 통일부, 유진벨 재단 결핵약품(6억 7,800만원 상당) 대북지원 승인
- 3월 24일 | 조선신보, ‘전쟁방지의 방도는 조미 대결사 청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북 압박과 대화 노력을 병행하는 미국 정부의 대북 투트랙 전략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

- 3월 26일 | 박근혜 대통령,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식에서 북한주민들은 굶주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체제유지를 위해 핵무기 개발에 국력을 집중하는 것은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며 북한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
- 3월 26일 |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B-52폭격기 훈련, 천안함 폭침 북한과 연계, 김일성부자 동상 타격 등 거론,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 단호한 대응의지를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
- 3월 26일 | 북한 외무성, 한미의 핵전쟁 도발책동(B-52폭격기 훈련, 공동 국지도발대비 계획, 김일성부자 동상 타격 등)으로 한반도에 핵전쟁 상황이 조성되었다는 점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개 통고한다고 언급
- 3월 26일 | 북한 조평통, 우리 일부 언론이 보도한 김일성부자 동상 타격 계획 관련 “남조선의 새정권이 동족대결의 길로 나서고 있다”고 비난
- 3월 27일 | 북한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단장, 남북 군통신 단절 및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군통신연락소 북측 인원 활동 중지 통보
- 3월 27일 | 북한 조평통,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사와 3.1절 기념사 발언에 대해 “동족대결을 추구하면서 신뢰프로세스니, 대화니 하는 것은 한갓 위선과 자기기만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
- 3월 29일 | 북한 김정은, 0시 30분 전략로케트군 화력타격임무수행 관련 작전회의 긴급소집 및 화력타격 계획 최종 비준
- 3월 30일 |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차단·폐쇄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위협
- 3월 30일 | 북한,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 발표
- ① 이 시각부터 북남관계는 전시상황에 들어가며 따라서 북남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에 준하여 처리될 것임.
  - ② 미국과 괴뢰패당이 서해 5개섬이든 군사분계선일대이든 그 어느 지역에서든지 북침전쟁의 불을 지르기 위한 군사적도발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국지전으로 한정되지 않을 것이며 전면전쟁, 핵전쟁으로 번져지게 될 것임.
  - ③ 우리는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것임.
- 3월 31일 | 북한 당중앙위 전원회의 개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4.1)에 제출할 간부문제 및 조직문제에 대한 의정들을 상정, ‘경제·핵무력병진노선’ 채택
- 4월 1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 개최
- ① 사회주의헌법 일부 수정보충, ② 금수산태양궁전법, ③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강화할데 대한 법령, ④ 우주개발법, ⑤ 국가우주개발국을 내용에 대한 결정, ⑥ 내각의 2012년 사업 정형과 2013년 과업 대하여, ⑦ 201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13년 예산에 대하여, ⑧ 조직문제 채택



- 4월 1일 | 북한, 2013년 새학년 시작, 올해부터 중학생은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나뉘며 소학교의 5년제는 다음해부터 실시
- 4월 2일 | 북한 원자력총국, 영변의 모든 핵시설 및 가동중지되었던 5MW 흑연감속로를 재가동 조치할 것이라고 주장  
- 우리나라 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함께 2007년 10월 6자회담 합의에 따라 가동을 중지하고 무력화하였던 5MW 흑연감속로를 재정비, 재가동하는 조치도 포함되게 됨.
- 4월 3일 | 북한, 개성공단 출경 차단  
- 남으로의 입경은 허용
- 4월 4일 |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미국 무력증강(B-52, F-22편대) 배치와 관련하여 “우리 식의 첨단 핵타격수단으로 여지없이 짓부셔 버리게 될 것이며 이와 관련한 우리 혁명무력의 무자비한 작전이 최종적으로 검토, 비준된 상태에 있음을 정식으로 백악관과 펜타곤에 통고”한다고 발표
- 4월 4일 | 북한 조평통, “남조선 괴뢰패당과 보수언론이 못된 입질을 계속하면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 근로자들을 전부 철수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
- 4월 5일 | 북한 외무성, 평양주재 외국공관·유엔 기구들에게 4월 10일까지 철수 1차 권고
- 4월 7일 | 북한 김영철 정찰총국장, 평양주재 외국공관·유엔 기구들에게 철수 2차 권고
- 4월 8일 | 북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 담당비서, ‘개성공업지구사태와 관련한 중대조치를 취함에 대하여’ 담화 발표  
- 개성공업지구 종업원 전부 철수, 개성공업지구사업 잠정중단, 존폐여부 검토
- 4월 8일 | 북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 담당비서, 개성공업지구 방문  
- 대책협의에서 공업지구의 운명이 경각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언급과 어떤 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는 데 대한 과업 지시
- 4월 9일 |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한반도 정세 관련 전쟁이 터지는 경우 남한에 있는 외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모든 외국기관 등 외국인들이 신변안전을 위해 사전대피 및 소개대책 세울 것을 주장
- 4월 11일 |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박근혜 정권까지 우리와의 대결을 추구한다면 개성공업지구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고 주장
- 4월 11일 |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 정상화는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북한 당국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촉구
- 4월 11일 | 박근혜 대통령, 국회 외교통일위·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한반도 프로세스는 반드시 가동돼야 한다”며 “북한과 대화를 할 것임. 그 일환으로 통일부 장관 성명을 발표 한 것”이라고 발언
- 4월 11일 | 미국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

은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4월 12일 | 미국 존 케리 국무부 장관,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핵없는 한반도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언급

- 북한은 국제적인 의무, 국제적인 표준, 자신들이 수용한 약속을 받아들여야 하며,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가야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임.

4월 13일 | 한·미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 발표

- 북한은 핵무기와 경제 건설의 병행을 결코 성공할 수 없음. 북한이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한다면 9.19 공동성명에 다른 공약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

4월 14일 | 북한 조평통,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의 대화제의(4.11)에 대해 “교활한 술책이자 내용이 없는 빈껍데기”라고 비난하며 “앞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고 주장

4월 15일 | 박근혜 대통령, 한반도 평화와 국민행복을 위한 기원대법회 축사에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우리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의 길로 함께 나갈 것”이라고 언급

4월 16일 |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김정은 사진이 붙은 모형을 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것에 대해 비난하며 “최고존엄을 어떻게 받들어 모시고 지키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우리 혁명무력의 정정당당한 군사적시위행동이 즉시에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

4월 16일 | 북한 외무성, 미국의 대화제의를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진정한 대화는 오직 우리가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막을수 있는 핵억제력을 충분히 갖춘 단계에 가서야 있을 수 있다”고 주장

4월 18일 | 북한 조평통,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북침전쟁연습소동에 계속 매달리며 반공화국 제재책동에 광분하는 한 그 어떤 남북대화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

4월 18일 |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사태수습 발언(4.11)에 대한 원칙적 입장 발표

- ① 지금까지 우리를 반대하여 벌려온 모든 도발행위들을 즉시 중지하고 전면 사죄하여야 함.
- ② 다시는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거나 공갈하는 핵전쟁연습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것을 세계 앞에 정식으로 담보하여야 함.
- ③ 당면하여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끌어들이는 핵전쟁수단들을 전면적으로 철수하고 재투입 시도를 단념할 결단을 내려야 함.

4월 23일 | 북한 외무성, 미국이 발표한 2012년 인권보고서에 대해 “우리 사회주의제도를 무너뜨리려는 음모”라고 비난

4월 24일 | 한중 외교장관 회담 개최, 중국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

4월 25일 | 통일부 대변인,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 당국에 공식 제의

- 북한이 당국 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

- 북한 당국은 내일(4.26) 오전까지 우리의 당국 간 실무회담 제의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임.
- 4월 26일 |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통일부 대변인 회담 제의(4.25)에 대해 “우리를 우롱하는 최후통첩식 중대조치”라고 비난하며, “우리가 먼저 중대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
- 4월 26일 | 통일부 장관, 대한민국 정부 성명 발표
  -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잔류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음.
  - 입주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을 다해 나갈 것임.
- 4월 27일 |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업지구가 완전히 폐쇄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이 지게 될 것이라며 비난
- 4월 27일 | 외교부 장관, 미국 윌리엄 번즈 국무부 부장관 접견, 개성공단 잔류 인원 전원 귀환과 관련, 미국 측의 지지와 함께 양국 간 이해를 공유
- 5월 2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억류중인 한국계 미국인 베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보도
  - 지난해 11월 3일 라선시에 관광의 명목으로 입국하였다가 체포된 미국 공민 배준호에 대한 재판이 4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되었음.
- 5월 3일 | 미국 패트릭 벤트넬 국무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케네스 배씨의 사면과 석방을 공식 촉구
- 5월 3일 |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 최후의 7명, 북한과 임금·세금 문제 등 협의 후 모두 귀환
- 5월 3일 | ‘2015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열린 준비회의, 북한 추가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의장요약문(Chairman’s factual summary) 채택
  - 의장요약문에는 북한의 지난 2월 3차 핵실험 규탄, 우리나라 농축을 포함한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영변 핵시설 재가동 자제 촉구,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불가 등의 내용 수록
- 5월 5일 | 북한 국방위 정책국, 개성공업지구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남한의 대북 적대행위와 군사적 도발을 중지하는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고 주장
- 5월 5일 | 북한 외무성, 케네스 배 문제는 정치적 흥정물이 아니며 미국의 그 누구도 초청할 계획이 없다고 주장
- 5월 5~9일 | 박근혜 대통령, 방미
- 5월 7일 | 북한조사인권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위원, 3명 임명
  -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전 호주 대법관, 소냐 비세르코(Sonja Miserko) 세르비아 인권운동가
- 5월 7일 | 북한 조선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 한미 서해 대잠수함 훈련과 10일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니

미츠호의 한반도 해역 진입에 대해 “적들의 도발적인 포사격으로 우리측 영해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지는 경우 즉시적인 반타격전에 진입하라”고 산하부대에 명령

5월 7일 | 한·미정상회담, 두정상 공동 기자회견 통해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문(Joint Declaration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채택 발표

- 한·미 양국은 동맹에 기초하여, 박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을 통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토록 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임.
- 북한의 도발로부터 양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노력과 함께, 정보·감시·정찰 체계 연동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가능한 연합방위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임. 한·미 양국은 북한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함께 하고 있기에, 북한이 그들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투자와 개선 노력을 기울이며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함.

5월 8일 | 박근혜 대통령,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갔으면 하는 3가지의 비전과 목표 제시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기반을 구축(DMZ 세계평화공원 구상 발표), 동북아 지역에 평화 협력 체제 구축, 지구촌의 이웃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

5월 10일 | 북한 조평통,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기간 대북발언에 대해 “상전의 눈도장을 찍고 주종관계를 확인하며 반공화국결탁을 강화하기 위한 사대매국 행각, 동족대결행각”이라고 비난

5월 13일 | 북한 우리민족끼리,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내놓은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제안에 대해 “민족 분열의 불행과 고통을 안고 사는 온 겨레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비난

5월 13~18일 | 미국 클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한·중·일 순방

5월 14일 | 통일부 대변인, 개성공단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등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의

5월 14~17일 | 일본 이치마 이사오 내각 위기관리 특별담당 보좌관, 방북

5월 15일 |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통일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그 무슨 통신타발이나 물자반출문제와 같은 문제를 내들고 결발림의 대화타령이나 할 것이 아니라 근본문제를 푸는 데로 나서야 하며 우리에게 대한 도발적인 망발과 대결망동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

- 우리측은 지난 5월 3일 남측 잔류인원들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전부 철수할 때에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남측관계자들에게 공업지구하부구조대상들의 정상유지관리를 위한 관계자들의 출입과 입주기업가들의 방문 및 물자반출을 허용해줄 의사를 표명하면서 그와 관련한 날자까지 제시해주었음.

5월 15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케네스 배가 5월 14일부터 특별교화소에 입소돼 교활생활을 시작했다고

보도

- 5월 15일 | 윤병세 외교부 장관, 구테레스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와 탈북민 보호 및 한-UNHCR 협력 강화 방안 협의
- 5월 15일 | 북한 우리민족끼리,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제안한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미국의 세계경제 야망실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어떤 실현 가능성도 없는 허황한 망상일 뿐”이라고 비난
- 5월 16일 | 통일부 대변인, 지난 5월 3일 북측 관계자가 미수금 정산 및 시설관리 등을 위한 방북은 허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남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한 것은 사실이나 날짜를 제시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발언
- 5월 18~20일 | 북한, 동해안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발사
- 5월 19일 | 통일부 대변인,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우리의 대화 제의를 폄훼하고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며, 공단 중단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발언
  - 북한이 자재·제품 반출 문제 협의 용의를 표명했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한 시점해야 제기된 것으로서 진정성이 의심스러움.
  - 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북한은 유도탄 발사 등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원부자재·완제품 반출 등 투자기업의 자산 보호에 대한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함. 이것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는 출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함.
  - 북한은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임.
- 5월 20일 |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지금 개성공업지구에 남아있는 제품의 반출보다 더 절박한 것은 공업지구가 깨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라고 하며 “여기에 남북관계의 전도가 달려 있다”고 주장
- 5월 21일 | 통일부 대변인, 북한이 개별기업들에 팩스를 보내 우리정부와 기업 간 갈등을 유발시킴으로써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발언
- 5월 21일 | 북한 노동신문,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2월 12일 감행한 제3차 핵실험이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해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됐다”고 주장
- 5월 22일 | 박근혜 대통령, 수리온 저력화 행사 축사에서 최근 북한은 우리의 대화 제의를 거절하고 유도탄을 발사하면서 도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위협과 도발을 중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제안
- 5월 22~24일 | 북한 최룡해 총정치국장, 방중
- 5월 23일 | 박근혜 대통령, 미국 CSIS 햄리 소장 접견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있을 수 없음을 한 목소리로 전달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과거와 같은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고 전략적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 5월 25일 |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행사' 개성 또는 금강산 개최 제의
- 5월 25일 |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장 일행 접견시(5.23) 병진노선은 도박·성공할 수 없다는 등의 발언에 대해 “우리와 대결해보려는 악랄한 흥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난
- 5월 28일 | 북한 조평통, 6.15 공동행사 남측단체 참가 허용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방문시 제품반출문제 포함 공단정상화 문제 협의 등 주장  
-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기업가들의 방문길도 열어주어야 함. 우리는 공업지구 기업가들의 방문을 이미 승인한 상태이며 그들이 들어오면 제품반출문제를 포함하여 공업지구정상화와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진행할 것임.
- 5월 28일 | 통일부 대변인, 개성공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임의대로 공단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국제적 규범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  
- 북한이 당면한 원부자재, 완제품 반출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응하는 것이야말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의 출발점임.  
- 북한이 진정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우선 우리 측이 제의한 당국 간 대화에 조속히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함.
- 5월 30일 | 마르주키 다루사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라오스로부터 중국으로 송환된 9명 탈북민의 안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
- 5월 31일 |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OHCHR), 9명의 탈북 청소년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북한 당국에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들에 대한 대우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단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촉구
- 5월 31일 |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 나기브 사위리스 회장, 성명을 통해 북한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2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
- 6월 2일 | 정부, 6·15 남측위의 6·15 공동행사 대북 협의를 위한 개성방문 불허
- 6월 5일 | 북적 중앙위원회 대변인, 탈북청소년 9명 복송 사건과 관련 “괴뢰패당이 나아린 청소년들을 유인 납치하여 남으로 끌고 가려다가 발각된 사건으로서 이번사건의 공범자, 배후자는 미국”이라며 사회와 주모자 처벌을 요구
- 6월 5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경제개발구법이 채택되었다고 보도  
-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  
-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과 경제조직, 해외동포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할 수 있으며 기업, 지사, 사무소 같은 것을 설립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국가는 투자자에게 토지 이용, 노력 채용, 세금 납부 같은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함.
- 6월 6일 | 북한 조평통,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6.15를 계기로 개성공단 정상화

**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 제의**

-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한 남북 민간단체들 사이의 접촉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과 6.15공동선언·7.4공동성명 발표 기념행사 남북 공동 개최 제의
- 우리 제의에 호응해 나오는 즉시 관문점 적십자 연락통로 등 통신, 연락과 관련한 제반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임.

**6월 6일 |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 장관급 회담(6.12, 서울) 개최 제의**

- 남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측은 내일(6.7)부터 관문점 연락사무소 등 남북 간 연락채널을 재개하기 바람.

**6월 6일 | 박근혜 대통령, 제58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에서 북한이 선택해야 하는 변화의 길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발언**

**6월 7일 | 북한 조평통,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6.9, 개성) 개최 제의**

**6월 7~ 8일 | 미·중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에 합의**

**6월 9~10일 |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 개최(관문점 평화의 집)**

- 남북당국회담(6.12~13, 서울) 개최에 합의하였으나, 수석대표의 급과 의제 관련 이견으로 남북은 협의결과를 발표문 형식으로 각기 발표

**6월 10일 | 미국 상원,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법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농업법(Farm Bill)을 통과**  
- 이 법안 제3015조(북한에 대한 원조 금지)는 국외 원조를 위해 조성된 기금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6월 11일 | 북한, 우리측 수석대표를 문제삼아 남북당국회담 대표단 파견 보류 통보**

**6월 11일 | 통일부, 남북당국회담 관련 정부입장 발표**

- 수석대표 급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국민들의 상식과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에 남북당국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
- 북한이 그간 EU국가들과 대화를 개최했을 때 상대국의 격과 급을 맞추어 해온 관행이 있었음.
-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부상-상대국 국장, 북한의 국장-상대국 과장과의 대화 시 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화를 거부하거나 했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그러나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측 당국자인 통일부 차관의 격을 문제삼아 대화까지 거부하는 것은 사리에 전혀 맞지 않음.

**6월 13일 | 북한 조평통, 남북당국회담 무산 관련 책임은 남측에 있다며 도발적 망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한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

**6월 14일 | 윤병세 외교부 장관, FEALAC 계기 라오스 외무차관 면담(6.13), 싱가포르 공식방문(6.14) 계기 동남아 지역 탈북민 업무관련 유관 공관장회의 주제**

- 6월 16일 | 북한 국방위원회, 중대담화 통해 북미 당국 간 고위급 회담 제의**  
 - 조미당국사이의 고위급회담에서는 군사적 긴장상태의 완화문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 미국이 내놓은 핵없는 세계건설 문제를 포함하여 쌍방이 원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폭넓고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임.  
 - 모든 사태발전은 지금까지 조선반도정세를 악화시켜온 미국의 책임적인 선택에 달려있음.
- 6월 17일 | 미국 백악관 NSC 대변인, 북한의 중대담화 관련 입장 발표**  
 - 미국은 북한과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을 원하며, 북한이 유엔 결의안 및 비핵화를 포함하는 국제의무를 준수해야만 함. 미국은 북한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판단할 것임.
- 6월 17일 | 북적 중앙위원회 대변인, 라오스에서 탈북자 국내 입국 관련 “청와대와 현지 대사관까지 가담하여 감행된 이번 납치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유인납치와 인신매매의 주범은 청와대”라고 비난**
- 6월 18-22일 |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방중, 북중 전략대화 개최**
- 6월 19일 |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워싱턴)**
- 6월 19일 | 북한 인민보안부, 북한의 존엄과 체제를 중상모독하는 탈북자들을 “물리적으로 없애버리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단행하기로 결심했다”고 위협**
- 6월 21일 |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베이징),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의 핵보유 불인정 입장 재확인, 북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
- 6월 21일 | 북한 신선희 유엔 주재 대사, 기자회견 열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이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긴장완화와 평화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주장**
- 6월 24일 | 조선신보,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본색’이라는 시론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보다 더 적대적이고 대결적이라고 비난**
- 6월 27일 | 북한 조평통,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 “우리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뇌상봉 담화록을 공개한 것은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우롱이고 대화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
- 6월 27~30일 | 박근혜 대통령, 방중**
- 6월 27일 | 한·중 정상회담,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채택**  
 - 양국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및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한·중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조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6자회담 등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지지 표명  
 -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은 향후 양국관계 발전의 4대 기본원칙으로 ①상호이해 및 상호신뢰 제고 ②미래지향적 호혜협력 강화 ③평등원칙과 국제규범의 존중 ④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 및 인류의 복리 증진에의 기여를 제시



- 6월 29일 | 북한 조선인민군 서부전선사령부, 국내 탈북단체와 미국 인권단체가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것에 대해 “임진각이 서부전선사령부의 직접적인 조준 타격권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
- 7월 1일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데 공감대 확인
- 7월 2일 |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방러
- 7월 2일 | 북한 김성남 당 국제부 부부장, 방중
- 7월 3일 | 북한,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공단 방문을 허용하고, 필요한 협의를 하지는 내용의 통지문을 관리위원회와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에 전달
- 7월 4일 | 통일부,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7.6) 개최 공식 제의
  -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점검 문제와 함께,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 등을 협의할 수 있을 것임.
  - 이번 회담에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가 나갈 것임.
- 7월 4~5일 | 6.15민족공동위원회, ‘8.15민족공동행사’ 개최 합의(개성)
- 7월 6~7일 | 제1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개최(관문점 통일각), 4개 사항 합의
  - ① 남북 양측은 장마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남측 기업 관계자들을 비롯한 해당 인원들이 7월 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설비점검 및 정비를 진행하도록 함.
  - ② 남과 북은 남측 기업들이 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반출할수 있도록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설비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함.
  - ③ 남과 북은 설비 점검과 물자 반출 등을 위해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의 통행 통신과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복귀 및 신변안전을 보장함.
  - ④ 남과 북은 준비되는데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하며 가동중단 재발 방지 등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해 7월 10일 개성공단에서 후속 회담을 개최함.
- 7월 8일 | 련케 유엔사무총장 스포츠 특보, 마식령 스키장 방문
- 7월 10일 | 제2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개최(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 재발방지 보장과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방안 집중 논의
- 7월 10~19일 | 개성공단 기업인 등 방북, 개성공단 시설·설비 점검 및 물자 반입 진행
- 7월 15일 | 제3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개최(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 우리측: 개성공단 가동중단 재발방지 보장문제, 신변안전과 투자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완비 문제,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제적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
  - 북한측: 지난 7.10 2차 회담시 제시한 합의서(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
- 7월 17일 | 제4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개최(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 우리측: 재발방지를 실제로 보장할 수 있고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합의서에 담겨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
- 북한측: 공단 재가동 등에 대한 기존 입장이 반영된 합의를 설명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되풀이

7월 17일 | 파나마 정부, 쿠바를 출발해 북한으로 가던 북한국적 선박 ‘청천강호’ 억류

7월 17일 | 북한 외무성, 파나마에 억류중인 ‘청천강호’에 대해 억류중인 선원들과 배의 출항을 요구

- 선박에서 발견된 미사일 부품 등에 대해 그들이 걸고 드는 짐은 합법적인 계약에 따라 수리하여 다시 쿠바에 되돌려주게 되어 있는 낡은 무기들임.

7월 17일 | 미국 척 헤이글 국방장관,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 당시 약속한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언급

7월 18일 | 동아시아컵 축구대회(7.20~28, 서울·화성) 참가 위해 북한 여자선수단 등 38명 입국

7월 22일 | 제5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개최(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 남북은 재발방지, 신변안전 및 투자자산 보호 등 제도적 보장장치, 외국기업 유치, 국제경쟁력 강화 등 개성공단 국제화, 재가동 문제 등에 대해 협의를 계속

7월 23일 | 북한, 장마철 수해 발생 관련 UN에 긴급 수해지원 요청 및 피해규모 통보

7월 25일 | 제6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개최(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 재발방지 보장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북한측이 사실상 회담 결렬을 선언

7월 25일 | 통일부 대변인, 북한이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대해 사실상 결렬을 선언한 것에 대해 유감 성명 발표

- 북한측이 회담종료 직후, 우리측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 무단으로 난입하여 사전에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일방적으로 배포·낭독하고 합의서(안) 등 회담 관련 문건을 공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 북한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임.

7월 27일 | 박근혜 대통령, 유엔군 참전·정전 60주년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와 평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에 관심과 협조 부탁

- 정전협정 제1조 1항에 규정된 비무장지대(DMZ)는 최소한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 그러나 그 이름과는 달리 세계 어느 곳보다 중무장된 지역이 되고 말았음. 저는 중무장지대가 되어버린 비무장지대의 작은 지역에서부터 무기가 사라지고, 평화와 신뢰가 자라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음. 과거 서로 총부리를 겨누었고, 정전협정을 맺은 당사국들이 함께 국제적인 규범과 절차, 그리고 합의에 따라 평화공원을 만든다면 그곳이 바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출발점이 될 것임.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함.

7월 27일 | 북한, 전승절 60돌 기념행사 개최

- 중국 라위안차오 국가부주석 행사 참석위해 방북(7.25~28)

- 7월 28일 |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성명 발표
  - 지난 6차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다시는 정치·군사적인 이유로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되지 않고, 국제기준에 따라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음.
  - 북한은 지금이라도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주기 바람.
  - 이를 위해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 논의할 회담을 제안하고자 함.
  - 내일(7.29) 5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승인하고, UNICEF 영유아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것임.
- 7월 29일 | 통일부 장관, 제7차 개성공단 남북당국 실무회담 제의
- 7월 29일 | 통일부, 5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승인
- 7월 29일 | 미국 국무부, 카터 전 대통령 방북 및 특사파견 계획이 없다는 입장 발표
- 7월 29일 | 미국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차관, 방한
  - 파나마 사건은 재래식 무기와 확산에 있어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을 보여주는 것임.
  -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 조율
- 7월 31일 | 북한 노동신문, '미국의 패권야망을 분쇄해버려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8월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군사훈련시 유엔군 사령부가 개입하면 "조선반도 정세는 다시금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전쟁폭발 국면에 처하게 된다"고 위협
- 7월 31일 | 미국 제임스 코왈스키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 사령관, 미국방상협회(NDIA) 주최 세미나에서 미군이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대처하고 한국에 핵우산 제공을 약속하는 차원에서 서태평양의 괌 기지에 B52 전략폭격기를 6대 이상 지속적으로 배치할 방침이라고 언급
- 8월 3일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고 정몽헌 전회장 10주기 추모식 참석차 방북
- 8월 4일 | 통일부 대변인, 북한 측이 진심으로 기업과 근로자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길 원한다면, 그리고 진정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라 여긴다면, 침묵이 아니라 책임 있는 말과 행동으로 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8월 5일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UNICEF의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기금지원 결정
- 8월 7일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
  - 7월말 기준, 109개 기업이 신청한 2,809억 원 의결
- 8월 7일 | 북한 조평통, 개성공단 정상화 관련 7차 실무회담(8.14, 개성공업지구) 개최 제안
- 8월 7일 | 통일부, 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 관련 정부입장 발표
  -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으로 평가하며, 북측이 제안한 대로 실무회담(8.14) 수용
- 8월 7일 |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3월 우라늄 농축공장과 5MW 흑연감속로를 포함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을 재정비·재가동 한다고 밝힌 이후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시설이 있는 건물의 규모가 두배 이상 늘어났다고 발표

- 이론상으로 볼 때 북한은 이 같은 확장된 시설을 이용해 현재 4천개의 원심분리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1만6천kg-SWU(농축 서비스 단위)의 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

**8월 12일 | 연합뉴스, 북한은 6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을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39년만에 개정했다고 보도**

- 10조 60항으로 축소, 통합하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 세습을 정당화하고 노동당의 권능을 강조하는 내용
- 김일성이라는 문구를 '김일성·김정일'로 바꾸고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변경

**8월 13일 | 통일부,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모니터링 방북 승인**

-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8.14~17, 평양), 어린이어깨동무(8.14~17, 남포)

**8월 14일 | 제7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개최(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채택〉

- ① 통행차단과 근로자 철수조치 등으로 인한 가동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에 영향을 받음이 없이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기업들의 피해보상 문제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하였음.
- ②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우리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음.
- ③ 외국기업 유치 및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 ④ 상기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하였음.
- ⑤ 안전한 출입·체류와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 정비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음.

**8월 15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화해와 협력, 평화변영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라는 글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채택으로 온 겨레에 기쁨을 안겨주게 되었다며 회담의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화해·협력, 평화변영을 위한 사업들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

**8월 15일 |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북한에 제의**

- 이번 추석을 전후로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도록 북한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길 바랍.
- 또한 분단과 대결의 유산인 비무장지대(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를 북한에 제의함.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지대로 만듬으로써 우리의 의식 속에 남아 있던 전쟁의 기억과 도발의 위협을 제거하고, 한반도를 신뢰와 화합, 협력의 공간으로 만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

- 8월 16일 | 한적, 국제적십자연맹(IFRC)을 통한 대북 수해 지원 결정(10만불 상당)
- 8월 16일 | 정부, 이산가족 상봉 관련 적십자 실무접촉(8.23, 평화의 집) 개최 제안
- 8월 17일 | 개성공단 시설 점검인력 방북, 기반시설 점검·보수 시작
- 8월 18일 | 북한 조평통,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8.23, 금강산) 수정제안,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당국 실무회담(8.22, 금강산) 개최 제의
- 8월 18-27일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 일행, 방한
- 8월 19일 | 정부, 적십자 실무접촉 장소를 평화의 집으로 재차 제의, 금강산 관광 관련 실무회담에 대해서는 검토 후 입장을 밝힐 것임을 통지
- 8월 19일 | 박근혜 대통령,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정부가 제안한 추석 전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이 적극 수용해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발전되어 나가길 바란다고 언급
- 8월 19-28일 | 남북,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관련,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한 협의
- 8월 20일 | 북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을 연계하며 실무접촉 장소를 금강산으로 할 것을 재차 제의
- 8월 20일 | 북한 조평통, 박근혜 대통령의 을지연습 첫날(8.19)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한 발언에 대해 “모처럼 마련된 남북사이의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대화상대방을 모독하는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비난
- 8월 22일 | 북한, 적십자 실무접촉(8.23, 평화의 집) 개최 수용, 금강산 관광 관련 회담은 8월 말~9월 초 금강산 개최 제안
- 8월 23일 |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평화의 집), 이산가족 상봉행사 합의
  1. 남과 북은 2013년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함.
    - ① 상봉규모는 쌍방이 각각 100명씩 하기로 함.
    - ② 생사확인 의뢰서는 8월 29일에 남과 북이 200명에서 250명 사이 각기 편리한대로, 회보서는 9월 13일, 최종명단은 9월 16일에 교환
    - ③ 상봉 형식과 방법 등은 관례에 따르기로 함
    - ④ 쌍방은 상봉시작 5일전에 선발대를 현지에 파견
  2. 남과 북은 2013년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진행하며, 상봉 규모는 쌍방이 각각 40가족씩 하기로 함.
  3. 남과 북은 11월 안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하는데 공감하면서 추석 계기 상봉이 끝난 직후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열고 협의해 나가기로 함.
  4.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생사확인, 서신교환 실시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함.

- 8월 23일 | 북한 우리민족끼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서울에서 공개 청문회를 열어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대해 “남북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반통일적 행위”라고 비난
- 8월 24일 | 북한 최룡해 총정치국장, 선군절 중앙보고대회에서 “우리에게 있어 평화는 더없이 귀중하며, 우리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동족상쟁을 피하고 조국을 자주·평화적으로 통일할 것을 바라고 있다”고 언급
- 8월 26~30일 | 중국 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한반도사무특별대표) 일행, 방북  
- 북한의 핵협상을 총괄하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면담(8.27)
- 8월 27일 | 북한인권위원회(HRNK),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 6곳 중 2곳이 폐쇄 또는 해체되었다고 밝힘  
- 18호 관리소(평안남도 북창) 해체, 22호 관리소(함경북도 회령) 폐쇄
- 8월 28일 | 박근혜 대통령, 민주평통 제16기 전체회의 대회사에서 북한은 하루빨리 핵무기를 내려놓고 신뢰의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강조
- 8월 28일 | 남북,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를 두며 쌍방향함에 따라 추가 구성·운영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운영
- 8월 28~29일 |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금강산 시설 점검 실시
- 8월 29일 |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남북 생사확인 의뢰서(남 250명, 북 200명) 교환
- 8월 29일 |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연습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비난하고 “대화상대를 겨냥한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니라 대화분위기와 평화적 환경마련에 유익한 정책적 결단만이 허용될 때”라고 주장
- 8월 30일 | 북한, 북한에 억류중인 케네스 배의 석방을 위한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초청 철회
- 8월 31일 | 북한 외무성,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방북 초청을 철회한 것은 미국이 한미 합동군사연습 기간 B-52H 전략폭격기를 출격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
- 9월 2일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와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9.4), 출입·체류 분과위원회와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9.5) 개최 함  
- 우리측: 공단 재가동에 앞서 현재 단절된 상태인 서해 군 통신선의 복구, 공단의 기반시설 정비,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 진전이 필요하다는 입장

- 북측: 조속한 공단의 재가동을 거듭 주장
- 9월 2일 | 정부, 대북지원 발표**
  - 북한 취약계층 대상 의약품·영양식 등을 지원하는 국내 12개 민간단체 반출 승인
  - WHO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630만 불) 기금 지원 계획
- 9월 3일 | 정부, 판문점 연락관 채널 통해 이산가족 숙소로 외금강호텔·금강산호텔 사용 입장 전달**
- 9월 3~7일 | 미국 프로농구(NBA) 출신 데니스 로드먼, 방북**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농구경기 관람(9.7)
- 9월 4일 | 북한, 금강산관광 예약으로 외금강호텔·금강산호텔을 이용할 수 없다며 해금강호텔·현대생활관을 사용할 것을 제의**
- 9월 4일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는 상시중재위원회 구성·운영 문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의
  -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투자 유치 방안, 역외가공지역 인정, 국제적 수준의 제도개선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의견 교환
- 9월 5일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출입·체류 분과위원회와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개최**
  - 내일 9월 6일(금)부터 서해 군통신을 재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오전 9시에 시험통화
- 9월 5일 | 정부, 안전성·수용규모 등을 고려할 때 2009년·2010년 상봉행사시 숙소로 사용한 외금강호텔·금강산호텔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강조**
- 9월 6일 | 북한 조평통,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용납 못할 도발”이라며 비난**
- 9월 10일 | 2013년 아시아클럽 역도선수권대회(9.12~17)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 41명, 방북**
- 9월 10~11일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9월 중에 가동
  -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채택
  - 기업들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개성공단에서 납부하는 ‘13년 세금을 면제하고, 올해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처리
  - \* ’12년도 귀속분 세금은 금년 말까지 납부 유예
  - 9월 16일부터 기업들이 시운전을 거쳐 재가동
- 9월 13일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와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에서는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방안, 인터넷 및 이동전화 제 공 문제, 선별검사 등에 관한 기술적 문제들을 논의
- 우리측: 당일 지연 입출경 문제 제기 및 편의성 제고 요구
- 북측: ① 지정시간대에 통행하지 못한 인원은 북측 통행검사소에 통지하는 경우 벌금 부과 없이 다른 시간대에 통행 보장 ② 인원과 차량의 동시 검사로 통관시간 단축 ③ 개인이 소 량으로 반입하는 휴대품을 구두 신고 허용

9월 13일 | 남북, 이산가족 상봉후보자들의 생사확인 회보서 교환(관문점)

9월 16일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개소를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9.24)
- 공동 투자설명회를 개성공단에서 개최(10.31)

9월 16일 | 개성공단 시운전 거쳐 재가동 시작

9월 16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우리의 평화의지는 확고하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개성공단 재가동과 이 산가족 상봉사업 등을 거론하며 "북남관계에서 모처럼 일련의 결실이 이룩되고 있다"고 평가

9월 16일 | 남북, 이산가족 상봉 최종명단(남 96명, 북 100명) 교환

9월 18일 | 6자회담 10주년 기념 1.5트랙 세미나 개최(베이징)

- 북한: 중국과의 공조체제 구축 노력 및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 주장
- 미국: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 재확인

9월 20일 | 이산가족 상봉행사 선발대, 방북

9월 21일 | 북한 조평통, 이산가족 상봉행사 일방 연기 발표

- ① 북남사이의 당면한 일정에 올라있는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행사를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정상적인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연기
- ② 남조선괴뢰들의 날로 가증되는 반공화국전쟁도발책동에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임.
- ③ 우리를 결코 감행하는 반공화국모략책동과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온갖 탄압소동을 절대 로 좌시하지 않을 것임.

9월 21일 | 통일부 대변인,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불과 4일 앞두고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에 대해 유감 을 표명하고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

9월 22일 | 북한·러시아, 나진-하산 철도 개보수 구간 개통식(나진항)

- 전길수 북한 철도상, 알렉산드르 티모닌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 등 참석

9월 24일 |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사무처 개소 관련 남북간 실무협의 개최(개성)

- 개소식 진행(9.30), 출입·체류 및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3차회의(9.26) 개최 등 합의

9월 24일 | 미국 패트릭 벤틀렌 NSC 부대변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온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



- 최근 로즈 부보좌관의 발언에 오해가 있었던 것이며 기존의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
- 9월 25일 | 2013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개최
  -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3~2017) 심의
- 9월 25일 | 북한 서해지구 군사실무 책임자,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3차회의 연기 통보
- 9월 26일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쌍방은 각기 개성공단 출입체류 부속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입회조사, 조사 시 기본권 보장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 진행
- 9월 27일 | 윤병세 외교부 장관, 제6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
  - 안보리 결의 2094호 등 대북 결의의 철저한 이행 필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 기대,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취소 관련 유감 표명
  - 이에 대해 리동일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WMD 프로그램은 핵 역지력의 일환이며, 북한의 위성 발사는 정당한 주권 행사임을 주장하고,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취소가 연기임을 답변권 행사를 통해 발언
  - 설경훈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역시 답변권 행사를 통해 안보리 결의 이행 강조, 이산가족 상봉행사 취소 철회 촉구
- 9월 30일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개소
- 10월 1일 | 박근혜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포기 촉구 및 대북 억지력을 통한 튼튼한 안보 강조
- 10월 1일 | 북한 박길연 외무상 부상,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 비난 및 핵군축회담을 통한 '핵없는 세계' 건설 주장
  - 북한의 자주권 인정, 핵군축협상 개시, 평화협정 체결, 남한내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장
- 10월 1~2일 | 북·미간 트랙2 회의 개최(런던)
  - 북한 리용호 외무상 부상과 미국 스티븐 보즈워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참석, 6자회담 재개 방안 등 논의
- 10월 2일 | 북한 조평통,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강력한 대북 억지력 구축과 북한의 변화 등을 언급한데 대해 “우리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고 우리의 대화, 평화 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난
- 10월 3일 | FAO, 북한을 식량부족국가로 재지정
- 10월 3일 | 북한 조평통, 우리 정부가 지난 달 마련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체제대결의 각본이라고 비난
- 10월 3일 |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 도쿄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인 ‘미·일안보장협회의위원회(2+2)’를 개최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결심하고 이를 위해 정통성있는 협상에 나선다면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돼있으며 북한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할 준비가 돼있다”고 발언

- 10월 4일 |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 등 최근 대북발언에 대해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고 병진노선 계속 추진 입장 발표
- 10월 4일 | 통일부 대변인, 북한이 우리 국가원수에 대한 실명 비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상호존중에 입각한 품격있는 언행 촉구
- 10월 5일 | 북한 조평통, 통일부 대변인의 대북성명(10.4)에 대해 “정당한 비판과 응당한 경고를 똑바로 새겨두고 부질없는 언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재차 박근혜 대통령 실명 비난
- 10월 7일 |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 개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핵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
  - 박근혜 대통령: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중 양국이 협력하여 설득해야 함을 강조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북한의 핵보유 및 추가 핵실험을 반대하며, 안보리 대북 제재 준수 및 북핵문제의 악순환을 막아야 함을 주장, DMZ공원에 대해 공식적 지지 표명
- 10월 7일 | 북한 조평통,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맞춤형 억제전략 합의 등에 대해 “이번 군사적 모의를 조선반도에서 대화평화과정을 파탄시키고 긴장을 격화시키며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극히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
- 10월 7일 | 통일부 대변인, 최근 북한의 원색적인 비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북한이 비방증상을 중단하고 남북관계에 성의있는 자세로 나올 것을 촉구
- 10월 8일 |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한·미간의 맞춤형 억제전략, 합동해상 훈련 등을 비난하며 “미제 침략군 핵타격수단들이 빚어낼 참사에 대하여서는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다”라고 위협
- 10월 8일 | 통일부 대변인,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비방 증상 중단을 촉구하고 자극적 언행은 북한의 고립을 자초한다고 점을 강조
  - 북한에게 1명의 존엄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5천만의 존엄이 있음. 개개인이 모두 존엄인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해서는 안됨.
- 10월 8일 | 남재준 국정원장,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하여 김정은이 내부적으로 3년 내 무력통일을 하겠다고 호언하고 있으며 북한 영변 5MW급 원자로 재가동, 수도권·서해5도 겨냥 포병 전략 증강, 신형 240mm 다연장포 배치 등을 보고
- 10월 9일 | 박근혜 대통령, ASEAN+3/동아시아정상회의 계기 한·미안파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미안마의 개혁개방정책을 본받아 진정한 변화와 평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
- 10월 9일 | 북한 외무성,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하는 한·미·일 해상훈련을 거론하며 미국이 북한의 대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군사도발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난
- 10월 10일 | 북한에 억류중인 케네스 배 모친 방북, 평양친선병원에서 케네스 배 면회
- 10월 11일 | 통일부, 10월 31일로 예정되었던 개성공단 공동 투자설명회 연기 요청

- 3통 문제 협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외국 기업의 반응을 고려할 때 10월 31일로 예정되었던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공동 투자설명회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
- 10월 12일 | 조계종 관계자 20명 방북, 신세계 낙성 6주년 기념 남북합동법회 개최
- 10월 12일 | 북한 국방위원회, 미국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의 불가침조약 언급(10.3)에 대해 비난하며 “미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의미를 똑바로 알고 우리에게 대한 모든 고압압살조치를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고 주장
- 10월 14일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부에 개성공단 현장방문을 공식 요청
- 10월 14일 | 북한 신선호 유엔 주재 대사, 유엔총회 제1위원회 기조연설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북한 체제 안전 보장 요구
- 10월 15일 | 북한, 개성공단 남북 공동투자설명회 연기에 동의
- 10월 16일 |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개성공단 방문 입장 북측에 전달
- 10월 16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 승격했음을 보도
- 10월 16일 | 북한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미국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의 서해 진입에 대해 “노골적인 핵선제공격 시도”라고 비난
- 10월 17일 | 북한 조평통,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국회정보위원회 보고(10.8) 내용에 대해 “북남관계를 파괴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가정보원 해체를 주장
- 10월 17일 | 통일부, 대북 인도지원 모니터링을 위한 민간단체 방북 승인
  - 나눔인터내셔널(10.19~22), 남북평화재단(10.19~23), 남북함께살기운동(10.23~26) 등 3개 단체 총 12명 방북 승인
- 10월 18일 | 박근혜 대통령, 유라시아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제안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북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러시아의 극동지역, 중국의 동북 3성, 남북러, 남북중 3각 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임.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동북아국가들이 기후변화, 자연재해, 핵 안전, 사이버협력 등 연성이슈부터 시작해 대화와 협력을 축적해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자는 구상임.
  - 두 구상 모두 신뢰 형성이 협력의 전제라는 인식 아래, 합의의 성실한 이행과 국제규범에 입각한 행동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 추진해 나갈 것임. 유라시아 모든 나라의 정부와 국민들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적극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함.
- 10월 23일 | 북한 외무성, 한·미의 맞춤형 억제전략 및 합동군사훈련 등에 대해 비난하며 “외부의 핵위협이 가중되는 한 그에 대처할 핵억제력도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여기에서 우리는 그 어디에도 구속될 것이 없다”고 위협

- 10월 23일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부속합의서> 체결
  - 업무 시간, 남북간 정례회의 및 업무협의 계획, 남북 사무처 인원들의 통행·통신 방법, 업무협조체계 등
- 10월 23일 | 제68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북한대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실용위성을 계속 쏘아 올릴 것”이라고 발언
- 10월 24일 | 북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개성공단 방문 허용
- 10월 24일 | 북적 위원장, 불법입국 하였다가 단속된 우리측 인원 6명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돌려보내겠다는 입장 통보
- 10월 24일 | 한적 총재, 북측이 그동안 신원확인 요청에 대해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늦었지만 이들을 돌려보내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 전달
- 10월 24일 | 북한 노동신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평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본질에 있어 체제 대결과 북침야망을 실현하려는 반통일대결정책”이며 비핵·개방·3000과 차이가 없다고 비난
- 10월 25일 | 북한 외무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최근 대북 금융 제재 조치를 유지기로 한 것에 대해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침해로 강력히 배격한다”고 주장
- 10월 25일 | 관문점을 통해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우리 국민 6명과 유해 1구 인수
- 10월 26일 | 기관 고장으로 동해상에 표류하던 북한 어선 1척(북한주민 4명 승선) 구조
  - 북측에 인계(10.27)
- 10월 28일 | 북한 대표, 유엔총회 제68차회의 4위원회 회의(10.23)에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실용위성들을 계속 쏘아 올릴 것”이라고 발언
- 10월 28일 | 미국 존 케리 국무부 장관, USIP 연설에서 북한을 국제사회의 핵실험 금지 노력을 훼손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비판, 또 북한을 주민의 삶은 외면한 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매달리는 불량국가로 지칭
- 10월 30일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개성공단 현장방문(외통위원 21명, 기자단 10명, 지원인력 등 총 47명)
- 10월 31일 | 북한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우리 정부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대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미사일 군비 경쟁을 일으키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핵 불소나기를 쏟아지게 하는 어리석은 망동”이라고 비난
- 10월 31일 | 북한 외무성, 미국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의 발언(10.28)관련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전까지 한반도 비핵화 불가능하다고 주장
- 11월 1일 | 북한 민화협 대변인, 제94회 전국체전(10.28~24, 인천)에 이북5도 선수단 참가 및 박근혜대통령

- 령의 기념사에 대해 “반공화국 대결광기가 체육분야에까지 뻗어 있다”고 비난
- 11월 2~9일 | 박근혜 대통령, 프랑스·영국·벨기에·유럽연합(EU) 순방
- 11월 4일 | 한·프랑스 정상회담, 양정상은 북한 핵 폐기 촉구,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깊이 우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에 대한 지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지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환영의 뜻 표명
- 11월 4일 | 북한 노동신문, ‘불순한 야망을 드러낸 체제대결 각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체제 통일 망상실현을 위한 반민족적 대결정책”이라며 “우리에게서 변화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비난
- 11월 4일 | 중국 우다웨이(6자회담 수석대표) 한반도사무 특별대표, 평양 방문
- 11월 6일 | 한·영 정상회담,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 발표
- 11월 6일 | 북한 조평통,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유럽 순방중 프랑스의 일간 르피가로와의 인터뷰(11.2)에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언급 관련 “대내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는 궁여지책으로 무엇이라고 평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비난
- 11월 6일 | 장성택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이노키 간지 일본 국회 참의원과 일행·일본 체육대학 대표단과 담화
- 11월 7일 |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제3국을 통해 밀입북한 남한 정보원 첩자 체포, 안전보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주장
- 11월 7일 | 북한 평화옹호전민족위원회, 한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했다며 이는 “반민족적 범죄행위, 전쟁흉계”라고 주장
- 11월 8일 | 남북, 개성공단 3개 분과위원회 개최 합의  
-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11.13), 국제경쟁력(11.13), 출입체류(11.14), 3통(추후전달)
- 11월 8일 | 북한 조평통,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유인납치와 탈북자들을 이용한 반공화국 모략 책동에 매달리고 있다며 “주권과 주민들의 인권을 해친 자들은 무자비한 처단대상으로 될 것”이라고 위협
- 11월 9일 | 북한 조평통, 우리 군의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등 첨단 도입 계획에 대해 “북침전쟁 무기증강 책동”이라고 비난
- 11월 11일 | 북한 조평통,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순방기간 대북발언에 대해 “정상회담 발언은 위선이었으며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려는 흉심만 들어차 있다”고 비난
- 11월 13일 | 한·러 정상회담, “새로운 한·러관계, 그리고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분야별 구체 협력방안을 담은 한·러 공동성명 채택  
- 한반도 중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유라시아의 협력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 공유, 북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

입·북한 핵포기 촉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지지

- 11월 13~15일 |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방한
- 11월 14일 | 북한 국방위 정책국, 박근혜 대통령의 서유립 순방시 대북발언에 대해 “핵 포기와 미사일 폐기는 자주와 존엄을 내던지고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라는 것과 다름없고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것은 사대매국노의 전철을 밟으라는 것이며, 민족반역의 길에 들어서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라며 비난
- 11월 14일 | 북한 노동신문, 논평원 글 ‘남조선당국의 원칙 고수론을 해부함’이라는 제목에서 우리의 대북 원칙론에 대해 “6.15를 전면부정한 반통일론, 분열과 대결을 추구하는 체제대결론, 전쟁을 추구하는 동족 대결론, 북침전쟁론”이라고 비난하며 “조국통일3대원칙과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을 떠난 다른 원칙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
- 11월 14일 | 북한 조평통, 우리 정부의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관련 “단절계획이며 대결계획”이라며 “전면 백지화하고 동족대결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여야 한다”고 주장
- 11월 14일 | 북한 외무성, 북한 조종사 시리아 내전 참전 보도 관련 “공화국의 평화적 영상을 깎아내리고 시리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저들의 죄행을 가리워 보려는 적대세력들의 어리석은 모략책동의 일환”이라고 비난
- 11월 14일 | 개성공단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개최(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 차기 회의 일정은 개성공단 남북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협의
- 11월 15일 | 탈북자 15명, 동남아 국가로 이동하던 중 경유지였던 중국 쿤밍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
- 11월 18일 | 박근혜 대통령, 2014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반드시 임기 중에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11월 19~25일 | 미국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중한일 순방
- 11월 19일 | 유엔, 제68차 유엔총회 3위원회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  
- 모든 정치범의 조건 없는 즉각 석방, 강제 복송된 탈북민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권상황 공개가 핵심 내용  
- 결의안은 또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HRC) 결의로 ‘유엔 북한인권사실조사위원회(COI)’가 설립된 것을 환영, 북한 당국이 위원회의 방북 조사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
- 11월 20일 | 북한 외무성,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해마다 벌리는 인권결의의 조작늘음은 인권의 정치화와 선택성, 이중 기준의 극치로서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주장
- 11월 21일 | 북한 조평통,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남조선의 파국적 사태, 북남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회피와 위기모면을 위한 여론기만극”이라며 “평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비난

- 11월 21일 | 북한 조평통, 탈북자 1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 된 것과 관련 “남의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유인 납치 행위로 용납할 못할 반인류적 범죄”라고 비난, 유관국들에 탈북자 송환 촉구
- 11월 21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북한 13개 ‘경제개발구’(각 道)와 ‘특수경제지대’(평안북도 신의주시) 설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발표
  - △평안북도 압록강경제개발구(신의주시 용운리), △자강도 만포경제개발구(만포시 미타리·포상리), △자강도 위원공업개발구(위원군 덕암리·고성리), △황해북도 신평관광개발구(신평군 평화리), △황해북도 송림수출가구공구(송림시 서송리), △강원도 현동공업개발구(원산시 현동리), △함경남도 흥남공업개발구(함흥시 해안구역), △함경남도 북청농업개발구(북청군 문동리·부동리·종산리), △함경북도 청진경제개발구(청진시 월포리·수성동·남석리), △함경북도 어랑농업개발구(어랑군 용진리), △함경북도 온성관광개발구(온성군 온성읍), △양강도 혜산경제개발구(혜산시 신장리), △남포시 와우도수출가공구(남포시 영남리)
  - 경제개발구와 특수경제지대에는 북 주권이 행사됨.
- 11월 22일 | 북한 조선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2010.11.12)’ 3주기 관련 “괴뢰들의 도발에 우리의 정의의 타격전, 자랑찬 승전”이라고 주장 및 재발시 “청와대 불바다로 이어지게 된다”고 위협
- 11월 22일 | 북한 외무성, 최근 외신들의 북한을 주요 마약 공급지로 주목한 것에 대해 “적대세력들의 흑색선전, 정치모략극”으로 “국제적인 마약범죄 장본인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라고 비난
- 11월 22일 | 통일부 대변인, 최근 북한의 대남 반정부 선동에 대한 유감 표명 및 우리 국민 억류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 신원확인’에 대해 조속히 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
- 11월 22일 | 미국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의 회동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확실한 징후가 없는 상태에선 6자회담을 재개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 11월 22일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사업을 위한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개성 방문
- 11월 24일 | 북한 조평통, 우리 정부의 공동제안국 참여로 유엔의 ‘북인권 결의안’ 채택 관련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이며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
- 11월 25일 | 북한 여맹, 현재 남한 정치를 “유신 독재의 부활”이라며 “남한 여성들의 괴뢰패당의 강권과 폭정에 맞서 반정부 투쟁 적극 동참”을 선동
- 11월 26일 | 북한 외무성,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발언(11.12)을 거론하며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바라지만 미국이 고집하는 부당한 전제조건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
- 11월 26일 | 정부, 연평해상 북한 선원 구조 송환
- 11월 29일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통행·통신·통관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하기 위한 전자출입체계(RFID) 공사를 12월 첫째주부터 개시하

- 기로 하고,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력

  - 다음주 중 통관 편의 제고를 위한 현장방문과 함께, 인터넷 연결 등을 위한 통신분야 실무 접촉, 군통신 분야 실무접촉을 개최하기로 하였음.
- 11월 30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억류 미국인 뉴먼의 “대조선 적대행위가 여러 증거물에 의해 입증되었으며 모든 죄과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하였다”며 사죄문 공개**
- 12월 2일 | 북한 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수사 등 관련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탄압행위와 중세기적인 중북몰이 광기를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 범죄로 낙인한다”며 “사탄을 몰아내는 정의의 성전에 과감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선동**
- 12월 3일 | 북한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우리 정부가 각계층의 대중투쟁을 중북으로 몰아 탄압하고 있다며 “문예인들이 정의의 기수가 되어 민주·통일을 위한 선봉에 나설 것”을 촉구**
- 12월 4일 | 북한 조평통, 우리 훈련병들(육군 17사단 신병 교육대, 2013년 14기 수료식)의 구호(3대 세습 추종하는 중북 쓰레기 몰아내자) 제창은 최고존엄 모독, 특대형 도발이라며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
- 12월 5일 | 국제엠네스티, 2013년 5월 촬영된 디지털 글로브사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함경남도 요덕 수용소(15호 관리소)에서 39개의 주거용 건물이 철거되고 6개의 새 주거용 건물이 들어서 규모가 작아졌다고 발표**
- 12월 6일 | 박근혜 대통령, 조셉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접견,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의 심화·발전, 북핵·북한 문제, 동아시아 지역정세 및 이란·시리아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의견 교환**

  - 북한 비핵화를 위한 그간 확고히 유지되어온 한·미 공조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빈틈없는 대북공조와 확고한 대북 역지력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합의
- 12월 6일 | 북한 교육위원회, 우리 교육부의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7종) 수정명령에 대해 “새 세대들에게 반공화국 적대의식을 주입시키고 파쇼독재 역사를 합리화하려는 망동으로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이며 교육 사업에 대한 모독이고 유린”이라고 비난**
- 12월 6일 | 통일부, 대북지원 3개 민간단체 지원물품 반출승인**

  - 섬김, 한국카리타스, 나눔인터내셔널
  - 지원대상은 탁아소·유치원 등 영유아 및 군단위 인민병원 환자들임
- 12월 6일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통행·통신·통관분과위원회 실무협의**

  - 통신분야 실무협의에서는 인터넷 연결 방식 등 기술적 문제에 대해 토의
- 12월 7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억류 미국인 메일 뉴먼이 “본인이 사죄하고 뉘우친 점과 그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추방했다”고 발표**
- 12월 7일 | 외교부, 북한 억류 미국인 메일 뉴먼 석방에 대해 환영 논평**

  - 현재 1년 넘게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케네스 배(Kenneth Bae)씨 또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속한 석방 촉구



- 12월 8일 |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 개최, 장성택과 일당에 대한 반당 반혁명적 종파 행위와 관련한 문제 토의를 열고 '장성택의 모든 직무해임과 일체 칭호박탈, 출당 및 제명시킬 데 대해 결정서' 채택
- 12월 10일 | 북한 노동신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주체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자' 사설에서 장성택 숙청을 계기로 유일적 영도체계의 확고한 담보가 마련됐다고 김정은 사상·노선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지니고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 것을 강조
- 12월 11일 |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RFID) 공사 시작
- 12월 12일 | 북한 조평통, 우리 군의 첨단무기(스텔스전투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 도입 계획에 대해 "군사적 대결책동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며 단호히 짓몽개 버릴 것"이라고 위협
- 12월 12일 |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 장성택 북한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행위)에 따라 사형 판결 및 즉시 집행
- 12월 13일 | 북한 조평통, 우리 정부의 대미·일 외교에 대해 구결외교라며 "현실은 신뢰외교라는 것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참담한 것인가를 보여준다"고 비난
- 12월 13일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12.19, 개성공단) 합의
- 12월 13일 | 통일부 대변인, 정부는 금일 7:30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이 발표한 장성택 처형 등 최근 북한 상황에 대해 논의
  - 정부는 최근 북한 내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차분한 가운데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임.
  - 정부는 동맹국 및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임.
- 12월 14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바이트 부통령 접견시(12.6) 발언에 대해 "외세의 존과 동족대결에 환장한 범죄행위"라고 비난하며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확대안 발표는 "지역정세를 악화시키는 분별없는 모험"이라고 주장
- 12월 16일 | 외교안보장관회의 개최, 최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제반 상황을 평가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논의
  -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안보 부서를 중심으로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굳건한 안보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에 대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 군과 경찰은 경비태세를 한층 강화하며 공직자들도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재강조
- 12월 17일 | 통일부, 2개 민간단체 대북 인도지원 승인
  - 국제사랑재단, 어린이어깨동무
- 12월 18일 | 제68차 유엔총회, 북한 내 모든 정치범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 합의 채택
  - 유엔총회에서 합의로 채택된 것을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모든 정치범의 조건 없는 즉각 석방, 강제 복송된 탈북민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권상황 공개

가 핵심

- 12월 18일 | 국가인권위원회, 장성택을 즉결 처형한 북한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우려하며 유엔 인권규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발송
- 12월 19일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와 재가동 이후 남북간 합의이행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과제들에 대해 논의  
- RFID 공사 및 일일단위 상시통행 조속 실시, 인터넷 서비스 등 3통 문제, 출입체류 부속합의서 채택 문제, 노무·임금 등 관리운영 문제 등해 협의, 앞으로 분과위 등을 통해 계속 협의  
- 우리측은 공동투자설명회를 내년 1월말에 개최하자고 제안
- 12월 19일 | G-20 서울 컨퍼런스(12.18~19) 계기, G20 및 국제금융기구 대표단 일행 개성공단 방문  
- 대표단 25명, 내외신 기자 및 지원인력 29명 등 총 54명
- 12월 19일 |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남측의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낸다”며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 “야수적 탄압, 파쇼적 폭거”라고 비난
- 12월 19일 |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서기실, 국가안전보장회의 앞 통지문 발송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우리의 최고 존엄에 대한 특대형 도발을 반복한다면 가차 없는 보복행동이 예고없이 무자비하게 가해질 것”이라고 위협
- 12월 19일 |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북한 국방위원회 통지문에 대해 “북측이 도발시에는 단호하게 등장할 것”이라고 대응
- 12월 20일 | 재입북 탈북자 좌담회, 고려동포회관에서 진행  
- 최계순(64, 여), 박정숙(67, 여)
- 12월 20일 |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활성화 및 국가안보실 기능 조직 강화 안 발표
- 12월 24일 | 통일부, 대북지원 2개 민간단체 지원물품 반출승인  
- 어린이재단, 남북평화재단
- 12월 24일 | 박근혜 대통령, 강원도 최전방 읍지부대를 방문해 “북한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고 도발을 감행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철저한 안보태세 유지를 강조
- 12월 25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2011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이 채택됐다고 7장 74조로 된 법 전문 공개
- 12월 25일 | 북한 조평통 서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의 원칙이 신뢰인지 대결인지 밝히라고 공개질문장 발표, 박근혜 정부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최후의 선택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
- ①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리명박 정권의 대결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②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③ 신뢰인가 대결인가. ④ 외세가 우선인가 민족이 우선인가. ⑤ 누가 도발자인가. ⑥ 비방중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중지는 누가

해야 하는가. ⑦ 선택은 누가 바로해야 하는가.

12월 26일 | 통일부, 조평통 서기국 질문장(12.25)에 대한 입장 발표

- 조평통 서기국의 공개질문장은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우리 정부가 일일이 답변할 가치가 없음.
- 특히 북한의 비인도적, 비상식적 행동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동을 지켜보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임.
- 신뢰인지 대결인지의 문제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음.

12월 26일 | 북한,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복측 위한 명단(5명) 통보

12월 27일 |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민노총 본부 공권력 투입에 대해 “역대 군부장관들이 저지른 전대미문의 민중대학살 사건들을 그대로 재현한 파쇼적 폭거”라고 비난

12월 28일 | 북한 남조선인권대책협회,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인권과 생존권, 민심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파쇼적 탄압”이라고 비난

12월 29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통일연구원 2013 북한인권백서 발간 관련 “신성한 존엄과 사회주의 영상을 훼손하며 남북대결을 더한층 격화시키기 위한 비열한 술책”이라며 “군대와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

12월 29일 | 북한 농근맹 중앙위, 민노총 건물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130여명을 연행한 것과 관련하여 “괴뢰역적패당의 무지막지하고 잔인한 파쇼적 폭거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범죄”라고 비난

12월 30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박근혜 대통령의 을지부대 방문시 한 발언(12.24)에 대해 “위기에서 헤어나기 위한 하나의 서툰 광대극에 지나지 않는다”며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날아든다면 도발자들을 형체도 없이 죽탕쳐 버릴 것”이라고 위협

12월 30일 | 통일부, 대북지원 2개 민간단체 지원물품 반출 승인

- 민족사랑나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총액은 202.9억원(민간 65.5억원, 국제기구 135억원)

